202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2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2

2. 2022년도 정책 추진방향 ····· 5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경찰청 일반현황 ····· 32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35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 47

전략목표 Ⅱ ····· 194

전략목표 Ⅲ ····· 355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 463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466

3. 변화관리 계획 ····· 468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470

【붙임】

1-1. 성과지표 현황 ····· 472

1-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주요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 488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2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총 평

- 코로나19 위기가 2년째 계속된 가운데 **전반적인 치안지표는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파급력 큰 사건이 연이어지며 **객관적 통계와 체감치안 간 괴리** 발생

  ※ ('20년 대비 '21년) ▵총 범죄 9.9% 감소(158만건→143만건) ▵5대 범죄 10.8% 감소(36만건→32만건) ▵교통사고 사망자 8% 감소(2,865명→2,635명)

-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면서도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체질개선**과 함께, 사회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할 미래치안 방향 설정**에 대한 필요성 부각

1 국민안전 확보를 통한 평온한 일상 수호

□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안전 공동체 구현

○ **(아동)** ▵**유관기관 공동대응·합동점검** 확대 ▵아동학대 특별수사팀 전국 신설 등 학대위기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개입·수사** 강화

※ **('20→'21년)** ▵아동학대 검거 5,551→11,572건(108.5%↑) ▵임시조치 신청 1,764→5,660건(220%↑)

– **(실종)** 조기발견을 위해 ▵**실종경보 문자*** ▵**배회감지기**** 2차 보급사업 추진

* 시행(6.9~12.31.) 이후 466건 송출·458건 발견 ** '21~'24년간 매해 2,600대 수준 보급

○ **(여성)** ▵AI조서 작성 ▵여청 강력팀 확대 등 **성폭력 범죄 대응 고도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9.24.시행]**·스토킹처벌법**[10.21.시행] **입법**에 따른 적극 수사

○ **(교통약자)** 안전속도 5030 시행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안착,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 (255명·9.8%↓)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 **(서민보호)**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강력 대응하는 한편,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 집중단속

※ '21년 3월 대비 10월,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 53.2%↓, 피해액 50.0%↓

○ **(부패·부조리)** 全 경찰 및 범부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 실시, **마약·가상자산 범죄**에도 선제 대응

※ ▵부동산 6,038명(구속 62명) ▵마약 10,626명(구속 1,795명) ▵가상자산 862명(구속 48명)

○ **(방역지원)** 보건당국과 협업하여 방역·백신수송 지원 및 방해행위 엄단,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시위 관리

※ ▵감염병예방법 위반 15,959명 수사 ▵총 242,372개소 13,195회 백신수송지원

2 국민을 위한 「4+4 改革*」 내실화

* △수사구조, 정보·안보경찰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인권·반부패, 교육혁신, 미래치안

□ '4대 경찰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 구축

○ **(수사구조개혁)** 국가수사본부 출범(1.1.) 이후 변화된 수사환경에 맞춰 **종결 역량**을 확보하고 수사 시스템 혁신,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

※ △불송치 결정 통지 시스템 구축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확대 등

– 원활한 현장 수사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

※ △'21년 1,023명 배치, '22년 443명 증원 예정 △'22년 첨단 수사 시스템·장비예산 79억 편성 등

○ **(자치경찰)** 7월 전국 시행에 따라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사무기구**를 구성하고, **표준조례안을 배포**하는 등 제도안착 적극 뒷받침

※ △17개 위원회별 맞춤형 정책 발굴·추진 △'22년 시·도 지원 국고보조금 1,299억 확보

○ **(정보경찰)** '法(경직법)–대통령령(3.23. 제정)–훈령(6.14. 개정)'의 3단 체계 완비, **투명하고 적법한 정보활동의 법적·제도적 기반 공고화**

○ **(안보경찰)** 안보수사 역량·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안보수사국 출범 이후 전년 대비 안보위해사범 검거성과* 향상(39%↑)

* △국가보안법 위반 27명(107%·14명↑)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842명(38%·234명↑)

□ '4대 조직혁신'을 통해 체질개선 및 내실화

○ **(인권)**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관서별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수사과정 상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수사환경 개선 등 노력

※ △피의자 유치·호송규칙 개정 △변호인 모니터링 △수사동 구축 등 환경 개선

○ **(청렴) 반부패협의회** 등을 통해 '청렴'을 조직문화로 정착하고, △**사건 문의금지제도** △**직무범죄수사체계 내실화** 등 부패기회 원천 차단

○ **(교육)**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습·체험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 **교육·훈련체계 혁신** 추진

○ **(과학치안)** 치안문제 해결에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보, 미래 치안환경에 대비한 중장기적 관점의 「미래 경찰비전」 수립 추진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범죄예측 시스템(Pre-Cas) △성범죄 피해자 상담 챗봇
- (조직) △과학치안정책팀('21) △과학치안진흥센터('21) / (R&D예산) '21년 492억 → '22년 592억, 20.3%↑

3 제도 · 시스템 정비로 현장의 자긍심 제고

○ **치안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위험성·책임성 등 경찰직무 특성이 반영된 **법집행 기반 조성노력 등 전개**, 현장경찰 처우 증진

- **('22년 인력·예산)** △소요정원 2,030명↑ △경정·경감 529명 직급상향 △예산 2.2%↑
- **(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소송지원」 근거규정 신설 **(수당)** 112 출동수당 확대 등

○ **특수건강검진, 트라우마 치료** 등 신체·정신적 건강관리체계 개선, **순직·공상 경찰관 예우 강화** 등 복지정책을 통해 **일선 사기진작**

- **(건강)** △'22년 특수건강검진비 증액[61→91억] △AI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 △마음동행센터 증원[21→26명]
- **(복지)** △질병휴직 연장(3→5년) △재해전문 노무법인 자문계약, 순직 등 인정률 제고

○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지원 확대* △**청년경찰 정책단** 활성화 △공감언행 캠페인 등 다양성·일체감이 조화된 조직문화 조성 추진

* **(규모)** '20년 표창 64명→'21년 특진·승급 등 509명 / **(시기)** 연 1회 → 분기별 포상

4 보완 필요사항

○ 全 분야에 걸친 쇄신 노력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치안을 유지** 중이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등 일부 사건으로 국민 우려 제기

– 스토킹·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에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며, 개별 사건마다 전문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시사

– 준수한 치안지표에도 체감안전도는 소폭 하락('20년[77.7]→'21년[76.5]), **잘한 것은 적극적으로 알리고 과장·왜곡된 보도에는 발빠르게 대처**

※ 국민의 지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구체적 사례를 지속 알려 필요성 체감 유도

○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뒷받침할 인력·예산** 등 운영 인프라의 부족은 업무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민의 **수사분야 만족도 하락에 영향**

※ 사건당 처리 기간: '17년44.0일→'21년62.3일 / 치안고객만족도: 수사(2.7↓), 교통조사(3.2↓)

– 이에 더해 △**수사업무 기피*** △**처우개선 요구 증가** 등으로 직무 만족도가 하락**, **젠더갈등 확산에 여경 담론이 악용**되며 부정적 인식

* 내근-수사부서 만족도 격차: '19년5.5점→'21년6.8점 / ** △복지분야 0.6↓ △직무분야 0.5↓

2. 2022년 정책 추진방향

01. 중독성범죄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02. 서민을 울리는 악성사기를 척결하겠습니다

03. 준법이 이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01. 미래를 선도하는 경찰로 대개혁하겠습니다

02. 조직전반의 직무효율성을 향상하겠습니다

03. 경찰제복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고질적 병리현상**

1 중독성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일반국민의 생활 주변까지 침투하는 등 더욱 심각해진 마약류·알코올·도박 등 고질적 중독성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수사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치유·회복 및 예방·대책까지 유기적·입체적으로 총력 대응

1 왜 중요한가?

❑ 중독성 범죄의 개념과 위험성

○ (중독) '중독'은, 마약류·알코올 등 약물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물질중독)하는 것뿐 아니라,

– 정상적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도박·미디어콘텐츠 등에 과도하게 몰입(과정중독)하는 것도 해당

○ (중독성 범죄) 이러한 중독성 행태들은 그 자체가 범죄이기도 하고, 다른 범죄와 결합하거나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

– '중독성 범죄'는 중독이라는 특성상 재범률도 높고, 교화도 쉽지 않은 데다 범행이 점차 고질화되며 위험성도 커짐에 따라

▸'21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6% ▸도박 중독자 10명 6명이 재발('20년)

– 당사자를 회복이 곤란할 정도로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공중의 안전까지 위협

○ (범죄집단) 특히, 마약·도박과 같은 중독성 범죄는 범죄수익과 연결되어 대부분 범죄집단이 생산·공급·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바,

–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막대한 범죄수익을 통한 범죄사업 호황과 범죄집단의 강성화를 초래, 국가적으로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음

❑ 중독성 범죄의 실태와 심각성

○ 알코올에 의한 주취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문제가 되어 왔고, 특히 주취폭력배(주폭)는 대표적인 사회의 기저질환임

– 상당수의 강력범죄와 상습적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이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고,

– 공무집행방해, 이웃소란·불안감 조성 등에 의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막대한 사회적 폐해 및 낭비요인 지속

▸'18년 전체 범죄 중 34.3%가 주취상태에서 범행(행안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급속한 사회구조 변화와 디지털화 속에서 각종 중독 현상들이 급증하고 있고, 일반국민의 생활 속까지 침투

– 모바일 등을 통한 미디어컨텐츠 중독은 청소년 등 젊은 세대에서 특히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으로 가정폭력도 빈발

▸'12년 전체 인터넷 중독률은 7.2% / 청소년·성인의 전체 스마트폰 중독률 11.1%

–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으로 일반인들도 마약에 쉽게 접근하면서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

– 특히, 강남 등 유흥가 일대에 확산된 마약유통·이용 실태는 매우 심각

▸**(마약사범)** '17년 8,887 → '21년 10,626 ▸**(외국인 마약)** '18년 126 → '21년 425
▸**(인터넷 마약)** '17년 1,100(12.4%) → '21년 2,545(21.4%) ▸**(10대 마약)** '18년 104 → '21년 309

– 또한, 인터넷 등 사이버도박이 범람하면서 도박중독자들이 더욱 증가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도박중독도 매우 심각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25조 4,532억원('15년, 형사정책연구원)
▸도박중독자 44.5%는 배우자 폭력, 22.5%는 자녀 폭력, 12.1%는 상해 등 폭력 경험

2 무엇을 하는가?

❑ 중독성 범죄 집중단속·수사

○ 중독성 범죄 유형별로 '테마 특별단속'을 전개하되, 획일적이고 진부한 방식을 탈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방법으로 실시

– 특히, 마약류의 경우 신종수법에 대한 효과적 단속방식 강구와 함께 만연한 지역에 대한 집중적·대대적 단속을 통해 체감 효과 거양

▸ 최우선적으로, 서울 강남권 유흥업소 일대를 집중 단속, 인근 마약류 일소

○ 마약·도박과 같이 범죄수익과 연결되는 범죄는 필수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으로 범죄수익의 원천 차단에 주력

❑ 「단속-치유-예방」의 입체적·유기적 대응 선도

○ 중독성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처방이 없으면 일회성 단속·수사나 단편적인 치료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

– 강력한 단속·수사와 병행하여 치유·회복 프로그램과 예방·대책이 종합된 입체적인 대응이 중요

○ 단속·수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치유 프로그램과 연결하고,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예방정책에도 반영 필요

– 관련 범죄 발생시 중독성 범죄 여부를 판단한 후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치유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능한 경우 소관 기관 연계

– 특히, 알콜중독이나 콘텐츠중독 등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더라도 그로 인한 폭력 등 발생시에도 중독 치유 프로그램 연계 등 조치

구 분	알코올 관련	마약류	도박(사행행위)	미디어콘텐츠 관련
단속·수사	경 찰	경찰·검찰·해경·관세	경 찰	경 찰
치유·회복	복지부	복지·법무부	사감위, 복지부	과기·복지·교육부
예방·대책	복지부	식약처, 복지·교육부	사감위	과기·문체부

○ 이를 위해, 중독성 범죄 유형별로 경찰과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제도화 추진

❑ 실효적 대응을 위한 법제화

○ 「단속-치유-예방」의 유기적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중독성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법제화 추진

– 특히,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위장수사를 마약류 및 불법도박 수사에도 확대 적용 검토

▸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위장수사 확대 필요" ('22. 4월. 비교법적 연구)
▸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 도박 범죄까지 확대해야" ('22. 6월.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

○ 이미 진행 중인 입법안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 보다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시 새로운 입법안 추진 검토

관련 입법안

▸ **(중독 예방·관리·치료법 제정안)** '13년 신의진 의원 발의, 회기만료로 폐기
▸ **(마약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법 제정안)** '19년 정갑윤 의원 발의, 회기만료로 폐기
▸ **(주취범죄 예방·처벌법 제정안)** '21. 4. 21. 김용판 의원 발의, 행안위 계류 중

3 어떻게 추진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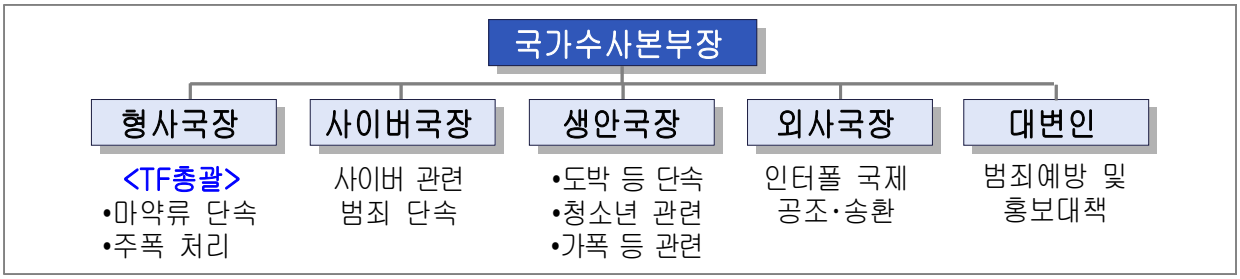
❑ 강남권 마약류 특별 집중단속

○ (서울청 TF)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생활질서 등 유관기능을 총결집, 강남권 유흥업소 일대의 마약류 집중단속 강력 전개

○ (전담부대) 마약수사대 2개팀 및 6개 경찰서(강남·서초·수서·송파·용산·마포) 각 1개팀(총 8개팀)을 클럽 마약류 단속 전담수사팀으로 지정

❑ 범정부 플랫폼 역할의 추진체 운영

○ (경찰청 TF) 국수본부장 주관, 형사국을 중심으로 유관기능 합동 「중독성 범죄 대응 TF」 구성, 단속·수사 및 유관기관 협력 등 총괄



○ (유관기관 협의체) 경찰청을 중심으로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문체부 ▵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관세청 등 협의체 운영

– 중독성 범죄 유형에 따라 각 부처·기관별로 ▵협조사항 ▵제도개선 논의사항 ▵우수·수범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 촉진

▸ 마약류의 경우 현재 ▵국조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14개 정부기관) ▵정부기관 합동단속 협의체(6개 기관) 운영 중

– 필요시 관련 단체·학회와 의료인, 관련 산업 종사자 등 전문가도 참여

❑ 국제협력 및 범사회적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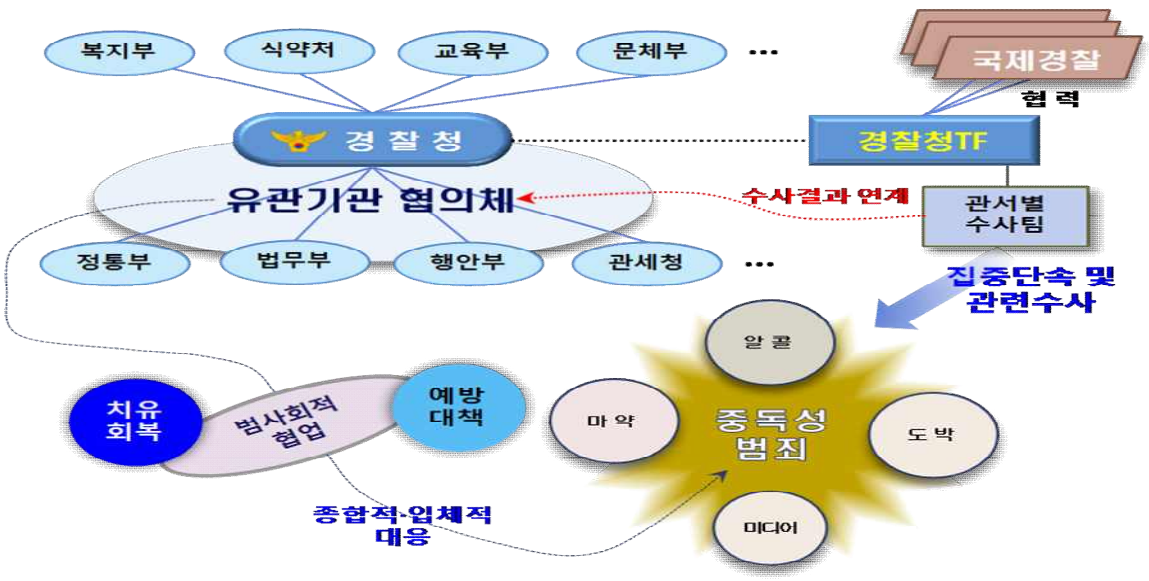
○ (국제협력) 마약류 및 불법사이트 등 국경을 초월하는 사안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인터폴·유로폴 및 외국 경찰기관과 핫라인 구축 등 협력 강화

○ (범사회적 협업망 정비) 각 기능별로 구축·운영 중인 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업체*를 활용,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실질적 협업망 발전

* ▵각 지역별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 ▵가정폭력 다기관 협업체계 등

– 사례별 일회성 단순 협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협업체계를 위해 ▵정례적 통합간담회 ▵사례발굴·공유 ▵합동 모니터링 등 추진

중독성범죄 총력대응 체계도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

2 서민을 울리는 악성사기를 척결하겠습니다

연관 과제

Ⅱ-2-③「다중피해사기 범죄 대응 강화」
④「전화금융사기 척결 통합대책 추진」
⑤「신종 사이버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 엄정 대응」
⑥「가상자산 불법행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금융·통신이용 사기와 최근 극성을 부리며 다중피해를 야기하는 조직적·상습적 사기 등 핵심 사기유형을 '악성사기'로 신개념화하고,

경찰수사의 총력을 집중, 강력한 단속과 함께 법·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전방위로 대대적 추진, 서민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보호

1 왜 시급한가?

○ 최근의 사기범죄는 금융·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피해 유발

○ 이러한 조직적인 악질 사기범죄는 '경제적 살인'에 비유될 만큼 막대한 금전피해를 유발하여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한편,

– 국민경제를 저해하고 사회불신을 조장하는 중대범죄인데,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확산된 실정임

▸ **(사기죄 발생)** '17년 23만건 → '20년 34.5만건 ⇒ 50% 증가
▸ **(보이스피싱 피해액)** '17년 2,470억 → '21년 7,744억 ⇒ 313% 증가
※ '22. 상반기, 12,401건 발생 / 3,068억원(**일 평균 25억원**) 피해

○ 이에, 핵심 사기유형에 대해 '경제적 조직범죄'로 패러다임을 전환, 단속·차단·제도개선 등 종합적 척결 대책이 매우 시급

2 무엇을 하는가?

❑ 「악성사기」 개념 및 단속분야

○ (개념)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조직적 또는 상습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기 및 다액편취 사기

○ (단속분야) ▵금융·통신사기 ▵조직·상습적 사기 ▵다액사기 등 3대 분야 7대 과제

– ①전기통신금융사기 ②사이버사기 ③유사수신 등 ④보험사기 ⑤전세사기 ⑥대출·영업사기 등 ⑦다액사기(5억이상)

분야	죄 종	유 형
금융 통신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
	사이버사기	각종 사이트서 물건을 팔겠다고 속이고 다수로부터 대금 편취
	유사수신·다단계	원금 초과 수익 보장 / 하위회원 모집 가입비 등 편취
조직·상습	보험사기	허위입원·과다진료 등 보험금 편취 / 고의 교통사고 유발
	전세사기	무자본·갭투자 등 보증금 편취 /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등
	대출·영업사기 등	사기대출, 렌터카 등 빙자, 조직적 영업형태로 반복하여 금원 편취
다액	특경법(5억이상)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50억) 및 제2호(5억)

❑ 합동 전담수사팀 구축 및 총력단속

○ (전담수사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 지정

▸ (수사) △전기통신금융사기, △전세사기, △가상자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 (형사) 관리 조폭 등이 기획·참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
▸ (사이버) △메신저피싱·스미싱·파밍 등 피싱형 범죄, △인터넷사기 등

○ (특별단속) '22년 하반기, 국민 의견 및 유관기관 논의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상습적 사기범죄에 대한 테마별 특별단속 실시

❑ 법·제도 개선 및 조직개편

○ (사기방지법* 제정) 사기범죄의 ▵처벌·예방·대응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 ▵국가의 책임 등을 규정한 '사기범죄방지법' 제정 추진

– 특히, 사기방지법에 따라 경찰청 산하에 사기죄에 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사기정보분석원*' 설립

사기정보분석원 개요

▸**(역할)**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기사건 및 피해신고를 통합 접수, 종합적인 분석 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집중수사, 예방 및 차단 등 조치 수행

▸**(영국 사례)** '사기 통합 대응기관' 액션 프로드(Action Fraud)가 영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기사건과 사이버 범죄들을 통합 신고받아 분석

○ (법률 제·개정)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지속 발굴, 적극적 입법 지원

관련 입법안

▸**(다중사기방지법 제정안)** '20. 8. 20. 박재호 의원 발의, 정무위 계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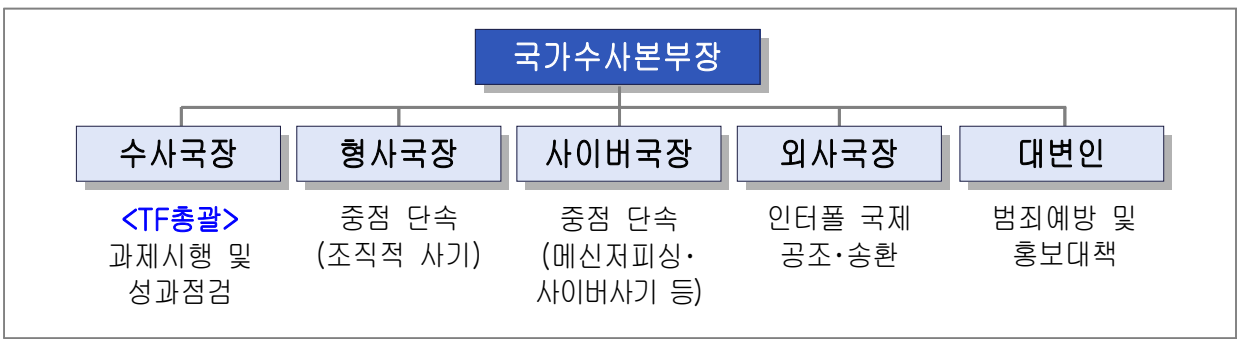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안)** 서영교 의원 행안위 발의 추진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금융위 주관 금년 내 의원발의 추진 중

3 어떻게 추진하는가?

❑ 범정부 플랫폼 역할의 추진체 운영

○ (경찰청 TF)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국장급 참여 TF 운영, 관련부서 전체의 역량을 집중하여 단속·예방·피해회복 등 추진



○ (유관기관 협력 강화) 금감원·과기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MOU 체결, 협력관 파견 등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 **(금감원 등)** 피해신고 활성화, 대포통장 억제 및 지급정지 확대 등
▸ **(과기부·방통위 등)** 대포폰 등 범행수단 차단, 개인정보 관리강화 등
▸ **(국토부)** 전세사기 및 자동차보험사기 신고·예방 등

○ (국민참여) 전기통신금융사기·유사수신사기 등 사기범죄 피해자 단체, 학계, 경찰청 정책기자단(일반인 참여) 등이 참여하는 소통창구 마련

– ① 단속테마 우선순위 및 집중수사 대상 선정 ② 단속결과 피드백 ③ 법·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국민의견 적극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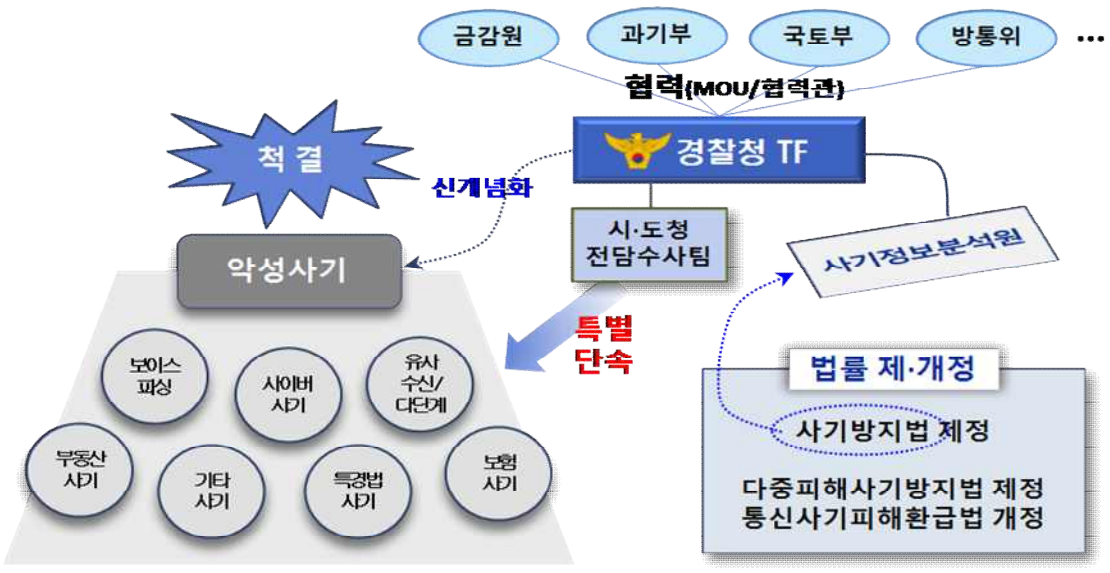
❑ 내외부 붐 조성

○ (선포식 개최) 경찰청장(국수본부장) 주재, 전국 지휘관 및 수사 책임자 회의를 통해 '악성사기' 척결 선포, 경찰의 강력한 의지 천명(8월)

○ (홍보대책 수립) 시기별·시리즈별 TV·유튜브 등 매체활용, 적극 홍보

▸ △방송사 고정방송 △기획보도 △기고문 △각종 컨텐츠 제작 △홍보대사 위촉 등
▸ 각 시·도청별 치안 여건에 적합한 자체 홍보계획 수립, 홍보 전개

악성사기 척결 체계도



국민안전과 사회통합의 원천

3 준법이 이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연관 과제

Ⅲ-1-①「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②「집단적 불법행위 엄정 수사」
③「대화경찰 활성화로 갈등관리 역량 강화」
④「체계적 준법관리로 신뢰받는 정보활동 정착」

'준법'은 국민안전과 사회통합의 원천으로서 '준법이 이득'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준법 조력자에 대한 지원·보상을 강화하고, 기초질서 준수와 선진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통해 준법시민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1 왜 중요한가?

○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인권과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 반면,

– 상대적으로 법질서와 준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며 간과해온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런 현상은 수십 년간 계속됨

○ 그 속에서 '떼'를 쓰며 법을 경시하는 사람의 주장은 반영되고, 순응하며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본다는 왜곡된 사회적 인식 형성

– 하지만, 이미 민주화가 충분히 성숙한 현시점에서는 탈법과 반칙은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의 성장동력만 방해하는 독소로 작용

○ '준법'은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초체력이자, 국민안전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인바,

– 법을 지키면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통용되는, 준법시민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긴요

2 무엇을 하는가?

❑ 준법조력자 지원·보상 강화

○ (경찰협력단체 지원 확대) 자율방범대·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등 준법질서를 위해 실질적 봉사로 경찰에 협력하는 단체 지원 강화

– 지자체별 조례를 통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거점 시설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부서장·경찰관의 활동 동참 등 관심 제고

▸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심도를 관서장 평가 반영

– 특히, '23년 관련법 시행을 앞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가입·활동 등 일정요건 구비시 민방위 면제 혜택 등 적극 추진

▸ 민방위법 제18조 13호, '의용소방대'는 민방위 동원에 배제되는 혜택 부여

○ (범인검거보상금) 경직법시행령 및 경찰청 지침에 의해 △범인 정보 제공자 △증거 제출자 △검거 협조자는 보상금 지급 중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규정」에 의해 범죄경중에 따라 30~1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5억원 이하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

– 사안발생시 보상금 지급대상을 적극 적용하고, 주기적 확인·점검 등 담당자의 관심도에 따라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활성화

○ ('공공의 눈' 활성화) 경찰협력단체원 및 우체국·택배회사·배달업체·운수회사의 운행 종사자*들을 공익신고를 위한 '공공의 눈'으로 활성화

* MOU를 체결한 우체국·택배회사·배달업체·운수회사 등과 △택배기사·집배원 △택시·버스 기사 △배달기사 등 지역 구석구석 운행 종사자

– 범죄·무질서 신고 및 실종자·범인 수배나 사건·사고 제보·목격 등 각종 유의미한 공익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 방안 추진

▸ 범죄 및 범인검거 등 사건 해결 관련 신고는 '범인검거보상금'으로 지급

– 적극적으로 준법 조력하는 대상자는 추가 인센티브 방안 검토

▸ 관련 기관·업체와 협조, 우수 직원·배달기사 선정시 해당 내용 반영 추진 등

❑ 무질서 방지 등 기초질서 확립

○ (무질서 행위 적극 조치) 기초질서 위반은 경범죄로 적극 처벌하되, 쓰레기 무단투기 등 지자체 소관은 조치토록 지체없이 통보

– 지자체 통보사항은 경찰서(생활질서)에서 집중 관리하며 적절한 조치 여부를 사후 확인, 정당한 이유 없이 미조치 시 상응 처분

○ (지역치안협의회) 지자체장이 위원장인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무질서 방지 등 준법질서 과제를 집중 협의·추진하고,

– 무질서 행위와 관련한 각종 신고나 기관 통보사항에 대한 각 소관기관의 조치사항을 점검·독려

❑ 준법 시위문화 조성

○ (집단적 불법행위 엄정 대응) 집회시위 등 집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현장 관리 및 엄정 수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

– 특히, 도로점거 불법 집회·행진이나 건설현장 공사방해, 운송방해 등 민생경제 침해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

– 과도한 집회소음 유발행위 제한 및 대규모 집회·행진 시 교통소통 최우선 조치 등 일반국민 권익 침해 최소화

–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 발생 시 시·도청 수사 집중지휘 및 전담수사팀 편성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사법처리 진행

○ (대화경찰을 통한 갈등관리 강화) 대화경찰 활성화로 집회 현장에서의 소통·협력 강화 등 더욱 적극적으로 갈등을 관리

– 대화경찰의 실전 교육·훈련을 배가하고, 자격인증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학계·외국경찰과의 교류·협력 등 확대

○ (집시법령 개정 검토) ’14년 이후 그대로인 집시법시행령 상 집회 제한 기준인 ‘주요도로’를 최근 교통 여건에 맞게 개정 검토

– 또한, 집회소음 기준도 집회의 자유와 일반국민 권익보호가 보다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으로 개선 추가 검토

3 어떻게 추진하는가?

❑ 효율적 준법조력 방안 운영

○ (무질서·범죄 신고) 경찰협력단체원 및 협약 대상 운행 종사자들이 손쉽게 공익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 코너 신설 또는 공공앱 개발

– 신고내용은 관할 경찰서 소관 부서 또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하게 하고, 조치사항 확인 및 조치결과 분석 등 관리

○ (경찰협력단체 활동 관리) 시·도청 및 경찰서별 각급 경찰협력단체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 효율적 활동을 위해 활동 시간·장소·역할 등을 지도·안내하는 한편, 각 단체의 활동을 평가하여 우수단체 표창 등 격려방안을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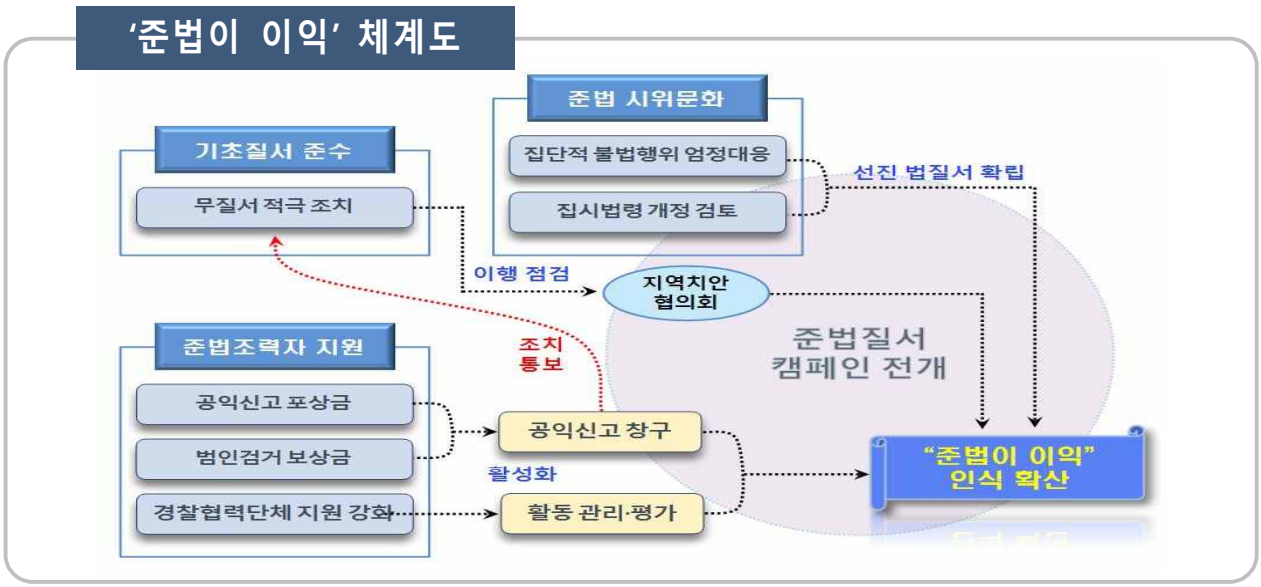
❑ 준법질서 캠페인

○ '준법이 이익'이고, '준법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캐치프레이즈로 사회적 캠페인 전개

○ 경찰·지자체·언론사·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와 채널을 통한 홍보로 효과 극대화

▸ 유명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공익광고, 유튜브 등 미디어콘텐츠도 적극 활용

'준법이 이익' 체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치안환경 변화

4 미래를 선도하는 경찰로 대개혁하겠습니다

연관 과제

Ⅰ-1-①「경찰 미래비전 2050 종합계획 추진」, ②「경찰조직 개편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③「과학수사 절차·역량 표준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
2-①「빅데이터와 AI 기반 조직·행정 문화 조성」, ②「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치안 기반 조성」, ③「첨단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 및 전문성 강화」, ④「첨단 과학적 범죄분석 시스템 구축」, ⑤「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⑥「미래 교통환경에 대응한 첨단기술 도입」
3-①「글로벌 치안활동 중심국가 위상 정립」

저출산·양극화 등 사회구조의 급변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미래의 치안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과학치안 기반 구현을 위한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신종 범죄·위험 등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안시스템으로 대개혁 추진

1 왜 시급한가?

❑ 치안환경과 경찰의 역할

○ 우리 사회는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극심한 경제적·정치적 양극화로 전통적 사회윤리와 보편적 정서가 급격히 흔들리면서

– 종래의 지역·이념 갈등을 넘어 젠더·세대 갈등이 심화하고, 다양한 사회 병리현상과 갈등요소들이 새롭게 현출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노멀 시대가 도래, 기존의 관점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새로운 생활양식과 욕구가 나타나면서

–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키는 경찰의 역할도 전통적인 '범죄투사'를 넘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자'로 진화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회와 위협

○ 여기에, 4차 산업혁명으로 AI·빅데이터 기반의 혁명적 미래기술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을 블랙홀처럼 흡수하는 파괴적 혁신이 도래 전망

○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혁신의 시대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 치안활동 전반에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활용하고,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 구조의 체질화를 서둘러야 함

○ 반면, 기술발전은 필연적으로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와 위험으로 연결되어 전혀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

▸(예) △3D프린터로 인한 사제 총기·폭발물 등 악용 △사물인터넷 무단 조작 △모바일금융의 신종 금융범죄 △자율차 해킹에 의한 교통사고 등

–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미래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위험은 그 특성상 매우 다양하고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 국민 개개인의 피해를 넘어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짐

❑ 현 치안시스템의 한계

○ 하지만, 기존 치안시스템은 치안 각 부문을 기능별로 분담하여 대증적으로 접근하는 파편적·분절적 방식으로 설계되어

– 새로운 이슈를 기민하게 통찰하고 구성원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곤란

– ‘융합’과 ‘디지털플랫폼’으로 특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본질상 부합하지 않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

○ 또한, 현안 해결 위주 사후처방식 대응 방식은 새로운 위험요인인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위험에 대한 대응에도 역부족이고,

– 미래환경에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는지도 의문

2 무엇을 해야 하나?

❑ 미래를 선도하는 인프라 구축

○ (조직구조 개편)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적합하게 경찰청부터 경찰서까지 조직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조직개편 추진

– 경찰청에 과학치안 추진 구심체로서 과학치안정책국(치안감) 편제

○ (치안인재 양성) 국내외 장기 위탁교육 규모 확대 및 경찰청 독립운영 방안 추진,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인프라를 확충,

○ (경찰 책임수사) ▵예방적·입체적 형사활동 ▵과학수사 인프라 강화 ▵사이버수사 확장 ▵전문수사관 양성 ▵국제협력 강화 등

– 경찰수사의 책임성·전문성 강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수사시스템 구축

○ (신종 범죄·위험 대비) 치안정책연구소에 신종 범죄·위험 연구 기능을 설치,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례 발표하고,

– 경찰청 소관 기능을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필요시 신종 범죄·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제화 등 추진

❑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 구현

○ (분야별 첨단기술 접목) 범죄분석 및 예방순찰, 사건조사, 교통관리 등 각종 경찰활동에 AI나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

○ (과학치안 인프라)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경찰활동의 모든 데이터가 축적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치안정책을 수립·시행

– 업무처리·의사결정 및 인사·교육 등 경찰행정 전반에 빅데이터·AI를 기반으로 한 업무프로세스와 조직관리 리더십 정립

– IT 등 이공계열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한편, 신임경찰 교육기관에서부터 내부 육성하는 등 기술전문가 양성

○ (첨단장비) 차량·무기 등 각종 장비에도 최신기술을 접목하는 한편, 순찰용 드론·로봇 등 경찰관을 대체할 최첨단 장비도 개발

❑ 국제협력 강화로 글로벌 치안 주도

○ (국제기구 파견 및 협력치안 확대) UN·인터폴 등 국제기구 파견 확대와 협력활동을 통해 글로벌 치안협력 분야에서 경찰위상 제고

○ (글로벌 치안 중심국 위상 정립) 고위급 회담·MOU체결 확대 및 경찰총수회의 등 국제치안회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치안협력 주도

– 이를 통해 재외국민보호 역량도 강화하고, 정보교류도 활성화

○ (국제성 범죄 대응 강화) 국경 없는 사이버 범죄, 마약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악성사기 등 국제성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3 어떻게 추진하는가?

❑ 「경찰 미래비전 추진팀」 운영

○ 향후 전면적인 조직개편 이전에 우선 '경찰 미래비전2050*'을 총괄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경찰청에 「경찰 미래비전 추진팀(총경급)」 운영

* 경찰의 중·장기 관점의 전략 및 구체적 과제 망라, '22.하반기 발표 예정

– 추진팀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조직으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와 廳산하 과학기술 법인인 (재)과학치안진흥센터를 협력 부서로 활용

○ 관련 기능이 모두 참여하는 경찰청 차장 주재 TF를 구성,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등 추동력 확보

❑ 전문가 자문·참여

○ 경찰 미래치안 추진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존의 「경찰 미래비전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고,

▸ '22. 2. 25.부터 15명 위원 위촉, 뉴노멀치안·조직구조혁신 분과로 운영 중

○ 각 기능별로 과학치안 기반 구현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형 '워킹그룹' 병행 운영

불필요한 일버리기와 조직구조 개선

5 조직전반의 직무효율성을 향상하겠습니다

연관 과제

Ⅰ-①-①「경찰 미래비전 2050 종합계획 추진」
Ⅱ-①-②「고위험 정신질환자 대응체계 개선」
Ⅲ-③-①「경찰 책임수사 역량강화 추진」
③「고소·고발 접수 처리 절차 개선」
Ⅳ-②-①「경찰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직급구조 개선」

충분한 인력증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에서 현장의 업무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직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일버리기 등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여 업무의 총량을 감경하고, 조직구조 개선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인력증원 효과를 거양

1 왜 중요한가?

○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피해자보호 등 국민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찰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고,

– 날로 증가하는 생활민원과 치안영역이 혼재된 사안들이 대국민 최접점인 경찰에게 쏠리고 있어 치안현장의 업무량은 가중 실정

– 또한, 경찰수사의 책임성이 커져 수사완결성 강화 등 실무상 업무부담도 대폭 증가하면서 일선에서는 인력증원을 절실히 요구

○ 하지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 등 인력 효율화 방침 속에서 경찰만 충분한 인력증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바,

▸'22. 7월, 행안부, 매년 각 부처 정원 1% 감축 등 정부인력 효율화 방안 발표

–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개편, 가능한 인력을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일버리기 등 업무부담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추진 필요

2 무엇을 해야 하나?

❑ 비효율적 업무 개선으로 업무의 총량 경감

○ (불필요한 일 버리기 추진) 업무 과정에서 허례와 구태를 일소하고, 불필요한 일을 발굴하여 적기에 개선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 체감도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강도 높게 추진하되, 각급 지휘관·관리자가 솔선해서 예외 없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

– 특히, 지자체·특사경 등 타기관 권한에 속하는 사무임에도 경찰에게 전가하는 사안은 이송하거나 반려하도록 기준과 절차 마련

○ (수사업무 개선) 인력증원 이전이라도 일선 수사관의 현실적인 업무량이 일부 줄어들 수 있도록

– 통지방식 등 개선과 KICS 등 시스템 개선, 경미사건 처리 활성화 등 수사절차 개선 과제 17개를 우선 선정, 집중 추진

○ (RPA* 활성화)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무를 자동화하는 RPA 사업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담당 인력을 대체

* (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반복적인 업무 프로세스의 자동화 의미

❑ 현장의 고질적 난제 해소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거부 사례 등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부담 경감

– 또한, 야간·휴일에 곤란을 겪는 각종 타기관 연계사무도 유형별 처리방법 표준화 등 사안별 효율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 (비상벨 등 오류 개선) ▵편의점 등 각종 비상벨 ▵택시 방범등·호출앱 등 오작동·부주의로 '코드1' 긴급신고 출동사례 여전

–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대체 수단을 적극 검토하고, 면밀한 개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비상벨 등은 과감히 폐기 조치

○ (112신고 캠페인) 장난·허위 신고나 불필요한 반복성·관행적 신고 등 '나쁜 112신고' 근절 홍보·캠페인 등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여

– 112신고 출동의 낭비적 요소를 개선하고 긴급한 출동에 경찰력 집중

○ (고소·고발 및 반복·특이민원) 고소·고발 오·남용 방지를 위해 형사사건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각하 등 간이절차를 통해 신속 처리하고,

– 특정한 목적으로 동일 사안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고질적 특이민원은 원칙적으로 각하하여 즉시 종결하는 방안 검토

❑ 조직구조 개선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

○ (복수직급제 도입) 복수직급제로 중요직위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전반에 걸친 승진적체 해소 등 직급구조 개선 가능

– 특히, 정책부서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복수직급 대상의 직무유연성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직급별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파급효과 기대

○ (조직개편·인력재배치) △부서 통·폐합 △경찰서 형사기능 효율화 검토 △지역관서 통·폐합 △지역경찰 근무체계 개선 등

– 조직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 적극 추진

○ (경찰기동대 효율적 운용) 전의경 폐지·경찰관 30% 대체 결과 경찰부대의 총인력은 대폭 감소, 인력 중심의 집회시위 관리 방식 변화 필요

▸ '22. 6월, 경찰관기동대 11,853명(125개부대), 의경 2,956명(23개부대) 운영

– 지역별 경비수요의 편차를 감안, 시·도청 간 경찰기동대 규모를 조정·재배치하고, 경비수요가 적은 시·도청의 경우 평시에는 일부 기동대를 다른 치안업무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이를 위해 경찰부대 기동차량을 버스(제대별)→승합차(팀별)로 변경, 팀 단위(6~7명) 운용을 활성화

▸ 1개 기동대 차량을 버스 3대 → 중형승합차 13대로 변경 추진

– 다양한 상황의 탄력적 대응과 효율적 경력운용을 위한 남·녀 혼성 경찰부대를 시범 실시(경남청), 운영성과 평가·보완 후 전국 확대 검토

3 어떻게 추진하는가?

❑ 불필요한 일 버리기 「레드팀」 운영 (※ 정책관리 레드팀 병행)

○ 현장경찰들로 '불필요한 일 버리기 레드팀*'을 편성·운영, 조직 곳곳의 비효율적인 업무와 행태를 발굴하여 제언

* '레드팀'은 조직내 취약점을 발견해 공격하는 역할의 팀으로, 불필요한 일버리기 레드팀은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조직 전반에서 비효율적인 업무·행태 발굴

– 기능별·계급별·연령별·성별 등 안배하여 지원자로 구성하되, 해당 명단은 비공개로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활동상의 왜곡 방지

그냥 전 직원 대상 내부망 게시판을 만들면 안 되나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는 방식은 실제 참여율도 높지 않고, 무가치하거나 무분별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거의 효용이 없어 검토 과정에서 또 다른 비효율만 초래

→ 의욕있는 특정인들을 선별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 가능

○ 레드팀의 상시 제언을 받아 소관 기능에 실무 검토하도록 하고, 월 1회(필요시 즉시) 조정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 아울러,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는 기능 간 업무중복·소관다툼 등에 대한 조정제도 활성화

– 제언내용과 회의결과는 즉시 공개하고, 관련 유공자는 인센티브 부여

– 기능별 불필요한 일 버리기 추진·개선 노력과 효과를 평가·환류

❑ 조직·직무진단과 인력운용 협의체

○ (조직진단) 객관적 조직개편을 위해 기능별·관서별 조직진단을 실시하되, 가시적 조치를 전제로 속도감 있게 진행

– 분야별 조직진단 결과를 통해 부서 및 지역관서 통·폐합과 인력재배치를 추진하되, 현장인력과 비선호부서 우선 고려

○ (인력운용 협의체) 필요시 경찰청 차장(기획조정관)이 주관하여 소관 기능 간 「인력운용 협의체」를 운영하여

– 효율적인 인력재배치 기준 및 소요정원 우선 순위 등 결정

현장법집행 지원과 복지인프라 확충

6 경찰제복의 자긍심을 지키겠습니다

연관 과제

Ⅳ-1-①「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 및 경찰수련원 등 복지인프라 확충」
③「경찰 조직 내 입직별 균형을 위한 기반 조성」
④「현장 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근속승진 확대 실시」
⑤「현장경찰 법률지원 및 소송대응 강화」

현장경찰 법률·송무지원 및 적극행정 면책 등 현장의 당당한 법집행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복지인프라 확충과 함께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 등 경찰관 처우개선을 적극 추진,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 제고

1 왜 중요한가?

○ 경찰관은 제복인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소명'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 국민안전을 위해 그 어떤 범죄와 위험 앞에서도 당당해지는 것임

– 반대로, 경찰관으로서 자긍심이 낮으면 매사에 냉소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불법과 부정을 저지를 위험성도 높아짐

▸ 공무원이 스스로 인식하는 삶의 질 수준과 일과 삶의 균형 만족도가 낮을수록 직장 만족도가 낮고, 낮은 조직몰입과 높은 직무 스트레스 야기(2009, 조경호)

○ 법집행 현장과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경찰조직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을 주어 직무에 전념토록 하고,

– 개인적 처우나 복지에서는 경찰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점에 만족하고 자랑스러울 만큼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 경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당당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2 무엇을 해야 하나?

❑ 현장의 당당한 법집행 지원

○ **(법률·소송지원 강화)** 현장의 당당하고 적법한 법집행과 직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지원과 소송지원 강화

▸ △공무원책임보험·경찰법률보험의 소송지원 △손실보상 △현장법률365 등

– 특히, 인권위·권익위 진정 등에 대해서도 초기 답변서 작성 단계부터 감사·송무 합동으로 체계적 지원

○ **(적극행정 면책)**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직무수행 중에 벌어진 일은 심사를 통해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 대상자에게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필수적으로 고지하고, 「동료 참여심의제도」*의 내실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

* 희망시 동료들의 의견을 징계위원회에 제출, 징계결정시 참고토록 하는 제도

○ **(공무집행방해 엄정 대응)**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고,

– 관련 통계·사례 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양정기준 개선 등을 계속 노력

▸ **(경찰관 대상 공집 현황)** '21년 6,399건 발생, '22. 6월까지 3,849건 발생

❑ 복지인프라 확충

○ **(경찰수련원)** 개별적·일시적 지원보다는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장기간 지속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복지정책 강화 필요

– '19년 준공한 제천수련원 수준의 수련원을 강릉·남해·신안에 신축하고, 노후 수련원은 증축·리모델링 등 개선 추진

○ **(경찰병원 분원 건립)** 경찰관 인력증가 등 전국적인 의료수요 증가에도 경찰병원이 서울에만 존재, 비수도권 경찰관은 상대적 소외

▸ 경찰관 50.5%가 비수도권 거주, 現 경찰병원 진료 비중은 11.6%에 불과

– 비수도권에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립 예산을 확보하고, 특수건강검진 항목 확대 등 의료지원 강화 추진

▸ 경찰병원 분원 설립에 약 2,300억원 소요(부지매입비 제외 / 500병상 규모)

○ **(직장어린이집 확충)** 현재 67개소인 직장어린이집을 '23년까지 33개소 증설, 총 100개소로 확충

– 직원들의 육아 지원을 통해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 등으로 직무몰입에 기여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비율도 감소

❑ 경찰관 처우개선

○ **(기본급 인상)** 전 계급의 기본급을 공안직 상당계급에 맞춰 인상하고, 경감·경위는 평균액을 공안직 6급에 맞춰 인상 추진

▸ 관계기관과 협의 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필요(경찰 관련 소요예산 1,445억원)

○ **(근속승진 확대)** 경감 근속승진 횟수를 연 1회(1.1)에서 연 2회(1.1. 및 7.1.)로 개선 추진, 조기승진자 확대 및 승진인원 증가 기대

▸ 근속승진 확대시 '23~'28년간 경감 근속승진 인원 연평균 7.9% 증가 예상

○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경찰은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순직·공상 비율이 높은 실정인바, 공상위로금 증액 및 순직 경찰 유족 위문금·장례지원비 등 지원 확대

▸ 최근 5년간 순직 65명·공상 8,051명 → 他공무원 대비 순직 1.8배, 공상 3.5배

○ **(퇴직경찰관 지원·예우)** 퇴직 예정 경찰관에게 맞춤형 전직(轉職) 지원 서비스(교육·컨설팅) 제공, 퇴직 후 성공적인 재출발 지원

– 예산 부족으로 퇴임식을 생략하거나 초라하게 갖는 실정으로, 영예로운 퇴임식을 위한 필요최소 소요비용을 예산에 반영 추진

3 어떻게 추진하는가?

❑ 동료지킴이 및 법률지원팀

○ (동료지킴이) 현장경찰 법집행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상당수가 피상적으로 아는 등 인지도·활용 부족, 홍보·안내 강화 필요

– 각급 관서별로 피소·진정 등 문의시 구체적 절차 안내 및 담당부서 연결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동료지킴이' 실질적 운영

○ (법률지원팀) 시·도청별 법률지원팀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송무관 인력 확충 등 현장경찰 소송지원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송무관) 각 시도청 기획예산계 소속 일반직·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호사 또는 법학석·박사로 구성(총 18명) / 소송·진정사건에 대해 답변서 검토, 법률자문 등 지원

❑ 경찰복지위원회 및 경찰복지기본계획

○ (복지정책심의위원회) 경찰복지법에 의한 「복지정책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 경찰복지에 대한 외부위원의 자문을 활성화하고,

– 기재부·행안부 등 타부처 정부위원들의 이해와 협조의 폭을 확대

*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11명 구성(경찰청·기재부 등 정부위원 6<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5)

○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통해 복지정책 결정시 더욱 내실 있게 운영

– 필요시 설문 등을 통해 주요 안건에 다수 직원의 의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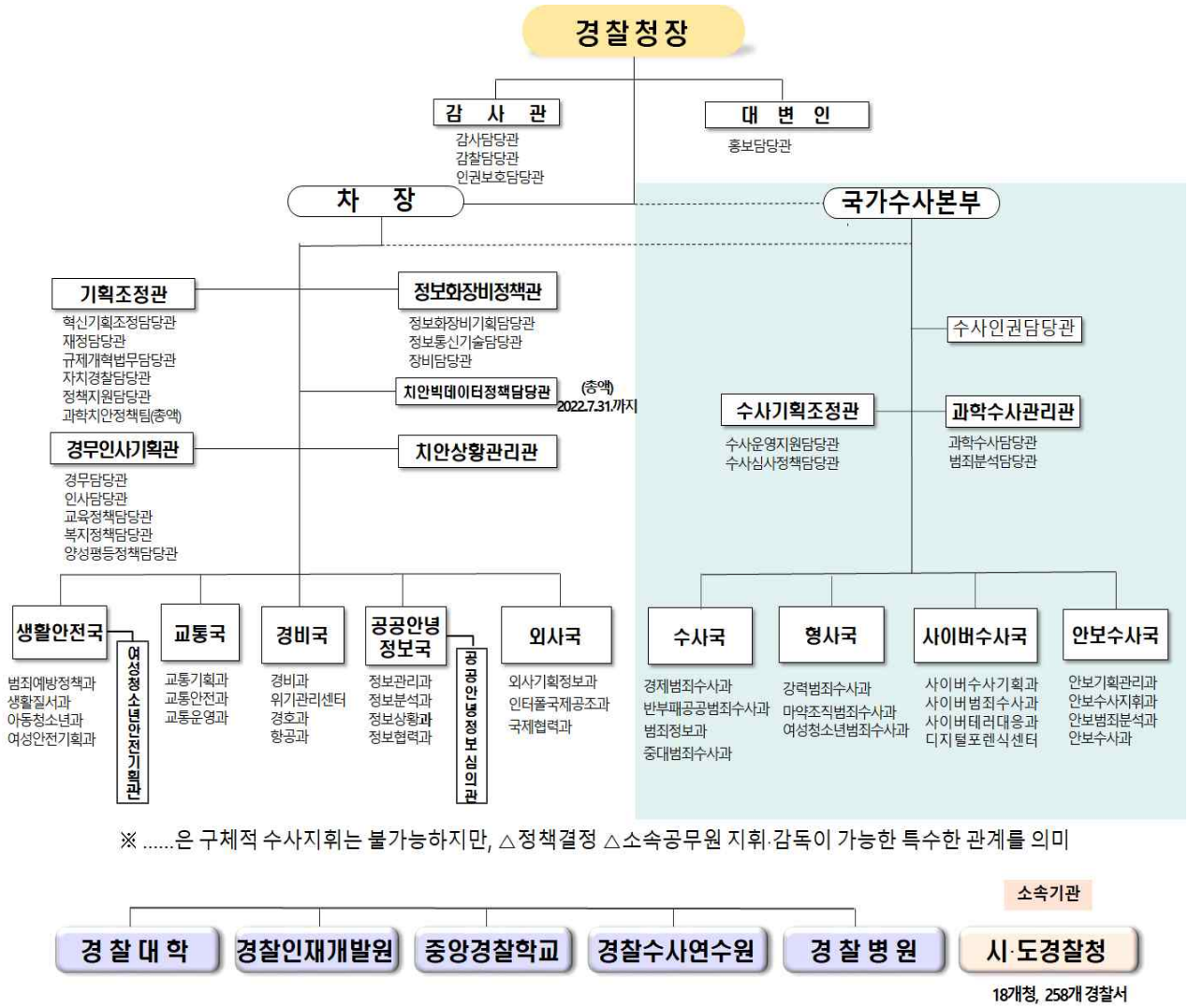
○ (경찰복지기본계획) 경찰복지법에 따라 경찰복지의 방향과 중장기 추진방안을 반영하여 경찰복지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중

– 전 직원의 복지정책 제언 등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창구 마련, 경찰복지기본계획 등 수립시 적극 반영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경찰청 일반현황

(1) 조직 ('22.7월 말 기준)



※ .....은 구체적 수사지휘는 불가능하지만, △정책결정 △소속공무원 지휘·감독이 가능한 특수한 관계를 의미

– 본청 1차장 1본부 9국 10관 33과 23담당관 1팀 –

구분	계	대변인	감사	정보화	경무(기획)	치안상황	생안	여청	교통	경비	정보	외사	과수	수사	형사	사이버	안보
계	2,000	31	89	146	518	48	30	47	70	81	153	86	213	151	51	150	136
경찰	1,211	21	69	66	171	43	26	34	54	67	127	74	32	131	43	126	127
일반	711	7	14	75	310	5	4	11	14	11	25	12	165	20	8	21	9
임기	78	3	6	5	37	-	-	2	2	3	1	-	16	-	-	3	-

(2) 인원(정원 '22.7월말 / 현원 '22.6월말)

○ 인력구성

구분	총 원	경찰관	의 경	일반직	임기제	교육직
정원	139,248 (100%)	129,851 (93.3%)	2,956 (2.1%)	5,656	763	22
				6,441(4.6%)		
현원	140,062 (100%)	132,421 (94.5%)	2,106 (1.5%)	5,015	498	22
				5,535(4.0%)		

○ 계급별

구분	총계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정원 (직제상 정원)	129,851	1	7	30	77	580	2,976	10,369	15,619	26,524	32,901	40,767
	100%	0.5%(695)					2.3%	8.0%	12.0%	20.4%	25.3%	31.4%
운용* 정원	133,265	1	7	34	89	631	3,033	10,564	16,284	27,774	33,970	40,878
	100%	0.6% (762)					2.3%	7.9%	12.2%	20.8%	25.5%	30.7%
현원	132,421	1	7	34	80	632	3,030	19,690	46,413	21,458	23,855	17,221
	100%	0.6% (754)					2.3%	14.9%	35.0%	16.2%	18.0%	13.0%

○ 관서별

구 분	총 계	경찰청	부속기관	시·도 경 찰 청		
				시·도청	경찰서	지역경찰
정원	129,851 (100%)	1,211 (0.9%)	533 (0.4%)	28,501 (22%)	48,946 (37.7%)	50,660 (39.0%)
					99,606(76.7%)	
현원	132,421 (100%)	1,321 (1.0%)	600 (0.5%)	27,525 (20.8%)	52,295 (39.5%)	50,680 (38.3%)
					102,975(77.8%)	

○ 기능별

구분	총계	대변인	감사	정보화	경무	치안상황	경비	정보	외사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지역관서	부속기관
										과수	수사	형사	사이버	안보	생안	여청	교통		
정원	129,851	170	1,972	897	2,844	4,591	16,929	2,986	1,101	1,372	10,811	16,436	2,300	2,266	3,523	3,458	7,002	50,660	533
현원	132,421	196	1,736	1,027	4,642	4,876	15,385	3,016	1,176	1,346	12,123	15,412	2,250	2,140	3,614	4,098	8,104	50.680	600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2	'23	'24	'25	'26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122,852	137,175	146,525	154,200	162,215
(전년대비증가율, %)		11.7	6.8	5.2	5.2
○ 총계	123,255	137,589	147,063	154,777	162,833
(전년대비증가율, %)		11.6	6.9	5.2	5.2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93,596	100,148	107,158	114,659	122,685
(전년대비증가율, %)		7.0	7.0	7.0	7.0
○ 기본경비	3,779	3,892	4,009	4,129	4,253
(전년대비증가율, %)		3.0	3.0	3.0	3.0
○ 주요사업비	25,477	33,135	35,358	35,412	35,277
(전년대비증가율, %)		30.1	6.7	0.2	△0.4
□ 예산					
○ (총)지출	122,852	137,175	146,525	154,200	162,215
(전년대비증가율, %)		11.7	6.8	5.2	5.2
○ 총계	123,255	137,589	147,063	154,777	162,833
(전년대비증가율, %)					
【일반회계】					
· (총)지출	122,020	136,312	145,621	153,254	161,277
(전년대비증가율, %)		11.7	6.8	5.2	5.2
· 총계	122,381	136,683	146,115	153,768	161,795
(전년대비증가율, %)		11.7	6.9	5.2	5.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총)지출	785	814	853	893	933
(전년대비증가율, %)		3.7	4.8	4.7	4.5
· 총계	827	857	897	938	983
(전년대비증가율, %)		3.6	4.7	4.6	4.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총)지출	47	49	51	53	55
(전년대비증가율, %)		4.0	4.0	4.0	4.0
· 총계	47	49	51	53	55
(전년대비증가율, %)		4.0	4.0	4.0	4.0

* '22년은 예산, '23년 이후는 기재부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 상의 예산액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전략계획과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과제 선정

○ 「성과관리 전략계획('22~'26년,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기반으로 ▵110대 국정과제 ▵국정철학(사회적 가치 등)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주요업무계획 등을 고려한 과제 발굴

○ 경찰의 기본 사명인 '국민안전 확보'에 충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개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과제 중심 설계**

□ 현장의 노력이 경찰 전체의 성과로 귀결되는 평가체계 구성

○ 연초 자체평가위원회 대면 컨설팅을 거쳐 시행계획 관리과제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치안종합성과평가의 성과지표를 상호 연계

○ 부분적·단편적 성과관리 방식을 탈피하여 **업무 전반에서 국정기조와 관서·부서·개인의 성과가 연계**된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 및 환류체계 강화

○ 자체평가위원회와 성과관리 지원팀* 주관으로 과제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 부진과제 독려 등 계획에 따른 업무추진 관리

* ▵평가지원 총괄팀(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분과별 지원팀(성과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 각 정책과제를 항목별(▵계획수립 적절성 ▵정책추진 노력도 ▵목표달성도·정책효과성 ▵정책홍보) 평가매뉴얼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과중심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결과 활용도 제고***

* △성과상여금·성과연봉에 반영 △심사승진·각종 선발 시 참고자료로 활용 등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비전	실력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전략목표	I	II	III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한다.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	진취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성과목표	1 민생치안 역량 강화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1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2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2 강력한 반부패 정책 등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행정을 구현한다
	3 선진교통질서 확립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3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3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4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제·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4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4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3) 우리청 치안정책 방향('22.8.10.부)

○ 우리청 4대 목표('22.8.10.부)를 기반으로 치안정책 방향은 내실 있게 추진하되, 성과관리 체계는 기존 3대 목표를 유지

Ⅰ 비 전

□ 실력있고 당당한 경찰

탁월한 문제해결력과 제복인으로서의 높은 자긍심을 갖추고 국민의 생명·기본권을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일 잘하는 경찰상(像)'

○ **(중요성)** 대규모 재해재난·감염병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복잡·다양해 지면서 **'능력 있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 향상

✓ **【코로나19 시대 정부역할 기대】** 행정능력 강화(79.2%), 격차해소(73.6%), 치안·질서 유지(71.4%) 順(한국의 사회동향, '21.12, 「출처 : 코로나19 사회적영향과 시민의식 패널여론조사」)

– 치안 측면에서 **극악무도한 강력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경찰의 유약한 모습**이 비춰진 사건으로 비난 가중

※ '전남 파출소 화살총 피격 사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등

– 경찰 책임감면 규정 신설 등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어느 정도 개선된 만큼, **실질적인 결과·성과로 국민 기대에 화답**할 시점

○ **(실력 있는 경찰)** 경찰 중심의 시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 국민 눈높이에서 진정으로 경찰에게 요청하는 치안활동을 전개

– 이는 신고된 사건을 단순히 처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주는 역량을 갖춰야 함을 의미

–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과학적 분석** ▵**협업** 등의 실천전략을 포함

○ **(당당한 경찰)** **자신감과 직업적 소명의식**을 갖추고 소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떳떳한 '경찰상'**을 의미

– '당당함'을 만드는 내적 기반은 ▵제복인으로서 **자부심** ▵한 분야에서 장시간의 숙련 과정을 거쳐 습득되는 **전문성**이 있으며,

– 외적으로는 ▵조직이 구성원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믿음·확신** ▵**일터에서의 보람과 의미**가 업무 주체성과 몰입을 향상

□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사회 총체적 안전을 넘어 개인적 안전인식인 '안심'을 향상하는 동시에, 사회자본으로서 '신뢰'를 높임으로써 공동체 통합 달성

○ (중요성) 사회의 **파편화·갈등**이 심화되는 **'나노사회*'** 대두, 경제적 양극화는 **안전격차**로 이어지고 **사회갈등**은 **혐오·분노범죄를 촉진**

* '트렌드코리아' 시리즈의 저자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2022년을 대표하는 사회 트렌드로 지칭, "극소 단위로 파편화된 사회에서 공동체가 모래알처럼 개인으로 흩어지고, 개인은 더 미세한 단위로 쪼개지는 시대"를 뜻

✓ 전경련, **OECD 30개국 갈등지수**를 산출('21.8월), 한국은 멕시코·이스라엘에 이은 3위

✓ 20·30대 청년층에서 **아플 때 도움 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 비율 : '17년 12.3% →'21년 18.7%로 6.4%p 상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

– '통합'이 중요한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다양한 결속의 기반이 갖춰진 상태를 **'공동체'로 개념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찰활동이 중요

* "새정부 가장 중요한 업무" 국민인식조사 : 국민통합이 41.4%로 1위('22.3월, 서울경제 조사)

○ (안심공동체) **우리 사회의 객관적·통계적 안전수준**은 지속 개선되어 왔지만 상대적으로 **체감안전·경찰에 대한 신뢰** 향상 속도는 미미

※ 미디어 발달 등 초연결사회 등장으로 범죄·위험 확산력 증대, 불안 증폭

– 경찰활동의 노력과 **'주민안심'의 차이**를 극복,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안전의식 향상**에 집중하는 전략적 치안활동 전개

※ 예) 객관적 불법성은 작더라도 주민이 느끼는 불안·위험이 높은 위해요인에 적극 대응

– **안전에 대한 인식**은 사회활동을 증진하고 **공동체 응집성을 제고**

○ (신뢰공동체) 타인·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는 구성원간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 **공동체 결속** 뿐 아니라 **경제·국가경쟁력에 영향**

– 사기 등 **신뢰침해사범** 척결 뿐 아니라, 사회 **불신·냉소**를 조장하는 **△불공정·부조리 △무질서·탈법 △사회 갈등요인**에 대한 체계적 접근 필요

– 대외적으로 **엄정한 법집행**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인권·청렴·친절의 경찰상**을 확립하여 **법질서에 대한 신뢰 향상**

II 4대 목표와 세부전략

1 선도적 미래치안

○ **지속가능한 미래개혁** 필요성 증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혁신으로 **경찰시스템을 재편**하고 **치안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

○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민첩성**을 높이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역량**을 높이는 한편, **신종 범죄·위험과 진화된 국제범죄에 선제 대응**

* △신종 첨단범죄 △생활양식(비대면 사회) △사회변화(저출생·노령화, 1인가구 증가, 기후변화)

2 든든한 민생안전

○ 객관적 사실·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예방치안 패러다임**을 고도화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치안의 공동생산자'**라는 인식 아래 **융합치안 구현**

○ **치안 약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서민 피해가 큰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

3 공정한 준법질서

○ **'준법이 곧 이득'**이라는 생각을 확산함으로써, 시대정신인 **공정·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체 통합·사회 발전** 뒷받침

○ 법과 원칙에 따라 **균형감 있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하여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갈등** 관리의 합리성과 국민적 공감대 확보

4 진취적 조직문화

○ 진정성 있는 소통과 경찰관 개개인에 대한 존중으로 **명예심·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인 처우개선과 복지확충으로 **신바람 나는 조직풍토** 조성

○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와 직급구조 개선 등으로 **직무효율성**을 높여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정착

Ⅲ 핵심가치

1 중심 가치 : 책임

○ (개념) 경찰은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그로부터 파생하는 '**책임**'**은 경찰의 소명**이자 중심가치

– 즉, '책임'은 경찰관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의 요청과 요구**에 부응하여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상태

○ (수단가치) '책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명예'·'긍지'**를 높이고, **관계적 차원의 '소통'·'융합'**을 체질화해야 함

2 개인적 차원 : 명예와 긍지

○ (명예) 제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을 가치 있게 여기며 국민들이 경찰에게 기대하는 **참된 도리를 다하는 것**

○ (긍지) 자기자신에 대한 **긍정적 믿음에서 나오는 당당**함으로서, 긍지가 높은 사람은 주도성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는 특성을 가짐

3 관계적 차원 : 소통과 융합

○ (소통) '막힌 것을 뚫는다'는 의미의 '**소통**'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경청과 공감, 상호존중을 통해 서로의 입장 차**를 좁혀가는 과정

※ 소통은 오해·편견을 해소함으로써 협력을 끌어내고 상호 신뢰를 형성

○ (융합) 단순한 협력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의미하는 '**융합**'은 두 개 이상이 하나가 되어 '**1+1' 이상의 시너지·상승효과**를 거두는 것

※ 대내적으로 기능 칸막이를 제거하고, 대외적으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치안총량 극대화

(4)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12	12	52	152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Ⅰ.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한다			
성과목표 1. 민생치안 역량 강화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1 예방지향적 정책 고도화로 치안활동의 효과성 제고	범죄예방정책	국정 63-2, 업무 Ⅰ-③
	2 자치경찰제 내실화	자치경찰	업무 Ⅰ-③
	3 112중심 치안상황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수호	위기관리	업무 Ⅰ-③, Ⅲ-②④
	4 민생침해 범죄, 중요 사건사고 신속·엄정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강력범죄수사	업무 Ⅱ-③④, Ⅲ-①②
	5 범죄·재난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정보분석으로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정보분석	업무 Ⅰ-③
성과목표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6 아동학대·학교폭력 선제적 예방 및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국정 69-2, 63-1, 63-3 업무 Ⅰ-③, Ⅱ-③
	7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강화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국정 64-4 업무 Ⅰ-①
	8 여성보호 치안정책 내실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여성안전 기획	국정 63-1, 64-6, 69-2 업무 Ⅰ-①
성과목표 3. 선진교통질서 확립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9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안전	국정 69-1, 업무 Ⅰ-①
	10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통관리	교통기획	업무 Ⅰ-①②
	11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교통운영	업무 Ⅱ-①②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성과목표 4.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 등 국제·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12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사이버 수사기획	국정 101-5 업무 Ⅰ-①, Ⅱ-⑤ Ⅲ-①
	13 민생 사이버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사이버 범죄수사	국정 64-3 업무 Ⅰ-①, Ⅱ-①③
	14 사이버테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	사이버 테러대응	국정 101-1, 101-3 업무 Ⅱ-⑤
	15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인터폴 국제공조	업무 Ⅱ-③⑤
	16 선제적·예방적 외사경찰 활동을 통한 사회안전 확보	외사기획정보	업무 Ⅰ-①③, Ⅱ-⑥
	17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제협력	업무 Ⅲ-⑥
전략목표Ⅱ.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			
성과목표 1.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18 반부패·공공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반부패 공공범죄수사	국정 63-4, 69-4 업무 Ⅱ-①,④
	19 마약류·조직폭력·외국인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마약조직 범죄수사	업무 Ⅱ-①, Ⅱ-④
	20 경제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경제범죄수사	국정 63-4, 63-5 업무 Ⅱ-③④
	21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치안 역량 강화 및 성매매 등 유흥시설 불법행위 합동단속	생활질서	업무 Ⅰ-③, Ⅱ-②
성과목표 2.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22 인권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스템 구현	인권보호	업무 Ⅰ-①, Ⅱ-③, Ⅲ-③
	23 인권 보호와 준법역량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정보관리	업무 Ⅲ-①②
	24 정보상황 기능 역량 강화로 집회의 자유·인권과 안전·공공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집회문화 조성	정보상황	국정 69-4 업무 Ⅱ-①, Ⅲ-⑥
	25 수사상 인권과 피해자 중심의 경찰활동 전개	수사인권	국정 64-1, 64-2, 64-5 업무 Ⅰ-①, Ⅲ-③
	26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경비	국정 69-4 업무 Ⅱ-①, Ⅲ-①④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성과목표 3.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27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구현	수사운영지원	업무 Ⅱ-②
	28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수사구조개혁	국정 4-3, 업무 Ⅱ-②
	29 국민중심 책임수사체제 추진을 위한 인권·현장 중심 제도개선	수사심사정책	국정 4-3, 업무 Ⅲ-②
	30 증거중심의 책임수사 지원 및 과학수사 현장대응력 제고	범죄분석	업무 Ⅱ-②, Ⅲ-⑤
	31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디지털포렌식	업무 Ⅱ-⑤
	32 증거 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과학수사	업무 Ⅱ-②, Ⅲ-⑥
성과목표 4.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33 대테러·항공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대테러항공	업무 Ⅲ-①②
	34 안보수사 역량 및 탈북민 보호 강화·완벽한 안보상황 관리	안보기획관리	업무 Ⅱ-⑥
	35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안보수사지휘	업무 Ⅱ-⑥
	36 국내외 다양한 위협에 대한 안보정보 수집으로 국민안전 확보 및 국가권익 보호	안보범죄분석	업무 Ⅱ-⑥
	37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경호행사로 국가 안전 확보	경호	업무 Ⅱ-①, Ⅲ-①
전략목표Ⅲ. 진취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성과목표 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38 정책추진 프로세스 강화로 가시적 성과창출 견인	혁신기획조정	업무 Ⅲ-①
	39 현장 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	업무 Ⅲ-⑤
	40 입법대응과 현장지원을 강화, 국민 안전 및 당당한 법집행 실현	규제개혁법무	업무 Ⅱ-①
	41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교육정책	업무 Ⅲ-①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성과목표 2. 강력한 반부패 정책 등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행정을 구현한다			
	42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감사	업무 Ⅲ-③
	43 예방・진단・교정 중심 감찰활동으로 건강하고 효율적인 경찰 뒷받침	감찰	업무 Ⅲ-③
	44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양성평등정책	업무 Ⅲ-⑤
성과목표 3.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45 치안R&와 치안산업 진흥을 통한 현장 지원	과학치안정책	국정 69-3, 업무 Ⅲ-⑥
	46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데이터 기반 경찰행정 지원	정보화장비 기획	업무 Ⅱ-⑤, Ⅲ-②⑤
	47 경찰 정보통신 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	정보통신기술	업무 Ⅰ-③, Ⅲ-②⑤
	48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	장비	업무 Ⅲ-②
성과목표 4.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49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적극지원 및 현장활력 제고로 대국민 치안역량 강화	경무	업무 Ⅲ-④⑤
	50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복지정책	국정 14-3, 업무 Ⅲ-④
	51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재정	업무 Ⅳ-④
	52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신뢰·지지기반 마련	홍보	업무 Ⅲ-④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한다

기 본 방 향

◇ 경찰의 기본 사명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협업을 통한 주민 안전망 강화

○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활 주변의 불안요인을 예측·발굴하고, 주민·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치안 활성화

○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등 대응역량을 향상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

◇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 위협요소에 대한 전략적 예방·대응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조성

○ 교통문화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지속 추진하고,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 주력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증가하는 초국가적 범죄·사이버범죄에 대해 국제공조·협력 네트워크 내실화를 기반으로 예방 및 검거역량 강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17	4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한다		5대 범죄 검거율
성과목표 1. 민생치안 역량 강화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사회안전성 인식
	① 예방지향적 정책 고도화로 치안활동의 효과성 제고	탄력순찰 이행도 / CPTED사업 참여 노력도
	② 자치경찰제 내실화	경찰청-시도자치 경찰위원회 間 '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 자치경찰제 법령 지원 강화 / 자치경찰제 교육·홍보 등 대내외 공감대 확보
	③ 112중심 치안상황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수호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 112신고 현장업무 처리 만족도 / 위기관리역량지수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민생침해 범죄, 중요 사건사고 신속·엄정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살인·강도·절도 통합 검거율 / 생활 주변 폭력사범 검거인원 /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사건 처리 신속도
	5 범죄·재난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정보분석으로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재난·안전사고 등 예방적 정보활동 우수사례 질적 향상 /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지수 / 재난 안전정보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성과목표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범죄안전도**
	6 아동학대·학교폭력 선제적 예방 및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률 / 아동학대 보호조치율
	7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강화	성폭력범죄 검거현황 / 아동학대 임시조치율 /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율
	8 여성보호 치안정책 내실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율 / 가정폭력 사건대응지수 /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율
성과목표 3. 선진교통질서 확립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교통문화 지수**
	9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
	10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는 교통체계 구축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등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도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지수 / 장애인운전지원 센터 교육 실적
	11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 /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율
성과목표 4.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제·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사이버범죄 검거율**
	12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사이버 첩보 활용 지수 / 사이버 국제공조 효율성 지수
	13 민생 사이버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사이버 민생범죄 검거지수 / 피해 보호조치 증가율
	14 사이버테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 건수 / 피해 보호조치 건수
	15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국외도피사범 송환인원 / 인터폴 조직 및 D/B 활용도 /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실적
	16 선제적·예방적 외사경찰 활동을 통한 사회안전 확보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 외사정보 활용도 / 대테러·방첩 활동 실적
	17 외국경찰기관 및 국제기구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제교류지수 / 치안인프라 전수지수 / 홍보지수

전략목표 Ⅰ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한다

(1) 주요 내용

○ **<민생치안 역량 강화>** ’21. 7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안정적 제도 안착에 중점을 두고 운영*

* △예방적 경찰활동 △민생침해 범죄 엄정대응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 활성화 등

○ **<사회적 약자 보호>** 고위험 아동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전망을 활성화하고, 성·가정폭력과 더불어 최근 스토킹·불법촬영 등 신종범죄 예방 활동을 통한 ‘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현

○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정부혁신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등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 **<사이버·국제범죄 대응>** 진화하는 사이버환경*에 대응하여 민·관·학 협업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인터폴 데이터베이스(19종)·수배서(8종)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초국경범죄 대응역량 강화

* IT발전으로 인한 다크웹·가상통화·ICT기술 발달 등

⇨ 각종 치안위협 요소에 전략적 예방·대응하여 국민안전을 빈틈없이 수호

구 분		성과지표
전략목표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한다	5대 범죄 검거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21	’26			
5대 범죄 검거율	78.8	78.1	78.1	76.8	77.3	80.0	검거율은 ’17년 최고치 달성 이후 하락세에서, ’21년 이후 경찰의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등 수사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역대 최고치(78.8)보다 1.2%p 이상 상승한 80.0%를 ’26년 목표치로 설정	5대범죄* 검거건수÷발생건수×100 *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력	KICS* 통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범죄는 감소하였으나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IT발전으로 진화하는 사이버범죄 우려

- **<최근 아동학대 사건>** △경남 창녕('20.5.) △충남 천안('20.6.) △서울 양천('20.10.)
- **<아동학대 신고>** 14,484건('19년) → 16,149건('20년) → 26,048건('21년) (61.3%↑)
- **<촉법소년 송치>** 8,615명('19년) → 9,606명('20년) → 10,915명('21년) (13.6%↑)
- **<학교폭력 검거>** 13,584명('19년) → 11,331명('20년) → 11,954명('21년) (5.5%↑)
- **<학교폭력 비중>** △사이버폭력 8.6%('19년) → 9.8%('21년) △학교밖폭력 24.3%('19년 → 41.6%('21년)
- **<스토킹>** 4,515'20년 → 14,509건'21년 **<데이트폭력>** 18,945'20년 → 57,297건'21년

– 추후 코로나19의 영향이 약해지면 언제든 범죄 발생 건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상존, 그 추이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목 필요

○ △비대면 생활양식 확산으로 공동체의식 약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유관부처(교육부·복지부 등) 間 정보공유 중요

– 지역 공동체 치안을 기반으로 범인 검거·환경개선 등 모든 분야의 안전 확보를 추진하고, 유관부처와의 협업 등 공동 대응역량 강화

(4) 참고자료

○ 사이버경찰청 경찰 범죄통계(http://police.go.kr)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도 시행계획(교육부)

○ 안전드림홈페이지(www.safe182.go.kr)

성과목표Ⅰ-1 민생치안 역량 강화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1) 주요 내용

○ **<예방지향적 정책 고도화>** ▵수요자 중심의 순찰 ▵범죄예방 진단팀 진단·분석 ▵위험지역 환경개선 등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강화

– 특히, 주민·지자체·전문가·기업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 치안문제를 공유하고, 참여·협력 기반의 문제해결체계 정착

○ **<자치경찰제 내실화>** '21. 7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안정적 제도 안착을 중점으로 운영

– 올해는 제도 실질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 ▵자치경찰사무 수행기관 간 협력 활성화 등 제도 내실화에 주력

○ **<112중심 치안상황 관리 고도화>** 국민안전과 직결된 112신고 처리 및 각종 재해·재난 등 위기사항 초동조치 역량 강화를 통해 대국민 치안서비스 제고

– 112신고접수·처리 時 만족도 관리를 통한 치안서비스 품질 향상 및 재난대응 훈련·교육 강화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위기관리 역량 강화

○ **<민생침해·중요범죄 신속·엄정 대응>** 침입 강·절도, 생활주변 폭력, 교통범죄 등에 대한 전략적 수사활동(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신속·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 체감치안 향상

○ **<정보분석 강화>** 연이은 대형 재해·재난 이후 국민안전이 핵심 과제로 부각, 안전관련 정보를 先 조치(지자체 통보)·後 보고하는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을 활성화하여 국민안전 확보 기여

– 공공안녕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안전·공공분야와 관련된 '범죄정보 수집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민생치안 역량 강화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사회안전성 인식
관리과제	예방지향적 정책 고도화로 치안활동의 효과성 제고	탄력순찰 이행도 / CPTED사업 참여 노력도
	자치경찰제 내실화	경찰청-시도자치 경찰위원회 間 '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 자치경찰제 법령 지원 강화 / 자치경찰제 교육·홍보 등 대내외 공감대 확보
	112중심 치안상황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수호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 112신고 현장업무 처리 만족도 / 위기관리역량지수
	민생침해 범죄, 중요 사건사고 신속·엄정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살인·강도·절도 통합 검거율 / 생활 주변 폭력사범 검거인원 /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사건 처리 신속도
	범죄·재난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정보분석으로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재난·안전사고 등 예방적 정보활동 우수사례 질적 향상 /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지수 / 재난 안전정보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사회안전성 인식	5.2	5.2	6.2	6.5	'18년부터 3년도 실적이 5.2점을 지속 유지하다 '21년 6.2점으로 급격히 상승, '22년 목표치는 지속 상승을 독려하여 '21년(6.2)보다 0.3p 증가한 6.5로 도전적 설정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10점 만점)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21. 7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으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올해는 제도 실질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

- 그간 전방위적 홍보로 붐업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대상별 제도안내 ▵기본가치·모범사례 소개 등을 통해 가치·성과를 공유

- 변화된 치안환경에 따라 국민 최접점 112·지역경찰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증가, 빈틈없는 현장조치로 치안서비스 품질 제고

- 치안수요 분석 등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경찰관서 재편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자치경찰제 안정적 정착 도모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범죄는 감소하였으나, '21년 전국 112 신고건수(18,710,459)는 전년대비(18,296,631) 2.3% 증가

- 관련, 경찰 대응활동은 '22년에도 지속될 전망, 장기화된 팬데믹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지원체계 등 재정비

○ 최근 3년간 코로나19 상황 뿐 아니라 대형 재해*가 잇따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1.27.)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 ▵역대 최장 산불('22.3월) ▵광주 아파트 붕괴('22.1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21.6월) 등 '10~19년 연평균 인명피해 15명, 재산피해 3천억원 → '20년 56명, 1조 3천억원

- 체계적·종합적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역량제고로 자연·사회적 재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의 전문적·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보관들이 보다 가치있는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방침

(4) 참고자료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www.pcad.go.kr)

○ 사이버경찰청 경찰 범죄통계(http://police.go.kr)

○ 112 신고·접수 매뉴얼 / 지역경찰 현장매뉴얼 /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1 예방지향적 정책 고도화로 치안활동의 효과성 제고

□ 추진 배경

○ ‘사후대응 → 사전예방’ 중심으로 국민적 관심·기대가 높아진 만큼, 공동체 구성원 참여·협력 기반의 예방활동이 중요

– ’17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낼 치안정책들을 발굴하고, 범죄예방 및 체감안전 향상 도모

○ 다만, 공동체치안 추진 6년차 완숙기에 접어든 만큼, ▵ 기존 정책 점검·조정 ▵ 新 성장 동력을 위한 연구·고도화에 집중

– 또한,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예방정책이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청과의 협업·지원체계도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예방적 순찰활동 추진**

– **(탄력순찰 내실화)** 순찰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이 불안해하는 장소를 확인, 순찰경로 내비게이션 안내 등 순찰 실시

※ 이행률 지속 관리와 함께, 포상 및 홍보예산 지원, 순찰신문고 개선 등

– **(지역안전순찰 정착)** 지구대·파출소의 순찰활동 중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지역문제를 확인·해결하는 지역안전순찰 지속

※ ‘순찰대상 선정(순찰신문고) → 순찰 실시(내비게이션 안내) → 순찰 결과 입력(간이 범죄예방진단)’ 등 시스템 개선, 체계적으로 관리

– **(순찰 연구)** 치안상황관리관실 및 시·도청과 협업, 순찰 효과성 실증연구 및 드론·로봇순찰 등 시범운영 추진

○ **범죄예방진단팀 중심으로 지역 치안문제 해결 노력**

– **(불안요소 개선)** 범죄예방진단팀을 중심으로 '취약요인 진단 → 범죄취약·불안환경 개선' 등 지역문제 종합적 해결 노력

► **(진단)** 지역경찰·주민 요청 등에 대해 현장진출하여 취약요인 점검
► **(순찰)** 지역특성·취약요소에 따라 순찰시간·장소 등 순찰선 정밀 조정
► **(환경개선)** △ 경찰청 주관 범죄예방환경조성 공모 사업 △ 지역단위 지자체 협업사업 등을 통해 불안환경 개선

– **(예측적 경찰활동 강화)** 자문단 등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 고도화 추진

– **(범죄안전지수 발표)** 지역별 범죄안전지수를 조사하고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시·도청의 범죄예방활동 고도화 지원

– **(시기·테마별 예방활동)** 시기·계절별 범죄발생 추이 분석을 통해 취약시기 범죄특성을 고려한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전개

※ 설·추석 등 명절 전후 ▵범죄취약장소 진단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유흥시설 점검 ▵교통 관리 등 종합적 활동 전개(명절 전후 2주 내외)

– **(치안사각지대 최소화)** 내수면·관광지 등 특수지역 내 치안활동을 위해 교육(인명구조·외국어) 및 유관기관과 협업 지속

○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위험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여성 범죄예방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안심구역 확대

※ 지자체와 협업, 지자체 예산 매칭 사업을 통해 사업효과 배가 도모

– **(CPTED 표준안)** 현장의 범죄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 CPO 업무방법 ▵ CPTED기법 ▵ 법령 ▵ 방범제품 등 가이드라인 제시

○ 민간의 치안 분야 사회공헌사업 확대 유도

– **(범죄예방대상 개최)** 중앙일보와 제7회 범죄예방대상 공동 주최, 범죄예방에 참여·공헌이 큰 지자체·단체·기업 시상

※ 홍보 강화, 심사규정 구체화, 포상규모 정비 등 범죄예방대상 개선 병행

– **(사회공헌사업 확대)** 민간기업·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공급-수요처 매칭을 통해 치안 인프라에 대한 사회공헌사업 유도 추진

○ 지역사회와의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시민 치안참여 활성화

–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정비)** 외부협업 및 범죄예방·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치안협의회 등과 연계 강화

– **(시민 참여 유도)** △시민경찰학교 △警·學 학점제 등 운영, 다양한 집단이 범죄예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

– **(경비업 민원 처리 개선)** 경비업 관련 신고·발급·확인 등의 민원을 경찰민원포털 및 타부처 시스템 연계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2년 설명절 종합치안대책 추진	'22. 1월	
	관광경찰대 인력 운영방안 안내	'22. 1월	
	비상벨 등 긴급신고시스템 개선 계획 알림	'22. 2월	
	'22년 범죄예방활동 종합계획 수립	'22. 3월	
	'22년 범죄안전지수 조사 기본계획 수립	'22. 3월	
2/4분기	CPTED 표준안 제작 계획 수립	'22. 4월	
	경비원신임교육 이수증 발급 등 경비업 민원 온라인 처리 확대	'22. 5월	
	제7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공모	'22. 6월	
	'22년 시민경찰학교 운영방안 안내	'22. 6월	
	'22년 경·학 실습학점제 운영방안 안내	'22. 6월	
3/4분기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 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22. 7월	
	경비업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연계 추진	'22. 7월	
	'22년 여름경찰관서 운영	'22. 8월	
	'22년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 추진	'22. 9월	
4/4분기	'22년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22. 10월	
	'22년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경진대회 개최	'22. 11월	
	경찰청-건축공간연구원 CPTED 컨퍼런스 개최	'22. 11월	
	지역별 범죄예방지수 맞춤형 컨설팅	'22. 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모든 국민, 이해관계집단 : 없음

□ 기대효과

○ 탄력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수요자 중심의 예방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치안문제 해결 노력

○ 범죄예방진단팀을 주축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역 문제 고민하고 해결하는 등 치안거버넌스 기반의 예방정책 활성화

○ 지자체·기업·사회단체·지역주민 등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능동적 치안참여를 통해 보다 촘촘한 지역안전망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범죄예방(Ⅰ-1-일반재정①)			
①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1131)		106	66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311)		106	6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탄력순찰 이행도 (50%)	61.2%	69%	90%	90%	공동체치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 불안요인을 선제적·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문제의 진단·해결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업이 요구됨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경찰력을 집중할 때 가능하며, 탄력순찰은 국민이 원하는 시간·장소에 순찰을 실시하는 공동체치안 핵심 모델이며, 국민의 참여와 경찰의 조치 여부가 제도성공의 핵심인 만큼, 지속적인 정책수행여부 관리가 필요함 본 지표는 긴급 112신고 현장대응 및 한정된 현장인력으로 인해 임계치가 명확함 최근 3년간 추세치는 73.4%이나, 도전적(10% 이상)으로 설정하여 **목표치를 전년 수준 90%로 설정**	순찰희망장소-순찰궤적 間 일치율	스마트워크 시스템에서 지역주민 순찰 희망장소와 순찰궤적 間 좌표 매칭율 추출
CPTED사업 참여노력도 (50%)	61.2%	77%	93%	93%	지역별 셉테드 사업은 치안 전문가인 경찰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치안현황 분석·진단 및 예방정책 연계 등으로 CPTED사업의 효과성을 배가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지자체 사업 참여 현황을 지표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본 지표는 전국에서 추진된 CPTED 사업 중 경찰이 추진 과정에 참여한 사업 비율로, 지자체의 예산 투입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달성에 어려움이 큰 지표임 최근 3년간 추세치는 77%이나, 도전적(10% 이상)으로 설정하여 **목표치를 전년 수준 93%로 설정**	(경찰 제안으로 추진된 셉테드 사업 건수) ÷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셉테드 사업 총 건수) × 100%	수기 취합 및 지자체 공문 등 근거자료 첨부

2 자치경찰제 내실화

□ 추진배경

○ 자치경찰제 법령 통과 이후, 전면 시행 일정('21.7.1)에 맞춰 시·도별 △조례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등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로 지역 맞춤형 치안시책을 발굴·시행하여, 명실상부 자치경찰사무의 컨트롤 타워로서 존재감 부각에 나서는 中

자치경찰제 주요 추진성과

▫ **(법제화 완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표준조례안을 마련, 시도에 안내하여 전면 시행 이전 17개 全 시·도에서 관련 조례 제정 완료('21.5.28) 및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추어 경찰청 소관 행정규칙(190개) 정비 완료('21.6.30)

▫ **(자치경찰제 운영)** 시·도별 위원회 사무기구 구성('21.6.24) 등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21.6.30) ▵주민 의견 수렴 ▵지역 특성 반영 ▵현장 경찰 대응력 향상 등 맞춤형 치안시책들을 적극 시행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 中

▫ **(대내·외 공감대 확보)** 홍보영상 제작 및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식 개최 등을 통해 제도 도입·운영을 적극 알리고, ▵자치경찰 소식지(월간) ▵법령 해설서('21.6월) ▵리플릿 제작·배포 등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대국민 이해도 제고에 총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자치경찰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운영방안 지속 개선·보완

○ (인사·성과 체계 개선) △임용권 위임 △시·도경찰청장 추천·협의 △지역경찰관서장 보직 시 의견수렴 등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인사 절차를 정비 및 표준화하고,

–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찰서장 평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 평가 체계를 보다 내실화하여 협업 인사·성과제도 정착 추진

○ (법률 지원) 자치경찰제 관련 △법령해설서* 보완 △법률적·정책적 자문 △법령 개정 필요사항 정비 등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 지원

* <법령 해설서 개요> : △축조해설(조문별 내용, 입법취지 등) △주요 질의사항(42개) △경찰법·경찰공무원법·표준조례안 등 자료 수록

※ '21년 자치경찰제 주요 법령 해석 사례, 법제처 해석 등 반영

○ (신규 성과지표 관리) 지자체 합동평가 上 신설한 자치경찰 관련 지표*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각 시·도별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과 참여를 유도하고, 경쟁적 발전을 도모

< * 지자체 합동평가 :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 시책 >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 **평가대상** : 광역지자체(17개)
- **평가주체** : 행안부 산하 합동평가단
- **평가시기** : '23년(22년 실적)
- **주요내용** : 17개 시·도별 '자치경찰사무 관련 우수시책'을 정성평가, 우수 지자체 4곳을 선정

– 동시에, 경찰청 소관 지표(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를 추가 발굴·반영하고, 他부처의 치안 관련 지표들까지 통합 관리 가능토록 지자체 합동평가 체계 개선 여부를 검토

○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 '22년부터 시·도에 국고보조금 형태로 이관되는 만큼,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직접 확보·집행 가능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2년 예산
자치경찰 지원	자치경찰지원(생안)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자치)	89억원
	자치경찰지원(여청)	아동청소년 및 수사활동(자치)	107억원
		아동안전지킴이(자치)	645억원
	자치경찰지원(교통)	교통안전교육홍보(자치)	47억원
		교통안전활동(자치)	30억원
		교통과학장비관리(자치)	381억원
	합계		**1,299억원**

– 이에, 시·도별 자치경찰사무 예산 집행 점검과 동시에 우수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全 시·도 공유·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

② 자치경찰제 관련 대내·외 소통·협력 확대

○ (중앙–지방 협력) 경찰청–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間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운영으로 △경찰청 추진업무 △전국적 대응 필요 사안 △지역별 치안 이슈 등을 공유·협의, 명실공히 전국 치안 협의·조정기구로 발전 도모

– 또한, 旣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등 운영을 활성화, 기초자치단체–경찰서 단위의 소통·협력 체계도 강화

○ (자치경찰 R&D사업) 자치경찰사무 관련 R&D사업 예산이 신규 배정됨에 따라, 총 6곳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선정하여, '23년부터 5년간 R&D 예산(연간 10억원)을 지원 예정

– 지역별 주요 치안시책을 과학치안으로 뒷받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토록 △경찰청 內 R&D사업 운영체계(사업심의위원회) △시·도 및 자치경찰위원회 間 협업 체계(Hub&Spoke)를 확고히 구축

○ (교육·홍보) '22년은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일선 현장(경찰관·시도공무원)에서의 제도 이해 및 추진동력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사이버 교육 컨텐츠 제작 △대면 강의 등 교육에 집중

– 또한, 시·도별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치경찰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제작(月 1회), 시·도 및 현장 경찰관 대상 배포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가치와 성과 공유를 지속 확대

–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별 旣 구성된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지역 곳곳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맞춤형 홍보활동이 전개되도록 지원

< '22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파견 경찰관 신규·교체 발령	'22.1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파견 경찰관 정원화 협의	'22.2월	
	시·도 교육 수요조사 대면 및 화상 교육	'22.3월	
2/4분기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설치·운영 근거 마련 검토	'22.4월	
	법령 정비사항 입법 예고 절차 등 법제처 협의	'22.5월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 집행 점검	'22.6월	
3/4분기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도입 1주년 점검	'22.7월	
	사이버(직장) 강좌 등 컨텐츠 제작	'22.7월	
	'알기쉬운 자치경찰제' 법령 해설서 수정·보완	'22.8월	
	인권영향평가·법무과 심사 등 법령 제정 내부 절차 진행	'22.9월	
4/4분기	행안부 주관 지자체 평가 합동지표 확대 추진 검토	'22.10월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 결산 점검	'22.12월	
연중	자치경찰제 관련 법령 해석 및 자문		
	경찰교육기관, 시·도 대상 교육 실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소식지 제작		
	경찰청-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협의회 間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운영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받게 되는 全 국민

○ **(이해관계집단)** 국회, 관계부처(행안부, 기재부 등), 지방자치단체 등

□ 기대효과

○ 한국형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에 부여함으로써 경찰권 분산과 자치분권성 담보 가능

– 특히, 국가-지자체 間 담당 업무만 처리·인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적 업무수행으로 치안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 치안정책 검토·반영 절차가 대폭 간소화됨에 따라 주민요구를 신속하고 빠짐없이 반영하게 되어, 빠르고 적절한 피드백 가능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경찰청-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間 '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30%) <신규>				70점	경찰청과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間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으로, 양자 間 정기적 소통·회합을 통해 △전국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 공유 △중요 치안정책의 조율 △제도 관련 문제점 공유·개선 추진 실적 등을 정량화하여 평가 진행	하단 참조	〃
자치경찰제 법령·정책 등 모니터링 활성화 (30%) <신규>				70점	자치경찰제 내실화를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 관련 정책 추진 시 △법령 해석 △이견 조율 △지침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정량화하여 평가 진행	〃	〃
자치경찰제 교육·홍보 등 대내·외 공감대 확보 (40%)			97점	80점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내·외 이해도 제고 및 의견 수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을 감안 ▵시·도 공무원 ▵지역주민 등 대상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 및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노력을 정량화하여 평가 진행	〃	공문, 언론보도, 세미나 자료집 등

< 지표 1 > 경찰청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間 '정책협의체' 활성화(신규지표)

목표	정책협의체 회의 참석			치안시책 발굴·개선		
70점	청장·차장	국장급	과장급	의제발굴 및 현안 공유	전국적 의견 조율·검토	시책 개선 및 시행
	1회당 10점	1회당 7점	1회당 5점	건당 3점	건당 5점	건당 7점

※ 국가경찰-자치경찰 사무 間 정책 협의·조정을 통해 원활한 제도 정착 및 전국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 등을 조율하는 업무 중요도, 노력도 등을 고려해 목표치 하향 설정

< 지표 2 > 자치경찰제 법령·정책 등 모니터링 활성화(신규지표)

목표	법령 정비		법령 지원	
70점	법령 개정	지침 개선·시행	법령 등 유권 해석	법령 등 자문·질의 접수
	1건당 10점	1건당 5점	1건당 8점	1건당 2점

※ 제도·법령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계기관 의견 수렴·지침 개선 및 국회 심의 대응 등을 수행하는 고난이도 업무인 점과 법제 업무의 중요도·노력도를 고려해 목표치 하향 설정

< 지표 3 > 자치경찰제 교육·홍보 등 대내·외 공감대 확보

목표	자치경찰제 교육		설명회,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등		대외 설명자료 제작·공유		대국민 홍보					
80점	사이버	오프라인	주관	참여지원	해설서	리플릿 등	행사 개최			홍보물	SNS	보도자료
	컨텐츠당 10점	1회당 5점	1회 실시 10점	1회 실시 3점	1건당 15점	1건당 3점	대통령 참석	총리급 참석	장관 청장	건당 5점	건당 5점	건당 5점
							15점	10점	7점			

※ 전년도 목표치(70점)와 실적(97점)을 감안, 전년 대비 약 10% 이상 상향한 80점을 목표치로 설정

3 112중심 치안상황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수호

□ 추진배경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직결된 범죄 및 재해·재난 등 주요 치안상황 발생 時 신속·정확한 대응활동은 경찰의 존립 목적이자 기본 임무

○ 코로나19 등 재해·재난의 일상화·장기화·대형화 및 자치경찰제 시행, 복잡다기화된 각종 범죄 등 변화된 치안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 증대, 이에 상응하는 치안상황관리 역량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코로나19 극복 및 온전한 일상으로의 회복】

○ **(코로나19 경찰재난대책본부 개편)** 기존의 대책실행팀·지원팀을 실질적 코로나19 대응 현안 임무와 역할에 맞게 재편성

– **<기구 통합·조정>** 마스크 유통질서·확진자 이송 지원 등 종료된 업무 소관 팀 폐지, 핵심 임무 중심 조직 개편 後 책임 명확화

– **<예방접종·백신수송 지원체계 개편>** 안정적 예방 접종 및 백신 수송 상황 감안, 수송·보관·접종을 제외한 지원팀은 기능별 임무에 따라 경대본 체계 내로 재편성하여 업무 수행

○ **(업무연속성 유지)** 대규모 경찰 확진자 발생 대비 사회필수기능인 치안분야 공백 방지를 위해 全 경찰관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 **<지휘대행 체계 유지>**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에 따라 지휘관·중간관리자 직무대리자 지정, 지휘·관리·감독체계 완비

– **<핵심업무 유지>** 차질 없는 민생 치안활동 수행을 위해 ▵내근 ▵외근(교대부서) ▵지역경찰 등 직무 특성에 맞는 대체 근무 방침 적용

※ 교대근무 탄력적 운용(4조 2교대→3조 2교대), 업무 유관부서 지정(여청↔형사)

– **<완결성 제고>** 도상 및 실제훈련 실시하여 문제점·개선사항 발굴, 업무 연속성 계획 지속 보완·현행화로 공백 없는 치안활동 전개

【치안상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인프라 구축】

○ **(법적 체계 구축)** 업무 중요도·변화된 치안환경을 반영한 상위 법률 제정 및 관련 행정규칙·지침 정비를 통한 체계적 법적 기반 마련

– **<법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경찰활동의 시작이자 핵심인 112 경찰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 **<행정규칙>**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및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상 보고사항(17개),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現 실정에 맞게 개정·정비

– **<관련 지침>** '지역경찰 운영지침' 등 분야별 지침·제도를 현장에 맞게 업데이트·불필요한 지침 삭제 및 개선 사항 지속 발굴

○ **(지역경찰 조직·인력 효율화)** 비효율적 운영 지역관서 폐지·통합, 치안수요 및 지역실정 고려한 지역경찰 인력 조정 등 관리 효율성 제고

– **<통합>** 농어촌 지역 등 지구대·파출소 間 치안수요 편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중심 지역관서+주간 파출소' 전환 확대

– **<조정>** 기동순찰대 존폐·인력 활용 등 관련 시도청별 현장의견 수렴 및 필요성 검토 後 축소·분산·폐지 추진

– **<인력 운영>** 도심형 지역관서 5조 3교대* 확대 시행으로 신고 사건이 많은 심야시간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여 효율적 인력 관리

* 주·야간 112신고 분석 후 신고 편차가 큰 도심지역 위주, 취약시간(22:00~04:00) 인력 집중 운영

【112시스템 지능화·고도화를 통한 정교한 신고대응체계 구축】

○ (개요) ’12년도 도입한 112시스템의 내용연수 경과 등 노후화로 최신IT기술 적용, 미래 확장성·범용성 구비 차세대 시스템 도입 필요

[112시스템 고도화 사업]

▸ ’19년도 112시스템 고도화·지능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행결과에 따라 **4개년 (’20 ~ ’23년) 계획 수립, 금년도 3년차 사업 추진 예정**

▸ 총 예산 **510억** 소요, ’20년 89억 → ’21년 159억 → **’22년 81억** → ’23년 181억(추정)

○ (112신고 분석 기능 강화) 신고 접수 時 현재는 신고자 전화번호 대상 과거 신고 이력 조회에 한정

– 발생지 및 사건 관계인(피해자·피신고자) 신고 이력 조회 및 APO* 시스템과의 연계 등 충분한 사전 정보를 통해 효율적 신고 대응

* 112시스템 內 DB뿐 아니라 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APO)상 정보도 조회 가능토록 하여 ‘재발 우려 대상자’ 여부 등 실시간 확인 체계 구축

○ (노후장비 교체) H/W 최신화(교환기·CTI·콜백·녹취·항온항습·UPS 등) 및 관련 S/W 업그레이드 추진

○ (신고자 위치정보 정확도 개선) Wi-Fi 측위 성능을 개선하고 방통위와 협의, 복합측위방식 검증·도입 검토 등

○ (기기 개선) 순찰차 태블릿·112폰 최신화 등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 등 신고처리 효율성 제고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연계로 입체적·효율적 상황관리】

○ (지자체 CCTV 연계) 국토부와 협업, 신고자 주변 최근접 5개소 CCTV를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로부터 제공받아 112시스템에서 조망

○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 순찰차에 영상전송용 카메라 설치, 현장경찰과 112상황실 間 실시간 현장영상 공유

○ (보이는 112 서비스) 112신고접수 時 신고자 휴대폰으로 URL이 포함된 문자 전송, 이를 클릭하면 신고자 위치 및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112상황실·출동 경찰관에 전송

※ **출동 경찰관**도 업무용 폰으로 촬영되는 영상을 실시간 112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현장 V112’ 서비스 병행**

○ **(통합관제상황판 구축)** 노후화된 전국 시도청·경찰서 112상황실 통합관제상황판을 최신 장비로 교체, 현장에서 실시간 전송되는 영상 모니터링(보이는112·지자체 CCTV·순찰차캠 등)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지자체 CCTV 연계>** '21년도까지 전국 102개 경찰서 구축 完, **全 지자체와 연계 추진**
-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 본청 및 全 시도청·53개 경찰서, 순찰차 총 1,297대 완료
  올해 76개 경찰서(순찰차 1,874대) 설치 예정
  ※ '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사업
- **<보이는 112 서비스>** '21년 서울 관악서·제주청 시범운영, **'22. 1. 1.부터 전국 확대 시행 中**
- **<통합관제상황판 구축>** '20·'21년 본청·16개 시도청·21개 경찰서 교체 완료, **금년 24개 경찰서 대상 교체 예정**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중요 신고 현장조치 정교화】

○ **(현장 종결 및 사후관리 강화)** '순찰팀장 112종결승인·문자통지 시스템' 확대 적용 및 '반복신고' 관리 등 반복·사회적 약자 관련 신고 처리 완결성 제고

– **<종결승인·문자통지시스템 확대>** 112신고종결 時 순찰팀장 승인·관련기능 통보·처리결과 문자 통지 시스템 죄종* 추가**·확대 검토

* '21. 8. ~ 11월, 12종(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폭력, 실종, 가폭, 데이트폭력, 스토킹, 아동학대(가정 內·기타)

** '22. 1월부터 2종 추가(피싱사기, 학교폭력), 6월까지 시범운영 後 검토 예정

– **<반복신고 관리 지속>** 신고 접수단계에서 3회 이상 반복신고 인지 時 시도청 112상황실에서 직접 관리, 단순 현장 종결 자제 및 관련기능 통보 확행

※ 경찰서별 전일 처리사건 中 사회적 약자 대상 신고·3회 이상 반복 신고 처리내역 등 全數 관련기능 통보 및 서장 보고

○ **(사례별 대응역량 강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서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사망사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훈련 내실화

–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중요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피습·흉기 난동 가정, 현장에 맞는 역할극·상황극 위주 교육·훈련 실시

– **<FTX 등>** 112상황실·지역경찰·관련기능(형사·여청 등) 합동 정기 FTX·CPX 등을 통한 대응역량 제고

【현장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내실화】

○ (112경찰 역량 강화)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치안활동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全 기능 지휘·조정 가능한 전문가 양성 필요

– <업무 매뉴얼 개선> 전국 112상황실 접수·지령 요원 수정 요청사항 등 현장 의견 수렴,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 개정·배포

– <112 매뉴얼 문제집 제작> 개정된 매뉴얼 내용 기반, 문제집 발간·활용을 통해 112신고 접수·지령역량 제고

– <교육 시스템 정비> 인재개발원을 통해 양성·교육된 시도청 동료강사 주관 현장직원 대상 직장교육 실시 등 커리큘럼 개선

– <사이버교육 확대> 중요사건 유형별 상황관리요령 등 지령·접수 요원 및 상황팀장 직무에 맞춘 전문화된 내용의 강의 동영상 제작

– <전문화 교육> 시도청 등 현장경찰 대상 빅데이터 교육을 통한 통계분석 전문가 양성

○ (지역경찰 전문성 제고) 상시 교육훈련 강화로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상응하는 전문화된 현장경찰 확립

– <교육영상 제작> 교육자료 중 주요 현장 사례 선별,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는 숏폼 형식의 교육 영상 제작

– <우수사례 공유> 지역경찰포털 內 상시교육 관련 우수 운영 사례 및 콘텐츠 공유할 수 있는 '상시교육 게시판' 신설

※ 他 시도청 우수 사례(교육콘텐츠 등) 수시 공유 등 벤치마킹 유도, 게시된 운영사례 및 교육콘텐츠는 월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

– <성과평가> 지역경찰분야 각종 성과 평가·선발 및 우수 지역경찰관서 등 선정 時 상시교육 평가항목(참여율·우수사례 등) 신설

– <인센티브> 지역경찰 상시교육 특별승급(행정발전) 신설 (5명) 및 표창·장려장(각 32매→95매, 43매 → 205매) 대폭 확대

– <점검·환류> 정기 점검기간(분기별 1회) 선정, 시도청 및 소속 관서 중심 현장점검 추진 後 결과 확인(추후 이행실태 불시점검)

【근무여건 개선 및 홍보활동 전개로 대내외 만족도 제고】

○ **(상황실 근무여건 향상)** 24시간 365일 교대부서 특성상 112경찰 스트레스·피로도 과중, 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 자긍심·효율성 제고

- **<시도청 환경개선 등>** ▵ 인천청 112상황실 리모델링 ▵장기간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노후화 심각, 112접수석 교체

- **<상황실 이전>** 시도청 및 경찰서 신축·이전계획에 맞춰 112상황실 구축 지원, 치안상황업무 효율성 극대화

- **<심신안정실>** 112경찰 감정노동 및 업무스트레스 개선을 위한 전국 경찰관서 112상황실 內 안마기기 등 독립휴게공간 순차적 마련

  ※ '21년 서울청·대전청, 전남 순천서 구축 완료

○ **(112치안종합상황실 표준화)** 상황·사무업무·회의·휴게공간 등 구분 및 근무자 중심 동선·공간 고려, 전국적 통일된 상황실 표준안 마련

○ **(지역경찰 복지 개선)** 수당 현실화, 업무시스템 고도화, 사무환경 정비 등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자긍심·책임감 제고

- **<사무환경 개선>** 냉난방기·CCTV 등 노후물품 교체 및 일상적·반복적 교육을 위한 각종 기자재 구입 지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수당 현실화 등>** 순찰팀장 업무추진비 증액(9.7억→25억, 1인당 평균 1.8만원→4.5만원) 추진 및 112출동수당(日 3만원→상한액 폐지, 주간코드 제한→확대) 개선 노력

○ **(유관기관·대국민 협업성 제고)** 112경찰활동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긴급신고대응기관 및 국민과의 협업 체계 지속 구축

- **<제65주년 '112의 날' 기념식>** 유관기관·국민 등 다양한 각계 각층 초청, 안전가치 수호를 공유하는 협업의 場 마련

- **<제2회 올바른 112 공모전>** 국민이 직접 올바른 신고 방법·허위신고 근절 등 홍보에 참여, 허위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신고를 줄이고, 긴급신고에 집중 효과

- **<긴급신고 공동대응 강화>** 행안부·소방·해경 등과 정기 공동대응 훈련 및 협의회 실시, 국민 안전 수호 긴급신고 기관 협업 체계 강화

-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 매년 112의 날에 맞춰 1년간 112 요원들의 주요사건 해결·미담 사례를 모은 '소리로 보는 사람들' 발간·배포(제4집)

【새로운 팬더믹을 대비한 위기극복 노하우 공유】

○ (**기능별 대응 매뉴얼 정비**)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및 미래 팬데믹에 대비 기존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

– 現 매뉴얼은 '20년 코로나 초기 상황을 반영한 계획, 현재 실정에 맞춰 현장 조치사항·지침개정 등 일제 정비

○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 전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상황인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정리, 미래에 도래할 신종 감염병 발현에 대비

– <**자료정리 및 제작**> 코로나 관련 全 경찰 활동 자료를 수집·정리, 유사 상황 時 즉각 활용 가능토록 시기별 대응조치·기능별 주요활동·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작

– <**발간 및 배포**>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 경찰서·유관 협력기관 등에 배포하여 감염병 대응 노하우 전수·공유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위기대응역량 제고】

○ (**재난대응 교육 훈련 내실화**) 개정된 재난관계 법령·매뉴얼·행정규칙 등을 위기관리 인력 교육 時 반영 및 실질적 훈련 강화

– <**사이버 교육**> 경찰교육 포털 內 재난위기 관련 사이버 콘텐츠 일제 정비, 경찰교육기관 교수요원 참여 '22년 사이버 강좌 정비

– <**도상 훈련**> 발생빈도 빈번·대규모 피해 우려 재난 대상 실제 상황 가정하여 시나리오 기반 토론훈련 실시

※ 초동대응 → 총력대응 → 수습복구 각 단계별 필요 조치 훈련 後 개선 필요 사항 도출하여 매뉴얼 개선 및 교육에 활용

○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단권화**) 現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33종의 핵심·공통사항 단권화, 全 상황에 적용 가능한 표준매뉴얼 제작

– ▵현장 착안점 ▵초동조치 체크리스트 ▵필요장비 등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현장 활용도 제고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지역경찰 상시교육) 내실화 계획 수립	'22. 2월	
	◆ (지역경찰 상시교육) 게시판 신설 및 교육영상 제작·배포		
	◆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 (업무연속성) 유지 훈련 및 점검	3월	
	◆ 112신고·접수지령 매뉴얼 개정		
2/4분기	◆ (지역경찰 상시교육) 1차 현장점검	4월	
	◆ 코로나19 관련 기능별 대응 매뉴얼 정비		
	◆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 지역경찰 5조3교대 시범운영 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	5월	
	◆ 112치안종합상황실 교육 종합계획 수립		
	◆ 풍수해 관련 도상훈련	6월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 수립		
3/4분기	◆ 112 매뉴얼 문제집 제작	7월	
	◆ 현장종결 시스템 이행실태 점검		
	◆ (지역경찰 상시교육) 2차 현장점검	8월	
	◆ 도심형 지역경찰관서 5조3교대 확대 시행		
	◆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단권화	9월	
4/4분기	◆ 재난 관련 사이버 교육 콘텐츠 개편	10월	
	◆ (112시스템 고도화) 항온항습기 및 무정전전원장치(UPS) 설치 완료		
	◆ 우수사례 모음집 '소리로 보는 사람들' 4집 발간·배포		
	◆ 지역경찰 분야 FTX(시도경찰청) 결과 평가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1월	행정부 일정에 따라 변경 可
	◆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 수립		
	◆ 제65주년 '112의 날' 기념식		
	◆ 제2회 올바른 112공모전 개최		
	◆ (112시스템 고도화) 유선장비 개선사업 완료	12월	
	◆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		
	◆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완료(76개서)		
	◆ 시도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환경개선(인천청)		
	◆ 심신안정실 구축 완료(3개 시도청)		
연중	◆ 112신고의 처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소관 법령 정비		
	◆ 지역관서 격려 방문, 공상 경찰관 위문 등 본청·현장間 소통 강화		
	◆ 지역경찰 수당 현실화(업추비 증액, 출동수당 확대 등) 및 '23년도 112고도화·지능화 사업(4년차) 등 관련 예산 확보 추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全 국민

○ 이해관계집단 : 없음

□ 기대효과

○ 112신고 등 각종 상황 발생시부터 현장 초동조치까지 全과정을 고도화된 치안상황시스템 및 전문화된 인력을 통해 상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코로나19 경찰 대응활동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위기관리대응 체계 확립, 일상을 위협하는 재해·재난으로부터의 국민 안전 수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2]			
치안상황관리(1431)			
① 범죄대응및재난안전관리(1431-311)	일반회계	128.25	229.46
■ 112상황운영(1431-311)		98.1	134.59
- 교육훈련 계획(1133-311)		0.9	0.9
- 업무매뉴얼 제작·보완(1431-311)		0.2	0.2
- 심신안정실 구축(1431-311)		3.2	3.3
- 112의 날 65주년 기념식(1431-311)		1	1
- 우수사례 모음집(1431-311)		0.1	0.1
■ 재난안전활동 및 장비관리(1431-311)		30.2	30.2
- 현장경찰관 안전장비 보급(1431-311)		26.0	25.65
- 재난대응 훈련 활성화(1431-311)		0.9	0.9
- 현장 매뉴얼(1431-311)		0.55	0.55
■ 지역경찰 운영(1431-311)			65.1
- 지역경찰 교육훈련 및 현장회의 경비(1431-311)			2.98
- 지구대파출소 업무추진비(1431-311)			972
- 지역관서cctv 및 냉난방기 교체 등(1431-311)			21.54
② 112시스템 운영(1431-511)	일반회계	285.8	250,92
■112시스템 유지보수(1431-511)		44.1	44.1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1431-511)		159.57	8.132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1431-511)		70.75	125.5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그간, 성과지표는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국민 긴급신고 신속 현장 대응 달성도 ▵위기관리역량지수로 선정·관리

- 이 중 국민 긴급신고 신속 현장 대응 달성도는 112신고접수·지령 後 현장 도착시간을 측정,

- 최근 3년간* 13.5초 단축(4.2%)하는 등 매년 지속적·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해 목표치 달성하였으나, 사실상 임계치 도달

  * (19년) 5분 18.5초 (20년) 5분10초 (21년) 5분5초

- 전년도 자체평가 정책과제 수립 時 외부위원 컨설팅 과정에서 해당 지표 임계치 도달 등을 감안, 지표로서 지속 유지 여부 검토 제안

  ※ 임계치 도달은 사실상 목표 달성한 것이므로, 올해부터 해당 지표 폐지

○ 한편, '21년부터 지역경찰 관리 사무가 이관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지표 미비에 대해서도 개선 의견 제시

- 이에, 현재 치안고객만족도 조사 항목 中 일부*인 112신고 현장 업무처리 만족도를 새로운 지표로 채택·관리 예정

  * 112신고처리분야 만족도 = 112신고접수 + 현장업무처리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112신고 접수 처리 만족도 (30%)	87.0	87.4	89.3	**90.3점**	하단참조	하단참조	하단참조
112신고 현장업무 처리 만족도 (40%)	신설			**88.9점**	하단참조	하단참조	하단참조
위기대응 역량지수 (30%)	신설	1,245.6점	1,752점	**1,500점**	하단참조	하단참조	하단참조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 **(개요)** 경찰 112신고접수에 대한 국민 만족 수준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치안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 만족도 제고하고자 함

- **(구성)** 112신고 접수 신속성·성실성·전문성·전반적 만족도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

- **(측정산식)** ①신속성·성실성·전문성 등 요소 만족도 + ② 전반적 만족도 수치를 가중치(70 : 30)에 따라 환산

- **(측정방법)**

  조사 기간 : '22. 1. 1. ~ '22. 10. 31. 종결민원 기준

  조사 기관 :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 센터

  조사 방법 : 카카오톡·문자 이용, 설문조사시스템 접속 안내하여 112신고접수처리 분야 문항에 점수를 부여

  조사 대상 : 2022년도 경찰 112신고자 전원(관서별 code0, code1, 신고)

- **(목표치)**

  ▵ '22년 자체평가 정책과제(성과지표) 설정 기준에 따르면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 및 전년도 성과 등에 근거하여 적극적 업무 수행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바,

  ▵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성과지표 최근 3년간 실적('19년 87.0 / '20년 87.4 / '21년 89.3) 대비 추세치는 1.2%('19 ~ '20년도 0.4% / '20 ~ '21년도 2.1%)로서,

  ▵ 이를 상회하여 전년 실적대비'1.0점'(1.2%↑)이 상승한 **'90.3'점을 목표치로'도전적 설정'**

  ※ 최근 3년간 평균치는 87.9점으로'2.4점'상승을 목표로 선정

- **(목표 관리 방안)** 접수·지령 매뉴얼 개선, 문제집 제작, 교육 ·훈련 강화 등 112경찰 역량 제고, 체계적 목표관리 추진

【112신고 현장 업무처리 만족도】

- **(개요)** 경찰 112신고로 접수된 긴급사건의 현장조치에 대한 국민 만족 수준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지역경찰 활동의 개선·보완을 통한 치안서비스 품질 제고

- **(구성)** 112신고 현장 처리 시 출동 신속성·처리 신속성·지원성·성실성·청렴성·전문성·공정성·전반적 만족도 등 8가지 항목으로 구성

- **(측정산식)** ① 신속성·지원성·성실성·청렴성·전문성·공정성 등 요소 만족도 + ② 전반적 만족도 수치를 가중치(70 : 30)에 따라 환산

- **(측정방법)**

  조사 기간 : '22. 1. 1. ~ '22. 10. 31. 종결민원 기준

  조사 기관 :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 센터

  조사 방법 : 카카오톡·문자 이용, 설문조사시스템 접속 안내하여 112신고접수처리 분야 문항에 점수를 부여

  조사 대상 : 2022년도 경찰 112신고자 전원(관서별 code0, code1, 신고)

- **(목표치)**

  ▵ '22년 자체평가 정책과제(성과지표) 설정 기준에 따르면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 및 전년도 성과 등에 근거하여 적극적 업무수행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바,

  ▵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른 해당 성과지표 최근 3년간 실적('19년 83.7 / '20년 85.9 / '21년 87.2) 대비 추세치는 2.0%('19 ~ '20년도 2.6% / '20 ~ '21년도 1.5%)로써,

  ▵ 이를 기준으로 전년 실적 대비'1.7점'(2.0%↑)이 상승한 **'88.9'점을 목표치로'도전적 설정'**

  ※ 최근 3년간 평균치는 85.6점으로'3.3점'상승을 목표로 선정

- **(목표 관리 방안)** 지역경찰의 112신고 처리 전 과정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선·현장종결 시스템 등 효율적 제도 마련과 함께 상시적인 교육체계 확립, 매뉴얼·지침 정비 등 인적역량강화로 현장대응력 제고 및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

【위기관리 역량지수】

- **(개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 종합훈련 및 재난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 경찰 재난대응 역량 제고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를 성과지표로서 관리

- **(측정산식)**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훈련 횟수 + 경찰서 교육 횟수

- **(측정방법)** 시도경찰청 성과보고서

- **(실적)** '21년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교육 제한 등 성과 달성이 쉽지 않은 여건임에도 재해·재난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적극 진행하여 전년 목표치 대비 '381점'(40.65%↑)' 초과 달성('21년도 ▵ 목표치 1,371점 ▵ 실적 1,752점)

- **(목표치)**

  ▵ '22년 자체평가 정책과제(성과지표) 설정 기준에 따르면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 및 전년도 성과 등에 근거하여 적극적 업무 수행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으나,

  ▵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기준은 '20·'21년 실적치의 상승률 이상을 요구, 관련 지표 2년간 실적치는 '20년 1,245.6점·'21년 1,752점으로 40.65% 상승, 이를 그대로 적용·수립할 경우 목표치는 2,464점

  ▵ '21년 실적은 1,752점으로 목표치(1,371점) 대비 127.8% 초과달성, 이는 정부의 백신 물량 확보로 인한 백신 수송 훈련이 427회로 약 24%를 차지한 반면, 금년의 경우 백신 확보 안정화로 사실상 수송 훈련 계획 전무

  ※ 21년 실적 1,752회 : 백신 수송 훈련 427회 + 상시 훈련 1,325회

  ▵ 이에 목표치를 2년간 실적의 평균치(1,498.8) 및 전년도 목표치(1,371)를 상회하는 **'1,500점'으로 '도전적 설정'**

- **(목표 관리 방안)** ▵ 합동훈련 대상 지자체 등 폭넓게 선정, 참여 독려 ▵ 합동훈련 기반 협업 강화 위해 종료 後 경찰 요청사항 등 기관의견 지속 수렴 ▵ 소방·적십자사 등 전문인력 초빙, CPR 등 교육 내실화 ▵ 훈련·교육 성과 자체 평가실시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미흡사항 개선, 공유

4 민생침해 범죄, 중요 사건사고 신속·엄정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 추진배경

○ 침입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 인피 뺑소니는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범죄로, 신속한 수사를 통한 사건해결이 매우 중요

– 상습성·과거 이력 등에 대한 종합 판단을 통해 강력한 단속 활동 전개와 동시에 피해품 회수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주력, 실질적 '사건해결'로 국민 만족도 제고

※ 강·절도 피해품 회수 건수 소폭 감소('20년 65,077건 → '21년 63,974건)

– 인피 뺑소니 사고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체감 교통안전에 위협적인 요소 작용, 신속한 검거를 통한 피해회복 필요

※ 「뺑소니 당한 초등생 다른 차에 또 치여 사망」(뉴시스 '22. 2. 1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치열한 법적 공방도 예상되는 만큼, 수사의 중요성·난이도 확대

– 국민의 관심과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수사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명실상부 대표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경찰의 역할 정립 필요

※ 「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전문수사팀·인력 확대」(연합, '22. 1. 25.)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범죄의 사전예방부터 중요사건에 대한 엄정대응까지]

○ **(예방적 형사활동)** 검거에만 주력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취약지역 범죄예방, △범죄징후 조기발견·차단, △신속대응 등 범죄 단계별 국민이 체감하는 형사활동으로 패러다임 전환

▸ **(취약지역 범죄예방)** Geo-Pros 등 과학적 분석기법 활용한 지역별 치안수요 정밀 분석 후 형사·특성화부대를 사전에 투입하는 등 강력범죄 예방

▸ **(범죄징후 조기발견·차단)** 수집정보 다각적 분석 및 범죄예방·신고요령 안내 등 찾아가는 형사활동으로 범죄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해소

▸ **(신속대응)** △발생 초기부터 수사지휘망 운영 △광수대 투입 및 법률·수사 전문가 지원 등 총력대응 △강·절도 등 여죄수사 및 유통경로 역추적

○ **(중요사건)** 살인·대형 안전사고 등 중요사건은 △종합대응팀 편성, △경력·장비 집중 투입 등을 통해 신속 해결 및 검거율 제고

–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 사회적 약자(여성·아동 등) 대상 범죄, 외국인 집단폭력 등 사회적 이슈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② 침입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 교통 범죄 신속·엄정 대응]

○ **(침입 강·절도)** 발생 초기부터 가용자원 집중 투입, 신속 대응

▸ **(시기별 단속 강화)** 강절도 다발 시기에 맞춰 「집중검거 기간」 운영 ⇨ 상습적, 직업적 강절도 및 이와 공생관계에 있는 장물사범 근절에 집중

▸ **(주요 사건 총력 대응)** 연쇄·다액 침입 강절도 등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발생 초기부터 가용자원 집중 투입하여 조기 해결, 추가 범행 차단에 주력

※ 필요시 본청 주관 종합대응팀 및 수사지휘망 가동, 전국 실시간 공조로 조기 필검

– 장물과 연계한 수사를 통해 장물 처분·유통경로 逆추적 등 장물범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절도 범죄의 수익 창구를 봉쇄

○ **(생활 주변 폭력)**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체감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주변 고질적 폭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추진

<단속개요> 정책집중도 제고를 위해 집중단속 실시 ('22.4월 상반기 집중단속 계획 하달 예정 / 7월 이후 하반기 단속), 그 외 기간은 상시 단속

<단속대상> 길거리·상점·병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 등

– 신속한 초동수사와 함께, 신고 이력·상습성 확인 등을 통한 입체적·종합적 수사로 신병처리 검토 등 범죄 엄정 대응

구 분	조치 내용
신속 초동수사	신속히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 등 청취하고 증거자료 확보하는 등 초동수사 철저, 가·피해자 분리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
입체·종합적 수사	범행동기·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 종합 검토하고, 가·피해자의 과거 이력 반드시 확인하여 상습성 인정 자료로 활용하는 등 입체적 수사
엄정 수사	흉기사용·중대 피해 야기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견지

○ **(인피 뺑소니)** 사고 발생시 초동조치부터 피의자 특정 및 검거, 신병처리까지 신속 대응 체제 유지, 강제수사를 통한 엄정 대응

– 사고 접수시 교통범죄수사팀 투입, 사망 등 중한 피해가 있는 경우 시도청 중심 사건 관리(지휘)로 추적 수사 진행

▸ **(전담팀)** 교통범죄수사팀을 전담팀으로 지정

▸ **(초동조치)** 인피 교통사고 발생 시 가용경력 동원하여 피해자 안전 및 현장증거 확보, 2차 사고 방지 등 현장 초동조치

▸ **(추적수사)** 블랙박스·CCTV분석, 탐문 등 신속한 추적수사 진행

▸ **(신병처리)** 혐의가 확인(블랙박스, 차량 등) 되는 경우 구속수사 적극 검토

▸ **(차량압수)** 상습 음주운전자로 차량압수 요건 충족시 차량 압수 검토

– 피의자 검거시 사안의 중대성·피해정도·상습성(음주 전력 등)·증거인멸(블랙박스 삭제, 차량 수리 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 신청 및 차량압수 등 엄정 대응

※ 교통사망사고 야기 후 도주사건은 체포 또는 긴급체포가 원칙

○ **(교통사고 보험사기)** 서민경제 및 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기간을 운용, 사회적·경제적 손실 경감

▸ **(집중 단속기간)** △수사역량 제고 △증거 중심 수사활동 △피해 회복 및 제도 개선 등 교통사고 보험사기 종합적·입체적 대응을 위한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주요 단속 대상)** △고의 사고(가·피해자 공모 등) △허위·과다 사고(사고피해 과장, 음주·무면허 등 고지의무 위반 등) △병원·정비소(허위 입원 등) 3개 분야 6개 유형

– 가용한 교통수사 역량을 집중, 교통사기 범죄 총력 대응하는 한편, 보험수가·행정처분(벌점) 정상화 등 피해 회복 활동에도 만전

○ **(회복적 경찰활동)** '가해자 처벌을 통한 응보적 정의'에 '피해자 보호 중심의 회복적 정의'를 더하여 형사활동의 개념 재정립, 회복적 형사활동을 '필수 수사절차'로 정착

– 피해품 매입·유통업자 등에 대한 다각적 수사로 피해품 회수에 주력, 회수율 대폭 제고를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강화

– 초범·경미사범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적극 청구,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사회보장제도 연계 등 재범방지 및 건전한 공동체 복귀 지원

※ 노령층의 절도 범죄 지속 증가(61세 이상 피의자 '19년 20.5% → '21년 28.5%)
⇨ 취약계층이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 非범죄화 노력 필요

[③「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사고 수사역량 강화]

○ **(전문수사팀 확대)**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에 대한 집중·전문 수사를 위해 시·도청 안전사고 전문수사팀 확대 편성('22. 2월)

※ 13개 시·도청에 운영 중이던 안전사고 전문수사팀(80명)을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청에 신설, 안전사고 수사 인력 증원(112명)

○ **(전문인력 충원)** 안전사고 전문수사팀 內 재난사고 경력채용자(현재 총 22명) 배치 확대 및 他 관서 지원을 위한 인력풀 관리

▸ **(재난사고 경력경쟁채용)** '17년부터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사인력 확보를 위해 재난사고 경력경쟁채용 추진(현재 총 22명)

▸ **(활용 방안)** '22년부터 일정 기간 이상의 수사경력을 쌓은 경채자의 경우 시·도청 전문수사팀 적극 배치 / 주요사고 발생 시 분석·자문 등 지원

○ **(수사 가이드북)** 관련 부처 해설서 등을 반영, 수사단계에서의 필요 조치사항을 담은 수사 가이드북 마련 및 관련 부서 교육

※ 법무부 사례집·대검찰청 벌칙해설서·관계부처 고시 등 반영하여 보완 中

○ **(전문교육 강화)** 경찰수사연수원에 운영 중인 '안전사고 수사' 교육 과정의 교육인원(1회 20명→30명) 및 횟수(연 2회→5회) 확대

○ **(유관기관 협력)** 경찰·고용부·검찰 등 수사기관 間 협력 체제 정립 및 국토부·소방청·환경부 등 기타 관계부처 협력 강화

※ 18개 시·도 경찰청 / 9개 지방노동관서 / 18개 지검(지청) 전담 검사 연락망 공유, 향후 '수사실무 협의회' 정기 운영 등 일선 의견수렴 및 소통 강화 예정

○ **(현장 지원)** 중대재해 발생 시 즉보 체계 구축, 본청 내 전담 인력 충원을 통한 헬스 데스크 운영 등 수사 全 과정 지원

[④ 현장경찰관들이 한층 더 당당하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

○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 지원 등 종합 대응을 위해 형사국장 주관 TF 구성

– 관련 기능 간 정기회의 개최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기능별 추진사항 상시 점검 등 실질적 정책효과 거양 도모

※ 경찰에서 양형위원회에 개선 요청한 사항 중 일부('처벌불원'을 양형 감경 요소에서 제외) 반영되는 등 소기의 성과 달성 / 양형위 지속 대응 중

○ **(교통수사 분야)** 교통사고 수사는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차량 운동학, 사고데이터 추출·분석 등 사고원인 분석에 대한 전문성 요구

– 이에, 교통수사 분야에서는 △전문교육 강화 △자격취득 지원 △분석장비 보급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

▸ **(전문교육 강화)** 사고원인 분석·추적 수사·영상 분석 등 사고조사 전반에 대한 수사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실시

▸ **(자격취득 지원)** 국가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취득을 위한 응시비용* 등 지원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및 사고조사 전문성 유도

* 자격취득 지원 예산 2,085만원(응시료 77,000원, 보수교육 70,000원)

※ '07년 이후 자격 취득자 5,151명 中 경찰관 1,739명(33.8%) 자격 취득

▸ **(장비 보급)**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장비* 보급으로 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해 신뢰성 있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 도출

* '22년 30억 7,500만원 편성, 교통사고기록장치(EDR) 분석장비, 영상복구·화질 개선 프로그램 및 사고재현 프로그램 등 구매

※ '20년까지 시·도경찰청(18개)·부속기관(1개) 및 경찰서(77개)에 과학적 분석장비 보급, '22년에는 60개 관서에 장비 보급 추진 예정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설 전후 특별 형사활동 실시	'22. 1월	강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수사 체제 정비	'22. 2월	폭력
2/4분기	도로교통공단 위탁교육 시행(교통사고조사 전문화 과정 등)	'22. 4월	교통수사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계획 하달	'22. 4월	강력, 폭력, 교통수사
	부처님오신날 전후 형사활동 강화	'22. 5월	강력
3/4분기	하계 휴가철 형사활동 강화	'22. 7~8월	강력
	추석 전후 특별 형사활동 실시	'22. 9월	강력
4/4분기	교통사고 원인분석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공학장비 구매·배포	'22. 10월	교통수사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 교통사고 등 주요 단속분야 성과 평가·포상	'22. 11월	강력, 폭력, 교통수사
	연말연시 특별 형사활동 추진	'22. 12월	강력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 기대효과

○ ‘원인을 면밀히 분석·대응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형사활동’을 통해 범죄 위험요인 선제적 제거, 강력범죄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 등 안정적 민생치안 확보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침입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 인피 뺑소니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한 체감치안만족도 제고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난·안전사고 분야에 대한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어 엄정하게 대응, 산업재해 포함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켜 국민안전 확보

○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한층 더 당당하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2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th></tr>
<tr><th>'19</th><th>'20</th><th>'21</th><th>'22</th></tr>
<tr><td>살인·강도·절도 통합 검거율(50%)</td><td>63.4%</td><td>64.3%</td><td>64.8%</td><td>65.6%</td><td>최근 3년간 평균 상승 추세치(1.1%*)보다 0.13% 높은 65.6%로 설정
⇨ 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추세치를 상회하는 '상'에 해당
※ 살인·강도 검거율은 100%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강력범죄의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는 해외사례('21년 기준 日 42.2%[차량절도 제외 56.6%]1), '19년 기준 美 Larceny-theft[비침입절도] 18.4%, Burglary[침입절도] 14.1%)2)를 비교해볼 때 치안 여건(높은 인구밀도, CCTV 보급)이 비슷한 일본의 수치를 감안하면 최근의 검거율이 이미 임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
* 최근 3년간 평균 상승 추세치 산정 근거
<table><tr><th>통계기간</th><th>증가율</th></tr><tr><td>'19년~'20년</td><td>+1.42%</td></tr><tr><td>'20년~'21년</td><td>+0.78%</td></tr><tr><td>평균 증가율</td><td>+1.1%</td></tr></table></td><td>{(범죄통계시스템 살인·강도·절도 검거건수
+
즉결 및 통고처분 시스템 절도 처리건수)}
/
{(범죄통계시스템 살인·강도·절도 발생건수
+
즉결 및 통고처분 시스템 절도 처리건수)}</td><td>범죄통계시스템,
즉결 및 통고처분시스템</td></tr>
<tr><td>생활 주변 폭력 사범 검거인원(신규, 25%)</td><td>신규</td><td>신규</td><td>신규</td><td>80,172명</td><td>'22. 1월 한 달간 생활 주변 폭력 검거 인원이 6,550명이므로, 이를 월 평균치로 계산 시 연간 78,600명 검거 예상
목표치는 연간 검거 예상 인원에 2%를 가중한 80,172명으로 산출
⇨ '생활 주변 폭력'의 개념 정립은 '21년 이후로, 이전의 추이 확인 불가하여 목표치 신규 설정
⇨ 전체 폭력 범죄 발생 건수 감소 추세로('19년 287,252건 / '20년 265,147건 / '21년 232,078건), 매년 발생 건수 감소율 평균 10% 감안 시 시기별·테마별 집중단속 추진을 통한 검거인원 2% 증가는 평균치를 상회</td><td>생활 주변 폭력 사범 검거인원
* 길거리, 상점 등 일상 생활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검거인원</td><td>검거 인원 수기 통계(월보) 취합
※ 특진, 특별승급 등 포상을 위해 실적을 검증하므로 통계의 진정성이 담보됨</td></tr>
<tr><td>특가법상 도주치사상(인피 뺑소니) 사건 처리 신속도(신규, 25%)</td><td>신규</td><td>신규</td><td>신규</td><td>73.7%</td><td>'21년도 2개월 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인피 뺑소니) 사건 신속 처리율은 72.3%로, 목표치는 이를 2% 가중한 73.7%로 산출
⇨ '21년 사건 처리 신속도는 '20년 대비 8.5% 하락, 이는 국수본 출범 후 심사체계 고도화로 신속도 저하된 것으로 '21년 기준 산출값 적용이 타당</td><td>범죄통계시스템 사건 처리기간</td><td>범죄통계시스템</td></tr>
</table>

1) 刑法犯 罪種別 認知·検挙件数·検挙人員 対前年比較 ('21년 日 경시청 통계)
2) Percent of Offenses Cleared by Arrest of Exceptional Means ('19년 美 FBI 통계)

5 범죄·재난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정보분석으로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 추진배경

○ 코로나19 상황이 3년째 계속되며, ‘국민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정부와 경찰의 핵심업무라는 인식이 확고해졌고

– ▲이천 물류창고 화재(’21.6.) ▲광주 아파트 외벽붕괴(1.11.) 등 대형사고와 함께 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재난재해 및 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상황

< 최근 건설현장 등 중대재해 발생 사례 >	
▲ 1. 29. 석재채취장 토사붕괴(사망 2명)	▲ 2. 8. 승강기 설치 중 추락(사망 2명)
▲ 2. 11. 화학공장 폭발(사망 4명)	▲ 2. 11. 적재물 하차 중 트럭전복(사망 1명)

– 또한, 안전 관련 부패비리, 공공부문 비리 등 구조적인 범죄나 가상자산 사기 등 다양한 범죄대응에 있어, 국민과 접촉면이 넓은 정보경찰들의 범죄첩보 수집활동 강화 필요성도 높아짐

○ 이와 관련, 정보경찰은 지난해부터 재난·안전 관련 예방정보 활동을 체계화해 중요업무로서 추진해왔는데

※ <우수사례>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 상가의 지반침하 발견, 지자체 통보 ⇨ 市 점검으로 하수관 파손으로 토사 유실 확인, 긴급 이주 등 조치

– 올해는 ▲재난·안전사고 예방 ▲안전비리·공공분야부패 등 재난·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활동을 보다 내실화하고

–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보관들이 보다 가치있는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

※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 관련 안전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시설물 하자 등 육안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견문이 다수 접수 ⇨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관행 등 고가치 첩보 입수에 한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정보활동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 일선 정보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설물 하자' 등 위험요인 개선은 물론, 각종 안전현장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업무 추진하는 가운데

– 특히, 현재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현장 데스크'를 全 시도청으로 확대하는 등 시도청 중심 업무 운영체계 구축

구분	세부 내용
자문위원 운영	▸ '21.11. 본청 자문위원(2명)을 위촉, 상시 자문체계 구축 이후 현장 자문수요 증가 ⇨ 시도청에서도 안전전문가 등 자문위원 위촉·운영
현장데스크	▸ 본청에서 제도안착을 위해 시행한 '지역안전 현장 데스크*'를 全 시도청 확대, 署 정보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가이드 라인 제시 * 본청 지역안전 담당자 전용 내선번호 지정·공유, 일선과 수시 1:1 상담 中 ▸ 현장데스크 운영 대상의 범위를 일선정보관→非정보부서까지 확대, 非정보부서와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 마련

– 또한, 지역주민 다수가 언급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중요 안전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수집 채널 활성화

※ 112상황실의 안전관련 신고내용을 통보받거나 경찰 협력단체들의 의견 청취 등

○ 특히, '지역안전' 관련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현장 컨설팅·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교육)** 경찰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안전 정보 교육과정'을 '21년 3회(기본1·심화2) → '22년 총 5회(기본2·심화3)로 확대 시행

▸ **(현장 컨설팅)** 지난해 컨설팅을 진행한 시도청에서 업무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 ⇨ 상반기 중 시도청 상대 컨설팅 실시

▸ **(교육자료)** 행안부(재난 안전)·고용부(산업 안전)·자문 위원 등과 자료 공유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가이드' 제작·하달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로 안전·공정사회 구현]

○ 공공안녕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안전·공공분야와 관련된 범죄정보 수집 강화

※ **(안전 관련 비리)** △건설 안전 관련 비리 △다중이용시설 관련 각종 비리 △부실 허가·건설자재 납품 비리 △화재안전·산업안전 인·허가 관련 제반 불법행위 △방역물품 등에 대한 시장교란행위 △식품안전·의약품 안전 등 불법행위

※ **(공공분야 부패)** △공공분야 직권 이용 이익추구형 범죄 △정보유출·국고횡령 △공공분야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 및 비밀누설 등 2차 피해 범죄 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계침해형 갈취·폭력, 디지털 性범죄 등 생활 주변 악성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도 중점 실시

※ **(생활 주변 악성 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관련기기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 △보육시설 아동폭행·학대·성착취 등 범죄 △노인요양시설·장애인 보호시설 피보호자 대상 범죄 등

–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정착을 위해 불공정·부조리 범죄에 대한 첩보도 적극 수집

※ **(불공정·부조리)** △보조금 부정수급 △부정입학 비리 △직위를 악용하거나 사칭한 범죄 △가맹점·소상공인 대상 불공정 거래 등

○ 정보관들의 범죄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화 교육 및 본청의 현장 지원 역할 확대

▸ 경찰인재개발원 범죄정보 교육과정(年 2회, 40명)을 통해 첩보 수집 기법 및 인권교육 등 실시

▸ 본청 분석관들이 일선 정보관들 대상으로 첩보 수집단계부터 수집 노하우·혐의 입증방안·법률 조언 등을 지원하는 1:1 코칭 시스템 운영

[해당 정보활동 관련 전문성 제고 및 준법체제 정착 지원]

○ △분기별 성과보고회 개최 △월별 인센티브(우수정보관·표창 등) △우수 정보관 격려간담회 등을 통해 우수 활동 유도·장려

○ 범죄·재난 등 공공안녕을 위한 정보분석 활동 時 관련 법령 및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을 준수하도록 지속 교육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치안 캘린더 작성·배포	1월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추진계획 수립	2월	
	범죄 및 재난 예방정보 담당자 워크숍 개최	3월	
2/4분기	1분기 정보분석과 성과보고회 개최	4월	
	인재개발원 內 범죄·재난 정보수집 전문화 교육과정	5월	
	시도청 자문위원 위촉 운영 중간 점검	6월	
3/4분기	2분기 정보분석과 성과보고회 개최	7월	
	시도청 현장데스크 운영 중간 점검	8월	
	인재개발원 內 범죄·재난 수집 전문화 교육과정	9월	
4/4분기	3분기 정보분석과 성과보고회 개최	10월	
	汎정보부서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汎정보협의체 운영 내실화	11월	
	우수 정보관 격려 간담회 개최	12월	
연중	실시간 이슈 모니터링 및 오늘의 온라인 사이버이슈 작성	매일	
	주간·월간 주요치안 현안 작성	매주·매월	
	'우수 정보 수집 정보관 선발' 제도 운영	매월	
	재난·안전사고 예방정보 착안사안 하달 및 우수사례 선정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범죄·재난·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영위

○ **<정부 부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참고자료 활용

○ **<경찰 他기능>** 국민 안전 및 공공안녕 관련 경찰활동 時 반영

○ **<일선 정보관>** 재난·안전사고 및 범죄정보 수집 역량 향상

□ 기대효과

○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의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선제적·예방적 정보활동을 전개,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적극 보호

○ 내실 있는 범죄정보 수집을 통해 범죄 척결에 기여

○ 범죄·재난 등 공공안녕정보 관련 일선 정보관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경찰 신뢰도 제고

○ 경찰 전체의 핵심 정책과제 달성을 지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재난·안전사고 등 예방적 정보활동 우수사례 질적 향상 (45%)	-		27	30	'21년 재난·안전사고 분야 우수사례 배점 평균인 27점의 111%인 30점으로 목표치로 산출	표창·장려장 수여 우수사례 + 배점표	시도청 우수사례 + 배점표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지수 (35%)	-		35.5%	39.1%	'21년 범죄정보 제출건수 대비 배당(열람) 건수 비율의 110.1%로 설정	(배당<열람> 건수 ÷ 제출 건수) × 100	일선정보관 제출 첩보 및 처리 결과
재난 안전정보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10%)	-			70	신규 성과지표이자 전년도 내역이 거의 없는 것을 감안, 70점 이상을 목표로 설정	재난 안전정보 분석 내실화(50) + 전문성 제고 노력도(50)	자문위원 자문 회신자료, 교육 자료 등
정보분석 활동 준법 제고 노력도 (10%)	-			100	법령·정보활동규칙이 준수되도록 수시 교육 등을 실시	준법 제고 활동 노력도 - 수칙 위반도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 위반 징계 요구·수사의뢰 건수

< 지표 1 : 재난·안전사고 등 예방적 정보활동 질적 향상 (45%) ⇨ 일부수정) >

○ **매년 우수 정보수집 정보관들에게 경찰청장 표창·장려장 수여**

- (분야) ▲범죄 ▲재난·안전사고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 등

○ **경찰청장 표창·장려장이 수여되는 우수사례들의 점증적인 질적 향상 필요**

- '21년 재난·안전사고 우수사례 **100여건을 아래 배점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27점으로 산출되어** 올해는 해당 점수의 111%인 **30점을 목표치로 설정**

< 재난·안전사고 예방정보 우수사례 배점표(중복선택 가능) >

① 정보 수집 ⇨		② 정보 분석 ⇨		③ 정보 배포·활용		합계
▸주민제보·민원·112 신고 등 다각화된 방법으로 위험요인 확인	5	▸긴급·중대 사안	10	▸긴급사안으로 관계기관에 개선 통보하거나 소관부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조치 촉구	10	
▸안전 관련 법규 및 정부지침 위반사항 착안	5	▸정책적 문제점이 포착된 사안	10	▸현안 및 중요사안으로 경찰서별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에 안건 상정	10	
▸외관상 문제가 없어보이나 위험요인이 이면에 숨어있는 경우	5	▸전국적으로 동일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10	▸정책참고자료 주제로 선정되거나 비중 있게 반영되는 등 활용됨	10	
▸다수 관계기관이 관련되나 주무기관이 불분명하는 등 위험요인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	5	▸본청 또는 시도청 자문위원의 자문 활용으로 원인 분석	10	▸통보에 그치지 않고, 관계부서·기관 및 관리 주체를 설득해 개선을 이끌어 냄	10	

< 지표 2 :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지수 (35%) ⇨ 기존 지표 유지 >

○ **범죄정보의 배당률을 기준으로 활용도를 평가하는 지표**

- 범죄정보는 양적 확대보다는 실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출된 보고서들 중에서 배당이 되는 비율'인 '활용도'를 지표로 설정

○ 범죄정보 수집은 공공의 안녕·국민 평온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로서, 정보경찰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업무인 점을 고려, '재난·안전사고 등 예방적 정보활동'과 별개 지표로 운영

< 지표③ : 재난 안전정보 분석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10%) ⇨ 신규 >

○ **측정산식 : 재난 안전정보 분석 내실화(50) + 전문성 제고 노력도(50)**

- 재난 안전정보 분석 내실화(50) : 본청·시도청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문제상황의 구조적 원인이나 위험요소, 법 위반 등이 발굴, 위험상태가 해소·개선된 사례

자문 횟수	0건	10건	20건	30건	40건	50건 이상
배 점	0점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 전문성 제고 노력도(50점) : 일선정보관 또는 非정보 경찰관들의 재난 안전정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가이드·카드뉴스 등 교육·업무설명 자료 건수에 따라 노력도 측정

자료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0점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 **'22년 목표산출** : 지난해 거의 없었던 활동임을 감안, 측정산식 결과 70점 이상 달성 시 노력도 100% 달성한 것으로 설정

< 점수분포표 >

합산점수	40점	40점 이상~50점 미만	50점 이상~6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70점 이상
노력도	60%	70%	80%	90%	100%

< 지표④ : 정보분석 활동 준법 준수 노력도 (10%) ⇨ 일부 수정 >

○ **정보분석 활동이 관련 법령·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준수하도록 관심·지도 필요**

- ▲경찰인재개발원 ▲본청·시도청 담당자 직접교육 등으로 지속·반복적으로 강조

○ **지표로 '정보경찰 준법 제고 노력도'를 설정**, 전국 258개의 경찰서에 최소 1회 전파되는지를 체크 / **매년 경찰서별 1회 전파는 매우 중요하므로 목표는 100%(점)로 설정**

※ 경찰인재개발원 또는 본청·시도청의 교육을 받은 署 과·계장 등이 사무실에 공유·전수토록 조치(본청·18개 시도청에는 수시 교육되므로 노력도에서는 제외)

전파 비율(=점수)	50%	60%	70%	80%	90%	100%
관서數	129개	155개	181개	206개	232개	258개

○ **(감점) 위 노력도 점수에서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 위반 징계요구·수사의뢰 1건당 –10점**

※ 정보분석 활동은 경찰청 정보관리과 준법지원팀의 심사를 받으며, 법령이나 정보활동규칙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을 시행

성과목표Ⅰ-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1) 주요 내용

○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고위험 아동 및 위기청소년 발굴·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원 활용 아동·청소년 안전망 활성화

– 치안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활동 추진 및 현장 전문성 제고를 통한 대응역량 강화

○ **<여청수사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반복신고 대응체계 안착, 여성청소년강력팀 내실화 등 조직체계 개선

–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 확대·고도화 등 피해자 중심 수사 활동을 고도화하고, 단계·테마·시기별 교육 및 여청수사 인력·예산·장비 등 인프라 확충으로 대국민 수사 완성도 제고

○ **<여성보호 치안정책 내실화>** 성·가정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한 선제적 불안요인 발굴 및 스토킹·불법촬영 등 신종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현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범죄안전도
관리과제	아동학대·학교폭력 선제적 예방 및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률 / 아동학대 보호조치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강화	성폭력범죄 검거현황 / 아동학대 임시조치율 /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율
	여성보호 치안정책 내실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율 / 가정폭력 사건대응지수 /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범죄안전도	80.2	83.2	83.3	84.3	국민 범죄안전도는 '18년 이후 지속 상승하였고, '21년도 실적치(83.3)와 과거 추세선을 바탕으로 예측한 값(84.3)을 고려, 상승세 지속을 목표로 '21년 실적보다 1.0%p 높은 84.3을 목표치로 제시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결과 중 '범죄안전도' 분야	경찰청 주관 대국민 전화조사 (외부 조사업체 이용, 일반 국민 총 51,400명 대상)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아동학대 사망사건 △촉법소년 관련 국민청원 등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소년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집중

– 아동학대·학교폭력 등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유관부서(교육부·복지부) 間 정보 공유가 중요, 연계시스템 개선 및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을 통한 원활한 협업 추진

○ 펜데믹 장기화로 대면 접촉에 기반한 사회 안전망이 약화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증가로 국민적 불안감 상당

※ △스토킹신고 4,515$^{'20년}$ → 14,509건$^{'21년}$ △데이트폭력 신고 18,945$^{'20년}$ → 57,297건$^{'21년}$

–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협의체*를 통하여 타기관·유관단체 등과 협업 확대 및 범죄예방·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의 협의·조정

* 여성청소년안전정책자문단, 여청 기능 전략협의체 등

(4) 참고자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도 시행계획(교육부)

○ 안전드림홈페이지(www.safe182.go.kr)

6 아동학대·학교폭력 선제적 예방 및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추진배경

○ 아동이 보호자에 의한 학대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건 지속 발생, 아동학대 예방·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

– 또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반면, 발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선제적 예방활동'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최근 아동학대 사건)** △경남 창녕('20.5.) △충남 천안('20.6.) △서울 양천('20.10.)
▸**(아동학대 신고건수)** 12,853건'18년→14,484건'19년→16,149건'20년→26,048건'21년
▸**(아동학대 발견율 비교)** 한국 4.0‰('20), 미국 9.2‰('18), 호주 10.1‰('18)

○ 한편, '21년 학교폭력 현황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교육분야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학교폭력 증가 우려

– 특히,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정서적 폭력 및 저연령 소년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예방정책 추진 필요

▸**(학교폭력)** 검거인원 13,584명('19년) → 11,331명('20년) → 11,954명('21년)(5.5%↑)
▸**(정서적폭력)**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스토킹 비중 72.8%('17년)→78.6%('20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8,615명('19년)→ 9,606명('20년)→10,915명('21년)(13.6%↑)

➡ **최근 사회현상·정책환경 반영,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강화 정책 추진 필요**

< 성과목표 및 추진전략 >

성과목표	**아동·청소년의 현재와 미래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성과지표	**① 아동학대 분리조치율 14.7%↑** **②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37.8%↑,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율 19.3%↓**

추진전략	**유관기관 협업,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강화**	**위기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강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 안전망 활성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유관기관 협업,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 강화]

○ **관계부처·단체 합동 고위험 아동 및 위기청소년 발굴·지원**

– **(고위험군 아동 발굴)** 반복·수사경력 고위험군 아동 합동점검 정례화(아보전·지자체, 반기1회) 및 예비소집 불참 아동 합동점검(교육부) 실시

▸ **(반복신고 점검)**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 간 협업,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합동 방문점검 정례화(반기별 1회 이상)

▸ **(특별 점검)** 교육부와 협업, '22년 초등학교 예비소집 대상 아동(약 43만명) 중 불참아동 대상 점검(학교·지자체) 후 소재 미확인 시 경찰에 수사의뢰

– **(위기청소년 발굴·지원)** △학교·가정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등 위기청소년 적극 발굴 및 연계 활성화로 보호·지원 사각지대 해소

* 빈곤·학대 등 사유로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 만18세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

▸ **(발굴)** 112·117 신고는 물론, 전일 신고 접수된 소년사건 확인, 위기청소년 발굴

▸ **(SPO 통보)** 외근기능에서 위기청소년(학교·가정밖·비행) 발견시 SPO에게 통보

▸ **(연계)**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쉼터 등 지원기관에 담당 SPO 지정, 정보공유 강화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유관부처 間 아동·청소년 정보공유 강화**

– **(시스템 개선)**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부처간 상호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 현재 일방향(경찰→복지부)으로 진행되는 정보연계 방식을 개선, 양방향 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APO업무관리시스템-국가아동학정보시스템間 연계 추진(연내)

–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경찰의 청소년 보호활동 주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홈페이지) 구축,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예방교육 자료 △주요치안 통계 △경찰청 중점 추진업무 △시도청 우수사례 등

【 정보공유 온라인 플랫폼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위기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강화]

○ 치안 여건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활동 추진

– **(맞춤형 대응)**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범죄 유형 중심 예방교육 실시 및 학사일정에 맞춘 시기별*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활동 전개

* △신학기 △방학기간 △수능 전후 등 시기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전개

– **(콘텐츠 다양화)** SNS·메타버스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매체 활용, 범죄예방 교육·홍보 및 청소년 친화적 교육콘텐츠 개발*

* 경찰청-EBS間 예방교육 강화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1.4월)

– **(선제적·예방적 홍보활동)**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테마별 정책홍보 활동 전개, 시·도청별 우수사례 SNS 홍보를 통해 선순환 홍보 유발

○ 아동·청소년 관련 현장 전문성 제고를 통한 대응역량 강화

– **(학대 대응능력 강화)** △학대피해아동 면담기법 개발 △사례별 대응 안내서 마련 △교육과정 신설을 통한 현장 전문성 강화

▶ **(면담기법)** 신고접수(112상황실) → 현장출동(지역경찰·여청수사) → 사후콜백(APO) 등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아동 특성(연령)을 고려한 면담기법 개발

▶ **(사례별 대응 안내서)** 절차·제도 중심의 기존 매뉴얼을 보완하여 현장에서 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에 대한 표준 대응 지침서 마련

▶ **(교육과정 신설)** △아동학대 대응 사이버교육 신설(2월) △시도경찰청 현장강사 협조, 아동학대 이해(관련법률·아동특성) 및 단계별 조치 등 '아동학대 대응 현장 강의 신설

– **(SPO 역할 정예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SPO의 역할 정예화 및 현장 활동 활성화를 위한 4대 과제* 추진

* **(4대 과제)** △국민관심도 제고 △제도개선 연구 △사기 진작 △비전 제시

세부과제	국민관심도 제고	제도개선 연구	SPO 사기 진작	발전방안 제시
이행방안	‣ 지역별 SPO 발대 10주년 홍보활동 ‣ 국민제안 공모전 ‣ 117day 운영	‣ 학교폭력 정책 및 SPO 운영 평가 ‣ SPO制 개선 연구 ‣ 학계·국회 세미나	‣ 발대 10주년 행사 ‣ SPO 유공자 포상 및 기능특진 추진 ‣ 강의경진대회 개최	‣ SPO 역할 정예화 ‣ 주요 추진정책 점검 ‣ 제도 혁신방안 마련 및 추진계획 수립

[지역사회와 아동·청소년 보호 안전망 활성화]

○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연계협의체 확대)** 지역별 '아동학대 공동대응 협의체'를 확대*, 교육적 방임 의견 청취 및 교육기관의 모니터링 및 보호·지원 역할 부여

※ 복지부·교육부 협조, 지역별 아동학대 공동협의체에 교육청(학교)까지 확대 추진

– **(시·도청별 시책·사례 공유)** 지역별 치안역량 격차해소를 위해 시·도경찰청별 아동학대 주요시책 및 우수사례 등 정책자료 공유

※ 경찰·지자체의 다양한 협업방식을 공유, 관서별 실정에 맞는 공동대응체계 구축 지원

– **(현장 모니터링)** 아동학대 현장대응 강화대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이행실태를 지속 모니터링·점검하여 보완

○ **시민 참여적 요소를 도입, 위기 아동·청소년 문제에 공동 대응**

–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에 초등생 확대 편성 및 학교폭력 예방 공모전 개최 등 청소년 중심 예방·홍보 강화

▸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경찰의 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에 청소년 의견 제시 및 직접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제도로 '20년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21년 246개署 4,199명 참여)

▸ **(학교폭력예방 공모전)** 경찰청-굿네이버스 공동,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SPO제도 개선방안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공모전 개최(4~7월)

– **(또래 역량 강화)** 청소년경찰학교 방문 학생 대상 또래상담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로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분위기 조성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협업, SPO 55명 대상 '또래상담 지도자' 교육 실시('21년)

–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유관기관과 협업, 아동학대 인식제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한 국민적 관심 환기

▸ **(복지부)** 5월(가정의 달), 11월(아동학대 예방주간),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 운영

▸ **(굿네이버스)**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캠페인 운영, '아동학대 예방' 홍보영상 제작·송출 등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예비소집 불참 아동 및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2월	
	'아동학대 예방' 강의 사이버강의 개설	2월	
	'22년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 종합 대책 수립	3월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선발	3월	
	학기 초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 운영	3~4월	
2/4분기	경찰-굿네이버스 공동 학교폭력예방 공모전 개최	4~7월	
	'가정의 달'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 운영	5월	
	학교 밖 청소년 집중 발굴활동	6월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대상 전수조사 실시(상반기)	6월	
	아동학대 대응 지역 연계 협의체 운영 안 마련	6월	
3/4분기	방학기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7~8월	
	아동학대 조치단계별 대화·면담기법 연구용역	8월	
	아동학대 정책자료집 공유	9월	
	학기 초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 운영	9~10월	
	아동학대 조치단계별 대화·면담기법 연구용역	10월	
	아동학대 사례별 표준 대응 안내서 제작	10월	
	학기 초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 운영	9~10월	
4/4분기	복지부 협업, 만 3세 아동 합동점검	10~12월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대상 전수조사 실시(하반기)	12월	
	수능 전·후 청소년 비행예방활동	11월	
	아동학대 예방· 근절 추진기간 운영	11월	
	학교 밖 청소년 집중 발굴활동	11월	
	방학기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12월	
	청소년보호활동 정보공유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구축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아동·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 관계부처 :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법무부, 가정(지방)법원 등

⇨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 관계(교육부)
▵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발굴·연계(여가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 대응(복지부·법무부),
▵ 소년범 선도·보호(법원) 등 분야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

- 지역사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안전망 운영 및 선도프로그램 연계기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연계), 청소년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 사후 모니터링, 사례관리) 등
- 유관단체 : 청소년육성회 등 청소년단체,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 등 아동학대 관련 단체 등

□ 기대효과

○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공유 및 공감대 형성 및 '또래지킴이' 역량 강화로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분위기 조성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와 협업 강화 및 실질적인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공동체 치안체계 구축

○ 아동학대 현장점검, 인식개선 홍보 활성화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사각지대 해소로 아동보호 공백 방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일반회계	'21	'22
아동청소년 보호활동(일반회계)			
① 사회적 약자보호(1132)		97	32
■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311)		97	3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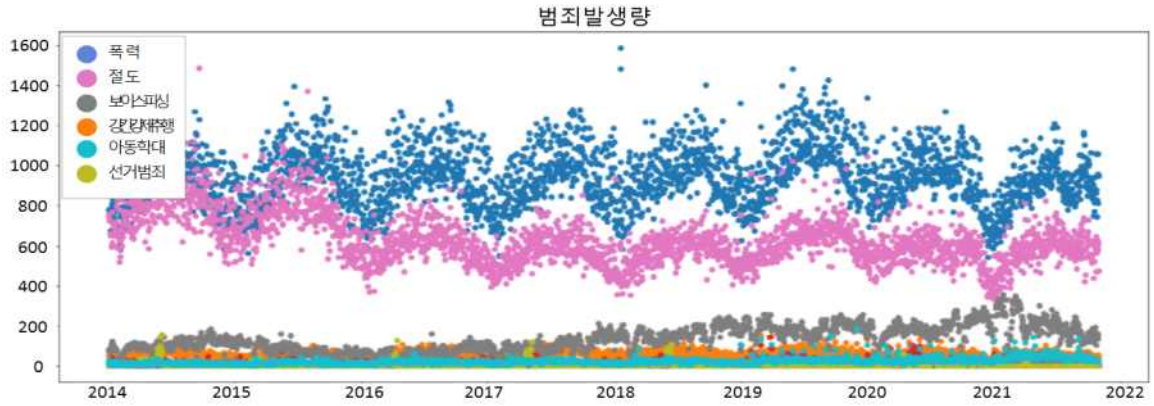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기존목표치)	39.2 36.3 37.7 (34.0) (35.7) (38.2)	37.8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지속되는 등 대면 집단활동 중심의 선도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나, '21년 '비대면 선도표준안'을 배포하여 선도프로그램 연계율이 전년 대비 다소 증가(36.3% →37.2%) - 다만, 향후 코로나 상황 개선으로 인한 일상 회복 및 비대면 선도프로그램 정착 등 선도프로그램의 정상 운영이 기대되는 바, ⇨ 어려운 여건이지만 소년범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선도프로그램 연계를 위해 '목표치 설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인 3년간 실적의 평균치인 37.7% 보다 향상된 37.8%를 목표치로 설정하고자 함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 전체 소년범) × 100	·선도프로그램 연계 인원(월보) ·소년범(202 통계)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률 (기존목표치)	20.0 21.5 16.7 (-) (19.7) (20.6)	19.3	최근 3년간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 중 재범인원 비율은, '20년에는 '19년 대비 이수자 재범률이 상승(하락지표)하였다가 '21년에는 하락하였음(21.5%→16.7%*) * KICS 시스템 정비 관계로 '21년 이수자 재범률은 1~11월 통계까지만 산출 가능, 시스템 정비 후 '21년 실적치 재산출 예정임(3월중 정상화) ⇨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방지를 위해 목표치 설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인 3년간 실적의 평균치(19.4%) 보다 향상된 19.3%를 목표치로 설정하고자 함	(재입건인원 ÷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 100	·선도프로그램 연계 인원(월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시스템)
아동학대 보호조치율 ※ '21년 신규지표	9.5 10.9 21.7 (-) (-) (12.7)	14.7	최근 3년간 피해아동 보호조치율은 지속 상승 추세이고, '21년은 아동학대의 사회적 이슈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적이 급증한 바 있으나, 보호조치는 아동의 분리조치가 주된 내용인 만큼 아동의 인권과 원가정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현 수준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상승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아 '목표치 설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인 3년간 실적의 평균치(14.0%)를 초과하는 14.7%(5% 상승)를 목표치로 설정하고자 함	(보호조치 ÷ 아동학대 112신고건수) × 100	·APO업무지원 시스템 사후지원 통보건수 ·사후지원 관련 공문 ·아동학대 월보 ·112신고 시스템 ·KICS 시스템

7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강화

□ 추진배경

○ [’22년 치안여건] 팬데믹 장기화로 대면 접촉에 기반한 사회 안전망이 약화함에 따라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범죄 노출 증가**

▸ **<’22년 치안트렌드 분석> (112신고)** ▵강도·마약 9.7%↑ ▵**여성대상 범죄 26.5%↑**
(범죄발생) ▵보이스피싱 19.8%↑ ▵**아동학대 64%↑** ▵선거범죄 35.3%↑



– 또한, ▵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21.) 전후 관련 신고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등 **치안수요도 급격한 증가 추세**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데이트폭력 112신고 증가 현황 >

구분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21.1.1.~10.20.)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21.10.21.~12.31.)	일 평균 증감
스토킹 112신고 (일 평균)	6,917건 (23.6건)	7,538건 (104.6건)	4.4배↑
데이트폭력 112신고 (일 평균)	44,816건 (152.9건)	12,489건 (173.4건)	13%↑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前 4년 대비
①신상정보등록대상자수 (여청수사 1인당 담당자 수)	59,407 (20.0)	70,001 (20.8)	80,939 (21.6)	90,294 (22.8)	30,887 (52.0%↑)
②범죄피해자 안전조치건수 (여청수사 1인당 담당건수)	3,777 (1.3)	6,605 (2.1)	8,119 (2.3)	16,229 (4.6)	12,452 (329.7%↑)

– 특히, ’21년 서울 중부·송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舊 신변보호) 대상자 또는 대상자 가족 피살 사건에 이어 금년에도 대상자 피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 상태

‣ **(서울 중부)** 피의자와 피해자는 약 5개월 전 헤어진 사이로, ’21.11월경 피해자 주거지 복도에서 식칼로 피해자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

‣ **(서울 송파)** 피의자와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이로, ’21.12월경 피의자 주거지에서 강간, 피해자 주거지에서 식칼로 피해자 母와 피해자 동생을 찔러 母 살해

‣ **(서울 구로)** 피의자와 피해자는 약 1년 전 헤어진 사이로, ’22.2월경 피해자 운영 가게에서 업무방해 등 지속 스토킹하다 식칼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

○ **[업무수행 현황]** 여청수사관은 성·가정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현장출동–범죄수사–피해자 보호·지원 등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및 전반적인 시책 추진

– **(현장출동)** 인권 감수성 및 전문 수사력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112신고 현장출동·초동대응(’21.8.30.~, 112CODE 불문*)

* 강력범죄로의 발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여청수사·형사 등 관련 기능이 사회적 약자 범죄신고를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도록 지령

– **(범죄수사)** △죄종별 전문 수사기법 활용* △전문 피해조사 기법 등 활용한 피해자 조사 △과거이력 등을 고려한 피의자 조사 및 신병 확보 등 가해자 검거와 함께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 (스토킹) 지속·반복성, 피의자 보복 우려 등 위험성 판단 등 (성폭력) 약물 이용 성범죄, 불법촬영 반포 등 (가정폭력·아동학대) 피의자 재범·위해 우려 및 여죄 등

–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자 의사에 따른 스마트워치 제공, 112시스템 등록, CCTV 설치 등 총 10개 피해자 안전조치, 피해자·위해 우려자 등 대상 모니터링, 추가 피해 방지 등

특히, 3회 이상 반복신고 또는 폭력 수반 관계성 범죄의 경우 (긴급)·임시/응급 및 잠정조치(접근·통신 등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을 통해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경찰청·법무부·여가부 합동으로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점검·관리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신상정보*를 경찰서 제출 / 미신고의 경우 법무부에서 직권 등록 후 경찰 통보**

* 신상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연락처, 직업, 신체정보, 소유차량번호

** (경찰) 대상자 소재를 확인하고 신고 유도 / 소재 미확인時 형사입건 및 지명수배

성폭력처벌법 上 점검주기(3·6·12개월)에 따라 경찰관이 대면 등 방법으로 신상정보 진위여부 확인 / 점검결과 KICS 입력

선고형	벌금	징역 3년 이하, 아청법상 신상공개자	징역 3년 초과~ 징역 10년 이하	징역 10년 초과, 사형, 무기징역
등록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정보 확인주기 ※ 직접 대면 등	1년	6개월		3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대상자 3개월 (자체점검 주기 : 전자발찌 착용 / 소재불명 전력자 → 3개월)			

신규(30일 이내)·변경(20일 이내) 정보 제출 및 사진 미촬영(年1회) 등 정보제출 의무위반時 형사입건 처리(소재불명시 추적수사로 검거)

– **(기타 주요 시책)**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반복신고로부터 살인·상해 등 중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반복신고 대응 강화('21.8.27.~) ▵관계성 범죄 신속·집중 수사('21.12.28.~) 시행

- **(반복신고 대응)** ✓소관 팀장–서장–시도청으로 이어지는 3重·점검 보고체계 구축 ✓사건 접수~종결까지 팀장 直掌 또는 直搜하는 팀장 중심 수사 전개
- **(신속·집중 수사)** 스토킹 등 관계성 갈등에서 위험징후가 나타난 폭력 사건은 관련자 조사 및 증거수집을 신속 진행해 재발·보복 위험성을 판단, 피해자 보호 견인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치안사각지대 해소

○ [반복신고 대응체계 안착]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신고는 현장 출동부터 수사종결까지 관련 기능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병 검토 등 중간관리자 수사지휘토록 수립한 3重 점검·보고체계 안착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 강화]** 소재불명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소재 파악 및 추적, 집중검거 기간 운영해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고위험군(고지·공개대상자) 일제 점검해 의무위반사항 확인

- **(점검)** 검거기간 중 공개된 주거지 현장 진출해 실거주 여부 등 확인하고,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법행위는 사법처리(형사입건) 원칙
- **(검거)** 상·하반기 2차례(약 1개월)에 걸쳐 검거, 고위험군은 시도청 전담 등 조기 검거

○ **[신규 성폭력 수사기법 도입 검토]** 과거 성폭력(일명 '미투')과 같이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 보강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 참조, '증거보강 전화기법' 도입 검토

* 美·獨 등 해외에서는 당사자만 아는 특정 일자, 상황 등을 파악한 후 해당일에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에게 전화해 '강제성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녹취해 보강증거로 활용

2 여청수사 조직 개선 및 책임수사체제 강화

○ **[여청강력팀 내실화]** 불상 성폭력, 아동학대 대응 강화 등 수사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청강력팀 직제화(인력 증원), 역할 및 담당사무 정립 등으로 여청수사팀과 시너지 효과 제고

– 또한,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팀장이 直搜 또는 直掌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제' 시범운영에서 여청강력팀 효과성을 확인한 만큼, 全 1급지署 여청강력팀에 팀장 중심 수사체제 확대 시행 검토

<팀장 중심 수사체제 단계별 진행 절차 및 시범운영 결과>

- **(사건검토)** 발생보고, 고소(발)장·진정서 등 접수時 팀장을 'KICS 정수사관' 지정, '범죄·수사경력', '112신고이력' 등 상습성 등 판단 및 피해자 보호·지원 내역 확인해 지휘
- **(사건배당)** 권력형 성범죄 등 '팀장 배당기준'에 따라 팀장이 직접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에 대해 直搜
- **(수사종결)** 팀장이 직수하는 주요 사건에 대해 본인이 수사결과보고서, (불)송치결정서, 통지서 작성 / 기타 사건은 결정서와 통지서만 작성
- **(시범운영)** 수사경과자 또는 수사경력 5년 이상 46개署 대상 시범운영 → 여청수사팀보다 현장출동 부담이 적은 여청강력팀이 상위 3개署를 차지('21.10.20.~11.19.)

○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고도화]** 수사관-피해자間 자유로운 대화형 면담으로 풍부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중인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을 全 2급지署 등 확대 및 고도화

- **(추진경과)** <'20년 1차, 59개署> 매뉴얼 등 현출 기능 탑재 <'21년 2차, 全 1급지署 92개署 추가설치> 구성요건 해당 필수질문 누락 여부 점검 툴(Tool) 추가
  - 동국대·수사연수원 등 협업, **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 면담·조사기법 개발 및 실습형 교육**, 외부전문가 조사 적정성 평가·피드백
- **(추진내용)** 全 2급지署, 廳 여수대, 해바라기센터로 확대해 경찰용어, 사투리 등 인식률 지속 향상하고 피해진술 분석 툴(Tool) 고도화, AI가 가·피해자間 전화음성을 녹취록으로 작성하는 'AI 전화음성 속기록' 개발

全 2급서 확대(DB 축적)

피해진술 분석 툴 고도화

AI 전화음성 속기록 개발

3 인재개발을 통한 여청수사 전문성 강화

○ **[여청수사 수사역량 제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단계·테마·시기별 교육 추진

< 여청수사 교육체계 >

1	**민간전문가 사례회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사례회의 개최, 우수·미흡사항 분석
2	**내부전문가 양성**	▸여청수사 전문수사관을 활용한 동료강사제 실시
3	**수준·직급별 맞춤 교육**	▸신규전입자·팀장 등 수준별·직급별 맞춤형 교육 ▸피해자표준조사모델 등 전문조사기법 특화교육
4	**테마별 현장점검 등**	▸시기·대상별 유의사항 사전 교육, 수사과오 차단

- 또한, 성폭력·아동학대 등 기존 업무 지침·매뉴얼 현행화와 동시에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신규 업무에 대한 범죄사실 구성, 강제수사 절차 등 수사기법도 지속 연구·개발해 수사 전문성 향상

○ **[내·외부 전문가 역량 상향 균질화]** 아동·장애인조사기법(NICHD) 및 진술분석전문가 수준·단계별 필수 교육* 및 동료슈퍼바이저 양성 확대** 등 내실화로 역량 상향 균질화

* 초급→중급→고급→동료전문가 과정→보수교육(고급 이상 이수자)

** 동료슈퍼바이저 양성 → 중요사건 진술분석 및 동료 강사 등으로 활용 / '21년 역량평가 미흡자에 대해 소그룹(5인 이내) 재교육+재평가 실시

④ 인프라 확대로 여청수사 완성도 제고

○ **[여청수사 인력 증원]**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중요범죄 대응역량 강화 및 수사 전문성 제고 위해 시도청(여청수사대), 경찰서(여청수사팀) 인력 증원을 위한 '23년 소요정원 추진

– **(시도청)** '21.2월 여청수사대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 하였음에도 112신고·송치건수가 폭증함에 따라 업무증가율을 반영해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총 102명 증원 요청

* (신설배경) '21.1.19.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도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시도청에 아동학대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

< 전체 아동학대 사건·보호조치 건수 >

구 분	사건 건수			보호조치		
	전체	어린이집	아특팀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20	4,117	486	4010	1,240	168	1,414
'21	9,050	915	6,937	4,444	479	4.737
증가율	2.2배↑(+119.8%)	1.9배↑(+88.3%)	1.7배↑(+73.0%)	3.6배↑(+258.4%)	2.9배↑(+185.1%)	3.4배↑(+235.0%)

– **(경찰서)** '21.10.21.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 관련 신고 급증*에도 전담·충원 수사관이 없는 만큼 스토킹전담수사관 158명 증원 요청

* [日 평균 112신고] 스토킹 : 4.4배↑(23.6→104.6건)<기준 : '21.1.1.~10.20.→10.21.~12.31.>

○ **[여청수사 예산·장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진술분석, 속기사 예산을 증액과 함께 여청수사 사건수사비 현실화도 추진

- **(진술분석·속기사)**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통상 저연령이며, CCTV 등 직접증거가 부재시 피해아동 진술이 중요 → 성폭력, 아동학대 수사時 진술분석 활용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사건 증가에 따른 속기사 수요 증가분 반영해 예산 증액 추진
- **(수사비)** 매년 증가하는 여청사건 치안수요에 맞춰 여청수사관 증원도 추진하지만, 그에 따른 수사비(月 12만원)도 증액 필요 / 타 수사부서는 月 평균 18만원

– 또한, 스토킹 등 신규 업무에 따른 출동 증가로 차량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관서별 적정 증차도 추진하고, '23년까지 全 관서 개선을 목표로 인권친화형 조사환경 구축*도 지속

* △가·피해자 동선 분리 △피해자 전용 지원공간 마련 △사무·조사공간 분리 등 피해자 중심 조사환경을 마련 / '21년까지 111개 관서 완료, '23년까지 全 署 추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22.2월	
	▸ 시도청·경찰서 여청수사 인력·예산·장비 등 인프라 확충 추진	'22.2월	
	▸ 인권친화형 조사환경 개선 수요파악 및 기본계획 수립	'22.3월	
	▸ '22년 여청수사 교육계획 수립·시행	'22.3월	
2/4분기	▸ 진술분석전문가 역량강화 및 내실화 등 계획 수립	'22.4월	
	▸ 상반기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일제점검 및 집중검거기간 운영	'22.4월	
	▸ 여청수사 112신고 지령·출동기준 개선 및 여청강력팀 내실화	'22.5월	
	▸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사업 계약	'22.6월	
3/4분기	▸ 인권친화형 조사환경 개선 사업 현장 실사	'22.8월	
	▸ 하반기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일제점검 및 집중검거기간 운영	'22.9월	
	▸ 여청강력팀 내실화 관련 현장 이행실태 점검 및 의견수렴	'22.9월	
	▸ 시도청 반복신고 대응 실태 점검 및 개선·보완사항 발굴	'22.9월	
4/4분기	▸ 여청수사 전문수사관 선발	'22.10월	
	▸ 신규 성폭력 수사기법 도입 검토	'22.11월	
	▸ 스토킹, 성폭력, 아동학대 등 소관 범죄 지침·매뉴얼 개편	'22.12월	
	▸ AI 음성인식 피해조사 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	'22.12월	
연중	▸ 반복신고 대응체계, 사건처리 실태 등 현장 지도방문·점검	수시	
	▸ 해바라기센터 수사관 등 여청수사 전문교육과정 운영	수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전체

○ [이해관계집단] 법무부, 여가부 등 관계 부처,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시민단체

□ 기대효과

○ 접수부터 종결까지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 대응으로 국민 눈높이 충족

○ 신속·집중 대응체계 및 수사인프라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능력을 제고해 사회적 약자 대상 치안 사각지대 및 공백 해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범죄수사활동(Ⅰ-1-일반재정②) [2]			
① 수사지원및수사역량강화(1231) ■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313)	일반회계	152	247(88*)

* 88억원은 여성청소년범죄 관련 예산만 산출한 것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성폭력범죄 검거현황	-	-	-	3년 평균 미검 건수 대비 5% 상향	▸'21년까지는 성폭력미검률로만 성과평가 기준을 운용한바, -△여청수사 소관 사무 미반영 △평가기준으로서의 부적절성 △관서간 갈등 등 문제점 야기 -피해자 중심 수사 기능이라는 여청수사 장점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보호·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 ▸각 시도청별 최근 5년 미검건수 중 최대·최소 연차를 제외한 3년 미검건수 평균치를 산출하고, -평균치 대비 5% 향상 여부로 미검건수 향상도를 평가	▸각 시도청별 최근 5년 미검건수 중 최대·최소 연차를 제외한 3년 미검건수 평균치를 산출, -평균치 대비 5% 향상 여부	범죄통계 시스템
아동학대 임시조치율	30.9	31.4	53.1	3년 평균 아동 학대 신청율 대비 5% 상향	▸'20년 서울양천 아동학대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 등으로 치안수요 급증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처리건수 및 '21년 임시조치 신청건수도 폭발적 증가 -아동학대처벌법 임시조치는 접근·통신금지뿐 아니라 피의자 유치 등 실효적 피해자 보호·지원 내역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각 시도청별 인구, 주요범죄 발생건수 등 치안수요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 ▸각 시도청별 최근 5년('17~'21년) 아동학대 처리건수 中 최대, 최소 연도는 제외하고, -해당 3년 평균 전 시도청 신청율 5% 이상 달성 여부	▸각 시도청별 최근 5년('17년~'21년) 아동학대 처리건수 中 최대, 최소 연도는 제외 ▸해당 3년 全 시도청 평균 신청율 5% 이상 달성 여부	아동학대 처리건수 및 임시조치 신청건수 실적 월 단위 취합 (범죄통계 시스템 및 월보)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신청율	-	-	-	'22년 잠정 조치 신청율 추세치 대비 5% 상향	▸스토킹행위 지속·반복성 인정時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고, - 스토킹범죄는 살인 등 중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강력범죄 선제 차단을 위한 잠정조치가 매우 중요 ▸다만, 스토킹처벌법 시행시기('21.10.21.)를 고려, 최근 3개월('21.11월~'22.1월) 신청율을 추출 -'22년 추세치를 산출해 全 시도청 신청율 5% 이상 달성 여부	▸최근 3개월('21.11월~'22.1월) 시도청별 잠정조치 신청율로 1년 추세치 산출, - 추세치 5% 이상 달성 여부	112신고처리시스템, 잠정조치 신건수 실적 월 단위 취합 (112신고 시스템 및 월보)

8 여성보호 치안정책 내실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 추진배경

○ 강간·추행·가정폭력 등 전통적 여성대상 범죄는 감소*추세이나,

＊ '21년 전년 대비 가정폭력 1.4%↓, 강간·강제추행 6.2%↓

– 코로나19 상황 속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비대면 성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고,

＊ 카메라등 이용촬영(24%↑), 통신매체 이용음란(149.8%↑), 스토킹 신고(221.4%↑)

– 최근 연이은 스토킹 살인, 학교內 불법촬영 사건 등이 사회 이슈화되며 체감안전도는 전년 대비 하락(77.7'20년→76.5점'21년)

○ 이에 사전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인프라 확충, 제도 개선 등 여성보호 치안시스템을 지속 보강하는 한편,

– 자치경찰제 시행('21.7월) 등 변화된 업무환경에 맞춰 대내·외 폭넓은 협업을 통해 다변하는 위협요인에 선제적 대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수요자 중심의 여성안전 정책 수립]

○ 전문가와의 정책 자문·교류 활성화,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입체적 관점의 정책 추진체계 구축

▸ **< 정책자문 >** 「여성청소년안전 정책자문단」 분과별 운영체계 도입(여성·청소년·아동 등), 심도있는 정책 논의를 통해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 **< 연구과제 >** 내·외부 교육·연구기관(대학·치안정책연구소·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과 공동 연구과제 발굴·수행, 치안현장의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등

○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 도입 등 달라진 업무환경에 맞춰 정책–수사 기능, 경찰청–시도경찰청 간 정기 협의체 등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협업 시스템 운영

▸ **< 정책-수사 >** 매월「여성청소년 기능 전략협의체」운영 및 참석 기능 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주요 사건, 문제점, 정책 개선사항 공유 등 업무 연계성 강화

※ (기존) 여성안전기획·아동청소년·여청수사 → (추가) 사이버·범죄예방·생활질서 등

▸ **< 시도경찰청 >** 자치경찰위 사무국장 회의 등을 통해 경찰청-시도경찰청 간 업무 공유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 자료집 제작·배포, 시도청·지자체 우수 협업 모델·사례 공유·확산으로 지역별 치안 균질화

[여성안전을 위한 치안인프라 확충]

○ **(법률)** 적극적인 현장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 제·개정

▸ **< 스토킹처벌법 >** ▵ 가해자 실효적 접근차단을 위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현행 과태료 → 형사처벌) ▵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등 추가 입법 대응

▸ **< 경찰법 >**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 업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명시, 각 지자체의 관심 제고와 함께 지역 맞춤형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확충

▸ **< 가정폭력방지법 >** ▵ 현장조사 거부·기피죄 신설 ▵기관간 정보공유 근거 마련

○ **(인력)** 신규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APO·스토킹 담당 인력 증원

▸ **< APO >** ▵ 아동학대 신고 급증, 피해자 사후 관리에 대한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인한 근무 기피 해소를 위해 '23년 소요정원 43명 증원 추진

▵'22~'23년 관련 학위·근무경력 중심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총 210명 채용, 전문성 확대

▸ **< 스토킹담당 >**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112신고 등 치안수요 급증, 경찰청 전담부서 신설 및 업무량 과중 경찰관서에 담당인력 순차적 확대배치 추진

○ **(시스템·장비)** 사건정보 관리 체계화를 위한 APO업무시스템 개선, 고성능 '불법촬영 탐지 장비' 신규 보급 등 현장 대응력 제고

▸ **< APO시스템 >** APO시스템 內 통계*, 결재 등 기능 고도화 및 내부(폴리폰↔APO시스템)·외부(복지부) 연계 강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편의성 제고

*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관련 사건정보 ▵APO인력·운영현황 ▵치안수요현황 등

▸ **< 탐지장비 >** 기존 장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무선IP카메라 탐지기 등 신규 장비 보급(22년 예산 1억 1,900만원), 신종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

* **(기존)** 전자파·렌즈 탐지 방식, 비교적 점검범위가 특정된 장소에 적합(화장실 등) → **(신규)** 점검공간 제약 없이 설치장소의 외부에서도 탐지 용이(숙박업소 등)

[여성폭력 대응 전문역량 강화]

○ △ 미성년자·이주여성·친족 대상 성폭력 등 대상별 예방·보호시책* 전개 △ 연구용역을 통해 신뢰도 높은 스토킹 재발위험성 판단기준 마련

* 최근 SNS 등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점차 심각해지는 만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피해 시 대응요령 안내 등 가시적인 예방·홍보활동 실시

○ 가정폭력·학대·스토킹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전문 위탁교육 신설

▸ **< APO >**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의 인지·의사능력의 한계, 심리적 불안감, 높은 피암시성 등을 고려, 특화된 상담기법 등 학습을 위한 전문 교육 신설

▸ **< 스토킹 >** △스토킹 범죄 및 가·피해자의 특성 이해 △범죄 예방 및 수사 전략 △피해자 치유·회복 전략 △사례 실습 등 내용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 마련

▸ **< 2차피해 예방 >** 사례 중심 예방 교육 → 수사기법 등 실무스킬 위주 2차피해 예방교육으로 전환(표준강의안·조사모델 개발, 전문강사 교육·워크숍 등)

○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고도화

▸ **< 상담 챗봇 >** 비대면 방식의 성폭력 피해 '상담 챗봇' 서비스 도입, 경찰관서 및 정부민원서비스 홈페이지와 연동 등 이용 활성화 추진

※ (주요기능) △성폭력 피해자 권리·지원제도·형사절차 안내 △증거수집·대처 방안 △고소장 작성 등 신고지원 안내 △지원기관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 피해자지원 정보 >** △ 사회적약자 맞춤형 안내서(동영상, 점자·음성, 외국어 등) 제작 △피해유형별 권리안내서 정비 및 리플릿·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제공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체계 마련]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체감안전도 조사, 가정폭력 재발우려지수 개발 등을 통해 분야별 정책 수립·지원 정교화

▸ **< 여성·청소년 체감안전도 >** 여성·아동·청소년 안전과 관련 국민들의 체감수준과 인식을 정기적으로 조사, 맞춤형 치안정책 수립 및 치안지표로 활용

※ 연구용역을 통한 설문 재설계, '23년 신규 예산(1억 7,800만원) 확보 추진

▸ **< 재발우려지수 >** 객관적 데이터 중심의 가정폭력 재발우려지수 개발 추진

※ 가정폭력 발생 가정별 △신고 건수·주기 △사건처리 건수·결과 △임시조치 결정 여부 △가·피해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발 위험성을 수치화

○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 대상 폭력·살인 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통계 산출·관리체계 개선(수사운영지원담당관실 협업)

※ 가·피해자 관계 세분화, 여성살해 이전의 폭력 피해(원인·발단) 여부 등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2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22. 1월	
	스토킹 담당경찰관 인력 확대	'22. 1월	
	여성단체(변호사회) 협업 간담회 개최	'22. 2월	
	성폭력 '상담 챗봇' 대국민 서비스 오픈	'22. 2월	
	여성청소년 기능 연속성·전문성 제고 추진 점검	'22. 3월	
	신학기 성폭력 예방 활동 추진	'22. 3월	
2/4분기	여성청소년 안전 정책 자문단회의, 여청 기능 전략협의체 개최	'22. 4월	
	여성·청소년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설계 연구용역	'22. 5월	
	사회적약자 보호 치안백서 제작, 유관기관·시도경찰청 배부	'22. 5월	
	장애인 시설점검 등 성폭력 예방 활동 추진	'22. 6월	
3/4분기	하절기 성폭력 예방 활동 추진	'22. 7월	
	여청기능 현장 컨설팅 추진	'22. 8월	
	APO, 스토킹 담당경찰 전문 위탁교육 실시	'22. 8월	
	스토킹 대응 매뉴얼 보완·개선	'22. 9월	
	여성청소년 안전 정책 자문단 회의 개최	'22. 9월	
4/4분기	APO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진행	'22. 10월	
	가정폭력 재발우려지수 개발 추진	'22. 12월	
	여성 폭력 범죄 통계 개선	'22.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여성대상범죄 피해자 등 국민 전체

○ 이해관계집단

- 관계부처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참여 14개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여가부·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방통위·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대검찰청

- 시민단체 등 유관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긴급전화1366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 향후 기대효과

○ 여성폭력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개선하여 경찰의 선제적 예방 및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성폭력예방 지원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Ⅰ-1-일반재정②) [2]			
①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113-311)[3]	일반회계	6.15	10.33
■ 여성대상범죄 선제적 대응		2.4	2.38
■ 학대예방경찰관 업무관리 시스템 운영 (舊 가정폭력·학대 다기관 협업회의 강화)		1.9	1.61
■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활성화		0.11	0.11
■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을 위한 현장경찰관 역량강화		0.54	0.54
■ 챗봇 연계 범죄피해자 통합정보제공 웹서비스 신설		1.2	0.05
■ 학대예방경찰관 역량강화		-	4.01
■ 스토킹범죄 근절 및 대응능력 강화		-	1.6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율(40%)	32.4 46.6 53.2	54.5	-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세심한 대처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율을 통해 피해회복과 일상행활 복귀 및 범죄로부터의 불안감 해소 유도 ※'19~'21년 3년 평균 44.1% 대비 평균 증가폭 10.4% 상승한 54.5%를 목표치로 설정	{(성폭력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연계 건수(20%) + 피해자 보호지원 건수(80%)) / 성폭력 발생건수}×100	- 성폭력 보호·지원 월보 - 성폭력 발생통계(CSS)
가정폭력 사건대응지수(40%)	50.6 56.8 58.3	62.3	- 가정폭력 사건대응지수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가·피해자 격리 등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 엄정한 사건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 ※'19~'21년 평균 55.2% 대비 추세치 이상 4% 상승한 62.3%를 목표치로 설정	{(가정폭력 검거건수 + 피해자 보호조치 건수) / 가정폭력 실신고 건수}×100	- 가정폭력 검거통계(CSS) - 가정폭력 보호·지원 월보 - 가정폭력 112신고통계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율(20%)	- - -	31.3	- 스토킹범죄 조기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신설, 스토킹 실신고 대비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건수를 지표로 설정 ※신규지표인만큼 '22년 실적치-목표치간 비교분석을 통해 지표설계의 적정성 검토 예정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건수) / 스토킹 실신고 건수 × 100	- 스토킹 보호·지원 월보 - 스토킹 112신고통계

성과목표Ⅰ-3 선진교통질서 확립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1) 주요 내용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람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망자 수를 감소하여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

* △사고발생 요인 안전역량 집중 △자지경찰 협력 고도화 △민·관 협의체 활용 등

○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고령·음주운전자 등 운전자별 맞춤형 관리와 지원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정부혁신 등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도모

○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선정, 범국가적 추진 中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선진교통질서 확립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교통문화 지수
관리과제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는 교통체계 구축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등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도 /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지수 / 장애인운전지원 센터 교육 실적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 /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교통문화 지수	76.6*	78.9	80.8	82.2	전 3년도 실적 평균값(78.8) 및 과거 추세를 기준으로 예측한 값(82.2) 고려, '22년 목표치는 전년보다 1.4%p 높은 82.2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교통문화 지수 (국민의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지표를 관측·설문·문헌조사로 지수화)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교통안전공단)

* 하위항목 산출방식 변경으로 '19년 실적은 '20년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 재산정(77.5점→76.6점, 국토부·교통안전공단,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자치사무의 시·도경찰청 업무 이관 및 관계 재설정,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Untact) 문화 확산, 생활 패턴의 변화 등 교통환경 변화 가속화

– 시·도경찰청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과 교통환경에 대한 맞춤형 정책 수립 실시

○ 운전면허 등 교통관련 제도는 다수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제도 변경 시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공감대 형성 과정 등이 필수적임

– 정책 추진시 연구용역 등*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가·시민단체 및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정책 수용도 향상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개선을 위한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연구('21～'25)

** 고령운전자의 경우 '19.7월부터 대한노인회·교통학회 등 23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통해 정책 추진사항을 지속 공유

○ '21년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5.8%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망자 중 보행사망자 비율은 35.0%로 여전히 높음**

* '20년 3,081명 → '21년 2,900명(잠정) <181명 감소>

** 보행사망자 점유율은 OECD 평균 19.3%('19년)의 1.8배

– 관계부처 및 협력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협의체를 통하여 보행환경 점검 및 개선 강화

(4) 참고자료

○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도로교통공단)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홈페이지, 2019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2021년판)

9 ‘사람 중심’ 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 추진배경 (목적)

○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21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5.6명으로 OECD 평균 5.1명 이하(잠정)

○ 특히, 보행자와 고령자의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교통 약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교통사고 발생 주요 요인 역량 집중 】

1 보행자 사고 감소대책

① 보행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보행자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제한속도 설정(20km/h) 및 보행자 안전의무 부과

√ **(보행권 강화)** 횡단보도·교차로·이면도로 등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 **(횡단보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여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는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 **(교차로)** 차량 적색신호에서 우회전 시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정지의무 명확화 / 우회전 신호등 법적근거 마련

· **(이면도로 등)**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우선통행권 /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부과

– 법 시행 일자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작업 추진 / 유관부처와 사전 전방위적 홍보로 시행 초기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도모

② 「안전속도 5030」 고도화

- 보행자 통행량 및 사고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제한속도와 사고와의 상관관계 분석, 제한속도 조정 검토

  ※ 시·도경찰청과 제한속도 준수율(K-tempo)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60km/h를 유지하는 사고다발지역은 5030 적용, 속도 하향으로 위험성이 높아진 구역은 상향

③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분석, 맞춤형 대책 추진

- 보행자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 사고다발지역 정보를 시·도경찰청에 제공하고 보행자사고 급증 구간 합동 실태점검 등 공동 관리

- 내비게이션 업체 등 민간에도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정보 제공, 사고다발지역 운행 시 화면에 표출하여 안전운전 유도

④ 첨단기술 접목, 「IT 교차로」 도입으로 보행자 획기적 감소

- 첨단기술을 접목시킨 교통안전시설 등에 관한 통합 표준모델 구축, 각 지자체에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

- 도로교통공단 협업, 보행자사고 다발지역 대상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 검증 후 표준모델 마련, 시·도경찰청 제공

□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대책

① 고령 보행자를 위한 법 개정 등 안전체계 구축

- 노인보호구역 지정요건에 전통시장 주변, 역·터미널 등 고령자 보행이 빈번한 '장소'를 추가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21년 고령 보행자 사고 10건 이상 발생지점 34개소 중 32개소 주변 전통시장 위치

- 고령 보행자사고 심층분석,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선정하여 시·도경찰청 제공, 맞춤형 안전활동 제공

② 고령운전자 관리시스템 강화

- 고령자 교통안전 협의회를 통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지속 추진('20.9.~), 부처별 과제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 및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추진, R&D 착수('22.4월~)
- 운전면허 자진반납 국고 보조금 증액(14억→18억)으로 지원대상 확대

③ 유관부처 협업, 홍보·교육으로 고령자 안전 교통문화 정착

- 복지부·도로교통공단 협업,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등 노인 돌봄서비스와 연계한 교통안전수칙 전파

  ※ 노인 돌봄 전담 사회복지사 2,090명, 생활지원사 29,198명 활동 중

- 관계부처 합동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

  ※ 유관부처 홍보협의회 등을 통해 콘텐츠 공유, 분기별 홍보계획 수립·집중 홍보

□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대책

① 배달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 배달 플랫폼사(12개) 대상 ▵법규준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배달종사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협의

√ **(인센티브 제공)**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연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자발적 법규준수 문화 조성(배민 등 협의 추진)

√ **(위험지역 등 안내)** 이륜차 사고다발지역 및 단속지점 정보 제공, 안전운전 지원

√ **(안전교육)** 보공단 협업, 배달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실시

-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를 통해 종사자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제 / 운전 중 배달 어플 조작 제한 법규화 등

② 이륜차 전용 무인단속장비 개발, 전국 확대

- 후면번호판 무인단속장비 시범운영 실시 후 효과성 검증, 성능 보완하여 장비 표준규격 제정·배포('22년)

  ※ 표준규격 배포 이후 신규 도입되는 무인단속장비 후면으로 적용 추진

- 순찰차 탑재형 단속장비 확대 보급(48대), 이륜차 단속기능 고도화 추진

□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대책

① 고속도로 화물차 중점관리

- 고속도로 운행 차량 중 사망사고의 비중이 높고*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고속도로 화물차 집중관리로 사망자 감소 견인

√ **(졸음운전 예방)**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분석, 취약구간 반복순찰 / 유관기관(국토부·도로공사) 합동 화물차 휴게공간(졸음쉼터 등) 확대 지속 추진

√ **(과속)**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암행순찰차 17대) 활용, 초과속 고위험 노선(10개) 집중운용 / 속도제한장치 해체 의심차량 명단 교통안전공단 제공, 검사명령

- 고속도로 화물차 등에 의한 중요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합동 지원단 편성, 원인분석·대책 마련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 교통안전공단 협업, 고속도로상 대형 화물차의 무인단속 기록 분석, 속도제한장치 해체 의심차량 차량검사·정비명령

②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 시 의무교육 신설 등 유관부처 합동 안전교육 강화 제도개선* 추진

  *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교특법상 12대 중과실 반복 위반 시 안전교육 의무화(여객운수법 개정 추진)

- 사업용 화물차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유관부처 배포 /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및 홍보

  ※ 카드뉴스 형태 교육자료 제작,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화물공제조합 제공

□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대책

○ 음주운전 재발 방지대책 마련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상 법적 근거 마련*

* 관련 개정안 국회 계류 중(5건), 경찰청案 마련하여 전문의원실 등 협의 추진

– ▵음주운전 면허 결격기간 강화* ▵음주운전 위반자 특별교통안전 교육 개선 등 재범방지 체계 구축

* 음주운전 유형별 면허 결격기간 개정안 행안위 계류(임호선 의원 발의, '20.12.)

□ 중요 법규위반 교통사고 감소대책

① 공익신고 역할 재정립, 법규준수율 제고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익신고의 업무절차 간소화 및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업무효율성 및 법규준수율 제고

√ **(시스템 고도화)** ▵AI 자동 판독시스템 도입 ▵신고경로 일원화 등 신속·간편한 신고 및 처리절차를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

√ **(업무 효율성)** ▵관할지 개선 ▵범칙금만 있는 항목 일괄 경고처분 등 현실 여건과 교통상 위험 등을 고려, 처리 기준 재정립

√ **(전문성 강화)** ▵광역시급 경찰청 공익신고 집중운영 ▵공익신고 담당자 인력증원,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업무환경 개선과 다양한 지원으로 업무 전문성 강화

② 첨단 단속장비 보급 확대, 단속활동 지원

– 기계식 단속 확대를 위해 암행순찰차 및 순찰차 탑재형 단속장비와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등 첨단 단속장비 지속 보급

【 자치경찰 협력체계 고도화 】

① 시·도경찰 대상 「정책지원 플랫폼」 구축

– 자치경찰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활동 강화

√ **(분석자료 제공)** 월별 ▵분야별·지역별 교통사고 현황 ▵사망자 증가항목에 대한 심층분석 ▵향후 전망 등을 시·도경찰에 제공, 맞춤형 계획수립에 활용

√ **(우수시책 공유)** 시·도경찰청 및 자치위원회 주요정책 취합, 전국에 공유하고 우수시책 선정, 인센티브 제공 / 시·도청 화상회의 정기 개최, 정책 방향 안내

√ **(현장 컨설팅)** 사망사고 증가 시·도경찰청 대상 ▵사고 상세분석 ▵외부 전문가 조언 ▵사고원인별 대책 제시 등

② 교통안전지표 활용, 지역별 「교통안전지역 인증제」(가칭) 도입

– 교통안전지표를 활용한 '21년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 진단결과를 시·도경찰(자치경찰委)에 제공, 우수지역에 '교통안전지역' 인증

③ 현장 경찰관 안전확보 대책 마련

– 교통외근 경찰관 안전확보를 위해 ▵관련 매뉴얼 개편 ▵안전장비 보급 ▵실습교육 강화 등 안전 인프라 강화

【 민·관협의체 활성화 】

① 분야별 민·관 협의체 운영, 제도개선 추진

– 경찰청 주도로 분야별 민·관 협의체를 구축·운영, 경찰의 노력만으로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여 정밀한 교통안전망 구축

√ **(이륜차)** 배달 플랫폼社·유관부처 합동 배달 이륜차 협의체 운영, 법규 준수 운전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방안 논의

√ **(고령자)** 고령자 안전대책 협의회(22개 기관) 운영, 기관별 이행실적 점검

√ **(경찰청-국토부 협의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 제도개선

② 유관부처 합동 교육·홍보 플랫폼 강화

– **(교육)** 부처간 협업,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 정규과목 편성 추진 /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 (홍보) 국조실 등과 협업, 범정부 차원의 홍보계획 수립·추진 / 국민에게 쉽게 다가가는 참여형 홍보수단 추가, 감동과 흥미 유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설 명절 특별교통안전 관리 대책 수립·시행	’22.1월	
	이륜차 교통안전 관리계획 수립·시행	’22.2월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22.3월	
	’21년 교통사고 통계 분석 및 홍보 등 보도자료 배포	’22.3월	
2/4분기	’22년 교통사고 감소대책 수립·시행	’22.4월	
	교통안전 홍보 계획 수립·시행	’22.4월	
	교통안전 지표 활용,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 진단	’22.5월	
	2분기 교통사고 통계 분석 및 홍보 등 보도자료 배포	’22.6월	
3/4분기	하계 휴가철 특별 교통대책 수립·시행	’22.7월	
	추석 명절 특별교통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22.9월	
	3분기 교통사고 통계 분석 및 홍보 등 보도자료 배포	’22.9월	
4/4분기	가을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22.10월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대책 수립·시행	’22.11월	
	교통안전 성과분석 및 특진 등 포상 실시	’22.12월	
	4분기 교통사고 통계 분석 및 홍보 등 보도자료 배포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전체

○ 이해관계집단 : 국토부·행안부 등 유관부처 및 관계기관(도로교통공단 등)

□ 기대효과

○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선진 교통문화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Ⅰ-3-일반재정①)			
① 교통사고 예방(1331)	일반회계	3,377.6	2,476.9
■ 교통안전교육홍보(311)	일반회계	51.7	-
■ 교통안전활동(312)	일반회계	690.6	454.9
■ 교통과학장비관리(313)	일반회계	1,188.1	1,070.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최근 3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50%)	-11.4	-8.0	-5.3	-8.3	최근 3년간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율은 평균(추세치) -8.2%로, '22년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3년 평균 추세치를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금년사망자수) - (전년사망자수)] ÷ (전년사망자수) × 100	교통경찰업무관리 시스템(TCS) 통계 확인
최근 3년 대비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 (50%)	5.8	-10.4	-4.7	-4.7	최근 3년간 전년대비 교통사고 부상자 평균 증감율은 -3.1%이나, '21년 감소율과 동등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상향,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	[(금년부상자수) - (전년부상자수)] ÷ (전년부상자수) × 100	교통경찰업무관리 시스템(TCS) 통계 확인

* 정책과제 외부위원 컨설팅 의견을 수용, 전년 수준으로 감소율 목표 설정

10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는 교통체계 구축

□ 추진배경

○ ’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14명(잠정)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하였으나, 10만명 당 사망자는 5.6명으로 OECD 회원국 36개국 중 하위권(24위*)에 머물러 있음

* ’19년 OECD 국가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와 비교, ’19년 기준으로 한국은 27위

○ 이에, 고령운전자·장애인 등 운전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을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운전자별 맞춤형 관리 및 지원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① 고령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R&D) 실시

– 첨단기술을 활용해 운전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개선에 활용

○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운영 내실화

√ **(실무협의회 운영)** 고령운전자 종합대책 추진실적 등 주기적 협의
√ **(백서 제작)** 협의회 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성과 등을 데이터로 축적함으로써 고령자 등 정책당사자의 수용성을 제고(’22. 상반기 中 발간 예정)

– 고령운전자 종합대책 세부과제 수립·추진

√ **(과제 추진)** 기존 과제 中 중요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제를 선정, 집중 관리를 통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지원)
√ **(과제 발굴)** 주요 사고사례, 연구 등을 바탕으로 신규과제 발굴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 **(보조금 지원)** 사업시행 3년차를 맞이하여, 제도 효과분석 등을 통해 보조사업 연장 및 예산 증액 등 추진
√ **(제도 내실화)** 지자체·국토부 등과 협의, 면허반납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노력

②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 도교공단과 협업,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추가 개소 등 확대를 통해,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

※ 전국 9개 지역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교육 수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22년 중 3개 지역에 지원센터 추가 개설

③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추진

○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국내 도입이 필요, 경찰 내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안을 마련,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법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극 대응】

①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추진

○ '05년 전부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 및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순화 실시

√ **(보호구역 지정범위 확대)** 노인·장애인 보호 확대를 위해 특정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이 빈번이 통행하는 장소도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
√ **(보행자 보호)** 각 장소·상황에 따라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 주의의무 규정을 종합적으로 개선, 보다 알기 쉽고 통일성 있게 정비
√ **(어린이 보호)**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신고 수리기간을 명시하는 등 어린이 보호 관련 규정 개선

- 현재 입안 절차가 진행 중인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 진행

② 2회 이상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규정 정비

-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도교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라, 가중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 추진

√ **(법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를 개정, 음주운전 가중처벌 요건 명확화

③ 운전면허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

- 운전면허증 및 그 기재 내용, 운전학원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 도입

* 기재 내용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알려주는 행위도 포함

√ **(법 개정)** 도로교통법 제85조, 제93조, 제106조, 제113조 등 개정, 운전면허증,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증 등 도교법 상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④ 보행자범위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너비가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용 놀이기구, 손수레 등을 보행자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보행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부령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를 개정, 보행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차'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

⑤ 상호인정 외국면허증·국제면허증 관리체계 정비

- 상호인정 외국면허증·국제면허증에 대해 운전금지 처분 및 그에 따른 결격기간 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

√ **(대통령령·부령 개정)** 운전금지 처분 사유를 하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지처분 및 결격기간에 대한 전산관리 체계를 마련

【디지털 정부혁신 및 국제협력을 통한 국민편익 증대】

① 운전면허증 모바일화 추진

○ 사용자의 자기 정보주권(Self-Sovereign Identity) 확보 및 국민생활의 디지털화를 통한 편의 제공

√ 예상보다 높은 관심으로 운영 초기 발급에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시험장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창구를 확대(13개→20개)하였으며, 온라인 신청자 발급전용 창구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기시간을 최대 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
- 시범운영 시 발견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22년 하반기부터 전국 확대 추진

② 교통안전 지원·활용시스템 구축

○ 교통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사고 발생 및 증·감 원인을 규명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 정책결정 및 교통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을 구축

√ **(ISP 추진)** 교통 관련 데이터를 원인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 등에 활용 가능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ISP* 사업 추진('22년 상반기 예정)

*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정보시스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정의하고, 사업내용·로드맵·소요 예산안을 수립하는 활동

√ **(예산 확보)** 시스템 구축 예산('23년) 확보를 위해 기재부·정보화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

③ 해외진출 우리국민의 이동권 증진

○ 영문운전면허증 사용국가 확대, 국가 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 체결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해외 진출 우리국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

* '22. 2월, 대만과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및 발효

√ (영문운전면허증)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를 확대('21년 54개국→ '22년 64개국)

√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 체결 지속 추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 계획	세부 일정	비 고
1/4분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 실시	’22.1월	
	한-대만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발효	’22.2월	
	교통 안전 지원 활용 시스템 ISP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심사 등 관련 절차 진행, ISP 계약 체결	’22.3월	
	조건부 운전면허 R&D 사업 공고	’22.2월	
2/4분기	교통 안전 지원 활용 시스템 ISP 사업 수행 및 ’23년 예산 요구	’22.6월	
	조건부 운전면허 R&D 연구기관 선정	’22.6월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1차)	’22.6월	
3/4분기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2차)	’22.9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세부 도입안 국회 제출	‘22.8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 실시	’22.7월	
	교통안전 지원 활용시스템 관련 ’23년 예산 심사	’22.9월	
4/4분기	교통안전 지원 활용 시스템 사업계획 수립(‘24년)	’22.10월	
	조건부 운전면허 R&D 중간실적 점검(1년차)	’22.12월	
	’23년 자진반납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22년 실집행 현황 분석	’22.11월	

* 장기 사업인 경우 연차별 추진계획도 추가하여 표기할 것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 집단 : 특이사항 없음

□ 기대효과

○ 고령운전자, 장애인 등 운전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관리 및 지원으로 교통안전 및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

○ 개선된 제도의 정착을 위한 입법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적극 대응

○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정부혁신과 국가간 인적 교류 증대에 따른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한 국민 편익 증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①교통사고예방(1331)	일반	(3,885)	(2,947)
■ 교통안전활동(312)		690	454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330-01)		13.9	18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① 교통행정 전산화(1332)		8	15.6
■ 전산시스템 고도화(511)		-	3.5(순증)
- 교통안전 지원 활용시스템 구축 ISP		-	1.17(순증)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등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도 (50%)			126	132	‣ 교통기획과는 법령 등 제도개선과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대국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부서임 ‣ 이에, 교통기획 업무로서 법령 개선, 유관기관 협업, 외국과 면허 상호주의 등 노력도를 점수화하여 지표로 설정 ‣ '21년 성과목표는 110점이었으나 실제 실적은 126점(법령 94, 협업32)으로 목표치를 14.5% 초과 달성 ‣ 전년도 실적보다 5% 상향한 적극적인 목표치임	①법령개선: 도로교통법 등 법령 개정 건당 배점 < 배점 > 법 5 / 대통령령 3 / 부령 2 / 훈령및지침 1 ※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의 경우, 가중치(300%) 부여 ②기관협업도: 부처별 협업 사항에 대해 기관별 배점 부여 < 배점 > 외국협업 5 / 민관기관 3 / 정부기관 2 / 타국관 1 → ①, ② 점수를 합산	국회의안정보시시스템 등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만 명당) (40%)	2.48	1.96.	1.77	1.54	‣ 지난 3년간 고령운전자(65세↑)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8년 대비 19년 7.99 %, 19년 대비 20년 20.9%, 20년 대비 21년 9.6% 감소하여 평균 12.8%의 감소율을 보임 ‣ 지난 3년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평균 추세치 12.8% 감소보다 상향된 13.0% 감소를 목표로 제시하여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 ÷ 총 고령운전자(65세 이상 면허소지자) 수 × 1만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교육 인원(10%)	신규	신규	신규	2,900명	전국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교육 인원을 전년(2,764명) 대비 5% 상향한 2,900명으로 설정	전국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교육 인원(연간)	도로교통공단

11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 추진배경

○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선정, 범국가적으로 추진 中

* '22년까지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 '21년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5.8%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망자 중 보행사망자의 비율은 35.0%로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

* '20년 3,081명 → '21년 2,900명(잠정) <181명 감소>

** 보행사망자 점유율은 OECD 평균 19.3%('19년)의 1.8배

○ 과속·신호위반 외에 이륜차 위반행위*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다양한 유형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무인단속 요구 증가

* '18~'20년: △통고처분(24→27→35만건) △공익신고(1.4→1.9→12.5만건)

○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도로에서의 실험이 증가함에 따라 자율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선제적 제도·기술 정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보행자 최우선 교통 패러다임 정착】

①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지원

–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 ▲횡단보도 상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등 보행자 보호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령 적극 홍보

※ 보행자 교통안전을 핵심 메시지로 구성, TV·SNS·메타버스(가상공간 체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관 합동 홍보(교통안전과 협업)

보행자 보호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령 (6건)

▸ **<통행우선권>** 보·차도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 및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22. 4. 20. 시행)

- **<횡단보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 ('22. 7. 12. 시행)
- **<도로 외 구역>**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과 ('22. 7. 12. 시행)
-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과 ('22. 7. 12. 시행)
-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속도 20km/h 제한 및 보행자보호의무 부과('22. 7. 12. 시행)
- **<교차로 우회전>** 신호 교차로 상 적신호 우회전 시, 정지의무 명확화 및 우회전 신호등 도입 ('23. 1. 22.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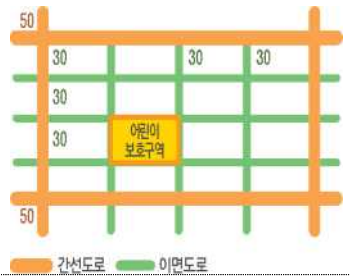
② 「안전속도 5030」 고도화

– 경찰·지자체·도로교통공단 합동 컨실팅을 구성하여 ▵도로 정온화 ▵제한속도 재조정 등 정책 고도화 조치 실시

< '안전속도 5030' 이란? >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하는 정책('21년 전면시행)

※ 단, 소통 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 운영 可



【교통약자 보호 및 사고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① 국민에게 공감받는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안전에 영향이 없는 심야시간대를 기준으로 구간·시간대를 정하여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

※ 원칙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금지되나 구역·시간·방법 등을 정하여 예외적으로 주정차 허용 가능

–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30km/h로 운영하되, 적용이 곤란한 곳은 도로여건별·시간대별 탄력적 속도규제 시범운영

※ 40 km/h 이상으로 운영되는 간선도로 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등하교 시간대 30 km/h로 가변속도 제한

② 교통안전시설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업무편람 개정·배포

- 관련 법령 추가 및 개정내용 반영을 위해 기존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매뉴얼을 개정하여 업무편람으로 통합, 설치·관리 기준 표준화 및 교통시설 담당자의 업무효율성 제고

③ 안전한 IT 첨단 교차로 조성을 위한 표준모델 마련

- 첨단기술을 접목한 교통안전 시설·장치 통합 표준모델 구축,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

-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장소를 분석, 'IT 첨단 교차로'의 시범사업지로 우선 선정

  ※ 교차로 내 회전차량을 위한 분홍색·녹색 등 '노면색깔 유도선' 확대도 함께 추진

- 시범사업지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적격성 및 효과성 등 검증 후 표준모델 확정, 전국 확대 설치

【 첨단 무인단속장비 개발 및 플랫폼 구축】

① 탑재형 단속장비 확대 보급 및 이륜차 단속장비 개발

- **(탑재형 장비 보급)** 고정식 단속장비를 회피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캥거루 운전 억제를 위한 '순찰차 탑재형 단속장비'* 확대

  * 고순대(17대) 및 시·도청 암행순찰차(10대) 시범운영('21. 11월 ~ '22. 2월) 후, 45대 추가 보급 예정('22년 하반기)

- **(이륜차 단속장비 개발)**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 개발(상반기) 및 시범운영을 통해 무인단속 가능 차종을 이륜차로 확대

  ※ 속도 검지 레이더와 신호인식·추적 카메라를 이용, 차량의 속도·경로·신호위반 여부 검지 → 딥러닝(DL) 기법으로 이륜차 판별 및 안전모 착용 여부 구분

②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무인단속장비 고도화 및 통합플랫폼 구축

- **(단속항목 추가)** 과속·신호위반 외에 꼬리물기·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등 다양한 법규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한 기능 추가 개발

  ※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사업'으로 장비개발 연구('22~'23년) → 시범지역 선정 및 실증('24~'25년) → 실용화 추진('26년~)

–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 중인 무인단속장비의 교통안전 성과를 분석, 단속장비 설치·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사업' 추진 시 교통단속관리시스템(TEMS)의 고도화 병행

③ 신규장비 표준규격 제정 및 무인단속장비 관련 법령 정비

– **(규격 제정)** 시범운영을 위해 마련한 잠정 규격을 보완, 순찰차 탑재형 장비, 이륜차 단속장비 표준규격 제정

– **(법령 정비)** 무인단속장비 설치·관리 주체를 확대하고 설치·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개정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제도 개선 및 첨단인프라 구축】

① 자율주행 기술단계에 따른 법·제도 개선 추진

– **(가이드라인 제작)** 자율차 제조사·연구기관 등이 개발단계에서 참고하도록 도로 통행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발표

– **(법령 정비)**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21년)에 따라 자율차 기술단계별 운전자 준수사항 등 도로교통법 추가 개정 검토

*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관련 부처간 법·제도 개선 방향성과 추진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해 수립(경찰청은 도교법 개정 담당)

② Lv.4 자율주행 상용화 대비 기술개발 혁신사업 추진

– 통합관제시스템, 교통안전 인프라 기술개발 등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R&D 사업('22년 183억원) 추진

* 경찰청(13개 과제), 국토부, 과기부, 산업부

– 과제 간 연계성, 기술·서비스의 현장 수용성 검증을 위한 실증지역 선정 및 통합 현장 실증 T/F* 운영

* 연구결과물(도로교통시설 등)의 기술력·사업성 등을 통합적으로 실증하기 위해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조직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2월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중앙제어방식) 시범운영 심의 상정	2월	
	‣ 교통안전시설(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 업무편람(안) 마련	3월	
	‣ 범부처 R&D사업 2차년도 경찰청 소관 과제착수보고 및 워크숍	3월	
	‣ 자율차 도로 통행방법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3월	
	‣ 순찰차 탑재형 장비 시범운영(27대) 완료 및 개선점 도출	3월	
2/4분기	‣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 가이드 라인 마련	4월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중앙제어방식) 시범운영 추진	5월	
	‣ 통합 현장 실증 T/F 구성 및 실증 후보지역 검토	5월	
	‣ 어린이 보호구역 가변속도 제한 시범운영 시작	6월	
	‣ 안전속도 5030 컨설팅 팀 구성 및 운영 시작	6월	
	‣ 순찰차 탑재형 장비 시스템 보완 및 추가 보급 추진	6월	
3/4분기	‣ 교통안전시설(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 업무편람(안) 의견수렴	7월	
	‣ 자율차 R&D 결과물에 대한 통합 현장 실증 세부 방안 도출	8월	
	‣ 교통안전시설(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 업무편람(안) 배포	9월	
	‣ 후면번호판 단속장비 시범운영 추진	9월	
4/4분기	‣ ’22년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참가	10월	
	‣ 순찰차 탑재형 및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 표준규격 제정	10월	
	‣ 어린이 보호구역 가변속도 제한 시범운영 효과분석	11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표준규격서」 개정(안) 마련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全 국민

□ 기대효과

○ △ 국민안전을 위한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구축 △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국민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심각도*’를 현격히 감소

* 사상자별로 상해 피해와 손실 정도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된 인명피해 심각도를 차량등록 대수로 나눈 수치

○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호장치 강화로 보행자 안전 확보 및 보행자 존중문화 형성

○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한 첨단인프라 구축·제도 개선으로 교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19	'20	'21	'22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60%)	0.158	0.137	0.121	0.107	▸지난 3년간 매년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 평균 10.1% 보다 상향된 11.0%를 감소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지난 3년간 심각도 감소율은 '18년 대비 19년 5.38%, 19년 대비 20년 13.29%, '20년 대비 '21년 11.7% 감소로 평균 10.1%의 감소율을 보이며, 평균 감소율을 상회하여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도전적이고 의욕적인 목표치임	(당해년도 월평균 교통사고 심각도 지수*12) * 교통사고 심각도지수 =[(273×사망자수)+(32×중상자수)+(2×경상)+(1×부상)] / 차량등록대수 * 사망·중상·경상·부상자 수는 前3년의 경우 매년 1.1~12. 31 기간에 발생한 것을 적용하고, 당해년도는 1.1~10.31 기간에 발생한 것을 적용 * '21년 심각도는 교통사고 사상자수 잠정통계 기반임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40%)	2.5	2.1	1.9	1.7	▸지난 3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 수는 18년 대비 19년 12.0%, 19년 대비 20년 16.2%, 20년 대비 21년 7.7% 감소하여 평균 11.97%의 감소율을 보임 ▸지난 3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 수 평균 추세치 11.97% 감소보다 상향된 12.55% 감소를 목표로 제시하여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임	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중 사망자 수 ÷ (해당연도 인구÷100,000) * '21 보행자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잠정통계 기반임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성과목표Ⅰ-4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제·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1) 주요 내용

○ **<사이버공간 안전 확보>** 다크웹·가상통화·ICT기술 발달 등 진화하는 사이버환경에 대응하여 민·관·학 사이버 협업 확대 및 국제공조 강화

– △사이버전문교육, 시스템 고도화 및 장비확충 등 현장 사이버범죄수사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글로벌 IT기업과 협업, 유로풀 공조 확장 등 사이버 국제공조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사이버수사 활동 강화>** 사이버치안 상황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집중단속 추진으로 사이버수사 역량 극대화, 주요 민생 사이버범죄 근절

– 계좌 지급정지, 불법콘텐츠 삭제·차단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로 재범 의지 차단

○ **<사이버테러 범죄 수사활동 강화>** 국가 발전과 안보를 뒷받침하는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이버테러 범죄에 대한 검거활동 강화

○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인터폴 및 각 국 경찰기관과 공조하여 주요 도피사범을 검거·송환, 인터폴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19종), 각종 수배서(8종) 등 인프라를 통한 초국경범죄 대응역량 강화

○ **<외국인범죄 예방>** 체류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문화 치안활동 및 외사요원 역량 강화로 선제적·예방적 외사정보활동으로 사회안전 확보

○ **<해외 치안협력 강화>** 외국경찰기관과 국제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기구 등 참여를 통한 치안협력* 외연 확대

* △MOU체결 확대 △고위급 교류 △해외 한인경찰 협력 활성화 △외사경찰 초청행사 △국제기구·치안협의체 참여확대로 네트워크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제·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사이버범죄 검거율
관리과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사이버 첩보 활용 지수 / 사이버 국제공조 효율성 지수
	민생 사이버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사이버 민생범죄 검거지수 / 피해 보호조치 증가율
	사이버테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 건수 / 피해 보호조치 건수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국외도피사범 송환인원 / 인터폴 조직 및 D/B 활용도 /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실적
	선제적·예방적 외사경찰 활동을 통한 사회안전 확보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 외사정보 활용도 / 대테러·방첩 활동 실적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제교류지수 / 치안인프라 전수지수 / 홍보지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사이버범죄 검거율	73.4	67.5	63.7	69.2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19년 이후 지속 감소세이며, 전 3년도 실적 평균값(68.2)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58.5)을 고려, '22년 목표치는 검거율 반등을 독려하기 위해 평균값보다 1.0%p 높은 69.2로 설정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IT발전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촉발과 삶의 중심이 사이버공간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사이버범죄 발생은 지속 증가

– 특히 전체 범죄는 '17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사이버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

- '17~20년(4년간) 전체 범죄는 4.8% 감소한 반면, 사이버범죄는 77.7% 증가
- <사이버범죄 / 전체 범죄 비중>
  '17년 131,734건/1,662,341건(7.9%) → '20년 234,098건/1,587,866건(14.7%)

– 민·관·학 사이버 협업치안 확대 및 외국 법집행기관, 해외 IT기업과의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한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

○ 해킹·랜섬웨어 등 ICT 기술·가상자산을 악용한 사이버테러 범죄의 증가와 AI를 이용한 금융범죄, 월패드 해킹, 드론·스마트카 해킹 등 신종범죄가 등장하고 있으며,

○ 단시간에 급격히 피해가 확산되는 사이버테러 특성상 정부부처 간 칸막이로 즉각적인 정보공유가 되지 않으면 신속한 피해 차단·수사 등 효율적인 대응이 불가능

– 사이버테러 관련 관계기관(과기부·KISA, 국정원, 금융위 등) 및 전문가·보안업체 등과 협력하여 위험정보 수집·분석·공유·관리를 통해 공동 대응역량 강화

○ 범죄의 첨단·탈국경·사이버化가 갈수록 심화되어 공조 수요가 폭증하고,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피사범 매년 증가

– 각국의 공조 회신사례를 분석하고, 외국 범 집행기관 및 외교부 등 국내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 정부는 제조업·농어촌 외국인력 수급 지원 등을 추진* 중으로 코로나19 상황 개선 시 체류외국인 증가로 외국 치안수요 급증 예상

*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 외국 인적자원 활용 방안(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 '21.3월)

– 체류외국인에 대한 다문화치안활동 전개로 외국인 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치안서비스 접근성 제고

(4) 참고자료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cyberbureau.police.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12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 추진배경

○ **(사이버범죄 급증)**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혁신적 기술이 일상생활에 적용됨에 따라

– 전체 범죄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사이버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전체 범죄 대비 사이버범죄 비중도 계속 확대

※ 1) '17~'20년(4년간) 전체 범죄는 4.8% 감소한 반면, 사이버범죄는 77.7% 증가
2) 사이버범죄 / 전체 범죄 비중
'17년 131,734건 / 1,662,341건(7.9%) → '20년 234,098건 / 1,587,866건(14.7%)

○ **(사이버수사 난이도 심화)** 다크웹*, 가상자산 이용** 등 사이버범죄에 최신 IT 기술을 악용하면서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화되어 피의자 추적 및 검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요구

–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발생, 민 · 관 · 학 협력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치안의 강화 필요

* 다크웹(Dark Web)은 특정한 소프트웨어(TOR 등)를 사용해야 접속이 가능하며, 접속 위치(IP주소), 통신내용 암호화 등으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추적이 매우 곤란

** N번방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입비 송금 등 금전거래에 가상자산을 주로 활용

○ **(국제공조 필요성 증대)** 글로벌 IT 기업의 서비스 활용, 해외 소재 서버 및 VPN 사용 등 사이버범죄는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초국경성·초연결성이 강해지고 있음

○ **(체계적·종합적 지원)**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국제공조가 필수 요소가 됨에 따라, 수사관이 부담 없이 국제공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체계적·종합적 지원이 필수

사이버범죄의 초국경화 사례

▸**(온라인상 성착취물 유통)** 다크웹을 악용해 국경을 넘나들며 성착취물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금은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하여 추적을 회피

▸**(개인정보 탈취·판매)** 해킹을 통해 주민번호, 카드정보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해외사이트,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만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사이버 협업치안 확대 >

○ **(민관 협업 추진)** 해킹, 악성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연구단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예방대책 마련 및 기술개발 추진

- **<범죄이슈 공동대응 >** KISA 등 유관기관, 주요 포털,·오픈마켓 등과 협업, 사이버범죄 예방대책 마련 및 공동 홍보 추진
- **<유관기관협력>** 지능화되는 사이버범죄의 증가에 대비, 민·관·경이 참여하는 사이버범죄 협의체 구성 추진
- **<연구협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ITP 등 유관단체와 협업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한 기술 연구개발 추진

○ **(국민참여 예방활동)** 사이버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국민들의 자발적 예방활동 참여 확대 및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 **<사이버범죄예방의 날>** 사이버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4.2. 전후로 기념행사, 공모전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전개
- **<누리캅스>** 인터넷상 도박·마약·불법게임물 등 불법·유해정보 신고활동 및 경찰의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에 국민이 직접 참여
- **<예방교육>**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이버범죄 예방강사*의 온라인 교육에 적합한 표준강의안 제작 및 활용, 기관·단체 등 맞춤형 예방교육 지속 확대

  * 경찰관 신분으로 사이버수사 경력과 강의역량을 갖춘 강사를 전국적으로 100명 선발·운영중
-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수여>** 사이버치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민·관·학이 서로 협력하여 협력치안 추진 동력 확보

○ **(정보공유)** 사이버위협·범죄 등 동향에 관한 적극적 정보공유

- **<2022 사이버 범죄트렌드 발간(대외용)>** '22년 예상되는 사이버범죄 동향 및 예방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
- **<더 사이버 발간(대내용) >** 첨단화·조직화된 신종 사이버범죄 수사기법과 관련 연구 정보를 일선 현장 수사관에게 제공

< 현장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

○ **(전문인력 확충)** 수사·디지털포렌식 등 민간의 우수인재를 경력채용

- **<민간 IT 고급인력 채용 확대>** 가상자산·다크웹 이용 등 첨단범죄 대응을 위해 민간 IT 전문가를 사이버 전담수사관으로 채용 확대
  * 00년부터 사이버 전담수사관 지속 채용(총 697명), '21년 12월 90명 채용하였고 '25년까지 매년 100~110명 선발 예정
- **<사이버 인력증원>** 현장 사이버수사관 인력을 증원하여 사이버수사 책임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
  ※ **('22년 소요정원)** 시도청·경찰서 사이버수사관 163명 증원이 정부안에 반영

○ **(사이버전문 교육)** 사이버수사관 자질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실시

- **<1단계 : 기초>** 사이버경력 1년 미만의 신임 수사관 대상 사이버범죄 수사 관련 기초지식을 배양, 업무 조기 적응 및 사이버수사 자질 향상
  ※ 수사연수원 기초과정, 시도청 교육센터 사이버수사 기초과정 등
- **<2단계 : 전문>** 다크웹·가상자산 추적 등 최신 사이버 트렌드에 대한 고도의 전문 기술 습득으로 사이버수사 전문 역량 강화
  ※ 수사연수원 전문과정, 사이버수사 전문화 교육(민간위탁)
- **<3단계 : 심화>** 사이버침해 사고 현장 대응부터 테러형 범죄 추적 수사까지 사이버범죄 전방위적 대응 가능한 사이버치안 핵심 인재 양성
  ※ 수사연수원 심화과정, 사이버수사 전문화 교육(민간위탁), 외부기관(KISA) 교육

○ **(사이버치안 전문가 양성)** 책임수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공인된 사이버치안 핵심 인재 양성

- **<맞춤형 석사과정 운영>** 사이버경력·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석사과정 운영, 공인된 사이버치안 전문가 양성
  ※ 국내 우수 정보(보호)대학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 경찰에 최적화된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으로 업무 연계성 극대화
- **<폴-사이버챌린지 개최>** 사이버수사 기법을 접목한 경찰청만의 독창적인 대회인 '사이버범죄 추적수사 역량 경진대회' 최초 개최(57개팀 102명 참여),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도모

○ **(시스템 고도화 및 장비 확충)**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첨단시스템 고도화 및 고성능 장비 보급 추진

- **<시스템 통합>**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시스템*과 사이버위협정보 통합분석 시스템** 연결 구축***

  * 경찰 내·외부 시스템 7종을 연계하여 산재된 사이버범죄 단서 간 연관성을 통합분석 지원시스템

  ** 개별사건 간 수사자료(계좌거래내역·통화내역 등)를 통합, 연계분석한 수사단서 제공 시스템

  *** 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 시스템 내 '통합분석기능'으로 사이버위협정보 통합분석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운영

- **<시스템 고도화>** 다크웹 내 불법정보를 게시한 ID·URL 등 34개 수사단서에 대한 연관분석 기법 지속적 개발

- **<고성능 수사장비 보급>** 고난이도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디지털증거 복제·분석장비 보급 및 최신 디스크 분석용 프로그램과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원할한 수사 활동 지원

  *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실시간 거래정보를 분석, 범죄에 사용된 거래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추적 기능 제공

< 사이버 국제공조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강화 >

○ **(법집행기관 공조)** 직접공조가 활발한 미국을 비롯해 사이버범죄 수사의 중요 거점인 유럽·동남아 국가 법집행기관과 공조 확대

- EU 27개국 外 국가의 법집행기관이 유로폴과 공식적 수사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Working Arrangement)
- 특히 사이버범죄, 마약밀매 등 '중대범죄'에 대한 긴밀한 공조수사를 목표로 함

▸**(美 FBI·HSI)** 정례회의, 위협정보 및 사건분석 공유, 테마별 워크숍 공동개최 등으로 FBI 사이버주재관(Cyber ALAT) 및 HSI 한국지부 활용성 제고

▸**(유럽)** 유로폴과의 실무약정 체결 등을 바탕으로 국제공조망을 유럽으로 확장, 신속한 수사정보 확보를 통해 현장 수사팀 적극 지원

▸**(동남아)** 동남아 지역(사이버사기·도박 관련 총책이 다수 은신) 경찰 대상 교관파견을 통해 현지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공조 협력을 유도

○ **(글로벌 IT 기업과 협업)** 기업 보유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본청에서 집중처리하며 全 수사부서 지원 중

▸**(구글·애플)** 범죄에 활용된 휴대전화 및 계정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기업별 실무협의회 개최, 국내 발생 범죄에 대한 폭넓은 협조 확보

▸**(페이스북)** 경찰청 – 페이스북과 유기적인 대응 관계를 구축하고, 페이스북 플랫폼을 사용하여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적극 공조

▸**(신규)** 증가하는 가상자산 이용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대상 가상자산거래소 확대

○ **(유로폴 공조 확장)** 실무약정이 체결 이후 필요한 세부약정을 단계별로 마무리하여 한국경찰의 국제공조망 확장을 도모

▸**(실무약정 개요)** EU(27개국) 이외의 국가 법집행기관이 유로폴과 공식적인 수사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21. 12월 체결)
※ 특히, 사이버범죄, 마약밀매 등 '중대범죄'에 대한 긴밀한 공조수사를 목표로 함

▸**(향후 일정)** 유로폴 시스템 접근권한 확보 등에 위한 세부약정 체결

○ **(ISCR 내실화)** 한국경찰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회의 개최로 범세계적 '협력의 場'을 마련,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랜섬웨어·가상자산·다크웹 등 사이버범죄 동향과 관련된 주요 콘텐츠를 마련, 수사관(분석관)의 역량강화에 기여

▸**(신속공조)** ISCR 기간 중 행사에 참여한 공조대상국과 양자 회담을 함께 개최하여 국제공조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신속 처리 도모

○ **(공조포털 고도화)** 수사관의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공조요청을 효과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포털시스템 고도화

▸**(편의성 개선)**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여 포털에 반영하고 UI 개선 등 병행

▸**(처리·관리)** 공조요청 관련 서류에 대한 위조방지 기능 추가 등 보안 강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맞춤형 석사과정(디지털포렌식학과) 11기 계획 수립	2~3월	
	해외 법집행기관과 실무협의회 개최, 사이버범죄 공조 논의	3월	
	다크웹 연구 기술 결과물 검토 협의(한국전자통신연구원, 2년차)	3~4월	
2/4분기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 온라인 행사 개최	4월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	4월	
	글로벌 IT기업과 공조협력범위 확대 및 공조 절차 간소화 등 논의	4월	
	'2022 사이버 범죄 트렌드' 발간	5~6월	
	현장수사 지원을 위한 고성능 수사장비 보급	5~7월	
3/4분기	'더 사이버' 발간(6호)	7월	
	맞춤형 석사과정(디지털포렌식학과) 11기 선발 및 운영	8~9월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 2022 개최	9월	
4/4분기	폴 사이버 챌린지 대회 개최	9~10월	
	대한민국 사이버 치안대상 개최	10월	
	사이버 국제공조 포털시스템 고도화 완료	10월	
	'더 사이버' 발간(7호)	12월	
연중	누리캅스 테마별 집중 신고 기간 추진	1~12월	
	찾아가는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실시	1~12월	
	'22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 제작	1~12월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 시스템 고도화 추진	1~12월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시스템과 사이버위협정보 통합분석 시스템 연계구축(일원화 운영)	1~12월	
	사이버범죄 관련 과기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민·관·경 협업 추진	1~12월	
	유로폴 실무약정 세부 단계별 추진	3~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일반 국민과 공공·민간기관

○ **(이해관계자)** 사이버치안 거버넌스 관계에 있는 국내 유관기관, 민간기업, 전문가, 학계, 해외 법집행기관, 글로벌 IT 기업 등

□ 기대효과

○ 대국민 사이버범죄 예방·홍보활동 및 적극적인 사이버 첩보수집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국민 안전의 확보

○ 사이버 국제공조에 대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發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현장 수사관 지원 확대 및 국민적 요구 해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1	'22
범죄수사활동(Ⅱ-1-일반재정②)			
① 사이버수사(1231)	일반회계	62	83
■ 사이버수사역량강화(315)		(62)	(83)
② 수사업무정보화(1232)		123	125
■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3)		(123)	(12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출처
	'19	'20	'21	'22			
사이버 첩보 활용 지수 (50%)	21.8%	24.9%	26.3%	26.8%	- 최근 3년 평균 24.3% 대비 10% 이상 상승한 26.8%를 목표치로 설정	B등급 이상 첩보 건수/ 전체 첩보 건수	사이버첩보 관리시스템 통계 자료
사이버 국제공조 효율성 지수 (50%)	-	299.56점	349.12점	385점	-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전년 점수보다 10% 이상 상승한 점수를 목표치로 설정	'글로벌 IT기업 공조' 효율성 지수 + '해외 법집행기관 공조' 효율성 지수 ※ 효율성 지수는 아래 산식 참조	사이버국제공조포털 시스템, 온나라공문

<붙임> 성과지표 설명

【사이버첩보 활용도 지수】

<지표설정 사유>

- **(지표 정의)** 사이버공간 위협하는 다양한 불법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첩보로 활용하기 위해 **사이버첩보 관리 및 인텔리젼스 시스템*** 운영, 사이버첩보의 중요한 단서는 인텔리젼스 시스템에서 사이버범죄 연관분석을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유가치한 첩보의 수집이 중요하므로 사이버첩보 관리시스템에 접수된 전체 첩보 중 실제 수사나 정책 반영 등에 활용 가능한 유가치 첩보(B등급 이상)의 비율 산정

  * 사이버 범죄단서(IP,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가 존재하는 경찰청 내·외부 시스템 7종(누리캅스 등)을 연계한 연관분석·프로파일링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 현재 17개 시도청(경찰서 제외) 사이버부서 경찰관 대상으로 매분기 사이버첩보 수집 中

- **(설정 근거)** 최근 사이버범죄는 탐지가 어렵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첩보 수집의 중요성 대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지표 설정

<수치설정 근거>

- **(그간 추세치)** ’21년 사이버첩보시스템에 접수된 첩보 3,035건 분석 결과, 전체 접수 건수 대비 B등급 이상 첩보의 활용도 지수는 24.3%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추세(’19년 21.8% ⇒ ’20년 24.9%⇒ ’21년 26.3%)

- **(수치 산정)** 사이버첩보 수집은 사이버 위협 요소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등을 요하여 양질의 첩보 수집이 일반범죄에 비해 어렵고 최근 3년간 활용도 지수가 지속 상승하여 임계치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근 3년 평균 사이버첩보 활용도 지수(24.3%)를 기준점수로 하여 **기준점수 대비 10% 이상 상회하는 26.8%를 목표치**로 설정

【사이버국제공조 효율성 지수】

<지표설정사유>

- **(지표 정의)** 사이버범죄수사에 필수적인 국제공조업무의 효율성 수준을 측정
- **(설정 배경)** 양적인 국제공조 건수가 아닌 실제 수사에 기여하고 있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회신율과 회신기간을 중심으로 '사이버국제공조 효율성 지수' 설정
  ※ 기존의 국제공조 요청 건수 산출 지표는 범죄의 국제화 경향으로 부각된 국제공조의 중요성 반영을 위해 설정하였으나 업무의 양적인 부분만을 측정하는 한계 존재
  ⇨ 공조결과가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 **(지표 목표)** 신속·정확한 국제공조 지원을 통해 일선 수사관들에게 효과적인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여 대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

<'22년 목표치 산출 근거>

- **(현황)** 사이버국제공조 요청 급증에 따라 본청에서 관련 업무를 집중처리 중이나 '21년 기준 평균 회신율은 약 65%에 그치고 있고, 특히, 수사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60일 이내 회신 건수는 약 52% 수준
  ※ (해외법집행기관 공조요청) '20년 885건 → '21년 832건
  (글로벌 IT 기업 공조요청) '20년 7,560건 → '21년12,824건
- **(패러다임 변화 유도)** 개선된 지표 및 도전적 목표치 설정을 통해 '국제공조의 양적 확대'에서 '공조결과의 질적 향상'으로 업무 패러다임 변화 유도
- **(목표치 산출)** 국제공조 결과가 실제 수사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사이버국제공조 효율성 지수'에 대해 전년 대비 10% 증가한 385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목표치 설정 수준

△ 국제공조 요청 결과를 수사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최대 회신기간을 요청 후 60일 이내라고 볼 때,
- 요청 후 **30일 내 100% 회신** 받는다면 '사이버국제공조 효율성 지수'는 **800점**
- 요청 후 **60일 내 100% 회신** 받는다면 '사이버국제공조 효율성 지수'는 **700점**

△ '21년 지수는 349.12점으로(회신율: 65%, 60일이내 회신 52%) 향후 다양한 국가들과 협조·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글로벌 IT기업을 상대로 협력망 확충 필요
- 회신율 증가·회신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전년대비 10% 증가한 385점**을 목표치로 설정

<측정산식>

- ‘글로벌 IT기업 공조’ 효율성지수 + ‘해외 법집행기관 공조’ 효율성지수
- ‘글로벌 IT기업 공조 현황’과 ‘해외 법집행기관 공조 현황’의 회신기간·회신율을 다음 산식에 따라 각각 산정하여 효율성지수 산출 후 합산

$$\frac{(A\times 4)+(B\times 3)+(C\times 2)+(D\times 1)}{(A+B+C+D)}\times X$$

회신 기간	회신 건수(1월-10월)	가중치	회신율
30일 이내	A	4	X
30일 초과 - 60일 이하	B	3	
60일 초과 - 90일 이하	C	2	
90일 초과	D	1	

<관련통계>

2020	글로벌 IT기업 공조				해외 법집행기관 공조			
회신기간	회신건수	비율	가중치 반영	회신율	회신건수	비율	가중치 반영	회신율
30일이내	959	0.29	1.16	62	166	0.54	2.16	43
30~60	930	0.28	0.84		74	0.24	0.72	
60~90	678	0.21	0.41		20	0.06	0.13	
90 초과	738	0.22	0.22		48	0.16	0.16	
합	3,305	1	2.64		308	1	3.16	
지수 (가중치반영 *회신율)	163.58점				135.98점			
최종지수	299.56점							

2021	글로벌 IT기업 공조				해외 법집행기관 공조			
회신기간	회신건수	비율	가중치 반영	회신율	회신건수	비율	가중치 반영	회신율
30일이내	3,255	0.37	1.46	79	172	0.51	2.04	51
30~60	1,301	0.15	0.44		74	0.22	0.66	
60~90	499	0.06	0.11		32	0.09	0.19	
90 초과	3,853	0.43	0.43		60	0.18	0.18	
합	8,908	1	2.44		308	1	3.06	
지수 (가중치반영 *회신율)	193.10점				156.02점			
최종지수	349.12점							

※ 위 통계는 매년 1.1.부터 성과평가 기간 전인 10. 31.까지의 국제공조 요청·회신 건수임

13 민생 사이버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 추진배경

○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촉발로, 삶의 중심이 사이버공간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일상범죄가 사이버공간으로 전이, 사이버범죄 발생은 지속 증가

– 특히 사이버 상 민생 관련 범죄인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자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사이버성폭력과 고질적 병폐인 사이버도박도 꾸준히 발생

분류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전체 사이버범죄	131,734	149,604	180,499	234,098	217,807
사이버사기	92,636	112,000	136,074	174,328	141,154
사이버금융범죄	6,066	5,621	10,542	20,248	28,123
사이버성폭력	2,646	3,833	2,690	4,831	4,349
사이버도박	5,130	3,012	5,346	5,692	5,505

– 이에 반해 ▵조직·인력의 한계 ▵일상의 사이버化로 인한 업무영역의 증가 ▵가상자산 사용 ▵다크웹·보안메신저·VPN 등 신기술을 이용한 회피수단 등으로 수사여건은 갈수록 악화됨

※ 사이버범죄 검거율 : ('19) 73.4% → ('20) 67.5% → ('21) 63.7%

○ 사이버수사역량을 집결한 집중단속 추진 및 KISA·방심위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생을 괴롭히는 사이버범죄 근절, 안전한 사이버공간 조성

– 피해자 권리보호 및 회복적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사이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추가 피해방지 및 예방활동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집중단속)** 사이버치안 상황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집중단속 추진으로 사이버수사 역량 극대화, 주요 사이버범죄 근절 도모

< '22년 사이버범죄 집중단속 계획 >

단속명	기간	중점 단속 대상
사이버사기 집중단속	'22. 3. 1. ~ 10. 31.	△중고거래 빙자 사기 △공동구매·쇼핑몰사기 △이메일무역사기 △가상자산 등 신종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메신저피싱·몸캠피싱·스미싱 등 범죄 조직 총책 △중간 관리책·인출책 △범행 이용 악성코드 개발자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보안메신저·웹하드 등 사이버성폭력 불법 유통망 △불법촬영물 등 공급·유통사범 및 소지·시청자
불법사이버도박 집중단속		△스포츠토토, 경마·경륜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도박프로그램 개발·유통 △사이트총판·홍보조직

※ 문체부 합동 사이버저작권 단속 등 현안에 맞춰 추가 단속 추진 검토

< '21년 사이버범죄수사 특별·집중 단속 현황 >

단속명	기간	실적
[사이버사기·금융범죄]		
사이버사기 특별단속 (상반기)	'21. 2. 1. ~ 6. 30.	47,481건 / 12,084명 검거 (구속 572명)
하반기 사이버사기·금융범죄 특별단속	'21. 7. 1. ~ 10. 31.	40,113건 / 11,323명 검거 (구속 418명)
[사이버성폭력]		
허위영상물(지인능욕 등)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	'20. 12. 1.~ '21. 4. 30.	85건 / 94명 검거 (구속 10명)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유통사범 집중단속	'21. 3. 2. ~ 10. 31.	1,447건 / 1,625명 검거 (구속 97명)
[사이버도박]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21. 3. 1.~ 10. 31.	3,877건 / 3,104명 (구속 171명)
[사이버저작권]		
「경찰청-문체부-인터폴」,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	6. 1. ~ 10. 31.	140명 (구속 3)

○ **(사이버사기·금융범죄)** 조직적 범행인 사이버금융범죄와 대규모 사이버사기는 시도청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민생 밀착형 사건은 경찰서에서 집중수사토록 전략적 단속 전개

– '사이버미제사건수사팀'을 2개청[서울·경기南]에 신설, 수사단서 통합·연관분석을 통해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조직 적발·검거

▸ **<집중단속>** '21년 병행하여 실시했던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분리, 각 범행 수법에 대응하는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고, 특진 등 별도 포상 배정으로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단속동력 확보

※ 22년 사이버사기 집중단속,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 **<전담조직 신설>**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해 '21년 전국 시도청에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신설한데 이어, '22년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 메신저피싱 등 조직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미제사건수사팀"(2팀, 12명)을 신설

– 관리미제 등록·수사중지되는 사건 수사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피싱 조직을 추적·검거하고, 효율적인 수사기법 개발·공유를 통해 사이버수사역량 강화

○ **(사이버성폭력)** 「수요·공급요인 억제·차단」을 목표로 집중단속(위장수사 활용), 피해자보호(삭제지원), 제도개선(예방·홍보) 노력 등 삼박자를 갖춘 전방위 정책 추진

▸ **<종합적 단속 전개>** 진화하는 범죄수법·유통구조에 맞춰 성착취물 '공급자'(제작·유통) 뿐 아니라 '수요자'(구매·소지)까지 면밀히 추적하는 전방위 수사로 관련자 전원 엄정 사법처리

※ '22년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및 유통사범 집중단속 추진(3. 2. ~ 10. 31.)

※ 여성청소년·형사 등 관련 수사부서가 사이버 추적수사 기법을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성폭력 수사연구회('20. 3월부터 운영 중)' 참석범위 확대 추진

▸ **<피해자 보호 강화>** 유관기관(여가부-방통위-방심위)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삭제·차단 등 피해자보호에 공동 활용중인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자치단체(인천·경기·서울, '22년限)까지 연계 추진

▸ **<제도개선>** 「사이버성폭력 수사자문단」의 제언과 시민단체 모니터링 내용이 관련 부처·기관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 지속

– 작년 시행('21. 9. 24.)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본격화에 따라 제도가 현장에 안착,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점검 진행

▸ **<위장수사관 선발·교육>** 全 시도청 사이버 기능에 위장수사관이 2명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22년 상·하반기 각 20명 추가 선발, 직무교육 실시
※ 전국 시도청 사이버기능에 위장수사관 23명 배치 중 ('22. 1월 기준)

▸ **<현장점검·매뉴얼 개정>** 사이버·여청 합동 점검단 구성, 위장수사 제도 현장 안착 여부 점검하고 수사기법 등 보완하여 「위장수사 매뉴얼」 개정·배포

○ **(사이버도박)** 고질적 병폐인 사이버도박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증원, 전국[세종 제외]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도박수사팀을 적극 운영하여 운영자부터 개발·홍보 등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 범죄 근절

▸ **<전담조직 강화>** '19년 사이버도박수사팀 최초 신설(6개청) 후 지속 증원, 22년 소요정원 16명 시도청 배정을 통해 4개팀(울산·충북·전북·전남) 신설 및 증원(강원)하여 세종청을 제외한 전국 시도청에 사이버도박수사팀 설치

○ **(기타 사이버범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 '22년 상반기 대선·지선 선거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공정선거에 기여하고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모욕에도 적극 대응

○ **(피해 방지·범죄수익 환수)** 계좌 지급정지, 악성코드·불법콘텐츠 삭제·차단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단속에 병행하여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로 재범 의지 차단

▸ **<지급정지>**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신고 즉시 관련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전화번호 정지 등 통해 범행 수단 차단

▸ **<범죄수익 환수>** 압수,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제도 활용하여 범죄수익은 반드시 추적·환수하고 범행 계좌, 국세청 통보 국세 추징에 기여
※ 상·하반기 피해자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사례 선발, 포상 예정

▸ **<삭제·차단 강화>**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능을 탑재한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을 탐지하여 삭제·차단 요청하고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에 악성코드 분석 및 보고서 생성 기능 탑재(예정),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연계해 불법정보 신속 삭제·차단 추진

○ 전문가·시민단체·유관기관 등과 면밀한 협조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공동 대응, 시민에게 공감받는 수사·예방활동 전개

▸ **<자문단>** 「사이버성폭력 수사 자문단」(시민단체·법조계·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7명으로) 운영, 단속 및 피해자보호 관련 제언을 통해 정책으로 환류

▸ **<단속 공조>** 여가부·방통위·방심위(사이버성범죄), 문체부(사이버저작권), 사감위·국민체육진흥공단(사이버도박)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단속 공조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분위기 조성하고 단속 효율화

▸ **<피해자보호 공동대응>** 여가부·방통위·방심위와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하여 피해자보호를 위한 삭제·차단을 지원(서울·인천·경기 지자체와도 연계 예정)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고도화 사업 계획 수립	'22. 2월	
	사이버미제사건수사팀 신설 및 운영방안 마련	'22. 2월	
	사이버사기 집중단속 계획 수립·시행	'22. 3월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계획 수립·시행	'22. 3월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계획 수립·시행	'22. 3월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계획 수립·시행	'22. 3월	
	'22년 상반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계획	'22. 3월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 개최(1분기)	'22. 3월	
2/4분기	상반기 피해자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사례 선발	'22. 5~6월	
	공조시스템 내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 기능 탑재 및 KISA와 연계	'22. 6월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 개최(2분기)	'22. 6월	
3/4분기	'22년 상반기 탑사이버팀 선발	'22. 7월	
	'22년 하반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관 선발 및 교육 계획	'22. 8~9월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지자체 연계	'22. 9월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 개최(3분기)	'22. 9월	
4/4분기	사이버사기·금융범죄 집중단속 관련 성과평가 및 포상	'22. 11~12월	
	하반기 피해자보호 및 범죄수익 추적 우수사례 선발	'22. 11~12월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 개최(4분기)	'22. 12월	
	22년 하반기 탑사이버팀 선발	'22.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및 정부, 공공·민간기관

○ 이해관계집단 : 관계부처(여가부, 방통위, 방심위 등) 및 민간기업(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등), 학계, 시민단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 기대효과

○ 민생과 밀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을 통해 사이버범죄 검거율을 향상, 사이버 치안에 대한 시민의 체감만족도 제고

○ 사이버범죄 조직 와해, 불법 유해정보 차단 및 범죄수익 추적 등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공간 조성 및 2차 피해 방지

○ 수사관 역량 강화를 통해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 만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21년 조직개편(국가수사본부 신설 관련)으로, '22년 단위사업명 변경

- **<'21년>** 사이버수사국 자체 단위사업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1-3-정보화① 사이버수사(1233)		
① 사이버수사(1233)	일반회계	185
■ 사이버안전수사활동(311)		(62)
■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1)		(123)

- **<'22년>** 국가수사본부 단위사업 내 포함된 사업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II-1 범죄수사활동		
①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강화(1231)	일반회계	3151
■ 사이버수사역량강화(315)		(82)
② 수사업무정보화(1232)		226
■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513)		(12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사이버 민생범죄 검거지수 (70%)	54.3	51.3	50.2	53	하단 참조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성폭력 검거지수의 합계 / 3 ※ 검거지수 측정식은 하단 참조	사이버범죄 현황통계 (KICS 시스템 자료)
피해 보호조치 증가율 (30%)	35.8%	55.0%	135.1%	80%	하단 참조	{('22년 피해 보호조치(삭제·차단) 요청건수 ÷ '22년 적정 요청건수*) - 1} × 100 ※ 악성코드 삭제·차단 실적 제외	피해 보호조치 통계(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자료)

* 피해 보호조치 요청건수 급증 추세를 고려하여, 22년 적정 적정건수는 과거 3년간 (19~21년) 피해 보호조치 요청건수의 평균값을 활용

【사이버 민생범죄 검거지수】

○ **(측정산식)**

{(사이버사기 검거건수 + 즉심건수) / (사이버사기 접수건수 - 이송건수) × 100 + (사이버금융범죄 검거건수 + 즉심건수) / (사이버금융범죄 접수건수 - 이송건수) × 100 + (사이버성폭력 검거건수 + 즉심건수) / (사이버성폭력 접수건수 - 이송건수)} × 100} ÷ 3

※ 각 건수 산출방법

검거건수	KICS 사이버범죄 현황 - 발생/검거(원표) - 원표승인일 기준 통계
즉심건수	KICS 사이버범죄 현황 - 접수/처리(사건) - 처리일 기준 통계
접수건수	KICS 사이버범죄 현황 - 접수/처리(사건) - 접수일 기준 통계
이송건수	KICS 사이버범죄 현황 - 접수/처리(사건) - 처리일 기준 통계

○ **(지표설정 사유)**

-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이버 민생범죄에 대한 검거활동 평가를 위하여 전국 경찰관서로 접수되는 각 사이버 죄종별 접수건수 대비 검거건수 비율을 산출하여 검거지수를 산출하여 합산

  ※ 통계에서 산출되는 접수건수 중 경찰 관서간 이송종결 건수는 제외, 실제 전국 경찰관서로 유입되는 해당 죄종 전체 사건을 대상으로 측정

- 정책적으로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단속을 추진하는 '22년 집중단속 대상 죄종을 대상으로 검거지수를 평가하여 사이버경찰의 검거 노력에 따른 성과를 평가

  ※ 고소·진정 등 피해신고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타 죄종과 달리 사이버도박은 대부분 경찰관서 인지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므로 검거지수 지표에서 제외

○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 ’19년 사이버 민생범죄 검거지수는 ‘54.3’점이며, ’20년 검거지수는 ‘51.3’점, ’21년 검거지수는 ‘50.2’점로 전체 사이버범죄 검거율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이며 3년간 평균 검거지수는 ‘51.9’점임

  ※ 사이버범죄 검거율 : (’19) 73.4% → (’20) 67.5% → (’21) 63.7%

-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를 기준으로 목표치 구분 ‘상’에 해당하도록 평균 검거지수 ‘51.9’점을 초과하는 ‘53’점(’21년 검거지수 ‘50.2’ 대비 ‘2.8’점 상향)을 목표치로 설정

*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21년 자체평가 정책과제 본평가 계획)

구분	3년간 실적치		2년간 실적치		전년도 실적치
	상승세	그 외	상승세	하향세	
상	추세치 이상	평균치 이상	상승세 이상	가장 높은 실적 이상	전년 대비 10% 이상
중	추세치 수준	평균치 수준	상승세 수준	가장 높은 실적 수준	전년대비 10% 수준
하	추세치 이하	평균치 이하	상승세 이하	가장 높은 실적 이하	전년 대비 10% 이하

※ 추세치 : 통계기간 대비 평균 증가율(’16～’17 : 5%↑, ’17～’18 : 7%↑ ⇒ ’19 추세치 : 6%)

※ 임계치 도달, 갑작스런 증감 등 예외적인 경우 소명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여 점수부여

【피해 보호조치 증가율】

○ (지표설정 사유)

- 사이버범죄는 그 특성 상,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불법컨텐츠 등에 대한 피해보호조치를 수행하지 않으면 추가 피해자를 계속 양산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 만족도 역시 하향될 수밖에 없음

- 특히, 사이버성폭력, 메신저 피싱 및 스미싱 사건의 경우 피의자 검거 활동도 중요하나 검거와 병행하여 불법컨텐츠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차단조치 병행이 필수적이므로 본 지표가 필요함

- 피해보호조치는 사이버범죄수사과 운영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되며, 해당 시스템으로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불법성영상물, 피싱·파밍에 대한 불법컨텐츠 삭제·차단 요청을 수사관들로부터 접수받아 처리 중으로 국민 체감 만족도 향상과 직결됨

  ※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삭제·차단 분류 중 ‘악성코드’ 항목은 사이버테러대응과 관리 성과지표에 포함되어 본 지표에서는 제외

- 일선 수사관들이 검거 뿐만 아니라 피해자보호 및 추가피해 예방조치에도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피해 보호조치에 대한 적극 독려 및 성과 평가 필요

○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 '18년 피해 보호조치 건수는 1,190건, '19년은 1,616건, '20년은 2,505건, '21년은 5,890건으로 피해보호조치 증가율은 '19년 35.8%, '20년 55.0%, '21년 135.1%이며 3년간 추세치는 75.3%임

- '22년 목표치 설정 : 적극성 '상' 등급을 충족하도록 추세치(현재 75.3%) 이상의 증가율 80%를 '피해 보호조치 증가율'의 실현 가능한 도전적 목표치로 설정함.

  다만, 피해 보호조치 요청건수가 "갑작스런 증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급격한 상승세('19~'20 : 55%↑, '20~'21 : 135.1%↑)인 점을 고려하여 '21년 요청건수 대신 '22 적정 요청건수(최근 3년간 요청건수 평균값, 3,337건) 대비 목표치를 산출함(목표치인 증가율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2년 요청건수가 6,006건이 되어야 함)

14 사이버테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

□ 추진배경

○ 코로나19 펜데믹의 장기화가 초래한 '언택트' 현상에 ICT 분야의 발전과 메타버스가 결합되면서 '온택트(온라인을 통한 외부활동)' 시대가 개막, 이로 인해 사이버범죄 발생도 급증하는 추세

– 사이버범죄는 코로나19 펜데믹 직전인 '19년 180,499건 발생에서 '21년 217,807건 발생으로 20.7% 증가

○ 해킹·랜섬웨어 등 ICT 기술·가상자산을 악용한 사이버테러 범죄는 온택트 디지털세계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가와 국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야기

– 랜섬웨어로 인한 국내 피해액은 '16년 3천억원에서 '20년 2조원으로 급증, '21. 8월 현재 2조 5천억원으로 추정

– AI를 이용한 금융범죄, 월패드 등 IoT 해킹, 드론·스마트카 해킹 등 신종범죄 등장

※ '19년 미국의 한 헤지펀드 회사는 AI를 활용, 허수주문 6,220회를 통해 단 5분만에 2,200억원의 이득을 실현

○ 이러한 사이버테러 위협대응 및 사이버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課' 단위 전담부서인 '사이버테러대응과' 신설('22. 2. 22.)

– 사이버테러사건의 수사지휘·전략연구, 위협정보 수집·분석 및 관계기관(과기부·KISA, 국정원, 금융위 등), 학계·민간 협력확대로 사이버테러 사전대비·사후조치(수사) 등 종합적·체계적 대응태세 구축

○ 전체 사이버테러 수사역량을 총동원한 적극적인 기획수사(집중·특별 단속)를 통한 검거활동 전개 및 피해자 보호, 추가 피해 방지활동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국가안보의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사이버테러범죄(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추진으로 IT 강국의 기반인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

< '22년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집중단속 계획 >

단속명	기간	주요 단속대상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집중단속	'22. 3. 1. ~ 10. 31.	해 킹 (계정도용, 단순침입, 자료유출, 자료훼손) 서비스거부공격(디도스)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 기타)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 '21년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특별단속 현황 >

단속명	기간	실적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특별단속	'21. 3. 1. ~ 10. 31.	1,075건 / 619명 검거 (구속 19명)

○ 단순 범인검거에서 나아가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전차단, 범죄수익금 추적·환수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회복 활동 병행

· **< 불법사이트 차단 >**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을 통해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이트·개인정보 불법수집 사이트 차단을 요청,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차단조치 및 회신('21. 1월 ~)

· **< 범죄수익금 >** 피해 가상자산 환수,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前 몰수·추징 보전 및 국세청 통보 활성화

○ 사이버테러수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해킹, 디도스, 랜섬웨어 등 수사기법 연구·교육 강화 및 모의훈련 실시

· **< 연구·교육 >** '사이버테러수사연구회*(본청 학습모임)'를 전국으로 확대(화상회의 플랫폼 활용), 연구회 연구결과 등을 책자로 제작·배포

* '19. 5월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범죄동향·추적기법 등 공유를 위해 결성 후 매월 발표회 개최(총 36회), 3년 연속('19~'21) '우수 현장학습모임'으로 선정됨

· **< 모의 훈련 >** 전국 25개 사이버테러수사팀을 대상으로 디도스, 기밀 탈취 등 사이버공격이 이루어진 상황을 가정해 초동대응 방법을 반복 훈련(반기별 1회)

※ 시·도경찰청 관내의 중요 정보통신기반시설(국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긴급 연락망을 정비하여 유사시 대비태세 확립

○ 사이버테러수사의 전문성 강화 및 전국적 규모의 사이버테러 사건 발생에 대비 매년 사이버테러수사관 인력풀 선발·배치

· **< 전문인력 >** △수사경력, 학위·자격증, 입상경력, 수사관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심사위원회에서 선발 △테러수사팀 평가체계 수립 △전문교육 수료자 수사팀 배치

· **< 대응기반 >** 사이버 전문지식과 수사역량을 겸비한 인재 양성, 향후 국제공조·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된 종합적·체계적 사이버테러 대응 조직의 기반 마련

○ 사이버테러 관련 관계기관(과기부·KISA, 국정원, 금융위 등) 및 전문가·보안업체 등과 협력하여 위협정보 수집·분석·공유·관리를 통해 공동 대응역량 강화

· **< 관계부처 협업 >** 과기정통부(국장급) 및 국정원(실무자급) 정책협의체 활성화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부처 간 정보공유, 현안 업무 조율 등 협업

· **< 민간협력 확대 >** '사이버테러 전문가 그룹'(학계, 보안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 활성화로 분석·추적기법 개발 및 정책제안 반영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사이버테러대응과 신설	’22. 2월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계획 수립	’22. 2월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시행	’22. 3월	
	사이버테러범죄 전문가그룹 위촉식 및 간담회(1차)	’22. 3월	
	국정원 실무협의체 실무협의(1차)	’22. 3월	
2/4분기	상반기 사이버테러 초동대응 모의훈련 실시	’22. 4월	
	국정원 실무협의체 실무회의(2차)	’22. 5월	
	과기정통부 정책협의체 정기회의(1차)	’22. 6월	
	사이버테러범죄 전문가그룹 간담회(2차)	’22. 6월	
3/4분기	상반기 위협분석보고서 발간	’22. 7월	
	관계기관 협력 진행상황 및 성과보고(상반기)	’22. 7월	
	국정원 실무협의체 실무회의	’22. 8월	
	하반기 사이버테러 초동대응 모의훈련 실시	’22. 9월	
	사이버테러범죄 전문가그룹 간담회(3차)	’22. 9월	
4/4분기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평가 및 포상	’22. 11월	
	국정원 실무협의체 실무회의(4차)	’22. 11월	
	과기정통부 정책협의체 정기회의(2차)	’22. 12월	
	연례 위협분석보고서 발간	’22. 12월	
	관계기관 협력 진행상황 및 성과보고(하반기)	’22.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및 공공·민간기관

○ 이해관계집단 :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국정원, 금융위 등) 및 학계, 민간기업(인터넷·이동통신 제공업체, 보안업체 등)

□ 기대효과

○ 국가안보와 현실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테러범죄에 총력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

○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전차단, 범죄수익금 추적·환수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회복

○ 사이버테러수사관 역량 강화를 통해 사이버테러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 만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1-3-정보화① 사이버수사(1232)			
①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1232)		4.5	4.5
■ 사이버테러 수사지원시스템 운영(513)		4.5	4.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 건수 (70%)	889	794	596	761	단순 계정도용을 제외한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 건수의 3년 평균치 760건을 상회하는 761건을 목표치로 설정 ※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 상·중·하 중 '상'에 해당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 건수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 통계 (KICS 시스템 자료)
피해 보호조치 건수 (30%)	신규	신규	135	150	사이버수사관이 피해 보호조치(차단) 요청한 전년도 실적치 대비 10% 증가한 149건을 상회하는 150건을 목표치로 설정 ※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 상·중·하 중 '상'에 해당	악성프로그램 유포·개인정보 불법수집 사이트 차단건수	피해 보호조치 통계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자료)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 건수】

o 지표산식

검거 건수	KICS 사이버범죄 현황(정보통신망침해범죄) - 검거 건수(원표) - 원표승인일 기준 통계

ㅇ 지표설정 사유

- 국가 발전과 안보를 뒷받침하는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이버테러수사관의 핵심업무인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한 검거 활동에 대한 목표치 달성 여부로 성과를 평가하고자 함

-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다크웹·가상자산·인공지능·보안 메신저 등 최신 IT 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는 지속적으로 진화, 피의자 추적 및 검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됨

- 단순 계정도용을 제외한 사이버테러 범죄의 검거율은 '16년 4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1년 24.3%로 5년 사이 무려 20% 가량 하락함

년도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16	2,012	886	44.0%
'17	1,996	779	39.0%
'18	2,167	742	34.2%
'19	2,887	889	30.8%
'20	3,277	794	24.2%
'21	2,454	596	24.3%

- 발생 대비 검거 비율을 의미하는 '검거율'은 사이버테러수사관의 사기저하를 초래하여 성과측정 도구로 기능하기 곤란하므로 원시데이터인 검거 건수를 활용하고자 함

※ 계정도용은 포털 검색순위 상위에 랭크되도록 하는 온라인마켓팅에 주로 사용되며, 피의자 검거 시 계정도용 피해자 수에 따라 검거건수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므로(117~658) 년도별 검거 건수에서 제외함

년도	'16	'17	'18	'19	'20	'21
검거건수	161	619	160	118	117	658

ㅇ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 단순 계정도용을 제외한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 건수의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치는 760건임

- 성과관리 운영지침의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를 기준으로 목표치 구분 '상'에 해당하도록 평균 검거 건수 760건을 초과하는 761건을 목표치로 설정함

※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

구분	3년간 실적치		2년간 실적치		전년도 실적치
	상승세	그 외	상승세	하향세	
상	추세치 이상	평균치 이상	상승세 이상	가장 높은 실적 이상	전년 대비 10% 이상
중	추세치 수준	평균치 수준	상승세 수준	가장 높은 실적 수준	전년대비 10% 수준
하	추세치 이하	평균치 이하	상승세 이하	가장 높은 실적 이하	전년 대비 10% 이하

· 추세치 : 통계기간 대비 평균 증가율('16~'17 : 5%↑, '17~'18 : 7%↑ ⇒ '19 추세치 : 6%)

· 임계치 도달, 갑작스런 증감 등 예외적인 경우 소명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여 점수부여

【피해 보호조치 건수】

ㅇ 지표설정 사유

- 사이버테러는 그 특성 상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사이트를 차단하지 못하면 추가 피해자를 계속 양산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 만족도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피의자 검거와 병행하여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으로 범행에 이용된 악성 사이트들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조치가 필수적임

- 국민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사이버수사관들이 피의자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보호 및 추가피해 예방조치에도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피해 보호조치에 대한 적극 독려와 성과 향상이 필요함

ㅇ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 '20. 2월부터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으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 악성프로그램 유포·개인정보 불법수집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공조한 점 고려, '21년부터 신규지표로 설정하고 '22년 목표치를 산출하였음

- '22년 시·도경찰청 성과평가와 연동하여 명확한 성과 달성도 및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시스템에서 명확히 산출되는 '피해 보호조치(차단) 요청건수'를 이용하여 평가함

- 성과관리 운영지침의 '목표치 수준의 적극성' 항목을 충족하는 도전적인 목표치인 전년도 실적치 135건 대비 10% 증가한 149건을 상회하는 150건을 목표치로 설정함

15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 추진배경

○ 국외도피사범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인터폴 및 195개 회원국과의 공조 강화 및 한국 경찰관 파견 등 적극적인 송환 추진 필요

–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 '21년 국외도피인원은 953명으로 전년 도피인원 대비(943명) 소폭 상승

< 연도별 도피·송환 현황 >

구 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도피인원(명)	953	943	927	579	528
송환인원(명)	373	271	401	304	300

– 전체 도피사범 중 중국과 동남아 4개국(필리핀·베트남·태국·캄보디아) 도피가 전체의 62%를 차지, 주요국에 집중적인 검거·송환 공조 긴요

– 주요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강화는 물론, 한국경찰관 현지 파견(이하 '코리안데스크') 등 적극적인 공조전략 전개

○ 코로나19 장기화, 초연결사회의 도래 등 급변하는 현실과 더불어 초국경범죄 양상도 변모, 전 세계 법집행기관과의 공조가 중요

– 凡수사부서의 국제공조를 조정·지원하는 부서로서, 국제범죄 척결 및 국민안전을 위해 다변화된 국제범죄에 대한 기민한 대응 필요

– 인터폴 전담부서 확대*를 추진력으로 삼아 인터폴이 보유한 인프라 활용 극대화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채널을 다변화

* '21년 국가수사본부 조직개편 時 국제공조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 인터폴업무 담당부서를 '과' 단위로 확대(외사수사과 인터폴계 → 인터폴국제공조과)

○ 우리 국민·기업의 해외진출 증가와 함께 재외국민 사건·사고도 빠르게 증가, 해외에서도 국내 수준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필요

※ 영사조력법 시행('21. 1. 16.)으로 경찰주재관 활동 법적근거 마련

– 늘어나는 해외 치안 수요에 대응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해외 파견경찰 인력을 확대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보이스피싱 총책 등 해외거점 도피사범 검거·송환 총력 대응]

○ **국수본 및 현지 경찰과 협업, 현지출장·합동검거 등 공조협력 강화**

– 국수본과 협업,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한 중요 첩보를 수집한 수사관서와 '보이스피싱 해외공조팀(가칭)' 구성

– 현지 경찰과의 사전협의 및 공조팀 현지 출장 파견(수시)을 통해 도피사범 소재 파악·증거물 확보·합동 검거 등 해외공조 협력 강화

※ 각 국의 코로나19 입국규제 및 방역지침 완화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

○ **중국과 공조 강화, 보이스피싱 조직 와해 집중**

– 양국 간 보이스피싱 단속 관련 MOU 체결 등 공조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 보이스피싱 조직 와해 집중

※ 중국은 보이스피싱 사범의 70%가 도피 중

○ **주요 공조국에 코리안데스크 추가 파견, 주요 도피사범 검거 제고**

– 주요 공조국(중국·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에 '코리안데스크' 인력(단기)을 추가 파견, 현지 검거 및 송환 기반 강화

※ '21년에 필리핀(7명) 外 중국·태국·베트남·캄보디아에 각 1명씩 파견(5~12월)했으나, '21. 12월 임기종료에 따라 '22년에 추가 파견 추진(예산 2.69억 확보 완료)

– 코리안데스크 파견 국가 대상, 「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신고·자수기간*」 운영, 해외 체류 조직 총책 등 중요 도피사범 검거 제고

* '21년에 최초 운영(8~12월), 자수 49명·신고검거 34명

[인터폴 인프라를 활용, 국제공조의 핵심 허브(Hub) 역할 수행]

○ **국제공조 확대·강화를 위한 인터폴 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유관부처 협업**

– 인터폴이 보유하고 있는 D/B*, 각종 수배서, 시스템 등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외도피사범 검거 및 초국경범죄 대응역량 강화

* 인터폴은 형사정보시스템(ICIS), 도난분실여권(SLTD) 등 총 19종의 데이터베이스 보유

– 인터폴의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국내 유관부처를 적극 발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인터폴-유관기관 간의 가교역할 수행

○ **인터폴 펀딩사업을 기반으로 우리청 이익에 부합하는 인터폴 활동 주도**

– 경제범죄 펀딩(HAECHI)은 해외 범죄수익 동결·환수, 아동성착취물 펀딩(FACE-Asia)은 피의자 검거작전으로 전환하는 등 업무추진의 방향성 조정

– 문체부 펀딩(I-SOP)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인터폴과 국제저작권범죄회의(IPCC)를 공동 개최하여 한류컨텐츠의 해외 불법유통 근절 노력 경주

< 우리나라 펀딩사업 현황 >

구분	경제범죄 (HAECHI)	아동성착취물 (FACE-Asia)	지적재산권 침해 (I-SOP)
사업기간	3년 ('20. 3월 ~ '23. 2월)		5년 ('21. 5월 ~ '25. 4월)
펀딩액	17.2억원 (年 5.72억원)	28.8억원 (年 9.6억원)	36.5억원 (年 평균 7.3억원) ※ 문체부 예산
대상범죄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몸캠피싱, 투자사기, 자금세탁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활동목표	▸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 검거 ▸ 범죄에 사용된 계좌동결 ▸ 사기범죄 관련 참여국 정보공유	▸ 성착취물 제작·배포자 검거 ▸ 피해아동 식별 및 구출 ▸ 데이터베이스 확대 및 교육	▸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합동단속 ▸ 민간·공공분야 국제공조 강화 ▸ 회원국 역량 강화 교육
유관부서	수사국	사이버수사국	문체부, 사이버수사국

○ **국제범죄 최신 동향분석을 통해 초국경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

– 인터폴이 발간한 △ 분야별(사이버·마약 등) 보고서 △ 신종 범죄수법 등을 분석, 대응방안 수립 및 유관부처(부서) 배포하여 국제범죄 대응역량 제고

[해외파견자 증원 및 전문화 등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 공관별 재외국민보호 수요·파견 효과성(치안협력)·긴급성(국제성 범죄 대응, 도피사범 송환) 등을 종합 고려한 경찰주재관 등의 증원을 추진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21.1.16.)에 따라서 형사법 및 치안분야에 전문성 있는 경찰 영사의 필요성이 대폭 증가

< 재외국민 관련 통계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해외 출국자	1,608만명	1,931만명	2,238만명	2,650만명	2,870만명	2,871만명	427만명*
재외동포(격년조사)	-	718만명	-	743만명	-	749만명	-
재외국민 사건사고	10,664명	14,076명	14,493명	18,410명	20,100명	22,732명	16,133명

※ '21년 통계는 주무부처(해외출국자 법무부, 재외국민 사건사고 등 외교부) 확정 전

* '20년 해외출국자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각국 검역 강화 등 영향으로 한시적 감소

○ 또한, 인터폴·코리안데스크·공관경호단·UN PKO·치안전문가 등의 해외파견직 운영을 통해 주재관 외 다양한 경로로 재외국민보호에 기여

< 해외 파견 경찰관 현황 >

계	경찰주재관	치안전문가	UN	공관경호단	인터폴협력관	코리안데스크
96명	64	9	4	5	8	6

○ 해외파견 경찰관의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등을 수립·이행하여 경찰청의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 (경찰주재관 양성과정) 연간 교육인원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경찰인재개발원 주관, 내·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연 2회 교육(각 30명) 실시

– (역량 강화) 경찰주재관 등 파견자 대상 직무교육(파견 前) 및 회의(파견 中)*을 실시하여 국제공조 등 업무역량 강화 도모

* 경찰청 주관으로 권역별·소집·화상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별 우수 사례 및 노하우 공유, 최근 국제성 범죄 동향 분석 등 맞춤형 회의 진행

– (신속대응팀 운영)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통합 신속대응팀 운영 및 상황훈련 실시

○ 해외 입국 및 체류를 위한 외사신원조사 업무 처리 등 내국인이 외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상반기 경찰주재관 직무교육 실시	’22.1월	
	경찰주재관 증원 등 추진 계획 수립 및 관계 부처 업무 협의	’22.2월	
	관세청의 인터폴 국제공조 활용을 위한 간담회 개최	’22.2월	
	1분기 시도청 인터폴 국제공조팀 추적 점검회의	’22.3월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위한 필리핀 경찰청과 업무협의	’22.3월	
	상반기 全 시도경찰청 국제공조 담당자 화상회의	’22.3월	
2/4분기	인터폴 리포트 발간	’22.4월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 관련 수사국 등 협의	’22.4월	
	인터폴 DVI 전문가 초청 교육훈련 개최 지원	’22.4월	
	전자장치부착명령대상자 녹색수배서 발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22.4월	
	경찰주재관 양성과정(1차) 교육	’22.4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 운영 계획 수립	’22.5월	
	2분기 시도청 인터폴 국제공조팀 추적 점검회의	’22.6월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주재관 등 회의	’22.6월	
3/4분기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 계획 수립 및 운영	’22.7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 인력풀 훈련	’22.7월	
	하반기 全 시도경찰청 국제공조 담당자 화상회의	’22.7월	
	아시아 지역 국외도피사범 합동 단속 작전 실시	’22.8월	
	하반기 경찰주재관 직무교육 실시	’22.8월	
	3분기 시도청 인터폴 국제공조팀 추적 점검회의	’22.9월	
	경찰청-인터폴 공동주관 제15차 국제저작권범죄회의 개최	’22.9월	
	경찰주재관 활동사항 및 장비점검	’22.9월	
4/4분기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 성과 분석	’22.10월	
	국외도피사범 합동 단속 관련 회의 개최	’22.10월	
	주재관 성과평가 실시	’22.10월	
	경찰주재관 양성과정(2차) 교육	’22.10월	
	제90차 인터폴 총회 참석	’22.11월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주재관 등 회의	’22.11월	
	4분기 시도청 인터폴 국제공조팀 추적 점검회의	’22.12월	
	인터폴 펀딩사업(HAECHI) 결과보고 회의 개최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내 거주 내·외국인 및 재외국민

○ 이해관계집단 :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국토부,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등

□ 기대효과

○ 주요국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한 집중적인 도피사범 송환 추진, ‘범죄자는 해외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경각심 제고

○ 인터폴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각국의 치안D/B를 국내 정책 수립시 적극 활용, 급변하는 국제 치안환경에 대한 대응력 제고

○ 경찰주재관·국제기구 등 글로벌 치안협력을 담당하는 해외파견자 증원 및 전문교육 강화로 국제 공조 및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외사경찰활동(Ⅲ-1-일반재정①)			
① 외사경찰활동(3132)	일반	196	145.15
■ 외사경찰활동(311)	- 일반	196	145.15
국제교류협력활동 활성화(Ⅰ-1-일반재정②)			
① 국제교류협력활동(3133)	일반	49.86	50.46
■ 해외치안협력강화(311)	- 일반	40.05	50.4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1) 국외도피사범 송환실적(40%)	401	271	373	349	최근 3년 평균치(348.3) 이상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하단 참조 ※’21년 컨설팅 의견을 수렴, 측정산식 일부 수정 (단순 송환인원 →가중치 부여)	국외도피사범 송환DB
(2) 인터폴 조직 및 D/B 활용도(30%)	신규과제		117	129	전년 대비 10%(128.7) 이상 증가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하단 참조	인터폴 전용망 문서, 온나라 공문 등
(3)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실적(30%)	신규과제			92.96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규지표 측정산식으로, ’21년 모의성과는 약 84.5점이며, ’22년 목표치는 도전적으로 모의성과 대비 10%(92.95) 이상 높은 목표치 설정	하단 참조	온나라 공문 등

【측정산식】

(1) 국외도피사범 송환실적

▶ 인터폴 적색수배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자로 간주되므로, 송환 대상자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경우 가중치 20%를 부여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중

-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
-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 다액(5억원 이상) 경제사범
- 사회적 파장 및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한 기타 중요사범

	국외도피사범(인터폴 적색수배자)	국외도피사범(기타 사범)
지표 설정	▲ 송환된 피의자 중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발부된 피의자	▲ 송환된 피의자 중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발부되지않은 피의자
점수	각 1.2점	각 1점

(2) 인터폴 조직 및 사무총국 및 DB 등 활용 실적

	A등급	B등급	C등급
지표 설정	▲ 해외 관계자 초청 국제회의 개최 ▲ 인터폴 프로젝트 펀딩 주관 ▲ 국내외 유관기관 간 MOU 체결 ▲ 인터폴 사무총국 DB 확대 ▲ 인터폴 총회 참석 등	▲ 인터폴 교육프로그램 참여 ▲ 인터폴 회의 참석 ▲ 인터폴 DB 타부처 연계·활용 ▲ 인터폴리포트·동향보고서 발간 등	▲ 인터폴 국제공조수사(수배·사실확인) 요청·회신 ▲ 인터폴 회의 타부처·유관기능 통보 ▲ 인터폴 DB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 내 연계·활용 ▲ 인터폴 보라색수배서 타부처·유관기능 배포 등
점수	각 3점	각 2점	각 1점

(3)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실적

▶ 지표 설정: 해외파견 경찰관 등 인력 증원, 해외파견 경찰관 전문성 향상 교육, 재외국민보호 관련 계획 수립, 국제성 범죄 정보공유 활동 등 경찰청의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모두 포괄하는 지표로서 중요도 · 난이도 ·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점수 부여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표 설정	▲ 해외파견 경찰관 증원 인원당 ▲ 재외국민보호 담당기관 파견 경찰관 증원 인원당 ▲ 외사신원조사 6만건 이상	▲ 해외파견 인력 관리계획 수립 ▲ 재외국민보호 관련 계획 수립 ▲ 신속대응팀 파견 관련 업무 ▲ 해외파견 경찰관 교육·회의 등 ▲ 외사신원조사 5만건 이상	▲ 파견자 선발 관련 업무 ▲ 재외국민보호 관련 대외홍보 ▲ 신속대응팀 상황훈련 ▲ 소관 법령·행정규칙 정비 등 ▲ 외사신원조사 4만건 이상	▲ 해외파견자 안전장비 등 지급 ▲ 해외파견자 연락망 구축 등 ▲ 굿모닝 뉴스 등 해외파견자와 정보공유 활동 10회당 ▲ 외사신원조사 3만건 이상
점수	각 4점	각 3점	각 2점	각 1점

16 선제적·예방적 외사경찰 활동을 통한 사회안전 확보

□ 추진배경

○ **(체류외국인 증가)** 최근 10년간 체류외국인은 꾸준히 증가 추세(연평균 +7%), '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류외국인 수가 일시 감소하였으나

–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 및 제조업·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유입 지속, 코로나19 상황 개선 시 체류외국인 증가로 외사 치안수요 급증 예상

연 도	**'21.12월**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체류외국인	**1,956,781**	2,036,075	2,524,656	2,367,607	2,180,498	2,049,441	1,899,519
불법체류자	**388,700**	392,196	390,281	355,126	251,041	208,971	214,168
결혼이민자	**168,611**	168,594	166,025	159,206	155,457	152,374	151,608

○ **(다문화사회 위험요인 증가)** 코로나19 이후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외국인 차별·혐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잠재적 위험 표출

* 코로나19 발생 이후('20.~'21.9월) 국내 혐오범죄 39건 발생, 그 중 외국인 대상범죄는 42.4% 차지(한국공안행정학회, '코로나19 이전-이후 혐오범죄 변화에 대한 연구', '22.2월)

– 사회적 차별* 및 범죄피해를 경험한 외국인들이 사회불만 세력화되지 않도록 치안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적극적인 다문화 치안활동 필요

* 특히, 최근 다문화 청소년들의 차별 피해·부적응 이슈도 부각, "교내 차별 너무 힘들어요, 학업중단 30%가 부적응, 학교 밖 떠도는 다문화 청소년들" 題下 세계일보 보도(2.22.)

– 일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외국인들의 집단화·세력화 양상 및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이 중요

○ **(주한 공관 안전확보 필요성 증대)** 외교적 분쟁 등 주요 이슈 발생 시 대사 등 주요 인사 및 대사관을 겨냥한 기습시위가 꾸준히 발생

※ △'리퍼트' 前 미국 대사 피습('15.3월) △ 미국 대사관저 월담('19.11월) △ 프랑스 대사관, 무함마드 풍자 교사 참수 1주기 추모행사 관련 안전활동 요청('21.10월)

– '22.1.27. 대법원에서 경찰이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자를 제지·이격 시킨 것을 위법 취지로 판결, 집회·시위 증가 가능성 농후

- 주한 공관 안전확보를 위해 선제적 예고정보 활동 강화 및 한국 경찰과 주한 외국공관 간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 필요

※ 美·日·中 등 주요국 대사관에서는 공관 경비강화·대사 신변보호 등 요청사항에 대한 韓 경찰 지원에 감사를 표명하며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희망

○ **(우수 치안정책 수요 증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각종 치안 현안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수시책 발굴 필요성 증대

- 해외 주요국 경찰의 우수 치안시책을 지속 수집·분석하여 적시에 소개, 국민의 공감을 받고 현장에 필요한 치안정책 수립 지원 필요

○ **(선제적 대테러 활동 필요)** 탈레반의 아프간 재탈환('21.8월) 및 아프간 특별기여자 국내 이송 등으로 ▵테러 선전·선동 ▵해외 전투원 잠입 우려 등 국민들의 테러에 대한 불안감 증가

- 테러 예방을 위해서는 ▵외국인 커뮤니티 ▵온라인 모니터링 ▵국내 유관기관 등을 통한 국내 테러위험인물 정보* 파악이 중요

* 국제 테러단체 가입여부, 테러 관련 처벌 전과 및 수사 이력 등

- 해외 대테러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 주요 테러정보를 선제적으로 입수하는 한편, 선진 대테러 시스템 벤치마킹 필요

○ **(방첩정보 중요성 증대) 경찰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에 명시된 6개 방첩기관* 중 하나로 방첩정보 수집 등 업무를 수행

* 경찰청·국가정보원·법무부·관세청·해양경찰청·군사안보지원사령부

※ 방첩포털·방첩정보공유센터 신설('20년) / 방첩업무지침 개정('21년) 등 경찰 방첩업무 증대

- 체류외국인 증가와 국제교류 확대에 따라 외국 정보요원*은 물론, 다국적기업·민간단체도 국익저해 정보활동 주체로 부상

* 주한 외국공관 소속 백색요원뿐만 아니라, 외신기자·주재원 등으로 신분을 숨긴 흑색요원도 활동 중이며 자국민·내국인을 이용해서도 첩보 수집

- 또한, '기술 패권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기술 후발국 중심으로 한국의 핵심기술·인력 탈취 가능성 증가, 방첩의 중요성 확대

※ 외국의 정보활동은 점점 고도화·은밀화되는 추세로, 이들을 찾거나 역으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인 접촉 빈도가 많은 외사요원의 방첩의식 함양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체류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문화 치안활동 전개

○ **(체류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추진, 안전한 다문화사회 구현

–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경찰관 출강교육 실시, 대면·비대면(SNS·화상프로그램) 교육을 병행하여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치안 공백 방지

*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여가부(결혼이주여성)·고용노동부(취업교육 프로그램) 등

○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외국인 도움센터를 재정비하여 체류외국인 범죄·범죄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 범죄신고 및 상담창구 내실화

– 체류외국인 유입 변동에 따른 지역별 체류외국인 수 증감 및 연간 도움센터 활동실적을 분석하여 도움센터 신규 위촉·해촉 관리

※ 도움센터(총 394개) : 다문화센터(187), 공공기관(57), 학교(57), NGO(55), 종교단체(15) 등

○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 활성화)** '21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협의체 지원대상 확대 △유관기관 협력 강화 △우수사례 공유 등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시도청별 협의체 정비 추진

* '21년 전국 159개 경찰서에 확대 운영, 범죄피해 이주여성 134건 보호·지원

○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지역별 치안수요(체류외국인·불법체류자·외국인 범죄)를 분석, 외사안전구역을 재정비하여 선제적 치안활동 실시

– 외사안전협력관을 활용한 외국인 치안불안 요인 집중 발굴, 외사치안협력위원회 등 민·관 참여기구를 통해 치안 문제 논의·해결

○ **(수사통역 전문성 강화)** 통역수요가 높은 36개 언어에 대한 민간인 수사통역요원 운용,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시 통역서비스 제공

※ 중국어·일본어 등 36개 언어 민간인 통역요원 인력풀 3,352명 구성

– 수사통역요원의 공정한 통역서비스 제공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선사항을 반영한 수사통역 통합 교재('20년 발간) 개편 추진

2 외사정보 역량 강화를 통한 선제적 외사정보 활동 추진

○ **(선제적 외사정보활동)** 외국인 집단행동·범죄·테러 등 유가치 첩보를 적극 발굴하여 부담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 다문화사회 치안안정 확보

– **(공공안녕위험정보 수집)** 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및 외국 관련 기관·단체 대상 정보활동 강화, 집단화·세력화 움직임 등 면밀히 발굴

- **(위험정보)** 외국인 밀집지역 및 커뮤니티 내 집단화·세력화 움직임, 내·외국인 갈등 등 공공안녕 위험요소 사전 파악으로 치안부담 요인 제거
- **(범죄정보)** 외국인들의 각종 이권 개입 및 집단폭행·마약 투약 등 불법 행위 첩보 입수에 주력, 외국인 범죄 차단에 기여

– **(대테러·방첩정보 수집)** 안보정보 전담인력 운용을 통해 대테러·방첩 등 안보정보 수집, 유관기관과 공유·협업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

- **(대테러정보)**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테러 전투원 등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입수, 입국 차단 및 강제퇴거 조치
- **(방첩정보)** 외교관·주재원 등의 신분으로 위장한 스파이 활동, 공관원 비위·방첩 첩보를 지속 수집해 국가안전 보호기능 수행

○ **(외사정보 업무 전문성 강화)** 체류외국인 관련 위험첩보 및 고가치 대테러·방첩 첩보 수집을 위한 경찰서 외사요원의 역량 배양

– **(위험정보)** 현장 외사경찰 대상 체류 외국인 관련 위험첩보 수집·작성 요령에 대한 주기적 교육 실시, 외사정보의 질적 향상 도모

– **(대테러·방첩정보)** '외사 안보정보 연구회'* 구성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수사례·업무 노하우 공유 기회 확대, 외사요원의 안보역량 강화

* 외사요원 중 희망자 대상 △본청 담당자 멘토링 △관련 자료 공유 △전문교육 실시 △인센티브 제공

- **(국내)** 경찰인재개발원에 署 외사요원 대상 '외사보안 업무' 과정을 신규 개설
- **(해외)** 美·러 등 주요국 주최 교육과정에 참여, 안보정보 수집·분석 역량 강화

○ **(공관 협업 강화)** 외국공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요인사 방한 시 안전 확보 △법 집행기관 간 협력 강화를 지원

– 또한, 외국공관의 △우리정부에 대한 요청사항 △공관원 비위·방첩 관련 첩보를 지속 수집하여 국가안전 보호 기능 수행

※ 외사협력관(7명), 주한 외국공관(113개) 및 타이베이 대표부(1개)와 상시 연락체계 구축

○ **(적시성 있는 외사정보 발굴)** 국내외 주요 치안현안과 관련된 정보 및 우수 치안정책 사례를 적극 발굴, 경찰 전기능 업무를 뒷받침

– **(우수 치안정책 소개)** 주요국 경찰이 시행 중인 스마트 치안 등 우수시책을 적시에 소개, 국내 치안정책 마련·시행 지원

– **(경찰 개혁과제 지원)** 경찰개혁·정책과제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관련 법제도·정책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자료 제공

3 대테러·방첩 정보활동 인프라 강화

○ **(대테러 국제협력 강화)** 現 대테러 협업 진행단계에 따라 협력 전략을 변경하고, 추후 협업이 필요한 국가를 파악하여 대륙·의제별로 관리

– 미·러·우즈베크 등 이미 협력이 활성화된 국가·기관과는 실무위주·성과지향적 협력*을 추진하고, 해외 주요기관과의 협업 방안 발굴

* 대테러 노하우 공유 및 국내 정보활동 대상자 관련 정보 요청 등 실무자급 교류 추진

- **(UN)** △韓대테러 경찰관 파견 △아시아 지역 대테러 회의 참여 등 구체적 협력방안 논의
- **(인터폴)** 국제 테러위험인물 명단 입수, 법무부에 통보하여 사전입국 금지 지속

○ **(방첩 인프라 고도화)** '21년에 구축한 「방첩정보포털」·「방첩정보공유센터」 체제를 활용, 방첩기관과 교류·협업 시스템 정착

– '21년 개정한 '외사방첩업무 처리지침*'을 훈령으로 격상 제정 추진하고, 직장·사이버교육** 등 신설하여 전 경찰관의 방첩의식 제고

* 방첩환경의 변화 반영·실효성 확보를 위해 '13년 시행 이후 최초 개정

** 외사방첩 업무 개념·주요사례 소개 등으로 컨텐츠 구성('22. 11월 기관 직장교육 예정)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외사보안 분야 경찰서 외사요원 운용 강화 계획 수립	'22.2월	
	전국 시·도경찰청 외사정보 부서 대상 업무추진 방향 설명 화상회의	'22.3월	
	'22년 현장교육 및 간담회 개최 계획 수립(10개 권역 경찰서 지정)	'22.3월	
	대테러 · 방첩 · 공항만 인력 전문화 위탁교육 계획 수립	'22.3월	
2/4분기	베스트 외사경찰 선발계획 수립	'22.4월	
	외사요원 대상 상반기 외사첩보 수집·작성 요령 교육	'22.4월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 활성화 계획 수립	'22.5월	
	'외사 안보정보 연구회' 운용	'22.5월	
	주한 외교관 초청 외사요원 대상 교육	'22.6월	
	외사 안보정보관 운용성과 분석 및 현장 컨설팅 진행	'22.6월	
3/4분기	민간인 통역요원 선발계획 수립	'22.7월	
	하반기 외사첩보 수집·작성 요령 교육	'22.8월	
	국제 공항 · 항만 보안활동 현장방문 및 간담회	'22.8월	
	외국인 범죄예방 가이드 리플릿 제작	'22.9월	
	인터폴 Project PACIFIC 대테러 화상회의 참석	'22.9월	
4/4분기	외사안전구역 재정비	'22.10월	
	민간인 통역요원 전문화교육 계획 수립	'22.10월	
	주한 외교관 초청 외사요원 대상 교육	'22.11월	
	사이버 직장교육 등 全경찰관 대상 방첩교육 진행	'22.11월	
	외국인 도움센터 재정비	'22.11월	
	「2021 해외 우수 치안시책」 책자 발간 및 전국 경찰청에 배포	'22.12월	
	'22년도 외사보안 활동 평가 및 '23년도 중점 업무 방향 설정	'22.12월	
연중	① 국내 체류외국인 소식(수시) ② 주한 외국공관 소식(수시)	수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내국인 및 해외 우리국민, 국내 체류외국인(국제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자녀) 등

○ 이해관계집단 : 법무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각국 주한공관, 외국인 관련 시민단체, 외국 경찰 등

□ 기대효과

○ 체류외국인 대상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내·외국인이 상생할 수 있는 치안공동체 구현

○ 외국인 밀집지역·커뮤니티 내 집단화·세력화 움직임 등 위험정보 집중 발굴, 치안부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다문화사회 안정 확보

○ 국내 중점 추진 치안정책 및 긴급현안 관련 해외사례를 적시에 수집·분석·공유, 국내 현실에 적합한 시책마련에 기여

○ 대테러·방첩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안보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견·차단, 국가안전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외사경찰활동(Ⅲ-1-일반재정①)			
① 외사경찰활동(3132)	일반	183	145
		(183)	(145)
■ 외사경찰활동(311)	일반	183	145
국제교류협력활동(Ⅲ-1-일반재정②)			
① 국제교류협력활동(3133)		49	50
		(70)	(72)
■ 해외치안협력강화(311)		49	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30%)	0.33	0.36	0.392	0.427	- 외사경찰의 대표적 다문화치안 활동에 해당하는 범죄예방교실, 운전면허교실, 도움센터 상담 등을 유형화하고, 각 활동의 난이도별 가중치를 산정, 연간 상승률을 성과지표로 반영 - 다문화치안활동 활성화를 위해 3년 평균증가율(8.7%)을 상회하는 적극적인 목표치(8.9% 증가) 설정 ※ 소집교육과 대외활동 등으로 평가받는 지표 특수성을 감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정부 지침) 조정에 따라, 활동 전면 중단 필요시 해당기간은 실적 산출기간에서 제외	- 월별실적* 합계 / 실적산출 월수 ×100 * ∑활동별 점수 (가중치×수혜자 수) / 체류 외국인수 ※ 활동별 가중치는 하단 참조	외사포털시스템을 통해 각 시도청、경찰서 월별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취합
외사정보 활용도 (40%)	1,540	1,719	2,274	2,775	- 외사정보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생산한 정보보고서와 활용된 정보보고서를 기준으로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를 병행. 합산하여 성과지표 반영 - 3년간 추세치(21.9% 증가)를 상회하는 적극적 목표치(22% 증가) 설정	- 양적평가(건당 1점) + 질적평가(평가주체별 1~10점) ※ 상세기준 하단 참조	① 외사정보 보고서 목록 ② 활용된 사례 목록
대테러·방첩 활동 실적 (30%)	-	-	834	918	- 대테러·방첩 활동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외사 보안사업 개척 점수'와 대테러·방첩·공항만 업무 전문화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교육점수'를 성과지표로 설정 - 전년도 실적인 834 대비 10% 이상인 적극적 목표치 설정	하단 참조	① 외사 보안사업 목록 ② 교육 계획·결과

【측정산식】

(1) **외사정보 활용도** : 양적평가(건당 1점) + 질적평가(평가 주체별 1~10점)

- ▸ 양적평가: 외사기획정보과에서 생산한 보고서(외사국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기준) 건당 1점 부여
- ▸ 질적평가: 외사정보 보고서가 활용된 경우, 활용한 주체에 따라 추가로 1~10점* 부여
  - * BH·경찰청장·타부처 10점 / 국장·시도청장 5점 / 타기능 실무자 1점

(2)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 월별실적* 합계 / 실적산출 월수 × 100

* ∑(활동별 가중치 × 수혜자 수) / 체류외국인 수

※ 활동별 가중치

활동	운전면허교육	범죄예방활동	도움센터 상담	자율방범대・치안봉사단
가중치	0.3	0.2	0.2	0.3

⑶ **대테러·방첩 활동 실적** : ‘외사 보안사업 개척점수(건당 10~40점)’ + ‘교육 점수(건당 1~3점)’

▸ 외사 보안사업 개척점수: 난이도별 건당 A급 40점, B급 20점, C급 10점 부여

등 급	분류 기준	평균 진행기간
A급	‣ 국가안보 및 국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사보안사업 ‣ 타 방첩기관 공조 또는 해외연계 활동이 필요한 외사보안사업	1년 6개월
B급	‣ 국내 여러 지역에 걸쳐 활동이 이루어지는 외사보안사업	1년
C급	‣ 관할 지역에서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외사보안사업	6월

▸ 교육점수: 교육 시 건당 ‘해외 연수·국제회의’ 3점, ‘전문 교육’ 2점, ‘현장 교육’ 1점 부여

구 분	세부 유형
해외 연수·국제회의	▵ 해외 기관(및 국제기구) 방문·초청 연수 ▵ 국제회의* ▵ 모의·합동 훈련 등
전문교육	▵ 전문기관 위탁교육 ▵ 경찰교육기관 교육과정 ▵ 각종 세미나 참여 등
현장교육	▵ 현장방문 교육 ▵ 워크숍 ▵ 자체 직무교육 등

* 단, 국제회의 중 교육목적 없이 교류활동에 집중한 ‘행사성’ 회의는 제외

17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 추진배경

○ 해외 체류 재외국민 및 관광객 증가세 회복이 전망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외국경찰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치안협력 필요성 증대

– 이에 치안총수회담·MOU 체결·초청행사 등 외국경찰기관 및 국제기구와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 경찰청은 '15년부터 외국경찰을 대상으로 한국의 치안시스템을 전수하는 치안한류사업(치안협력사업·전문가파견·초청연수)을 추진

– 치안한류사업은 한국경찰의 국제위상 제고, 국내 치안장비 수출 지원,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보호 등에 기여

※ 112 신고출동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랩, DNA 분석 장비, 범죄예방 차량번호 인식 CCTV, 한국형 순찰차·오토바이 등 다양한 경찰장비들이 '치안한류 사업'과 연계해 해외 진출

< 주요 치안한류사업 추진 현황 >

① 경찰전문가 파견: '21년까지 35개국 165회 433명 파견, 7,265명 교육

② 초청연수 사업: '21년 153과정 2,488명 대상 교육

③ 치안인프라 구축사업: '14년 이후 베트남, 필리핀 등 총 17개국 22개 사업 진행, 총액 573억원 규모

④ 비대면 연수 : '20년(최초 도입) 8개국 277명, '21년 44개국 1,857명 외국경찰관 교육

○ 치안한류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로 정부 외교활동에 치안협력강화, 국제범죄대응협력, 경찰기관 간 MOU체결 등 치안의제 다수 포함

< 연도별 정부 치안외교 현황 >

연 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 계	6	5	4	20	2	**15**
정상회담	5	1	3	9	1	**2**
총리회담	0	0	0	5	0	**0**
정부공동위 등	1	4	1	6	1	**13**

※ '15년 치안한류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19년 큰 폭으로 증가, '20년 코로나19로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개선으로 증가세 회복

< '21년 외교부에서 치안 관련 의제·성과 제출을 요청한 사례(총 15회)>

종류	국가
외교회담·회의 관련(5)	한-인도네시아 행동계획 검토(1.20., 6.17.), 한-메콩 결과문서 초안검토(외교장관회의 6.23., 정상회의 10.7.),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말씀자료(9.16.)
외교정책 관련(10)	신남방정책플러스 사업별 추진계획서(2.8.), 국제 방역협력 총괄TF 계획 및 실적(6.11.), 정상외교 후속조치 TF 성과(1차 7.28, 2차 10.27.), 신남방 안건(2.23., 8.18), 신남방정책플러스 이니셔티브 작성(11.23.), 신남방특위 백서 작성(6.24., 11.25.), 신남방 BH 백서 작성(12.29.)

- 정부 외교 정책(신남방·신북방 등)과 정상급 외교활동(한·아세안 정상회의 등)에서 치안협력 사항이 의제로 논의, 후속 사업추진·관리 중

○ 국제기구·다자간 치안협의체 등과 신규 치안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국제 교류협력 체계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찰청·차장 등 우리청 지휘부가 재외국민보호 등 협력이 필요한 주요 협력국가 지휘부와 직접 만나 실질적 대책 마련

- '22년 UN경찰청장회의·IACP(국제경찰장협회) 연례회의 등 국제회의 지휘부 참석 및 인터폴·유로폴 등 방문 추진

※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즈베크와 치안협력 발전을 위해 경찰청장 국외공무 출장을 추진, 치안협력 MOU 4건 체결하였으며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37개국 136명 참석)하여 치안분야 대표 국제회의로 자리매김

< 최근 경찰청·차장급 회담 현황 >

연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방문	1개국	3개국	7개국	5개국	9개국	4개국	1개국	2개국
방한	3개국	20개국	13개국	16개국	30개국	28개국	1개국	24개국

○ 이미 MOU 체결된 29개국 경찰청 및 법집행기관 외 남미·동유럽 등 그간 한국 경찰과 교류가 적었던 주요 국가 경찰기관과의 MOU 확대 체결 추진

- 문안확정 국가*, 개정체결 국가** 등 주요 추진 중인 국가와 코로나19 상황 개선 후 즉시 대면체결 추진

* (문안확정) 말레이·방글라·칠레·르완다·피지 ** (개정체결) 호주·러시아

< 대륙별 MOU 체결 추진 현황 >

구 분	계	아시아	중동	유럽	미주	태평양	아프리카
체결 추진국	29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란, 바레인, 오만, 튀니지, 이라크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러시아, 이탈리아	아르헨, 칠레, 캐나다	피지, 호주	우간다, 앙골라, 르완다, 세네갈, 남아공, 튀니지, 에티오피아
		7	5	5	3	2	7

○ 재외국민보호 등을 위한 전략 초청사업(해외한인·외국경찰초청사업) 및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는 치안협의체(한-베, 한-필 등) 활성화

-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현지에서 한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한인, 외국경찰, 중국·베트남 공안을 초청하는 전략초청사업 추진

베트남 공안초청 한국어 연수과정	. **'22.8월 제5회 베트남 공안 초청 한국어 연수과정 추진** . '15년 국제경찰청장 협력회의(10.19~22) 및 경찰청장 베트남 방문(11.9) 시 자국경찰관 대상 한국어 교육을 공식 요청
중국 공안초청 한국어 연수과정	. **'22.9월 제4회 중국 공안 초청 한국어 연수과정 추진** . '16.2월 경찰청장 중국 방문 시 중국 공안부와 '공안초청 한국어 연수과정' 개설에 합의
외국경찰 초청연수	. **'22.11월 제13회 외국경찰 초청연수 추진** . '09년부터 15명 내외의 외국경찰(한국인 업무 담당) 초청해 한국문화 및 한국경찰 시스템을 소개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해외한인경찰 초청행사	. **'22.5월 제15회 해외한인경찰 초청행사 추진** . '06년부터 해외 한인 경찰관 15명 내외를 초청해 명예경찰 위촉식·국제경찰세미나 등 개최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가 다발하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경찰과 양·다자 치안협의체를 구축해 치안 협력방안 논의

한중일 경찰협력회의	.**'22년 중 제5차 한중일 경찰협력회의 한국 개최 추진** .'15.11월 한중일 정상회담 시, '3국 치안협의체' 구성안이 공동선언문에 채택, 매년 각 국이 돌아가며 개최하기로 합의 .'15.12월 '제1차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중국(청도) 개최
한-베트남 경찰협력회의	.**'22.12월 제12차 한-베 경찰협력회의 개최 추진(한국 개최)** .'15년 양국은 '09.9월 이래 개최해 온 인터폴 회의(과장급)를 한-베트남 경찰협력회의(국장급 이상)로 격상키로 합의 .'16.11월 베트남에서 '제1차 한-베트남 경찰협력회의' 개최
한-필리핀 경찰협력회의	.**'22.10월 제4차 한-필 경찰협력회의 개최 추진(한국 개최)** .'17.2월 경찰청 차장 필리핀 방문 시 양국 정례회의 개최 합의

※ '17.2월 경찰청 차장 태국 경찰청 방문 시 한-태국 치안협의체 구축 합의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경찰 대표단을 위해 통역·기관방문 주선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치안협력 네트워크를 강화('21년 24개국 방한)

구분	국제기구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총계
국가	4	3	9	4	3	2	25
비율	16%	12%	36%	16%	12%	8%	100%

<다자간 협력>

○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치안의제 발굴 및 국제 치안협력 관련 정부부처간 협력 등 정부 치안외교활동 적극 지원

– 한·미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남아 마약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치안 ODA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기관 간 협력 추진

– 최근 국제 비전통 안보 분야의 주요 의제인 사이버 안보·초국가 범죄 대응 관련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

○ UN 및 산하기관과의 국제협력사업 신규 발굴 및 운영

– UN 본부 및 평화유지 임무단 경찰 참여 확대 및 발전방안 마련

※ '22년 예정된 한국의 유엔 정규분담율, PKO 분담율은 9위(2.4%)인 반면, PKO 경찰 파견은 5명으로 UN PKO 경찰 인력(7,296명) 대비 0.07%에 불과

<경찰청 유엔평화활동 참여 확대 내용>

▸**파견인력 증원**: UN 임무단에 경찰관 파견 확대, UN 본부에 사이버 전문가 파견
▸**유엔 교육과정 공동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관들을 위한 UN 경찰 기본 교육과정을 UN 사무국과 공동 개최
▸**치안 ODA 사업 발굴·추진**: UN 평화활동 지역에서 사이버·과수·젠더기반폭력·범죄정보 관리 분야 경찰역량 개발을 위한 ODA 사업을 발굴, 추진

– UNDP 등 UN 산하기관과 △경찰 범죄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찰역량 강화 등 펀딩사업 추진·발굴

※ '22년 콩고민주공화국 경찰 범죄정보관리 시스템 전수개발 사업 관련 확보된 예산(3.43억원)을 국제분담금 형식으로 납부 및 사업 관리하고, 신규 펀딩사업 적극 발굴 예정

– 한국 경찰의 △선진치안시스템 △방역적 경찰 활동 △디지털 성폭력 대응 등 UN 및 산하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전파

○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사업 지속 실시하여 아세안 국가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확대 논의

- **(프로그램 운영)** 아세안 회원국의 경찰 및 법집행기관 관리·실무자를 초청해 범죄수사 역량강화 연수 및 역내 치안 현안 공유를 위한 '제2차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 초청 연수' 개최

※ '21. 11. 15.~11. 20. 아세안 회원국 및 국제기구 중간관리자급 125명을 대상으로 '제1차 한-아세안 역량강화 연수' 실시,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연수 확대 요청

- **(센터 건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아세아나폴·아세안 사무국과 연락·협의 체계 구축을 위한 전용 시설 구축 추진

○ 아세아나폴·유로폴 등 지역 치안협의체와의 협력 강화, 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치안 논의 주도 및 글로벌 치안협력 중심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아세아나폴	제40차 아세아나폴 컨퍼런스에 대화국 자격으로 참석하여 향후 협력 방안 및 아세안 수사역량 강화사업 논의
IACP	IACP 아·태 지역사무소('21년 위촉) 운영 및 2022 IACP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선진 치안사례 발표
유로폴	유럽 경찰이 강점을 가진 사이버범죄·마약·조직범죄·난민문제 등에 대한 신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국제 치안협력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

- **(UN 교육과정)** 경찰대학과 공동하여 '22년 권역별 강사양성과정(ToT) 추진 및 '21년 UNPOL STM 개정에 따른 인증 갱신

- **(국제 컨퍼런스 참여)** IALG 컨퍼런스(네덜란드 경찰청 주관) 참석 경찰청 대표 및 IACP 연례 컨퍼런스 발표·수상자 선발·지원

<치안한류>

○ 정부 내 경찰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ODA 사업규모 확대 및 글로벌 표준으로서 한국 경찰 국제협력사업의 대상·범위 확장

○ 사업구조 및 추진체계를 고도화하여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치안장비 수출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도모

– **(신규 사업발굴)** 종전 동남아(필리핀·베트남) 위주에서 벗어나 각 대륙·지역별 대상국 적극 발굴, 전 세계적인 경찰협력망 구축

– **(치안전문가)** 사업 분야별 소수정예 '치안전문가'를 육성, 관련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경력관리 및 인센티브 보장

○ KOTRA와 협력, 사업시행 초기부터 G2G 계약 등을 통한 수출 가능성을 전제로 사업 세부내용(품목)을 구체화

※ '20.9월 경찰청-KOTRA MOU 체결, 전 세계 127개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해 치안장비 수출지원 추진 및 경찰청 주관 국제 치안산업박람회 활성화에 기여

※ UAE(방검방패·영상분석시스템), 남아공(경찰통신·화상회의), 몽골(대테러 특수장비), 필리핀(빅데이터 활용 치안시스템) 등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구매를 희망하므로 치안장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예정

< 치안한류사업 관련 치안장비 수출 사례 >

연번	대상국	유형	수출품목	수출규모	비고
1	UAE(아부다비)	수출	지문분말, 감식용 붓	900만원	완료
2	필리핀	원조	순찰차(130대), 현장감식 키트(120세트), 경찰오토바이(142대)	45.4억	완료
3	베트남	원조	지문·족흔적 분석시스템, 과학수사·디지털포렌식 장비, 시뮬레이션 사격장	71.7억	진행
4	과테말라	원조	경찰교육원(건축), 과학수사장비	28억	완료
5	온두라스	원조	범죄예방 CCTV 250대, 관제시설	42억	완료
6	엘살바도르	원조	번호인식CCTV 66대, 관제시설 범죄예방 CCTV 102대, 관제시설	71.9억	진행
7	앙골라	유상원조	한국형 112신고출동 시스템	500억원	완료
8	인도네시아	원조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장비	9.3억	진행
9	요르단	원조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9.5억	진행
합 계				777.89억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UNDP 서울정책센터·DR 콩고사무소 실무회의	'22.1월	
	'22년 국제협력사업 종합 추진계획 수립	'22.3월	
	아세아나폴 컨퍼런스 참석	'22.3월	
	두바이 세계경찰청장회의(WPS)참석	'22.3월	
2/4분기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 백서 발간	'22.4월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비대면 연수	'22.5월	
	IALG 2차 세미나 참가 경찰청 대표 지원(헤이그)	'22.5월	
	IACP 발표·수상자 모집·추천	'22.5월	
	제15회 한인경찰 초청행사	'22.6월	
3/4분기	콩고민주공화국 범죄정보시스템 전수사업 현지 조사	'22.8월	
	수단 젠더기반폭력 분야 수사역량 강화 사업, 비대면 연수	'22.8월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22.9월	
	UNDP 서울정책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공동 웹세미나	'22.9월	
4/4분기	IACP 연례 컨퍼런스 참석(댈러스)	'22.10월	
	콩고민주공화국 범죄정보시스템 전수사업 MOU 체결	'22.10월	
	태국 아동 성착취물 수사 역량 강화 사업, 비대면 연수	'22.11월	
	외국경찰 초청행사 시행	'22.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재외국민, 해외 방문 한국 관광객

○ **이해관계집단** : 재외공관, 외국경찰기관, 법무부, 외교부 등

□ 기대효과

○ 각국의 치안정책 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경찰과의 적극적 치안 외교 활동을 통해 폭넓고 실질적인 재외국민보호 정책 마련

○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재외국민 및 한국 관광객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재외국민 치안불안 해소, 해외 치안안전망 확보

○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위급 치안협의체를 운영, 재외국민보호·정보교류 등 다각적 치안협력 시스템 구축

○ 외국 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제성 범죄 공동 대응 기반 확대 및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

○ 유엔·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치안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 치안 협력 네트워크 다변화 및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주요 치안 협력국가 및 개도국에 한국형 치안시스템을 전수, 치안협력 인프라 구축 및 한국 경찰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외국 경찰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치안 협력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다양한 인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22
국제교류협력활동 활성화(Ⅰ-1-일반재정②)				
① 국제교류협력활동(3133)	일반	47.88	71.80	72.78
		(47.88)	(71.80)	(72.78)
■ 해외치안협력강화(311)	일반	39.57	49.86	50.46
■ 국제치안활동강화(312)	일반	8.31	21.94	22.3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국제교류지수(40%)	29.6	**5.8**	**20.9**	**21**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하단 참조
② 치안인프라 전수지수(40%)	42	**14**	**31**	**31.9**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하단 참조
③ 홍보지수(20%)	5.3	**7.0**	**9.2**	**12.15**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하단 참조

【①국제교류협력 지수】

<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

· **국제교류협력**은 외국경찰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상호교류·MOU 체결 등 다양한 치안협력을 통해 외국 방문 한국 관광객 또는 재외국민 등 **한국인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의 초석 역할 수행**

· 정부는 신남·북방정책, 재외국민보호 정책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상반기는 국내는 대통령선거 등 국내 정세변화가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국제 교류협력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나, 화상회의 등 비대면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제교류 증가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

- 치안한류 확산으로 '19년 국제교류는 전년 대비 16.3%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국제교류가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문제 발생 ⇨ '20년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적극적인 국제교류 및 정부외교 지원 추진하여 '21년 점차 증가세 회복**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치안협력 MOU 협조·체결	14	27	8	12
청·차장급 교류	54	49	1	33
국·과장급 이하 교류	91	104	28	19

- '21년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격년 개최)를 계기로 23건의 청·차장급 교류가 있었고 동 회의는 '22년에 개최되지 않음에도 **3년 실적 평균치(적극성 상)인 18.7보다도 높은 21로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 코로나19 관련 정부 차원에서 상황 안정시까지 국외 출장을 최소화하고, 집단행사 연기 또는 축소를 권고하는 등 해당 기간은 실적 산출기간에서 제외 필요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행안부)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행안부)
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중수본)
④ 신종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업무 지침 통보(경찰청)

< 측정산식 >

①국제교류{(MOU협조·체결)×0.3 + 청·차장급 교류×0.2 + 국·과장급 이하 교류×0.1} + **②정부치안외교지원**{정부부처·국제기구협력×0.25 + 국내외 의제발굴·사업지원×0.15}

<국제교류지수 세부 점수표>

구분	①국제교류			②정부치안 외교지원	
	MOU	교류			
내용	MOU 협조·체결	청·차장급 교류	국과장급 이하 교류	정부부처 ·국제기구 협력	국내외 의제발굴 ·사업지원
가중치	0.3	0.2	0.1	0.25	0.15

·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치안협력 MOU 협조·체결(신규·개정), △청·차장급 교류, △국·과장급 이하 교류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원 등에 차이가 있어 **각 하위 지표별 가중치 부여 필요**

구분	투입 인력·시간
① 치안협력 MOU 협조·체결(0.3)	**투입시간 :** 6개월~1년 소요 / **투입인원 :** 계 전체
② 청·차장급 교류(0.2)	**투입시간 :** 3~4개월 소요 / **투입인원 :** 계 전체
③ 국·과장급 이하 교류(0.1)	**투입시간 :** 1~2개월 소요 / **투입인원 :** 1~3명

< 자료수집 방법 > : 국제교류협력 관련 온나라 및 수결 공문, **정책보고서 등** 증빙자료

【②치안인프라 전수 지수】

<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

· **치안한류**는 외국경찰에게 **한국경찰**의 **치안기법 및 시스템**을 전수하여,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재외국민 범죄예방 및 신속한 사건사고 처리 등 현지 외국경찰과의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외**적으로 '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한국의 치안기법 및 치안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치안전문가 파견**을 요청하거나 **방한**을 희망하는 국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치안전문가 파견 국가	5	18	21	14	16	-	2
국내 초청연수 인원	159	197	272	423	351	-	40
비대면 연수 인원	-	-	-	-	-	257	1,456

- **'21년**은 '20년에 처음 도입한 비대면 연수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비대면연수 횟수 및 분야를 확장하여 안정적으로 연수를 진행하며 코로나19 개선시 대면 연수를 재개, 지속적인 치안한류사업의 성장을 예상

- 또한, 경찰대학·중앙경찰학교 등 부속기관의 사업 참여 및 교통, 마약수사 등 사업분야의 다각화를 통한 치안한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3년 실적 평균치인 29(적극성 상 수준)보다 10% 높은 31.9로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 코로나19 관련 정부 차원에서 상황 안정시까지 국외 출장을 최소화하고, 집단행사 연기 또는 축소를 권고하는 등 해당 기간은 실적 산출기간에서 제외 필요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행안부)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행안부)
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중수본)
④ 신종 코로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협조 안내(한국국제협력단, KOICA)
⑤ 신종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업무 지침 통보(경찰청)

< 측정산식 >

∑(① 치안인프라 전수 사업별 파견·교육기간* × ② 교육인원)**

· **치안한류사업의** 하위 지표인 **치안전문가 파견**은 치안한류사업의 목적과 추구하는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분야로서 △파견 교육기간, △파견 교육인원에 따라 투입되는 시간과 인원 등에 차이가 있어 **각각 가중치 부여 필요**

구분		투입 인력·시간
파견기간	15일 미만	**투입시간 :** 15일 미만 / **투입인원 :** 담당1 / 파견단 일부
	3개월 미만	**투입시간 :** 15~1개월 / **투입인원 :** 담당2 / 파견단 전체
	3개월 이상	**투입시간 :** 1개월~2개월 / **투입인원 :** 담당2 / 파견단 전체
교육인원	25명 미만	**투입시간** : 1개월 미만 / **투입인원** : 담당1 / 파견단 일부
	50명 미만	**투입시간 :** 1개월~2개월 / 투입인원 : 담당2 / 파견단 전체
	50명 이상	**투입시간 :** 2개월 이상 / **투입인원 :** 담당2 / 파견단 전체

<*파견 기간별 가중치 배점>

파견기간	15일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점수	1	2	5

<교육 인원별 가중치 배점>**

교육인원	25명 미만	50명 미만	50명 이상
점수	1	2	5

※ 교육인원 모집은 경찰주재관·공관을 통한 파견 대상국 치안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고 상대국의 여건에 따라 변수가 많아 다수 인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교육인원 규모에 따라 가중치 차등 배정

< 자료수집 방법 > : 치안인프라 전수 파견 관련 온나라 및 수결 공문, **정책보고서 등** 증빙자료

【③홍보 지수】

<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

·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MOU 체결, 치안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치안외교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 경찰기관과의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재외국민보호 및 국제공조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이런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사업성과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어떻게 홍보하는지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지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활동 필요

< 최근 4년간 홍보 현황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국외 홍보	-	5	4	2
국내 홍보	12	6	10	18
내부 홍보	3	5	8	10

< 측정 산식 >

① 국외 홍보건수 * 0.4 + ② 국내 홍보건수 * 0.3 + ③ 내부 홍보건수 * 0.3

< 최근 3년간 홍보지수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홍보지수	4.5	5.3(17.7%↑)	7.0(32%↑)	9.2(31.4%↑)

· **'22년 홍보지수 목표치**는 3년간 추세치(31% 증가)를 상회하는 **12.15(32% 증가)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 자료수집 방법 > : 언론(미디어)보도 및 책자 발간 등 자료

전략목표Ⅱ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

기 본 방 향

◇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 책임수사’로 지속 추진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품질을 향상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경찰상 구현

○ 내·외부 ‘3중 심사체계’를 현장에 완전히 정착하는 등 수사시스템 전반의 지속 혁신으로 객관성·공정성 제고

○ 국민 권익·편익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서민침해·부패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전문가 양성으로 수사품질 상향 균질화

◇ 경찰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준법의식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 이룩

○ 대화와 소통,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집회시위 관리 등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을 체질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

○ 고질적인 부패·비리 근절부터 생활 주변의 불법·무질서 척결까지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준법문화를 정착하고 사회질서 확립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2	4	4	20	6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		기관 신뢰도 / 국가인권위 권고수용률
성과목표 1.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부패인식지수
	⑱ 반부패·공공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 인원 / 공직선거 5대 선거범죄 검거율
	⑲ 마약류·조직폭력·외국인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마약류 사범 검거성과 / 조폭 검거성과 / 국제범죄사범 검거성과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20 경제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 전년 대비 전화금융사기 발생 감소율 / 1인당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금액
	21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치안 역량 강화 및 성매매 등 유흥시설 불법행위 합동 단속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지수
성과목표 2.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인권침해 권고율**
	22 인권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스템 구현	인권영향평가 반영률 / 한국형 동료개입 프로그램 전문강사 활용률
	23 인권 보호와 준법역량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준법관리 역량강화 / 행정지도 건수 / 정보경찰 전문화 교육
	24 정보상황 기능 역량 강화로 집회의 자유·인권과 안전·공공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집회문화 조성	평화적 집회문화를 위한 상황정보 활동 지수 / 국민평가 / 상황 대응역량 강화율
	25 수사상 인권과 피해자 중심의 경찰활동 전개	인권보호 제도 개선 / 인권·윤리의식 제고 위한 교육·홍보활동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건수 / 회복적 경찰활동 평균 실시 건수
	26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집회현장 법 집행 기준 확립 및 현장 대응력 강화 / 경찰부대 근무 만족도 / 경찰관기동대 창설 달성도
성과목표 3.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		**수사·형사 분야 치안고객만족도**
	27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구현	예산·인프라 확보 노력도 / 책임수사 과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KICS) 반영도 / 전문 수사인력 확보 / 전문 수사인력 양성
	28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개정 형소법 현장 정착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 협력적 경·검 관계 정착 및 현장수사관 실무 지원 / 수사권 조정의 우호적 여론 및 외연 확장과 선진 수사구조를 위한 수사제도 연구
	29 국민중심 책임수사체제 추진을 위한 인권·현장 중심 제도 개선	책임수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3중 심사체계 안착 노력도 / 경찰 사건기록 관리체계 등 업무기반 마련 /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구축 노력도 / 수사 전문성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30 증거중심의 책임수사 지원 및 과학수사 현장대응력 제고	범죄분석 지원지수 / 멀티미디어 분석 불가율 /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 /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31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현장지원 활성화 /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지원
	32 증거 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과학수사 활동 지수 / 현장지원 지수 / 대국민 교류 지수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4.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안전체감도**
	33 대테러·항공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관리에 따른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활동에 따른 성과 / 항공활동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 / 항공 안전관리 역량 강화
	34 안보수사 역량 및 탈북민 보호 강화·완벽한 안보상황 관리	안보수사 역량 강화 / 탈북민 보호 강화 / 안보 취약요소 개선 활동
	35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중요 안보사범 검거 지수 / 첨단안보 대응활동 지수 / 디지털포렌식 활성화 지수
	36 국내외 다양한 위협에 대한 안보정보 수집으로 국민안전 확보 및 국가권익 보호	안보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 안보정세 분석 고도화 / 고가치 첩보 획득률 제고
	37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경호행사로 국가안전 확보	경호경찰 전문화 교육 및 설문조사 / 경호경찰 인프라 구축 / 경호업무 관계기관 협업

전략목표Ⅱ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

(1) 주요 내용

○ **<부패·부조리 엄단>** ▵고질적 부패행위 ▵마약·조직폭력 ▵사기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 등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 근절에 수사력 집중

○ **<민주·인권경찰 구현>**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정비하고, 보복·재범 등 추가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 신원조사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전산 시스템 개선 등 '경찰행정의 신뢰도' 제고 추진

○ **<수사 전문성·공정성 제고>**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을 지속 개선하여 탄탄한 경찰수사 안착 도모

–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수사 실현을 목적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역량 강화 및 디지털포렌식 인프라 구축

○ **<안보·테러 대응역량 강화>**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대테러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보·테러 정보활동으로 빈틈없는 안보태세 강화

– ▵대테러·항공장비 도입 ▵대테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탈북민 보호 체계의 실효성 고도화 ▵확장된 안보영역에 대한 첩보수집 강화

⇨ **수사 품질 및 안보 역량을 높이고 조직 전반에 인권중심 행정을 실현하여 공정사회 구현 및 경찰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 제고**

구 분		성과지표
전략목표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	기관 신뢰도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21	'26			
기관 신뢰도	2.3	2.3	2.2	2.4	2.5	2.6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2.2 ~ 2.4점을 반복하고 있는데, '21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 ※ 해당 조사는 4점 만점으로 0.1점 차이도 의미가 있음 '26년 목표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2.6점으로 설정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속 제고	'기관별 신뢰 정도 - 경찰'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	96	94	100	98	98*	95	매년 20~50건의 권고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며, 이는 '15년 이전 수용률(85%)보다 크게 상향된 수치임. 다만, 징계·형사고발 권고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대한 권고를 수용하되 최대 1건 정도의 여지를 둘 수 있는 95%를 '26년 목표치로 산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경찰 수용건수 ÷전체 권고건수 × 100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건수 통계

* '검토 중' 건수 제외(인권위 '21년 최종통계는 '22. 6~7月 산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경찰개혁, 국가수사본부 설치 및 자지경찰제 도입 등 경찰조직 체계의 변혁에도 불구, 확대된 경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와 불안의 시각이 공존

– 이러한 시각을 불식하고 신뢰받는 경찰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권한 남용과 절차 미준수 등에 대한 실효적 모니터링과 견제 시스템 등 인권 중심 경찰활동 필요

– 체계적·지속적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영향평가*'를 지속 추진

* 2018년부터 △제도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자문 확대 등 외부의 시각 적극 반영 △절차 구체화·세분화 및 관리시스템 개선

– ▵제도적 장치 강화 ▵인권위 권고 반영 등 인권보장 체계 확립

– 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량·전문성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추진

○ 국정원法 개정에 따른 인프라 확충으로 警-院 간 수평적 협력에 기반한 정보 및 수사기법 교류를 위한 구체적 실무협의 필요

– ‘안보범죄정보업무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실질적 운용 및 협력센터 개소에 따른 제반업무로 빈틈없는 안보태세 정비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경찰 중심의 책임 안보수사를 통한 국가안보수사 역량의 총량 유지를 위해 자체 인프라 확충 긴요

○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反아시아·反여성 등 다양한 혐오정서와 결부된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기도 우려

– 최신 대테러장비 및 항공장비 확충, 특공대 등 전담조직 전문성 제고, 주요 취약시설 합동점검 등 현장 중심 안전활동 강화 추진

(4) 참고자료

○ 공수처법·검찰청법 개정안 및 수사권 조정 관계 법령 등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 치안정책연구소(www.psi.go.kr)

○ 안보수사국, 「경찰 안보수사 역량강화 3개년 계획」

○ 안보수사국, 「대공수사 인프라 및 역량 강화 종합계획」

성과목표Ⅱ-1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1) 주요 내용

○ **<부패·불공정행위 근절>** 공직자의 금품수수, 부동산 투기 사범 등 모든 부패·불공정 행위에 대해 연중 상시단속 전개

○ **<마약·조직폭력·외국인범죄 근절>** 국민의 안전 위협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범죄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및 집중단속 등을 통한 체감 치안 제고

○ **<경제범죄 검거·수사역량 강화>** 다중피해·전화금융사기 등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사범 중심으로 종합 근절대책 수립 등 수사역량 집중

- 다중피해 사기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여 △전화금융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사이버사기 △조직사기에 대한 예방·단속·피해회복을 종합적으로 추진
- 전화금융사기 척결 대책을 위한 △전화금융사기 척결 TF 운영 △수사상황실('21년 신설)을 확대·개편 △전화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 운영 등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 범죄수익추적 업무 활성화를 위한 全 수사부서 업무체계 확대·개편

○ **<생활질서 확립>** 불법 풍속영업 근절을 위한 근원적 차단활동 및 성매매 예방을 위한 수요차단활동을 강화하고, 유관 부처 합동단속 실시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부패인식지수(CPI)
관리과제	반부패·공공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 인원 / 공직선거 5대 선거범죄 검거율
	마약류·조직폭력·외국인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마약류 사범 검거성과 / 조폭 검거성과 / 국제범죄사범 검거성과
	경제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 전년 대비 전화금융사기 발생 감소율 / 1인당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금액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치안 역량 강화 및 성매매 등 유흥시설 불법행위 합동 단속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지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부패인식지수 (CPI*)	59	61	62	63	부패인식지수는 '19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21년은 180개국 중 32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전 3년도 실적 평균값(60.6)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63)을 고려, '22년 목표치는 역대 최고치인 63으로 도전적으로 설정	부패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전문가 평가 결과를 집계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주관 발표 ※ e-나라지표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180개국 대상 국제평가지수(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수사권 개혁,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경찰은 죄명 불문 모든 반부패·공공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대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

– 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량·전문성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추진

○ **(마약)** 최근 인터넷 등 비대면을 통한 마약류 구매가 쉬워지면서 생활 속으로 확산 추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마약류 밀반입 근본적 차단을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 및 수사 역량 강화, 연중 테마별 특별단속을 통한 마약류 유통 근절 추진

○ **(조직폭력)** 최근 조폭은 전통적인 '지역조직' 개념에서 벗어나, 파벌 구분없이 각종 이권을 따라 이합집산하는 등 광역화·지능화 경향으로 변화

– 조직범죄 동향, 조폭 활동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조폭범죄에 선제적 대응*

* 조폭의 신종범죄(사이버도박, 보이스피싱)에 첩보수집 강화 및 예방활동 병행

○ 사기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계획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적 사기'의 비중이 지속 증가

※ 법원 사기선고 중 '조직적 사기' 건수 : ('16) 1,681건(9%) → ('20) 2,297건(15%)

○ 특히,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다중피해사기로 인해 서민·국가경제에 대한 피해 심각

– 전화금융사기는 금융·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수법도 지능화·고도화되어 피해가 지속 증가하는 등 단속·차단·홍보 등 종합적 대응 필요

구분 (억원)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전화금융사기	2,470	4,040	6,398	7,000	7,744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	4,674	1,693	7,638	2,136	31,282
사이버사기	849	1,257	2,223	3,326	

○ 재산범죄의 패러다임이 범인검거에서 재산피해회복으로 확대되고, 특히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 등으로 경찰수사 단계에서 신속한 피해회복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

* (개정 前) 뇌물, 상습도박 등 200여개 범죄 나열 → (개정 後) 장기 3년 이상 범죄로 대폭 확대

○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불법영업 음성화 추세, 성매매 알선·고용·모집·광고가 해외서버 기반 사이트, 일반 구직앱 이용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증가

– 범죄수익금 환수,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단속·수사 역량 강화

○ 경직법 개정·大令 제정 등 정보경찰 개혁 법제화에 맞춰 정보활동 패러다임을 '국민안전' 및 '위험 예방·대응' 중심으로 전환

(4) 참고자료

○ 공수처법·검찰청법 개정안 및 수사권 조정 관계 법령 등

○ 경찰 범죄통계(http://police.go.kr)

○ 치안정책연구소(www.psi.go.kr)

18 반부패·공공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 추진배경 (목적)

○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국민의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공정한 기회·경쟁을 침해하는 고질적 부패행위 지속 발생

– 부동산 투기사범·민관유착 등 사회불신을 조장하는 불법행위와 국민에게 상실감·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관행·부조리 근절 시급

○ 수사권 개혁 이후, 경찰은 공직자의 직위·직급, 죄명 불문 모든 반부패·공공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대표 수사기관'으로,

– 중요 지능범죄인 반부패·공공 분야 범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수사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 종합적·체계적인 반부패 수사정책을 통해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부패사범 검거)** 공직자의 금품수수 등 부패범죄, 부동산 투기사범 등 고질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모든 불공정행위에 대해 연중 상시단속 전개

– 특히, 「부패범죄 연중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금품수수 ▵국고횡령 ▵권한남용 ▵불법 알선·청탁 등 주요 부패범죄 집중 단속

○ **(공명선거 구현)** '22년 실시되는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 관련 엄정한 선거사범 단속·수사를 통해 공명선거 뒷받침

※ **(선거사범 단속체제)** '21. 11. 9.부터 수사전담반 편성 등 단속체제 가동
⇒ '22. 1. 8. ~ 6. 10. 전국관서 선거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 **(중점단속)**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 선정 ⇒ ‘무관용 원칙’ 적용하는 등 엄정 사법처리

*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 **(특별법 분야 단속)** 국정과제와 연계, 특별법 분야 단속 추진

– 부동산 투기, 코로나19 방역, 의료·보건복지, 환경 등

○ **(수사역량 강화)** 수사권 개혁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반부패·공공범죄수사 교육 및 전문수사관 제도 등 개선

– 부동산, 의료·의약, 환경 등 특별법 분야 전문수사관 육성

○ **(관계기관 협업)** 국가 형사 체계의 변화에 따라 검찰·공수처, 권익위 등 반부패 분야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全 국민, 경찰관

□ **기대효과**

○ 부동산 투기 등 사회 전반에 잔존한 부패·불공정행위 단속으로 중추적 사정기관 역할 수행,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 ’22년 양대선거 관련, 중점 단속 대상인 「5대 선거범죄」 등 각종 불법행위 엄정 대응으로,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 뒷받침

○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와 수사권 개혁에 발맞춰 반부패·공공범죄 분야 수사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없음**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2년 양대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계획 수립 · 하달	’22.1월	
	「2022년 청탁금지법 수사 매뉴얼」 사이버 교육 개정 · 운영	’22.2월	
	「공직선거법 해설서」 개정 · 발간	’22.3월	
2/4분기	「4대 부패범죄 연중 단속계획」 수립 · 시행	’22.4월	
	반부패 수사교육 TF팀 편성 · 운영계획 수립 · 시행	’22.5월	
	전문교재 (가칭 「반부패 수사해설서」) 제작	’22.6월	
3/4분기	주요 선거사건 집중검토 및 신속 수사	’22.7월	
	국정과제 등 중요정책과 연계한 부패범죄 특별단속 추진	’22.7월	
4/4분기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사범 단속 평가 및 포상	’22.11월	
	’22년 양대선거 선거사범 단속 평가 및 포상	’22.11월	
	’22년 부패범죄 검거유공자 평가 및 포상	’22.11월	
	각 테마별 단속 결과 등 현황 분석 및 개선점 검토	’22.12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인원 (가중치 50%)	494	659	777	780	고위직 부패사범 수사의 경우, 공수처 설치, 검찰의 수사분야 집중화(부패범죄 포함)로 수사의 경합이 있고, 21년도의 경우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투기 단속 등으로 인해 실적이 급증하여 임계치에 근접하는 등 성과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부패사범 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경찰의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부패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부정부패 분야의 대표 지표임을 감안하여, 3년 평균실적(643명)을 상회하는 780명 검거라는 도전적 목표치 설정	’22. 1월~12월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인원	경찰청 관리 통계 (시도청 보고 및 시스템 관리 등)
공직선거 5대 선거범죄 검거율 (가중치 50%)	27.3	33.7	40.8	41.0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매 공직선거마다 선거 규모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지표 산식을 ‘전체 공직선거사범 검거인원 대비 5대 선거사범 검거인원’으로 설정하여, 전체 선거사범 중 5대 선거사범의 비율을 평가 기준으로 산정 특히, 22년도에는 대선·지선 양대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만큼, 3년간 평균실적(33.9%)과 21년도 실적(40.8%)을 상회하는 41.0%라는 도전적 목표치 설정	공직선거 5대 선거사범 송치인원 / 공직선거 전체 송치인원	경찰청 관리 통계 (시도청 보고 및 시스템 관리 등)

19 마약류 · 조직폭력 · 외국인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 추진배경

○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 증가로 일반인들도 구매가 용이해지면서 국민의 안전 위협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강력대응으로 국민 불안 해소 필요

○ 치안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최근 세력화·집단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및 범죄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로 체감치안 제고 필요성 대두

○ 체류외국인 및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국제범죄사범 집중단속활동

– 코로나19로 인한 체류외국인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15년 이후 2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는 지속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 또한 적극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불법체류자 인원)** '19년 390,281명 → '20년 392,196명 → '21년 388,700명

** **(외국인 피의자현황)** '19년 39,249명 → '20년 39,140명 → '21년 32,486명

– 체류외국인의 세력화·집단화로 외국인 범죄조직이 결성되어 보복 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에 가담, 치안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 △'21. 6월 구소련권 외국인 범죄조직 검거 (검거 53 · 구속 24) / 경기南 · 국수계
△'21. 10월 외국인 마약 유통 사범 검거 (검거 47 · 구속 33) / 서울 · 국수계

– 위드 코로나19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출입국사범(불법입출국, 브로커) 등 국제범죄사범에 대한 선제적 단속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마약류 범죄 근절]

○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생활 속으로 확산되며 사회문제화로 대두

– 시기별·테마별 단속과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통해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 강력한 대응 실시

○ 최근 접근이 쉽고 비대면 및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 증가추세

<인터넷 이용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인터넷 마약류사범	1,100)	1,516	2,109	2,608	2,545
다크웹·가상통화	141	85	82	748	832

–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남청 중심으로 '다크웹 전문수사팀' 운영으로 추적이 어려운 비대면 거래 강력 단속

○ 연중 테마 단속을 통해 「생활 속 확산되는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추진, 마약류 관련 범죄 분위기 사전 차단

○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로 청소년 마약류 범죄 증가에 따라 중·고등생 대상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추진

○ 국내외 마약수사기관 간 협력 등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유통 정보교류 등 공조수사 강화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폭력 척결]

○ 서민생활 주변에서 각종 치안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 지속단속,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생활 안전 확보

※ 조폭은 존재만으로도 국민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활동 자체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신고유도를 통한 단속 및 재범 차단

○ 조직폭력배 개별범죄는 물론 범죄수익 동결을 통한 자금원 차단 및 광범위한 단속으로 조직폭력배 활동 근거지 와해 추진

※ 직접수사부서 책임수사체제에 따라 시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중심의 조직폭력배 단속으로 전문성 및 집중도 제고

– 단속과 더불어 조직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폭력조직원의 활동성·범죄 위험성을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제점검 병행

– 보복 및 재범여부 상시 모니터링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

▸ '22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선정, 첩보 수집 강화 및 상반기 집중단속 추진
▸ 폭력조직의 자금원 차단을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범죄수익 몰수

○ 전략적 홍보 및 다양한 신고채널·신변보호 제도(국민제보앱·신고명함, 가명조서, 면책제도 등)를 활용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국제범죄사범 집중단속으로 체감치안 제고 및 법질서 확립]

○ 외국인 집단폭력·조직성 범죄에 대해 상반기 집중단속(3~6월), 불법 입출국·국제범죄 사범에 대해 하반기 특별단속활동 실시

※ 국정원·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국제범죄 첩보 적극 수집

– 외사기능과 협업, 지역사회 내 국제범죄 관련 여론 수렴 및 수집된 범죄 첩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수립

[선제적 범죄예방과 실질적 피해회복 등 회복적 형사활동 병행]

○ 보복 등 추가범죄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피해자 신변보호 및 피해자에 대한 사건 처리절차·진행·결과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품 회수, 생활비·치료비 등 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를 통한 범죄피해 신고 활성화로 체류 외국인의 ▲범죄피해 구제 ▲추가범죄 발생 예방 ▲불법체류 외국인 치안 사각지대 방치 해소 ▲인권 보호 향상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22.3월~5월	마약범죄
	'외국인 조직성 범죄' 집중단속	'22.3월~6월	조직범죄
2/4분기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22.4월~7월	조직범죄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집중단속	'22.4월~7월	마약범죄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성과 분석	'22.6월	마약범죄
3/4분기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집중단속 성과 분석	'22.8월	마약범죄
	하반기 마약류사범 집중단속	'22.8월~10월	마약범죄
	'외국인 조직성 범죄' 집중단속 성과분석	'22.7월	조직범죄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성과분석	'22.8월	조직범죄
	하반기 국제범죄 특별단속	'22.8월~9월	조직범죄
	하반기 조직폭력배 일제점검 실시	'22.9월~10월	조직범죄
	국제범죄수사 현장 컨설팅	'22.하반기	조직범죄
4/4분기	하반기 마약류사범 집중단속 성과 분석	'22.11월	마약범죄
	조직폭력배 일제점검 결과 및 조폭 동향 분석	'22.11월	조직범죄
	국제범죄 특별단속 결과 및 외국인 범죄 동향 분석	'22.11월	조직범죄
	마약류, 조직폭력, 국제범죄수사 등 주요 단속분야 성과 평가·포상	'22.11월~12월	마약조직범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 기대효과

○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외국인 집단폭력·마약류 범죄 강력단속을 통해 체감치안안전도 제고

○ 마약범죄·조직폭력·외국인범죄의 수사시 피해자 신변보호와 적극적 대응을 통한 범죄의지 차단으로 안정적 치안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마약류 사범 검거성과(40%)	8,904명	10,544명	9,077명	8,592명	**최근 5년 검거인원 중 최고, 최저 검거한 년수를 제외한 3년 평균치(8,507명) + 1%(85명)를 초과하는 8,592명으로 산정** ⇨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초과하는 적극성 '상'에 해당** **<'21년 성과 목표치(8,377명) 대비 2.6% 상향치(+215명)>** ※ '18년까지 마약류 검거인원 감소 추세였으나, '19년 강남클럽 사건, '20년 VIP특별지시 단속에 따른 검거인원 급증한 점을 감안하여 5년 검거인원 중 최고, 최저 년수를 제외하고 3년치 평균치를 목표치로 산정한 것은 매우 적극적인 설정임	범죄통계시스템 검거인원	범죄통계시스템
	'17	'18					
	7,539명	6,821명					
조폭 검거성과(30%)	3,037명	2,817명	3,027명	2,990명	최근 **3년 평균치(2,960명) + 1% (30명)를 초과하는 2,990명으로 산정** ⇨ 감소하던 검거 인원이 지난해 상승한 상황으로 위 목표치는 **평균치를 초과하는 '상'에 해당** **<'21년 성과 목표치(2,878명) 대비 3.9% 상향치(+112명)>** ※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 조직폭력배의 소규모·지능화 경향 등 단속여건이 악화된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임	조직폭력배 검거인원	검거인원 수기 통계(월보) 취합 ※ 특진, 특별승급 등 포상을 위해 실적을 검증하므로 통계의 진정성이 담보됨
국제범죄 사범 검거성과(30%)	1,744명	1,659명	2,032명	1,830명	**최근 3년 평균치(1,812명) + 1% (18명)를 초과하는 1,830명으로 산정** ⇨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초과하는 적극성 '상'에 해당** **<'21년 성과 목표치(1,718명) 대비 6.5% 상향치(+112명)>** ※ 국수본 체제 개편으로 산업기술수사와 인터폴 국제공조 인력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인력을 제외한 국제범죄수사 인력의 1인당 검거인원을 산출하여 목표치 환산, 3년 평균을 상회하는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국제범죄수사계(팀) 검거인원 ※ 시도청 중심 전문수사체제 운영에 따라 국제범죄수사계 평가	범죄통계시스템 및 검거인원 수기 통계(월보) 취합 ※ 특진, 특별승급 등 포상을 위해 실적을 검증하므로 통계의 진정성이 담보됨

20 경제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 추진배경 (목적)

○ 최근 사기범죄는 범죄조직 등이 금융·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익을 편취하는 다중피해 사기* 형태로 변화

– 민생·경제질서를 위협하는 다중피해 사기 근절을 위해 예방, 단속, 피해회복 및 제도개선까지 연계하는 대응역량 강화 필요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하는 '조직적 사기'에 해당, '20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기 중 조직사기 비중이 지속 증가('16년 9% → '20년 15%)

– 또한 국가·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보험사기, 보조금 부정수급,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범죄에 대한 단속 필요성 증대

○ 전화금융사기는 피해회복이 어렵고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악질적 범죄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

– '08년 전화금융사기가 최초 등장한 이래 범죄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1년 피해액은 7,744억에 육박

– 사회환경 변화, 기술 발전에 따라 신종 범죄수법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범행 특성상 향후에도 범죄피해 지속 증가 전망

○ 최근 경제범죄의 증가로 인해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의 중요성의 대두와 더불어 범죄수익추적수사의 중요성도 증가

– 특히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22.1.4.)으로 보전대상 범죄가 확대*됨에 따라 범죄수익추적 업무체계를 정비, 전문역량 제고 필요

* (개정 前) 대상 범죄 200여개 → (개정 後) 장기 3년 이상, 3년 미만 11개 범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다중피해 사기범죄 대응강화)** 다양한 금융기법과 통신수단을 이용한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수사체계에서 벗어나 다중피해 사기 집중대응 체제를 구축

– 「다중피해 사기범죄 대응 T/F」를 구성,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다단계사기, ▲사이버사기 ▲조직사기 등 단속 추진

○ **(전화금융사기 척결 종합대책 추진)** ’22년 전화금융사기 척결 T/F를 운영하여 전국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협의, ▲신종 수법 등 단속 및 대응, ▲정책과제 발굴 등 종합 대응체계 구축

– ’21년 신설한 수사상황실을 경찰청, 과기부, 금융위, KISA 등이 포함된 ‘전화금융사기 통합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운영

○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난지원금 등 보조금 규모가 지속 확대되어 국가·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필요

– 시·도청 직접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첩보수집 강화, 권익위 신고센터와 협업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적극 단속

○ **(보험사기 특별단속)** 최근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등 사기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수사역량 집중·강화 필요

– ’22년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공·사보험 대상 사기범죄를 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문체부, 특허청, 지식재산 보호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상표권 침해 상품 제조 및 유통, ▲저작권 침해, ▲특허권 등 기타 산업재산권 침해 행위 단속

○ **(범죄수익추적 업무체계 개편)** 시·도청 수사과로 범수팀 인력을 이관하고 경찰서 지능팀에 범수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등 全 수사부서의 범죄수익추적 업무체계 개편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계획」 수립 · 하달	1~2월	
	「범죄수익추적수사 업무체계 확대 개편 및 고도화 계획」 수립 · 하달	1~2월	
	「’22년 전화금융사기 척결 종합대책」 수립 · 하달	2월	
	「다중피해 사기범죄 대응강화 계획」 수립 · 하달	2~3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의 디딤돌」 개정	2~3월	
	「조직적 사기 특별단속 계획」 수립 · 하달	3월	
	「전화금융사기 1차 특별 자수 · 신고기간 운영계획」 수립 · 하달	3월	
	상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교란행위 집중단속 계획 수립 · 하달	3월	
2/4분기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8대 범행수단 특별단속 계획」 수립 · 하달	4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영상 송출	4~5월	
	시도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및 경찰서 전담요원 대상 전문화 교육	4~5월	
3/4분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계획」 수립 · 하달	7월	
	「보험사기 특별단속 계획」 수립 · 하달	7월	
	「전화금융사기 2차 특별 자수 · 신고기간 운영계획」 수립 · 하달	7월	
	하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교란행위 집중단속 계획 수립 · 하달	7월	
	’22년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영상 제작	7~9월	
	「하반기 전화금융사기 8대 범행수단 특별단속 계획」 수립 · 하달	8월	
4/4분기	각 테마별 단속 결과 등 현황 분석 및 개선점 검토	10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영상 송출	10~12월	
	다중피해 사기범죄 집중 단속 성과분석 및 보도자료 배포	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全 국민

□ 기대효과

○ 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경제환경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다중피해 사기범죄 근절에 경찰의 全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축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다중피해 사기' 등 국민과 밀접한 기획수사를 추진하여 경제범죄 근절

○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병행으로 범죄이익 조기 박탈 및 실질적인 처벌효과 제고하여 회복적 정의 실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21년 조직개편(국가수사본부 신설)으로, '22년 단위사업명 변경

- <'21년> 범죄수사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범죄수사 (Ⅰ-2-재정②)			
	① 범죄수사(1231)	일반회계	1,701
			1,705
	■ 범죄수사역량강화(311)	일반회계	583
	■ 현장수사활동(312)	일반회계	1,089
	■ 형사사법업무전산화(511)	일반회계	29

- <'22년>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강화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2
범죄수사활동 (Ⅰ-2-재정②)			
	①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강화(1231)	일반회계	4,753
			4,753
	■ 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강화(312)	일반회계	4,75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가중치 35%)	12.4	10.2	10.2	12.0	하단 참조	’22년 주요 기획수사 검거인원 / 전국 수사관 인원	경찰청 관리 통계 (시도 경찰청 보고 및 시스템 관리)
전년 대비 전화금융사기 발생 감소율 (단위 : %) (가중치 35%)	+10.4	-15.9	-2.2	-2.8		(’22년 발생건수-’21년 발생건수) / ’21년 발생건수 × 100	
1인당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금액 (단위 : 억원) (가중치 30%)	16.3	10.4	56.0	30.4		’22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 / 범죄수익추적 전담 인력	

< 목표치 산출근거 >

○ ’22년 성과지표 설정 배경

- 경제범죄수사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다중피해 사기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대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범죄수익추적수사를 통해 회복적 경찰 활동을 장려하고, 중점 추진 과제의 실질적인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총 3개 지표를 설정·관리
- **(가중치 부여)** ’22년 추진 업무에 따른 각 지표의 중요성, 대표성을 감안하여 가중치 부여

  ⇨ ‘경제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강화’ 과제 총 성과 달성도(%)

  =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달성도(%) × **0.35**) +

  = (전년 대비 전화금융사기 발생 감소율 달성도(%) × **0.35**) +

  = (범죄수익 추적수사 지원건수 달성도(%) × **0.30**)

○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지표 산출 근거(업무계획 Ⅱ-목표③-1-③ 지표화)

- ’22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제범죄 기획수사 추진 실적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기획수사(국고보조금,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실적을 측정산식에 따라 산출

- 본 지표 산출방법에 따를 때 '19년~'21년간 1인당 기획수사 검거인원은 감소 이후 유지되는 추세로('19년 12.4명 / '20년 10.2명 / '21년 10.2명), 대대적인 특별단속과 경제·사회·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 범죄에 대한 시의성 있는 단속을 통한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제범죄 근절을 위해 **최근 3년 평균치 10.9명의 110%를 상회하는 12.0명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치를 선정**

○ **'전년 대비 전화금융사기 발생 감소율'** 지표 산출 근거(업무계획 Ⅱ-목표③-1-① 지표화)

- 전화금융사기는 검거활동뿐만 아니라 범행수단 차단, 피해예방 홍보 등 다각적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피해금(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합산)이 지속 증가하였음

※ '17년 2,470억 → '18년 4,040억 → '19년 6,398억 → '20년 7,000억 → '21년 7,744억

- 또한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원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하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범죄로, 궁극적으로는 검거뿐만 아니라 발생건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감안하여 '22년 성과지표로 선정
- 본 지표 산출방법에 따를 때 '18년~'21년 발생건수는 아래와 같고, 전년 대비 발생건수 증감율은 '19년~'21년 각각 +10.4% / -15.9% / -2.2%와 같이 산출됨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발생건수	34,132	37,667	31,681	30,982
증감율		+10.4%	-15.9%	-2.2%

-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는 사회변화, 기술발달, 신종수법 등장 등의 영향으로 감소시키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피해가 가장 크고 단속·홍보·제도개선·협업강화 등 모든 정책의 종합 결과물인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발생건수 증감율의 평균치인 '–2.6%'의 110%를 상회하는 '–2.8%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 **'1인당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금액'** 지표 산출 근거(업무계획 Ⅱ-목표④-4-① 지표화)

- 최근 경제범죄수사의 패러다임은 피의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및 범죄수익 환수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청은 '19. 1월부터 각 시도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임

* '19년 43명 → '20년 78명 → '21년 149명 (정원 기준)

- 특히 '22년은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1. 4.)으로 보전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범죄수익 추적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 점을 감안, 실질적인 범죄수익 추적수사 성과를 책정할 수 있는 '1인당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금액'을 '22년 성과지표로 선정
- 본 지표 산출방법에 따를 때 '19년~'21년 실적은 '20년에 감소하였다가('19년 16.3억 → '20년 10.4억), '21년에 급증(56.0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3년 평균치 27.6억의 110%를 상회하는 '30.4억원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21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치안 역량 강화 및 성매매 등 유흥시설 불법행위 합동단속

□ 추진 배경

○ 양적 단속에서 벗어나 추적 수사를 통한 성매매 알선자 검거, 건물주 입건, 범죄수익금 환수(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과세자료 통보) 등 불법영업 의지를 차단하여 생활 속 질서 유지

– 적발된 후에도 재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 차단 대책을 강구,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 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

○ 그간 단속 활동만으로는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성매매 수요차단' 등 성매매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

– 성매매 광고 행위(성매매 전단지 배포, 알선사이트 광고) 차단 등 성매매 예방 활동 중점 추진

○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와 함께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합동점검과 코로나 방역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단속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국민의 건강권 확보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코로나 변이 우세종에 따른 급속 확산 추세로 차단 노력 지속 필요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위반업소 재영업 의지 차단 등 근원적 불법 영업 근절 추진]

○ **(근원적 차단)** 단속 후 추적 수사를 통한 ▵범죄수익금 전액 환수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알선자·장소 제공자 수사 강화

▸(범죄수익금 환수)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등 범죄수익 전액 추적·환수

▸(재영업 행위 차단) 단속 후 성매매 알선자·실업주·장소 제공자 등 철저한 추적 수사로 전원 입건, 재영업 행위 차단

○ **(풍속수사팀 확대 운영 등 역량 강화)** 실업주 추적 수사, 건물주 입건, 범죄수익금 환수 등 근원적 차단을 위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풍속수사팀 운영 확대

▸ 풍속수사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中 15개청 166명 운영 중, 단계적 확대추진
▸ 단속·수사체계를 일원화한 풍속수사팀 확대 운영으로 단속, 수사 부서에서 반복 조사 등 성매매 피해 여성 인권침해 방지 추진

– 풍속수사팀 범죄수익금 추적 수사 및 사이버 수사기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 풍속단속·수사 교육과정(경찰인재개발원, 연 4회 100명), 온라인 풍속업무 교육 등 확대

– 사이버 단속 강화(△인터넷 IP·도메인 추적 및 전자정보 압수수색 △사이트 폐쇄)를 위해 사이버수사 경험자 풍속수사팀 배치

[성매매 예방 활동 및 단속 강화로 근원적 차단 추진]

○ **(성매매 광고 차단 시스템*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 間 통화를 차단하고 신속한 이용정지로 성매매 예방

* ACS(Auto Call System) : 성매매 전단지나 알선사이트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자동발송 시스템에 등록, 동 번호로 3초마다 계속 전화하여 성 구매자의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

▸ 성매매 광고 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게시물 삭제 및 차단(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

○ **(단속 강화)** 온라인 이용 성매매 등 접근경로 변화에 맞춰 온라인 성매매 연중 상시단속,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 지속 추진

– 시·도경찰청 특성을 고려, 관계 기능·부처(여가부, 지자체 등)와 협업하여 계획 수립 후 내실 있는 단속으로 실효성 제고

<중점 추진사항>

온라인 성매매	① 성매매 알선 사이트 연계 오피스텔·성매매업소 단속, 채팅앱 성매매 단속
	②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진 추적 수사 및 사이트 폐쇄
	③ 성매매 광고 차단 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성매매 알선 광고 차단
오프라인 성매매	① 지역협의체(여가부·지자체·교육부 등) 합동 성매매 집결지 등 점검·단속
	② 코로나19 유흥시설 합동점검 시 성매매 단속 병행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지자체와 유흥시설 등 합동단속 지속 추진]

○ 지자체와 함께 유흥시설 등 대상으로 적극적 합동단속 실시

– ▵영업 제한 시간 위반 ▵일반 방역수칙 위반 ▵위반업소 재영업 등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적극적 점검 및 행정 응원 실시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단속을 피해 예약 손님 대상 음성적 운영중인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집중단속

○ 시기별, 지역별, 업종별로 수시로 변경되는 거리두기 단계 및 행정명령에 대한 신속한 전달로 합동단속의 실효성 제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단속 인력(경찰/지자체) 및 결과 통계 정리 중대본·경대본 자료 제공, 정책 마련 지표 활용

○ 장기간 점검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범정부 차원 재난 대응 추진동력 확보 위해 특별승진·승급·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노력

※ 특별승진·승급, 표창-인사과 협의 중 / 포상 휴가 120명·장려장 120매 확보

[단속 근거 마련 및 대응 지침 등 작성·배포]

○ **(신·변종업소 대응)** 리얼돌 체험방*,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출현 시 관계기관(법무부·여가부·산업부·식약처 등)과 협력,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1.6월 처벌 근거 마련 지속 점검/단속으로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으나 성인 리얼돌 수입이 본격화되면 변종업소 발생 가능성 농후,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대응 지침 등 작성·배포)** 근원적 차단활동(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건물주 입건, 과세자료 통보 등), 불법 풍속업소 및 신·변종 업소 단속 대응 지침(최근 사례 및 법률 개정내용 포함) 등 작성·배포

[유관기관 합동, 시기별 집중단속 추진]

○ 유관부처(교육지원청·지자체)합동, 매 학기 개학 전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유해업소(키스방, 성인용품점 등) 지도·단속 기간 운영

○ 온라인 성매매알선 사이트(오피스텔 업소) 및 신변종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기간 운영, 사이트 단속 후 방심위에 폐쇄요청(4~5月)

○ 게임물관리위원회 합동, 불법 게임장, 성인 PC방 불법영업(환전, 개·변조 등) 집중단속실시(6,10月)

○ 출입국관리소 합동,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업소 집중단속(12月)

○ 시도청 의견수렴 후 지자체 특성에 맞는 협업과제 도출, 중장기 목표 설정하여 단속 추진

※ 성매매 집결지, 클럽 등 유흥시설, 사행성 게임장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 고려

[풍속업무 담당자 유착비리 근절 강화]

○ 풍속담당자 '적격심사위원회*' 운영, 자격 여부 엄격 심사**(연중)

* 위원장-경찰서장, 위원-청문·생안·여청·수사·정보과장 등

** 인사발령 직후 경찰청·시도경찰청 주관 운영 실태점검

– 적격자 선발을 위한 동료평가 및 관서장 추천 등 검증 절차 진행, 부적절 사유(금전·성 비위 등 징계이력)확인

○ 시·도경찰청 주관 '특별관리업소*'관리 및 유흥업소 신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단속 봐주기 등 유착 비리 사전 차단(연중)

* 특별관리업소 지정 후 시·도경찰청에서 단속 또는 他 경찰서와 교차 단속실시

○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전국 풍속담당자 청렴 교육 강화*

* 코로나19 상황 등 감안 경찰사이버교육포털 내 청렴 교육 이수 및 시·도경찰청 별 청렴 교육 별도 시행(年 1회 이상)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코로나19 관련 '21년 건수 위주 단속 탈피, 위반업소 재영업, 방역을 저해하는 무허가 영업 등 차단활동 적극 추진	'22.1.4~	지자체 식약처
	신학기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	3.2~3.29	행정안전부 교육부
2/4분기	온라인 등 성매매 사범 집중단속	4~5월	여가부
	불법 게임장 집중단속	6월	문체부 게관위
3/4분기	신변종 성매매업소 집중단속	7월	여가부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8~9월	행정안전부 교육부
4/4분기	불법 게임장 집중단속	10~11월	문체부 게관위
	외국인고용 성매매업소 단속	12월	법무부 출입국
연중	성매매 단속, 성매매 집결지 합동 점검·단속, 불법 게임장 단속,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 풍속영업자, 여가부·교육부·문체부·법무부(출입국사무소)·과기부·지자체·세무서·소방 등 유관부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성매매 피해상담소, 통신사 등

□ 기대효과

○ 실업주 추적 수사, 범죄수익금 환수,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 근원적 차단활동으로 불법영업 근절, 국민적 경각심 고취

○ 단속 위주에서 성매매 광고 차단 등 성매매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 성매매 근절로 관련 여성 보호 및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불법풍속사범 단속영량 강화(311)			
①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311)		5.8	3.46
■ 풍속업소 단속장비 구매		2.2	자치이관
■ 민관합동단속경비		1.5	1.46
■ 풍속담당요원 특근매식비		0.9	0.98
■ 성매매수요차단시스템 통신료 등		1.1	1.1

□ 성과지표 및 측정 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22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지수	27.0	29.5	27.5	32.5	30	'21년 실적(32.5, 목표치(28)대비 4.5점↑) 분석 결과 예년 대비 감염병예방법위반 단속 실적이 급격히 상승 하였음. 올해는 거리두기 완화 등 코로나 발생 이전 상황으로 전환 예상되어 '19~'21년(3년간) 실적 평균(29.8)의 2점 상향한 30점으로 공격적 목표 설정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지수 + 근원적 차단활동 지수**	KICS 통계(단속건수) 및 월간보고(인력)

* **생활 질서 위반 사범 단속점수 및 근원적 차단활동 점수** 산출지표

구분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		근원적 차단활동
성매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3, §14, §15)	건당 3점	① 구속(인원 당 20점) ② 성매매·게임장 건물주 입건(인원 당 5점) ※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만 인정 ③ 압수 게임기 / 5~20↓ / 20대↑ / 50대↑ / 100대↑ 현금 / × / 2~5백↓ / 5백만↑ / 천만원↑ 점수 / 2 / 5 / 7 / 10 ④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결정 금액 기준) 신청후 기각 / 1천만원 미만 / 1~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3점 / 7점 / 10점 / 15점 ⑤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1점 - 명의위장업소(풍속시스템) - 5,000만 원 이상 통보(온나라공문) 5점 - 100억원 이상 통보 ⑥ 검거인원(동일 사건, 질서 기능 송치 인원에 한함) 인원 / 10명↑ / 20명↑ / 50명↑ / 100명↑ 점수 / 3 / 10 / 15 / 20
	- 성매매처벌법 - 교육환경보호법	건당 2점	
불법 게임장	- 사행행위규제법 - 게임산업법	건당 1점	
코로나 19관련	- 감염병예방법 - 식품위생법	건당 3점	
기타	성매매, 유해업소 건물주통지문 발송	건당 0.2점	
	- 풍속영업규제법 - 음악산업법	건당 1점	
	- 성매매광고 차단	건당 0.1점	
	- 성매매처벌법·아청법 동일 건 알선자만 5명 이상 기소 - 성매매처벌법 §20 사이트운영자 3명 이상 검거 - 성매매처벌법 §22 (범죄단체)	검거 건당 20점	
	- 대형업소 단속 (성매매 100평↑, 게임장 200대↑)		

성과목표Ⅱ-2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1) 주요 내용

○ **<인권 중심의 경찰활동 구현>** 새롭게 변화한 경찰조직 체계에 부합하는 경찰활동 전반에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인권규범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찰행정을 재설계하고 이를 제도화 추진

○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정보경찰 개혁내용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교육 등 준법 촉진 지속

- 신원조사 정확도 제고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으로 '경찰행정의 신뢰도'제고 추진

○ **<성숙한 집회문화 조성>**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을 대원칙으로, 집회시위 자유와 공공안녕·질서의 조화 도모

- ▵위험정보 분석·법률지원 등 선제적 정보활동 ▵대화경찰 적극 활용 ▵교육 등 역량 강화 등 주요과제 지속 추진

○ **<수사 인권·피해자 보호 강화>**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 정비, 인권·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 피해자에 대한 보복·재범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조속한 호복을 도모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추진

○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집회시위 참가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22년은 제20대 대선·제8회 지방선거 관련 그에 대한 빈틈없는 경비·안전활동으로 안전하고 평온한 선거진행 기여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인권침해 권고율
관리과제	인권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스템 구현	인권영향평가 반영률 / 한국형 동료개입 프로그램 전문강사 활용률
	인권 보호와 준법역량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준법관리 역량강화 / 행정지도 건수 / 정보경찰 전문화 교육
	정보상황 기능 역량 강화로 집회의 자유・인권과 안전・공공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집회문화 조성	평화적 집회문화를 위한 상황정보 활동 지수 / 국민평가 / 상황 대응역량 강화율
	수사상 인권과 피해자 중심의 경찰활동 전개	인권보호 제도 개선 / 인권·윤리의식 제고 위한 교육·홍보활동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건수 / 회복적 경찰활동 평균 실시 건수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집회현장 법 집행 기준 확립 및 현장 대응력 강화 / 경찰부대 근무 만족도 / 경찰관기동대 창설 달성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인권침해 권고율	9.9	9.2	9.3	8.8	인권침해 권고율은 하향을 유도해야 하는 지표로, 전 3년도 실적 평균값(9.4)과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8.8)을 감안하여, 평균값 및 역대 최고치인 8.8%로 설정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 경찰 권고건수÷전체 권고건수)×100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건수 통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경찰 개혁, 국가수사본부 설치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조직 체계의 변혁에도 불구, 확대된 경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와 불안의 시각이 공존

○ 이러한 시각을 불식하고 신뢰받는 경찰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권한 남용과 절차 미준수 등에 대한 실효적 모니터링과 견제 시스템 등 인권 중심 경찰 활동 필요

– **(인권정책 기본계획)** 경찰업무 특성상 인권침해 위험성이 높아 인권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경찰행정의 중·장기 인권 비전을 제시하고, 체계적·지속적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경찰의 활동을 인권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해 기능별로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 관리

– **(인권영향평가)** 평가 과정에 전문가 등 외부의 시각을 적극 반영하고 평가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공정성 · 객관성을 높이고, 경찰활동 전반에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 통제하는 경찰의 대표적 인권정책으로 안착

○ 경직법 개정·大令 제정 등 정보경찰 개혁 법제화에 맞춰 정보활동 패러다임을 '국민안전' 및 '위험 예방·대응' 중심으로 전환

– 또한, △현장점검·교육 강화 △준법감시 제도화 △경찰위원회 보고 실질화 등 '내·외부 통제' 활성화 추진

○ '21.11월 이후 집회 관련 방역수칙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로, 연내 추가 완화·해제 시 집회·시위 빈도·규모 확대 예상

※ 코로나 19 이후 집회시위 개최건수 : '20년 77,453건 → '21년 86,552건(11.7%↑)

– 갈등이 우려되는 집회시위 현장에 대화경찰을 적극 배치, 관계자(집회참가자·경찰·시민)와 공식적 소통·협력 강화

○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권 행사에 대한 통제 필요성 및 인권보호 활동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 21년 인권위 권고 48건 중 절차준수 미흡(24건), 경찰력 과잉(10건) 등

○ 아울러,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舊 신변보호)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요구도 증가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 : '20년 14,776건 → '21년 24,810건 (67.9%↑)

○ '21년 국수본 출범 이후, 「인권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국민 권익보호와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환경 정립에 집중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찰의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경찰 수사에서 인권침해라는 말이 사라졌고, 인권을 위한 경찰의 성찰과 실천은 치안 현장의 변화로 이어졌음."

('22.3.17. 신임경찰 임용식 中 대통령 말씀)

○ ▵제도적 장치 강화 ▵인권위 권고 반영 등 인권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회복적 경찰활동 ▵범죄피해평가 운영 확대 등 경찰 단계 긴급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강화로 국민 요구 부응

○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 ▵선거 및 새정부 출범 등으로 집회 수요는 증가 예상,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안정적으로 관리

○ '23년 의경 폐지가 완료됨에 따라 몸으로 막는 인력 위주 대응 방식 탈피, 적은 인력으로도 안전한 집회 관리를 위한 장비 보급

※ ▵노후 방패·보호복 개선 ▵트레일러형 안전펜스 도입 ▵신형 철제 P/L 도입 등

○ 의경 대체로 경찰관기동대가 크게 증가하여 내부만족도의 중요성 부각, 경찰부대 근무만족도 개선 통해 치안서비스 향상 도모

(4)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 사이버 경찰청 '회복적 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페이지 (www.police.go.kr/www/security/support/support01.jsp)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22 인권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스템 구현

□ 추진배경

○ 수사권 개혁 등 경찰권 확대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로 경찰의 적극적인 인권정책 및 인권보호체계 구축 필요

○ 치안행정 전반에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인권규범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찰조직을 재설계하고 이를 제도화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경찰 비전 선포식 개최

– 경찰 행정의 중장기 인권 비전을 제시하고, 경찰 인권정책의 제도적 실천 증진을 위해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21. 9월부터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정책연구용역 진행 중(22. 2월말 完)

– 경찰의 활동을 인권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해 기능별로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 관리

–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논의를 위해 인권정책 협의회 개최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인권경찰 비전 선포식 추진

○ 인권영향평가제 운영 고도화 및 관리시스템 개선 추진

– 평가 과정에 전문가 등 외부의 시각을 적극 반영하고 평가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공정성 · 객관성을 높이고, 경찰활동 전반에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 통제하는 경찰의 대표적 인권정책으로 안착

△제도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자문 확대 등 외부의 시각 적극 반영 △인권영향평가 절차 구체화·세분화 및 관리시스템 개선 등

– 평가관리 재정비 · 체계화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 경찰행정 뒷받침

○ 경찰 인권교육 혁신계획 수립

– 경찰 인권교육 혁신계획으로 인권교육의 체계적 기틀 마련

※ '인권경찰관 양성과 인권교육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인권교육의 내용 · 운영 · 점검이 유기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기본계획(NAP, 5개년)과 상호연동하여 발전방안 구축

– 「경찰 인권보호 규칙」 개정을 통해 경찰 인권교육의 대상과 시간, 업무기능별 교육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인권교육 내실화

※ 규칙 제23조～제25조 : 의무화 및 대상·시간 구체화

– 그간의 인권교육 운영을 분석, 경찰 활동 전반을 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 혁신계획 설계·추진으로 인권교육 혁신 원년 뒷받침

○ 경찰 동료개입 프로그램 도입·시행

– 경찰관의 인권침해 등 불법·부당행위에 동료 경찰관이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제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도입

- ▸ 경찰은 직무상 다양한 갈등과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개개인이 모든 순간 최선의 선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이에 대해 사후적으로 현장판단의 적정성과 과오를 따지는 현 시스템은 미봉책에 불과
- ▸ 각종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관리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는 같은 시점, 같은 현장에서 같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동료 경찰관의 개입이라 할 수 있음
- ▸ 동료 경찰관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을 부여하여 경찰관 개인의 위법 행동을 예방하고, 인권·윤리적 직무수행을 이끄는 인권·윤리적 기반 경찰활동의 조직 문화 구축

- 경찰의 계급조직 특유의 위계질서에 따른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개입의 심리적 저항을 완화하고, 정당한 개입을 장려하는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낼 문화 혁신 프로그램으로 추진

- '22년 상반기 전국 경찰관서 시범 운영을 통해 양적·질적 데이터 수집 및 통계분석으로 한국형 동료개입 프로그램 모델 구축

○ **경찰청 인권위원회 역할 내실화**

-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사안을 전담하는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감시기구로 역할 강화

-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통한 인권가치 반영,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권고, 인권침해 조사 참여 및 개선책 제시 등의 실질적 역할 수행

- 시·도청 인권위원회 운영현황의 지속적 검토 및 운영 내실화로 실효적인 경찰의 인권기구로 자리 매김

- 경찰청 인권위원회 활동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경찰의 인권 중심 개혁 추진사항을 널리 홍보

○ **시민 참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시행**

- **(인권영화제)** 시민·경찰을 대상으로 인권을 주제로 영화 소재를 공모하여 당선작을 영화로 제작, 인권을 매개로 시민·경찰이 교감하는 소통의 場 마련

- **(인권아카데미)** 인권 관련 다양한 주제와 콘텐츠를 연결, 시민과 경찰이 함께 인권을 배우고 토론하는 '인권아카데미' 운영(분기 1회)

※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등 활용하여 비대면 아카데미로 진행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관리시스템 개선 추진	3월	
	경찰 동료개입프로그램 시범운영 시행계획 수립	3월	
	인권아카데미(1차)	3월	
2/4분기	경찰 인권교육 혁신 계획 수립 시행	4월	
	「경찰 인권보호 규칙」개정을 통해 인권교육 세부적 규정 신설	4월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정책 협의회 개최	5월	
	인권경찰 비전 선포	6월	
	인권아카데미(2차)	6월	
3/4분기	경찰 동료개입프로그램 강사 역량 강화 보수교육	7월	
	국가인권위 등 다기관 참여 '경찰 인권교육 협의회' 구성	9월	
	경찰 동료개입프로그램 확대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9월	
	인권아카데미(3차)	9월	
4/4분기	경찰 동료개입프로그램 강사 워크샵	11월	
	인권아카데미(4차)	11월	
	제10회 경찰청 인권영화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 이해관계집단 : 인권 관련 시민단체, 경찰

□ 기대효과

○ 새로운 경찰 조직 체제에서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조직적·제도적 정비로 인권보장 강화

○ 인권영향평가 운영 고도화로 인권 중심의 경찰행정을 견인하고, 경찰의 주체적 인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통제제도로 활용

○ 경찰동료개입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찰 불법·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인권·윤리적 직무수행을 이끄는 인권기반 경찰활동 실현

○ 현장 중심의 인권교육 혁신계획 설계·추진으로 인권교육의 체계적·효과적 실천 기틀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인권침해 요소를 가진 관행적 경찰활동의 정상화를 통해 대국민 인권보호 강화			
■ 인권·피해자보호활동(7133-312)	일반회계	26.46	34.5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인권영향평가 반영률 (50%)	42%	50%	94%	93%	▸ 법령제·개정, 주요정책 수립시 인권영향평가제를 통해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의견표명 및 제언에 대한 해당 기능의 반영률을 제고하여 제도 운영 취지에 맞게 인권 중심의 경찰행정으로의 실질적 개선 효과 제고 ▸ 인권영향평가 반영률의 통계기간 대비 평균 증가율('19~'20 : 19%, '20~'21 : 88% ⇒ '22 추세치 : 53.5%)에 의해 '21년도 반영률 목표치 60%에 추세치 이상 적용하여 '22년도는 93% 반영을 목표로 설정	인권영향평가 의뢰부서 반영 건수 / 권고·의견표명 및 제언 건수 × 100(%)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관련, 의뢰 건수 등 통계자료 활용
한국형 동료개입 프로그램 전문강사 활용률 (50%)	신 규		93%	103%	▸ 불법·부당한 경찰관 행사를 억제하는 실효적 제도로 개발된 경찰동료개입 프로그램이 현장과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도입을 통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전문강사의 배출 및 현장 활용을 지표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 ▸ 한국형 동료개입 프로그램 전문강사 활용률은 전년도 실적치의 10%이상 수준으로 '22년도는 103% 활용을 목표로 설정	현장 투입 강의 건수 / 한국형 동료개입 프로그램 전문 양성 강사 수 x 100(%)	한국형 동료개입프로그램 개발의 단계적 이행 관련 자료 활용

23 인권 보호와 준법역량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 추진배경 (목적)

○ 국정운영 방향 및 국정과제·경찰청 주요업무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 '인권 보호'와 '준법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정보업무 체계 개선

▸ **【주요업무계획】 △정보경찰 개혁** △체계적·입체적 준법지원으로 **준법 정보활동 현장 정착** △신원조사 시스템 전산화를 통한 정확도 제고

○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보경찰 개혁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함께 경찰 개혁 핵심과제로 부각

– 이에, 경찰개혁위 권고안 발표('18.4월) 후 부단히 노력 중인 정보경찰 개혁을 마무리·개선하고,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법 정보활동 모니터링·교육 등 '준법역량 강화' 추진

· 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위험 요소들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제거**하는 활동을 체질화·일상화해야 합니다. (중략) 집회시위를 비롯한 모든 치안현장에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법을 집행할 때 사회 전반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민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22.1.1. 경찰청장 신년사)**

○ 정보업무 전반에 '인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투영되도록, 신원조사 정확도 제고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 정보 경찰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경찰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현장 정보 역량을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보경찰 개혁 안착을 위한 준법역량 강화) 정보경찰 개혁 법제화 2년차를 맞아, 준법 정보활동의 항구적 현장 정착을 위한 준법관리 체계 내실화 및 역량 강화

– 시도청 준법관리자(과장)·책임관(계장) 역할을 강화하고, 全 시도청 준법지원 담당 전담인력 확보 추진

· **<시도청 준법관리자·책임관 역할 강화>** △시도청(소속 署 포함)에서 생산하는 모든 정보자료 모니터링 업무 부여 △시도청 자체 준법교육·점검 강화 등
· **<시도청 준법지원 전담인력 확보>** '21년 全 시도청 담당 신설(정보관리 업무 병행) → 준법지원업무는 정보활동의 내부통제기구·준법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독립성·법률 전문성 필요, '23년 소요정원을 통해 전담인력 확보 추진(18개청 22명)

– ▵정보자료 자기 진단 시스템 구축 ▵관서별 맞춤형 준법지원 ▵교육콘텐츠 강화 등 준법관리 역량 배가

· **<정보자료 자기 진단 시스템 구축>** 정보관이 작성한 정보자료에 대해 '자기 진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정보관 개개인의 자발적 자정능력 강화
· **<교육콘텐츠 개발>** 애니메이션 활용 콘텐츠 개발 등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 ▵정보경찰의 역할 ▵준법지원계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 등 개혁 성과 토론회·국가경찰위 보고 등 내·외부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

· **<토론회>** △정보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 방지를 위한 시도청별 현장 토론회 △정보경찰 관련 학회·전문가 등이 주관하는 토론회 적극 참여 등
· **<국가경찰위 보고 활성화>** 개혁 이후 달라진 정보경찰의 역할·정책과제(대화경찰·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 등 추진 경과·성과 등 주기적 보고('21년 10건 보고)

○ **(신원조사* 정확도 제고)** 신원조사 결과의 오류는 국가·국민의 피해로 직결되는 중요사안인 만큼, 오류 차단을 위한 선제적 관리 필요

*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충성심·신뢰성 조사

– 신원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내실화하고 현장 소통·지원을 강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오류 최소화하여 경찰행정 신뢰도 제고

※ (역대 오류율) '17년0.31% → '18년0.1% → '19년0.12% → '20년0.06% → '21년0.03%

– 또한, 신원조사·기록 全 과정을 온라인·디지털로 처리하는 '신원업무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21~'23년, 107억여원)' 차질 없이 추진

【 신원업무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시 효과 】

국민편의 증대	예산 절감 & 편익 효과	오류 최소화
•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신원조사 의뢰** 가능 • 구비서류 제출과 결과 **회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연간 **운영비 21억 절감** ① 인건비(15억) ② 등기료(2.4억) ③ 마이크로필름화(2.2억) ④ 유지보수(0.5억) 등	• AI 기술을 활용, 문자 자동 판독·입력 기능 구현 • 수기 입력, 육안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오류 차단

○ **(맞춤형 정보교육)** △신규전입자 전수교육 △인재원 협업 교육 △전문화 교육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여 현장 전문성 제고

- **(신규전입자 전수교육)** 상·하반기 인사 이후 2개월 內 전국관서 신임 정보관 상대로 공공안녕정보에 대한 이해 및 조속한 업무 정착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
- **(본청·인재원 협업 교육)** 가용범위 內 최대 교육 실시(46회, 920명) / 상황·협력 과정(10회, 200명) 및 국민안전 과정(2회, 40명) 신설로 외근 교육 강화
- **(전문화 교육)** 외부 전문가 초빙 국민안전 전문화 과정 확대(연 2회→3회 / 인재원 국민안전 과정의 심화 수준) 및 통일교육원 정보경찰 과정 운영(年 2회)

– 특히, 교육기관 및 현장 소통·지원을 강화해 정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확한 교육이력 관리로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 실현

- **(교육기관 소통·지원)** 본청 주관 인재원·중앙학교·警大 정보 교수요원과 정보교육 협의체 운영(분기별 1회), 현안 교육자료 공유 등 상시 협력
- **(현장 소통·지원)** 시도청 자체 직무교육 시 본청 기능별 계장·반장급(동료 강사 30명) 강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도청 교육 담당자 워크숍 추진
- **(교육이력 관리 전산화)** PORMS 內 전국 정보관의 전입연차·보직·교육 현황 등 인사·교육이력 관리시스템 구축('22.2月 개인별 DB 입력 진행 중)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현장 정보역량이 위축되지 않도록 비대면 교육 등을 활용, 내실 있는 교육을 적극 진행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정보전산)** 신원업무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계획 수립	’22.1월	
	(준법역량 강화) ’22년 정보경찰 준법관리 역량 안착 종합계획	’22.2월	
	(신원조사) ‘22년 신원조사 주요 업무계획 수립	’22.2월	
	(정보교육) ’22년 정보교육 종합 운영계획 수립	’22.2월	
	(정보교육) 전국 신규전입자 전수교육	’22.3월	
	(준법역량 강화) 상반기 전입자 준법 특별 교육	’22.3~4월	
2/4분기	**(정보교육)** 시도청 정보교육 담당자 간담회	’22.4월	
	(신원조사) ‘22년 현장자문단 운영계획 수립	’22.4월	
	(준법역량 강화) 준법 정보활동을 위한 현장점검	’22.4~7월	
	(정보전산) 신원업무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계약	’22.4~5월	
	(준법역량 강화) 시도청 준법 역량 강화 토론회	’22.4~12월	
3/4분기	**(준법역량 강화)** 하반기 전입자 준법 특별 교육	’22.7~8월	
	(신원조사) 全 시도경찰청 순회 교육·컨설팅	’22.7~9월	
	(준법역량 강화) 현장을 찾아가는 준법 관리(컨설팅)	’22.8~12월	
	(정보전산) 신원업무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중간보고	’22.9월	
4/4분기	**(신원조사)** 전국 신원조사 담당자 직무연수	’22.11월	
	(정보전산) 신원업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22.12월	
	(준법역량 강화) 시도청 준법 책임·지원관 워크숍	’22.12월	
	(준법역량 강화) ’23년 준법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분석	’22.12월	
연중	**(준법역량 강화)** 준법 문화 콘텐츠 발굴·제작 **(정보교육)** 정보교육 협의체 운영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국민 인권 신장

□ 기대효과

○ **(정보경찰 개혁 안착)** 정보활동의 구체적 범위·처리기준과 사실확인의 절차·한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 추진 등 정보경찰 개혁을 제도화하여 경찰 비대화 우려를 해소

○ **(준법역량 및 통제시스템 강화)** 정보경찰에 대한 내·외부의 촘촘한 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

○ **(신원조사 업무 전산화)** 신원조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의 온라인·디지털化로 경찰행정의 신뢰도 및 국민편익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table>
<tr><th colspan="2"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2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th></tr>
<tr><th>'19</th><th>'20</th><th>'21</th><th>'22</th></tr>
<tr><td rowspan="2">① 준법 정보활동 노력도 <50%></td><td>준법관리 역량강화 <30%></td><td></td><td></td><td>73.5</td><td>80.85</td><td rowspan="2">하단 참조</td><td>(준법관리계 현장 점검 × 70%) + (시도청 자체 점검 × 30%)</td><td rowspan="2">· 경찰청 주관 점검·간담회 등 건수
·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지도 자료</td></tr>
<tr><td>행정지도 건수 <20%></td><td></td><td>27회</td><td>35회</td><td>39회</td><td>행정지도 건수</td></tr>
<tr><td colspan="2">② 정보경찰 전문화 교육 <50%></td><td></td><td></td><td></td><td>99.28</td><td>하단참조</td><td>(교육 실적 × 50%) + (발전 노력도 × 30%) + (교육만족도 × 20%)</td><td>· 교육 계획, 결과보고서 등
· 본청-인재원 협업과정 수료자 대상 설문조사</td></tr>
</table>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세부 설명자료】

① 준법 정보활동 노력도 <50%>

○ 측정 산식

– 준법관리 역량강화(30%)

(준법지원계 현장 점검 × 70%) + (시도청 자체점검 × 30%) = '80.85' 달성 목표

※ 준법지원계 현장 점검은 70%, 시도청 자체점검은 30% 배점

– 정보자료 행정지도(20%) : 행정지도 건수

○ 목표값 산출 근거

1 <준법관리 역량강화> 정보활동 관련 법령·규칙 제·개정 등 법제화와 연계하여 준법지원계 중심의 현장 점검

– 본청 준법지원계는 '21년 현장점검· 지도(시도청·경찰서 점검 등) 87회 실시, 올해는 10% 증가한 95.7회 실시를 목표치로 설정

– 시도청 준법역량 관련 지표인 '시도청 자체 현장 점검·지도횟수'는 '21년 기준 42회로, 올해 목표치를 46.2회로 설정

⇨ 올해 목표치를 위 측정산식에 대입할 경우, '80.85'

※ (현장점검 <95.7> × 70%) + (시도청 자체 점검 <46.2> X 30%) = 80.85

2 <정보자료 행정지도> 준법지원계에서는 현장 정보활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법령·규칙 일탈 소지 확인, 정보관 대상 행정지도 실시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 행정지도(① 용어수정 → ② 당사자 교양 → ③ 당사자 주의 → ④ 소집교육), △관리자 주의 △감찰조사·수사의뢰

⇨ '21년 준법관리계 행정지도 건수는 35회, 올해는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39회'를 목표치로 설정

② 정보경찰 전문화 교육 <50%>

○ 측정산식

– 정보경찰 전문화 교육(50%)

(교육 실적 × 50%) + (발전 노력도 × 30%) + (만족도 × 20%) = '99.28' 달성 목표

※ 교육 실적은 50%, 발전 노력도는 30%, 만족도는 20% 배점

○ 목표값 산출 근거

1 <정보경찰 교육 실적> = (교육 수료 인원 ÷ 금년 목표 인원) × 100

– 前 3년간의 평균 정보경찰 교육 수료 인원은 2,746명('19년 2,573명, '20년 905명, '21년 4,758명)으로 '22년 목표치는 평균치의 178%인 4,900명(역대 최고치인 전년도의 103% 수준)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 '20년 코로나19로 교육실적 급감, '21년 비대면 교육 활성화

2 <정보교육 발전 노력도> = 분야별 수행 노력 총점

– '22년 신규지표로 △교육시스템 개선 △대내외 협력 △교육과정 발굴 등 정보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 노력도 100점을 목표로 설정

【 분야별 배점 기준 】

분야	교육시스템 개선	대내외 협력	교육과정 신설
배점	건당 15~25점	회당 5~10점	과정별 10~15점
기준	‣ 인프라(인력·예산·전산) 구축 25점 ‣ 교육 체계·제도 개선 20점 ‣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15점	‣ 他 기관 10점 ‣ 교육기관(경대·인재원) 7점 ‣ 대내(본청-시도청) 5점	‣ 他 기관 직무교육 15점 ‣ 본청 주관·교육기관·사이버 교육 콘텐츠 10점

※ 각 분야 달성을 위해서는 담당부서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대내외 기관·부서 및 전문 교수진과 유기적 협력을 해야만 결과가 도출되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지표임

3 <교육 만족도> = 교육과정 설문조사 결과 평균 × 20

– 교육의 효과성·현장 활용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정성지표로, '20년 최고치(임계치) 도달 후 하락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달성 난이도가 매우 높은 지표임

– 목표 달성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보경찰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근 3년 만족도 평균('19년 4.67, '20년 4.82, '21년 4.81)인 4.76점(5점 만점)보다 111% 상향한 4.82점(역대 최고치인 '20년 수준)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

⇨ 올해 목표치를 위 측정산식에 대입할 경우 '99.28'

※ (교육 실적<100> × 50%) + (발전 노력도<100> × 30%) + (만족도<96.4> × 20%) = 99.28

24 정보상황 기능 역량 강화로 집회의 자유·인권과 안전·공공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집회문화 조성

□ 추진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치명률 등의 지속 감소로 연내 방역지침 완화시 집회·시위 빈도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대본, 확진자가 급증하더라도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면, 방역조치 완화·일상회복 재추진 검토 방침
- 연간 집회 건수 : '18년 68,315건→'19년 95,266건→'20년 77,453건→'21년 86,552건

– 특히, 3월 대선·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현안 해결요구 집회 등이 계속되고, 선거 결과에 따른 진영간 갈등이 방역 완화와 맞물려 집회로 표출될 가능성, 공공안녕 위험 부담이 가중될 전망

○ △선제적 정보활동 △대화경찰 운영 △현장 대응역량 제고를 통한 안정적 집회시위 관리로 정책과제 목표를 달성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선제적 정보활동>** 법과 원칙에 따라 평화적 집회·시위를 적극 보장하고 위험·시민불편 요인을 최소화하는 사전 정보활동 추진

– **(위험정보 분석 강화)** 집회·시위 관련 정보분석 회의 등을 통해 공공안녕 위험요인 분석 및 시의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 **(적기 대응을 위한 대내외 정보공유)** 집회·시위 등과 관련, 적시에 유관 기능·부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 강화

– **(현장 法집행 지원)** 경비·수사·법무 등 관련 기능 협업, 집회·시위 대응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검토 및 소송 등 지원

○ **<대화경찰 활성화>** 집회시위 현장에 대화경찰을 적극 배치, 집회 참가자 및 유관 기능·기관 등과의 소통·협력 강화로 인권·안전 중심의 집회 문화 구현

– 또한, 대화경찰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활동체계를 정립하고 전문성 제고 방안을 추진

○ **<상황 대응역량 강화>** △우수사례·활동 노하우 등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자료 지원 △자체교육·인재개발원 협업 과정 등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연 중	유관 기능 및 기관 간 정보 전파·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	수시
	법집행 과정상 논란 발생 時 유관기능 협조하여 법률검토 후 법집행 지원	수시
	대규모 집회·시위 前 본청·시도경찰청 등 합동 정보분석회의 개최	수시
	집회·시위 현장에 대화경찰을 배치, 기본권 보장 및 불법행위 자정 강화	수시
	본청-인재개발원 협업, 교육과정 운영	수시
1/4분기	전문 정보관 육성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3월
	연간 대화경찰 운영계획 수립	3월
	분야별 주요 현안 관련 현장점검	3~4월
2/4분기	분야별 담당 정보관 교육·간담회	5~6월
	경비 기능과 협조, 집회·시위문화 대국민 여론조사	5~10월
3/4분기	분야별 담당 정보관 교육·간담회	7~9월
	외부 전문가 등 초빙, 전문화 교육 실시	7~9월
4/4분기	분야별 담당 정보관 교육·간담회	10~11월
	집회·시위 문화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분석	10월
	우수사례·현장활동 기법 등 자기 주도형 학습자료 지원	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 이해관계집단: 정보의 수요자인 경찰 각 기능 및 유관 기관

□ 기대효과

○ 공공안녕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함으로써

-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방지 및 감염병 확산 위험·시민불편 최소화

○ 집회·시위 자유와 국민 안전의 조화를 통해 사회안정에도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평화적 집회문화를 위한 상황정보 활동 지수 (50%)	37.71	50.90	55.46	61.01	최근 2년 상승세(9%) 보다 상향(10%) ※3년간 상승세이므로 추세치(22%)를 적용해야 하나, 과도하게 높아 적용 곤란	①사전 정보활동 50% [합동분석회의 실적 30% +법률지원 실적 20%] + ②대화경찰 운영 실적 50% [배치율 25%+활동실적 25%]	합동분석회의·법률 검토 자료 건수, 집회·시위 및 대화경찰 배치실적 등 통계자료 등 활용
국민평가 (25%)	41.40	34.90	74.9	59.22	등락이 있었던 만큼, 3년간 실적치 평균(50.40) 대비 17.5% 상향	여론조사 내용 중 집회시위 보장·안전 확보 노력·대화경찰 활동의 효과성 등 주요설문의 긍정 답변율 평균	경비국 여론조사 결과
상황 대응역량 강화율 (25%)	40.00	47.5	54.01	63.19	상승세이므로, 전년 실적에 3년간 추세치(16.22%)를 상회하는 상승률(17%) 적용	①교육 이행률 50%, (年 교육인원 / 목표인원) + ②분석 역량 향상도 50% (산식은 하단 참조)	상황분야 정보관 및 대화경찰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 결과자료 등 활용

【 산출 근거 】

1. 평화적 집회문화를 위한 상황정보 활동 지수(50%)

○ **대화경찰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표내 비율을 확대**(30→50%)하고, 그간 평가하였던 **현장 배치율 뿐 아니라 활동성과도 추가로 평가 기준에 포함**

○ **(측정 산식)** ①사전정보활동 50%(㉠합동분석회의 실적 30%+㉡법률지원 실적 20%) 및 ②대화경찰 운영 실적 50%(㉠현장배치율 25%+㉡활동실적 25%) 합산

> ①사전정보활동(50%) = ㉠정보합동분석회의 개최 실적 30%[(합동분석회의 개최 건수 / 대규모 집회·시위)×100×0.3] + ㉡법률지원 실적 20%[(법률지원 건수 / 대규모 집회·시위)×100×0.2]
> ※ 대규모 집회·시위 기준: 평시 1천명 이상, 코로나19 상황 지속시 300명 이내
>
> ②대화경찰 운영 실적(50%) = ㉠현장배치율 25%[(대화경찰 배치 건수 / 집회·시위 건수)×100×0.25] + ㉡활동실적 25%[(갈등완화 등 활동성과 건수 / 집회·시위 건수)×100×0.25]

○ **(목표값 산출근거)** 최근 3년간 상승세이므로 추세치를 적용해야하나, 20년 실적 급상승(33%)으로 추세치(22%)가 과도하게 높아 적용 곤란

–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전년도 실적(55.46)에 최근 2년간 상승세(9%)보다 높은 10% 적용(**평가 기준의 '상' 등급**에 해당)

⇨ 올해는 방역지침 완화 및 주요 선거(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집회·시위 건수·규모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도전적인 수치임

2. 국민 평가(25%)

○ 그간 집회·시위가 평화적이라는 국민 평가와 경찰의 노력간 상관관계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되어온 만큼

– 올해부터는 경찰의 집회시위 보장 노력·대화경찰 활동의 효과성 등 **경찰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설문으로 여론조사 후 실적에 반영, 평가의 가치 제고**

○ **(측정 산식)** 주요 설문에 대한 긍정 답변율의 평균

○ **(목표값 산출근거)** 등락이 있었던 만큼, 3년간 실적치 평균(50.40)을 기준으로 17.5% 상향된 목표치 설정(**평가 기준의 '상' 등급**에 해당)

3. 상황 대응역량 강화율(25%)

○ 자체 법률·판례 교육뿐만 아니라 인재개발원·통일교육원 등 내·외부 기관과 연계, 대화경찰·사회·경제·공공 등 **분야별 전문화된 교육 진행**

○ **(측정산식)** ①교육이행률 50%(연 교육인원 / 목표인원) 및 ②분석역량 지수* 합산

– ②분석역량 지수는 시도청 소속 정보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활용도 등에 따른 평가로, 시도청별 획득 점수를 소속 정보관 인원으로 나누어 지수를 산출하며

– 전체 시도청(18개) 中 평균점수를 9.5점 이상 획득한 시도청이 50%(9개) 이상이면 S등급(100점), 35%(7개)인 경우 A등급(90점), 25%(5개)인 경우 B등급(80점), 25% 미만(4개 이하)인 경우 C등급(70점)으로 평가

점수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산식	[평균점수(시도청 자료 총 획득점수/각 시도청 정보관 현원)] > 9.5점↑			
기준	9개 이상 시도청	7개 이상 시도청	5개 이상 시도청	4개 이하 시도청

○ **(목표값 산출근거)** 최근 3년간 상승세이므로, 전년 실적에 3년간 추세치(16.22%)를 상회하는 상승률(17%) 적용(**평가 기준의 '상' 등급**에 해당)

- ①교육이행률 중 '목표 인원'은 작년(전체 정보관의 10%)보다 적극적으로 상향, 전체 상황정보관의 15%로 설정 / ②분석역량 지수는 S등급 기준을 21년 '8개 청 이상'에서 올해 '9개 청 이상'으로 상향

25 수사상 인권과 피해자 중심의 경찰활동 전개

□ 추진배경

○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권자로 설정, 경찰 수사에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중립성·독립성·전문성 요구

○ 아울러, 경찰의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舊 신변보호) 신청이 급증하여 더욱 세심한 현장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 : '20년 14,776건 → '21년 24,810건 (67.9%↑)

○ 이에 △수사상 인권보호에 대한 제도화·인권 최우선 수사환경 정립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강화를 통한 추가피해 방지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확대로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수사절차 전반 인권보장 관련 각종 제도·정책 정비]

○ **수사절차 상 인권보장을 위한 규칙 및 지침 등 제·개정**

– 수사과정상 인권보호 내용을 총망라한 독자적 규정인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행안부령으로 제정하는 등 법령 제정 추진

※ 부령 제정 이후 「인권수사 매뉴얼」 제작 등 실무상 이해를 높이기 위한 후속 작업 등 병행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등 소관 행정규칙 정비 등 현행화

※ 인권위 등 권고사항 반영, 머리보호장비 등 사용근거 반영

– 수사권개혁법령에 반영된 △심야조사 금지 △장시간 조사 제한 등 수사 실무지침에 대한 정비 및 관리

※ △수갑 등 사용지침(수갑 가리개)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영상녹화 저장, 녹화물 보존기간) 등 관련 내용 반영

○ **국가인권위·경찰개혁위 등 권고 적극 수용, 수사 절차상 인권 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 시행 및 개선책 마련**

– ▵유치인 인권보장 ▵변호인 참여 실질화 ▵수사의 공정성 확보 등 각종 권고에 대한 수용 및 제도 개선 노력

– ▵유치인 머리보호 장비 도입 ▵외국인 피의자 권리 고지 내용 번역 확대 및 KICS 시스템 개선 ▵수갑 사용시 단계적 규정 마련, 피의자 등 권리 보장 강화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등 관련 인프라 구축·추진]

○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유치장 환경 개선, 조서 작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영상녹화·진술녹음 등 확대 운영**

– ▵쇠창살 개선(강화플라스틱) ▵유치관리 스테이션 및 지능형 CCTV ▵밀폐형 화장실 설치 등 인권 친화적 유치장 환경 조성

– 조사과정의 객관성 담보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 확대 운영, 이에 따른 영상녹화실·진술녹음장비 확충

< 추진 현황 및 목표 >

구 분	현 황	목 표
유치장 환경개선	13년부터 현재 44개서 完	'22년 5개서 환경개선 추진
영상녹화실	799실 설치 完	'22년 10실 추가 구축
진술녹음장비	705대 설치 完	'22년 350대 추가 설치

– 경찰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및 피의자 등 인권보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변호인 대상 모니터링 제도 실시

※ '21년 10개 관서 1차 시범, '22년 15개 관서 추가 2차 시범 실시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확대 및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활동 전개]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강화로 추가피해 방지**

– **(신속·집중수사 적용)** 안전조치 대상사건 중 위험도가 높은 사건은 신속·집중수사 사건으로 지정,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최단 시간 내 수사를 완료함으로써 위험요인 제거

– **(위험도별 맞춤 조치)** ▵보복·재범 위험성 ▵가해자 성향 ▵피해자 상황 등을 종합 고려, 다양한 보호 수단을 맞춤으로 제공

– **(스마트워치 확대·고도화)** ▵신고 사실 노출 방지를 위한 음량 자동조절 ▵위치확인 속도·정확성 향상 ▵배터리 용량 확대 등 성능이 개선된 신형 스마트워치 6,300대 추가 도입

– **(인공지능 CCTV 도입)** 주변배회·침입시도 등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경고하는 '인공지능 CCTV' 도입, 예방효과 제고

– **(신규 보호 수단 도입)**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민간 경호서비스 지원 ▵장기 안전숙소 지원(10일 이상) 등 신규 피해자 보호 사업 예산확보 추진

–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月 1회 경찰서장(수사과장) 주관 관계기능 합동회의 개최, 안전조치 관련 정보공유 및 현황 점검

○ **근본적 문제해결 및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활동 전개**

–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확대)** 가·피해자 대화모임을 통해 관계회복·재발방지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지속 확대('21년 200개서 → '22년 230개서)

– **(범죄피해평가제도 운영 확대)** 전문가 면담을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종합 평가하여 수사서류에 첨부, 가해자 구속·양형에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 운영 확대('21년 208개서 → '22년 230개서)

- **(피해자 상담 전용공간 조성)** 조사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피해자 전용공간 조성, 피해자 심리안정을 통해 원활한 피해상담을 도모하고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조속한 심리회복 지원

- **(지역사회 협업 강화)**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DB 구축, 중요 범죄피해자 대상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제도 연계

- **(대국민 홍보 강화)** 대변인실 협업을 통해 카드뉴스·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유튜브·블로그 등 SNS 홍보 추진

[인권·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환류 등 체계 구축]

○ **인권·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신고절차 개선 ▵사례축적 ▵매뉴얼·교육자료 제작 및 제공하는 등 교육·환류 강화**

- ▵사적접촉 신고대상 퇴직자 조회시스템 구현 ▵청탁신문고 등의 신고편의 도모(킥스 개선) ▵사적접촉·사건문의 집중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 윤리위반 신고절차 개선

- ▵수사경찰의 인권·윤리의식에 대한 인식 조사 ▵외부 전문가·현장 수사관 의견 수렴 ▵상담·조사를 통한 사례 수집 등 자료 축적

- 인권침해·수사윤리 관련 규정 및 위반사례를 집대성하여 매뉴얼 및 교육자료 발간 추진

- 교육자료에 대한 정기적 현장 직원 공유, 교육기관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한편, 사이버 교육 컨텐츠 제작 추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변호인 모니터링 시범운영	'22.1~4월	
	현장 수사관 수사윤리·인권 의식 조사	'22.1월	
	유치장 환경 개선 사업 수립・하달	'22.1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운영계획 수립·하달	'22.3월	
	상반기 회복적 경찰활동 및 범죄피해평가제도 운영 관서 확대	'22.3월	
2/4분기	전국 경찰서 112상황실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 운영 개시	'22.4월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제정・시행	'22.5월	
	유치인 머리보호장비 시범운영	'22.6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제도 정비	'22.6월	
	「수갑 등 사용지침」개정	'22.6월	
3/4분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용 인공지능 CCTV 시범운영 개시	'22.8월	
	청탁신문고 등의 신고편의 도모(킥스개선)	'22.8월	
	사적접촉·사건문의금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집중 자진 신고기간 운영	'22.9월	
	신형 스마트워치 6,300대 추가 도입	'22.9월	
	하반기 회복적 경찰활동 및 범죄피해평가제도 운영 관서 확대	'22.9월	
4/4분기	피해자 심리상담 전용공간 운영 개시	'22.10월	
	인권수사 매뉴얼 제작	'22.10월	
	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개최	'22.12월	
	사적접촉·사건문의 제도 관련 사이버 교육 컨텐츠 제작	'22.12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개정	'22.12월	
연중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 사업 추진	연중	
	국가인권위·변호사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관계 유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국민 및 범죄피해자

○ 이해관계집단 : △유관부처(법무부, 검찰 등) △피해자지원기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등) △학계(한국피해자학회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경찰공무원

□ 기대효과

○ 現 법령·제도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발굴하여 미비점 보완 및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보장 방안 발굴을 통한 제도화, 인권보장 체계 확립

○ 철저한 피해자 보호 및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으로 대국민 신뢰 제고

○ 수사윤리 분야에 대한 정의 명확화, 수사경찰의 윤리·인권 의식 개선 및 변화 유도, 관련 의무위반 예방 효과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①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등 인프라 구축	일반예산	27.2억	28.8억
■ 유치장 환경개선 사업(7131-312)	일반예산	15억	15억
■ 영상녹화·진술녹음 확대 사업(1231-311)	일반예산	12.2억	13.8억
②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범피기금	16.6억	31.6억
■ 신변보호용 위치확인장치	범피기금	6.6억	20.7억
■ 피해자 임시숙소	범피기금	6.0억	6.8억
■ 강력범죄 현장정리	범피기금	4.1억	4.1억
③ 인권·피해자 보호활동	일반예산	22.0억	30.1억
■ 신변보호용 CCTV	일반예산	5.7억	9.3억
■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일반예산	4.6억	5.4억
■ 범죄피해평가제도 운영	일반예산	2.7억	3.8억
■ 응급지원물품 제공	일반예산	2.6억	2.6억
■ 피해자 권리고지	일반예산	2.3억	2.3억
■ 피해자 여비	일반예산	2.0억	3.1억
■ 피해자 상담공간 조성	일반예산	-	1.5억
■ 심리상담 통역비	일반예산	0.7억	0.7억
■ 교육·홍보비	일반예산	0.6억	0.6억
■ 맞춤형 사례회의 운영	일반예산	0.5억	0.5억
■ 신고자 등 임시숙소	일반예산	0.3억	0.3억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인권보호 제도개선 (25%)	신규	신규	36	40	• **'21년 실적인 36점을 감안, '22년 40점을 목표로 설정** ※ 목표치 수준의 설정 '상' 해당	하단 참조	공문, 보고서 등 추진관련 근거자료
인권·윤리의식 제고 위한 교육·홍보 등 활동 (25%)	신규	신규	15	30	• **'21년 실적인 27점을 감안, '22년 30점을 목표로 설정** ※ 목표치 수준의 설정 '중' 해당	하단 참조	공문, 보고서 등 추진관련 근거자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건수 (25%)	37,575	37,731	41,649	43,898	• **3년간 추세치인 5.4% 이상 증가를 목표로 설정** ※ 목표치 수준의 설정 '상' 해당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 + 경제적·심리적· 기타지원 건수	• 케어포털 통계 • KICS 범죄통계
회복적 경찰활동 평균 실시 건수 (25%)	6.3	3.3	4.8	5.0	• **3년간 평균치(4.8건) 이상 실시를 목표로 설정** ※ 목표치 수준의 설정 '상' 해당	• 회복적 경찰활동 실시 건수 ÷ 운영 관서 수	• 회복적 경찰활동 결과보고서

< 성과지표 측정산식 >

① 인권보호 제도 개선(25%)

- 측정 산식 : 유형별 등급 × 등급별 점수(점수 : 건당)

등 급	A	B	C
유 형	수사인권 관련 법령 제·개정	수사인권 관련 행정규칙 및 지침 정비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 도입 및 개선
점 수	10	5	3

- 점수 분포표

종합 점수	40점 이상	35점 이상	30점 이상	25점 이상	25점 미만
점수	100	90	85	80	70

② 인권·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 활동(25%)

- 측정 산식 : 교육 및 홍보활동, 신고절차 개선 건당 점수 부여 후, 종합 점수로 측정

▸ 교육점수: **교육활동 건당 3점 / 교육자료 배포 1점 부여**

구 분		세부 유형
3점	**교육활동** (영상·현장교육 불문)	▵ 세미나(또는 웨비나) ▵ 간담회 ▵ 워크숍 개최 ▵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한 각종 교육 및 인권침해 사례 전파
1점	**교육자료**	▵ 자료집 ▵ 매뉴얼·지침 ▵ 강조 공문·업무연락 등 배포

▸ 홍보점수: 인권시책 **언론홍보 건당 5점** / 통합포털 카드뉴스 홍보물 게시, 기타 홍보자료 배부 등 **건당 1점**

▸ 신고절차 개선(사적접촉·사건문의) : 관련 신고절차 개선(킥스 개선, 조회시스템 구축 등) **건당 1점**

<점수분포표>

종합 점수	30점 이상	28점 이상	26점 이상	24점 이상	22점 미만
점수	25	23	21	19	17

26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 추진배경 (목적)

○ 집회시위 참가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선진문화를 정착

○ 양대선거 관련 증가하는 집회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평온한 선거진행 위해 빈틈없는 경비·안전활동 실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선거 경비·안전활동)** 대선·지선 관련 사전에 경비안전대책 수립하여 △투표 단계별 안전활동 △24시간 선거경비상황실 운영 △단계적 비상근무 등 빈틈없는 안전활동 실시

- 3.9. 제20대 대통령선거 / 6.1. 제8회 지방선거 -

▸**(투표 단계별 안전활동)** △투표용지 인쇄·보관소 △투표용지 호송 △투·개표소 등 단계별로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빈틈없는 안전활동 실시

▸**(선거경비상황실 운영)** 전국 경찰관서(277개소)에서 선거운동 개시 前日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24시간 경력운용·상황유지 및 보고·관계기관 협업 실시

▸**(단계별 비상근무)** 경계강화부터 갑호비상(투표일)까지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가용경력을 효율적·집중적으로 운용

▸**(신변보호·안전사고 예방)** 정당대표·후보자 등 거리유세 시 신변보호조·예비대 운용, 신변안전 확보 및 다수 인원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 **(법집행 기준 확립)** 신임 지휘관(경찰서장·경비과장 등) 등이 각종 상황별로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매뉴얼 보완·정비

▸**(2022 경비경찰 길라잡이)**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실무지침서로서 현장 법집행 근거·절차와 유형별 대응요령 등 반영

▸**(최신 집회시위 판례집)** 집시법 등 관련 법령의 최신판례('21년 판례까지)를 △주제별 주요 사례 △판례 요지 △시사점 등 풍부한 해설과 함께 수록

▸**(NEW 집회소음관리 매뉴얼)** 과도한 소음피해 엄정대응 사례, 최신판례 등 추가

○ **(집회대응 장비 개발)** '몸'으로 막는 인력 위주의 대응방식 탈피, 최신 기술을 활용한 경비·안전활동 지원 장비 지속 개발·보급

▸**(신체 보호장비 개발·개선)** 무겁고 노후된 △방패('06년 도입) △보호복('07년 도입)을 新 기술·소재를 적용하여 개발하고, 인체공학적으로 개선 추진

▸**(안전차단장비 확충)** 의경 폐지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트레일러형 안전펜스(9대) △다목적 방송조명차(4대) 도입

▸**(신형 P/L 개발·보급)** 성능을 향상시킨 신형 철제 PL(높이 1.2m × 폭 1.5m → 높이 1.35m × 폭 1.8m), 이동·설치가 용이한 접이식 PL(높이 1.25m × 폭 6m) 보급

○ **(집회현장 소음관리 강화)** 악의적·반복적 집회 소음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꾸준한 소음관리(측정·조치)를 통해 시민의 평온권 보장

▸**(전문성 제고)** 전국 실무요원 이론(사이버) 및 실습(현장 참관) 교육 주기적 실시

▸**(장비 확충)** 노후 장비 교체 및 최고소음도 병행 측정을 위한 추가 보급(215대)

▸**(현장조치 강화)** 과도한 소음으로 극심한 피해시 중지명령·일시보관 등 적극 조치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2년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	2월	
	선거 경비안전활동 가이드북 제작·배포	2월	
	제20대 대통령선거 경비안전대책 수립·시행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경비상황실 운영	3월	
2/4분기	경찰부대 집중교육 · 훈련(상반기)	4월	
	제8회 지방선거 경비안전대책 수립·시행	5월	
	제8회 지방선거 선거경비상황실 운영	5월	
	집회시위 소음관리 사이버콘텐츠 제작	6월	
3/4분기	2022 경비경찰 길라잡이 제작	7월	
	경찰부대 하반기인사 교체기 집중점검	8월	
	'22년下 의경 대체 경찰관기동대 창설	9월	
	경찰부대 집중교육 · 훈련(하반기)	9월	
4/4분기	'22년 경찰부대 보유장비 운영 실태 점검	10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안전대책 수립·시행	11월	
	집회·시위 해산절차 가이드북 개정	12월	
	경찰부대 등 대상 모바일 근무만족도 조사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全 국민

□ 기대효과

○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과 함께 인권·안전의 확보

○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치경비 실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경비경찰역량강화(Ⅱ-1-일반재정①)			
① 경비경찰역량강화(2131)			
■ 경비경찰활동(311)	일반회계	469.6	530.5
■ 의경운영및관리(312)	일반회계	663.0	435.6
■ 의경대체지원(314)	일반회계	564.0	629.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집회현장 법 집행기준 확립 및 현장대응력 강화 (50%)	(신규)			65점	하단참조	<법집행기준 확립> ▸훈령·지침 제·개정 : 건당 15점 ▸매뉴얼 제작·배포 : 건당 10점 <현장대응력 강화> ▸전국단위 교육훈련 : 건당 10점 ▸전국단위 워크숍 : 건당 5점	본청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② 경찰부대 근무만족도 (30%)	(신규)			7.0점	하단참조	▸외부 여론조사 업체 통해 전국 경찰부대원 대상 △근무 △인권침해 △시설환경 △교육훈련 등 만족도 조사(10점만점)	외부업체 통한 여론조사 결과
③ 경찰관기동대 창설 달성도 (20%)	(신규)			18개 부대 창설	하단참조	▸창설부대수 / 18개부대(목표치) × 20 * 불가피한 외생변수(코로나19등)에 의한 창설 지연시 창설로 인정 (미창설이 아닌 지연임 명백해야함)	시·도경찰청별 경찰관기동대 창설 세부시행계획

① 집회현장 법 집행기준 확립 및 현장대응력 강화 (50%, 목표치 65점 ➡ 최종 50점으로 환산)

- **(개 요)** 집회현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의 선결조건은 현장 법집행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것이며, 법 집행기준이 확립되었다면 반드시 이를 체득화·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쳐 개인의 현장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까지 이어져야 함
- **(목표치 산출근거)** 작년의 '법집행기준 확립 지표(30점만점)'를 더욱 확대한 것으로 현장대응력 강화 항목까지 추가하여 총 65점을 목표치로 적극적으로 설정

② 경찰부대 근무만족도 (30%, 목표치 7점<10점만점> ➡ 최종 30점으로 환산)

- **(개 요)** 의경→경찰관 대체에 따라 경찰관기동대는 '18년 4,908명 → '23년 14,166명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경찰 약 12만 7,000명의 11.2%에 해당될 만큼 비중이 높아짐. 경찰부대 내부 만족도 제고는 곧 국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질적 향상에 직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매우 중요
- **(목표치 산출근거)** 경찰부대 근무만족도는 집회시위 수요가 많을수록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금년은 대통령선거·지방선거가 있어 이익단체들이 이슈 부각을 위해 집회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적극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목표치는 7점으로 설정

③ 경찰관기동대 창설 달성도 (20%, 목표치 18개 부대 창설 ➡ 최종 20점으로 환산)

- **(개 요)** 경찰관기동대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의경감축<국방부와 협의> / 대체경찰관 충원<행안부·기재부와 정원 협의 후 국회 통과>) △시설개선(폐지 의경부대 리모델링*), △장비·피복보급(신체보호복 등 피복류 및 경찰관기동대 비품 등) 등 많은 노력이 수반됨. 올해로 의경대체 경찰관기동대 창설은 최종 완료됨.
  * <의경부대 리모델링 절차> ①리모델링 예산 확보(전년도 12월에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 → ②각 시·도 경찰청 주관 현장 점검 및 리모델링 소요예산 산출 → ②경찰관기동대 리모델링 계획 수립 및 예산배정 → ④설계 및 조달청 공사업체 계약 → ⑤공사 진행 → ⑥공사완료 및 경찰관기동대 창설
- **(목표치 산출근거)** '22년 목표인 18개 부대 창설 달성 시 목표 달성

성과목표Ⅱ-3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1) 주요 내용

○ **<국민중심 책임수사 구현>** 경찰에게 주어진 수사책임을 원활히 완수, 조직역량 균질화를 위한 지속적인 경찰수사 인프라 구축

○ **<국민공감 수사권 개혁 지속 개선>** 수사권 개혁 관련 법령의 실무 안착과 편익 분석, 국민 인식도 제고 등 추진

※ △협력적 경·검 관계를 위한 불합리한 수사관행 개선 △연계법령 제·개정 등 정비 △세미나·간담회 개최 △수사기관협의회 활성화 △학계·언론 대응 등 추진

○ **<책임수사체제 추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한 경찰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법령·지침 등을 정비하고, 조직·인적 기반을 확장하여 탄탄한 경찰수사 안착 도모

○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 과학수사 기반 마련>** 사법개혁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선제적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 과학수사의 전문·신뢰성 제고

○ **<디지털 증거분석 역량 강화>** 책임수사 실현을 목적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역량 강화 및 첨단 디지털포렌식 인프라 구축

–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현장지원 활성화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지원 등 종합정책을 추진

○ **<과학수사 역량 강화>** 과학수사 분야 R&D 활성화와 첨단 인프라 확충, 유관기관 間 협업과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과학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증거 중심 수사체제 안착 지원을 통한 국민과 현장의 만족도 제고

– △법곤충 감정 분야 현장 도입 △인터폴 DVI팀 전문가 초청 훈련 △과학수사관 맞춤형 건강증진체계 강화 등으로 과학수사 역량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수사·형사 분야 치안고객만족도**
관리과제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구현	예산·인프라 확보 노력도 / 책임수사 과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KICS) 반영도 / 전문 수사인력 확보 / 전문 수사인력 양성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개정 형소법 현장 정착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 협력적 경·검 관계 정착 및 현장수사관 실무 지원 / 수사권 조정의 우호적 여론 및 외연 확장과 선진 수사구조를 위한 수사제도 연구
	국민중심 책임수사체제 추진을 위한 인권·현장 중심 제도 개선	책임수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3중 심사체계 안착 노력도 / 경찰 사건기록 관리체계 등 업무기반 마련 / 경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구축 노력도 / 수사 전문성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증거중심의 책임수사 지원 및 과학수사 현장대응력 제고	범죄분석 지원지수 / 멀티미디어 분석 불가율 /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 /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현장지원 활성화 /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지원
	증거 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과학수사 활동 지수 / 현장지원 지수 / 대국민 교류 지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수사·형사 분야 치안고객 만족도	65.1	67.4	64.7	66.5	전 3년도 실적 평균값(65.7)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65.3)을 고려, '22년 목표치는 평균 및 추세치의 중위값(65.5)보다 1.0%p 상승한 66.5로 설정	치안고객만족도 수사·형사 분야 조사결과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대국민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가수사본부 출범 및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 이후 국가수사 총량 유지·강화를 위한 경찰수사의 책임성·전문성 제고방안(책임수사체제 구축)에 대한 대내외 기대와 관심 증대

– 특히,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휘체계 확립, 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 종결사건의 수사완결성 확보에 대한 요구 다수

– 체계적인 인사·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된 업무환경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중심 수사활동 기반 조성

○ 대선 이후 언론 등에서는 검찰권 강화를 예상,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검·경 수사권 재조정 관련 내용 포함

– 그에 대한, 수사제도 안착 및 책임수사체계 확립을 위한 내부시책 추진

<22년 경찰 책임수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사항>

▸(3중 심사체계 고도화) △ 역량 중심의 심사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요건 개선 △ KICS 개편에 따른 업무체계 변경사항 △ 신규업무(조사자 증언 등) 개편사항 반영 등 지침 정비

▸(현장수사 관련 법령 등 정비) △ 현행범 체포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 사건기록 관리지침 개선 △ 통합증거물 관리지침 △ 열람·복사지침 개선 △ 영장 신청 및 집행관린 지침 마련 △ 범죄수사규칙 개정 △ 경찰수사규칙 개정 △ 사건배당 통합지침 개선 등

○ 기존 범인검거, 피해회복 등 사후 대응적 경찰 활동에서 범죄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고 사전 차단하는 예방적 경찰 활동에 대한 국민의 치안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수사'에서 '과학치안'으로 패러다임 전환 긴요

–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죄위험지역 및 취약요소 사전 분석, △지문 재검색을 통한 장기미제사건 선제적 해결 등 민생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발굴·차단

○ 증거중심의 책임수사 활동이 강조 되는만큼 과학수사 분야의 증거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성 및 공신력 강화 필요

– 족윤적, 문서감정 등 감정 분야의 한국인정기구(KOLAS) 획득, 과학수사자료관리 분야 국제표준(ISO) 인증 확대 등 과학수사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 디지털증거가 모든 범죄수사의 핵심증거로 부각되면서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 및 관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 : 36,060건('17년) → 45,103건('18년) → 56,440건('19년) → 63,935건('20년) → 75,420건('21년)

○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엄격해지고, 안티포렌식 기술 발달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음

○ △인력 전문화 △압수·수색 현장지원 활성화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지원을 통해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수사 실현에 기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년), 검사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에 따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경찰 수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가

* 과학수사 수요 또한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에서 사기 등 非강력범죄 수사로 지속 확장(비강력범죄 현장임장 '17년 20,966건 →'21년 25,549건, 22% 증가)

–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 지원을 위해 국내외 치안 협력과 네트워크 기반으로 수사 신뢰성 제고 필요

* △과학수사 분야별 자문단 운영 △경찰·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 △전국 검시조사관 세미나 등

(4) 참고자료

○ 국민의힘 홈페이지 공약자료실(www.peoplepowerparty.kr)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홈페이지(www.kcsi.go.kr)

27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구현

□ 추진배경

[새로운 사법환경에서 경찰수사의 역할·책임 증대]

○ **(법령 개정)** 그간 추진된 권력기관 개혁에 따라 각 기관의 임무와 업무 범위가 조정*되면서 경찰수사 역할과 책임 증대

* 수사권개혁(검찰→경찰), 대공수사권 이관(국정원→경찰), 군사법원법 개정(군사경찰→경찰)이 시행·추진 중으로 경찰의 역할·책임 지속 확장 추세

○ **(수사 전문성)** 경찰수사에 주어진 역할과 기대가 상당한 상황에서 중요사건은 시도청 중심 집중수사를 통해 일정 부분 성과 창출

– 앞으로는 보다 획기적인 수사성과 창출과 역량 발휘 필요

[책임수사체제 2년차, 체감할 수 있는 변화상 제시 필요]

○ **(수사역량 강화)** 역량과 경험을 갖춘 3만 3천여 수사인력이 '조직과 시스템'에 따라 수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받는 수사기반 구축*

* 수사관 개인이 아닌 국수본을 정점으로 한 '조직과 시스템에 의한 수사체계'로 전환

– 수사관 개인의 '인적역량 강화'와 '시도청 중심 중요사건 대응 시스템' 중심의 기반을 토대로 책임수사 구현 추진

▸**(인적역량 강화)** 젊고 유능한 경찰관의 수사부서 유입을 확대하고, 수사역량·경력 중심의 인사관리(자격관리제도) 등을 통해 전문분야별 수사경찰 체계적 양성

▸**(중요사건 대응)** '경찰서 → 시도청 → 국가수사본부'로 이어지는 보고·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인적·조직적 역량을 시·도청에 결집

* 경찰서 접수 중요사건을 △시도청 이관, △시도청 집중지휘, △경찰서 책임수사 사건으로 관리

○ **(인프라 필요성)** 경찰에게 주어진 수사책임을 원활히 완수하고 조직역량을 균질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책임수사를 완수할 수 있는 수사조직 체계 정비]

○ **(인력 증원)** 새로운 수사환경과 범죄여건 변화 속에서 차질 없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 증원 및 재배치

▸**(인력 증원)** △범죄여건 변화, 신규절차 도입 등에 따른 실무 수사인력 및 법률 전문가 충원 확대, △기관간 업무조정에 따른 인력·예산 등 인프라 조정방안 추진*

* <'22년 수사분야 증원> +443명(경제·심사·사이버·여청강력팀, 과학수사 전문인력 등), 직급조정 ±75명(경찰서 1급지 경제과·강력과 신설, 시도청 여청수사대장 등)

▸**(인력 재배치)** 조직·인력 효율화 관련 현장 인력 재배치에 따라 수사분야 증원 965명, 감원 712명, 피해자보호 기능 이관 등 재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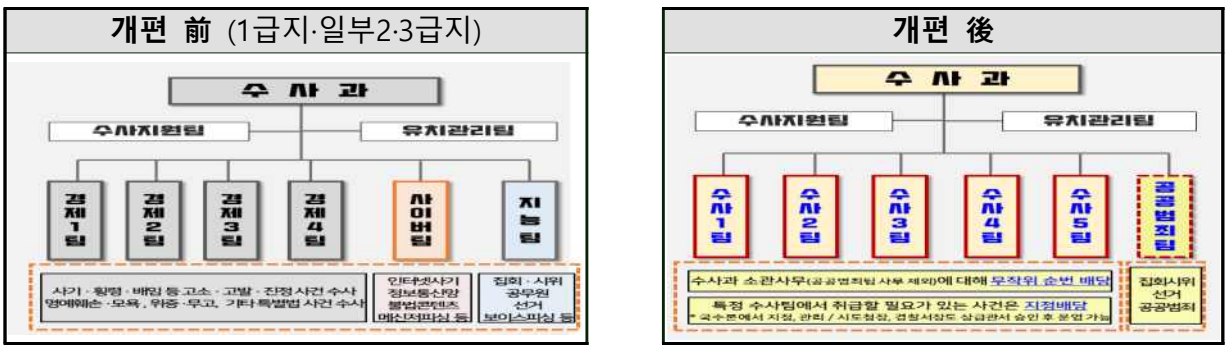
<증원> 강력팀 (+132), 경제·사이버팀(+507), 수사심사관(+34), 여청강력팀(+222), 피해자전담경찰관(+70)
<감원> 생활범죄수사팀 폐지(-678), 수사·형사지원팀 통합(-34)

– '업무량 진단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수사부서 인력 재배치에 활용*

* 경찰청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수사부서 업무진단 표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21. 12월) 및 「시도청-경찰서 수사 조직모델 설계에 대한 연구」('22. 3월) 진행

○ **(수사기능 종합개편)** 추적·기법이 필요한 익명·비대면 지능범죄는 시도청에 집중하고 일상적으로 접수되는 민생사건은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수사·사이버조직 운영체계를 재설계

– 경찰서 경제·지능·사이버팀 조직·인력을 통합, '수사 n팀'으로 재편성하고 전담 분야는 필요에 따라 수시 지정(상반기 시범운영 – 인천·경기북부청)



– 단순한 조직 개편뿐 아니라 부서간·관서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사무조정)하고, 경력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업무개선)하는 종합적인 운영 개선 병행

○ (**형사과·수사과 분과**) 과장의 통솔범위가 과다한 총 34개서 수사과·형사과는 '1과·2과'로 분과하고, 수사지원팀·형사지원팀은 통합하여 통합수사지원팀 운영

※ 수사1과(경제팀), 수사2과(지능·사이버팀), 형사1과(형사팀), 형사2과(강력·마약·실종팀)로 구분하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

– 現 수사과·형사과에서 운영 중인 수사지원팀·형사지원팀을 통합, 통합수사지원팀 체계로 개편 (수사심사관실 소속으로 전환)

구분	부서명	업무분장	비고
現 수사과	수사1과	[수사1과] ■ <경제팀> △사기·횡령·배임·각종 특별법 등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 수사, △사기 등 수배자 추적수사	신설
	수사2과	[수사2과] ■ <지능팀> △공무원·선거·집회·부정부패·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유사수신 등 수사, △각종 기획수사 ■ <사이버팀> 사이버범죄 수사 [통합수사지원팀으로 개편] → 수사심사관실로 이관 ■ <수사지원팀> 수사지원 및 행정사무 총괄 ■ <유치관리팀> 유치장 관리	개편
現 형사과	형사1과	[형사1과] ■ <형사팀> 변사, 폭력, 도박, 화재, 안전사고, 무전취식·무임승차, 지역경찰 신병인계 사건 수사 [통합수사지원팀으로 개편] → 수사심사관실로 이관 ■ <형사지원팀> 형사지원 및 행정사무 총괄	개편
	형사2과	[형사2과] ■ <강력팀> △살인, 강도, 절도사건, 인질, 납치, 인신매매, 방화 등 강력사건 △조폭·집단폭력 등 사회이목 집중 사건 수사 ■ <마약팀> 마약류 유통·투약 등 마약사범 수사 ■ <실종팀> 실종·가출인 수색 및 추적	신설

○ (**중요사건 보고·지휘체계 확립**) 국가수사본부 및 시·도청 중심으로 수사 '보고 → 검토 → 지휘'가 일사불란하게 작동하는 체계 지속 관리

중요사건 구분		보고 시기(경찰서→시·도청)			내용
		접수보고	진행보고	결과보고	
시·도청 직접수사		✓	-	-	-
경찰서 수사	집중지휘	✓	✓	✓	시·도청 집중지휘팀 운영 등
	경찰서 책임수사	✓	-	✓	접수·종결 時 보고원칙

※ 중요사건 관리시스템(KICS, '21. 10월~)을 기반으로 보고·지휘 체계를 공고히 구축

– 이와 함께 경찰서장 중요서류* 직접 검토·지휘·결재 업무체계 확립

* <중요서류> △내사착수보고 △범죄인지 △구속영장신청 △수사(내사)결과보고

[수사역량 중심의 인사·교육 기반 확립]

○ **(인사관리 강화)** 수사경찰 역량향상을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제' 등 역량·경력 중심의 인사제도를 정착

▸**(수사관 자격관리제 정착)** 역량·경력 중심의 수사경찰 인사관리 제도인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예비→일반→전임→책임수사관 지속 선발

▸**(자격관리제-팀장 배치기준 연계)** '22년부터 책임·전임수사관은 수사부서 팀장 우선 배치('24년부터는 과·팀장 보임요건으로 책임·전임수사관 설정)

▸**(수사경과 인사원칙 확립)** 수사경과 인사원칙인 "수사부서에는 수사경과자 배치"를 확립하기 위해 △통합보직공모를 통한 수사경과자 수사부서 배치 △수사부서 전입 기피자에 대한 수사경과 해제 적극 추진

▸**(관서장 추천제 시행)** 수사역량·의지가 있는 수사관이 수사부서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서장 추천 방식의 수사경과 선발 추진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 수사경찰 인사·교육 등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2년부터 '수사경찰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 인사운영에 활용

○ **(전문가 채용·양성)**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지속 채용하는 한편, 내부 인력을 전문가로 적극 양성 추진

▸**(전문가 경력채용)** 변호사, 회계사, 법학·세무회계 전문가 등 경력채용 지속 추진

※ '21년 14개 분야 330명 채용, '22년 14개 분야 309명 채용 예정

▸**(전문수사관 제도 개선)** 전문수사관 선발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최신 수사기법을 겸비한 '전문수사관' 양성 추진

※ '21년 100개 분야 514명 신규 선발(현재까지 총 4,292명의 전문수사관 선발)

▸**(신임과정 중 수사경찰 양성)** 중앙경찰학교 신임 교육과정 중 수사부서 근무자를 선발한 뒤 수사 실무교육 실시, 신임수사관 양성 추진

▸**(전문자격증 취득자 양성)** 과학수사, 사이버, 교통수사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수사경찰 교육 강화)** 신임수사관부터 수사지휘권자까지 맞춤형 수사교육을 실시하고 수사연수원 증축 등 교육 인프라도 지속 확충 추진

– 한편,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이나 동물 학대 사건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수사관들의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도 병행

▸**(맞춤형 수사교육)** △신임수사관 의무교육(5일, 경찰교육센터) △과·팀장*, 심사관 등 보직별 교육 확대 △총경급 대상 수사지휘교육 확대('21년 28명→'22년 60명)

* <과·팀장 교육확대> '20년 405명 → '21년 715명 → '22년 1,500명 교육추진 예정

▸**(교육인프라 확충)** △수사연수원 증축(교육주기 7년→3년) △수사기법 R&D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경찰수사연수원장 직급상향 및 교수·행정요원 증원 등

[현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정책·시스템 지원]

○ **(특진·특별승급 등 포상)** 「국민중심 책임수사」의 성공적 안착과 현장 직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특별승진·승급 TO 적극 확보

– ’21년 특별승진·승급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22년에는 사기 진작이 절실한 기피부서 중심의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22년 주요 추진사항) △인사·조직 △근무여건 △포상 등 세분화하여 추진**
- <범인검거 즉시특진>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즉시특진 TO 매년 24명 확보, 매월 특진 심사 및 현장 임용 (지휘유공 등 표창, 수사비, 포상 휴가 등 종합 포상)
- <핵심정책과제 특진> 국가수사본부 25개 분야 71명
- <특별승급> 국가수사본부 특별승급 TO 159명 배정

○ **(시스템 개선)** 변화된 수사절차를 시스템에 조속히 반영하고 통신·분석 시스템 등 고도화를 통해 현장 수사활동 지원 강화

▸ **(시스템 개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 추진(’21. 11월 ~ ’24. 10월), △경찰 사건기록 관리 인프라 확보 및 제도정비, △범죄통계 관리개선

▸ **(현장지원)** △별정통신사 통신수사 시스템 추가개선 △수사자료 분석 프로그램 사용편의 개선 △부정계좌 등록시스템 장비개선 및 절차간소화 추진

○ **(범죄통계 고도화)** 범죄통계를 수시로 공개(연 1회 → 분기 1회)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범죄동향을 반영한 범죄통계시스템 고도화 추진*

* ’21년 ISP완료(2억원) → ’22년 원표개선 및 사업(46.2억원) → ’23년 범죄통계시스템 오픈

▸ **(시스템 고도화)** △이상동기범죄·사회적약자 대상 범죄통계 반영, △다각적인 분석·검토가 가능한 원표 內·원표 間 교차분석 기능 신설* △자동오류 점검기능 개발 등

* △(원표內 분석) 노래방(장소)에서 일어난 폭력범죄를 요일별·시간별(일시)로 분석, △(원표間 분석)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의자 송치의견이나 직업 분석

○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수사부서 조사환경 개선 등 사업 확대

▸ **(경찰서 수사부서 환경개선)** △조사·사무 환경 분리 △피의자·피해자 동선 분리를 위한 통합수사당직실·호송차고 설치 등 조사환경 개선 사업 추진 (’15년~)

▸ **(시도청 수사동<별관동> 구축)** ‘수사부서 조사환경 개선’ 기준을 시도청에도 적용, 全 수사 기능을 통합한 ‘수사동’ 구축 추진 중(5개청 완료, 9개청 진행 중)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찰서 수사과·형사과 분과 및 통합수사지원팀 운영계획	'22. 1월	
	수사기능(경제, 지능, 사이버) 개편 종합계획	'22. 1월	
	수사예산 집행지침 수립	'22. 1월	
	'22년 상반기 수사경찰 인사결과 및 과·팀장 자격제 준수현황 분석	'22. 3월	
	「수사부서 조사환경 및 유치장 환경 개선 계획」 수립	'22. 3월	
2/4분기	'23년도 예산안 요구서 작성・제출	'22. 5월	
	'22년 제1차 수사경과 해제계획 실시	'22. 5월	
	상반기 책임수사 과제 KICS 개선 반영	'22. 6월	
	제3회 책임수사관 선발시험 실시	'22 .6월	
	제10회 형사법 능력평가 실시	'22. 6월	
3/4분기	'22년 하반기 경력경쟁채용 계획 수립	'22. 7월	
	'22년 하반기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계획 수립	'22. 7월	
	'22년 하반기 수사경찰 인사결과 및 과·팀장 자격제 준수현황 분석	'22. 9월	
	'22년 범죄통계 책자 발간	'22. 9월	
4/4분기	'22년 전임수사관 선발	'22. 10월	
	'22년 전문수사관 선발	'22. 11월	
	'22년 제2차 수사경과 해제계획 실시	'22. 12월	
	범죄통계시스템(CSS) 고도화 사업 추진 완료	'22. 12월	
	하반기 책임수사 과제 KICS 개선 반영	'22.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경찰수사를 직접 접하는 사건관계인(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및 안전한 사회와 공정한 수사경찰을 기대하는 일반 국민

○ 경찰 인원의 약 25%를 차지(약 3만 3,000명)하는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 수사경찰

□ 기대효과

○ 국민중심 수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수사경찰의 직무만족도 제고

○ 제한된 인력·예산 등 여건에서 수사경찰 인력 재배치, 통합수사팀·통합수사지원팀·형사과, 수사과 분과 등 다양한 방법의 조직 재설계를 통해 최대한의 효율을 확보

○ 경찰수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신속·정확하게 밝혀내는 책임있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위상 확립

○ 신종·최첨단 범죄 등 현대범죄 특성에 맞는 통계원표 개선, 이에 따른 항목·수법 추가 및 분석기능 강화 등「범죄통계 시스템」고도화를 통해 과학적 수사정책 수립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21년 예산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범죄수사(Ⅰ-2-재정②)		
① 범죄수사(1231)	일반회계	1,705
■ 범죄수사역량강화(311)		583
■ 현장수사활동(312)		1,089
■ 형사사법업무전산화(511)		29

○ '22년 예산

※ '21년 국수본 신설 등 조직개편 방향에 맞춰 단위사업명 변경 등 과목구조 개편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범죄수사활동(Ⅱ-1-재정①, ②)		
합계		2,185
①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강화(1231)		
■ 수사지원(311) ※ 舊 범죄수사 역량강화, 현장수사활동	일반회계	2,108
② 수사업무 정보화(1232)		
■ 형사사법업무전산화(512)	일반회계	7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수사기반	예산·인프라 확보 노력도 (25%)	-	-	100	90	①수사예산 확보 노력도(50%) ②국민 수사기여 활동 관련 예산 집행 노력도(25%) ③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노력도(25%) ※ '21년 실적치를 반영, 세부지표 점수표를 상향하는 등 현행화한 만큼, 전년과 같이 '90점 이상'을 22년 목표로 설정	예산 확보 수준, 관련 예산 집행률, 관련 사업 진척도 <지표1>	관련 공문 / 보고서 / 디브레인회계시스템 등
	책임수사 과제 등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KICS) 반영도 (25%)	-	82.6%	85.1%	88%	'21년 개정된 신분위장수사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신규 기능 개선 과제를 시스템에 반영 예정으로, 지난해 반영률 85.1%보다 3% 상향한 88%를 목표치로 설정 ※ 기능요청 급증으로 반영률 하락이 예상되는 지표로, 전년 실적 대비 상승하는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시스템 반영 건수 / 책임수사 과제 등 전체 기능개선 요청건수 × 100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
수사전문성	전문 수사 인력 확보(명) (25%)	-	-	100점	100점	① 자격관리제도 중 전임수사관 선발인원(50%) ②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확대(50%) ※ 이전 실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전임수사관 인원, 수사분야 경채자 <지표3>	수사분야 경채자, 전임수사관 선발 명단(공문)
	전문 수사인력 양성(명) (25%)	-	-	92점	95점	①전문·심화 교육 수료 인원 - 전문·심화교육의 중요성 및 환경 의존성을 감안하여 전 3개년 평균 대비 95% 이상 수료를 목표로 설정(60%) ②과·팀장 교육 수료 인원 - 책임수사 실현의 주요한 요소로서 과·팀장에 대한 전문 수사교육 또한 그 중요성 및 환경 의존성 고려하여 전년 대비 95% 이상 수료를 목표치로 설정(40%)	수사연수원 전문·심화과정 수료 인원, 과·팀장 교육 수료 인원 <지표4>	'21년 경찰수사연수원 교육훈련 결과 통보(공문), 과·팀장교육 수료인원(공문)

< 지표 1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예산·인프라 확보 노력도 >

○ **설정 배경** : "현장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수사활동 지원 예산 확보 노력도 ▵국민 수사 기여활동 관련 예산 집행 노력도 ▵수사부서 조사환경 조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측정 산식** : ①수사예산 확보 노력도(50%) +②국민 수사기여 활동 관련 예산 집행 노력도(25%) + ③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노력도(25%)

○ **'22년 목표산출** : '21년 적극적인 목표치로 설정한 지표이며, '21년 실적치를 반영하여 각 세부 지표의 점수분포표를 상향하는 등 조정한 만큼, 전년과 같이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을 '22년 목표로 선정

※ 최근 4년 동안 '90점 이상' 달성한 해는 작년 한해로 적극적 목표치임('18년 75점, '19년 72.5점, '20년 85점, '21년 100점)

① 수사예산 확보 노력도 (50%)

(개요) 현장 수사활동 지원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예산 증액에 대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 노력도 및 반영 성과를 지표로 선정

(산출방법) 예산 확보 및 성과를 점수표에 맞춰 산출 후 점수분포표에 맞춰 점수 부여

※ 현재 수사운영지원담당관에서 총괄·관리하고 있는 세부사업인 '수사지원', '형사사법업무전산화'를 기준

[항목별 배점표]

구분	예산 확보 노력도	신규 사업 반영 ※ 정부안 기준		기존 사업 증·감액 ※ 정부안 기준		
기준	국회·기재부 방문 설명 ※ 과장 이상	5억 이상	5억 미만	5% 이상 증액	5% 미만 증액	전년동 또는 감액
점수 ※방문횟수·사업당	1	5	3	2.5	1	0

<점수분포표>

구 분	50점	47.5점	45점	42.5점	40점
종합 결과 (항목별 배점 총합)	45점 이상인 경우	42점 이상~ 45점 미만	39점 이상~ 42점 미만	36점 이상~ 39점 미만	36점 미만

※ 위 점수표로 계산 시 '18년은 40점, '19년 38점, '20년은 41.5점, '21년은 61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 4년 평균치 45.13점를 고려, '45점'(전년 40점 이상)을 만점으로 하여 점수분포표 설정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40	38	41.5	61
예산 확보 노력도(1회당 1점)		11*1=11	12*1=12	6*1=6	9*1=9
신규사업 반영	5억 이상(사업당 5점)	3*5=15	1*5=5	2*5=10	3*5=15
	5억 미만(사업당 3점)	3*3=9	2*3=6	2*3=6	3*3=9
기존 사업 증·감액	5% 이상 증액(사업당 2.5점)	2*2.5=5	6*2.5=15	7*2.5=17.5	10*2.5=25
	5% 미만증액(사업당 1점)	0	0	2*1=2	3*1=3

② 국민 수사 기여 활동 관련 예산 집행 노력도 (25%)

(개요)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수사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인 '검거보상금·참고인여비' 집행률을 지표로 선정・관리

(산출방법) (검거보상금 집행액 / 배정액)×0.5 + (참고인여비 집행액 / 배정액)×0.5

<점수분포표>

구 분	25점	22.5점	20점	17.5점	15점
집행률	91% 이상	90% 이상 ~ 91% 미만	89% 이상 ~ 90% 미만	88% 이상 ~ 89% 미만	88% 미만

※ 최근 4년간 실적치가 '18년 88.4%, '19년 86.2%, '20년 91.9%, '21년 94.4%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 4년 평균(90.2%)치를 고려 91%를 만점(전년 90점)으로 하여 점수분포표 설정

③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노력도 (25%)

(개요) 변화된 형사사법구조에 맞춰 경찰수사의 완결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향상과 함께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필요, 수사부서 조사환경 완료를 지표로 선정·관리

(산출방법) '22년 12월말, 기준 수사부서 조사환경 완료(완료 예정) 경찰서 수

<점수분포표>

점수	25	22.5	20	17.5	15
사업완료 관서	30개 이상	28개서 이상 ~ 30개서 미만	26개서 이상 ~ 28개서 미만	24개서 이상 ~ 26개서 미만	24개서 미만

※ 최근 4년간 '사업 완료 관서 수'가 '18년 14개서, '19년 19개서, '20년 22개서, '21년 32개서로, 4개년 평균치(22개서) 및 전년도 실적치를 고려, 30개서를 만점으로 하여 점수분포표 설정

< 지표2. 책임수사 과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반영도(%) >

○ 설정배경 : 국민중심 책임수사 관련 제도 및 각종 기능개선 요구사항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구현되어 표준화된 업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 반영 정도를 정량화하여 평가

○ 측정산식 : (책임수사 등 과제 시스템 반영 건수 / 책임수사 과제 등 전체 기능개선 요청건수) × 100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 방법

- **(요청건수)** 기능별 전산개발의뢰 사항 중 단순한 기능개선 사항 등은 제외*하고 책임수사와 관련된 과제 시행에 따라 업무절차가 변경되어 KICS 구현이 필요한 사항

* 단순 기능개선, 법령·지침에 반하는 내용, 기술상 구현 불가능한 내용은 제외

<현재까지 접수된 '22년 책임수사 관련 주요 전산개발 의뢰과제>

1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연계, 실종자 신속 수사	**6**	공무원 조회 자동화
2	외국인 피의자 고지권리서 등 추가(16개국 언어)	**7**	등본송부요구 검찰 연계
3	촉법소년 통계 전산화	**8**	신분위장수사 서식 검찰 연계
4	심야조사와 휴식시간 알려주는 「인권시간 알리미」	**9**	경·검 간 변호인 정보 연계, 통지 및 조회 강화
5	불송치 송부서 무고 판단 기재 누락 방지	**10**	디지털증거자료 개정 서식 등록

- **(산출건수)** 자체평가 보고서 등록일 기준(10월말 예상),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테스트·시범운영 등이 진행중(50% 이상)에 있는 과제 건수(12월 추가점검 시 최종 확인)

○ '22년 목표산출 : '21년 개정된 신분위장수사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신규 기능개선 과제를 시스템에 반영 예정으로, 지난해 반영률 85.1%(총 94건 요구 중 80건 반영)보다 3% 상향한 88%를 목표치로 설정

< 지표 3 전문수사인력 확보 >

○ 설정배경 : 수사실무자의 수사역량을 제고 하기 위한 전임수사관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경찰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률 전문인력인 변호사에 대한 채용 확대를 종합하여 지표로 산정

○ 측정산식 : 자격관리제도 중 전임수사관 선발인원(50%) +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확대(50%)

구분	50점	28.5점	27점	25.5점	24점	22.5점	21점
① 자격관리제도 중 전임수사관 인원(30%)	전년인원대비 95% 이상 확보	93% 이상 95% 미만	91% 이상 93% 미만	89% 이상 91% 미만	87% 이상 89% 미만	85% 이상 87% 미만	85% 미만
구분	**50점**	**38점**	**36점**	**34점**	**32점**	**30점**	**28점**
②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 확대(40%)	전3개년 평균대비 10%이상 확대	8% 이상 10% 미만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2% 이상 4% 미만	0% 이상 2% 미만	감소

○ '22년 목표산출 : ① '21년「자격관리제」본격 추진으로 처음 도입되는 전임수사관 선발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의 30% 조기선발을 위해 적극적인 목표 설정

※ '21년에는 전임수사관 3,325명을 처음 선발하였고 올해에는 전임수사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

②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은 '14년 상반기 최초 선발한 이래, 선발인원의 변동이 없던 분야로 경찰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목표치인 10% 확대를 목표로 설정함

< 지표 4 전문수사인력 양성 >

○ 설정배경 : 전문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사교육의 내실화 및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팀장을 포함한 수사관의 전문성 제고

※ 수사교육의 내실화 및 확대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 및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나, 책임수사 실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방역지침 및 환경 등을 이유로 수사교육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

○ 측정산식 : 수사연수원 전문·심화 교육수료 인원(60%) + 과·팀장 교육 수료인원(40%)

구분	60점	58점	56점	54점	52점	50점	48점
①수사연수원 전문·심화교육 수료인원(60%)	前 3개년 평균대비 95% 이상 수료	93% 이상 95% 미만	91% 이상 93% 미만	89% 이상 91% 미만	87% 이상 89% 미만	85% 이상 87% 미만	85% 미만
구분	**40점**	**38점**	**36점**	**34점**	**32점**	**30점**	**28점**
②과·팀장 교육 수료 인원(40%)	전년 대비 95% 이상 수료	93% 이상 95% 미만	91% 이상 93% 미만	89% 이상 91% 미만	87% 이상 89% 미만	85% 이상 87% 미만	85% 미만

○ '22년 목표산출

① 전문·심화 교육 수료 인원

- 전문·심화 교육은 전문 수사인력 양성에 가장 주요한 요소임에 의의가 있으나 그 특성상 코로나 상황의 심각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감안, 전 3개년 평균 대비 95% 이상 수료를 목표로 설정(60%)

② 과·팀장 교육 수료인원

-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과·팀장에 대한 전문 수사교육 또한 그 중요성 및 환경 의존성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95% 이상 수료를 목표치로 설정(40%)

⇨ '22년 목표는 '21년 실적 92점보다 3점 상향된 95점으로 설정

○ 이전 수치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①수사연수원 전문·심화교육 수료 인원	1,449명	2,240명	1,053명	1,391명
②과·팀장 교육 수료 인원	-	-	405명	785명

28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 추진배경 (목적)

○ 수사권 개혁에 따른 제·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수사절차 전반에 변화가 있어 제도적 안착 및 인식도 제고 등 제반 조치 필요

※ '21. 1. 1.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 / 제정 대통령령·부령 시행

○ 국민에게 수사권 개혁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절차에 대한 효용 분석 및 국민 인식 향상 등 노력 필요

○ △수사-기소 완전 분리 △독점적 영장청구권 개선 등 향후 지속 추진해 나갈 수사권 개혁의 추진 방향 설정 및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제·개정 법령과 관련된 연계법령 정비 등 후속 법제 정비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가 통일성 있게 작동하도록 연계 법령 제·개정 등 정비 추진 (자본시장법 등 76개)

○ △법령 주관 부처와의 협의 △개정 필요 법령 검토 및 의견 제시

② 경찰 책임수사체계 안정 및 수사주체성 확립 노력 전개

○ 현장 수사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변화된 수사절차의 안착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품질 향상 기반 마련

- 현장에서 수사절차에서 활용 가능한 지침을 마련·배포하고 부당한 검사 지휘 및 실무 관행에 대해서는 본청 차원 적극 대응

○ 국가 형사사법체계 안정을 위한 기관 협의체 마련 및 협력 추진

- '경찰-해경-검찰'이 참여하는 「수사기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실무상 쟁점 발생시 경찰청-대검찰청 간 신속 협의 실시

③ 수사권 개혁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소통 활동 전개

○ **(대내)** 일선 수사관들과의 소통으로 변화된 수사제도에 대한 현장 여론을 수렴하고 향후 수사권 개혁의 내부동력을 확보

○ **(대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외적 공감대를 형성, 변화된 수사 절차와 향후 개혁방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언론기고·출연 △대국민 홍보자료 배포 △세미나·간담회 개최 등

④ 국민 신뢰 증진을 위한 수사제도 개선·수사권 개혁 지속 추진

○ **(대내)** △이의제기·민원 △현장 수사관 건의사항 등을 통해 수사 제도 및 절차상 문제점 발굴·분석 및 개선 대책 마련

○ **(대외)** △수사-기소 완전분리 △독점적 영장청구권 개선 등 수사권 개혁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기반 마련

※ 검찰 수사권 폐지·별도 수사기관 설립 등 관련 논의에도 적극 대응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수사기록 작성 관련 자료수집 및 총론 부분 작성 제작 배포	1~3월	②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 면담	1~3월	③
	경찰청-형정원 공동 세미나 개최	1~3월	③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면담	1~3월	③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면담	1~3월	③
	전 경찰개혁위원 면담	1~3월	③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면담	1~3월	③
2/4분기	경제범죄 범죄사실 작성례 제작 배포	4~6월	②
	수사절차법 관련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지원보고서 작성	4~6월	②
3/4분기	검·경 책임수사정비 협의체 회의 참여	6~8월	②
	반부패·공공범죄, 사이버 범죄사실 작성례 제작 배포	7~9월	②
4/4분기	개정법 하위법령(수사준칙, 경찰수사규칙 등) 개정 작업	9~12월	②
	여청, 교통, 안보 등 기타 범죄사실 작성례 제작배포	9~12월	②
연중	국회·언론·학회 등 수사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배포 및 대응	연중	①
	경찰·검찰 간 협력 강화 추진	연중	②
	국회·정부·언론·시민단체 등 대상으로 소통 활동 지속 전개	연중	③
	연계법령(자본시장법 등) 개정 추진 및 후속조치	연중	①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경찰)**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의 주체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경찰 위상을 제고하고 수사관에게 자긍심 부여

○ **(국민)**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서비스를 제공받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구조 확립을 통한 국민 인권 침해 방지

○ **(검찰)** 독점적인 권한을 분산하여 공소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

□ 기대효과

○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여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를 강화하여 인권 보호 및 편익 증대

○ 경찰은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확보

○ 검찰 지배적 수사구조에서 탈피하여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협력을 하면서 국민지향 형사사법서비스 제공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개정 형소법 현장 정착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30%)	14	16	18	21	하단 참조	{(법령 개정 검토 보고서 및 주무부처 의견조회 등)+(국회·학회·언론 등 배포·대응)}×0.1	공문, 검토보고서 등
② 협력적 경·검관계 정착 및 현장수사관 실무 지원 (40%)		7.25	8.0	8.9	"	{(수사제도 개선 및 국회·정부대응 보고서)+(부당요구 현장진출 및 서류 검토)+(실무협의회)}×0.1	공문, 검토보고서, 연구결과서 및 언론홍보자료 스크랩 등
③ 수사권 조정의 우호적 여론 및 외연 확장과 선진 수사구조를 위한 수사제도 연구 (30%)		-	8.0	8.9	"	{(전문가 면담 및 유관기관 예방)+(외부강연 및 세미나 등)+(체포구속 등 수사제도 연구)}×0.1	공문, 검토보고서, 연구결과서 및 언론홍보자료 스크랩 등

<지표 1> 개정 형소법 현장 정착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

○ **지표 설정의 적절성 (기존지표 목표치 상향조정)**

-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시행('21.1.1.)되었으나 일원화된 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 조치로 연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정비가 과제로 남아있음

- 각종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불균형한 경・검 관계가 반영된 수사절차 규정'을 발굴・개정하는 작업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수사권 조정 취지를 구현하는 최우선 과제임

- 법령 개정 지연으로 수사 현장에서 혼선・착오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에게 큰 피해 우려, 면밀한 검토 및 적극적인 개정 활동 필요

○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및 측정산식 : [①+②] × 0.1**

(기존지표 목표치 상향) △21년도 목표치: 18점 △22년도 목표치: 21점 [3년간 실적 추세치 「13.4%」를 상회하는 적극적 목표치 「16.7%」로 설정하여 도전적 목표치 설정]

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후속・연계 법제 정비 등 수사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주무부처 의견조회 및 업무협의 개최 (목표치 110점 : 1회 10점)

② 국회·언론·학회 등에 수사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배포 및 대응(목표치 100점 : 1회 10점)

<지표 2> 협력적 경・검 관계 정착 및 현장수사관 실무지원

○ **지표 설정의 적절성**

- 제・개정 법령에 따른 기존 수사절차의 큰 변화로 단계별 처리절차에서 현장 혼선, 기관 간 의견 대립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통한 신속한 안정화 필요
- 기존 절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령 제・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수사권 개혁 지속 추진에 따른 기반 마련 필요
- 잔존하는 검찰의 부당요구・요청사례를 발굴하고 죄명별 송치결정서 업데이트 등 추진하여 전문적이고 주체적인 수사제도 정착을 유도

○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및 측정산식** [①+②+③] × 0.1

(기존지표 목표치 상향) 22년 목표치 8.9점 [2년간 상승세 「10.3%」를 상회하는 적극적 목표치 「11.25%」를 설정]

① 수사제도 개선 관련 보고서, 수사권 개혁 관련 국회・정부 대응보고서 작성・배포 (목표치 33점 : 제도개선 관련 1회 5점, 수사권개혁 관련 1회 5점)

② 검찰 부당요구・요청에 대한 현장진출 및 서류검토 등 대응, 죄명별 범죄사실・송치결정서 등 수사서류 작성례 업데이트 (목표치 42점 : 현장진출 및 서류검토 등 대응 1회 5점, 범죄사실・송치결정서 등 죄명별 수사서류 업데이트 1회 5점)

③ 제·개정 법령 시행 관련 수사기관 간 실무협의(경-검) 개최 (목표치 14점 : 실무협의 개최 1회 7점)

<지표 3> 수사권 조정의 우호적 여론 및 외연 확장과 선진 수사구조를 위한 수사제도 연구

○ **지표 설정의 적절성**

- 수사권 개혁 경과 및 효용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 제고로 제도 개선 효과 향상
- 하위·연계 법령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회·언론 등의 관심 필요
- 개정 형사소송법의 해석·적용이 이루어지는 법조계 및 관련 학회의 이해도 제고 필요
- 국민과 언론·학계·법조계 등 외부 대상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내용과 의미,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다양한 소통 노력 전개, 이에 대한 성과 측정

○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및 측정산식** [①+②] × 0.1

(기존지표 목표치 상향) 22년 목표치 8.9점(▲0.9, 전년대비 11%↑)

① 전문가(언론·법조인·학자) 면담, 유관기관 예방(목표치 33점 : 면담 1회 5점, 유관기관 예방 5점)

※ 코로나 관련 현장 설명회·간담회, 언론 출연 등 집단모임 가능성의 대외활동 대폭 축소

② 외부강연, 학술세미나 등 개최·발제·참석, 언론대응(목표치 40점 : 학술세미나 개최 1회 10점, 외부강연 1회 5점, 학술세미나 발제·토론 1회 5점, 학술세미나 참석 1회 3점, 언론대응 1회 3점)

③ 체포구속제도·경미범죄·고소고발개선·피해자보호조치 등 수사제도 연구(목표치 16점 : 연구 및 검토보고서 1회 5점)

29 국민중심 책임수사체제 추진을 위한 인권·현장 중심 제도개선

□ 추진배경

○ 개정 형소법 시행 및 국수본 발족 후 1년 경과, 경찰은 더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민중심 책임수사체제' 지속 추진 중

– 이를 위해 수사 과정·결과에 엄격한 심사절차로 수사의 완결성 확보 및 탄탄한 인적·제도적 기반 마련 중요

○ 개정 형소법은 그간 경찰이 입건 전 조사종결·관리미제 사건기록 외 추가로 ▵불송치 ▵수사중지 기록도 보관하도록 책무 부여

– 이에 따라 완벽한 경찰수사 사건기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법령·지침 정비 및 인력·예산 확보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국민이 바라보는 '공정'에 초점을 맞추어 원점에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법령·제도 등을 진단·점검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환류

※ ('20년 KBS 신년여론조사)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핵심 가치에 대해 전화 조사한 결과, 1위는 공정, 2위는 안전으로 답변

– 그에 따른 각종 법령·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사 편의를 도모하고, 수사기법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해 현장 대응역량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책임수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3중 심사체계 안착]

< 3중 심사체계 흐름도 >

○ **(심사체계 고도화)** 3중 심사체계가 경찰 수사 전반에 안착되도록 조직·인적 기반을 확장하고 운영을 더욱 내실화 추진

- **(인력증원)** 통합수사지원팀 운영관서(34개서) 대상 수사심사관 업무조정 등 반영, 심사인력 831명(심사관·지도관) **확대 배치 예정 / 조직·인력 등 지속 확보 추진**
- **(지침정비)** △'역량' 중심의 심사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요건 정비 △KICS 개편에 따른 업무체계 변경사항 △신규 업무(조사자 증언 등) 등 개편사항 반영, 지침 정비

○ **(위원회 활성화)** 심사체계 안착 도모를 위해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지침·제도를 개선하고, 한층 더 내실 있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

- **(업무조정 등 제도 개선)** 관련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 후, 심사관 업무 범위 등 **심사체계 전반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지침 개선 작업 진행**
- **(위원회 활성화)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외부 참여를 활성화**하여 심사체계를 비롯, **수사제도·정책 전반의 객관적 검토 병행**

○ **(수사 완결성 확보)** 심사체계의 본연의 역할인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건 심사현황, 심사관 교육 현황도 지속 점검

- **(면밀한 사건심사) 사건 심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송치 결정 사건 심사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심사관 교육)** 수사심사관의 심사 역량을 상향 균질화하기 위해 **수사연수원 교육, 시·도청 교육센터 교육 활성화 및 현황 점검**

○ **(수사감찰 역량 강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찰의 역할 수행을 위해 감찰 활동 지침 마련 등 체계적 관리

- **(수사감찰 매뉴얼 제작·교육)** 수사감찰 절차별 처리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담은 「수사감찰 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 추진
- **(수사감찰 전종체계 구축)** 책임수사지도관이 **수사감찰 업무를 병행**하는 만큼, 수사감찰의 업무만 전종할 수 있는 인력 확보 추진

※ **'23년 경찰청 소요정원 계획**에 '수사감찰관' 정원(98명)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행안부·기재부 등)과 지속 협의 중

[경찰 사건기록 관리체계 등 업무기반 마련]

○ (법제 정비) 효율적·체계적으로 경찰 사건기록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지침 개선 등 관리 추진

▸ **(범죄수사규칙 개정)** 사건기록의 관리 단위를 ('철'→'건')로 변경하고, 보존기간을 '공소시효 만료 시'로 변경

- 또한 **사건기록 관리지침, 통합증거물 관리지침, 열람·복사 지침 등을 개편하여** 기존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는 등 지침 개선

○ (시스템 도입) 수사서류 열람·복사 과정에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자동 비식별 시스템」을 도입 등 고도화 추진

▸ **(개인정보 자동 비식별 시스템)** 수사서류의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소요되는 시간 감축**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비식별 누락사례 사전 방지**

▸ **(역량 강화)** 全 관서 사건기록 관리 전담 요원 교육 추진(총 2회)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구축]

○ (법령·제도 정비) 수사정책 총괄 부서로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 등을 진단·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법령·제도에 반영

▸ **(진단·점검)** 기존 제도의 현장 수용성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점검**(반기 1회)**

※ **<점검사항>**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절차 개선방안, ▲불송치 결정 통지서 작성 방법 명확화 지침 ▲입건 전 조사 사건 관리개선 등

▸ **(결과 반영)** 진단·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제도를 개선하거나 법령·훈령 등에 개선사항 반영**(분기 1회(총 4회)**

○ (제도 개선) 사건관계인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납득 가능하도록 수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 확보

– 수사관 자격별 배당 등 내용이 포함된 사건배당 지침 시행 및 배당 관련 시스템 개선 등 사건배당 제도 개선

▸ **(사건배당 통합지침 일선 정착)** 사건배당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旣 도입된 무작위 배당 지침 개선 등 일선 정착방안을 추진

▸ **(무작위 배당 프로그램-KICS 실시간 연동)** KICS에 탑재된 '무작위 배당 프로그램'의 배당 결과가 KICS 사건 시스템에 즉시 반영되어 사건배당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시스템 개선

▸ **(수사관 자격별 배당)** 수사관 자격관리제* 등과 연계하여 사건 유형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수사관 자격별로 사건을 배당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 **<수사관 자격관리제>** ①예비수사관(수사부서 전입 전)→②일반수사관(수사경력 3년 미만)→③전임수사관(경력 3년 이상)→④책임수사관(경력 7년 이상, 시험·심사로 선발)

○ **(개정 「군사법원법」 후속조치)** '21. 9월 △성범죄 △입대 전 발생 범죄 등 일부 범죄의 관할을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법」 개정안 공포('22. 7. 1. 시행)

– 개정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행안부 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 제정 △정원 이관 △실무지침 마련 및 교육 추진

▸ **(개정법 주요내용)** 군 수사 투명성 강화,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범죄 △입대 전 발생 범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일반법원 관할 이전('22. 7. 1. 시행)

▸ **(대통령령 제정)** 법 개정 이후 「군 사법개혁 TF」 구성('21. 9월), 이관 범죄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국방부 소관 대통령령案 협의 거쳐 최종안* 마련('21. 11월)

* **<명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진행사항> 입법예고('22. 1월),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22. 2월) 완료, 국무회의(3. 2.) 예정
<주요내용> 부대장 등의 수사협조, 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 사건의 이첩,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변사사건에 대한 통보 및 처리,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및 통지, 수사 등의 촉탁 등

▸ **(정원 이관)**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한 경찰의 업무량 증가분에 상응하는 인력이관을 위해 유관기관(경찰청·국방부·행안부·기재부)과 협의 진행 중

※ '22. 2월 현재 4차례 실무회의 진행

- 정원이관 규모에 따라 처리부서, 운영방안 등 검토 예정

▸ **(실무지침 마련·교육)** 대통령령에 규정된 수사절차대로 실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 마련 및 일선 교육 추진

○ **(신뢰성 향상)** △수사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사건관계인에게 진행상황 통지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향상

– 수사민원 상담센터* 등을 통한 대국민 상담 서비스 제공 건수 증가

* **<수사민원 상담센터>** 고소·고발 등 민원을 접수하는 피해자등에게 경찰관 및 변호사가 합동으로 형사사안 뿐만 아니라 민사 등 종합적인 법률상담 실시

< 수사민원 상담 업무 체계도 >

– 관련 사건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원할히 진행되고 있음을 사건관계인에게 인식·확인되도록 사건 개시·진행상황·결과 통지율*을 향상

* 통지율 = 통지건수/사건처리건수 x 100

[수사 전문성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 **(기준·원칙 제시)** 현장 수사관들의 당당하고 적극적인 법집행을 위하여 각종 수사 절차상 지침을 수립·정비하여 원칙과 기준 제시

– 현행범인 체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형소법 개정('22. 2. 3. 시행)에 따른 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 지침을 수립하여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적정성·적법성 확보

▸ **(현행범 체포의 가이드라인 제시)** 일선 경찰관들이 다양한 현장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구체적 세부 지침 제시
※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사건으로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필요성 제기

▸ **(영장신청 및 집행 관련 지침)** 개정 형소법* 취지를 반영,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실무지침 마련·하달
* 영장 집행 시 영장 원본 제시와 더불어 사본 교부 의무화 (§85①·④, §118)

– 법령개정 및 수사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사실무지침, 통신수사길라잡이 등 수사 절차상 지침·매뉴얼 적극 개선 추진

▸ **(수사실무지침)** 법령 개정, 수사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각종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사실무지침(現 제4판) 주기적 개정

▸ **(범죄수사규정집)** 헌법·형소법 등 법령·규칙에 산재된 수사절차를 정리하여 수사관들이 절차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집 개정 및 배포

▸ **(통신수사길라잡이)** 통신수사의 개념과 방법, 통신자료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별 수사 절차, 사후 통보 지침을 마련, 수사관들의 공통 질의사항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 **(수사기법 연구·개발)**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연구·개발, 범죄 대응 역량 강화 추진

– 수사기법 경진대회, 현장 수사관 대상 수사기법 교육 및 교육 컨텐츠 개발을 통한 全 수사부서의 수사역량 상향 평준화 추진

▸ **(수사기법 경진대회)** 현장의 우수 수사기법을 발표·공유하고,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우수 수사기법 선발하는 **수사기법 경진대회 추진**

▸ **(수사자료 분석기법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 **금융·통신데이터 분석기법 개발**(한국형 i2)을 위한 연구 추진

○ **(시스템 개선·정비)** 수사 과정에서 활용 중인 각종 시스템을 개선·정비하여 수사 편의 및 수사 효율성·신속성 제고

– 별정통신사에서 관리하는 통신자료(가입자 정보 등) 대상으로는 자동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여전히 통신사실확인자료(발신기지국 위치 등)에 대해서는 수기로 자료를 회신하고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까지도 자동 회신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

▸ **(별정통신사 대상 자동 송·수신 시스템 고도화)** 기존 통신자료제공요청에만 사용하던 QR코드 전자팩스 기능을 **'통신사실확인자료'까지 확대 적용**

– 그 외 공중전화 현황 정보 정비 절차 및 부정계좌 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업무절차 간소화, 수사업무 편의 개선 추진

▸ **(공중전화 현황 정보 정비 절차 개선)** 지역경찰에서 수작업으로 정비·보완하던 공중전화 현황 정보를 경찰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별도 권한 없이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절차 및 업무 편의 개선

※ 최초 신고 전화번호 또는 사건관계인의 통화내역의 전화번호가 공중전화 번호라는 것과 그 설치 위치 등을 신속하게 확인함으로써 수사 효율성 제고

<현황 및 개선 사항>

1. **(현황)** KT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자료에는 공중전화 신규 설치·이전·철거 등 변동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역경찰에서 수작업으로 자료를 정비·보완하고 있음

⇨ **(절차 개선)** 공중전화 신규 설치·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KT링커스'로부터 자료를 받음으로써 별도의 정비·보완 절차 없이 정확한 자료 확보

2. **(현황)** 공중전화 현황 정보는 '온라인조회 시스템'(별도 권한 필요)을 통해 조회 가능

⇨ **(업무 편의 개선)** 폴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별도의 'e-전화번호부'를 제작하여 누구나 별도 권한 없이 공중전화 현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부정계좌 관리시스템 개선)** 부정계좌 등록 절차를 개선, 업무절차 간소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2 경찰수사 심사체계 고도화 계획	’22. 2월	
	「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 실무지침」 마련	’22. 2월	
	통합증거물 관리지침 수립·시행	’22. 3월	
	「현행범인 체포 가이드라인」 마련	’22. 3월	
	「범죄수사규칙」 개정(1/4분기)	’22. 3월	
	수사감찰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22. 3월	
2/4분기	책임수사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점검 종합계획	’22. 4월	
	수사자료 분석포털 제작	’22. 5월	
	개인정보 자동 비식별 시스템 도입	’22. 5월	
	「범죄수사규정집」 개정	’22. 6월	
	「범죄수사규칙」 개정(2/4분기)	’22. 6월	
3/4분기	개정 「군사법원법」 관련 실무지침 수립 및 교육	’22. 7월	
	공중전화 현황 정보 정비 절차 개선	’22. 7월	
	수사자료 분석기법 연구(한국형 i2 개발) 착수	’22. 8월	
	수사관 자격별 사건배당 기준 마련	’22. 9월	
	「범죄수사규칙」 개정(3/4분기)	’22. 9월	
4/4분기	사건기록 관리 전담 요원 대상 교육(3차)	’22. 10월	
	별정통신사 대상 통신수사자료 송·수신 시스템 고도화	’22. 11월	
	부정계좌 관리 시스템 개선	’22. 12월	
	「범죄수사규칙」 개정(4/4분기)	’22. 12월	
	「경찰수사규칙」 개정	’22. 12월	
	22년 수사기법 경진대회 개최	’22.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경찰수사를 직접 접하는 사건관계인(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및 안전한 사회를 기대하는 일반 국민

○ 경찰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 경찰 인원의 약 25%를 차지하는 국가수사본부 수사경찰

□ 기대효과

○ 국민중심 책임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 등 기반을 마련,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수사경찰의 직무만족도 제고

○ 지침 수립, 법령개정 등을 통해 내실있는 경찰 사건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업무 수행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21년 조직개편(국가수사본부 신설 관련)으로, ’22년 단위사업명 변경

- **<’21년>** 수사기획조정관 자체 단위사업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자문료(1231-311-210-01)		
① 수사이의심사위원회(1231-311-210-01)		3,45
경찰서 사건기록 보관실 구축(023-1200-1231-312)		
① 수사서류 보관실 개선		91
■ 수사서류 보관실 개선(210-02)		3,7
■ 수사서류 보관실 개선(420-03)		41
■ 수사서류 보관실 개선(420-04)		0,6
■ 수사서류 보관실 개선(420-05)		0,1
■ 수사서류 보관실 개선(430-01)		45
통합증거물 관리(023-1200-1231-312)		
③ 통합증거물 보관실 유지보수		4
■ 압수물처리비(210-01)		1
■ 통합증거물 보관실(420-03)		1
■ 통합증거물 보관실(430-01)		2
수사자료분석시스템(023-1200-1231-311)		
수사자료분석시스템		25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57
별정통신사자료 자동 송부 시스템 구축(023-1200-1231-311)		
별정통신사자료 자동 송부 시스템 구축		19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9

- <'22년> 국가수사본부 단위사업 내 포함된 사업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자문료(1231-311-210-01)		
① 수사이의심사위원회(1231-311-210-01)		7,30
경찰서 사건기록 보관실 구축(023-1200-1231-311)		
① 수사서류 보관실 개선		92
■ 일반수용비(210-01)		0.8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6
■ 기본 설계비(420-01)		0,6
■ 공사비(420-03)		41
■ 감리비(420-04)		0,6
■ 시설부대비(420-05)		0,1
■ 자산취득비(430-01)		44
수사서류 고속복사기 임차(개인정보 자동 비식별 시스템)(023-1200-1231-311)		
수사서류 고속복사기 임차(개인정보 자동 비식별 시스템)		35
■ 임차료(210-07)		35
통합증거물 관리(023-1200-1231-311)		
③ 통합증거물 보관실 유지보수		4
■ 압수물처리비(210-01)		1
■ 통합증거물 보관실(420-03)		1
■ 통합증거물 보관실(430-01)		2
수사자료분석시스템(023-1200-1231-311)		
수사자료분석시스템		13.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5
■ 일반연구비(260-01)		8.8
■ 자산취득비(430-01)		2.2
별정통신사자료 자동 송부 시스템 구축(023-1200-1231-311)		
별정통신사자료 자동 송부 시스템 구축		4.6
■ 공공요금및제세(210-02)		0.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0.4
■ 일반연구비(260-01)		4.1
부정계좌관리시스템(023-1200-1231-311)		
부정계좌관리시스템	-	0.8
■ 일반연구비(260-01)	-	0.7
■ 자산취득비(430-01)	-	0.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책임수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3중 심사체계 안착 노력도 (25%)	신규	신규	신규	70	①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25%) ②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25%) ③ 불송치 결정사건 심사·점검(25%) ④ '심사관' 전문교육 실시(25%)	신규 지침 수립, 사건심사 건수,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교육이수율 등 <지표1 참고>	시행 공문 / 보고서
경찰 사건기록 관리체계 등 업무기반 마련 (25%)	신규	신규	100	70	① 유관기관 협의 등 노력도(25%) ② 법령 정비·검토 및 지침 수립·시행(25%) ③ 개인정보 자동 비식별 시스템 도입(25%) ④ 기록관리 전문교육 실시(25%)	협의 건수, 법령·지침 정비 및 수립 및 관련 사업 진척도, 교육 이수율 <지표2 참고>	관련 공문 / 보고서 / 개인정보 자동 비식별 시스템 등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구축 노력도 (25%)	신규	신규	신규	70	① 경찰 수사 관련 법령·훈령 정비(30) ②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20) ③ 경찰 수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노력(50)	현장점검 횟수, 법령·훈령 개정 횟수, 제도 개선 지침 시행 등 시행 건수, 사건 진행상황 통지율, 수사민원 상담 건수 <지표3 참고>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 추출/ 시행 공문 / 수기취합
수사 전문성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25%)	신규	신규	신규	70	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40) ② 수사기법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30) ③ 현장 수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30)	수사지침·매뉴얼 등 수립 건수, 수사기법 전문성 향상 노력 건수, 수사 편의 향상을 위한 개선·정비 건수 <지표4 참고>	수사기법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건수로 측정

< 지표 1 : 책임수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3중 심사체계 안착 노력도 >

■ **(지표 선정)** 3중 심사체계는 '21년 신설된 제도로 재수사요청 비율 감소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 해당 제도를 수사현장에 완전히 안착시키기 위해 문제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 이와 동시에 내부 심사·점검을 활성화하며, 나아가 심의위원회 운영 등 외부통제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 또한 상향균질화된 사건 심사·점검을 위해 교육도 진행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표로 설정

■ **('22년 목표산출)** 제도 안착을 위한 중점 요소들을 지표로 선정하여 전년도 자료가 없는 상황이나 해당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합계 70점 이상 달성 시 만점으로 설정

■ **(측정산식)** ①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25%) ②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25%) ③ 불송치 결정사건에 대한 심사·점검(25%) ④ 심사관 전문교육 실시(25%)

■ **(측정방식)** 해당 세부 기준에 따라 점수 차등화(각 항목당 25점 상한)

구분	①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②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	③ 불송치 결정사건 심사·점검				④ 심사관 전문교육						
기준	의견수렴 이후 관련 지침 수립	심의위원회 개최수 (경찰청 및 시·도청)	전제 불송치 사건 대비 사건심사·점검 건수				전체 심사관 대비 교육 이수자				심사관 교육 자료 제작		
점수 (100점)	지침 수립·개정 (전국 단위)	위원회 개최	90%~	84~89%	78~83%	~77%	76%~	70~75%	64~69%	~63%	3건	2건	1건
	(건당) 5점	(회당) 0.14점	25	20	15	10	25	20	15	10	10	7	4

※ **(① 제도 개선 등)** '21년 운영결과,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표 설정

※ **(②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1년 국정과제 연계지표로 선정되는 등 외부 참여 확대의 순기능을 지녀, 경찰청 뿐만 아니라 시·도청까지 포함하여 위원회 운영을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지표 설정

※ **(③ 불송치 결정사건 심사·점검)** 수사권 개혁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해 빈틈없이 심사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90%로 설정(KICS 시스템을 통해 통계를 산출하여, 산출 오차 등을 감안)

※ **(④ 심사관 교육)** 年 최대 4,000명 상당만 교육할 수 있는 수사연수원 여건 등을 고려, 전체 심사관(726명) 중 정원으로 반영된 인원(554명)이라도 교육하기 위해 만점을 76%(554/726명) 설정

< 지표 2 : 경찰 사건기록 관리체계 등 업무기반 마련 >

■ **설정배경** : 경찰 사건기록 관리체계 등 업무기반 마련을 위해 ▵경찰 사건기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등 노력도 ▵경찰 사건기록 관련 법령 정비 및 지침 수립·시행 노력도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관리 ▵관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측정산식** : ①유관기관 협의 등 노력도(25%) + ②법령 정비 및 지침 수립·시행 노력도(25%) + ③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관리(25%) + ④교육 이수율(25%)

■ **'22년 목표산출** : 새롭게 발굴한 지표로 최근 실적치가 없는 상황으로, 모든 세부 지표목표치를 '상' 수준 초과하는 것으로 설정한 점을 감안하여 합계 점수 80점 달성 시 만점으로 하는 적극적 목표치를 설정

① 유관기관 협의 등 노력도 (25%)

(개요) 경찰 사건기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기록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유관기관 협의 등 노력도 및 반영 성과를 지표로 선정

(산출방법) 유관기관 협의 회수에 따라 점수 차등 배분

<점수분포표>

구 분	25점	22.5점	20점	17.5점	15점
종합 결과 (항목별 배점 총합)	**10회 이상**	**8회 이상 ~ 10회 미만**	**5회 이상 ~ 8회 미만**	**3회 이상 ~ 5회 미만**	**3회 미만**

② 사건기록 관리 관련 법령 등 정비·검토, 지침 수립 및 민원안내 등 노력도 (25%)

(개요) 체계적인 업무기반 설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이 필수적이고, 새로운 업무체계에 대한 민원안내가 필요함

경찰 사건기록 관리와 관련된 법령 정비·검토 및 지침 수립·시행, 민원안내 노력도를 지표로 선정・관리

(산출방법) 법령 정비 건당 30점, 규칙 정비 건당 20점, 지침 수립·시행 및 법령·규칙 검토 건당 10점, 민원 안내 건당 5점

※ 법령·규칙의 제·개정과 단순 검토 또는 내부지침 수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점수 차등 배분, 민원안내는 정보공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서면 안내의 경우만 평가

<점수분포표>

구 분	25점	22.5점	20점	17.5점	15점
종합 결과 (항목별 배점 총합)	**90점 이상**	**70점 이상 ~ 90점 미만**	**50점 이상 ~ 70점 미만**	**30점 이상 ~ 50점 미만**	**30점 미만**

※ 법령 정비 3건 시 90점(30점 × 3)

③ 수사서류 열람·복사시 개인정보 자동 비식별 시스템 도입 (25%)

(개요) 그간 수사서류 열람·복사시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업무량을 대폭 감축시키고,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비식별 누락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자동 비식별 시스템 도입

(산출방법) 시스템 도입(전국관서 대비 100% 50점, 75% 40점, 50% 30점, 25% 20점), 사용 매뉴얼 제작 등 40점

<점수분포표>

점수	25점	22.5점	20점	17.5점	15점
종합 결과 (항목별 배점 총합)	**90점 이상**	**70점 이상~ 90점 미만**	**50점 이상~ 70점 미만**	**30점 이상~ 50점 미만**	**30점 미만**

※ 원활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업무처리 도모를 위해 시스템 도입도를 구분하여 점수 배분하고, 매뉴얼 제작 등 사후관리 노력도도 점수로 배분

④ 사건기록 관리 전문교육 실시 (25%)

(개요) 변화된 기록물 관리체계의 안정적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기록물 담당 인력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 사건기록 관리 교육 이수율을 지표로 선정

구 분	25점	22.5점	20점	17.5점	15점
이수율	**70% 이상**	**60% 이상~ 70% 미만**	**50% 이상~ 65% 미만**	**45% 이상~ 50% 미만**	**40% 미만**

< 지표 3 :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구축 노력도 >

■ 설정 배경 : 피의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구축 노력도를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대국민 신뢰 제고

■ 측정산식 : ① 경찰 수사 관련 법령·훈령 정비(30점) + ②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20점) + ③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노력도(50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① 경찰 수사 관련 법령·제도 총괄 정비(50점)</th><th rowspan="2">②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20점)</th><th colspan="8">③경찰 수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노력(30점)</th></tr>
<tr><td colspan="8">- 사건관계인 통지율 향상
- 수사민원 상담 건수 향상</td></tr>
<tr><td rowspan="3">기준</td><td rowspan="3">-기존 제도 진단·점검
-(부령)「경찰수사규칙」 및 (훈령)「범죄수사규칙」 개정</td><td rowspan="3">-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책 시행(공문 기준)</td><td colspan="4">수사민원 상담건수 향상</td><td colspan="4">사건관계인 통지율 향상</td></tr>
<tr><td>5%p 이상</td><td>0%p ~ 5%p</td><td>-5%p ~ 0%p</td><td>-5%p 미만</td><td>5%p 이상</td><td>0%p ~ 5%p</td><td>-5%p ~ 0%p</td><td>-5%p 미만</td></tr>
<tr><td rowspan="2">점수 (100점)</td><td rowspan="2">- 현장점검 횟수(1회당 5점, 2회 이상은 10점)
- 개정 횟수(1회당 10점, 4회 이상은 40점)</td><td rowspan="2">공문 시행 건수 (1건당 5점, 4건 이상은 20점)</td><td>25점</td><td>20점</td><td>15점</td><td>10점</td><td>25점</td><td>20점</td><td>15점</td><td>10점</td></tr>
</table>

① 경찰 수사 관련 법령·훈령 정비(30점) : 기존 제도에 대해 진단·점검하고 그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을 행안부령(「경찰수사규칙」) 및 경찰청 훈령(「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여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현장점검)** 현장 부담 등을 고려하여 반기 1회, 연 2회 개정 예정

※ **(법령·훈령 개정)**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공통) 및 행안부 검토(행안부령) 등 외부 검토 과정이 필요한 점과 개정 수요 등을 감안, 훈령(분기 1회), 부령(연 1회) 포함 연 4회 이상 개정을 목표로 설정

②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20점) : 사건관계인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납득 가능하도록 수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

※ **(수사의 공정성 확보 관련 제도 개선)**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문을 기준으로 측정

< 제도 개선책 예시 >

▸ '22년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 개정(수사관 자격별 사건배당 기준 마련 등 포함)

▸ 수사 절차 종합안내문 제작

③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노력도(50점) : 고소·고발 등 민원을 접수하는 피해자등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건관계인에게 진행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향상

※ **(수사민원 상담건수)** 수사민원 상담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작년 상담건수*와 비교하여 차등 배점

* 작년('20. 11. 1. ~ '21. 10. 31.) 수사민원 상담건수는 372,184건

※ **(사건관계인 통지율)** 현장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최근 3년 평균 통지율과 비교하여 차등 배점

* 통지율 = 통지건수/사건처리건수 x 100 / 최근 3년('18. 1. 1. ~ 21. 10. 25.) 평균 통지율은 592.2%

■ '22년 목표산출 : 각 지표의 중요도 등을 고려한 목표치의 70점 이상 달성 시 만점(25%)

점수	25%	22.5%	20%	17.5%	15%
노력도	70점 이상	67점 이상 ~ 70점 미만	64점 이상 ~ 67점 미만	61점 이상 ~ 64점 미만	61점 미만

< 지표 ④ : 수사 전문성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

■ 설정배경 : 현장의 당당하고 적극적인 법집행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수사기법을 전문화·고도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경찰 구현

■ 측정산식 :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40) + 수사기법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30) + 현장 수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30)

-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40점) : 현장에서 법집행의 원칙·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각종 수사지침 또는 매뉴얼 수립·개선 건수에 따라 노력도 측정 (시행 공문으로 측정)

지침·매뉴얼 수립	0건	1건	2건	3건	4건 이상
배 점	0점	10점	20점	30점	40점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 예시>

▸현행범 체포의 가이드라인 제시 ▸영장 신청 및 집행 관련 지침

▸수사실무지침 개정 ▸범죄수사규정집 개정

▸통신수사길라잡이 개정

- 수사기법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30점) : 수사기법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 활동, 관련 자료의 제작, 행사 주최 등 활동 건수에 따라 노력도 측정 (수사기법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건수로 측정)

활동 건수	0건	1건	2건	3건 이상
배 점	0점	10점	20점	30점

<수사기법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예시>

▸ 수사기법 관련 사이버 교육 컨텐츠 제작 ▸ 수사기법 경진대회 추진

▸ 수사자료 분석기법 연구 ▸ 수사자료 분석포털 제작

- 현장 수사 편의성 제고 노력도(30점) : 현장 수사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또는 제도의 개선·정비 건수에 따라 노력도 측정 (시행 공문으로 측정)

개선·정비 건수	0건	1건	2건	3건 이상
배 점	0점	10점	20점	30점

<현장 수사 편의성 제고 노력 예시>

- 별정통신사 대상 통신수사자료 송·수신 시스템 고도화
- 공중전화 현황 정보 정비 절차 개선
- 부정계좌 관리시스템 개선

■ '22년 목표산출 : '21년 신설된 과에서 신규 설정한 지표인 점을 고려, 각 노력도의 중요도 등을 고려한 목표치의 70점 이상 달성 시 만점(25%)

< 점수분포표 >

점수	25%	22.5%	20%	17.5%	15%
노력도	70점 이상	67점 이상 ~ 70점 미만	64점 이상 ~ 67점 미만	61점 이상 ~ 64점 미만	61점 미만

30 증거중심의 책임수사 지원 및 과학수사 현장대응력 제고

□ 추진배경

○ 수사권 개혁,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사법환경 변화에 따라 과학적 증거 확보·분석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

○ 과학기술 발전과 범죄의 진화 등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찰수사의 완결성·전문성·신뢰성 제고 필요

○ 기존의 범인 검거를 넘어 사건 조기 해결, 범죄 예방 등으로 확장된 국민의 치안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한 정확한 예측·분석을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 강화 긴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비전 (Vision)	사법환경 변화에 따른 증거중심 책임수사 완벽 지원 현장대응력 강화 및 과학수사 객관성·신뢰성 제고		
핵심목표 (What)	첨단 시스템 구축	현장대응력 제고	신뢰성·객관성 강화
세부계획 (Mission)	·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구축 · GeoPros 고도화 및 대외 데이터 협업 · AI 활용 지문 분석 · 3D얼굴인식시스템 고도화	· 이상동기 범죄 대응체계 마련 · 과학수사 업무절차 개선 · 미제사건 지문 재검색 · 증거분석 인적 역량 강화 · 현장감식 평가제도 개선	· 감정분야 국제인정 · 감정관 자격제 운영 · 자료관리분야 국제공인 · 지문자료 고도화

① D.N.A(Data, Network, AI) 기반 첨단 과학수사시스템 구축

○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現 과학수사 시스템에 적용하여 다량의 과학수사 데이터 통합·분석, 수사단서 자동 추출 등 데이터 기반의 수사지원이 가능한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구축 추진

※ '21년 ISP 수립, '22년 예산 20.7억원('22~'24년 3년, 135억)

ISP('21) 완료	▷	1단계('22)	▷	2단계('23~'24)
사업 설계 ISP 사업 추진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소요예산 산출)		현장사진, 보고서 등 과학수사 데이터 기반 사건분석 및 현장 수사활동 지원		AI를 활용, △데이터 학습 △현장 재구성 △용의자 특성 분석 기능 구현

– **(1단계 주요 내용)** 범죄현장 주변 CCTV 위치정보 제공, 도주경로 내 은신장소 추정, 현장상황 음성 기록(Voice to Text), 현장사진 자동분류, 수사단서 및 유사사건 자동추출 등 구현으로 수사의 효율성·신뢰성 제고

○ **(GeoPros 고도화)** 데이터 기반 분석 기능 강화, 수사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수사 대상자 동선 추적을 위한 데이터 통합 분석 △인터넷 로드뷰·경로안내 서비스 연계 △범죄 통계 다각화 등 기능 구현(2.16억원)

용의자 거점 및 동선 분석 기능

로드뷰, 경로안내* 기능

다각적 범죄통계 기능

* 경찰청 – T맵 모빌리티 間 지도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3월 中)

– **(데이터 대외 협업)** GeoPros의 범죄다발지(Hotspot) 데이터 공유를 통해 △지자체별 CCTV 우선 설치지역 선정 모델 개발 △전자발찌부착 대상자 전자 감독 지원 등 지역별·기관별 맞춤형 치안전략 수립 지원

대외 데이터 협업 추진 내용

- **(CCTV 설치지역 분석) 서울시**와 협업, 지역정보, 시설물현황, 민원신고 등 환경적 데이터에 핫스팟 범죄 데이터를 결합하여 CCTV 우선설치 대상 지역 선정에 활용('21.5월)
- **(전자감독 고위험 지역 분석) 법무부와 협업,** 성범죄 유형에 따른 범죄다발지 정보 제공하여 전자발찌부착자 특성에 따른 집중 감시 지역을 판단하여 효율적인 전자감독 지원('21.1월)

○ **(AI 활용 지문분석)** 그간 축적된 지문감정관의 노하우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AI 학습을 통해 감정 정확도 향상 도모

<세부 추진사항> △AI 감정에 최적화된 상태로 지문이미지 자동개선 △지문감정 의뢰 時 제공된 정보를 자동분석하여 검색조건 부여 △지문검색 알고리즘 개선 등

○ **(얼굴인식분석 시스템 고도화)** CCTV, 블랙박스 등 영상·사진 증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인식범위 확대 △재촬영 영상 노이즈 개선 등을 통한 분석률 향상 및 수사 활용도 제고

<세부 추진사항> △부분가림(마스크 착용 등) 얼굴인식 범위 확대(기존 좌우 30° 이내→상단 30°~하단 15°, 좌·우 45°이내) △영상자료 재촬영에 의한 노이즈 개선 등

② 치안환경 변화에 발맞춘 현장대응력 제고

○ **(이상동기 범죄 대응)** 범죄예방·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분석 가능토록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화,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공동체 구성 등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다 느낄 수 있는 사회 구현

- **(개념화)** 이상동기 범죄의 객관적·효율적 선별·관리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분석·연구, 현장수사관의 인식 등을 반영한 이상동기 범죄 개념 정의 및 판단기준 마련(원표 등 수사시스템 內 구현)

- **(대응절차 마련)** 이상동기 범죄 발생 時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이상동기 해당성 심의 후 관련기관(보건복지부 등 4개) 연계

※ 장기적으로 경찰·보건복지부·법무부·형정원 등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추진

○ **(과학수사 업무절차 개선)**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상 인권보호, 업무효율성 향상 및 업무절차 개선 등 추진

- **(피의자 지문채취)** 개인정보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자 지문채취 時 근거법령 및 목적, 안내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동의서(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등 전자수사자료표 內 피의자 지문채취 절차 개선

<그간 추진사항> ①「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21.6.) ② 국수본 정책점검 회의에서 논의 후 인권영향평가와 본부장· 차장· 청장님 보고를 거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21.11.)

– **(범죄경력회보)** ’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대비하여 범죄경력자료 오류회보 방지를 위해 최근 오류사례 분석 및 회보업무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10대 개선 과제* 발굴·개선 추진

* △공직후보자 회보 전 매뉴얼 마련, △범죄경력시스템 및 회보서 개선 △유관기관 협조 체계 제고 △선거회보 업무 사건 교육 강화 등

○ **(미제사건 지문재검색)**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고도화 및 감정관 숙련도 향상 등 발전된 지문 감정 역량을 바탕으로 장기미제사건의 지문을 재검색하여 사건 해결 지원

<세부 추진사항> △시도청 대상 재검색 수요조사 및 재검색 대상 사건 선정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검색 전담팀 구성 △지문재검색팀 운영 및 결과 분석 등

○ **(증거분석 인적 역량 강화)** 법과학 분석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경력 채용 및 전문 교육 추진을 통한 인적 전문성 강화

– **(채용)** △영상분석관 4명*(’22. 上) △뇌파 분석관 10명(’22.下) 경력경쟁채용을 통한 인적 전문성 및 대외적 공신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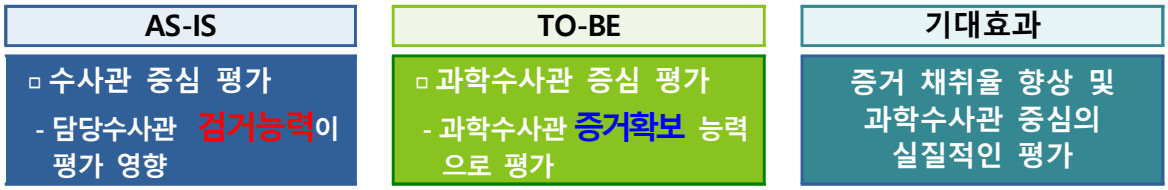
* 영상분석 정원확보 인원 12명 중 ’21년 8명 선발 완료

– **(교육)** 멀티미디어분석(영상분석·문서감정) 및 법심리(폴리그래프·법최면·뇌파분석) 감정관 대상으로 전문지식·최신기법·실무사례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법과학 감정·분석 역량 제고

○ **(현장감식 평가제도 개선)**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환경 변화에 따라 범인검거중심 ⇨ 증거확보 중심으로 과학수사 평가제도 개선

– 서류 실사 관행을 완전 폐지하고 전산화된 현장감식 활동 성과를 과학수사 소관 평가*와 연계, 효율적인 감식활동 관리

* △치안성과 △베스트 과학수사팀 △과학수사대상 등 특진·승급 등



③ 증거능력 향상을 위한 과학수사 신뢰성 · 객관성 강화

○ **(감정분야 국제인정)** 경찰 감정의 국제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족윤적·문서감정의 절차·방법에 대한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획득 추진

* KOLAS(Kolas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기관 등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기구

※ 지문감정('10년), 얼굴인식·영상분석('21년) 3개 분야 KOLAS 인정 획득·유지 中

○ **(감정관 자격제 운영)** 증거의 증명력 강화 등 감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교육·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감정관 자격제 확대 시행

– 지문감정관 자격 제도('21년 최초 시행) 성과분석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족·윤적 감정 등 他 분야로 확대 추진

○ **(자료관리분야 국제공인)** 지문·수사자료표·범죄경력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과학수사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록물 수집·관리·처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ISO)* 인증 확대 및 신규 획득 추진

*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65개국 가입)

– **(기록경영시스템)** 지문분야('20년 획득)에 이어 수사자료표·범죄경력 분야의 기록물 수집·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표준 (ISO 30301) 인증 확대

–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지문·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보보호하고 있음을 공인하는 국제표준(ISO 27001) 인증 신규 획득

○ **(지문자료 고도화)** 범죄수사·신원확인에 활용되는 지문자료의 신뢰성·정확성 제고 및 경찰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원본의 고해상· 디지털化 추진

<지문자료 고도화 사업 주요 내용> ① 기존 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품질검사 ('20년~25년) ② 지문자료 입력·분류와 품질검사 공정에 AI 도입·검증('21년~'22년) ③ 지문검색 알고리즘 추가 도입('21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수사자료표 지문채취용 라이브스캐너 구매 계획	1월	
	KOLAS 인정 확대 추진계획 수립	2월	
	정보화 물품 구매 요청(십지 라이브스캐너)	2월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보관시설 유지보수 장비 구매 계획	3월	
	과학수사자료관리·정보보호경영 국제표준(ISO) 인증 추진 계획	3월	
	AI활용 지문 분석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3월	
	얼굴인식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 계획 수립	3월	
2/4분기	현장감식 활동 평가 체계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4월	
	뇌파분석관 경력채용 계획 수립	4월	
	폴리그래프검사 역량 강화 교육 계획 및 실시	5월	
	지문자료 고도화 사업(4차) 계획 수립	5월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이관 관련 계획 수립	5월	
	문서감정(필적감정)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5월	
	법최면 수사 뇌파 활용 교육 계획 및 실시	6월	
3/4분기	수사자료표 지문채취용 라이브스캐너 구매 보급	7월	
	신임 범죄분석관 실습 교육 실시	7월	
	’22년 BEST과학수사팀 선발 계획 수립	8월	
	감정관 자격시험 실시	9월	
	범죄분석관 전문화 교육 계획 및 실시	9월	
	영상분석관 기본교육 계획 및 실시	9월	
4/4분기	범죄경력 업무편람 제작	10월	
	과학수사자료관리·정보보호경영 국제표준(ISO) 인증 취득	11월	
	얼굴인식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보고회	12월	
	법과학분석 분야 KOLAS 추가 인정 획득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과학수사 기반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全 국민

○ **(이해관계 집단)** 관련 자료를 보유한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과수 등

□ **기대효과**

○ 고도화된 과학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된 사법환경과 범죄현장에 대응하여 현장증거 채취, 수사분석지원, 범인검거 등 책임수사 완벽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21년 조직개편(국가수사본부 신설 관련)으로, '22년 단위사업명 변경

- **<'21년>** 과학수사담당관 자체 단위사업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첨단과학수사(I-3-일반재정②)			
	① 첨단과학수사(1232)	일반회계	327
			(327)
	■ 과학수사역량강화(311)		312
	■ 과학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1)		15

- **<'22년>** 국가수사본부 단위사업 내 포함된 사업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범죄수사활동(Ⅱ-1-일반재정②)			
	①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강화(1231)	일반회계	349
			(2,199)
	■ 과학수사역량강화(314)		349
	② 수사업무정보화(정보화)(1232)	일반회계	24
			(226)
	■ 과학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1)		2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범죄분석 지원지수(25%)	94.6	127	171	175	'22년 목표를 최근 3년간 실적 평균값(130.8점)보다 30% 이상 초과 상향한 175점 달성을 제시하여 더욱 도전적으로 설정	Σ(출동건수)×(건별활동점수)+(가점)	범죄분석 공식 공문, 의사결정 판단 자료
② 멀티미디어 분석 불가율(25%)	23.0	23.0	20.0	18.3	최근 3년간 평균 감소치는 연간 1.5%p임을 감안, '22년 목표치는 평균 감소치보다 10% 높은 1.7%p 감소한 18.3%로 도전적으로 설정	(영상·3D얼굴인식 분석 불가 건수) / (영상3D 얼굴인식 접수 건수) × 100	SCAS 시스템(영상분석), 3D얼굴인식시스템
③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25%)	1,587,413	2,105,646	2,774,761	2,850,000	'22년 목표를 최근 3년간 실적 평균값(2,155,940건)보다 30% 이상 초과 상향한 2,850,000건 달성을 제시하여 더욱 도전적으로 설정	SCAS, GeoPros, 접속건수 합산	SCAS 시스템, GeoPros 시스템
④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25%)	148.6	165.2	183.0	200	'22년 목표를 최근 3년간 실적 평균값(165.6%)보다 20% 이상 초과 상향한 200% 달성을 제시하여 더욱 도전적으로 설정	현장감식 채증물 등록건수/현장임장 건수 × 100	SCAS 통계관리 시스템

< 지표 1 범죄분석 지원지수 >

○ 설정배경 : 심리행동 증거, 지문·DNA 등 법과학 증거물과 지리정보 등 통합적 범죄분석에 대한 수사지원 효과 및 전문성 강화노력 평가

○ 측정산식 : 기본활동 점수 + 노력점수

1) 기본활동 점수

시도청 3개청 이상 지원·출동	시도청 2개청 이상 지원·출동	시도청 단독 지원·출동
1점	0.7점	0.5점

※ 범죄분석관이 단독 혹은 타 시도청 범죄분석요원과 합동으로 분석활동·지원한 경우, 범죄분석보고, 피의자면담 등 활동 관련 보고서, 분석 보고서, 관련 공문 등으로 산출

2) 활동 노력점수

① 범죄분석, 지리적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사건해결 기여' 등(1점)

② 기소, 영장청구, 판결 등에 증거로써 활용(1점)

③ 학회·연구회 구두 발표 및 교육(0.5점), 논문 작성 등(1점)

○ '22년 목표산출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값(130.8점)보다 30% 이상 초과 상향한 175점으로 도전적으로 설정

< 지표 2 멀티미디어 분석불가율 >

○ 설정배경 : CCTV, 블랙박스 및 각종 SNS 등 영상매체의 보급 확대로 범인 검거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분석(영상분석, 얼굴인식분석)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기법·장비 개발을 통하여 분석불가율 감소 추진(하향)

○ 측정산식 : 영상·3D얼굴인식 분석불가 건수 ÷ 영상·3D 얼굴인식 접수건수 × 100

○ '22년 목표산출 : 최근 3년간 평균 감소치는 연간 1.5%p임을 감안, '22년 목표치는 평균 감소치보다 10% 높은 1.7% 감소한 18.3%p로 도전적으로 설정함

< 지표 3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 >

○ 설정배경 :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스마트 치안 구현,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목표로 고도화된 과학수사 시스템(SCAS, GeoPros)의 유용성·실제 활용성 평가를 위해 현장 경찰관들의 이용건수를 지표로 산정

○ 측정산식 : SCAS 접속건수 + GeoPros 접속건수

○ '22년 목표산출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값(2,155,940건)보다 30% 이상 초과 상향한 2,850,000건으로 도전적으로 설정

< 지표 4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

○ 설정배경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배제 등 증거 위주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범죄현장 유효증거물 채취율을 향상시켜 변화된 사법환경에 선제적 대응

○ 측정산식 : 현장에서 채취한 채증물 SCAS등록 건수 / 현장감식건수 × 100

○ '22년 목표 산출 : 최근 3년간 실적 평균값(165.6%)보다 20% 이상 초과 상향한 200%로 도전적으로 설정

31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 추진배경 (목적)

○ 디지털증거가 모든 범죄수사의 핵심증거로 부각되면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 및 관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 : 36,060건('17년) → 45,103건('18년) → 56,440건('19년) → 63,935건('20년) → 75,420건('21년)

○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엄격해지고 있어, 경찰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량 강화 필요

○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현장지원 활성화 및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수사 실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

○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분석관 수준(기초·일반·심화)에 따른 '수사연수원 디지털포렌식 교육'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분야별 워크숍* 운영

* IoT 기기(웰패드)·영상·메신저 분석 관련 워크숍 개최

○ **분석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가이드북 등 전문자료 제작**

– 디지털기기 물리복구실 구축 및 모바일기기 분석 프로그램 등 배포

– 「스마트 홈 IoT」, 「모바일 데이터 아티팩트」 관련 연구용역 자료 및 PC메신저·영상분석 가이드북 등 제작·배포

○ **디지털포렌식센터 국제공인인정(KOLAS) 유지를 통한 전문성 확보**

– 국내 최초로 획득한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인정 유지를 위한 KOLAS 교육, 정기 사후관리, 분석 숙련도 시험 등 실시

※ '20. 7월 획득, 해외 104개국의 법집행기관과 법원에서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증거분석 업무의 공신력 인정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현장지원 활성화 >

○ 분석관 현장지원 활성화

– 현장에서 참여권 보장 등 압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므로, 분석관이 압수현장에 진출하여 수사관을 지원하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현장지원' 활성화 추진

※ 현장지원 건수 : 597건('19년) → 742건('20년) → 843건('21년)으로 증가 추세

○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신규 개발 및 장비 도입

– 「영상 시간정보 추출 프로그램」, 「텔레그램 메신저 수집 및 분석 도구」 등 현장 수사를 지원하는 디지털포렌식 도구 5종 신규개발

– 현장 실무자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반영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치안 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 개최

– 압수현장에서 유용한 현장용 분석프로그램(Magnet AXIOM), 노트북, 쓰기방지장치 등으로 구성된 「현장분석 키트」 보급

○ 현장용 디지털포렌식 도구·시스템의 기능 고도화

– 현장 수사 활용도가 높은 「폴해시 웹」, 「폴해시 PC」, 「셀파인드 앱」, 「현장용 위치정보 간편조회 앱」 등 디지털포렌식 도구 7종 고도화

– 디지털증거 처리의 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증거의 동일성·무결성 확보

<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지원 >

○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도구 확대 도입 및 보급

– 모바일기기 잠금해제에 사용되는 「고성능 모바일포렌식 도구」 확대 도입 및 시·도청 보급을 통해 증가하는 잠금해제 수요에 적극 대응

○ 모바일기기 획득기술 및 분석기법 연구를 통한 전문성 제고

– 전국 분석관이 참여하는 디지털포렌식 현장학습모임 운영, 연구발표회 정기 개최(월 1회) 등을 통한 분석기법 연구 활성화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실무와 학계 연계를 통한 디지털포렌식 전문역량 강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디지털포렌식 교육 동영상 제작 및 배포	1월	
	「폴-해시 WEB」 신규 개발 및 홍보	1월	
	「영상 시간정보 추출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2월	
	「스마트 홈 IoT」·「모바일 데이터 아티팩트」 연구용역 배포	2월	
	「PC메신저 가이드북」 제작·배포	3월	
2/4분기	치안 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 계획 수립	4월	
	IoT 기기(웰패드) 분석 기법 워크숍 개최	4월	
	「모바일기기 암호해독 장비」 확대 도입 및 시·도청 보급	5월	
	「텔레그램 메신저 수집 및 분석도구」 개발 및 홍보	5월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계획 수립	6월	
	KOLAS 인정 유지를 위한 정기 사후관리 실시	6월	
3/4분기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최	7월	
	「디지털포렌식 및 수사 지원 도구 고도화 사업」 착수	7월	
	「디지털기기 물리복구실」 구축	8월	
	「폴해시 PC」 고도화 및 홍보	8월	
	「현장용 위치정보 간편조회 앱」 고도화 및 홍보	9월	
	모바일기기 분석 프로그램 배포	9월	
4/4분기	「영상분석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10월	
	악성코드·메신저 분석 워크숍 개최	10월	
	KOLAS 인정 유지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숙련도 시험 실시	11월	
	「PC메신저 분석 프로그램」 고도화 및 홍보	11월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동계 학술대회 개최	12월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홍보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디지털포렌식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찰관 및 국민

○ 이해관계집단 : 대검 과학수사부(디지털수사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디지털포렌식 업무 수행기관

□ 기대효과

○ 분석관 전문성 제고를 통한 경찰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 제고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현장지원을 통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확보

○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지원을 통해 사건 해결을 위한 핵심 증거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1-3-정보화① 사이버수사			
① 수사지원및수사역량강화(1231)	일반회계		
▪ 사이버수사역량강화(315)		61.8	82.6
① 수사업무정보화(1232)	일반회계		
▪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3)		122.6	12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	377	433	498	하단 참고	하단 참고	공문, 보고서 등 과제 추진 관련 근거자료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현장지원 활성화	3.28	3.45	3.59	3.77	하단 참고	하단 참고	시스템 통계 활용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지원	-	-	-	276	하단 참고	하단 참고	시스템 통계 활용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석관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요구되므로, 디지털포렌식 인력을 전문화하기 위한 교육 노력을 지표로 선정

※ 법원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자료의 동일성,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을 요구(대법원 2007도7257 판결)

○ < 목표치 산출근거 >

- **(과거 실적)** 과거 실적 파악 결과, '20년 377점, '21년 433점 달성

구분	점수	실적
'20년	377점	▵ 수사연수원 디지털포렌식 교육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실적 248점(248명) ▵ 워크숍 등 본청 주관 교육 실적 129점(258명)
'21년	433점	▵ 수사연수원 디지털포렌식 교육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실적 240점(240명) ▵ 워크숍 등 본청 주관 교육 실적 193점(386명)

- **(목표치)** 498점 / 전년 대비 15%(2년 실적의 상승세 이상) 증가한 적극적인 목표 설정

○ < 측정산식 >

- 수사연수원 디지털포렌식 교육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실적(수료 인원 × 1) + 워크숍 등 본청 주관 교육 실적(수료 인원 × 0.5)

항 목	수사연수원 디지털포렌식 교육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실적	워크숍 등 본청 주관 교육 실적
점 수	1	0.5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현장지원 활성화] ※ 신규 지표

○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 디지털증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선별압수, 참여권 보장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석관이 압수 현장에 진출하여 수사관을 지원하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현장지원'이 중요하므로, 현장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표로 선정

○ < 목표치 산출근거 >

- **(과거 실적)** 과거 실적 파악 결과, '19년 3.28건, '20년 3.45건, '21년 3.59건 지원

※ 분석관 1인 기준,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 통계 활용

- **(목표치)** 3.77건 / 전년 대비 5%(추세치 이상) 증가한 적극적인 목표 설정

○ **< 측정산식 >**

- 1인당 현장지원 건수 = 전체 현장지원 건수 / 전국 분석관 현원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지원] ※ 신규 지표

○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SNS 대화내역, 사진·동영상 등의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기기 분석이 필요한 사건 급증

  ※ 모바일기기 분석 건수 : '16년 26,408건 → '21년 58,563건

- 그러나, 피의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사건 대상자가 사망하여 잠금패턴·암호를 해제하지 못하는 경우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음
- 사건 해결에 있어 모바일기기 잠금해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모바일기기 잠금해제를 통해 사건 해결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선정

  ※ 박사방, LH 투기 의혹, 대장동 사건 등 중요 사건 수사 시 잠금해제 지원

○ **<목표치 산출근거>**

- **(예상 실적)** '22년 예상 잠금해제 성공 건수는 250건

  ※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지원은 '20~'21년 본청 최초 운영, '22. 4월 5개 시·도청 확대 운영 예정으로, 작년 실적(본청 운영)과 올해 실적(본청 및 5개 시·도청 운영)을 단순 비교할 수 없어 작년 업무량을 기준으로 올해 예상 업무량을 산출함

▸**(업무량 산출 방식)** '21년 업무량(잠금해제 성공 건수) 및 전담인력을 기준으로 '22년 모바일기기 잠금해제에 투입되는 전담인력의 예상 업무량 산출

- **('21년 업무량)** '21년(1~10월) 잠금해제 성공 건수 125건, 본청 전담인력 3명으로, 전담인력 1인 기준 월 4.17건 잠금해제 성공
- **('22년 운영 방안)** 1~4월 : 전담인력 3명(본청 3명), 5~10월 : 전담인력 8명(본청 3명 및 5개 시·도청 각 1명)

▸**('22년 예상 업무량) 250건**

※ 측정산식 : {4(개월) × 3(명) + 6(개월) × 8(명)} × 4.17(건) = 250.2(건)

- **(목표치)** 276건 / 예상 업무량 대비 10% 이상 증가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

○ **< 측정산식 >**

-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성공 건수

32 증거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년), 검사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에 따라 형사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증명력 싸움이 본격화되면서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경찰 수사 활동 강화의 필요성 대두

○ 높아진 경찰 수사 책임성에 걸맞게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의 근간이 되는 과학수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 또한 증대*

* 과학수사 수요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에서 사기 등 非강력범죄 수사로 지속 확장(비강력범죄 현장임장 '17년 20,966건→'19년 22,949건→'21년 25,549건)

○ 첨단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 및 국내외 협업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는 과학수사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책임수사를 견인할 수 있는 과학수사 활동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과학수사 R&D 활성화를 통한 과학수사 기법·장비 다양화]

○ 과학수사 분야 R&D의 체계적 수행을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

– **<신규과제 발굴>** 산·학·연 전문가 대상 기술 수요조사, 과학수사 전문가 자문,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R&D 과제 신규 발굴

※ △생체시료 시각화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융복합 지능형 DNA 감식기술 개발 △겹친지문 분리 △3D 비접촉식 지문영상 취득장치 개발 등 5개 과제 R&D 진행 중

– **<관리·지원>** 현장·연구진 間 시범운용 지원, 연차컨설팅, 정기 간담회 등 현장 수요에 부응한 R&D 성과도출을 위한 성과점검 진행

– **<완료과제 후속조치>** R&D 종료 후 현장적용 가능한 성과물은 즉시 사업화❶,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성과물은 시범운영❷ 실시 및 보완 필요시 추가 R&D❸ 방안 모색 등 연구성과의 수사활용도 제고

❶ **(즉시활용)** 법곤충기법('20년 종료) 현장 적용을 위해 '법곤충감정실' 구축
❷ **(성과검증)** 성문분석기법('22. 3월 종료 예정), 생체시료 시각화 기법('22. 12월 종료 예정)은 시범운영 등을 통해 성과물 실효성 검증 추진
❸ **(추가R&D)** '법보행분석기법'('20년 종료)은 현장 적용을 위해 실용·사업화 R&D 추진, '법곤충기법'('20년 종료)은 추가 DB 확보 및 고도화 위해 추가 R&D 진행

○ 과학수사 新기법으로 법곤충 감정 분야 현장 도입 및 안착 추진

– R&D 종료과제* 후속조치로 '21년 법곤충 감정실 구축 및 전문인력 2명(임기제) 채용 완료, '22년 상반기 정식 운영 개시

* 변사사건에서 법곤충을 활용한 변사자의 사망 시간 추정을 위해 한국형 법곤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후경과시간 추정 프로그램 개발 수행('16~'20년, 27.95억원)

법곤충 감정실

▸ **구축 장소** : 경찰수사연수원 '사후변성교육센터' 內
▸ **주요 업무** : 법곤충 감정(현장 법곤충 종확인<형태 및 DNA분석>, 사후경과시간 추정프로그램 운영, 법곤충 데이터 업데이트 등)
▸ **운영 인력** : 임기제 공무원 2명(보건연구사 정원 1명 확보, '22년 채용예정)
▸ **주요 장비** : 자동DNA형 분석기, DNA증폭기, 곤충배양 인큐베이터, 실체현미경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과학수사관 전문성 제고]

○ 과학수사 맞춤형 교육·자격 강화를 통한 우수 인재 발굴·양성

– 과학수사관 개인별 경력 분석을 통해 교육·자격취득 등 전문성 상향 평준화를 위한 체계적 이력 관리 및 1인 1분야 전문수사관 취득 추진

※ ('21) 全과학수사관 1,274명 중 823명(65%) 전문수사관 취득 → ('22) 900명(+77명, 71%) 목표

– 화재 수사 분야에서 국제적 공신력이 인정되는 CFEI*, CFI** 자격취득 지원을 통해 증거 소실로 원인분석이 난해한 화재·폭발 분야 전문가 양성

* **화재·폭발수사관** (CFEI, Certified Fire and Explosion Investigator): 미국 화재조사관협회(NAFI) 주관 / 화재폭발 조사 관련 지식과 기술 인증

** **방화수사관**(CFI, Certified Fire Investigator): 국제방화조사관협회(IAAI) 주관 / 방화조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이 인정되는 자격

– 과학수사 분야 전공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실시(현장감식·화재감식 25명), 인적 전문성 제고를 통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 과학수사 지식 교류를 통한 분야별 전문역량 함양

– 고위험 감염병 장기화 및 고독사 증가 등 검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Best 검시조사관 선발*, 전국 검시조사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경찰의 사인(死因) 규명 역량 제고

* 검시조사관 제도 도입('05년) 후 '21년 최초 실시, 사망원인 및 추정시각 판정을 위한 주요 증거 발견 및 자살 위장 살인사건 규명 등 우수 검시사례 발굴·공유

– 최신 국내외 포렌식 뉴스와 중요사건 해결 사례·지식정보 등을 교류하는 과학수사 소식지(KCSI MAGAZINE) 정기 발간·배부(월1회)

[과학수사 감정지원 강화를 통한 경찰 책임 수사 역량 제고]

○ 첨단 장비 확충 및 시스템 고도화로 종합적 DNA 수사체제 마련

– 중요사건 수사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신속 DNA 분석기❶, 혈흔반응시약(블러드플레어)❷ 등 첨단 기법·장비 확충을 통해 DNA 증거 발견 및 분석률 제고

❶ **(신속 DNA 분석기)** 국과수 의뢰 시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DNA 분석을 현장에서 90분 안에 가능, '22년 추가 보급 예산(총 806백만원, 86백만원↑) 확보
※ '21년 2대 신규 도입, 광주아파트 붕괴사건 피해자 2명 신원 확인 등에 활용
❷ **(혈흔반응시약)** 과학수사관 개발 제품으로 외산 시약보다 성능·보관기간(2일→5일)은 우수하면서도 단가 저렴(20%), 현장의 보이지 않는 혈흔 탐지에 탁월

- 수사관계자 DNA DB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DNA 수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DNA 정보 검색을 제한하여 인권 보호 강화

* 본인 동의를 통해 경찰관 DNA DB구축, (기존) 범죄 현장 DNA를 모든 수사관 DNA와 매칭 → (개선) 해당 경찰관서 수사관 DNA로 제한, 수사관 DNA로 오염된 증거물 조기 탐지

- DNA 신원확인시스템(DIMS) 처리 속도 개선 및 검찰 DNA 시스템과 직통연계망 구축 등 고도화된 시스템 운영을 통한 DNA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

○ 경찰·국과수 협업 감정 활성화로 신속·정확한 감정지원체제 확립

- 국과수 미설치 지역 內 경찰·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중요사건에 대한 신속 감정 등 감정지원 역량 고도화

* 경기남부·전북·충남·경북지역 등 4개소 운영, 2개소 확대 구축 추진 및 현장 간담회,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 운영 내실화

- 경찰청·국과수·해경 등 과학수사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과학수사 분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감정 인프라 공유

[국내외 치안 협업과 자문단 운영을 통한 과학수사 공신력 제고]

○ 과학수사 첨단 기법 전수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 한국 과학수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기법을 전수하는 과테말라 대상 신규 ODA 사업 추진을 통한 치안한류 활성화

※「과테말라 경찰 과학수사 역량 강화 사업」('22년~24년, 6억원 규모) 추진

- 대한민국 과학수사 국제 교류 플랫폼인 '국제 CSI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국내외 최신 과학수사 트렌드 공유 및 전문성 제고

○ 대형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체계적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 해외 재난 時 우리 국민 피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터폴 DVI* 워킹그룹** 가입 및 국제회의(10월) 등에 한국 경찰 과학수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DVI 네트워크 강화

* 재난희생자 신원확인팀(Disaster Victim Identification), 경찰·국과수 등 전문가 협의체로 구성
** 인터폴은 1984년부터 DVI Process 마련, 워킹그룹은 인터폴 회원국 中 총 16개국으로 구성되어 각국 재난 사례·대응 기법 공유, DVI 체계 관련 협의 및 결정 진행

– 대형사고·재난에 대비한 재난희생자 신원확인팀(DVI) 정예화를 위한 인터폴 DVI팀*** 전문가 초청 훈련('22년 上, 수사연수원) 추진

*** DVI 절차 및 신원확인 기법 등 전파,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회원국 간의 협력 주도

○ 법공학·법의학 등 분야별 자문단 운영 강화로 민관 합동 조사체제 확립

– 경찰 수사의 신뢰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형화재·안전사고 등 주요 사건 수사 시 과학수사 분야별 자문위원 참여 활성화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건사고 유형별 자문위원 확충, 신속한 현장 수습 및 2차 피해 방지와 사고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위한 자문·지원 활성화

– 매월 과학수사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최신 기법 소개 등 온라인 KCSI 포럼 개최를 통해 과학수사관과 현장 수사관의 전문지식 함양 및 민간 전문가 그룹과의 수사 협업 강화

[국민 참여 확대로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 체감 만족도 향상]

○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진

– 치안 현장에 필요한 과학수사 아이디어·기법·장비 발굴·개발을 위해 대국민 공모전*(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사진 공모전 등) 개최

* 우수작에 대한 포상 및 신규 R&D 과제 연계 검토,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장비 현장 보급 등 국민과 함께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전개

- 청소년 직업체험·과학수사 기관 견학 등 과학수사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수사 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 시도교육청 컨설팅 및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추진(연중)

○ **국민 의견 수렴 및 정책 환류를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 범죄 피해로 인해 경찰 과학수사를 경험한 국민 대상으로 과학수사 활동 만족도 조사(연2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과학수사 개선사항 발굴

- SMART 과학수사 모바일 앱, 공식 SNS 계정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증거물 처리상황과 향후 절차 등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브(LIVE) 과학수사 소통 활성화 추진

[심신 건강증진과 인프라 개선을 통한 과학수사관 사기 진작]

○ **과학수사관 사기 진작과 활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체계 강화**

- **<심리건강>** 다양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부정적 자극에 지속 노출되는 과학수사 업무 특성상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건강 인프라 조성

- 심리 전문가 연계 및 자문 의견 반영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심리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회복탄력성과 동료 지지 강화

* 과학수사 부서에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 PTSD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 및 신규 전입자는 첫 외상성 사건 임장 시 심리충격 완화가 필요하다는 자문 결과 반영

과정명	주요 내용
심리역량 강화 워크숍	심리치유 전문기관을 통해 각종 심리치유 요법과 집단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장기근무·신규전입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워크숍 개최(5·9월)
공감힐링과정	경찰인재개발원 공감힐링과정을 과학수사관 대상으로 개최(6월)
마음돌봄과정	시도경찰청 과수계장 및 광역과수팀장 대상으로 팀원들의 심리상담, 코칭을 위한 동료지킴이 등 마음돌봄교육과정(1일) 실시(연중)

– **<신체건강>** 생물학적(세균·바이러스)·물리화학적(시약·분말·분진) 위협요인에 노출되는 과학수사관 안전 확보를 위해 특수 건강검진(27종) 및 예방접종(파상풍·대상포진 등 연1종) 실시

※ 특수 건강 검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무환경 위험도 연구 및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충 추진

○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통한 현장 지원 강화

– △분야별 인력증원 △신규 증액·사업발굴 △감식·감정실 환경정비 등 다각적인 과학수사 현장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신뢰도 높고 전문적인 과학수사 활동 뒷받침

- **(인력)** 현장감식·감정역량 제고를 위한 현장감식 과학수사관(43), 과학수사책임관(7), 합동 법과학감정실 추가 구축 운영 인력(8) 등 증원(총 67명) 및 직급조정(43명) 추진
- **(예산)** 국제표준화기구(ISO) 신규 인증, 교육 훈련용 과학수사 모의범죄현장 및 법심리 분석실 구축, 페이퍼리스 업무 시스템 구축 등 예산 확보 추진
- **(시설)** 서울 도봉권·충남 홍성권 등 노후 증거물 감식감정실에 대해 표준모델에 기반한 환경개선, 증거 무결성 및 과학수사관 직무 안전성 강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합동 법과학감정실 구축 추진 TF 회의 개최	'22.2월	
	현장 과학수사관 특수건강검진·예방접종 계획 수립	'22.2월	
	R&D 계속과제별 간담회 개최	'22.2월	
	성문분석, 혈흔성분분석 R&D 최종평가	'22.2월	
	과학수사관 심리역량 강화 종합계획 수립	'22.3월	
	고도화된 DNA 신원확인시스템(DIMS) 정식 운영 개시	'22.3월	
	인터폴 DVI 전문가 초청 훈련 개최	'22.3월	
2/4분기	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협의회 개최	'22.4월	
	법곤충 감정기법 고도화 R&D 신규과제, 연구착수	'22.4월	
	수사관계자 DNA 검색 범위 개선 및 DB관리강화 계획 수립	'22.4월	
	법곤충 감정실 운영 계획 수립	'22.4월	
	2022 신임 검시조사관 기본교육	'22.5월	
	증거물 감식감정실 개선의견 수렴 및 환경개선	'22.5월	
	제10회 과학수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2.5월	
	과학수사관 대상 공감힐링과정 개최	'22.6월	

3/4분기	과학수사 분야 현장기술수요조사 실시	‘22.7월	
	2022 과학수사 포스터·사진 공모전 개최	’22.8월	
	전국 검시조사관 세미나 개최	’22.9월	
	과학수사관 심리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22.9월	
	화재분야 국제 공인자격(CFEI, CFI) 취득 추진	’22.9월	
4/4분기	신속 DNA 분석기 · 시약 및 블러드 플레어 현장 보급	’22.10월	
	인터폴 DVI 워킹그룹 국제회의 개최	’22.10월	
	국제 CSI 컨퍼런스(CSI KOREA 2022) 개최	’22.10월	
	22년 대한민국 과학수사 대상 및 BEST 검시조사관 시상	’22.11월	
	경찰 과학수사 활동 만족도 조사	’22.11월	
	합동 법과학감정실 우수사례 발굴 · 포상	’22.12월	
	DNA법 개정을 위한 국과수·검찰 DNA DB 관리위원회 개최	’22.12월	
	R&D 계속과제 연차컨설팅 실시	’22.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과학수사 분야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는 **全 국민**

○ **이해관계집단** : 수사상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DB 사무를 공동 관할하는 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 기대효과

○ 과학수사 분야 R&D 활성화 및 과학수사 교육·자격 강화를 통한 경찰 책임수사체제 안착

○ 국내외 과학수사 유관기관 치안 협업 및 신속·정확한 감정지원을 통한 경찰 과학수사 전문성·객관성 강화

○ 과학수사 직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체계 확립 및 현장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현장 과학수사관의 직무만족도 증진

○ 대국민 의견수렴 및 소통·참여 확대를 통해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 및 체감안전도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21년 조직개편(국가수사본부 신설 관련)으로, ’22년 단위사업명 변경

- <’21년> 과학수사담당관 자체 단위사업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첨단과학수사(I-3-일반재정②)			
	① 첨단과학수사(1232)	일반회계	327
			(327)
	■ 과학수사역량강화(311)		312
	■ 과학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1)		15

- <’22년> 국가수사본부 단위사업 내 포함된 사업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2
범죄수사활동(Ⅱ-1-일반재정②)			
	①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강화(1231)	일반회계	349
			(2,199)
	■ 과학수사역량강화(314)		349
	② 수사업무정보화(정보화)(1232)	일반회계	24
			(226)
	■ 과학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1)		2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과학수사 활동 지수 (40%, 정량)	1.41	1.43	1.60	**1.76**	최근 3년 평균값(1.48) 및 과거 추세를 반영, ’22년 목표치는 ’21년 실적보다 10%(평균값 대비 18.9%) 상승한 1.76으로 도전적 · 적극적 목표 설정	현장임장률 × 0.5 + 증거채취율 × 0.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시스템(NFIS), 지문검색시스템(AFIS), 범죄통계시스템(CSS) 등
현장지원 지수 (30%, 정량)	18.1	28.2	32.0	**35.2**	최근 3년 평균값(26.1) 및 과거 추세를 반영, ’22년 목표치는 ’21년 실적보다 10%(평균값 대비 34.9%) 상승한 35.2로 도전적 · 적극적 목표 설정	현장 과학수사관의 직무몰입도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전문역량함양·심신건강 등)을 정량 지수화하여 반영	보고서, 계획서 등 결재 공문서 증빙자료
대국민 교류 지수 (30%, 정량)	83.1	85.1	86.7	**87.7**	최근 3년 평균값(85) 및 과거 추세를 반영, 만족도 조사 성격상 임계치를 고려하여 ’22년 목표치는 ’21년 실적보다 1.0점(평균값 대비 2.7점) 상승한 87.7로 도전적 · 적극적 목표 설정	국민 만족도 설문 결과 × 0.5 + 진술청취이행률 × 0.5	고객모니터센터 설문조사 결과, 과학적 범죄분석 시스템(SCAS) 통계

○ 목표치 산출 및 측정산식 관련 참고자료

<table>
<tr><th>구분</th><th>평가 항목</th></tr>
<tr><td>①
과학수사 활동지수
(정량)</td><td>
▸ 평가산식 : (현장임장률 × 0.5) + (증거채취율 × 0.5)
- 현장임장률 = 현장감식건수 / 중요범죄 발생건수*
* 현장 감식이 필요한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 침입절도, 변사, 화재
- 증거채취율 = (DNA+지문+족적 감정 의뢰건수) / 현장감식건수
▸ 산정배경 : 중요범죄 발생건수 대비 과학수사 현장임장률과 임장 1건당 범인검거 및 수사단서 제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물 감정의뢰 건수를 합산하여 과학수사 활동의 적극성 평가
▸ 목표치 산출 근거(상승 추세)
<table>
<tr><th>구분</th><th>현장임장률</th><th>증거채취율</th><th>과학수사 활동지수</th></tr>
<tr><td>'19년</td><td>0.98</td><td>1.84</td><td>1.41</td></tr>
<tr><td>'20년</td><td>1.05</td><td>1.80</td><td>1.43</td></tr>
<tr><td>'21년</td><td>1.09</td><td>2.09</td><td>1.60</td></tr>
<tr><td>목표</td><td colspan="2">추세치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반영</td><td>⇒ 1.76</td></tr>
</table>
- 최근 3년 평균값(1.48) 및 과거 추세를 반영하고, 경찰 책임수사체제 하에서 더욱 적극적인 과학수사 활동 전개를 위해 '22년 목표치는 '21년 실적보다 10%(평균값 대비 18.9%) 상승한 1.76으로 도전적 · 적극적 목표 설정
</td></tr>
<tr><td>②
현장 지원 지수
(정량)</td><td>
▸ 평가산식 : 현장 과학수사관의 직무 몰입도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전문역량함양·심신건강 등)을 정량 지수화하여 반영
<table>
<tr><th>구분</th><th>점수</th></tr>
<tr><td>① 일선현장 지원 관련 연간 계획 수립</td><td>2</td></tr>
<tr><td>② 외근 과학수사관 대상 심리역량강화 워크숍, 공감힐링과정 실시</td><td>2</td></tr>
<tr><td>③ 현장 과학수사관 대상 특수건강검진, 예방접종 실시자 수(10명당)</td><td>0.1</td></tr>
<tr><td>④ 과학수사 관리자(계장, 광역팀장 등) 대상 마음돌봄과정 이수자 수</td><td>0.1</td></tr>
<tr><td>⑤ 광역 과학수사팀 사무실 및 증거물 감식감정실 개선 수
※ 사무·실험공간 분리, 배기시설 확충 등 과학수사관 안전 및 직무 환경 개선효과가 뚜렷한 실적에 한해 인정</td><td>0.5</td></tr>
</table>
▸ 산정배경 : 수준 높은 과학수사는 경찰 수사의 신뢰도 제고에 반드시 필요, 전문성을 갖춘 과학수사관의 이탈 방지를 위한 직무 안전성 강화 등 지원 노력에 대한 평가 필요
▸ 목표치 산출 근거(상승 추세)
<table>
<tr><th>구분</th><th>연간계획
(2점)</th><th>워크숍 등
(2점)</th><th>건강검진 등
(0.1점)</th><th>교육이수
(0.1점)</th><th>총점</th></tr>
<tr><td>'19년</td><td>2</td><td>3</td><td>-</td><td>81</td><td>18.1</td></tr>
<tr><td>'20년</td><td>2</td><td>2</td><td>1,711</td><td>31</td><td>28.2</td></tr>
<tr><td>'21년</td><td>8</td><td>1</td><td>935</td><td>46</td><td>32.0</td></tr>
<tr><td>목표</td><td colspan="4">추세치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반영</td><td>⇒ 35.2점</td></tr>
</table>
- 최근 3년 평균값(26.1) 및 과거 추세를 반영하고, 과학수사 현장 인프라 개선 및 현장으로부터 공감받는 정책 추진을 위해 '22년 목표치는 '21년 실적보다 10%(평균값 대비 34.9%) 상승한 35.2로 도전적 · 적극적 목표 설정
</td></tr>
</table>

③ **대국민 교류 지수** **(정량)**	▸ **평가산식** : (국민 만족도* 설문결과 × 0.5) + (진술청취 이행률** × 0.5) * 경찰 과학수사 활동을 접한 국민 대상으로 출동 신속성·친절성 등 세부분야별 만족도와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를 합산하여 산출 ** 현장 과학수사관이 범죄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의 진술과 요청사항 경청 및 채취증거에 대한 감정절차 안내 등의 심리안정을 돕는 활동률 산출 ▸ **산정배경** : 경찰 과학수사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현장 과학수사관의 진술 청취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과학수사 노력을 평가 ▸ **목표치 산출 근거(상승 추세)**

구분	고객만족도 점수	진술청취 이행률	대국민 교류 지수
'19년	77.12	89.0	83.1
'20년	79.43	90.8	85.1
'21년	79.42	93.9	86.7
목표	추세치 및 만족도 조사 임계값 등 고려		**⇒ 87.7점**

- 최근 3년 평균값(85) 및 과거 추세를 반영하고, 만족도 조사 성격상 임계치와 피해자 진술 청취가 불가한 무연고자 사건 등 유가족이 없는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22년 목표치는 '21년 실적보다 1.0점(평균값 대비 2.7점) 상승한 87.7로 도전적·적극적 목표 설정

성과목표Ⅱ-4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1) 주요 내용

○ **<대테러·항공 역량 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대테러 인프라 구축, 전문성 강화,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 강화

○ **<안보수사 역량 강화>** 책임 안보수사 체계 확립을 위해 인력·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 안보수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안보수사 활동 강화>** '對北' 위주 업무영역이 경제·사회 등 '포괄적 안보' 영역으로 확장, 산업기술 유출·테러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안보수사 전개

○ **<안보정보 수집·분석 강화>** 확장된 안보영역에 대응한 안보수사 역량 극대화를 위한 안보첩보 질적 향상 및 분석기능 전문화 추진

○ **<경호역량 강화>** △경호인력풀 전문화 교육 △최신 경호장비 교체 △경호매뉴얼 제작 등 경호 인프라 구축으로 빈틈없는 국가행사 지원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안전체감도
관리과제	대테러·항공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관리에 따른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활동에 따른 성과 / 항공활동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 / 항공 안전관리 역량 강화
	안보수사 역량 및 탈북민 보호 강화·완벽한 안보상황 관리	안보수사 역량 강화 / 탈북민 보호 강화 / 안보 취약요소 개선 활동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중요 안보사범 검거 지수 / 첨단안보 대응활동 지수 / 디지털포렌식 활성화 지수
	국내외 다양한 위협에 대한 안보정보 수집으로 국민안전 확보 및 국가권익 보호	안보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 안보정세 분석 고도화 / 고가치 첩보 획득률 제고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경호행사로 국가 안전 확보	경호경찰 전문화 교육 및 설문조사 / 경호경찰 인프라 구축 / 경호업무 관계기관 협업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안전체감도	2.65	2.84	3.03	3.15	국민 안전체감도는 '19년부터 반등하는 추세로, 전 3년도 실적 평균값(2.84) 및 과거 추세선을 바탕으로 예측한 값(3.15)을 고려, '22년 목표치는 상승을 독려하고자 '21년보다 상승한 3.15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행정안전부 주관 대국민 설문조사 (일반국민 안전체감도)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의식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反아시아·反여성 등 다양한 혐오정서와 결부된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기도 우려

– 국내에서는 중요시설 폭발물 설치 협박('21.3월)·駐韓 외국대사관 폭파 협박('21.10월) 등 실제 테러위협 상황이 지속 발생

○ 해외 입국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간 주춤했던 안보 위협 증대 우려

* '22. 2月 인천공항 입국자(약 17만 명) 전년 동월(약 8.5만 명) 대비 102.7% 증가

– 국정원·軍 등 유관기관과의 주기적 FTX,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안보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

○ 코로나19 상황의 여파 및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탈북민들의 범죄피해·범죄 연루 현상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

– 탈북민 대상 주요 범죄피해 사례를 필수교육으로 선별하여 특화된 교육 전개, 안전지원팀 운영으로 범죄피해 회복·지원 내실화 추진

○ 안보의 개념이 기존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어'에서 위협의 주체·수단·대상에 개념적 제한을 두지 않는 '新 안보영역'으로 확장

– 대공·대북에 한정되었던 안보수사의 영역도 국제범죄·산업기밀 유출 등 국익과 관련된 全 분야로 확대되면서 경찰의 책임 가중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전면 폐지('23.12月말)에 대비하여 그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프라 강화에 집중할 시점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경찰 중심의 책임 안보수사를 통한 국가안보수사 역량의 총량 유지를 위해 자체 인프라 확충 긴요

○ **<국정원法 개정에 따른 인프라 확충>** 警-院 간 수평적 협력에 기반한 정보 및 수사기법 교류를 위한 구체적 실무협의 필요

– '안보범죄정보업무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실질적 운용 및 협력센터 개소에 따른 제반업무로 빈틈없는 안보테세 정비

○ **<국내 안보기관 간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국정원·안보사 등 국내 안보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정례화·공식화하여 협력범위 확대

– 각 기관이 보유한 안보정보 공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테러·산업기술 유출 등 확장된 안보영역의 첩보수집 역량 제고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 새로운 경호 패러다임 정착 ▵ 경찰부대 운영 방식 등 변경 예상,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안정적인 경호경비 실시

○ 경호환경 변화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감 상당할 것으로 전망, 본청-시도청(경찰서) 간 현장경호 네트워크 구축으로 현장대응 역량 제고

(4) 참고자료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www.nctc.go.kr)

○ 한국공항공사(airport.co.kr)

○ 안보수사국, 「대공수사 인프라 및 역량 강화 종합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2022~2026 방위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 대통령경호처 사이트(www.pss.go.kr)

33 대테러·항공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 추진배경

○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反아시아·反여성 등 다양한 혐오정서와 결부된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기도 우려

※ 미국 애틀란타 연쇄 총격사건('21.3.16. 한인여성 등 총 8명 사망)

○ 국내에서는 「테러자금금지법」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중요시설 폭발물 설치 협박('21.3월)·駐韓 외국대사관 폭파 협박('21.10월) 등 국내 테러위협상황 발생

※ UN지정 테러단체 자금지원 혐의자 5명 실형선고(징역6월~1년6월)

– 특히,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21.11월), 서울 스토킹 피해여성 사망('21.11월)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 확대

○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인프라 구축, 전담조직 전문성 강화, 현장 중심 안전활동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인프라 구축]

○ **<대테러장비 도입>** 드론테러 등 미래위협 대비, 안티드론·첨단기동·작전상황 전송장비 등 27종 137억 상당의 대테러장비 도입 추진

○ **<항공장비 도입>** 첨단 안전장비와 다양한 임무장비가 장착된 헬기 및 헬기 시뮬레이터 도입

– **(신형헬기 등 도입)** 참수리 헬기 2대 조기도입 및 기령 30년 이상 노후 소형헬기 교체, 조종사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헬기 모의비행훈련장치 도입 추진

– **(항공영상 무선전송시스템)** 전국 주요 고지 7개소(13→20개소) 수신안테나 추가 설치하여 전국망 시스템 확대, 수신 사각지대 해소

[전문성 강화]

○ **<경찰특공대>** ▵표준작전절차(SOP) 정립 ▵교육·훈련 교범 제작 ▵전문화 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작전역량 균질화 및 전문성 제고

- **(표준작전절차 정립 등)** 전술·EOD·탐지 등 분야별 작전절차 및 교육·훈련 교범을 표준화, 신규 제작하여 전 특공대에 보급·활용
- **(특공대 전문화 교육)** 전국 특공대 전술역량 강화를 위해 ▵항공기 인질구출 ▵초장거리 저격훈련 ▵방화문 통로개척 등 고난도 특수·복합임무 훈련

○ **<해안경계 전문 TOD요원 양성>** 해안경계 과학화 구축사업 완료에 따라 육군정보학교 내 「TOD요원 양성과정」을 개설, 전문요원 확충

※ 해안경계 의경 '18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되어 '22년 폐지, 경찰관(351명)으로 대체

○ **<초동조치 훈련 개선>** 경찰서 대테러·작전 훈련을 단순 FTX에서 3단계 방식으로 개선,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여 현장 대응역량 강화

- **(도상연습<1단계>)** 경찰서장 및 기능별 과장 중심, 기능별 조치사항 설명·토론
- **(지휘소연습<2단계>)** 경찰서 내 현장지휘소 구성, 상황조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개선
- **(관계기관 합동훈련<3단계>)** 실제 인원·장비를 동원한 초동조치팀장의 통합지휘 훈련

○ **<대테러 분야별 교육 내실화>** ▵치안정책과정 교육 확대 ▵화생방·급조폭발물 교육 정례화 등 현장 대응 전문교육 실시

- **(치안정책과정)** 현장지휘관 대상 이론교육(3시간)을 현장실습형 교육(1일)으로 확대
- **(화생방)** 전국 화생방테러 현장대응팀(150명, 연3회), 특공대 화생방팀(30명, 연2회)
- **(급조폭발물)** 현장경찰관 대상 폭발물신고 대응역량 강화 위한 교육 정례화(연 2회)

○ **<항공요원>** 경찰인재개발원에 「항공안전 전문화과정」 개설, 조종사·정비사 대상 분야별 안전관리 전문교육 실시

– (조종사) 기종별 모의비행 훈련, 각종 돌발위기 상황 대처훈련

– (정비사) 정비품질 향상을 위한 정비 전문화 교육

○ 항공요원 직무능력 향상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항공관련 자격증 유지 및 취득 노력

- **'18. 7. 17.** 해병대 헬기 시험비행 중 추락사고 발생(사망 6명)
- **'19. 10. 31.** 소방청 헬기 독도 환자이송 중 사고 발생(사망 7명, 헬기침수)
- **'20년** 대만 軍 헬기추락(참모총장 등 사망 8명), 미국 농구선수 헬기사고(사망 5명)

[현장 중심 안전활동 활성화]

○ **<테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외국공관 등 테러취약시설 대상 등급분류별 종합 안전대책 수립

– 대테러 즉응 태세 확립이 필요한 주요국 대사관·공항 등에 거점을 설치하여 특공대 전진배치, 상시 안전활동 실시

○ **<헬기지원 활성화>** ▵대테러 ▵재난관리 ▵실종자 수색 ▵수사·교통 등 각종 치안현장에서 헬기 지원 활성화로 신속한 현장활동 지원

- **(대테러)** 특공대 신속 출동 위해 특공대별 중형급 헬기 지정 등 연계체계 강화
- **(재난관리)** 태풍·홍수 등 현장 인명구조, 촬영영상을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
- **(실종자 수색)** 야간비행·적외선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야간수색 역량강화
- **(수사·교통)** 범인추적, 마약류 밀경작지 단속, 교통관리 및 사고예방 등 활용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경찰 대테러장비 구매 기본계획 수립	1월	
	2022년 대테러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2월	
	신규헬기 2대 및 헬기모의비행훈련장치 도입 기본계획 수립	2월	
	2022년 테러취약시설 지도·점검 기본계획 수립	3월	
2/4분기	작전업무 종합추진계획 수립	4월	
	작전부대 피복·장비 구매계획 수립	5월	
	신규헬기 2대(9,10호기) 도입에 따른 제작사(KAI) 교육	5월	
	청원경찰법 시행령,고시 개정	6월	
3/4분기	경찰기본작전계획 개정	7월	
	상반기 경찰헬기 운용결과 분석 및 활성화 계획수립	7월	
	전국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개최	8월	
	국내일반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9월	
	전국 13개 항공대 항공안전계획수립 및 현장점검	9월	
4/4분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개정	10월	
	신규헬기 2대 공정검사 및 항공기 인수	10월	
	드론테러 대응장비 도입	12월	
연중	외국공관 등 테러취약시설 대상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연중	
	경찰특공대 분야별 역량강화교육 실시	연중	
	항공안전관리과정 교육 및 항공관련 위탁 교육훈련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시설주·관리자, 헬기 운용기관(軍·산림청·소방청·해경청 등), 외주업체(헬기제작, 정비업체)

□ 기대효과

○ 적극적 예방활동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테러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치·경제적 국가위기상황을 사전에 방지

○ 테러 등 각종 위협 불식, 안전감 강화를 통해 기업·외국인 투자자 등 경제주체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대테러상황관리 및 경비경찰역량강화(Ⅰ-1-일반재정②)			
① 대테러상황관리(3134)	일반회계		
■ 대테러상황관리(311)		237.3	244.3
② 경비경찰역량강화(2131)	일반회계		
■ 의경대체지원(2131-314)		180.6	56.7
헬기운용 및 현대화(Ⅳ-2-재정②)			
① 헬기운용 및 현대화(4232)		363 (363)	420 (420)
■ 헬기운용 및 현대화(311)		363	42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22년)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관리에 따른 체감안전도 설문조사(40%)	신규	신규	70.7	78	하단 참조	하단 참조	민간 여론조사 또는 리서치 전문업체를 통해 조사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활동에 따른 성과(20%)	신규	신규	신규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하단 참조	각종 공문 등
항공활동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20%)	456	694	1,113	1,225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항공 안전관리 역량강화(20%)	신규	신규	109	120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하단 참조

①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관리에 따른 체감안전도 설문조사(40%)

- **(개요)** 대테러 안전관리에 따른 체감안전도 및 국민의 테러리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관련 설문 결과를 지표로 활용, 정책 미비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측정산식)** 대국민 설문조사

▸ 조사 방식 : 전국 지자체에서 생활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여론조사업체에서 설문조사(세부방안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

▸ 조사 내용 : △대테러 인프라 구축 노력 및 홍보 △테러리즘에 대한 관심도

- **(목표치 및 산출근거)** '21년도 실적(70.7%) 보다 10% 이상 높은 도전적 목표치(78%) 설정

②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활동에 따른 성과(20%)

- **(개요)** 테러취약시설 지도점검 및 대테러훈련 실적을 지표로 활용하여 정책달성도 점검
- **(측정산식)** 테러취약시설 지도·점검(10%) + 대테러훈련(10%)
- **(목표치 및 산출근거)**
  - ○ 테러취약시설 지도·점검 :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경찰서 비율(%)×100
    ※ 경찰서별 국가중요시설(연1회 이상), 다중이용시설(A급 분기 1회이상, B·C급 반기 1회 이상)
  - ○ 대테러훈련(FTX) 실시 : 관련 규정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실시한 경찰서 비율(%)×100

③ 항공활동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20%)

○ 다양한 치안현장에 헬기를 활용한 실적 중 우수사례에 점수를 부여하는 지표로서 내부망 게시판(칭찬플랫폼) 또는 문서 보고로 확인 가능(매월 심의·집계, 항공대 평가자료로 활용)

< 점수부여 기준 >

항 목	내 용	평가점수
주요 범인검거	헬기수색으로 범인을 발견(추적), 지상경력과 공조하여 검거	5~10점
인명구조	헬기로 요구조자를 구조하거나 수색을 통해 발견한 경우	5~8점
실종자 발견	헬기 수색으로 실종자를 발견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	3~5점
대테러·작전훈련	헬기 활용 대테러·작전 훈련	2~5점
주요상황관리	재난·재해 및 주요 경비상황 현장 출동, 상황관리에 기여	2~4점
교통관리	헬기를 이용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거나 주요 교통사범 단속	2~4점
단순이송	수사관, 피의자, 경미한 환자, 변사체 등을 이송한 경우	2~5점
기 타	- 항공전체 인명사고 없이 무사고 비행시 매월 1점 부여 - 조종, 예방정비 등 주요활동 사항, 방송·SNS 홍보 노력도 등	1~10점

※ 평가점수는 범인검거, 인명구조 등 국민 생명·신체 보호와 관련된 항목에 고득점 부여, 대테러·작전훈련 추가, 기타 활동은 중요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매월 1회 경찰청 항공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숏 항공대에 결과 하달

○ '21년도 실적(1,113점) 보다 10% 이상 높은 도전적 목표치(1,225점) 설정

< 목표치 산출근거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목표
항공요원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점)	456	694	1,113	1,225

④ 항공 안전관리 역량강화(20%)

□ 항공요원 전문기관 위탁교육훈련 인원 및 항공관련 자격증 취득 건수

○ 항공요원(조종사·정비사) 직무능력 향상과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교육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교육결과와 항공관련 자격증(수료증)** 취득 결과 등을 통해 확인

*전문기관(항공관련) : 군·산림청 등 국가기관, 항공대학 및 헬기·엔진 제작사 등 민간전문기관

**항공관련 자격증(수료증) : 항공조종·정비·안전 등 관련 개인별 자격증 또는 수료증 취득(이수·유지포함)

○ '22년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교육 여건에서도 전년 대비 10% 이상 교육인원(120명) 설정, 항공관련 자격취득은 3년 평균대비 10% 높은 90명으로 도전적 목표치 설정

< 목표치 산출근거 >

구 분	'19년	'20년	'21년	평균	'22년 목표
교육훈련 인원(명)	61	106	109	92	120
자격(수료)증 취득 건수	84	46	109	80	90

34 안보수사 역량 및 탈북민 보호 강화·완벽한 안보상황 관리

□ 추진 배경

○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보 및 국익수호를 위해 경찰 중심의 책임 안보수사 체계를 위한 기틀을 잡아가는 시점,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3년 유예(부칙)을 두어 '24.1.1부터 시행

○ 안보수사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안보경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운영시스템 고도화에 집중

○ 대내외 유관기관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본청 추진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 수용도 제고 노력이 필요

○ 한편, 빈틈없는 탈북민 보호 활동으로 체계 및 업무 실효성 제고, 범죄로부터 탈북민 보호를 위해 범죄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 활동도 세심히 전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하는 데 적극 기여

○ 또한, 전단 살포 등 주요 안보상황에 대해 평소 '예방적 경찰 활동' 관점에서의 충분한 대비도 필요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21.3.30. 시행)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책임 안보수사 체계 확립을 위한 안보수사 역량강화]

○ **안보수사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

– 안보수사 역량강화가 안보경찰의 당면과제인 만큼, 인력 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 마련

※ 「보안경찰 인사운영규칙」 등 법령 정비

▸**(경과제도 재설계)** △형사법 과목 신설(20문항) △수사 관련 출제 비율 75% 상향 등 안보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과제도 재설계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 도입)** 안보수사 경력·전문성 및 성과를 검증받은 수사관 중 심사를 통해 선발, 안보수사 전문인력에 대한 장기 재직환경 조성

▸**(안보경찰 인력 통합시스템 구축)** 안보수사국 각 과별 운영 중인 업무 시스템(NSIMS·NSIAS·NSIS)을 통합, 시스템 내 안보경찰 인력데이터를 새롭게 구축

- ▵수사관별 맞춤형 직무교육(기존 7개→11개 확대) 강화 ▵국정원 특별교육 확대 운영 ▵테러방첩·산기수사 분야 전문교육 추가 개설 등 안보수사 교육과정 업그레이드

- 주요 안보수사 사건(최근 5년간) 사례분석을 통해 '안보수사 주요 사건 수사사례집' 발간, 내부 직원들의 수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

  ※ '22년 10월 중 발간·및 전국 배포

- 새롭게 수행하는 방첩·테러·경제안보 등 해당 분야에 경력과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경력채용을 통해 선발·배치

○ **대내외 의견수렴·환류 절차 강화 및 정책 효과성 제고**

- 전년도 평가 시 다소 부진했던 평가항목(▵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 환류 노력도 ▵정책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표 추가 필요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활동 강화 ▵대내외 현장 자문단 운영 등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 환류 절차 강화

- 중요 추진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로 정책 효과성 제고

[탈북민 보호 체계 강화]

○ **탈북민 보호 체계의 효율성·실효성 고도화**

- **(성실 이행도)** 탈북민 보호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안전확인 실적을 바탕으로 입력지연·누락율*을 최소화하여 업무의 실효성 제고

  * 도전적인 목표치(1% 이하)로 산정, 빈틈없는 보호 활동 전개

- 이와 더불어, 정기적 신변위해도 평가·조정(상·하반기 1회)과 신변보호 연장심의(분기별 1회)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신변보호 체계 운영

  ※ 신변보호기간(5년) 경과자 대상 본인 의사,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 연장 여부 결정

○ **탈북민 범죄예방활동 및 보호·지원 활동 내실화**

- **(범죄예방 교육)** 22년 표준 강의안을 개선하고, 통일부와 정책 환류를 통해 내실 있는 범죄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정책 환류 강화)** 통일부(남북하나재단) '범죄예방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22년 범죄예방 교육계획에 반영, 내실 있는 교육 전개

▸**(표준강의안 개선)** 신변보호관이 교육 대상·주제에 따른 내용을 발췌·강의할 수 있도록 최근 범죄 수법 및 대응방안 최신화·배포

– **(안전지원팀 운영)** 정착 불안 탈북민 대상 통합적·다층적 지원 및 보호를 위해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탈북민 안전지원팀' 신설·운영

※ '22. 2월말 정식 출범 예정 / 통일부 6, 경찰 2, 안보지원사 1 등 총 9명

– **(우수사례 선정·공유)** 신변보호관의 범죄예방 우수사례를 선정·공유(분기 1회), 신변보호관 사기진작 및 우수시책 확산 지속 노력

※ 자체(안보기획관리) 우수사례 선정하여 폴넷 '안보수사 국관마당(시도청 우수시책)'에 게재하고, 경무 주관 칭찬플랫폼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치밀한 현장점검을 통한 완벽한 안보상황 관리]

○ △접경지역 △공·항만 △도서·해안 등 안보 취약지에 대한 선제적 점검·분석을 통해 안보 위해 상황 사전 탐지 및 차단

– 각종 안보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통해 안보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튼튼한 협업체계 구축

< 주요 안보상황 >

◆ 간첩·간첩선·의아선박·거동수상자 출현 및 탈북·밀입국자 등 발견

◆ 적성물품 발견·습득, 폭발물·무기류, 전단 발견 등

○ 안보상황 발생시 국정원·軍 등 유관기관과의 견고한 협업체제 下 신속한 원인 분석·대응 등 안정적 안보상황 관리

– 합동정보조사를 통해 원인 분석, 그 결과 및 문제점 등을 작전부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히 대응토록 조치

○ △현장 점검결과 △과거 안보상황 발생·대응 자료 등을 종합분석, 현장 중심의 즉응 태세 확립을 위한 안보상황 대응 계획 수립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안보수사국 주요업무 계획 수립	’22.1월	
	보안경찰 인사운영규칙 개정 (보안경과제 및 자격관리제)	’22.2월	
	안전지원팀(통일부) 출법·운영	’22.2월	
	주요 탈북민 신변보호관서 현장점검	’22.2~3월	코로나 고려
	안보경찰 현장자문단 운영 계획 수립	’22.3월	
	신변보호 연장 심의	’22.3월	
	탈북민 범죄예방교육 계획 수립·배포	’22.3월	
	시도청 합동정보조사요원 전문화 교육	’22.3월	
	남북교류행사 근접보안팀 재정비	’22.3월	
2/4분기	개선 보안경과 ‘안보실무’ 교재 정비	’22.4월	
	개선 보안경과 관련 문제은행 작업 추진	’22.4월	
	보안경찰 인사운영규칙 시행세칙 일부 개정	’22.4월	
	국정원 초청 OJT 교육	’22.4월	
	전국 신변보호관서 현장점검	’22.4~5월	코로나 고려
	테러·방첩 및 산기수사 특별교육(1차)	’22.5월	
	안보수사 주요사건 수사사례집 발간 관련 담당관서 기본자료 수집	’22.5월	
	국정원 특별교육(안보범죄정보 과정)	’22.5월	
	경찰특공대 위탁교육(1·2차)	’22.5월	코로나 고려
	탈북민 범죄예방 표준 강의안 개정·배포	’22.5월	
	전국 안보상황 업무담당자 워크숍(화상회의)	’22.5월	
	상반기 공항만 등 안보취약요소 현장점검	’22.5월	
	북한이탈주민 신변위해도 평가(상반기)	’22.6월	
	신변보호 연장심의	’22.6월	
	상반기 유관기관 합동 경찰책임취약지 분석 계획 수립	’22.6월	
3/4분기	’22년 안보수사 분야별 전문인력 채용	’22.7월	
	개선 보안경과 시험 실시	’22.7월	
	평화사랑 공모전 개최 계획 수립	’22.7~9월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22.8월	
	국정원 초청 OJT 교육	’22.8월	
	거주불명 탈북민 소재확인	’22.8월	
	테러·방첩 및 산기수사 특별교육(2차)	’22.9월	
	안보수사 주요사건 수사사례집 발간 관련 자료 취합 및 편집	’22.9월	
	신변보호 연장심의	’22.9월	
	하반기 공항만 등 안보취약요소 현장점검	’22.9월	
4/4분기	하반기 유관기관 합동 경찰책임취약지 분석 계획·수립	’22.10월	
	안보수사 주요사건 수사사례집 발간 배포	’22.10월	
	평화사람 공모전 시상식 개최	’22.10 ~ 11월	코로나 고려
	주요탈북민 신변보호관서 현장점검	’22.10 ~ 11월	코로나 고려
	최우수 안보경찰 선발	’22.11월	
	국정원 초청 OJT 교육	’22.11월	
	테러·방첩 및 산기수사 특별교육(3차)	’22.12월	
	국정원 특별교육(안보범죄정보 과정)	’22.12월	
	북한이탈주민 신변위해도 평가(하반기)	’22.12월	
	신변보호 연장심의	’22.12월	
	전국 취약지역 판단서 작성	’22.12월	
연중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신설 추진	연중	
	통일부와 협업,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추진	연중	
	정착 불안 탈북민 지원정책 연구 세미나 개최	연중	
	안보상황 발생 시 합동정보조사 등 분석 및 대응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대한민국 및 북한이탈주민, 안보경찰 등

○ **(이해관계 집단)** 국가정보원·통일부 등 안보수사 업무 유관기관

□ 기대효과

○ 안보수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로 안보공백 우려 불식, 부진 요소 보완 및 차질 없는 정책과제 수행을 통해 국민 신뢰 확보

○ 빈틈없는 탈북민 보호활동을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안보 확립에 기여

○ 예방적 경찰 활동을 통한 안보 취약요소 개선으로 국가안보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안보수사 지원 시스템 고도화(성과관리 비대상)			
① 수사지원 및 수사역량강화(1231)[3]	일반회계	0	13.05
4개의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연계 활용도를 제고하고 정보분석 및 추출기능을 강화하여 안보수사 역량 강화 기반 마련		0	13.05
■ 안보수사역량강화(316) (안보수사 지원 시스템)		0	13.0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9	'20	'21	목표치 '22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안보수사 역량강화 (50%)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신규		46	28	하단 참조	하단 참조	공문, 보고서 등 추진 관련 근거자료
	인프라 확충				10			
	의견수렴·환류·정책효과성	신규			10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40%)		43	50	36	38			하단 참조
안보취약요소 개선 활동(10%)		신규		11	12			하단 참조

○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① 안보수사 역량강화(50%) =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30%) + 현장 의견수렴·환류 및 정책 효과성 제고(10%) + 안보수사 인프라 확충(10%)

▶ 국가 책임 안보수사기관에 걸맞게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 전년도 안보수사 인프라 구축을 지속 견인하고 전년도 성과지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 요구
- 안보수사 역량강화가 안보수사국의 당면과제인 만큼 新 안보 영역을 포함한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세부 관리과제별 점수 합산 90% 이상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는 기조 유지

▶ 전년도 부진요소 '현장 의견수렴·환류' 및 '정책 효과성' 보완 노력

- 전년도 평가 시 다소 미흡했던 요소(△대내외 의견수렴도 및 정책 환류도 △정책 효과성 등)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현장 의견수렴·환류'(5%) 및 '정책 효과성 제고'(5%) 항목을 신규지표로 추가하여 설정

  ⇨ 성과 도출만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개선 노력 증명

▶ 분야별 안보수사 전문가 채용 등 '인프라 혁신 지속'

- 전년도 조직 재편과 더불어 새롭게 수행하는 新 안보 영역 수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안보 영역 분야별 외부 전문가 영입 추진

② 탈북민 보호 강화(40%) = 탈북민 범죄예방교육(10%)+신변보호활동 성실이행도(10%)+ 탈북민 보호 우수사례(10%)+안전지원팀 협업 수행도(10%)

▶ 탈북민 범죄예방교육 : 전년 실적(1,651건)*대비 10% 상향 달성(1,816건)을 목표로 설정

*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범죄예방교육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실적산출이 제외된 기간('21. 1. 1 ~ '21. 3. 17<76일>)을 합산하여 전년도 실적에 표기

(例: {1,307건(전년실적) + (4.52건* × 76일<실적산출 제외기간>)} / *日 평균 실적(1,307건/289일)

▶ 탈북민 보호활동 성실이행도 : 신변보호활동 입력 누락·지연율 목표치를 전년 기준과 동일하게 1.0% 이하 달성을 목표로 설정

▶ **탈북민 보호 우수사례** : <칭찬플랫폼 우수사례> 선발 건수를 전년 목표치(11건)와 실적(18건)을 고려, 20% 상향 달성(13건)을 목표로 설정

▶ **안전지원팀 협업 수행도** : 안전지원팀 신설('22. 2월말) 관련 신규개발 지표로, 他기관(통일부 등)이 아닌 경찰관이 지원대상 탈북민을 자체 발굴한 후 유관기관과 협업한 사례를 실적으로 산정, '22. 3월부터 월 1회, 총 10회를 목표로 설정

③ 안보취약요소 개선 활동(10%)

- 전년 대비 10% 상향된 수치인 12점으로 목표치 설치

○ 측정산식

① 안보수사 역량강화(50%) =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30%) + 현장 의견수렴·환류 및 정책 효과성 제고(10%) + 안보수사 인프라 확충(10%)

▶ 언보수사 전문성 강화(30%)

<측정산식>

[성과지표 (각 관리과제별 횟수 × 각 과제별 점수)의 합산에 따른 득점

<과제별 가점표>

<table>
<tr><th>성과지표 항목</th><th>관리과제</th><th colspan="9">과제별 점수</th></tr>
<tr><td rowspan="6">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30%)</td><td rowspan="2">안보경찰 인력 운영시스템 개선</td><td colspan="4">경과제도 재설계</td><td colspan="2">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 도입</td><td colspan="3">안보경찰 인력관리 통합시스템 구축</td></tr>
<tr><td>계획 수립</td><td>시험 실시</td><td>법령 정비</td><td>교재 발간</td><td>계획 수립</td><td>자격 부여</td><td>시스템 정비</td><td>계획 수립</td><td>데이타 구축</td></tr>
<tr><td>0.5</td><td>1</td><td>1</td><td>1.5</td><td>0.5</td><td>0.5</td><td>0.2</td><td>0.5</td><td>1</td></tr>
<tr><td rowspan="2">안보수사 교육 시스템 고도화</td><td colspan="4">계획 수립</td><td colspan="2">교육과정 확대운영</td><td colspan="3">교육과정 신설</td></tr>
<tr><td colspan="4" rowspan="2">0.5</td><td>인원</td><td>횟수</td><td>내부과정</td><td colspan="2">외부과정</td></tr>
<tr><td>0.1</td><td>0.2</td><td>0.5</td><td colspan="2">1</td></tr>
<tr><td rowspan="2">안보수사 주요사건 수사사례집 발간</td><td colspan="4">보고서 (간이)</td><td colspan="2">보고서 (종합)</td><td colspan="3">책자 발간·배포</td></tr>
<tr><td colspan="4" rowspan="2">0.5</td><td colspan="2" rowspan="2">1</td><td>발간</td><td colspan="2">배포</td></tr>
<tr><td>1.5</td><td colspan="2">0.5</td></tr>
</table>

▵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30%) ⇨ 30점을 100%로 기준, 과제 점수 합산 90% 이상(27점↑) 목표**

구분	100% 이상 (30점↑)	90% 이상 (27점↑)	80% 이상 (24점↑)	70% 이상 (21점↑)	60% 이상 (18점↑)
점수	30	28	26	24	12

▶ 전년도 부진요소 보완 노력

⇨ 현장 의견수렴·환류 및 정책 효과성 제고(10%)

<측정산식>

[성과지표 항목별 점수* 합산에 따른 득점]

*** 각 관리과제별 횟수 × 각 과제별 점수**

<과제별 가점표>

<table>
<tr><th>성과지표 항목</th><th>관리과제</th><th colspan="6">과제별 점수</th></tr>
<tr><td rowspan="6">현장 의견수렴·환류및 정책 효과성 제고 (10%)</td><td rowspan="3">국내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강화</td><td colspan="2">실무자급 교류</td><td colspan="2">국장급 교류</td><td colspan="2">MOU 체결</td></tr>
<tr><td>국내</td><td>국외</td><td>국내</td><td>국외</td><td colspan="2" rowspan="2">3</td></tr>
<tr><td>0.5</td><td>1</td><td>1</td><td>2</td></tr>
<tr><td rowspan="3">대내외 자문단 의견수렴 강화</td><td colspan="2">계획 수립</td><td colspan="2">설문조사·의견수렴</td><td colspan="2">정례회의</td></tr>
<tr><td colspan="2" rowspan="2">0.5</td><td>내부직원</td><td>외부인력</td><td>내부직원</td><td>외부기관</td></tr>
<tr><td>0.1</td><td>0.2</td><td>0.5</td><td>1</td></tr>
<tr><td rowspan="3">홍보 활동</td><td colspan="2">내부</td><td colspan="2">외부</td><td colspan="2">언론</td></tr>
<tr><td>인트라넷</td><td>홍보물</td><td>SNS·포털</td><td>공공기관</td><td>보도자료</td><td>매스컴</td></tr>
<tr><td>0.2</td><td>0.5</td><td>0.5</td><td>1</td><td>1</td><td>1.5</td></tr>
</table>

* (국내) 국정원·통일부 등 안보수사 업무 유관기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 (국외)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 안보수사기관 및 해외 경찰주제관 등

▵전 항목 합산 10점을 100%로 기준, 과제 점수 합산 만점 달성 목표

구분	100% 이상 (10점↑)	90% 이상 (9점↑)	80% 이상 (8점↑)	70% 이상 (7점↑)	60% 이상 (6점↑)
점수	10	8	6	7	6

▶ 안보수사국 인프라(안보 영역 분야별 외부 전문가) 확충(10%)

<측정산식>

[외부 전문수사인력 확보 항목별* 점수 합산에 따른 득점]

*** ① 과제 달성률 : 선발 과정(공고→면접→선발→배치) 全 단계 이행 시 점수의 40% 부여**

② 전문인력 채용률 : 채용인원 × 0.2

③ 업무 성취도(▵특별교육 이수 ▵교육현장 활용 ▵안보사건 처리) : 건수 × 0.5

④ 홍보 활동 : 건수 × 0.1

<점수분포표>

구분	100% 이상 (10점↑)	90% 이상 (9점↑)	80% 이상 (8점↑)	70% 이상 (7점↑)	60% 이상 (6점↑)
점수	10	8	6	7	6

② 탈북민 보호 강화(40%) = 탈북민 범죄예방교육(10%)+신변보호활동 성실이행도(10%)+ 탈북민 보호 우수사례(10%)+안전지원팀 협업 수행도(10%)

▶ 탈북민 범죄예방교육(10%)

<측정산식>

[범죄예방교육 횟수별 점수 분포표에 따른 득점(안보업무관리시스템상 통계 활용)]

<점수분포표>

횟수	12월 기준	~1,981건 (~120%)	~1,816건 (~110%)	~1651건 (~100%)	~1,486건 (~90%)	~1,321건 (~80%)
	10월 기준	1,650건	1,513건	1,376건	1,238건	1,101건
점수		10	9	8	7	6

※ 최종 목표치(1,816건)의 달성기간 기준이 '21.1월~12월임을 고려, 정책과제 평가 시기에 따라 목표치는 월별로 분할·계산하여 산정

▶ 탈북민 보호 활동(10%)

<측정산식>

['신변보호 활동 성실 이행도'를 안보업무관리시스템상 '기간 내 근무사항 입력비율*'로 객관화]

*** (신변보호활동 입력지연·누락 건수 / 보호 탈북민 수] × 100**

<점수분포표>

신변보호활동 성실 이행도	S등급 (1.0% 이하)	A등급 (1.0%초과 1.5%이하)	B등급 (1.5%초과 2.0%이하)	C등급 (2.0%초과)
점수	10	9	8	7

▶ 탈북민 보호 우수사례(10%)

<측정산식>

[칭찬플랫폼 우수사례 선발 횟수별 점수 분포표에 따른 득점]

<점수분포표>

횟수	13건 이상 (120%이상)	12건 (110%)	11건 (100%)	10건 (90%)	9건 이하 (80%)
점수	10	9	8	7	6

▶ 안전지원팀 협업 수행도(10%)

<측정산식>

[유관기관과 협업 횟수에 따른 득점]

<점수분포표>

횟수	11건 이상 (110%이상)	10건 (100%)	9건 (90%)	8건 (80%)	7건 이하 (70%)
점수	10	9	8	7	6

※ 안전지원팀이 '22.2월말 출범 예정으로, '22. 3월부터 매월 1회를 목표치로 반영

③ 안보취약요소 개선 활동(10%)

<측정산식>

[(각 과제별 건수 × 각 과제별 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100% 달성]

<과제중요도·난이도별 가점표>

등 급	A	B	C
유 형 (건당)	**안보상황 사전 탐지 및 차단(제지·설득)**	**문제점 발굴 및 관계기관 통보**	**안보상황 대응 계획 수립**
점 수	2	1.5	1

35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 추진배경(목적)

○ 기존 보안국이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개편('21. 1.) 됨에 따라, '對北' 위주 업무영역이 '안보수사' 중심으로 재편

– 간첩 등 국보법 위반사범 위주 개념에서 경제·사회 등 '포괄적 안보'로 확장,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 필요

○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완전 폐지 예정으로, 경찰이 '안보수사의 최종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자리매김

– 대공수사권 이관 유예기간(~'23.12.31.) 동안 경찰 안보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국가 안보수사 총량이 유지되도록 추진

※ "국가안보엔 잠시도 공백도 있어선 안된다. 안보수사 역량을 기르고 조직 체계를 완벽히 구축해 3년 후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달라."('20. 12. 30. 정세균 국무총리)

○ ▵국가기밀 탈취 ▵방산·첨단산업체 기술 해킹 등 사이버 정보사범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 및 선제적 예방 필요

○ 안보위해세력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은밀화·지능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원의 증거능력 판단도 엄격화되는 상황에서 안보위해사범 수사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지속 증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수사역량 강화 및 안보사범 검거성과 제고로 빈틈없는 국가안보 수호]

○ 안보수사 조직 정비와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찰 안보수사 역량강화 3개년 계획' 등을 시행, 전문 수사조직으로 자리매김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정보사범을 비롯하여 산업기술유출 등 경제안보·테러 등 공공안보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 후 사법처리

○ 안보수사대 운영체계 개선 및 인적쇄신 등을 통한 우수인력 지속 확보하여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검거성과를 제고

○ 산업기술유출 특별단속 기간 운영 및 산업기술유출 첩보수집·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보안협의회·협력관 제도를 확대·내실화

< 안보수사 분야별 해당 죄명 >

분야별 구분	해당 죄명
전통안보(정보사범)	▵국가보안법 ▵형법(내란·외환죄)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등
공공안보	▵대외무역법(전략물자 불법수출) ▵정보통신망법(악성프로그램) ▵마약류관리법(북한산 마약) ▵남북교류협력법(미승인 북한 방문) 등 ▵테러방지법(테러단체 구성·지원) ▵외국환거래법 ▵출입국관리법 등
경제안보	▵방위사업법(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비밀유지) 등

○ ▵변호인 참여 실질화 ▵압수물 관리 강화 ▵경찰사건심사 시민위원회 등 수사 과정의 모든 인권 보호 제도 또한 엄격히 준수

[사이버 안보위협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첨단안보수사 대응역량 강화]

○ ‘첩보 입수부터 입건 전 조사 및 추적 수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본청 차원의 첩보 직접 수집 및 고가치 정보 재생산을 위한 첩보 분석기능 강화

※ 지난해 ▵IT ·보안업체 ▵방산·첨단산업체 ▵북한 및 탈북민 관련 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도청별 ‘사이버안보 워킹그룹’을 구성(총 176개 기관·단체), 피해 예방 및 첩보 수집 활성화

○ 北 해킹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DB化하여 추적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民·官·學 참여 ‘연구회’ 운영 및 침해사고 지표(IOC)* 도입(성과평가 반영)

* IOC(Indicators of Compromise): 지문, 족적과 같은 증거처럼 IP주소·악성코드 등 침해 흔적으로 원인 식별 및 공격자 특정 지표로, 美 FBI·보안업체 등에서 통용되는 기준

○ 대외 협업을 통해 ▵사이버위협정보 공유(국정원·KISA) ▵피해계정 보호조치(네이버·카카오)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KISA) ▵해킹메일 모의훈련(KISA) 등 해킹 피해 예방 활동 전개

○ 첨단 수사기법 습득을 위한 최신 해킹사례 기반의 침해사고 종합대응훈련 추진 및 민간위탁 전문교육과정 운영, 수사 전문성 제고

[디지털 포렌식 현장 대응 강화 및 전문성 확보로 성공적인 안보수사 지원]

○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사건별 포렌식 지원 사항 조정

- 압수수색 시 포렌식 요원이 현장에서 디지털 증거수집·분석을 직접 수행하여 중요 증거 누락 및 절차법 위반 방지
- 전국의 포렌식 필요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사건의 규모·중대성을 고려한 분석 인력·장비 조정으로 효율적인 증거 수집·분석

○ 다양한 장비·프로그램 도입 및 전문 교육으로 분석 능력 강화

- 디지털 증거 은닉·사이버테러·가상자산 이용 범죄 등 다양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디지털 포렌식 장비·프로그램 도입
- 대외 전문성·신뢰성 담보를 위한 포렌식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최신 IT기술·트렌드를 습득할 수 있는 전문 교육 실시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산업기술유출 특별단속 기간 운영	2월	
	전국 안보수사대장 화상회의 개최	2월	
	안보수사 업무처리 지침 개정	2월	
	'21년 해킹메일 분석보고서 제작·배포	2월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장비 종합 지원 계획 수립	2월	
	안보수사 역량평가 계획 수립	3월	
	산업보안협력관·산업보안협의회 확대·내실화 계획 수립·시행	3월	
	사이버안보 첩보 수집 및 수사 활성화 계획 수립	3월	
	디스크 포렌식 장비 도입·유지 관리 세부 계획 수립	3월	
	「디지털 인증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배부	3월	
2/4분기	상반기 중요 안보사건 현장점검	4월	
	'사이버안보 해킹조직 연구회' 구성·운영	4월	
	제1차 전략물자 실무과정 위탁교육	4월	
	상반기 안보사건 평가회의 개최	4월	
	상반기 종결사건(불입건·불송치) 사건 점검	5월	
	첨단안보사건 관련 첩보 집중 수집기간 운영	5월	
	「안보수사 포렌식 자격증 관리 강화 계획」 수립	5월	
	「안보수사 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5월	
	상반기 침해사고 대응훈련	6월	
	산업기술유출 수사요원 디지털포렌식 교육	6월	
	민간위탁 전문교육 '침해사고 수사과정'	6월	
3/4분기	사이버안보 워킹그룹 소식지 제작·배포	7월	
	「수사자료 분석 프로그램 도입 계획」 수립	7월	
	하반기 안보사건 평가회의 개최	8월	
	하반기 종결사건(불입건·불송치) 사건 점검	8월	

	민간위탁 전문교육 '첨단안보 수사기법 대응과정'	9월	
	제2차 전략물자 실무과정 위탁교육	9월	
	산업기술유출 예방 홍보용품 제작	9월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요원 포렌식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9월	
4/4분기	하반기 중요 안보사건 현장점검	10월	
	안보수사 포렌식 전문과정 위탁교육 실시	10월	
	산업기술유출 특별단속 성과 평가	11월	
	안보수사 역량평가 실시	11월	
	시도청 안보수사부서 성과평가 워크숍 개최	11월	
	하반기 침해사고 대응훈련	12월	
	모바일 포렌식 분석장비 성능개선 사업 실시	12월	
	사이버안보 워킹그룹 성과 점검	12월	
	전국 안보수사대장 워크숍 개최	12월	
연중	안보수사 관련 국정원, 안보지원사 등 유관기관 상시 협조체계 구축	상시	
	산업기술유출 관련, 국정원, 산업부, 중기청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상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 이해관계 집단 : 간첩·기술유출·테러 등 안보위해사범

□ 기대효과

○ 안보위해사범 검거로 빈틈없는 국가안보 수호

○ 사이버 정보사범에 대한 수사 활성화 및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든든히 뒷받침

○ 안보수사 분야 디지털 포렌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증거물의 동일성·무결성 입증을 통해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중요 안보사범 검거 지수(50%)	684	616	760	756	하단 참조	하단 참조	검거보고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등 검거실적 DB
첨단안보 대응활동 지수(25%)	391.8	381.3	524.3	454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안보정보 공유망 및 시도청 결과보고 등
디지털 포렌식 활성화지수(25%)	74.8	114.3	127.6	140.4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안보정보 공유망 및 시도청 결과보고 등

【'22년 목표치 산출 근거 및 세부 설명자료】

① 중요 안보사범 검거 지수(업무계획: 인권 보장에 기반한 안보수사 전개)

○ **(산식)** 기존의 정보사범 검거점수에 경제·공공안보사범 검거점수를 합산

– **(① 정보사범 검거 X 2점) + (② 그 외 사범 검거 X 1점)**

① **정보사범:**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형법·군형법 제2편 제1·2장(내란·반란 등)

② **정보사범 외**

- **경제안보사범 :**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상 업무상배임,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공공안보사범 :**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출입국관리법, 총포화약법, 화학물질관리법, 대외무역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마약류관리법, 북한이탈주민법, 군사기지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정통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22년 목표치 산출 근거)** '19~'21년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19년 684점, '20년 616점, '21년 760점 산출, 최근 3년간 등락 반복

– 「'21년 경찰청 자체평가 관리과제 설정 기준」에 의거, 목표치의 적극성 '상'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21년 목표치를 756점**으로 설정

※ △3년 평균치 686.7 대비 10% 이상 높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

② 첨단안보 대응활동 지수(업무계획: 안보수사 전문성 제고 등 역량 강화)

○ **(산식)** (첨단안보 입건 전 조사 개척 건수 X 2점) + (피해계정 등 보호조치 건수 X 0.1점)

- 기존 3개 성과지표 중 「사이버 정보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선제적 예방」 정책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입건 전 조사'와 '보호조치'로 성과지표 단순화

※ 첩보 제출을 통해 입건 전 조사 개척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첩보 항목을 삭제하더라도 간접적 평가가 가능

개선 前	개선 後
(첨단안보 입건 전 조사 개척 건수 X 2점) + (첨단안보 첩보 제출 건수<'일보' 이상 평가> X 0.5점) + (피해계정 등 보호조치 건수 X 0.1점)	(첨단안보 입건 전 조사 개척 건수 X 2점) + (피해계정 등 보호조치 건수 X 0.1점)

○ **('22년 목표치 산출 근거)** '19~'21년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19년 391.8점 △'20년 381.3점 △'21년 524.3점 산출

- 전년도 실적이 급격히 상승*(37.5%↑)하여 임계치에 도달하였으나, 「'22년 경찰청 자체평가 관리과제 설정 기준」에 의거, 목표치의 적극성 '상' 인정기준인 432.5점

대비 5% 이상인 454점으로 목표치를 높게 설정

* **('21년 점수 상승요인)** △'21년 국수본 출범에 따른 시도청 첨단안보수사계 수사 중심 조직 재편 △한국원자력연구원 해킹 등 비대면 환경 확산에 따른 사이버위협 증대 등으로 인해 **입건 전 조사 개척 건수 일시적 증가('20년 77건→'21년 145건)**

③ 디지털 포렌식 활성화 지수(업무계획: 적극적인 안보수사활동 전개)

○ **(산식)** (현장지원횟수 / 디지털포렌식 지원횟수 × 100) ×0.5 ② (선별압수 / 현장지원 횟수 ×100) ×0.3 ③ (포렌식 전문 교육 이수 인원) ×0.2 점수의 합산

-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법원의 판단기준은 더욱 엄격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디지털 포렌식 현장 지원 횟수 △선별 압수 건수 △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를 위한 포렌식 전문 교육 이수 인원을 측정

○ **('22년 목표치 산출 근거)** 최근 3년간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여(70.6%) 상승세가 둔화되고 임계치에 도달한 실정이나, 현장 디지털 포렌식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SS등급)한 140.4라는 도전적 목표치 설정

36 국내외 다양한 위협에 대한 안보정보 수집으로 국민 안전 확보 및 국가권익 보호

□ 추진배경

○ 최근 안보수사 대상이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 의한 테러 및 방산·산업기술 유출까지 다양한 안보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 첩보 수집분야를 테러·기술유출 등 다양한 안보영역으로 확장하여 변화한 안보환경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 대두

○ 특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안보수사국은 책임 안보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상 재정립 필수

– 따라서 일선에서 수집되는 안보첩보의 질적향상과 본청 분석기능의 역량 고도화를 도모하여 경찰의 독자적 안보수사 역량 극대화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고가치 안보첩보 수집을 통한 국가권익 보호]

○ 대북 군사정보 위주의 안보경찰 활동대상이 테러·기술유출 등 국민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국가권익을 침해하는 전 분야로 확장

– 다만, 오랜기간 대북정보에 특화된 안보경찰의 특성상 확장된 안보영역에 대한 첩보수집 역량과 의지는 지속적인 계발과 함양 필요

영역	첩보수집 분야
기존 분야	▵ 정보사범(국가보안법) ▵ 공공안보사범(남교법, 대외무역법 등) ▵ 첨단안보사범(정통망법) ▵ 안보상황 ▵ 북한정세
확장 분야	▵ 대테러(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등) ▵ 경제안보(방산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 대외안보정세(한반도 안보 관련 국가 대상)

○ 이에따라, ▵첩보수집 우선목표 설정 ▵첩보수집 노하우 공유 ▵첩보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확장된 업무영역에 대한 일선의 수용도 제고 중

– 특히 일선의 수집노력과 더불어, 본청 및 시도청의 분석기능 고도화를 통해 유가치 정보의 활용도 고양를 위한 노력 병행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보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 지하화·은밀화하는 안보범죄의 특성상, 이에 대응한 수사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수사의 단초인 첩보의 입수가 필수적

– 따라서 일선의 중요 안보범죄정보 수집을 견인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인사·포상)과 함께 정책지원 방안 강구 중(예산 증액요구)

○ 또한, 첩보와 수사사안 간 융합분석으로 중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첩보의 死藏을 방지하고 수사진행의 촉매 역할 수행

– 특히 산기유출 등 초국경적 안보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 안보정보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 고가치 첩보입수 노력 경주

구분	안보수사			안보정세		업무 제안	안보 상황	이탈 주민
	정보 사범	공공 안보	첨단 안보	북한 정세	대외 정세			
상보율*(%)	21.07	33.14	9.60	5.90	27.72	35.41	17.74	19.88

* 상보 : 시도청 분석기능에서 '중보'로 가치판단, 본청으로 평가요청된 첩보

[경찰 독자적 안보정세 분석역량 제고로 안보위협 대응력 강화]

○ 그간 제한적으로 입수하던 국정원·통일부 등 일부 유관부처의 안보정세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안보경찰 활동방향 설계에 한계

– 따라서 일선의 첩보와 국내외 유관기관으로부터 입수되는 안보정보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경찰의 독자적 안보정세 분석·판단 시행 필요

▸ **(북한정세)** 북 공개정보*와 국내외 유관기관 發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주요현안 분석·주요 공작기관(원) 동향파악 및 안보경찰 활동방향 제시

* 북 언론보도는 엄격한 검열을 거친 공식입장으로, 행간분석을 통한 내부 정세 및 대남공작 동향파악을 위해 조선중앙티비 등 4개채널 모니터링 중

▸ **(대외정세)**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안보위협이 초국가적 양상을 띔에 따라, 주한 외국기관과의 정보협력을 통해 테러·산업기술유출 등 국제적 안보범죄에 대응한 경찰의 해외안보 정보역량 제고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안보수사외국어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1월	
	정보예산(첩보수집비) 집행지침 및 안보수사 처리지침(첩보수집) 정비	1월	
	'안보첩보 심의위원회' 시행계획 수립·전 시도청 설치	2월	
	'첩보수집규칙' 개정 관련 현장 간담회	3월	
	22년 안보경찰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 하달	3월	
2/4분기	상반기 안보첩보 수집 관련 현장 순회교육(일선 안보요원 대상)	4월	
	'안보첩보수집 인센티브 종합계획' 수립·시행	4월	
	안보첩보 분석 전문화 교육(시도청 첩보평가·분석 담당자 대상)	5월	
	'첩보수집규칙' 전부개정안 제정	6월	
3/4분기	안보수사외국어 경채 대상 안보첩보 수집 기본교육(21년 선발인원 대상)	7월	
	시도청 첩보수집 현황 및 정보예산 집행사항 현장점검	8월	
	외국 안보수사기관 교육파견 협의	8월	
	안보첩보 수집활동 성과평가 관련 시도청 의견수렴	9월	
4/4분기	하반기 안보첩보 수집 관련 현장 순회교육(일선 안보요원 대상)	10월	
	안보수사외국어 경력경쟁채용자 기초교육(22년 선발인원 대상)	11월	
	안보첩보시스템 리뉴얼 관련 매뉴얼 작성 및 교육	12월	
연중	안보정보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상시 협조체계 구축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대한민국 국민

○ 이해관계 집단: 간첩·테러단체·국가중요기술 유출사범 등 안보위해세력

□ 기대효과

○ 北 대남공작 및 외국인 간첩, 테러, 경제안보사범 등 국가안전보장과 국익에 반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첩보수집 역량 강화

○ 경찰청 諸 정보기능 및 국내·외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안보수사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활용

○ 선진국 주요 안보수사기관과의 정보교류 확대로 안보정보 수집 루트 다각화 및 선진 정보기관의 노하우 획득

○ 일선의 고가치 첩보수집율 증가 및 본청 분석기능의 전문화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안보수사 능력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안보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50%)	신규			90.6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첩보시스템 D/B, 입건전조사·수사 착수현황 월보
안보정세 분석 고도화(30%)	신규	신규	40	80	하단참조	하단 참조	첩보시스템 D/B, 정세분석 보고서 및 공유현황
고가치 첩보 획득률 제고 (20%)	신규			12	하단참조	하단 참조	첩보시스템 D/B

【'21년 목표치 산출 근거 및 세부 설명자료】

① 안보범죄정보 수집 활성화(업무계획 Ⅱ-⑥-3 안보위해첩보 관리·활용 고도화)

○ 그간 일선 안보요원들이 제출해 온 안보범죄 첩보에 대하여 신뢰성 검증 및 평가를 하였으나, 실제 수사현장에서의 첩보 활용도 여부 파악은 미흡한 실정

–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하여, 전 안보영역에서 일선 안보수사요원들이 즉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고가치 첩보를 입수하도록 견인하고자 성과지표를 신규 선정함

○ '22년 목표치 측정산식 및 산출근거

– **(측정산식)** 범죄혐의점 유무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제출하도록 설정한 '안보수사 사건 첩보(시스템 상 카테고리 名)' 건수 대비 실제 입건전조사 및 수사 착수 건수 비율

– **(산출근거)** 직전년도 입건전조사 첩보 대비 입건전조사 개척실적 비율인 82.3% 대비 10% 이상인 90.6%를 22년 목표치로 설정

② 안보정세 분석 고도화(업무계획 Ⅱ-⑥-3 안보위해첩보 관리·활용 고도화)

○ 안보경찰에 필요한 북한·해외 안보이슈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표 재설계

– 테러·산업기술유출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최신 해외안보 이슈 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며, 또한 북 선전매체는 엄격한 검열을 거친 북한의 대외적 공식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필요

○ **'22년 목표치 측정산식 및 산출근거**

– **(측정산식)** 북한·해외 안보정세 분석서 생산(40건) + 분석서당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실시(보고서 건 당 1회)

– **(산출근거)** 직전년도 실적(보고서 20건, 자문 20회) 대비 2배 이상 상향된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안보정세 고도화'를 위한 노력 경주 설정

③ 고가치 첩보 획득률 제고(업무계획 Ⅱ-⑥-3 안보위해첩보 관리·활용 고도화)

○ 안보첩보는 각 시도청에서 '중보' 평가를 받은 사안만 본청으로 상보되어 2차검증을 받고있으며, '21년 기준 전체첩보(87,163건) 대비 본청 '일보'이상 평가율은 10.6% 수준(9,303건)

– 일선에서 제출한 첩보가 본청에서 '일보' 이상 평가받는 비율로 고가치 첩보 획득률 측정

○ **'22년 목표치 측정산식 및 산출근거**

– **(측정산식)** 첩보 총 건수 대비 본청 '일보' 이상 평가 비율

– **(산출근거)** 전년도 일보 이상 평가율 10.6% 대비 10% 이상인 12%를 목표치로 설정

37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경호행사로 국가 안전 확보

□ 추진배경

○ 대통령 등 주요인사에 대한 경호는 성패여부에 따라 국가위상 실추는 물론 국가적 위기사태와 직결되는 중요한 경찰의 임무

○ 올해는 국가 최대행사인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선이 있어 정치·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갈등 심화로 경호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

※ 대통령선거(3.9.), 대통령취임식(5.10.), 지방선거(6.1.) 등 국가 중요행사 예정

– 나아가, 現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이면서 새 정부 출범의 해로 국정현안 관련 현장방문이 이어지고 방한 외빈 대폭 증가 예상

○ 경호 경찰의 인·물적 역량을 극대화하여 경호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경호' 추진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 정책과제와 연계, 국가 중요행사 성공개최 등 지원 >

• 2022년 주요업무계획 "22년 대선·지방선거 대비, 주요인사 경호"

○ **(제20대 대통령선거)** 근접·기동경호, 행사장 경비 등 대선후보자 경호경비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대선후보자 절대 안전확보

▸ **(경호요원 선발·배치)**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교육·훈련을 통해 후보자 전담 경호요원 총 115명 선발, 후보자 신변 보호 및 행사장 안전확보

▸ **(경호안전위원회 운영)** 위원장(경비국장)을 중심으로 대선 관련 △주요 정책 결정 및 조정·통제 △경호수준 결정 △경호대책 점검 등 총괄

▸ **(경호백서 발간)** 대선후보자 경호 중점 추진사항·개선점 등 총체적인 분석·평가를 통한 향후 발전과제 도출

○ **(대통령 취임식)**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범국가적 공식 행사로 치밀한 사전 준비 및 총력대응을 통한 완벽한 경호경비 실시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선·총선 유경험자 등 경호 전문인력 구성, 주요 정당대표 및 후보자 등 신변보호로 선거 치안 확보

▸ **(대상)** 정당대표 등 주요인사 ▸ **(운영기간)** '22. 5. 19.~ 6. 1.(14일간)
▸ **(신변보호팀 운영)** △인력풀 선발·배치 △정당측과 협의 △ 24시간 상황관리 등

○ **(국제행사 지원)** 행안부·외교부·경호처 등 부처별로 국제행사 개최 또는 외빈초청 시 수시로 경찰청에 '경호 협조' 요청 중

– 각 부처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 또는 초청하는 국·외빈에 대한 경호 의전 지원·맞춤형 경호 제공으로 국격 향상에 기여

< '22년 주요 국제행사 >

△바이든 美 대통령 방한(미정) △세계산림총회(5월, 서울) △서울안보대화(9월, 서울) △제주포럼(9월, 제주)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10월, 대전) 등

– 아울러, 국제적 위상 강화 및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방한 국·외빈 대폭 증가 예상,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빈틈없는 경호 지원

< 성공적인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 **(현장경호 네트워크 구축)** 경호대상자의 안전확보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장소통을 통한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호실시

< 본청, 경호현장 지원활동 흐름도 >

<사전 현장지원, D-7~14>	⇨	<관계기관 회의, D-1>	⇨	<현장 지도점검, D-day>
▸ 관계기관 합동 현장답사 ▸ 경호 필요 장비·인력 등 협의		▸ 공공위험 분석 및 정보공유 ▸ 경호구역 내 역할·책임 명확화 등		▸ 과도한 통제예방, 국민불편 최소화 ▸ 현장 교육 및 애로사항 지원 등

– 경호업무 지침 하달,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교육, 경호처 등 경호 관계기관과의 소통으로 개선점 적극 발굴·공유

▸ **(최신 경호지침 작성·배포)** 전년 경호활동을 평가하고 '22년 경호환경을 분석하여 「'22년 경호지침」을 작성(4月), 각급 관서 담당부서와 공유
▸ **(현장점검 활성화)** 경호과장, 대통령 경호행사 시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 **(경호행사 환류체계 정립)** 본청-시도청간 '대통령 경호행사 평가·분석 회의' 정례화

○ **(경호인력풀 정예화)** 경호수요에 탄력적·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청별로 「경호인력풀」과 「MD·X-Ray검색 요원」을 재편성

※ 경호인력풀 : 일선 경찰서·지구대 직원 중 경호 유경험자로 구성, 다양한 경호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설 경호 인력

○ **(경호 전문화 교육)** 경찰인재개발원과 연계, 전문 경호요원 양성 교육 및 본청 주관 전국 경호인력풀 대상 전문화 교육 실시

▸ **(인재개발원 교육)** △경호심화과정(연3회, 60명) △경호전문화과정(연1회, 11명)
▸ **(전문화 교육)** 본청 주관, 경호인력풀(730명) 대상 실습위주 전문화 교육 실시
▸ **(사이버콘텐츠)** 근접수행경호·실무사례·MD.X-ray검색기 운용요령 등

○ **(매뉴얼·홍보물 제작)** 업무 표준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임무 수첩 및 현장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경호기준과 절차를 지속 정비

※ 카드뉴스·이미지·동영상 등을 활용한 경호홍보물 제작 추진

< 최신 장비 도입 및 상시 가용성 확보 등>

○ **(최신 경호장비 확충)** AI 기술을 적용한 X-ray 판독시스템·최신 경호용 무전기 등 첨단장비 도입으로 경호업무 효율성 증대

▸ **(AI X-ray 판독기)** 위해물품 영상자료 축적과 알고리즘 학습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물품을 검색하여 위해 의심 물품을 모니터에 현출하는 시스템

※ 22~24년(3년간) 2대씩 구매 부산·대전청 보급 예정으로, 현장 장비운영 경찰관 의견 수렴 등 요청사항 반영, 경호 위해물품을 발견 할 수 있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 **(경호용 무전기)** 디지털무전기 교체로 도·감청 차단하고 안정적 통화권 확보

※ 경호인력풀(730명) 동원 경호요원 배치 시 무전기 150대, 이동형 중계기 10대 보급

○ **(장비 최적상태 유지)** 경호장비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고장 장비는 수리하거나 폐기하여 최적의 가용상태 유지(16종 3,589점)

※ 전국 시도경찰청 필요 장비를 파악하여 적기 보급 <총 2회, 전국 장비점검 예정>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호인력풀 및 MD·X-ray 검색요원 재편성	2월	
	제20대 대선 경호요원 전원 배치	2월	
	제20대 대선 경호안전위원회 운영	2월	
2/4분기	「'22년 경호업무 지침」 발간	4월	
	대통령 취임식 경호경비대책 수립	4월	
	경호비표 신규 제작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신변보호팀 운용	5월	
	제20대 대선 백서 발간	6월	
3/4분기	23년 경호장비 보급 계획 수립	7월	
	상반기 경호행사 평가·분석	7월	
	4부요인·전직경호대·외빈경호대 현장컨설팅	8월	
	전국 경호인력풀 전문화 교육	9월	
4/4분기	전국 경호장비 일제점검	10월	
	경호현장 매뉴얼 제작	11월	
	'22년 경호행사 평가·분석	12월	
연중	경호행사 종료 후 평가·분석 및 개선지침 하달	연중	
	주요인사 경호 및 신변보호 활동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대통령 등 국내외 주요 인사를 비롯한 모든 국민

○ 이해관계집단 : 경호처·軍·국제행사 주관부처 등 관계기관

□ 기대효과

○ 경찰경호 전문성 강화로 경호대상자의 안전확보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경호 활동을 실시, 빈틈없는 국정운영 뒷받침

○ 경호 준비단계에서부터 평가·환류 단계까지 부처간 협업으로 현장 중심의 '경호업무시스템' 구축하고 국가 위기사태 예방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빈틈없는 경호업무 수행성(Ⅰ-1-일반재정②)			
① 경비경찰활동(2131-311)	일반회계	19.4	27.6

※ 제20대 대선후보자 경호경비 관련 운영비 등 증가(7.6억)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① 경호 경찰 전문화 교육 및 설문조사 (50%)	-	-	**82.2점**	**90.5점**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전문화 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서 ▸교육 결과 설문조사 만족도 평가
② 경호 경찰 인프라 구축(30%)	21점	24점	30점	**33점**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지침·조직·장비 확보 관련 계획 및 관련 공문
③ 경호업무 관계기관 협업 (20%)	20%	59%	51%	**56.1%**	하단 참조	하단 참조	▸관계기관회의·현장점검 계획·결과보고 등 관련 공문

① 경호 경찰 전문화 (50%)

- **(개요)** 경호업무는 특수성 있는 업무로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과 교육수료자에게 교육이 실제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도 지표로 반영

- **(측정산식) 경호경찰 인력풀 교육 실시율(교육 인원수 / 경호경찰 인력풀) × 0.7**
  + (경호경찰관 교육수료자 대상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평균값) × 0.3

- **(목표치 및 산출근거)**
  ▸ 작년 대비 10% 이상 (전문화교육 및 설문조사 포함) 상승한 90.5점 이상일 경우 목표 달성
  ▸ 이는 교육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교육계획 및 실시결과는 공문 또는 교관 출장기록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교육 실시율은 작년 대비 10% 상승한 92%로 목표로 설정, 따라서 목표치는 64.4점(92%×0.7)

< 목표치 산출근거(경호인력풀 교육인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목표
교육훈련 실시율	77%	미실시	83.8%	92%
점수 환산	53.9점	미실시	58.66점	64.4점

  ▸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30점 만점기준이며, 작년에 첫 시행으로 78% 만족도를 나타내어 만족도 목표를 85.8%로 설정. 따라서 목표치는 25.74점(85.8%×0.3)

② 경호 경찰 인프라 구축(지침 마련·조직 확보·최신장비 도입 등) (30%)

- (개요) 빈틈없는 경호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력·지침·장비 등 기반 구축에 노력을 경주, 현장 경찰관들이 경호행사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측정산식) ▸(A)경호업무 담당조직·부대 신설(양성) : 건당 10점
  ▸(B)규칙、지침、매뉴얼 마련 : 건당 7점
  ▸(C)신형 경호장비 도입 : 장비 1종당 3점
- (목표치 및 산출근거) 작년 대비 10% 상승한 33점 이상일 경우 목표 달성

< 목표치 산출근거>

구 분	'19년	'20년	'21년	평균	'22년 목표
경호 인프라 구축	B(3건) 21점	A(1건), B(2건) 24점	B(3건), C(3건) 30점	25점	33점

③ 경호업무 관계기관 협업 (20%)

- (개요) 경찰의 경호업무의 핵심은 대통령 경호, 4부요인 경호, 국가중요행사 지원 등으로 경호처·외교부·주한대사관 등 외부 관계기관과 협업 구축 필요. 긴밀한 협업을 위해 사전회의 등 노력 집중
- (측정산식) 관계기관 회의 주관·현장점검 횟수 / 대통령 경호행사 건수
- (목표치 및 산출근거) 작년 대비 10% 상승한 56% 이상일 경우 목표 달성

< 목표치 산출근거>

구 분	'19년	'20년	'21년	평균	'22년 목표
관계기관 회의 (현장점검 포함)	20%	59%	51%	43%	56.1%

전략목표Ⅲ 진취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기 본 방 향

◇ 현장중심 정책 지원과 제도·시스템 정비로 일선 경찰관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치안문제를 해결

○ ▵인력 ▵예산 ▵시설 등 기본적인 치안인프라를 확충하고, 업무혁신·복지기반 확충 등 다각적인 처우 개선으로 조직의 활력 제고

○ AI·드론·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현장 치안력 강화

◇ 청렴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 혁신으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경찰상 구현

○ '중장기 반부패 대책' 및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으로 한 차원 높은 쇄신을 이뤄내고, 경찰조직에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 내재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없음*	4	4	15	47

*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 개선안('19.6.) 반영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진취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없음
성과목표 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인사·성과·교육 부문 직무만족도
	38 정책추진 프로세스 강화로 가시적 성과창출을 견인	국정과제 全 성과지표 달성도 / 정책모니터링 활성화 / 경찰 매뉴얼 관리체계 개선
	39 현장 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직무만족도 / 현장우수사례 표창비율 / 인적구성의 성별 균형
	40 입법대응과 현장지원을 강화, 국민 안전 및 당당한 법집행 실현	입법대응 노력도 / 규제혁신과제 달성도 / 통합 법률 및 소송 지원체계 만족도 / 현장법률365 센터 대응 노력도
	41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교육 현장활용도 / 인재채용률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2. 강력한 반부패 정책 등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행정을 구현한다		**조직문화 부문 직무만족도**
	42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제도개선 실적 / 적극행정 면책실적 / 경찰 청렴도 측정 결과 /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
	43 예방・진단・교정 중심 감찰활동으로 건강하고 효율적인 경찰 뒷받침	감찰첩보 수집건수 / 제도개선 자료제출 노력도 / 유가치 첩보 활용도 / 감찰정보 분석문건 제공실적 /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결과
	44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 / 성평등 교육 정착도
성과목표 3.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장비·시스템 부문 직무만족도**
	45 치안R&D와 치안산업 진흥을 통한 현장 지원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현장 문제해결 발굴 건수 / R&D 연구성과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 치안박람회를 통한 치안 장비・기술의 수출상담액
	46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데이터 기반 경찰행정 지원	사이버위협 사전예방 노력도 / 사이버위협 대응 신속도 / 치안 데이터 정확도
	47 경찰 정보통신 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 경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도 / 정보통신기술 지원도 / 경찰 정보통신기술 표준 확립
	48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	장비 성능개선 및 신규도입 / 친환경 차량 보급률 / 경찰장비 현장만족도
성과목표 4.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복지 부문 직무만족도**
	49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적극지원 및 현장활력 제고로 대국민 치안역량 강화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 / 연가사용 실적
	50 현장활력을 제고하는 복지기반 확충	현장 경찰관 대상 마음건강관리 실적 / 퇴직(예정)경찰관 취업지원 성과
	51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예산확보수준 / 예산집행률 / 국유재산증가율
	52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치안정책・현안에 대한 신뢰・지지기반 마련	경찰청 SNS 활동지수 / 주요정책 언론홍보 실적 / 온라인 이슈 및 오보대응 활동

전략목표Ⅲ 진취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1) 주요 내용

○ **<현장 중심 정책 개발>** '국민체감 경찰개혁' 2년차를 맞아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변화된 치안환경을 반영하여 국민체감 가시적 성과 창출

– ▵합리적 인사제도 ▵현장법률 365센터 ▵현장대응력을 갖춘 우수 인적자원 확보 ▵체계적 입법대응·법률지원 등

○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예방·진단·교정' 중심 감찰 활동을 추진하고, 경찰청 성평등 정책 5개년 계획 지속 추진

○ **<첨단과학기술 활용>** 치안 R&D 및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환경 변화에 즉응하는 스마트치안을 구현하여 현장의 문제 해결

–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 접목하는 연구개발(R&D)이 중요

○ **<치안현장 활력 제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적인 재정·복지기반을 확충하여 자긍심과 사기 제고

⇨ **현장 활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 선제적 요건이 되는 구성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의지 결집**

구 분		성과지표
전략목표	진취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없음*

*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 개선안('19.6.) 반영

– 전략목표 III 특성상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은 어려우나, 현장직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제고함으로써 전략목표 Ⅰ·Ⅱ달성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올해는 '국민체감 경찰개혁' 2년차를 맞아 높아진 책임성으로 개혁성과에 대한 세밀하고 냉엄한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

– 상반기 정부출범 이후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정책조정력*을 발휘, 다각적 치안전략을 발굴해야 할 시점

* △3원체제 출범 △조직 전문화·세분화로 부서간 칸막이가 심화되고 업무 효율성은 저하

○ 감사의 패러다임을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 정책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현장 안착을 돕는 선제적 감사활동 실시

○ 최신 기술 발전 등으로 더욱 발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화적인 시스템에 대응 가능한, 효과적인 치안정책 수립·집행을 위해

– 구성원 상호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일일회의를 기획하여, 조직원들의 의사가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원

※ 현장활력소 등 경찰청 직원들의 의사가 상향 반영되는 업무회의 기획·운영 中

○ 국가 R&D 사업은 국가 재정과 연관되어 있어 제한된 예산 범위 내 他 부처와의 경쟁 등 신규 사업 발굴·반영 어려움

– 경찰예산은 국민안전과 직결됨을 강조하면서 △범죄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 억제 △국가이미지(K-COP, 치안한류) 향상 등 투입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설득

(3) 참고자료

○ 경찰청 인터넷 웹사이트(www.police.go.kr)

○「경찰청 주요업무계획」,「경찰청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등

성과목표Ⅲ-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 · 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치안정책 방향성 확립>** 조직 차원의 정책추진 프로세스(설계-실행-평가-환류)를 체계적 총괄, 정책 완성도를 제고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 견인

– 현장인력 증원·재배치 등 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용으로 현장대응력을 뒷받침하고,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선제적·능동적 경찰행정 구현

○ **<현장 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 운영>** 경찰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투명한 경찰인사제도 마련

– △근속 단축에 따른 경감급 인력운용안 정비 △현장 중심의 포상제도 운영 △인적구성의 성별 균형을 위한 여성경찰관 채용비율 확보

○ **<법률지원 체계화>** △주요 중점추진 법안 입법주도 △타부처 소관 경찰 관련 법안 적극 대응 등 경찰 입법대응을 총괄하고,

– '종합 법률지원체계*' 운영 강화로 경찰 법집행력 제고

* △경찰 법률보험 △공무원 책임보험 △현장법률 365센터 △소송지원단 등

○ **<치안인재 양성>** 채용단계에서부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올바른 공직관과 인권 가치를 내재화하여 전문성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인사·성과·교육 부문 직무만족도**
관리과제	정책추진 프로세스 강화로 가시적 성과창출을 견인	국정과제 全 성과지표 달성도 / 정책모니터링 활성화 / 경찰 매뉴얼 관리체계 개선
	현장 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직무만족도 / 현장우수사례 표창비율 / 인적구성의 성별 균형
	입법대응과 현장지원을 강화, 국민 안전 및 당당한 법집행 실현	입법대응 노력도 / 규제혁신과제 달성도 / 통합 법률 및 소송 지원체계 만족도 / 현장법률365 센터 대응 노력도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교육 현장활용도 / 인재채용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인사·성과·교육 부문 직무만족도	82.0	80.7	80.7	82.0	인사·성과·교육 부문 직무만족도는 '19년 상승 후 하락하였고, 전 3년도 실적 평균값(81.1)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79.8)을 고려, '22년 목표치는 반등을 목표로 예측값보다 2.2%p 높은 82.0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인사·성과·교육 분야 문항 평균)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직무만족도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올해는 '국민체감 경찰개혁' 2년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요구되는 가운데, 상반기 정부출범 이후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정책조정력*을 발휘, 다각적 치안전략을 발굴해야 할 시점

* △3원체제 출범 △조직 전문화·세분화로 부서간 칸막이가 심화되고 업무 효율성은 저하

– **(높아진 책임성)**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2년차를 맞아 개혁성과에 대한 세밀하고 냉엄한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

– 정책추진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완성도를 제고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성과 균질성을 확보하고 국민 체감성과 창출 견인

○ 근속 단축(10→8년)에 따라 급증*한 경감급 인력운용방안 정비와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승진제도 개선 등 인사제도 개선 필요

* '21末 14,815명→'22. 2월 20,161명으로 '30년까지 약 3만명 이상 증가 예상

– 주요 직위별 필요 역량을 갖춘 대상자를 보임하는 '보직자격제' 추진 검토, '승진심사 동료평가제도' 규정의 내실화 등 대책 마련

○ 사회 전반의 세대·가치관 변화와 다양한 치안수요 발생에 따른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균형있는 인사운영의 필요성이 증가

– 현장 중심의 포상 기조를 유지하고 인사정책 현장자문단*을 확대하는 한편, 성별 균형인사를 위한 여성경찰관 비율(15%) 달성

* 청년 경찰관 의견수렴을 위한 「청년경찰 인사자문 분과 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트렌드 확산으로 원격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방식* 등장

※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규모】 :** '19년1,630억$, '20년2,270억$, '21년2,680억$로 성장해 2025년에는 4040억달러에 달할 것(홀론아이큐)

* 메타버스, 하이브리드 러닝(동일한 과정을 일부는 집합, 일부는 이러닝으로 동시에 수강), 확장현실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 형태

○ 경찰관 중 MZ 세대가 확대('20년 기준 30대 이하 42.8%)되는 반면, 베이비부머세대는 정년을 맞아 퇴직하는 등 조직 구성원 변화

※ 최근 3년간 정년퇴직 인원 : '18년1,596명 →'19년1,389명 →'20년1,511명

–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설계 전 세대별 특성 및 필요한 교육* 등의 차이를 이해하고 반영할 필요

* (예) 베이비부머, X세대 : 퇴직준비 교육, MZ세대 : 조직 적응 및 경력개발 교육

○ 교육훈련혁신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기관 및 현장과의 소통으로 근무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제공 노력

* 학계·민간·공공부문 전문가 10인(위원장 서울대 임철일 교수)으로 구성, 경찰청 교육정책에 대한 '점검-자문-환류' 및 최신 트렌드 공유 등 담당

(4) 참고자료

○ 2021년 경찰교육훈련기본계획

○ 2020년 ATD TK(美 교육기술 컨퍼런스) 토의자료

○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5 교육산업의 미래, 기술 혁신과 플랫폼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38 정책추진 프로세스 강화로 가시적 성과창출 견인

□ 추진배경

○ 올해는 '국민체감 경찰개혁' 2년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요구되는 가운데, 상반기 정부출범 이후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정책조정력*을 발휘, 다각적 치안전략을 발굴해야 할 시점

* △3원체제 출범 △조직 전문화·세분화로 부서간 칸막이가 심화되고 업무 효율성은 저하

– **(높아진 책임성)**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2년차를 맞아 개혁성과에 대한 세밀하고 냉엄한 평가가 이루어질 전망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정책추진 프로세스(설계–실행–평가–환류) 전반에 대한 점검과 완성도를 제고, 체감성과 창출 견인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1. 정책추진 방향성 확립 및 체계적 관리 강화 】

○ **<방향성 확립>** △주요업무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 △치안종합성과평가계획 간 정책목표를 통일하고 실행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

► **(주요업무계획)**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정책목표로 설정
► **(성과관리계획)** 정책목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성과지표, 추진계획 수립
► **(치안성과평가)** 비전·목표 달성을 위해 全 관서·부서·역량과 성과 평가
► **(정부혁신·적극행정)** 정부 추진전략과 방향을 분석, 자체 기본계획 수립

○ **<모니터링 강화>** 주요정책 시행 전후 내·외부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결과를 제공, 환류 지원을 통한 정책품질 개선 도모

► **(정기조사)** △치안고객만족도 △체감안전도 △직무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치안정책에 반영,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경찰활동 뒷받침
► **(정책모니터링)** 국·관 주요정책 시행 전후 내·외부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결과를 제공, 환류 지원을 통한 정책품질 개선 도모
► **(신뢰도 제고)** 현장 경찰관들의 직무만족도 세부 평가항목 개선 등

【 2. 인력·조직 등의 효율적 운용으로 민생치안 역량 강화 】

○ **<인력 증원>** 정부 공약인 경찰 2만명 증원 달성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17,916명 증원 포함 총 경찰인력은 14만명에 육박

※ 코로나19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공무원 전체 증원 규모 하향 조정, '22년 정부안 기준 경찰인력 증원도 공무원 전체 증원규모인 5,818명의 34.8%(2,030명) 수준

< 현 정부 연차별 경찰인력 증원 현황(명) >

구분	계획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20,000	1,870	2,120	4,582	3,991	3,323	2,030
	누적 (비율)	1,870 (9.4%)	3,990 (20.0%)	8,572 (42.9%)	12,563 (62.8%)	15,886 (79.4%)	17,916 (89.6%)

– 법·제도 개정으로 인한 경찰의 역할 변화*를 토대로 인력 충원 필요성을 적극 주장, **민생치안 및 수사역량 유지를 지원**

*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권한 확대 △스토킹 처벌법 시행 등 입법에 따른 수사책임성 강화 △아동학대·실종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치안 수요 증가

○ **<인력 재배치>** 치안환경 변화·신규업무 발생 등 치안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경찰인력이 시급한 곳에 재배치, 조직 운영의 효율성 증진

○ 책임수사·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과제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기능·지역간 업무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원 조정 적극 추진

– 특히, 지나친 업무 분화로 인한 부서 간 칸막이 현상·협업 저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능 통합·사무조정을 통한 재배치도 추진

※ △생활범죄수사팀 폐지 △경찰서 수사팀 체제 개편 등 과제 발굴

○ **<직급구조 현실화>** 계급별 적정수준의 정원을 확보하여 하위직에 편중된 첨탑형 직급구조를 개선, 적정한 책임범위 확보

► **(직급구조 개선)** 직급구조 개선의 논리인 타 부처와의 직급별 비율 비교에서 탈피, **3원 체제 별 직급구조 개선 전략 다변화**

► **(복수직급제 도입) 정책부서의 주요 직위에 상위계급 보임**을 가능토록 하여 열악한 직급구조 해소에 기여하고 치안역량의 질적 향상 도모

※ '96년 대부분의 기관으로 확대, 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 사무직 등 일반직 공안직군과 지휘통솔체계가 엄격한 경호직도 도입·운영 중 / 반면, 경찰은 현재 복수직급제 도입 근거 법령이 없는 상황으로 경찰법 개정 추진중

【 3. 제도・인프라 지원을 통한 현장대응력 뒷받침 】

○ **<매뉴얼 개편>** 現 매뉴얼은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주요 사건 이슈 발생시 책임 판단의 자료로 활용되어 현장의 업무부담*으로 작용

* 현장자문단 의견 : ①현실성이 부족하고 복잡하여 숙지가 어렵고 활용도가 떨어짐 ②경찰관의 현장 대응 관련 각종 조사시 적절성 판단기준이 되어 오히려 '족쇄'로 작용

– 매뉴얼을 '상황대응・관리' 위주로 간결・명확하게 개편*, 현장 적용에 필요한 내용(법령・판례・Q&A 등)은 교육자료(가이드북 형태)로 제작・관리

* TF 구성(담당자, 교수요원, 현장전문가), 표준매뉴얼 양식을 제작・활용

○ **<적극행정>** 각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

– '적극행정'이 현장 대응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보호・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를 활성화하여 경찰활동의 체질개선 지원

► **(보호・지원 제도)** △현장법률 365 △진정・민원 시 송무관 지원 △손실보장 제도 △경찰법률보험 △공무원 책임보험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 4. 조직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중장기 비전 마련 】

○ 치안문제 해결에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보, 미래 치안환경에 대비한 중장기적 관점의 '경찰 미래비전 위원회*' 발족

* (미래전략TF) △미래사회 전망 △치안전략 방향 설정 △전략과제 검토 △조직・인력 재설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장기적 시각의 치안비전 수립・운영('21. 3월~)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은 33개의 세부시행과제 중 약33.3%에 해당하는 11개의 과제(주무 7개, 협업 4개)를 담당 및 추진

구 분	세부 시행과제
주무 (7개)	► 복합갈등 관리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경찰 미래비전 실현체계 구축, 미래준비 위원회 등 설립, 인공지능 도입과 행정의 자동화, 직위 분류제와 Agile형 조직관리, 본청은 정책기획・조정사무 중심으로, 시・도청은 실무형 조직으로
협업 (4개)	►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치안행정 기본토대 구축, 소통・협업을 위한 직무가치 혁신, 업무중심 인사운영체계 마련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치안종합성과평가 계획 수립(하달)	2월	성과
	◦ ’22년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수립	2월	기획
	◦ ’23년 상반기 경찰청 직제 등 개정	2월	조직
	◦ 미래준비위원회 등 설립(미래비전)	2월	기획
	◦ ’23년 경찰청 소요정원안 확정(행안부 제출)	3월	조직
2/4분기	◦ 경찰청 정부혁신·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4월	기획
	◦ 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중간평가 실시	6월	성과
3/4분기	◦ 성과 우수관서·부서 선발	8월	성과
	◦ 국정과제 성과지표·세부이행계획 수립	8월	성과
	◦ 시·도 경찰청 사무분장규칙 개정	9월	조직
	◦ ’22년 하반기 경찰청 직제 등 개정	9월	조직
4/4분기	◦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10월	국회
	◦ 경찰청 자체평가·치안종합성과평가 최종평가 실시	11월	성과
	◦ 국정과제 실적보고서 작성·발표(국무조정실)	12월	성과
	◦ 경찰백서·통계연보 발간·배포	12월	성과
연중	◦ 치안환경 변화를 반영한 경찰인력 재배치	연중	조직
	◦ 임시회 등 국회 일정 시 업무보고·현안질의 대응 등	연중	국회
	◦ VIP·총리·지시사항 관리·조치결과 보고	연중	기획
	◦ 경찰청 성과보고회 개최	반기별	기획
	◦ 경찰청 정부혁신 경진대회 개최	반기별	기획
	◦ 국정과제·경찰청 정책과제 추진사항 점검	분기별	성과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경찰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민생치안 확립과 직결되는 **국민**과, 인력증원・재배치 평가 등의 대상인 현장 경찰관

○ **(이해관계집단)** 정책추진 과정에서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본청 각 기능, 시・도경찰청 및 他 부처・국회 등 유관기관

□ 기대효과

○ 경찰활동 全 과정(예방・법집행・수사・회복)에서 정책의 작동성과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법집행 수준을 향상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국정과제 (주요 정책과제) 全 성과지표 달성도 (40%)	89%	92%	100%	100%	금년은 現 정부 임기 첫해임에 따라 국정과제의 '성과달성도・정책효과성' 제고 및 각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 설정(국무조정실)이 예상되어 달성난이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지난해 100% 목표 달성으로 성과 임계치에 도달하였지만, 경찰청의 국정과제(주요 정책과제)는 '가장 안전한 나라' 조성과 밀접한 부분임을 인지, 100% 목표 달성을 제시함으로써 역대 최고치 목표 설정 및 2년 연속 국정과제(주요 정책과제) 성과지표 100% 달성을 추진 ※ 올해는 국정과제를 포함하며 부처별 역점 추진하는 '주요정책과제'를 국정과제에 대체하여 연말 정부 업무평가 진행 계획	목표 달성한 지표 개수 ÷ 국정과제 全성과지표 × 100(%)	정부업무평가 성과지표 보고서 (작성 시 근거자료와 함께 국조실에 제출)
정책모니터링 활성화 (30%)	50	57	63	58건	경찰청 주요정책 시행 전・후 내외부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 활성화 '22년 모니터센터 총원(11명)은 3년 평균(17명) 대비 35% 급감하여, 모니터링 실적 또한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3년 평균 실적치(56건) 대비, 약 4% 상향한 58건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설정	정책모니터링 운영 횟수	정책모니터링 결과
<신규> 경찰 매뉴얼 관리체계 개선 (30%) ※ 신규·개정·폐지 건수	25	31	24	33건	각종 경찰 매뉴얼을 '행정규칙' 성격의 매뉴얼과 '업무가이드' 성격의 교육자료로 구분, 매뉴얼은 간결·명확히 하고 교육자료는 더욱 체계화하는 등 현장 맞춤형으로 재정비하여, 현장에서 적시에 활용가능하여 '현장 대응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개선하고자 평균 27보다 20% 상향된 33건으로 목표치 설정	국·관별 매뉴얼 등록, 개정, 폐지 건수	매뉴얼 관리위원회 의결 결과

39 현장 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 추진배경

○ 자치경찰제·책임수사제 및 경감인력 증가 등 경찰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투명한 경찰인사제도 마련

○ 현장의 업무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다양한 포상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자긍심 제고 및 사기진작 도모

○ 조직 내외의 성평등 가치 확산 및 다양한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경찰관 구성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인사제도>** △경감 근속 단축(10→8년)에 따른 인력운용방안 정비 △승진제도의 공정·투명성 제고 △적극적 균형인사 실현 중점 추진

▸ **(보직인사)** △경감급 인력운용안 마련·정비 △보직자격제 도입 추진
▸ **(승진제도)** △시험승진제도 개선 검토 △승진심사 동료평가제도 규정화
▸ **(균형인사)** △청년경찰 인사정책 현장자문단 운영 △기피·격무부서 보직우대 방안 등

○ **<현장 우수사례 포상>** 치안 현장의 업무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포상하는 현장 중심의 포상제도 운영 기조 유지

– 특히, △칭찬플랫폼 운영 활성화 △베스트 팀장 등 우수 현장활동 사례 적극 발굴 포상, 활력있는 현장 업무 분위기 조성

○ **<인적구성의 성별 균형>** 다양한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충원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성경찰관 채용비율 설계, 22년 15% 달성 추진

* '19년 12.6%(달성)→'20년 13.4%(달성)→'21년 14.2%(달성)→'22년 15.0%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충원계획 수립 시 여성경찰관 채용인원 목표치 반영	'22.1월	
	'22년 특별승진·승급 및 경찰청장 표창 배정계획 수립	'22.2월	
	1차 채용공고 시 시·도청별 균형인사를 위한 여성경찰관 인원 배정	'22.2월	
	인사정책 현장자문단 운영계획 수립 및 재정비	'22.3월	
	칭찬플랫폼 포상 실시	매주	
2/4분기	인사정책 현장자문단 대상 인사제도 개선 의견수렴·논의	'22.5월	
	기능별·지역별 여성경찰관 비율 점검	'22.6월	
	칭찬플랫폼 포상 실시	매주	
3/4분기	2차 채용공고 시 시·도청별 균형인사를 위한 여성경찰관 인원 배정	'22.7월	
	'22년 경찰의 날 정기표창 배정계획 수립	'22.9월	
	칭찬플랫폼 포상 실시	매주	
4/4분기	'22년 연말 정기표창 배정계획 수립	'22.11월	
	'22년 인사제도 개혁 추진결과 평가·분석	'22.11월	
	칭찬플랫폼 포상 실시	매주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인사·포상제도는 全 직원의 직무만족도·업무성과에 직접적 영향, 이는 결국 치안역량과도 직결되므로 국민 또한 간접적 수혜자

○ **<이해관계집단>** 인사혁신처·여성가족부 등 정책 관련 부처는 물론, 인사 제도에 영향을 받는 全 직원 및 경찰관 지망생 등

□ 기대효과

○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제대로 평가·격려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직 전반의 치안역량 향상 견인

○ 성별 균형인사를 통해 조직 내 실질적 성평등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맞춰 여성경찰관의 역할 재정립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인사직무만족도 (40%)	81.5	80.6	80.6	81.0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80.9보다 높은 81점으로 목표설정** ※ '18년도 80.5 / '17년도 80.7	인사관리 6개 항목 평균값	고객만족센터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결과
현장우수사례 표창비율 (30%)	41.5%	43.8%	47.5%	50.9%	**3년 실적치 상승률 평균(추세치)를 반영하여 50.7% 달성을 목표로 설정** ※ 현장 표창 비율은 '18년도까지 30% 후반대를 유지하여 오다가 '19년부터 현장 사기진작을 위해 칭찬플랫폼 운영 등을 통하여 꾸준히 확대하는 중	경찰청장 표창 발부 대비 현장 우수사례 포상 비율	경찰청장 표창장 발부 통계
인적구성의 성별 균형 (30%)	12.6%	13.4%	14.2%	15.0%	**'22년까지 여성 경찰관 비율 15%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설정, 추진중** ※ 향후 통합모집 등 추진하여 여성경찰관 비율에 그치지 않고 입체적으로 성별 균형 채용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여성경찰관 비율	인사시스템 통계 및 '22년 충원계획

40 입법대응과 현장지원을 강화, 국민 안전 및 당당한 법집행 실현

□ 추진배경

○ 경찰개혁 2년차를 맞아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변화된 치안환경을 반영하며, 보다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령·규칙 제·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확충 긴요

○ '22년 정부 규제혁신 기조에 동참하고, 경찰업무 특성을 고려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 부담·불편 해소 등에 기여할 필요

○ 당당한 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장법률 365센터」 △「경찰 법률보험」 등 조직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일선 현장의 요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및 '국정·개혁과제' 등과 연계된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 자체 법제심사부터 국회 심의까지 입법대응 총괄

또한, 경찰에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他 부처 법안도 해당 부처의 법안 제·개정 논의 시부터 국회 입법과정까지 적극 대응

► 22년도 경찰청 법률안 입법계획에 따라 △경찰관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후보자 전사·순직 시 2계급 승진이 가능하도록 「경찰공무원법」 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 갱신제 도입 등 「총포화약법」 개정 추진 등

►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선정 중인 가운데, 수사권 재조정 이슈 등 경찰 관련 국정과제 구체화 시 입법대응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 대응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 등 '22년 경찰청 규제개혁과제 11건의 100% 달성을 목표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규제개혁 추진

○ 지난해 「법무지식정보시스템」 고도화(폴리폰 연동, 업무자료 발굴·등재 등)를 진행한 가운데, 시스템 품질 향상 및 내실화 지속 추진

► **(서비스 불편 최소화)** △검색기능 저하 요인 제거 △사용자 의견 수렴

► **(운영 고도화)** 지식 카테고리별 국·관, 시·도청 담당자 지정으로 운영 고도화

○ 당당한 경찰권 행사를 위한 지원체계(각종 보험 및 「현장법률365센터」 운영 등) 강화 및 소송수행자 역량 향상 등을 통한 소송대응력 제고

► **(지원체계)** 「경찰 법률보험」 등 재계약(5월) 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확대로 현장 경찰관의 활용성 제고

► **(소송대응)** 반기별로 시·도청별 소송수행자 대상으로 **송무교육** 실시 및 **국가·행정소송 현황 및 주요 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해 소송대응력 제고

그 밖에 지난 2.3. 시행된 경직법상 형의 감면 규정 안착을 위해 현장경찰관 대상 설명자료 배포*·입법취지 교육(1.24~) 등 지속

* 고의·중과실 등 감면요건에 대해 학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설명자료 수시 보완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설명자료 배포(9문 9답)	1월	완료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안내	2월	완료
	'현장법률 365센터' 운영성과 분석	2월	
	연간 경찰위원회 상정안 심사 수요조사	2월	
	경찰청 기존규제 정비계획 수립	3월	
	'2022 경찰청 소관 법령집' 발간 및 배포	3월	
	국가 송무과정 법무연수원 위탁 교육 실시(상반기, 비대면)	3월	
2/4분기	'22년 정부규제입증책임제 정비계획 수립	4월	
	각 시·도청 송무교육 계획수립	4월	
	손실보상 심사자료 및 결과 보고	5월	
	경찰청 소관 규제 법령 일제정비	5월	
	소송지원단 및 법률보험 추진단 정기총회 개최	5월	
	'경찰 법률보험' 재계약 추진	5월	
	법무지식정보시스템 관리계획 수립	6월	
	'경찰 법률보험' 제도 안내	6월	
3/4분기	'2022 법제업무 매뉴얼' 간행 및 배포	7월	
	상반기 국가·행정소송 현황 분석	7월	
	규제혁신 발굴과제 중간점검	8월	
	일몰규제 일제 점검 및 개정	9월	
	국가 송무과정 법무연수원 위탁 교육 실시(하반기, 비대면)	9월	
4/4분기	경찰청 법제담당자 교육 실시	10월	
	규제개혁 국조실 최종평가 대비 자체 예비 평가	10월	
	손실보상 심사자료 및 결과 보고	11월	
	하반기 국가·행정소송 상황 분석	12월	
	최종보고서 제출 및 '22년 규제혁신 실적보고회 발표	12월	

※ 현장법률 365센터 문답집 발간 (일정 미정)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경찰과 경찰관 개인, 정책부서 및 규제개혁 관련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국회 및 관계부처, 국회 법안심사 관련 이해당사자 등

□ 기대효과

○ 국민 중심의 경찰 법집행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입법대응 노력도 <30%>	신규	28%	64.4%	72.09%	’22년 경찰청 소관 법령·행정규칙 제·개정 심사 수요조사(43건) 대비 상회 회신율 72.09%(74건)을 목표치로 설정	{(심사 회신건수/심사 수요조사 건수) × 100} - 100	온나라 공문 기준
규제혁신과제 달성도 <20%>	84%	92%	100%	100%	“하단 참조”	(달성과제 / 규제혁신 선정과제) × 100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평가
통합 법률 및 소송 지원체계 만족도 <25%>	77.1	79.5	80.2	81.8	통합 법률 및 소송 지원체계의 도전적 수치인 ’22년 추세치(81.8) 81.8점을 목표치로 설정	“하단 참조”	경찰청 고객만족센터 설문조사
현장법률365 센터 대응 노력도 <25%>	96.7	99.1	99.2	100%	“하단 참조”	질의사안 중 답변건수 / 질의건수 × 100	KICS 시스템 통계

① 입법대응 노력도【목표치 72.09% / 가중치 : 30점】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법치행정의 원칙상 주요 치안정책 시행을 위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 이에 적극적인 입법 대응을 통해 원활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법령 제·개정 시 위헌·위법 여부 및 체계 정당성, 인권 침해 등 세밀한 법제 심사 필요

· 목표치 산출 근거

- 상회 회신율 산식: {(심사 회신건수 / 심사 수요조사 건수) × 100} - 100
- ’21년 수요조사 건수 대비 심사회신 건수

연도	수요조사 건수	목표 심사회신 건수	실제 심사회신 건수	목표 수요조사 대비 상회 회신율	실제 수요조사 대비 상회 회신율
’21년	59	77	97	30.8%	64.4%

· 목표치 수준 및 적절성 여부

- 목표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상 ‘上’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실적치 대비 10% 이상인 72.09%를 목표치로 설정(’22년도 경찰청 소관 법령·규칙 재·개정 심사 수요조사 건수인 43건 대비 심사 회신건수를 74건 이상으로 설정)
- ’21년도에는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해 경찰청 소관 법령·규칙 제·개정이 활발하게 이뤄져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가운데, ’22년에는 대선(3월)·지방선거(6월) 등으로 입법활동 감소가 예상되는 등 녹록지 않은 여건이지만 적극적인 업무수행 관점에서 입법과제를 발굴하여 목표치 달성에 주력할 방침

② 규제혁신과제 달성도【목표치 100% / 가중치 : 20점】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지원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혁신 필요

· **목표치 산출 근거**

- 국무조정실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인 경찰청 소관 규제혁신 과제 11건에 대해 달성율 100%를 목표치로 설정(다만,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검토 중으로, 검토과정에서 경찰청 과제 변경가능성 존재)

· **목표치 수준 및 적절성 여부**

- 규제혁신과제 관련 '19년 84%, '20년 92%, '21년 100%를 달성한 가운데 전년과 동일하게 100% 달성을 목표로 잡았으며, 타 지표에 비해 외부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전년도 실적을 고려해 올해도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③ 통합 법률 및 소송지원 체계 만족도【목표치 81.8점 / 가중치 : 25점】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현장법률 365센터', '공무원책임보험·경찰법률보험 등 소송지원제도', '소송수행 지원' 등 현장경찰관의 당당한 법집행을 위해 적극적·실질적 지원 활동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원활동별 만족도의 평균을 성과지표로 선정

· **측정 산식 (지원활동별 만족도의 평균)**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점수	0	25	50	75	100

· **조사 대상 : 법률 및 소송지원 제도 이용자**(일반직 공무원 등 포함)

· **목표치 산출 근거**

- 만족도는 최근 3년간 계속 상승세(77.1→79.5→80.2)를 보인 가운데, 목표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상 '上'을 기준으로 추세치 이상을 적용, 81.8점을 목표치로 설정

※ 참고 : 임계치 산정

지원기능에 대한 만족도 중 최대치인 경찰장비 만족도 점수 83.6점을 임계치로 봄

평균 (직무만족도 전체평균 포함)	경무행정 지원업무 만족도	경찰장비 만족도	정보화 업무 서비스 만족도	직무만족도			
				전체 평균	인사·성과관리	복지	교육
81.53	83.0	83.6	83.1	82.1	80.45	77.25	81.2

④ 현장법률 365센터 대응 노력도【목표치 100% / 가중치 : 25점】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현장에서 법집행의 과오를 줄이고 당당한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법률 365센터 대응노력 측정 필요

· **측정산식**

- KICS(형사사법전자화시스템) 內 현장법률365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한 질의 대비 답변율(산식: 성과기간 질의건수 중 답변건수 / 성과기간 질의건수 × 100)

· **목표치 산출 근거**

- 최근 3년간 상승세(96.7→99.1→99.2)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증가율이 0.1%p인 점을 고려할 때 목표치를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대응 노력도 100%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41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 추진배경

○ 국민의 봉사자로서 올바른 공직관과 인권 가치를 내재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법집행 담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 필요

○ 채용 단계에서부터 잠재력과 도덕성, 현장대응력을 갖춘 우수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제도 개선 필요

○ 관련 법령

법률	대통령령	주요 행정규칙
경찰공무원법	· 경찰공무원 임용령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교육 운영체계 혁신, 전문가 육성을 통한 선제적 · 예방적 경찰활동 지원]

○ 역량기반교육 설계로 체계적 교육훈련의 기반 마련

– '22년 상반기에 국민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지역경찰 대상 역량기반 교육 우선 도입(「지역·교통경찰 역량기반 교육 개발」 연구용역, ~'22. 4월)

※ 지역경찰 60명 대상 현장관찰·심층면담 실시, 경찰교육훈련 혁신 자문단(위원장 서울대 임철일 교수 등 10명) 및 현장경찰자문단(42명)을 통한 역량모델 타당도 등 검증

– 교육설계 전문가 신규채용*, 全 기능 교육과정 분석 및 리모델링

* 역량기반 교육설계를 위한 총액인건비 임기제공무원 정원 확보(7급 2명, '22.4월~'23년)

○ '보직인증제' 도입으로 교육-인사 연계, 경력관리 기준제시

– 직무·직급·수준별 맞춤형 교육 개설, 보직 공모시 지정교육 이수를 필수자격 요건화 → "先 직무교육 後 보직인사" 체계 확립

※ 역량기반교육 연구용역과 연계, '22년 하반기 지역경찰관서장 및 팀장 인사부터 시범 시행

– 보직·직급별 역량에 따른 교육·자격·보직 경로를 설계하고, △부서원 육성 방안 교육('22년 下 경감 이상 기본교육 반영) △경력개발 워크숍 △전문가 스토리텔링 등으로 경력개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전문가 지향문화 확산

○ 교수자 및 교육행정 담당자 역량 강화로 교육의 질 담보

– HRD 전문기관 협업, 교육기관 교수요원 및 동료강사 대상 ▵교수설계 ▵교안제작 ▵평가설계 ▵교수기법 등 컨설팅·교육 실시('22년 상반기)

※ 강사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예산 신규 편성('22년, 5억 600만원)

–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교육담당자 직무분석을 통한 매뉴얼 개발, 경찰인재원 교육과정 시범운영 후 정규과정 편성 등 추진('22년 상반기)

○ 중·장기 경찰 교육훈련 정책의 방향성 점검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 「경찰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5월限), '경찰 교육훈련 정책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 및 조직·운영 등 규정,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마련

– 공동위원장과 경찰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경찰 교육훈련 기본정책 ▵경찰 교육훈련 개선방안 ▵예산사업 등 현안 논의

※ 공동위원장(경찰청 차장, 민간위원 중 호선) 포함 16인 이내, 반기별 회의 개최

["일하며 학습" 하는 일터학습 인프라 구축, 경찰관 현장대응력 강화]

○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교육훈련 개발

– 2년 차 사업추진 중*으로 ▵훈련 시나리오 및 콘텐츠 4종 ▵실감형 장비·음성기술 도입 ▵2개 시·도청에 훈련장(테스트베드) 구축

* '21년부터 5년간 추진(훈련장 구축 100억 등 총 240억), ▵테러 ▵대형교통사고 ▵대형재난 등 기존 교육환경에서 체험이 어려운 분야 및 현장대응 중심으로 설계하여 반복 훈련환경 조성

– 1년 차 개발 프로그램인 "대형교통사고 현장대응" 과정 테스트('22. 4월) 및 보완을 거쳐 지역경찰·교통 근무자 대상 교육 진행

○ 비대면 학습플랫폼 확충, 교육 편의성 및 적시성 제고

– **(실시간 원격교육)** 4,000여 명 동시접속 가능한 자체 플랫폼(경찰업무 특성에 따른 보안문제 해결) 구축, 교육기회 확대(예산 23.4억 편성, '22년 완료)

– **(경찰 지식창고 구축)** 인트라넷에 산재한 학습·지식 자료 일원화, 매뉴얼 등 경찰조직의 노하우 축적 → 활용 → 지식공유 → 새로운 지식 개발의 순환구조 정착('22년 ISP 진행 및 사업예산 확보 추진)

○ 현장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신임 및 현장경찰) 실시 및 정규 편성

– ’21. 11월 인천 논현서 흉기난동 사건 관련 지역경찰 등 현장부서 경찰관 7만여 명 대상 특별교육 완료(신임 1.1만, 재직자 6만/ ~’22. 2월)

※ ▵(신임) 경찰정신, 물리력 대응훈련 2일(16h) ▵(재직자) 테이저건 실사 등 1일(2h)

–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 보완* 후 ▵신임경찰 현장대응력 향상과정(5일) ▵테이저건 훈련(연2회, 회당 1발) 정례화

* KICS 작성 등 지역경찰 실무(신임) 및 테이저 카트리지 교체 팀단위 대응훈련(테이저훈련) 보강

○ 경찰관 직장훈련* 개선을 통한 현장대응력 강화

* 법정·직무교육 등 직장교육, 사격훈련, 체력검정, 무도(물리력 대응훈련)로 구성되며 근무평정 반영

– **(직장교육)** 책임치안 구현을 위해 경찰서 자체 교육시간 확대(기존 年 2회→4회), ▵기능 합동 FTX ▵현장사례 공유 ▵장구사용 교육 등 편성

※ 경찰서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예산(23억) ’23년 중기사업계획 반영, 확보 추진

– **(무도)**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등 개정, 기존 무도훈련을 ‘물리력 대응훈련’으로 개편(「경찰물리력 행사규칙(’19. 11월 제정)」반영)

※ 현장경찰관 및 교육기관 교수요원 대상 3차 의견수렴(총 67명 참여), 교안제작 워크숍(3월)

세부 추진 내용

► **(팀단위 집중훈련)** 훈련시간 집약, 팀 단위 훈련 → 현장활용도 및 팀 역량 제고
※ <기존> 월 1회 1시간, 개인별 무도훈련 → **<개선> 분기별 1회 3시간(연간 12시간), 팀 단위 물리력 대응훈련**

► **(테이저건 훈련)** 물리력 대응훈련에 테이저건 훈련 편성 및 실사(實射) 확대(연 1회 → 2회)

► **(전문교관 양성)** 경찰서 훈련을 담당할 동료 강사(’22년 1,000명) 양성 추진
※ 경찰인재원 교수요원이 사도청 지원자를 대상으로 ‘물리력 행사기준 및 대응’, ‘테이저건 사용법’ 등 전수교육

► **(체력단련 지원)** 태권도·유도·검도 등 5개 무도협회와 MOU 등 개인별 체력단련을 위한 여건 마련

– **(사격)** ‘평가’ 중심 사격훈련을 ‘현장대응’ 중심*으로 개선, ’22년 상반기 「외근요원 특별사격」 부터 시범운영** 추진

* 정례사격 시 ▵총기숙달훈련(파지·격발 등 주요동작 평가) ▵현장대응사격(사거리 다변화, 급사사격 등) ▵사거리 조정(현장사격 통계에 맞춰 15→10m) ▵외근 개인총기 활용 등

** 현장자문단·직장협의회·동료강사 등 2,500여명 대상 서면 의견수렴(3월중) → 현장 간담회(3월말) → 시범운영(’22. 상반기부터) → 全 경찰관 의견수렴을 통해 미비점 보완

○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학습모임 지원·관리

– 「문제 해결형 학습모임」 육성을 위해 ‘연구과제 선정’부터 ‘성과물 도출’까지 단계별로 지원(연구비, 전문가 워크숍, 상시학습 인정, 성과공유 등)

○ 시·도 경찰청 교육센터 인프라 확충, 지역 치안 맞춤형 과정 운영

– 지역별 범죄통계 등을 바탕으로 교육 필요분야(지역교통, 주민생활 안전, 지역경비 등)를 선정·설계하고, 교육센터 전문과정으로 운영

– ’22년 시·도청별 원격교육 전용강의실 및 집합강의실(3개청)을 시작으로 연차별 중장기 계획을 통해 인프라 확대 지속(’25년 限)

[경찰윤리 확립 등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법집행 정당성 확보를 위한 「물리력 행사 前 커뮤니케이션 교육」 신설

– ▵절차적 정의 ▵법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지지·신뢰 확보 ▵공감받는 대화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감받는 경찰’ 과정 정규편성*

* 경찰인재원 과정(2주, 5회, 총 90명 교육), 시·도 경찰청 교육센터(2일, 시·도 경찰청 수요에 따름)

– 중간관리자를 컨설턴트로 양성, 관서 경찰활동에 대한 진단·개선방안 도출 및 내재화 교육 진행 → 공감받는 경찰활동 확산

○ 「인권리더십교육센터*」 신설, 경찰윤리 연구·교육 강화

* ▵인권 ▵성인지 ▵리더십 ▵상담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경찰인재원에 설치

– 경찰인재원을 중심으로 4대 교육기관 공동 연구를 통해 표준 교안 마련, 1주 이상 全 과정에 경찰윤리 등 개발된 교과목 필수편성(2h)

※ 윤리적 딜레마 등 구체적 사례를 기반으로 한 참여형 과정 개발, 자연스러운 인식변화 유도

– 센터교육을 통해 인증받은 동료강사가 시·도 경찰청 교육센터 및 경찰서 직장교육 전담, 경찰인권·윤리 등 교육품질 관리

[우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채용제도 개선 및 엄정한 시험관리]

○ 엄정하고 공정한 채용시험 관리로 채용목적에 맞는 인재선발

– 상·하반기 경찰공무원 공채·경채(4,397명) 및 일반직 경채(1회 577명, 2회 미정) 시험 운영을 통해 전문 치안인력 확보

– 시험 과목 변경 및 영어·한국사 검정제 도입에 따른 신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엄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상 문제점 발굴·개선 지속

※ ▵필기시험 시 소지 금지물품 추가 ▵검정제 인증기준 마련 ▵방역지침 변경 대비 등

○ 현장대응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선발을 위한 채용제도 개선

– 남녀통합선발에 따른 순환식 체력시험* 시행 준비 → 구체적 평가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고, 검사 장비 순차 도입('22년 3대 구매)

*'23년 ▵경찰대학생 ▵간부후보생 ▵경찰행정 경력채용 분야 → '26년 전면 도입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 → 체력시험 기준 상향, 면접시험 및 가산점 제도 개선

세부 추진 내용

► **(체력시험)**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등 3개 종목의 체력기준* 상향 조정 및 여성 팔굽혀펴기 자세를 '무릎 뗀' 정자세로 변경, 체력수준 향상 기대

*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은 남녀통합선발에 따라 '20년에 체력기준 상향 조정 및 팔굽혀펴기 자세 변경 完

► **(면접시험)** 경찰윤리의식 및 인성에 대한 내실있는 검증을 위해 면접방식 등 개선

※ ▵심층개별면접 도입 ▵표준면접질문지 개선▵인·적성검사 개선 연구 진행('22년 5,600만원 예산 편성)

► **(가산점)** 경찰직무 활용성에 따른 분야 선정(23개 분야 184개 자격) 및 등급 간 점수 조정

○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채용 홍보

– **(채용박람회 참가)** 국민과 수험생에게 채용정보 제공 및 수험·진로 상담을 통해 경찰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관심 증가

– **(채용제도 홍보)** 채용 관련 변경사항, 수험자료 등을 공지*하고 경찰 관련 학과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기에 충분한 정보 제공

*사이버경찰청 및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경찰 채용 관련 커뮤니티 등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2년 경찰 교육훈련계획 수립	1월	
	2022년 직장교육 운영계획 수립	2월	
	제1차 순경 공개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2월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2월	
	제1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2월	
	상반기 현장강사 워크숍(교육과정 설계 및 교안제작)	2월	
	역량기반 교육설계를 위한 지역경찰관서 대상 FGI 수행	2월	
	제1차 순경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운영	3월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실기시험 운영	3월	
	「물리력 대응훈련」 표준교안 제작 워크숍	3월	
	2022년 체력검정 운영계획 수립	3월	
2/4분기	2022년 현장학습모임 운영계획 수립	4월	

	2022년 사격훈련 운영계획 수립	4월	
	「경찰 교육훈련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칙(가칭)」개정	5월	
	경찰청(본청) 체력검정 실시	5월	
	제1차 순경 공개경쟁채용 합격자 발표	5월	
	지역경찰 역량기반 교육 설계(안) 도출	5월	
	경찰청(본청) 상반기 정례사격 실시	6월	
	제1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발표	6월	
	확장현실(XR) 교육 2년차 개발과정 주제 선정 및 시나리오 개발	6월	
	보직인증제 시행계획 수립	6월	
	교육행정담당자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6월	
3/4분기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발표	7월	
	제2차 순경 공개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7월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7월	
	하반기 현장강사 워크숍(교육과정 설계 및 교안제작)	8월	
	경찰 지식창고 구축을 위한 ISP 진행	8월	
	제2차 순경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운영	8월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9월	
	제2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9월	
	'23년도 국외장기훈련(영어권) 자체 선발 및 추천	9월	
	경찰청(본청) 하반기 정례사격 실시	9월	
4/4분기	경찰청(본청) 체력검정 실시(추가검정)	10월	
	경찰청장기 무도대회(채용 연계) 및 경찰관 무도대회 개최	10월	
	치안산업박람회 등 채용박람회 참석, 홍보	11월	
	2022년 우수 현장학습모임 선정 및 포상	12월	
	비대면 교육플랫폼 구축사업 완료	12월	
	제2차 순경 공개경쟁채용 합격자 발표	12월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발표	12월	
	제2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발표	12월	
	'23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계획 수립	12월	
	시·도 경찰청 교육센터 전용강의실 등 구축 완료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① 경찰청 소속 全 공무원 :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
② 국민 : 경찰관 역량향상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

○ **(이해관계집단)** 경찰공무원 입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 기대효과

○ 우수인재 채용 및 교육훈련을 통해 ▵인권을 수호하고 ▵선제적·예방적 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치안전문가'로서 경찰상 확립

○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현장경찰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향상하고 對국민 치안 만족도 제고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전문경찰양성(Ⅳ-1 일반재정)			
① 우수인재확보 및 능력개발(4135)		118	139
■ 경찰관채용교육(311)		118	13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① 교육 현장활용도 (80%)	신규 90.5 92.9	93.8	○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활용되는지,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시·도청 교육센터 과정 및 사이버교육의 현장활용도 평가 ○ 지표도입 후 실적치가 90점 초과, 정성평가 임계치에 도달한 점을 고려하여 전년 실적 대비 1% 상승한 93.8점을 목표로 설정	(교육센터과정 설문결과 +사이버교육 설문결과) / 2	교육센터 및 사이버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설문조사 프로그램 및 교육포털 활용) 실시
② 인재채용률 (20%)	92.0 92.5 94.8	96.2%	○ 우수인재 선발 및 계획에 따른 필요인력 적시 채용을 통해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 ○ 최근 3년간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추세치는 1.45%이나 도전적으로 전년 실적 대비 1.5% 상승한 96.2%로 목표 설정	(채용인원 / 채용계획인원) × 100	'22년 채용계획에 따른 채용예정인원과 실제 채용인원을 비교, 채용률 산정

성과목표Ⅲ-2 강력한 반부패 정책 등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행정을 구현한다

(1) 주요 내용

○ **<국민 중심 감사활동>** 각종 감사활동 시 외부의 사항이나 타기관 비위 선례를 중점 점검하는 선제적·예방적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반복홍보하여 활성화하며, 청렴도 평가에서 취약분야로 드러난 업무 중심으로 반부패 과제 집중 추진

○ **<예방·진단·교정 중심 감찰활동>** 감찰정보의 수집·분석역량 및 활용도 제고를 중심으로 조직 내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진단·교정' 역할 강화하여,

– 업무몰입을 저해하는 인적·환경적 요인을 제거하는 선제적·사전적 감찰활동을 내실있게 전개하여 '업무중심 조직문화' 정착 뒷받침

○ **<성평등한 경찰정책 및 조직문화 정착>** 성평등한 경찰행정 구현을 위한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및 조직 내 성평등 감수성 내재화 추진

– ▵경찰 성평등 수준 진단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평등 교육 저변 확대 ▵경찰 성범죄 예방체계 강화 등을 통한 대·내외 성평등 가치 제고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강력한 반부패 정책 등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행정을 구현한다**	**조직문화 부문 직무만족도**
관리과제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제도개선 실적 / 적극행정 면책실적 / 경찰 청렴도 측정 결과 /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
	예방·진단·교정 중심 감찰활동으로 건강하고 효율적인 경찰 뒷받침	감찰첩보 수집건수 / 감찰정보 활용도 / 감찰정보 분석문건 제공 실적 /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결과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 / 성평등 교육 정착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조직문화 직무만족도	89.1	86.7	86.2	88.0	조직문화 직무만족도는 '19년 상승 후 하락하였으며, 전 3년도 실적 평균값(87.3)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84.4)을 고려, '22년 목표치는 반등을 목표로 '21년 실적보다 1.8%p 높은 88.0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조직분위기 부문 6개 문항과 성인지 부문 5개 문항 평균)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직무만족도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경찰개혁 2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에 대한 세밀하고 냉엄한 내·외부의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 감사의 패러다임을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 정책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현장 안착을 돕는 선제적 감사활동 필요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한 치안환경에 선제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

○ 청렴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반부패 대책을 추진 중이나,

– 청렴도(권익위 주관)는 전년대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하고, 징계인원은 426명에서 493명으로 67명(15.7%)이 증가

– 이에 따라 정책의 환류·평가, 홍보를 활성화하여 청렴을 경찰 문화로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

○ 각종 비위 또는 의혹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보도 노출로 인한 국민적 비난 가중 등 「예방·진단·교정」 중심 감찰활동에 대한 정책적 성과가 퇴색될 우려 상존

– 취재 및 보도 시 초기에 사안의 경중 고려, 관련 기능·홍보 기능과 합동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하여 오보 및 왜곡보도에 적극 대응

○ 비위사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 내부에서는 '과도한 감찰'이라는 불만이, 외부에서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입장에 따라 감찰행정에 대한 상반된 시각 존재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감찰위원회'·'감찰정보심의회' 등 내·외부 통제시스템을 통해 감찰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유지하고

–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등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여론을 반영하여 공감받는 감찰활동을 지속할 계획

○ 공무원 성범죄 사건, 정부 정책 내 성평등 관점 부족 논란 등 여전히 공공분야에서의 성평등 이행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 지속 확대

‣ **<경찰정책 관련 언론보도>** 기록되지 않는 '젠더폭력'들 112통계서 피해자는 지워졌다.('21.7.12.한겨레) → 경찰통계 내 성별 미분리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조직문화 관련 보도>** 여성경찰 3명 중 1명 "성희롱 경험"...('21.9.26.경향)

– 경찰 성평등 정책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 성평등 거버넌스를 통한 외부 모니터링 등 정책 실효성 확보

(4) 참고자료

○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경찰청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등

○ 경찰청, 「경찰 성평등정책 중장기(2020-2024) 비전 수립 연구」

42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 추진배경

○ **(자체감사)** 경찰개혁 2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에 대한 세밀하고 냉엄한 내·외부의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 감사의 패러다임을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 정책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현장 안착을 돕는 선제적 감사활동 필요

○ **(적극행정)** 정부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근무해 줄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한 치안환경에 선제적,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더욱 절실한 상황

- 이에 경찰청은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완화하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 업무로 인한 과오는 면책·감경 중이며,

- '20년부터 적극행정 면책 심사를 감사담당관실 정책과제 지표로 반영하여 국정과제인 적극행정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

○ **(청렴정책)** 청렴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반부패 대책을 추진 중이나,

- 청렴도(권익위 주관)는 전년대비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하고, 징계인원은 426명에서 493명으로 67명(15.7%)이 증가

- 이에 따라 정책의 환류·평가, 홍보를 활성화하여 청렴을 경찰 문화로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선제적·예방적 감사활동 전개

- 종합·특정감사 시 외부의 반복 지적사항이나 타기관 비위 선례를 중점 항목으로 선정하여 중대 비위로의 발전 가능성을 차단

- 연말연시, 정기인사, 중요 선거 등 취약 시기별 취약 요인을 선정,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중 점검기간 운영

- 지난해 초 아동학대 사건(양천서)을 계기로 최초로 도입해 시범운영했던 「조기경보 시스템*」을 올해는 전국 확대 실시

  * 과오가 반복되는 사례를 분석하여 15개 업무지표를 선정, 해당 지표를 모니터링 하며 이상징후 감지 시 관리자에게 '조기경보' 발령(시도청→경찰서), 사전 대응하는 체계

○ 적극행정 면책 완화 및 사전컨설팅 지원 활성화

- 그 동안 구축해 놓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내부 구성원들에게 반복 홍보하여 적극적인 업무 분위기 조성

- 개인별 별도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업무의 공익성과 부서장·행위자의 적극성을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면책제도 활성화

  ※ 부서장의 소신행정을 상시 모니터링, 적극적 지휘활동에 대한 면책 활성화

○ 반부패 대책 실효성·실행력 제고

- 청렴도 평가에서 취약분야로 나타난 수사, 인사, 계약 분야를 중심으로 반부패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치안종합성과평가에 시도청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반영하여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예) △「사건문의금지」·「사적접촉 통제」 제도 홍보 강화 △내부비리신고 활성화

- 시도청 종합감사 시 감사인력과 반부패점검단이 합동으로 진출, 반부패 정책이 내실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조기경보시스템 전국 확대 시행	’22.1월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홍보	’22.1월	
	감사관실 주관 전국 화상회의 실시	’22.2월	
	반부패협의회 ’22년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22.2월	
	경찰청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	’22.2월	
	경찰청 감사운영계획 수립	’22.3월	
2/4분기	경찰청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종합대책 수립	’22.4월	
	반부패협의회 ’22년도 제2차 정기회의 개최	’22.4월	
	주요정책 이행실태 특정감사	’22.5월	
	지방선거 전후 공직기강 확립 기간 운영	’22.5월	
3/4분기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상황 모니터링	’22.7월	
	반부패협의회 ’22년도 제3차 정기회의 개최	’22.8월	
	시도청 또는 부속기관 종합감사	’22.9월	
4/4분기	반부패협의회 ’22년도 제4차 정기회의 개최	’22.10월	
	시도청 또는 부속기관 종합감사	’22.11월	
	시도청 감사활동 성과지표 평가 및 분석	’22.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및 경찰관 / 이해관계집단 : 경찰관 등 내부직원

□ 기대효과

○ 제도 개선으로 합리적인 치안행정 확립

○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 정착으로 국민편익 증진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국민 신뢰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21	’22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일반재정)			
■ 감사관감찰활동(7133-311)	일반회계	16.4억원	18.1억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2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th></tr>
<tr><th>'19</th><th>'20</th><th>'21</th><th>'22</th></tr>
<tr><td>제도개선
실적(40%)</td><td colspan="3">150 166.5 192</td><td>211</td><td>최근 3년간 실적치가 지속 상승하는 경우로서, 전년 대비 10% 상승한 211점을 목표치로 설정</td><td>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실적
- 산식 : Σ (유형별 배점 × 조치수위별 배점)
< 배 점 >
<table><tr><th colspan="3">개선 유형별</th><th colspan="2">조치 수위별</th></tr><tr><th>법령 제·개정</th><th>자체규정·지침 제·개정</th><th>기타 행정</th><th>개선요구</th><th>권고·통보</th></tr><tr><td>5.0</td><td>3.0</td><td>1.0</td><td>3.0</td><td>1.5</td></tr></table></td><td>감사결과
보고서</td></tr>
<tr><td>적극행정
면책실적(30%)</td><td>57</td><td>109</td><td>162</td><td>178</td><td>'19년부터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으로 실적 상승 중이며,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지속 상승한 지표인 점을 감안, 전년 대비 10% 상승한 178건을 목표치로 설정</td><td>적극행정 면책 심사위원회 개최 건수</td><td>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통계자료</td></tr>
<tr><td>경찰 청렴도
측정
결과(20%)</td><td colspan="3">신설</td><td>76.2</td><td>지난해 권익위가 주관한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청렴도 점수 69.3점을 기록, 이에 전년대비 10% 상승한 76.2점을 목표치로 설정</td><td>경찰 청렴도 설문 조사 결과
(전국 18개 시도청 접촉 민원인 대상 설문)</td><td>청렴도 측정
결과 보고서
(설문조사 결과)</td></tr>
<tr><td>내부비리 신고
활성화(10%)</td><td colspan="3">신설</td><td>51</td><td>최근 3년간 실적치가 지속 상승하는 경우로서, 전년 대비 10% 상승한 51건을 목표치로 설정</td><td>내부비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건수</td><td>내부비리
신고센터
통계자료</td></tr>
</table>

43 예방·진단·교정 중심 감찰활동으로 건강하고 효율적인 경찰 뒷받침

□ 추진배경

○ 그간 감찰활동 전반에 '업무중심', '문제해결' 패러다임을 접목, 관·부서장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상시 진단하고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구조적 문제점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 조직역량의 제고를 촉진하는 역할을 내실있게 수행하면서도 감찰활동에 대한 내부 만족도 또한 대폭 상승(58.0% → 68.5%)시키는 등 유의미한 성과 거양

○ 금년에는 감찰정보의 수집·분석역량 및 활용도 제고를 중심으로 감찰 기능의 조직 내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진단·교정」 역할을 강화하여

– 업무몰입을 저해하는 인적·환경적 요인을 제거하는 선제적·사전적 감찰활동을 내실있게 전개함으로써 '업무중심 조직문화' 정착 뒷받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❶ 감찰정보 수집·분석·활용체계 고도화를 통한 내실있는 정보활동 전개

○ **<정보수집>** 감찰정보 수집·분석범위를 확대하고 정보활동의 실효성·연계성 강화를 통해 유가치 감찰정보 발굴 활성화

– **(분석범위 확대)** 본청 감찰정보부서의 수집·평가 대상 감찰정보를 시도청·경찰서 단위까지 확대*, 보다 현장감 있는 다양한 감찰정보를 지속 확인하고 보완·발전시켜 향후 감찰방향의 단서로 활용

* 그 간은 본청 감찰관 제출첩보와 시도청 주요첩보에 한하여 수집·평가

– **(주기적 테마제공)** 감찰관으로부터 감찰정보를 단순히 제출받는 단방향·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시의적절한 테마를 수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효과적인 유가치 감찰정보 생산·활용

○ **<정보분석>** 수집·제출된 감찰정보의 평가·배당(이첩)에 그치지 않고 감찰정보심의회에서 감찰정보의 보완·발전 가능성을 평가, 향후 유가치한 첩보로 재생산하는 정보분석 역할 강화

– **(비위첩보)** 감찰에 이르지 않는 부패비위 첩보는 담당 감찰관을 지정하여 관련 동향을 추가로 지속 확인하고 필요 시 추후 재심사

– **(제도개선 첩보)** 보완·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담당 감찰관 지정 또는 감찰정보 테마 활용 등을 통해 발전적 재생산

○ **<관리방안>** 분석된 감찰정보를 수요에 따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주기적인 평가·포상을 통해 내실있는 감찰정보 생산 뒷받침

– **(정보활용)** 분석된 감찰정보는 활용목적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 보고 ▵경찰관서장 참고자료 전파 ▵소관기능 통보 ▵청문기능 하달 ▵대상자 통보(사전경고)* 등 다각적 활용

※ 분석내용 및 후속조치 이행실태 등을 토대로 필요 시 특별점검 추진

[사전경고] 즉시감찰에 이르지 않는 감찰정보 중 부적절 행태의 선제적 차단이 필요한 경우 감찰정보심의회를 거쳐 대상자에게 관련 사항 통보* 조치, 교정효과 기대

* 감찰정보를 토대로 동향을 지속 확인할 예정이며 유사한 부적절 행태 반복 시 즉시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상자 통보 후 관련 기록 유지관리

– **(평가·포상)** 우수첩보 제출자에 대한 승급·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포상시기 또한 '연 1회'에서 '분기별(연 4회)'로 확대하고 시도청 감찰활동 평가(의무위반 예방 노력도)에도 반영 추진

❷ 업무중심·문제해결형 감찰활동으로 직무전념 분위기 조성

○ 관·부서장의 책임성 제고와 원인진단을 통한 체계적 대응 지속 추진

– 직무비위 발생 시 관·부서장이 제 역할을 다하였는지 확인*하는 한편, 관·부서장 업무추진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추진

* 비위 은폐·축소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중 책임 부과

– 각종 점검 시에는 적발뿐만 아니라 현장여론 청취 등을 통해 인·물적 취약요인 등 업무수행 저해요인 발굴 중심의 활동 병행

※ 국민들은 경찰의 업무 소극·지연처리에도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만큼 업무수행 저해요인 제거를 통한 적극행정 토대 마련 노력 긴요

○ 음주운전 등 반복되는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원인진단→예방활동→사후조치’ 등 단계별 대응을 강화, 全 관·부서의 동참을 유도

❸ 직무범죄 전담 수사체계 운영 활성화를 통한 부패비위 억지력 제고

○ ’21.1월 시도청 감찰수사팀 발족 이래 ▵정보유출 ▵금품수수 등 총 39건(총경 이상 4건)의 직무비위 사건을 수사하는 등 안정적 정착 중

※ 그 외 범죄·감찰 첩보 수집 220건, 감찰·민원사건 등 302건 처리

○ 금년에는 잔존하는 직무범죄 일소를 위해 고가치 첩보수집과 함께 정원·예산·교육 등 수사역량 강화 인프라* 마련에 집중

※ **(정원)** 정식 직제화 추진 / **(예산)** 수사비·장비구입비 등 제반예산 확보 / **(교육)** 신규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수사과정 등 전문교육 이수 추진

❹ 지속적인 내부 모니터링으로 공감받는 감찰활동 체질화

○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지난 해부터 감찰활동 만족도 평가를 연 2회로 확대, 감찰 기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보완*

* 조사결과는 각급 관서 청문기능에 통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지도·점검

○ **<신고창구 운영 활성화>**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내부비리·고충 신고 창구* 운영부서(감사·경무·인사 등)와의 협업을 강화, 종합적 홍보활동(카드뉴스 등) 추진 등 현장의 인식도·이용률 제고 도모

[현재 본청에서 운영 중인 내부비리·고충 제보창구 현황]

- (내부망) ▵내부비리신고센터(감사)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신고센터(경무) ▵인사소통마당(인사) ▵사적접촉 신고센터(감사)
- (외부망 – 경찰청 홈페이지) ▵청장과의 대화방(경무) ▵청렴·고충 신문고(감사)

– 아울러, ‘감찰조사 의뢰’에 이르지 않는 제보도 향후 감찰활동의 단서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운영부서와 협의하는 등 연계 강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신임 감찰관 적격심사	’22.1월	감찰업무 특성 상 현안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동가능
	·전국 청문기능 화상회의(감사관 주재)	’22.1월	
	·시도경찰청 감찰수사팀 운영계획 수립	’22.2월	
	·감찰정보 활성화 계획 수립	’22.3월	
	·직무범죄 전담 수사체계 관련 소요정원안 제출	’22.3월	
2/4분기	·’22년 상반기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22.6월	
3/4분기	·신임 감찰관 적격심사(하반기 인사요인 발생 시)	’22.7월	
4/4분기	·’22년 하반기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22.10월	
	·시도경찰청 감찰활동 성과지표 평가 및 분석	’22.11월	
	·감찰정보 제출 우수자 평가(특별승급 및 포상 수여)	’22.12월	
	·직무범죄 우수 수사팀 선발·포상	’22.12월	
연중	·시기별·테마별 업무중심 감찰활동(특별점검 등) 전개	연중 실시	
	·전국 경찰관서장 지휘·감독 참고자료 제작·배포		
	·감찰정보심의위원회 운영		
	·시민감찰위원회 운영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및 경찰관 / **(이해관계집단)** 경찰관

□ 기대효과

○ 업무중심 감찰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조직 내 인·물적 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감찰정보 활동 고도화에 역량 집중

– 감찰 기능의 조직 내「예방·진단·교정」역할을 제고하는 선제적·예방적 감찰활동을 구현함으로써 ‘직무전념 조직문화’ 정착 뒷받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감찰첩보 수집건수 **(신규)** (15%)	-	2,260	2,656	3,120	- 신규지표로서 감찰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경찰청, 시·도청, 경찰서 첩보수집 합산 건수 -'22년 목표치는 최근 2년간 실적치 증가율 17.5%를 적용한 3,120건을 목표치로 하여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경찰청 첩보수집 건수+시·도청 첩보수집건수+경찰서 첩보수집건수	첩보관리대장 및 통계
감찰첩보 활용도 (30%)	39.1%	43.2%	49.0%	53.9%	**<제도개선 자료 제출 노력도>** (15%) 최근 3년간 실적의 추세치 4.95%를 반영, 53.9%를 목표치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전체 감찰첩보 대비 제도개선 자료(기타 자료 포함) 현황	
	35.0%	28.8%	33.1%	33.5%	**<유가치 첩보 활용도>** (15%)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치인 32.3%보다 1.7% 높은 33.5%를 목표치로 하여 적극적으로 목표치 설정	전체 감찰첩보 대비 유가치 첩보(감찰조사/사실확인/관련 기능 통보) 현황	
감찰정보 분석문건 제공실적 **(신규)** (25%)	-	-	-	120점	- 신규지표로서 첩보를 통해 정제된 감찰정보를 보고서 등의 형태로 제공한 실적을 합산한 건수 ※ 제공대상에 따라 배점 차등부여 (배점기준은 하단 참조) - 전년도 실적치가 없어 목표치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경찰청장 보고건수 월 1회(120점)을 목표로 하여 목표치 설정	(경찰청장 보고건수×10)+(경찰관서장 참고자료 건수×5)+(소관기능·청문기능 통보건수×3)+(대상자 통보건수(사전경고 등)×2)	보고 또는 제공된 감찰정보 분석 문건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결과 (30%)	51.1%	58.0%	68.5%	77.2%	최근 3년간 실적의 추세치 8.7%를 반영하여 77.2%를 목표치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결과」(全 직원 대상 메일 설문조사)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링센터 작성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세부 설명자료]

① 감찰첩보 수집건수 ➡ 신규지표

▸ **(산출방식)** 경찰청·시도청·경찰서에서 수집한 감찰첩보를 합산한 건수

*** (산식) (경찰청 첩보건수+시·도청 첩보건수+경찰서 첩보건수)×100**

▸ **(선정이유)** 감찰활동의 방향은 감찰첩보를 토대로 하는바, 첩보수집 건수를 성과지표화 하여 첩보수집을 독려하고 풍부한 감찰첩보를 통해 정당한 감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정

② 감찰첩보 제도개선 활용도

②-1. 제도개선 첩보 제출 노력도

▸ **(산출방식)** 감찰첩보 중 제도개선 자료 및 기타자료로 분류된 첩보 건수의 비율

*** (산식) (제도개선자료+기타자료/총 제출 첩보건수)×100**

▸ **(선정이유)** 그간 감찰첩보(비위정보/제도개선자료/기타자료) 중 감찰활동 자료를 위한 '비위정보' 수집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나,

- 향후 제도 개선 자료 및 기타 자료의 활용도를 성과지표화 하여 유의미한 첩보 수집·처리를 통해, **경찰행정을 점검·지원하여 조직운영을 보좌**하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예정

<감찰첩보 분류 : '경찰 감찰 규칙' 근거>
1. **비위정보** : 소속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정보
2. **제도개선자료** : 불합리한 제도·시책, 관행 등의 개선에 관한 자료
3. **기타자료** : 관리자의 조직관리·운영 실태, 주요 치안시책 등에 대한 현장여론, 비위우려자의 복무실태 등 인사·조직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②-2. 유가치 첩보 활용도

▸ **(산출방식)** 전체 제출 감찰첩보 중 ①'비위 정보'의 경우 '감찰조사 착수 및 사실관계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과 ②'제도개선 자료 및 기타자료' 중 관련 기능·소관에 이첩하여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 첩보의 비율

*** (산식) ('감찰조사 착수 및 사실관계 확인 비위첩보'+'관련 기능 및 소관에 이첩 첩보'/총 제출 정보건수)×100**

▸ **(선정이유)** 수집된 감찰첩보의 활용여부에 대한 성과평가위원들의 의문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21년에 신설된 지표이며, 양질의 감찰첩보 작성을 유도하고 그 활용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내실있는 감찰정보 활동을 위해 선정

③ 감찰정보 분석문건 제공실적 ➡ 신규지표

▸ **(산출방식)** 첩보에서 보완·발전시킨 정제된 감찰정보를 보고서 등의 문건형태로 ▵경찰청장 보고 ▵경찰관서장 참고자료 전파 ▵소관기능 통보 ▵청문기능 하달 ▵대상자 통보(사전경고)에 제공한 건수

* **(산식)** **(경찰청장 보고건수×10)+(경찰관서장 참고자료 건수×5)+(소관기능·청문기능 통보 건수×3)+(대상자 통보 건수(사전경고 등)×2)**

<제공주체별 배점기준>

경찰청장 보고	경찰관서장 참고자료	소관기능·청문기능 통보	대상자 통보(사전경고 등)
10점	5점	3점	2점

▸ **(선정이유)** 분석된 감찰정보를 활용목적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표로 선정

④ 감찰활동 만족도

▸ **(산출방식)**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링센터에서 全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항목 중 '감찰활동 만족도' 관련 3개 항목'의 긍정적 답변(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의 평균으로 산정

* **(설문 문항 예시)** ㉮감찰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감찰활동이 부정부패 근절에 도움이 된다 ㉰감찰활동은 직원들이 보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 **(선정이유)** ▵감찰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18년부터 추진한 「감찰개혁」 관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 및 내재화 여부는 고객(경찰관)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44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 추진배경

○ 성평등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사회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 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성차별적 문화 개선의 중요성 증가함에 따라, 공직사회에서의 성평등 의식 제고 필요

○ 이에 경찰청은 성평등 정책 5개년 계획 추진 및 기능·기관별 성평등 자체 목표 수립 등을 통해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4)」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해 분야별 성과를 지속 확산하고, 중장기 과제 이행기반이 정립될 수 있도록 연도별 계획 수립(2022년 시행계획, '21.12.1.자 하달)

○ **경찰청 성평등 정책의 자율적 추진기반 조성**

– 지난해 경찰 성평등정책의 자율적 추진기반 조성하고자 경찰 성평등 수준 측정·분석하여, 기능·관서별 자체 성평등 목표 수립

–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 점검 및 장려

▸ **(대상)** 경찰청 국·관 및 부속기관, 시·도경찰청

▸ **(이행목표)** △여성 대표성 △성범죄 근절 △일·생활 균형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4개 과제 10개 목표(시도청은 11개 목표)

▸ **(진행 절차)** 성평등 목표 이행 자체점검 / 중간점검 / 최종점검 → 성평등 위원회 결과보고 → 위원회 제언사항 전파

○ **적극적인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경찰 정책 성주류화 확립**

- 全 경찰관서에서 수립, 제작·배포하는 주요 경찰정책·계획 및 홍보물 등 대상 성별영향평가 지속 운영(지속)
- '21년 경찰 업무매뉴얼(65종)·업무편람(101종)에 대해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관련, 평가결과 반영 여부 등 지속 관리(반기별)

○ **성평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성평등 교육 저변 확대**

- 全 직원 대상 성평등 직무교육 효과성 증대 및 코로나 장기화 대비, 사이버 교육 및 대면 교육 운영시스템 동시 구축·운영
- 차별화된 경찰 맞춤형 성평등 교육 확대를 위한 내부 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 지속 추진(양성평등교육진흥원 협의)

○ **조직 내 성평등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 경찰청 주관, 「성평등 문화혁신 네트워크(가칭)」을 구성하여 성차별적 조직문화와 각종 성평등 제도의 문제점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 성차별 조직문화 사례 발굴·분석 및 개선안 도출, 카드뉴스 홍보 등 조직 내 '일상 속 성차별적 문화' 개선 추진
- 성평등정책 및 성평등 관련 주요 이슈, 조직 내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경찰 성평등정책 소식지 정기 발간

○ **경찰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청정조직 구현**

- 「성범죄 예방 상시협의체」 지속 운영,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논의 및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이행점검
- 전 직원 대상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연 1회)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도경찰청 및 부속기관 여성근무자 간담회 추진 계획 수립	'22.1월	
	성평등문화혁신네트워크(가칭) 운영 계획 수립	'22.2월	
	소속기관 양성평등정책 담당자 워크숍 실시	'22.3월	
	경찰 성평등 교육 종합 운영계획 수립·시행	'22.3월	
	성평등정책 컨설턴트단 워크숍 개최	'22.3월	
2/4분기	성평등교육 전문강사단 워크숍 개최	'22.4월	
	성평등 감수성 향상 교육 모니터링 운영계획 수립	'22.5월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이버 교육 영상 제작	'22.6월	
3/4분기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설·운영	'22.9월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22.9월	
4/4분기	조직 내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	'22.10월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2.12월	
연중	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분기별)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상시협의체 회의 개최(분기별)		
	▵성평등 직무역량 강화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연중)		
	경찰정책·홍보물 대상 성별영향평가 실시(연중)		
	「성평등 뉴유스, 새로 쓰는 경찰이야기」정기발간(반기별)		
	<성평등정책 이행점검(연중)> ▵「22년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경찰 성범죄 근절 및 예방 종합대책」 ▵기능별·관서별 성평등 목표 수립 종합계획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全 직원(경찰·일반직·주무관 포함)

□ **기대효과**

○ 경찰정책 성주류화 및 全 경찰관 성평등 감수성 내재화를 통한 성평등한 경찰행정 구현,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기여

○ 전 직원의 성평등 직무역량 내재화를 통해 경찰행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투영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을 최소화하는 경찰활동 전개, 대국민 경찰 정책 신뢰·만족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① 일반행정업무지원(7131) ■ 경무인사지원(313) - 성평등 인권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회계	3.88	4.0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60%)	67	89	94	94.3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청·기관별 실적보고 (분기별, 온나라 공문)
성평등 교육 정착도(40%)	77	90.8	91.6	91.9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청·기관별 교육이수율

□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

※ 주요 치안정책(법령·정책·홍보물·교육자료 등) 성평등 관점 적극 점검 및 개선

○ **(지표 설정 필요성)** 이미 임계치에 도달한 실적이긴 하나, 대국민 접점이 높은 경찰 업무의 특성상 경찰 법령·정책·홍보물 등 경찰정책에 대한 성평등 가치 제고를 통해 국민적 지지 및 성평등정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지표 지속 유지 필요

○ **(점수 산출)** 주요 경찰정책 관련 성평등 관점 개선 의견수용도(수용 건수/개선의견 건수)를 기준, 경찰청, 18개 시도경찰청, 5개 부속기관 합산 수용도의 평균치를 평가

○ **(측정방법)** 측정 기간 종료 후 양성평등기획계에서 청·기관별 결과 취합·산출('22.1.1.~10.31.)

○ **(목표치 산출 근거)** '21년 경찰 콘텐츠 성차별 요소 사전점검제도 운영 결과, 개선의견 도출된 과제에 대한 의견 '수용' 건수는 934건, 의견수용률은 94%

총 요청건수	개선의견 도출	수용건수	개선의견 수용률
1,615	993	934	94%

- 최초 지표 설정 당시 '23년까지 해당 지표를 90%까지 달성하도록 목표 설정하였으나, 지난해 94% 달성함으로써 이미 임계치에 도달함. 그러나 지표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22년에도 해당지표를 유지하고 제도운영의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해 전년도 대비 0.3%p 상승한 수치를 목표로 설정(3년간 평균치 83.3% / 2년간 가장 높은 실적을 상회)

2021년(실적)	2022년(목표)	2023년(목표)
94%	**94.3%**	94.6%(당초 목표 90.2%)

□ **성평등 교육 정착도**

※ 경찰 성인지 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한 교육참여 현황관리

○ **(지표 설정 필요성)** 성평등 교육이 全 직원 법정 의무교육('19.6.19,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 됨에 따라, 경찰 필수 직무역량으로서 성인지적 관점 내재화 중요성 증가

- 따라서, 경찰 조직 내 성평등 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全 직원 대상 참여율 관리가 필요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질화를 위한 중간관리자 이상의 성인지 감수성 내재화가 중요한 만큼, 중간관리자 이상 참여율도 병행 관리 필요

○ **(점수 산출)** 중간관리자 이상 참여울 및 全 직원 참여율을 함께 고려하되, 성평등 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全 직원 대상 참여율을 가중하여 점수 부여(소수점 두 번째 자리 버림) → 각 참여도 점수 합산으로 평가

합계(100%)	경감 이상 참여도(40%)	전 직원 이상 참여도(60%)
100점	[(경감 이상 이수 인원 / 경감 이상 전체인원) × 100] × 0.4	[(교육 참여 인원 / 전체 인원) × 100] × 0.6

○ **(측정방법)** 측정 기간 종료 후 양성평등운영계에서 청·기관별 결과 취합·산출('22.1.1.~10.31.)

○ **(목표치 산출 근거)** '21년 성평등 직무역량 강화교육 운영 결과, 참여율 91.6점 달성

A : 경감 이상 이수율(40%)			B : 전 직원 이수율(60%)			최종 실적
대상인원	이수인원	이수율	대상인원	이수인원	이수율	(A*0.5)+(B*0.6)
19,896	18,579	93.4%	134,450	121,553	90.4%	91.6

- 안정적인 성평등 교육 정착을 위해 지난 2년간 실적 중 가장 높은 실적(91.6%) 이상으로 목표치 범위를 설정하되 지난해 경감 이상 이수율은 상승한 반면, 경감 이하 직원의 이수율은 다소 하락하였음을 감안하여 경감 이상 이수율은 전년 실적을 유지하고 경감 이하 이수율을 0.5% 상승치(90.9%)를 적용, 도전적인 목표설정 추진(최종 합산 목표 91.9)

22년 목표 산출	A : 경감 이상 이수율(40%)	B : 전 직원 이수율(60%)	최종 실적(A*0.4)+(B*0.6)
	93.4% (전년 유지)	91.4% (0.5%↑)	91.9

성과목표Ⅲ-3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치안 R&D와 치안산업 진흥>** 4차 산업으로 급변하는 미래치안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 접목하는 「과학치안 진흥 기반 조성(치안R&D 활성화)」이 필요

– 이에 치안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신규 R&D 과제 발굴」 및 「치안R&D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 「과학치안 인프라 구축」을 추진

○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데이터 기반 경찰행정 지원>** 사이버 위협에 정보보안 체계 고도화로 대응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치안서비스 확대

– 악성코드 대응시스템,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등으로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관리 강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 **<경찰 정보통신 기술 고도화>**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찰 정보통신 기반을 현장에 맞게 더욱 고도화하고 첨단 정보통신 서비스를 개발·보급

– ▵모바일오피스 구축 ▵원격근무환경 제공 ▵차세대 무선통신 서비스 개발·보급 ▵업무자동화(RPA) 등 수준 높은 정보화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 현장경찰관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 개발 및 지원 강화

– 기후기술 정책기반(C테크*) 친환경차량·피복류 확대 보급

*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인류가 적응하게 해줄 기후·탄소·청정 기술을 포괄

– 개인 맞춤형 희망품목 지속 고도화 및 적기보급으로 만족도 제고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장비·시스템 부문 직무만족도**
관리과제	치안R&D와 치안산업 진흥을 통한 현장 지원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현장 문제해결 발굴 건수 / R&D 연구성과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 치안박람회를 통한 치안 장비·기술의 수출상담액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데이터 기반 경찰행정 지원	사이버위협 사전예방 노력도 / 사이버위협 대응 신속도 / 치안 데이터 정확도
	경찰 정보통신 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 경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도 / 정보통신기술 지원도 / 경찰 정보통신기술 표준 확립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	장비 성능개선 및 신규도입 / 친환경 차량 보급률 / 경찰장비 현장만족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장비·시스템 부문 직무만족도	85.5	85.8	85.5	86.0	전 3년도 실적 평균값(85.6)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85.9)을 고려, '22년 목표치는 평균값보다 0.4p높은 86.0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장비.시스템 분야 문항 평균)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직무만족도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가 R&D 사업은 국가 재정과 연관되어 있으며, ①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부처와 경쟁해야 하고, ②심의절차를 여러 번 거치는 등 신규 사업(과제) 발굴·반영이 상당히 어려움

– 재정당국(과기부, 기재부)은 경찰청의 R&D가 시행 초기인 점('15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반영해주었으나, 규모가 누적·확대되면서 부처간 경쟁 등으로 신규 과제에 대한 추가반영은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

○ 생활 전반에 비대면화 확산에 따른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진행되는 반면,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은 지속 증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2년 사이버 보안 권고' 발표 자료('22. 2월)

– 안전한 경찰전산망 시스템 관리를 위해 예상되는 취약점을 사전 발굴,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필요

※ △국정원 등 공동대응 △사이버 모의훈련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등

○ 공공·민간 등 지속 증가하는 내·외부 데이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 품질관리의 중요성 대두

※ 특히 경찰청 차원에서 데이터 표준 정의서를 마련, △데이터 형식 표준화 △데이터 공유 활성화 등을 통해 경찰청 데이터표준 확산 추진중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로 치안 업무의 디지털化에 대한 관심 증대

– 현장 위주의 업무를 가진 경찰 조직 내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업무처리가 가능한 디지털 치안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정부의 친환경 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친환경 차량 의무구매제'를 시행중이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존재

– 중간목표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달성을 위해 해당 관계부처 설득 및 예산확보 방안 강구

(4) 참고자료

○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2022」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2년 사이버 보안 권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45 치안 R&D와 치안산업 진흥을 통한 현장 지원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치안현장에 접목하는 연구개발(R&D)이 중요

– 이에 우리청은 ’14년 경찰법 개정을 바탕으로 ’15년부터 R&D를 시작하여 ’22년 현재 총 예산 592억원 규모로 성장

○ 정부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의 일환으로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69-3)’를 추진

○ 아울러, 치안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증진 등 인프라 구축 병행이 필수

○ 특히, 치안R&D 성과의 현장 적용 및 확산을 위해서 대·내외 현장 실증과 실용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치안현장 문제해결형 연구개발과제 확대 >

○ 매년 치안R&D 예산을 증액하고 주요 R&D 수행부처와 협업을 확대하는 만큼 치안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 지속 발굴 긴요

※ ’20년 225억 → ’21년 492억 → ’22년 592억 (전년대비 20.2% 증액)

○ 초창기에는 과학수사·교통 등 일부 기능에 국한되었으나, 최근 장비·교육·경비 등 업무 全 분야로 확대되면서 과제 다변화 추진

► **(’22년 신규)**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 △IoT, AI 기반 경찰 인적자원 항상성 관리 플랫폼 개발 △법곤충 감정기법 데이터 구축 △위해성 경찰장비 도입을 위한 표준·인증 체계 구축 등

► **(기존과제)** △폴리스랩 2.0 △긴급구조용 정밀측위 기술 △실종아동 신원확인 △실감형 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약물 성범죄 사전예방기술 등 △보이스피싱 4G~5G 전파탐지 · 추적 기술 △경찰관 의사결정 지원기술

○ 또한, 단기 치안연구개발사업*을 활용하여 시시각각 발생하는 신종 안티-치안과학기술에 대해 즉각적인 분석과 대응을 추진

* (폴리스랩 2.0 사업) 2.5~3.5년 /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사업) 2~3.5년

< 치안R&D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 >

○ '15년 치안R&D 시작 이후 연구성과가 도출되는 시기가 도래, 성과의 현장 실증 및 시연을 통하여 대·내외 의견 반영 필요

– 과제(7개)별 '현장 관서' 및 '치안박람회'에서 실증 및 시연 추진

도주차량 추격용 GPS	기동경찰 방패	기동경찰 보호복	겹친지문 분리 시스템
도주차량에 부착하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	시야 확보에 용이하고 구조강성과 내충격성을 지닌 경량 방패	신축성과 통풍성을 갖춰 쾌적하면서 관리가 편한 보호복	겹친지문을 영상처리 및 AI기술로 단시간 내 분석하는 시스템

무인 순찰 로봇	AI기반 위·변조 영상 판독 시스템	안티-포렌식 대응 기술
순찰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4족 보행 순찰 로봇 시스템	조작영상의 진위 여부를 자동 검출하는 시스템	안티-포렌식(디지털 증거물을 훼손하는 기술)에 대한 대응 기술

○ 실증·시연현장 참관 및 사용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성과의 완성도 및 활용성 제고

< 과학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치안산업 진흥 >

○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접목한 직접 연구개발과 함께 치안산업 진흥*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

* 치안 관련 신규 창업지원, 핵심기업 육성, 국외판로 지원

○ 치안분야 기술·장비의 상용화·사업화 등 치안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제4회 국제치안박람회를 개최, 국내 우수한 치안과학기술 역량을 대내외 홍보하여 실질적 치안산업 진흥 효과 창출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추진성과」

· **(참관객)** 7,616(일반인 6,553명 · 경찰 938명 · 해외경찰청장 대표단 125명)

· **(전시규모)** 총 441개 부스(기업 312, 경찰청 79, 수출상담회 등 50)

· **(수출실적)** 해외 바이어 총 10개국 33사 / 1,323억원 규모 상담, 도로조명·전기 오토바이 등 407억 상담실적 (KOTRA 잠정 집계)

· **(언론보도)** 「(연합)친환경 순찰차부터 조준 드론까지...」 등 **200여 건**

* 치안산업박람회 개최소식과 경찰 장비·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2~'26년도 R&D 중기사업계획 작성 · 제출 및 심의	1월	
	폴리스랩 2.0, 공공연구성과 실용화사업 신규과제 공고	2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	3월	
	치안산업 기업 간담회	2~3월	
2/4분기	공공연구성과 실용화사업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협약	3~4월	
	'23년도 신규 요구사업 과제 기획	3~4월	
	폴리스랩 2.0 계속과제 실증관서 지정	3~5월	
	'23년도 치안R&D 예산요구서 작성 · 제출	4~5월	
3/4분기	폴리스랩 2.0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협약	6월	
	'23년도 예산안(정부안) 심의 대응 및 협의 · 조정	6~9월	
	제4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관련 주최 주관 회의	9월	
	치안R&D 예산 국회심의 대응	9~11월	
4/4분기	'23년 치안분야 R&D 투자 우선순위 제출(과기부)	10월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0월	
	제4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10~12월	
	치안R&D 사업 연차평가 실시	12월	
연중	치안R&D 신규과제 수요조사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치안R&D'와 '치안산업'을 통해 경찰의 치안활동이 과거 인력 중심에서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 범죄수사·검거능력 향상과 함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

해져 경찰관들의 업무 만족도가 크게 높아짐과 동시에

- 급변하는 미래 치안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임

- 또한, 선진 치안기법·장비 개발은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육성 등 국가 경제발전 및 국내 우수 치안장비·기술의 해외 전수로 '치안한류'로 표현되는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이해관계집단)** 중앙부처(과기부, 기재부, 산업부) 및 연구·전문기관(KIST, KISTEP, KIAT) 등과 치안R&D 확산을 위해 정책적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국민과 현장 경찰관 대상 의견수렴 및 홍보 추진

□ 기대효과

○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치안 분야 신규과제 발굴과 내실 있는 관리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

○ 기존 치안정책에 과학기술을 융합, 과학치안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한 현장치안력 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등 급변하는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처가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 -1-일반재정②)			
① 정책연구개발(R&D)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400)	일반	1,300	1,147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폴리스랩1.0)(401)	일반	595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2.0)(402)	일반	2,095	5,350
■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개발(500)	일반	2,700	2,584
■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 인프라 연구개발(501)	일반	3,700	
■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611)	일반	3,677	510
■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개발(613)	일반	1,715	1,706
■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현장지원 기술개발 (620)	일반	9,201	13,536
■ 미래형 국민치안 서비스 개발(621)	일반	2,020	3,244
■ 약물이용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휴대용 신속탐지기술 개발(623)	일반	1,912	1,450
■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 개발(631)	일반	2,826	6,661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634)	일반	16,194	18,288
■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634)	일반	1,300	1,640
■ 위해성 경찰장비 도입을 위한 표준·인증 체계 구축(706)	일반		1,248
■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707)	일반		1,79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2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th></tr>
<tr><th>'19</th><th>'20</th><th>'21</th><th>'22</th></tr>
<tr><td>①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현장 문제해결 발굴 건수(건)
(30%)</td><td>6</td><td>8</td><td>8</td><td>8</td><td>새로운 정권 출범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 3년간 상승·유지세를 보인 만큼 평균 실적치인 7.3건을 10%↑ 상회하는 8건을 목표로 설정</td><td>치안현장 문제 해결 신규과제 발굴 건수
(치안 분야 R&D 신규과제 발굴 건수 <예산확보>)</td><td>정부예산안</td></tr>
<tr><td>① R&D 연구성과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점)
(35%)</td><td>신규</td><td>신규</td><td>신규</td><td>79.3</td><td>'15년에 시작된 치안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가 창출되면서 현장 실증 등을 통해 현장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성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통한 성과 측정

'22년 최초 측정하는 신규지표임을 감안, 유사 만족도 지표인,
①수사·형사 분야 치안고객 만족도,
②과학수사 대국민 만족도,
③경찰장비 현장 만족도의
각 3년치 평균값을 평균낸 75.5점보다 5%↑ 상회하는 79.3점을 목표로 설정
‣ 유사만족도 추이
<table>
<tr><th></th><th>19년</th><th>20년</th><th>21년</th></tr>
<tr><td>수사</td><td>65.1</td><td>67.4</td><td>64.7</td></tr>
<tr><td>과학</td><td>75.5</td><td>77.1</td><td>79.4</td></tr>
<tr><td>장비</td><td>82</td><td>83.6</td><td>85</td></tr>
</table></td><td>만족도 조사 점수
(각 조사 부분 만족도의 평균)</td><td>전자우편 및 설문조사</td></tr>
<tr><td>② 치안박람회를 통한 치안 장비·기술의 수출상담액(억원)
(35%)</td><td>325</td><td>452</td><td>407</td><td>435</td><td>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위축된 치안산업계의 진흥·육성을 위하여 지난 3년간의 평균치보다 10%↑ 높은 435억원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td><td>계약서 명시 수출상담액
('22년 수출상담액)</td><td>국제치안산업박람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식집계 (KOTRA)</td></tr>
</table>

46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데이터 기반 경찰행정 지원

□ 추진배경

○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생활 전반에 비대면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사이버 공격에서도 지능화된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2년 사이버 보안 권고' 발표 자료('22.2.)

○ 범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AI 기술 고도화 등 데이터를 활성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확산

※ '20~22년 3년간 경찰청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160억) 구축 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경찰 전산망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사이버 위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 체계 강화**

- 경찰 전산망의 안정적인 관리와 국가 치안 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변종 악성코드 대응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사이버 공격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위협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공동 대응체계 확보
- 내부 직원 대상으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실전과 같은 사이버 훈련을 실시, 직원들의 대응 능력 향상 및 경각심 제고

※ 실제 해킹메일과 유사한 형태로 '사이버 모의훈련' 연 2회 이상 실시

○ **경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화 보안 활동 내실화**

-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운영으로 정보화시스템 보안 강화, 무선 인터넷 등 사전 점검으로 사이버보안위협 대응 강화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수동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자동으로 통합관리·분석이 가능토록 개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경찰행정 지원]

○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결정·인공지능 활용 치안서비스 확대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경찰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연차적 추진 중

▸ **경찰청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20~22년, 총 예산 160억)

구분	1단계 도입기('20년)	2단계 확산기('21년)	3단계 발전기('22년)
소요예산	57억 2,900만원	52억 8,300만원	49억 500만원
인프라	핵심 인프라 구축	비정형 데이터 등 인프라 확장	인공지능 등 시스템 고도화
포털	포털시스템 구축	경찰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포털 고도화

– 인력 중심의 경찰활동에서 탈피, 데이터를 중심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으로 ▵현장 치안역량 강화 ▵조직·업무 효율화 등 도모

○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과 고품질 치안데이터의 품질관리 강화

– 빅데이터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데이터 품질진단·개선 강화

※ 데이터 오류율을 0.1%미만으로 관리하고 품질관리 전문교육 확대

– 데이터 중심의 공공분야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등 데이터 제공 기반 확충

※ 공공데이터 교육(3월), 대국민/전문기업 수요조사(6월), 현장지원(8월)

○ 치안 데이터 융·복합을 위한 '경찰청 데이터 표준' 확산

– 경찰청 차원 데이터 형식 및 규칙을 표준화하여 적용하고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를 위한 경찰청 데이터 표준* 확산 추진

* 21년 49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수집을 통해 데이터 표준 정의서 마련

– 정보화 사업 시에 경찰청 데이터 표준(용어, 도메인 등)을 준수하고 제안요청서(RFP)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정·지원

※ 데이터 표준화 교육(2회), 품질관리 동영상 자료(2부), 매뉴얼(2부) 배포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22년「사이버·보안진단의 날」시행계획	1월	
	’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2월	
	사이버위기(DDoS공격) 대응 훈련 계획	2월	
	’22년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중복과 유사서비스 실태조사	3월	
	’22년 경찰 해킹메일 실전 대응훈련 계획	3월	
2/4분기	’22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 계획	4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정비 계획 수립	5월	
	공공분야「사이버공격 대응 훈련」계획	6월	
	’22년 공공데이터 교육 계획	5월	
	’22년 정보보호 직무전문화 교육 계획	6월	
	경찰청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3차 구축사업 개시	6월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6월	
	’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대상 DB 선정	6월	
	’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6월	
3/4분기	’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활용 수요 조사 계획	7월	
	사이버보안진단의날 상반기 운영 결과 보고	7월	
	’22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을 위한 현장지원반 운영 계획	8월	
	사이버 보안위협 정보공유 현황분석 보고	9월	
	통합백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계획	9월	
4/4분기	’22년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정비 계획	10월	
	전국 경찰관서 보안감사 계획	10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11월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11월	
	신・변종 악성코드 대응 및 보안관제 기반 시스템 구축	11월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3단계 구축사업 완료	12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하반기 운영결과 보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및 全 경찰관

○ 이해관계 집단 : 경찰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보유 부서

□ 기대효과

○ 경찰이 보유한 범죄경력, 주민번호 등 민감 정보를 보호하고, 경찰 내부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을 사전 예방하여 경찰 전산망의 안전한 운영을 통한 대국민 치안서비스 지원

○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지원, 그간의 한정된 정보와 개인 경험에 의존한 치안 활동을 과학·통계적 차원으로 변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경찰청 정보화기반고도화(정보화)			
① 경찰청 치안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일반회계	52.8	35.8
② 신·변종 악성코드 대응 시스템 구축	일반회계	12.4	6.8
③ 통합백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계획	일반회계	5.6	5.6
④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일반회계	5.4	5.4
경찰청 유무선망개선			
① 보안관제 기반 시스템 구축	일반회계	4.3	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사이버위협 사전예방 노력도 (35%)	-	55.1	61.9	**69.5**	○ 경찰 사이버 위협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매우 높은 국가적 위험도*가 발생하는 바, 수많은 해킹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차단이 효과적** * 경찰 정보통신망 마비, 경찰 민감 자료 유출 등 ○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악성 IP·URL 등에 대한 **사전차단율**을 정량적으로 평가 * 악성 IP·URL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안관제 요원이 국정원 등과 협의·공유, 악성 IP·URL 등을 위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올해 목표는 **전년 대비 12.3% 증가**된 69.5점으로 적극 설정	하단 참조	관련 시스템, 공문, 메모보고 및 증빙서류 등
사이버위협 대응 신속도 (35%)	15.9	17.9	23.1	**27.9**	○ 본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 281개 관서의 **16만여 대 개별 PC에 대한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사전차단 수준에 이르지 못한 탐지 정보에서 사이버 위협 판별을 위한 **보안 관제요원(전문화된 기술·경험)의 분석 및 조치*** 필요 * 피싱사이트 계정 도용 방지, 악성코드 감염 차단, 정보시스템 보안 약점 제거 등 ○ 올해 목표는 **전년 대비 20.8% 증가**된 27.9점으로 적극 설정	하단 참조	관련 시스템, 공문, 메모보고 및 증빙서류 등
치안 데이터 정확도 (오류율) (30%)	0.4271	0.0675	0.0742	**0.099**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는 각 국관별 시스템 데이터를 모두 관리하는 업무로, △업무대상 시스템 지속 증가(행안부 지정) △부서별 담당자 총괄 등 **난도가 높고 이해관계자가 다수** ○ '19년 데이터 오류율 **0.42%에서 '21년 0.07%로 대폭 감소**하였으나(-0.35%p, 80%이상 ↓) **실적 상향에 임계치 도달** ○ 올해에는 **치안데이터 품질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3년 평균 약 0.189% 대비 50% 이상 강화된 0.1% 미만을 목표로** 설정	하단 참조	데이터 전문 평가기관인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보고서 內 **'데이터 오류율'** 제출

측정산식

○ 사이버위협 사전예방 노력도(35%)

- 사이버위협 **사전차단 건수** : 사이버위협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유해사이트차단 시스템 및 침입방지시스템)에 의해 **선제적으로 차단**된 건수

- 사이버위협 **총 건수** : 정보보호시스템에 의해 **탐지된 사이버위협** 건수

- **[측정방법] 사전 차단율** = $\frac{\text{사이버 위협 사전차단 건수}}{\text{사이버 위협 총 건수}} \times 100$

- 연도별 사전 차단율 ※ 본청 기준

구분	사전차단율	총건수	차단건수
20년도	**55.1**	**31,781,145**	**17,516,260**
21년도	**61.9**	**19,794,977**	**12,270,646**
22년도	**69.5**	**'21년도 대비 12.3% 이상 상향 목표**	

※ 주요 정보보호시스템 기능 설명

구 분	내 용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악성코드 감염 등 위험에 노출된 사이트에 대해 접속 통제
침입방지시스템	악성코드 의심정보 등 침입행위 탐지·분석·차단 조치

○ 사이버위협 대응 신속도(35%)

- 최근 사이버 공격은 운영체제(OS)나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차단 할 수 있는 패치가 공개되기 전 그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나 해킹 공격 기법이 주로 사용되므로, 사이버 위협 의심 정보에 대한 전문 보안관제 요원의 신속한 대응(조치)은 경찰 정보통신망과 내부자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 **[측정방법] 신속도** = $\frac{\text{6시간내 조치 건수}}{\text{사이버위협 조치 필요건수}} \times 100$

- 연도별 조치 내역 및 신속도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구분	신속도	6시간 이내 조치 건수	6시간 이후 처리 건수	총건수
19년도	**15.9**	**157**	832	**989**
20년도	**17.9**	**327**	1504	**1,831**
21년도	**23.1**	**327**	1,087	**1,414**
22년도	**27.9**	**'21년도 대비 20.8% 이상 상향 목표**		

○ 치안데이터품질 정확도(30%)

- 경찰청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기관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연간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1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상의 세부추진과제(8건) 모두 수행 완료하는 등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 중

- 이와 더불어 내·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관차원의 품질오류 신고, 요구사항 등을 신청,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내역과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활동 수행

- 특히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추세에 따라, 보다 고품질의 치안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오류율 감소'를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내·외부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측정방법] 치안데이터 정확도(오류율)** = $\frac{\text{업무시스템별 오류율의 총합}}{\text{총 시스템 수}}$

- 연도별 데이터 오류율

구분	데이터 오류율(%)	대상 시스템 수(행안부 지정)
19년도	0.4271	9
20년도	0.0675	9
21년도	0.0742	21
22년도	0.099	21 + α

※ 3년 평균치 대비 50% 이상 낮은 오류율 목표

47 경찰 정보통신 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

□ 추진배경

○ 치안 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 경찰은 차세대 통신망, AI 영상분석, 원격근무환경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발빠르게 도입하며 대응 중

○ 그간 도입한 정보통신 기반을 현장에 맞게 더욱 고도화하고, 새로운 첨단 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 경찰의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튼튼한 정보통신 기반 확립 >

○ **비대면 업무 환경 고도화로 중단 없는 치안 서비스 구현**

– **(모바일오피스)** 현장 경찰관도 업무에 필요한 핵심 정보통신 서비스를 모바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

※ ’22년(1단계) 사업으로 공지사항, 폴메일, 폴메신저, 온나라결재 등을 모바일化하고 ’24년(3단계)까지 기능 계속 확대 추진 예정

– **(원격근무환경)** 재택 등 원격근무 확산에 따라 원격근무 시스템의 기능, 속도, 안정성을 강화하여 효율적 업무처리를 지원

※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문서보안솔루션’ 도입, △시스템 이중화 △전국 동시접속 가능 인원 확대 등 추진 예정

○ **경찰우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국민편의 제고**

– 모바일기기 활용 확산에 맞추어 경찰우편물을 모바일로 발송하는 고지 서비스의 시범 운영 개시

– 행안부와 협업으로 국민비서를 연계, 카카오 등 민간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경찰 업무 분야별 고지사항을 전달

* 교통 43종, 즉심 8종, 총포 7종 등 총 58종

○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보화사업 전문조직 운영

– 모든 국·관의 정보화 사업 중 대국민 중요성과 사업의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해 체계적 사업관리를 지원

※ '21년 신설한 내부 PMO 인력을 활용, 필요 예산과 지원대상 확대 추진

– 정보화사업의 위험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등 全 단계에 걸쳐 전문성 있는 검토와 피드백을 제공

※ 주요 역할 : 제안요청서 작성, 기술협상, 사업 산출물 점검 등 지원

< 치안 현장 중심으로 정보화 서비스를 고도화 >

○ 차세대 무선망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보급

– **(긴급경력 지원기능)** 재난망 단말기에 원터치 경력지원 기능을 추가, 통화그룹 內 상황실과 참여자에게 경력지원 메시지 송출

※ 112치안종합상황실 지령장치 지도상에 경력지원 요청자 위치 표현

– **(영상공유시스템)** 재난현장에서 경찰, 해경, 소방, 산림청 등 관련 기관이 헬기 촬영 영상 등을 함께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 폴리폰 시스템 기능 고도화로 현장 업무를 지원

– 全 국관, 시도경찰청의 기능 개발·개선 요구사항을 수렴, △교통 △112 △수사 등 관련 부서 협업으로 개발·적용

– 지역경찰 등의 현장 휴대서류를 디지털화하고 폴리폰 기능으로 구현, 현장 업무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

○ AI 분석 기술 활용,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 고도화

– '21년 개발한 딥러닝 기반의 교통법규위반 영상 분석 기술을 시스템에 접목, 신고 처리의 신속성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

※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실과 협업으로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 경찰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자동화(RPA) 추진

– 단순 반복적인 경찰 업무에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법을 적용,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자동화' 추진

– RPA 협의회 및 현장자문단을 운영하여 일선에서 필요한 RPA 업무를 발굴·개선,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제고

○ 주요 업무시스템 사용자 요구 발굴 개선

– 대국민, 경찰업무용 등 다양한 시스템 운영 과정에 기능개선 등 요구사항을 발굴, 신속한 개선으로 사용자 만족도를 증대

< 정보통신기술담당관 운영 주요 정보시스템 >

구분	시스템명
직접운영 (11종)	① 폴넷 ② 온라인조회 ③ 폴메일 ④ 폴메신저 ⑤ 경찰우편자동화 ⑥ 영상회의 ⑦ 스마트국민제보 ⑧ e-알림 ⑨ 웹메일 ⑩ 정보통신종합관리 ⑪ 수배차량등검색
범정부(5종)	① 온나라 ② e-사람 ③ 비밀관리 ④ 행정전자서명 ⑤ LDAP
위탁운영 (8종)	① 풍속관리 ② 즉심관리 ③ 사회적약자 ④ 경비업 ⑤ 인사관리 ⑥ 의무경찰 ⑦ 전자공무원증 ⑧ 정원관리

< 장애없는 기반·시스템 운영으로 업무 연속성 확보 >

○ 정보통신 장애대응 체계 고도화

– 통신망 등 기반 환경 장애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수립, 유사시 기능별 역할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점검체계를 확립

– 현장에서 사용하는 PC, 모바일 등의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체장비 지급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 지원 절차와 예비 장비 확보 방안을 마련

○ **정보통신 시스템·기반 유지관리 효율화**

– 국관에서 개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자원 중복성 등 제거로 유지관리 효율성을 제고

※ 전사·순직 업무 등 정보시스템 48개에 대해 4차(2년차) 통합유지관리 중

– 유지관리 체계 표준화, 전문가 투입 등 유지관리 품질 향상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 **직무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 교체·보급**

– 업무용 전산장비·서버·단말기·방화벽 등 각종 정보통신장비를 적시에 교체 보급해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유지

–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현장 근무자의 장비 유형별 선호도를 조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만족도를 제고

< 정보통신 기반·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담당관실 주요 사업 >

구분	사업명
노후장비 교체 (8건)	①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② 전국 경찰관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③ 전국 경찰관서 IP교환시스템 교체 ④ 노후 휴대용프린터 교체 ⑤⑥ 모바일 단말기(폴리폰, 업무폰) 교체 ⑦ 전국 경찰관서 사무용PC 등 교체 ⑧ 소프트웨어 보급
유지관리 (5건)	①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② 정보기술아키텍쳐(ea) 유지관리 ③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유지관리 ④ 치안업무용 재난안전통신망 무선시스템 유지관리 ⑤ 경찰청 IP교환기 유지관리
고도화 (2건)	① 온라인조회시스템 자료검색 재개발 ② 경찰 노후 행정업무시스템 고도화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재난현장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시범 구축 협약 체결	1월	
	경찰청 모바일 오피스 추진 기본계획 수립	2월	
	스마트국민제보 ‘교통법규위반 AI 영상분석 서비스’ 도입	2월	
	제4차 통합유지관리(2년차)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2월	
	경찰청 정보화사업관리 추진 계획 수립	2월	
	폴리폰 기능개선 계획 수립	3월	
	RPA 현장자문단 재정비	3월	
	경찰 모바일 단말기 구매 계획 수립	3월	
	경찰 공공앱 운영현황 자체 점검계획 수립	3월	
	치안업무용 재난안전통신망 무선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수립	3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긴급경력 지원 기능’ 적용 완료 보고	3월	
2/4분기	모바일오피스 1단계 사업 계획 수립 및 발주	4월	
	전국 경찰관서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계획 수립	4월	
	전국 경찰관서 노후 PC 등 교체 사업 계획 수립	4월	
	전국 경찰관서 사무용SW 보급 계획 수립	4월	
	모바일프린터 구매 및 교체 계획 수립	4월	
	경찰청 원격근무환경 구축 계획 수립	4월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계획 수립	4월	
	치안업무용 재난안전통신망 무선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5월	
	경찰우편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운영 개시	5월	
	RPA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분석	6월	
	전국 경찰관서 사무용SW 보급 완료	6월	
3/4분기	’23년도 제5차 통합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8월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완료	9월	
4/4분기	경찰 공공앱 성과측정 실시	10월	
	업무시스템 기능개선 완료 현황 보고	10월	
	통합포털 폴넷 기능 개선 완료	10월	
	전국 경찰관서 노후 PC 등 교체 완료	10월	
	전국 경찰관서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완료	11월	
	경찰청 원격근무환경 구축 완료	11월	
	재난현장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시범 구축 완료	12월	
	모바일 오피스 1단계 시범 서비스 및 안정화	12월	
	정보화사업관리 운영 성과 보고	12월	
	’23년도 제5차 통합유지관리사업 계약 체결	12월	
	’23년 경찰청-국자원 간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12월	
	제4차(2년차) 통합유지관리사업 만족도 조사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모든 국민 및 경찰청 全 직원

○ 이해관계집단 : 경찰 통신망, 정보시스템, 정보통신장비 등의 구축·운영·고도화와 관련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기관과 관련 업체 등

□ 기대효과

○ 전염병 예방 및 향후 언택트 문화 확산·정착에 대비, 효율적이고 유연한 비대면 근무환경 구축을 통한 경찰 업무연속성 확보

○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 – 서비스 개선 - 안정화』의 일련의 과정에서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 각종 비용 절감

○ 전문조직(PMO)의 체계적인 정보화사업 관리 지원으로 경찰청 정보화사업의 품질 제고 및 추진목표 달성

○ ▵노후장비 교체 ▵업무자동화 ▵정보화 서비스 개선 등 기능별 요청사항을 수용, 내실 있는 시스템 개선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경찰장비와 정보화운영체계를 선진화한다(Ⅳ-2-일반재정(3))			
① 경찰유무선망개선(4233) ▪ 경찰유무선망개선(311)	일반회계	1,326	637
경찰장비와 정보화운영체계를 선진화한다(Ⅳ-2-정보화(1))			
①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4234) ▪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511)	일반회계	634	65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30%)	100	118	121	133.7	아래참조	아래참조	- 시스템 통계 활용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20%)	86	83.1	86.7	87	아래 참조	아래 참조	-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 (고객만족센터 의뢰) 및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 통계
경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도(15%) <감소지표>	1,427	1,333	482	410	아래 참조	아래 참조	- 시스템 통계 활용
정보통신기술 지원도(20%) <신규 지표>			57	65.6	아래 참조	아래 참조	- 시스템 통계 활용
경찰 정보통신기술 표준 확립(15%) <신규 지표>			18	45	아래 참조	아래 참조	- 시스템 통계 활용
목표치 산출근거	○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 133.7점** - 경찰청 정보통신기술과에서 운영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를 측정 - ① 통합포털 폴넷(20%) ② 스마트국민제보(30%) ③영상회의시스템(30%) ④ 폴메신저(20%) 4개 시스템 활용도를 반영 -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지표는 현장 중심의 시스템 개선의 결과로서 3년간 지속적으로 실적이 상승, 목표치는 ’21년 실적에 상승 추세치 10.25%보다 높은 10.5%를 적용하여 매우 도전적(적극성上)으로 설정 ○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 87점** - 국민 및 전국 경찰관, 일반직 공무원 대상으로 전국 경찰관서에서 활용 중인 다양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 국민 대상 ‘스마트국민제보 만족도’를 포함, 입체적으로 조사·반영 - 최근 3년간 평균만족도가 85점 내외로 등락하고 있어(하강 후 상승 국면), 금년 목표치는 3년간 평균치인 85.3점보다 2% 증가한 87점을 적용하여 매우 적극적(적극성上)으로 설정 ○ **경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도(감소지표) : 410분** - 경찰정보통신망 장애는 국가의 치안활동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장애시간 감소 노력을 위해 ‘경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도’를 설정 - 금년 목표치는 최근 3년 추세율에 따라 -35%를 적용해야하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강화로 최근 장애발생도가 현저히 감소. 추세율에 따른 지표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 -6.6%(’19～’20년), -64%(’20～’21년) - 이에 따라, 금년 목표치는 작년 전국 경찰관서 통신망 장애시간(482분)에 감소율 15%를 적용, 410분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 ※ 최근 3년간 평균 장애시간 1,081분							

<table>
<tr><td>목표치 산출근거</td><td>○ 정보통신기술 지원도<신규지표> : 65.6점
- '21년 정보통신기술담당관실 조직개편시 신규로 추가된 PMO 및 정보화사업 지원 업무와 폴리폰 기능 개선 등 타부서의 요청에 대한 지원도를 평가
- 금년 목표치는 '21년 정보통신기술 지원 실적*보다 15% 높은 65.6점으로 설정하여 매우 적극적(적극성上)으로 목표 수립
* '21년 실적 내역 : PMO 지원 8건(시범운영), 폴리폰 기능 개선 17건
○ 경찰 정보통신기술 표준 확립<신규지표> : 45점
- '21년 조직개편과 함께 정립된 정책목표인 경찰 정보통신기술 표준 확립을 위해 소관 행정규칙, 지침, 매뉴얼 등을 일제 정비
- 규칙 등 경찰위원회 상정 3건 이상, 매뉴얼 등 배포 5건 이상, 기타 간담회·공문 하달 등 다수 실시하여 정보통신기술 관련 표준 마련
- '21년 대비 소관 규칙 등을 2배 이상(150%↑) 정비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적극성上)
※ '21년 소관 규칙·지침·매뉴얼 등 제·개정 4건(국관 등 배포 3건)</td></tr>
<tr><td>측정산식</td><td>○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 ① 통합포털 폴넷(20%) + ② 스마트국민제보(30%) + ③영상회의시스템(30%) + ④ 폴메신저(20%)
※ 세부 기준은 다음페이지 <붙임> 참고
○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 내부 직원 만족도(60%) + 대국민 만족도(40%)
▸ 내부직원(60%) :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장비 만족도 조사
<고객만족센터 의뢰 설문조사 실시>
▸ 대 국 민(40%) : 스마트국민제보 만족도 <시스템 內 신고자 만족도>
- 만족도 평정부여는 경찰청 고객만족센터의 7개 척도(매우불만족 : 0, 불만족 : 16.7, 다소불만족 : 33.3, 보통 : 50, 다소만족 : 66.7, 만족 : 83.3, 매우만족 : 100)의 점수를 활용
○ 경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도(감소지표)
- 시도경찰청·경찰서 대상 회선 장애로 인한 업무망 서비스 중단 시간
※ 장애시간 : 18개 시도경찰청 누적 장애시간 매월 취합
○ 정보통신기술 지원도
- 제안요청서 검토, 폴리폰 기능 개선 등 각 국관(시·도경찰청 포함)의 정보통신기술 지원 요청에 대한 협력 사항을 항목별 배점표에 의해 산출
<항목별 배점표>
<table>
<tr><th>점수</th><th>중기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 발주 지원</th><th>제안요청서
작성·검토 지원</th><th>정보화사업
사업 관리</th><th>폴리폰
기능 개선</th></tr>
<tr><td>종합 결과
(항목별
배점 총합)</td><td>건당 1점</td><td>건당 2점</td><td>건당 2점</td><td>건당 1점</td></tr>
</table>
○ 경찰 정보통신기술 표준 확립
- 행정규칙 등 제·개정, 매뉴얼·편람 등 제·개정, 정보통신기술 표준에 대한 간담회·설명회·공문하달 등에 관한 성과를 항목별 배점표에 의해 산출</td></tr>
</table>

측정산식	<항목별 배점표> <table><tr><td rowspan="2">점수</td><td colspan="2">행정규칙, 지침 등</td><td colspan="2">가이드라인, 매뉴얼, 편람 등</td><td rowspan="2">현장간담회, 전문가 면담, 학술세미나, 설명회 등 실시</td><td rowspan="2">체크리스트, 점검방식 등 표준 관련 공문 하달</td></tr><tr><td>제정, 전부 개정</td><td>일부 개정</td><td>제정, 수정 후 배포</td><td>일부수정, 내부기준 마련</td></tr><tr><td>종합 결과 (항목별 배점 총합)</td><td>건당 10점</td><td>건당 7점</td><td>건당 5점</td><td>건당 3점</td><td>건당 2점</td><td>건당 1점</td></tr></table> ※ 1. 행정규칙, 지침 등은 경찰위원회 상정건만 인정 (미상정건은 매뉴얼 등으로 인정) 2.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은 신규 제정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정한 후 국관 또는 시도청에 배부한 건만 5점 인정 3. 간담회, 세미나, 공문 하달 등은 정보통신기술 표준에 관한 것만 인정 (코로나19 등으로 대면 회의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 회의도 인정)

< 붙임 >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평가 세부기준

① 통합포털 폴넷 일평균 이용건수 (20%)

▪ 이용건수 : 게시물 등록건수 + 조회건수

건수	~ 308,414건 (90%↓)	308,415건 ~ (90%)	342,683건 ~ (100%)	376,952건 ~ (110%)	411,220건 ~ (120%)	445,488건 ~ (130%)	이후 10% 상승시마다
점수	16점	18점	20점	22점	24점	26점	2점씩 가산

② 스마트국민제보 일평균 처리건수 (30%)

▪ 처리건수 : 국민신고·제보 건에 대한 업무담당자 처리건수

건수	~ 3,934건 (90%↓)	3,935건 ~ (90%)	4,372건 ~ (100%)	4,809건 ~ (110%)	5,246건 ~ (120%)	5,683건 ~ (130%)	이후 10% 상승시마다
점수	24점	27점	30점	33점	36점	39점	3점씩 가산

③ 화상회의시스템 연간 이용건수 (30%)

▪ 이용건수 : 전국 경찰관서 화상회의시스템 이용건수

건수	~ 13,944건 (90%↓)	13,945건 ~ (90%)	15,494건 ~ (100%)	17,043건 ~ (110%)	18,593건 ~ (120%)	20,142건 ~ (130%)	이후 10% 상승시마다
점수	24점	27점	30점	33점	36점	39점	3점씩 가산

④ 폴메신저 일평균 이용건수 (20%)

▪ 이용건수 : 폴메신저 쪽지 발신건수

건수	~ 463,176건 (90%↓)	463,177건 ~ (90%)	514,641건 ~ (100%)	566,105건 ~ (110%)	617,569건 ~ (120%)	669,033건 ~ (130%)	이후 10% 상승시마다
점수	16점	18점	20점	22점	24점	26점	2점씩 가산

※ 항목별 기준값은 3년 평균치 또는 전년 기준 대비 15% 상승값

48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

□ 추진배경

○ (현장중심 장비개발) 흉기피습, 교통사고, 재해재난 등 각종 위험에 국민과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찰장비 개발 및 성능개선 필요

○ (친환경차량·피복) 범국가 과제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경찰업무에 적합한 친환경 차량 및 피복류 확대 보급

* 국제기준에 맞춰 국내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정책, 2050년 무공해차 보급 최소 85% 이상 확대 목표

○ (경찰장비 만족도) 개인 맞춤형 희망품목 시스템 지속 고도화, 각종 장비의 신속한 적기보급과 장비 개선에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 품질향상과 경찰장비 만족도 제고 필요

○ (우수장비 도입방안) 경찰·해경·소방·軍 등 고위험 직업군의 우수장비 조달을 위한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 의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1 현장경찰관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 개발 및 지원 강화

< 현장경찰관 보호장비 개발>

○ (경량 방검조끼 개발) 상시 착용이 가능한 경량 방검조끼* 개발, 불시피습 등 다양한 돌발상황으로부터 현장경찰관 보호

* 미국 NIJ기준에 따라 성능과 무게의 조화를 고려, 단순 베임이 아닌 성인남성이 휘두르는 칼로부터 장기의 치명상을 방지하되 상시착용이 가능하도록 경량화에 만전

– 전문기관의 철저한 성능 검사를 거쳐 시제품 제작(22.5월), '22.6월부터 시범운영 실시, 다양한 환경에서 實테스트를 통해 현장에 꼭 필요한 장비를 개발, '23년 확대 보급 추진

○ (경량 중형방패 개발) 현행 대형방패와 소형방패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경량화한 중형방패 개발 보급

* 대형방패는 흉기 등으로부터 안전성은 높으나 크기와 무게의 불편함으로 사실상 지역경찰은 휴대가 불가, 소형방패는 방어면적이 작아 부상 위험성↑

※ 추진일정 : 시제품제작('22.10월) ⇨ 개발계획 수립(12월) ⇨ 계약추진('23년 1월) ⇨ 시범운용 제품 납품('23년 4월) ⇨ 시범 운용('23년 4월)

○ **(삽입형 경량 방검패드)** 현행 외근조끼에 삽입형 형태로도 착용할 수 있도록 '삽입형 방검패드(가슴·복부·옆구리 보호)'를 보급

• '20~'21년 경찰서 공용으로 보급하여 순찰차에 탑재하여 운영중인 삽입형 방검패드(총 23,000세트) 보급방식 개선, 희망자 대상으로 대여품으로 개별 지급

○ **(주요 장비 경량화·성능개선)** 외근가방·외근혁대 등 지속 개선

구분	신규도입 (1종)	성능개선 (4종)			
제품명	외근가방	외근조끼	외근혁대	방검장갑	방검토시
디자인					
특징	수납가방 보급 편의성 제고	방검패드 삽입 신체보호	두께, 폭 조정하여 경량화	베임방지 성능 강화	베임방지 성능 강화

< 검거지원장비 개발·도입 지속추진 >

○ **(한국형 전자충격기 보급)** 현장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량화·소형화 ▵3연발 방식 등 기존 테이저의 단점을 보완한 한국형 전자충격기 시범운영 및 확대 보급 추진

※ 시범운용 : '22.1~6월간 지역경찰 100명에 대해 시범운용 진행 中

구 분	테이저건	한국형 전자충격기	이 미 지
크기(L×H×W)	21×15×3.3cm	**18.1×13.1×3.1cm**	
무게/연속발사	422g / 단발	**380g / 3연발**(리볼버)	
조준포인트	1개(상부)	**2개**(상·하부)	
유효사거리(최대)	3~4.5m (6m) 전극침 각도: 8도	**3~5.5m (6.5m)** 전극침 각도: 4도	

○ **(경량·저위험 대체총기 도입)** 기존 38권총보다 가볍고(680→515g) 인명 살상 위험을 최소화한 대체총기 개발 ⇒ 안전성 검사*, 국회 상임위 결과보고, 현장실증·시범운용을 거쳐 장비 도입 진행中

* 고려대 산학연에서 총기·탄 및 성능 안전성 검사 중('21.7월 ~ '12월)

구 분	최종 시제품		세부 제원
총기/ 탄약			▸무게: 515g(38권총 680g) ▸구경: 9mm ▸안전장치 적용(現38권총 안전장치 없음) ▸비살상탄 살상력: 보통탄의 1/1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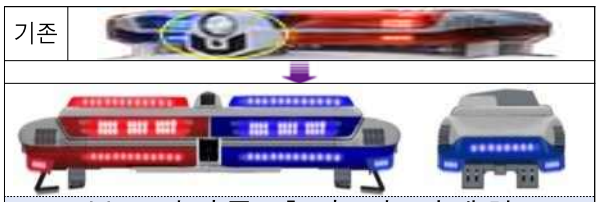
○ **(전자충격 다단봉·장갑 등)** 주요 범인검거장비 2차 시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현장실증 차질없이 진행, '22.12월한 개발 추진

※ 개발기간: '20~'22년 / 예산: '22년 16.6억원(총 50.2억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차 시제품 설계 및 제작	⇒	2차 시제품 완성 및 성능검증	⇒	안전성 검사 및 현장 실증	⇒	최종 완성
'20.11월		'21.12월		'22.9월限		'22.12월限

○ **(2차사고 예방장비)** 경광등 상승 시 현출되는 **LED 전광판을 2배 확장**하고 **최상단 및 측면에 보조경광등 추가**하여 **시인성 향상**

LED 전광판 세로 2배 확장



보조경광등 추가 및 일체화

※ 개선된 리프트경광등을 형사순찰 등 도색 승합순찰차에도 적용

○ **(탈부착형 경광등·트렁크 장비함 등)** 현장활력소 등 현장의견을 반영해 순찰차 트렁크 장비함을 2단 서랍식으로 개선해 편의성을 높이고 범죄수사 등 비노출차량 전용 탈부착형 경광등 개발

장비함

개선 전

개선 후

경광등

시 안

부착사진

< 경찰차량보험 보장액수 및 보장범위 대폭 강화 >

○ **(보험개선)** 숙원사항이 었던 공무수행중인 모든 차량에 대한 보상액수와 보장범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장업무 지원 강화

< '22년 보험 주요 개선내용 >

구분	기본 보장				특별 약관			
	대인	대물	자동차상해		탑승자 상해	공무수행 중 다른차량 운행 특약		
			사망·장애	부상				
'21년	무한	3억	2억	3천만	2억 / 3천만 (자동차 상해)	112, 교통, 형사, 수사차량이 피단속용의차량 운행사고 시	2억 / 3천만 (자동차 상해)	1억 (자차손해)
'22년	**무한**	**5억**	**5억**	**5억**	**5억 / 5억 (자동차 상해)**	**공무수행 중인 전 차량**	**5억/ 5억 (자동차 상해)**	**5억 (자차손해)**

2 첨단기술 활용 및 탄소중립 정책기반 친환경차량·피복류 확대 보급

○ **(친환경차량 대폭 확대)** 친환경차 656대(356억원) 확대보급 추진

–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 높은 출력과 저렴한 유류비로 경찰업무 특성에 맞는 신속한 기동력 확보 및 예산절감 등 월등한 장점

전기순찰차

수소전기순찰차

업무용 전기차

고속형 수소전기버스

※ (유류비) 연간 25,000km 운행 시 휘발유차 404만원, 전기차 158만원(61%↓) / (제로백) 내연기관 대비 높은 출력, 0km→100km: 내연기관 8.8초 / 전기차 5.2초

– 전기순찰차(172대)·수소전기순찰차(90대) 및 상용화 예정인 고속형 수소전기버스(3대), 업무용 전기차(391대) 대폭 보급 확대

※ **경찰관서 급속충전시설** 166기(지역관서 86개소 포함) 대폭 확대('21년 143기)

○ **(고품질 친환경 의류 확대)** 공공기관 업사이클(Up-cycle) 정책을 선도, 고품질의 '친환경 의류' 보급 품목을 대폭 확대

※ '21년 112상황실·경찰부대 간이근무복, 혹한파카 내피 등 15종을 시범 착용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도 품목 확대 / 내·외부 전략적 홍보 병행

< 2022년 친환경 의류 시범착용 추진 대상 (案) >

구분	근무복 상·하의	형사활동복 등 점퍼류	제모류	제화류
디자인				

○ **(경찰드론 운용개선)** 보다 신속한 실종자 조기발견 등 수색 지원을 위해 시도청별 거점서 지정, 경찰 드론 인력풀(498명)을 활용 강화

('21년 기준) 시도청 단위 운용

('22년 인력풀 활용) 거점 경찰서 분산 운용

○ **(드론 영상관제차량 운용)** 수색 현장 총괄 지휘통제 및 다중채널 모니터링 등 종합분석 가능한 관제차량(1대) 도입, 시범운용* 추진

* 경기남부청 시범운용('21.12~'22.6월)

내부 구성도

관제차량 외관

영상 송·수신 시연

다중채널 모니터링

○ **(드론 활용범위 확대추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법률 제·개정* 시 수사·교통 분야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안' 정부안 1건, 의원안 3건 심사 계류 중

3 개인 맞춤형 희망품목 고도화 및 적기보급으로 만족도 제고

○ 개인 맞춤형 희망품목 지속 고도화 및 적기보급 강화

– 상·하반기 인사 발령에 맞춰 신청 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적기 보급을 위한 MAS 구매(조달청 쇼핑몰을 통한 구매) 추진

– 현장의 요구를 다양하게 수렴하여 희망품목 지속 개선·개발

※ 수렴 창구: 장비포털 내 장비과에 바란다, 폴넷 현장활력소 등

< '22년 개선·개발 예정 희망품목 >

구분	근무복 하의	외근화	기동복
형태			
효과	절개선, 포켓 등 수납력·활동성 개선	기동성·쾌적성 강화	활동성 강화를 위한 소재 및 디자인 개선

○ 현장 소통을 통한 희망품목 품질 향상 추진

– 현장에 적합한 장비 개발을 위해 현장평가단 구성·운영

– 희망품목 보급상황 및 장비사용·관리법 등을 정기적 공지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무인비행장치 영상관제차량 시범운용 추진	’22. 1월	
	▸ ’22년 경찰차량 보험 시행	’22. 1월	
	▸ 한국형 전자충격기 시범운용 실시	’22. 1월	
	▸ ’22년 경찰 무인비행장치 확대 운용 운영계획 수립	’22. 2월	
	▸ ’22년 1차 희망품목 신청기간 운영	’22. 3월	
2/4분기	▸삽입형 방검패드 보급	’22. 4월	
	▸ 순찰차 장비함, 멀티캠 소형화, 측면 보조경광등 추가	’22. 5월	
	▸친환경 의류 시범운영 계획 수립	’22. 6월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자충격기 카트리지 보급	’22. 6월	
3/4분기	▸한국형 전자충격기 시범운영 결과 보고	’22. 7월	
	▸’22년 2차 희망품목 신청기간 운영	’22. 8월	
	▸경찰청 우수장비 도입 및 장비품질개선 T/F 구성	’22. 8월	
	▸재활용 섬유 활용 ”친환경 의류” 시범운영	’22. 9월	
	▸중형방패 시제품 제작	’22. 10월	
4/4분기	▸업무용 전기차 보급	’22. 11월	
	▸중형방패 개발 계획 수립	’22. 12월	
	▸전기순찰차 및 수소전기차 보급	’22. 12월	
	▸수소전기버스 보급	’22. 12월	
	▸전자충격 다단봉·장봉 등 현장지원장비 개발 추진	’22. 12월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 성과 도출	’22.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경찰장비(피복·장구·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찰관

□ 기대효과

○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 업무집행을 위한 △경량화된 신체보호장비 △검거지원장비 개발·보급 △경찰보험 대폭강화 등 지원으로 현장 경찰관 및 국민 안전을 두텁게 보호

○ 첨단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차량 및 고품질의 친환경피복, 드론운용으로 현장에 가장 유용한 최신의 장비를 보급

○ 개인 맞춤형 희망품목제도 지속 개선·개발으로 품질을 향상하고 및 적기보급을 통한 내부 만족도 향상 추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2]			
① 경찰장비현대화(4231)[3]	일반회계	2,634	2,849
■ 경찰기동력강화(311)		751	843
■ 차량관리(312)		1,064	1,158
■ 피복관리(313)		559	553
■ 장비관리유지(314)		260	29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장비 성능개선 및 신규도입 (35%)	15	14	17	16	· 현장활동에 적합한 장비 개선·개발 지표로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드라인 "상"에 해당하는 평균치(최근 3년 실적이 상승세가 아닌 경우 평균실적 15.3 이상인 목표치로 선정) 이상인 16건으로 선정	기존 장비의 성능개선(규격의 제·개정) 및 신규장비 도입 건수	경찰규격심의위원회 결과 제·개정하여 반영된 수치를 정량 적용
친환경 차량 보급률 (35%)			80.1	80.3	· 하단 참조	· (친환경 차량 수 / 노후로 인한 교체 업무용 차량 수) x 100	친환경 차량 교체비율 수치 정량 적용
경찰장비 만족도 (30%)				85	· 기존 경찰 장비에 관한 포괄적 만족도(A/S등)를 개선, 우수장비 도입을 위해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로 올해 최초 산출임을 고려, 작년 지표 실적과 동일한 85점을 목표치로 설정 ※대통령 지시사항(우수장비 도입)에 따른 지표 개선	(피복 만족도 × 0.3) + (장구류 만족도 × 0.2) + (차량 만족도 × 0.5)	기획조정담당관실 고객만족모니터센터 전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 친환경 차량 보급률 지표 산출 근거 >

친환경 차량 보급률

<산출 근거>

-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과 도심지 미세먼지 경감 등 친환경 정책 활성화를 위해 '21년부터 공공부문 친환경차량 의무구매제*' 도입

  * 대기환경보전법, 동법 시행령·규칙 등 법규와 관련, 국가기관의 업무용 차량 구매 시 80%이상 친환경 차량(수소 또는 전기차)로 구매 의무 부과

- 2021년 주요업무 중 친환경 차량 확대 보급계획에 따라 '21년도 노후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교체 추진

⇒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업무용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이 평균 0.65%로 거의 보급되지 못한 수준이었으나 법령에 의해 일정비율 이상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해야 하는 실정, 이에 따라, 매년 구매 차량 중 **80%를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지표로 설정

<측정 산식>

[측정방법] 보급률 $= \frac{\text{친환경 차량 수}}{\text{노후로 인한 교체 업무용 차량 수}} \times 100$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보급률 목표 구간 설정>

달성도 / 목표치의 적극성	달성 (100% ↑)	거의 달성 (99~80%)	상당 달성 (79~60%)	일부 달성 (59% ↓)
높음(上)	80% ↑	79.2 ~ 64%	63.2 ~ 48%	47.2%

< 관련 법령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3(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②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 중 80퍼센트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구매·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 등)** ① 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025년 12월 31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성과목표Ⅲ-4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한 현장활력 제고>** 쾌적한 환경조성, 우수직원 격려 등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위해 현장활력을 제고하고,

– 효과적 정책 수립·집행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업무 추진

○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가족 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구축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 재직 중 건강관리 및 퇴직 이후 전직 지원 등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치안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폭넓은 복지제도 기반 확충

※ △직장어린이집 등 가족친화 복지시설 확충사업 진행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체계로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 △퇴직경찰관 전직지원 및 인프라 확대

○ **<현장 재정지원 강화>** 치안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집행 점검체계를 통한 재정사업의 관리·집행 효율화

○ **<국민 소통 강화>** 수사권 개혁·자치경찰 등 주요 정책별 전략 홍보 전개 및 브랜딩을 통한 경찰 이미지 제고 추진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복지 부문 직무만족도**
관리과제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적극지원 및 현장활력 제고로 대국민 치안역량 강화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 / 연가사용 실적
	현장활력을 제고하는 복지기반 확충	현장 경찰관 대상 마음건강관리 실적 / 퇴직(예정)경찰관 취업지원 성과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예산확보수준 / 예산집행률 / 국유재산증가율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치안정책·현안에 대한 신뢰·지지기반 마련	경찰청 SNS 활동지수 / 주요정책 언론홍보 실적 / 온라인 이슈 및 오보대응 활동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복지 부문 직무만족도	77.8	77.3	76.6	77.8	복지 부문 직무만족도는 '19년 상승 이후 하락하였으며, 전 3년도 실적 평균값(77.2)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76.0)을 고려, '22년 목표치는 평균 및 추세치의 중위값(76.6)보다 1.2%p 상승한 77.8로 도전적으로 설정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복지 부문)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직무만족도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최신 기술 발전 등으로 더욱 발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화적인 시스템에 대응 가능한, 효과적인 치안정책 수립·집행을 위해

– 구성원 상호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일일회의를 기획하여, 조직원들의 의사가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원

※ 현장활력소 등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의사가 상향 반영되는 업무회의 기획·운영 中

– 기능간 중재·갈등완화를 통해 정책 집행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국민 치안서비스 집행을 지원

○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장려하고,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권장하는 등 일·가정이 균형이 되는 정책을 추진

– ▵계절휴가 ▵권장연가제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등 적극 활용하고 / 경찰청 집단 유연근무제(월2회) 유지,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제 이용 장려

○ 노조·직장협의회와 상호 협력을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 추진

– (노조) '08년 이후 13년만에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진행 중으로, 대화를 통한 협력적 교섭 문화 정착을 통해 건강한 일터 조성

– (직협) ▵관서별 직협 활성화 지원 ▵직협 소통위원 운영 등 직협과 적극 소통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 추진

○ 취업제한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17.7%(3,053개) 대폭 증가하는 등 퇴직경찰관의 재취업 여건이 열악하고,

대상 연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취업제한기관 수(개)	16,331	16,690	17,051	17,292	20,345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인들의 단순 취업 인원 등 월평균 임금 80만원 미만*의 시·일급 등 단기 일자리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임

* 월 8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 : ('18년) 1.9% → ('19년) 1.7% → ('20년) 2.1%

○ 마음건강관리는 불규칙적인 근무여건 및 경직된 조직문화로 자발적 참여 곤란, '긴급심리지원*·지정상담**' 등 조직적 차원의 지원 필요

* 긴급심리지원 : 충격사건 담당 경찰관 대상 사건 직후 한 달 간 최대 4회 상담

** 지정상담(정신건강검진) : 형사 등 스트레스 고위험부서 대상 1:1 검사·면담

○ 글로벌 저성장,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 진입 등 복잡다기한 대내외 위기상황 하의 재정 여건

–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언택트, 메타버스 등)·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고용분야의 구조적 변화 가속화

– 경찰예산은 국민안전과 직결됨을 강조하면서 범죄로 인한 사회비용 증가 억제, 국가이미지(K-COP, 치안한류) 향상 등 투입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관계기관 설득

○ '여성·아동·사회약자' 등 민감 이슈 부각되며 경찰 관련 뉴스 증가 등 치안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 급증

※ 전년대비 '21년 <뉴스 언급량> 57만건 → 64만건(12%↑) / <SNS 언급량> 49만건 → 55만건(12%↑)

– 특히, △층간소음 흉기난동 △스토킹 피해자 피습 등 논란으로 저하된 경찰 법집행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한 상황으로 주요 치안정책 및 부정 이슈에 대한 신속·정확한 홍보활동 전개 필요

(4) 참고자료

○ 경찰청, 「경찰 홍보 매뉴얼」·「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등 온라인 이슈 커뮤니케이션 강화 계획」

○ 통계청,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 기획재정부(www.moef.go.kr)

49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적극지원 및 현장 활력 제고로 대국민 치안역량 강화

□ 추진배경

○ 치안정책 수립·집행 全 과정에서 상향 의견반영이 가능한 업무·회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호응받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

○ 또한, 기능 상호간 업무정보 소통·공유, 예산업무 교육 등 정책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경찰의 원활한 직무수행 도모

○ 일·가정이 양립 가능한 조직문화 개선, 올바른 경찰정신 확립, 우수직원 격려 등 현장 활력 제고를 통해 경찰의 치안역량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조직원 상호간 치안정책 소통채널 마련, 화합의 조직문화 선도]**

– 경찰청 주요 일정관리*, 업무회의 준비**(자료취합·전국전파) 등 적극적 지원으로, 효과적인 치안정책 수립·집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

* 대·내외 일정 총괄, 각 기능 계획 반영(수시)일정 전국 배포(매일 08:00)

** 매주 치안정책 논의 일일회의 준비, 자료 전국 배포(회의 당일 08:00)

– 일일회의를 구성원 상호간 치안정책을 공유하는 소통공간으로 조성, 조직원들의 의사가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

※ 현장활력소(내부 게시판) 등 직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토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식 환류 시스템 구축

※ 의무안건을 제출하는 회의가 아닌, 2~3가지 현안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의견표출이 가능한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업무회의 기획

– 기능간 중재·갈등완화 등 능률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총괄 지원

○ **[모두와 소통·화합하는 행사를 추진, 치안 현장의 활력을 제고]**

– 치안현장·노고부서 적시 방문, 칭찬플랫폼을 통한 우수직원 격려* 등 내부 사기를 진작시키는 행사를 추진, 일선 현장의 활력 제고

* 칭찬플랫폼, 베스트 경무인, 베스트팀장 등 격려·포상제도 운영중임.

– '경찰문화대전' 등 업무 외적으로 직원 상호간의 소통 창구도 마련하여,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 형성

–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등 각종 경찰 행사*를 주관 및 지원, 경찰 조직 내부는 물론, 국민과도 소통·화합하는 문화 정착

* 시무식, 위촉식, 시상식, MOU 체결, 정부행사, 종교행사, 복지시설 방문 등

○ **[휴식 있는 삶과 일·가정의 균형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을 통한 '휴식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年 연가사용 목표일수를 설정하는 등 연가사용 활성화 시책 추진

※ △계절휴가 △권장연가제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등 적극 활용

※ 명절·공휴일 전후로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본청부터 솔선수범하며 관리자는 일정 일수를 의무 사용토록 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 **[경찰청 예산·사업을 뒷받침하는 신속하고 전문화된 회계업무 지원]**

– 경찰청 전 국·관별 주요 추진 사업에 맞춰 신속·공정한 계약 절차를 진행(작년 年 1,747건), 원활한 치안정책 추진을 지원

– 본청 사업담당, 관서별 회계담당 등 대상 △회계교육 △회계실무 제작 △현장컨설팅 등 추진, 전문화된 회계업무 지원기반 조성

※ 본청 예산·사업담당자 대상 계약절차 교육 / 국가계약 및 회계 전문화 교육과정 진행 / 사례 중심 회계실무 제작 / 상·하반기 현장컨설팅 실시 등

○ **[노조 · 직장협의회와 상호 협력을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

– **(노조)** ’08년 이후 13년만에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진행 중으로, 대화를 통한 협력적 교섭 문화 정착을 통해 건강한 일터 조성

– **(직협)** ▵관서별 직협 활성화 지원 ▵직협 소통위원 운영* 등 직협과 적극 소통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 추진

* 시도청 등 직협대표들 중 1인 선정(20명), 경찰청-직협 소통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경찰청-현장 직협 간 소통 강화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찰청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01.27)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관리’ 계획 수립, 추진

※ ▵전담조직 신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지정 ▵전문인력 배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운영 등 포함

– 경찰관서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실태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점검 실시, 미진 사항 발견 시 보완 등 제도 안착에 주력

※ 주요 점검 대상
▵ 유해·위험요인 개선 실태 ▵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 운영의 적정성 ▵ 매뉴얼에 따른 조치 실태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안전·보건 교육 실시 현황 등

○ **[경찰역사 재조명을 통한 자긍심 · 책임감 제고]**

– 참된 경찰 정신을 실천한 경찰영웅 선정·선양* 및 임정·독립·구국·민생경찰 등 경찰위인을 발굴, 참경찰 인물열전** 발간

* 매년 경찰영웅 2명 선정, 경찰영웅패·증서 수여 및 흉상 건립 등 선양

** ’21년판 기준 247명 수록, 민생경찰 19명 추가발굴 참경찰 인물열전 수록 예정

– 경찰역사순례길* 운영 및 신임경찰 대상 교양서 배부, 백범일지 독후감 대회 등 경찰역사 관련 정책** 추진

* ’21.11월 말 기준 △누적 참가자 17,683명 △완주자(41개소) 490명

** △ ’20년부터 ‘참경찰 인물열전’, ‘경찰역사 만화’ 2종 신임교육생에게 배부 중

△ ‘백범일지’ 독후감 대회 : 신임 순경 매 기수별 개최(경대·간후·변호사 경채는 격년제로 홀수년에 실시 중)

– 독립유공자 선양 사업을 전개하는 빙그레공익재단과 협업하여 경찰 관련 독립유공자 후손 및 순직경찰 자녀 장학금 지급

※ ’19년·’20년에는 경찰 관련 독립유공자 상대로 年 3천만원을 지급하다, ’21년부터 순직경찰관 자녀를 추가하고 지급액을 年 4천만원으로 상향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2년 경찰청 시무식	1월	
	경찰청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관리' 계획 수립	1월	
	'22년 경찰청 근무혁신 추진 계획 수립	3월	
	노무담당자 화상회의 실시	3월	
	경찰청-경찰청 직협간 회의	3월	
	'22년 전국 회계담당 화상회의 실시	3월	
2/4분기	회계실무편람 발간·배포	4~5월	
	경찰박물관 어린이날 기념 행사 개최	5월	
	상반기 전국 회계부서 현장 지도점검 실시	5~6월	
	경찰청-직협 소통위원 간담회	5~6월	
	연가 사용률 등 근무혁신 추진 현황 점검	5~6월	
3/4분기	'22년 참경찰 인물열전 발간	6~8월	
	국가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실시	6~8월	
	'22년 상반기 '베스트 경무인' 선발	7월	
	경찰청-경찰청 직협 간 회의	7~9월	
	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노사 합동워크숍 실시	7~9월	
4/4분기	제23회 경찰문화대전 개최	10월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10월	
	경무 행정지원업무 내부만족도 평가	10월	
	'22년 하반기 '베스트 경무인' 선발	12월	
	하반기 전국 회계부서 현장 지도점검 실시	11~12월	
	주무관노조 노사 합동워크숍 실시	10~11월	
	주무관노조 임금교섭 체결	10~12월	
	기관-직협 간 소통·협력 우수사례 포상	12월	
	근무혁신 우수 관서 포상계획 수립	10~12월	
연중	주요 치안현장 방문	수시	
	경리 회계과정, 시·도청 회계과정, 회계담당 조달청 위탁 교육 실시	수시	
	사랑나눔 운동(봉사활동, 헌혈, 바자회 등) 추진	연중	
	청사 시설점검, 방역 및 노후설비 보수 등 지원	연중	
	칭찬플랫폼 우수사례, 베스트팀장 선정	연중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보장 및 합리적 노사문화 조성	연중	
	제11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 개최	연중	
	2018 경찰청 단체교섭 (경찰청-국공노·전공노)	연중	
	신임경찰 대상 백범일지 경찰 독후감 대회 개최	연중	
	'22년 경찰영웅 선정 및 선양	연중	
	관서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실태 점검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행정지원, 근무혁신(유연근무, 연가 등), 내부소통(조직원 간 갈등 치유, 스트레스 해소) 등은 전 기능 대상 추진과제로 경찰청 全 직원이 수혜자

○ 또한,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경찰의 치안서비스 품질 향상은 국민들에게 영향, 최종적 수혜자는 치안서비스 당사자인 전 국민

□ 기대효과

○ 행정지원이 뒷받침된 치안정책 추진은 치안성과 창출로 직결되고, 궁극적으로 경찰 전체의 치안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내부만족도, 업무효율성 증대는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 만족·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 <60%>	82.4	83.0	85.2	85.5	하단 참조	10월 중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	경찰청 고객만족센터 의뢰, 내부망 메일 이용 설문조사

○ **(지표 개요)** 경무담당관실 행정지원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임, 경찰청 직원 중 10,000명 임의 선정(경무기능 제외), 10월 중 내부망 메일로 설문조사 실시

○ **('22년 목표치)** '근무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3년 실적 평균치인 83.5점을 상회하는 점수 85.5점을 도전적 목표로 설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연가사용 실적 <40%>	경정·5급 이상<20%>	47.3	44.9	55.2	52	하단 참조	1인당 평균 연가사용 비율 (1~10월)	경찰청 e-사람 시스템상 산출
	경감·6급 이하<20%>	48.8	52.9	58.6	63			

○ **(지표 개요)** 연가 사용 실적은 휴식있는 삶과 일·가정 균형 보장을 위한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1인당 평균 연가사용 비율(연가사용일수/연가부여일수)을 평가

○ **('22년 목표치)**

- **<경정·5급 이상>** 관리자인 경정·5급 이상은 연가사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전적으로 지난 3년치 평균치(49.2%)보다 높은 52%를 목표로 설정**

△ **'18~'20년<3년간> 경정·5급이상 연가사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여왔음.**

'18년	'19년	'20년	'21년
47.8%	47.3%(전년대비-0.5%)	44.9%(전년대비-2.4%)	55.2%(전년대비+10.3%)

△ **'20년은 코로나19 총력체계 등 실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통솔범위가 넓은 관리자(경정 이상)가 연가를 사용하기에 어려운 여건이었으며, 연가보상비가 일절 지급되지 않아 잔여 연가가 전부 연가저축으로 적립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음.**

△ **'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일상화와 더불어 전년도에 활용·보상되지 못하고 과다 저축된 연가일수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활용률이 급증한 결과를 보인 것임.**

- **<경감·6급 이하>**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권장연가제 등 근무혁신 추진으로 연가 사용 매년 증가, 3년간 추세치(7.3%)를 감안하여 **도전적으로 63%를 목표로 설정**

※ 최근 3년간 증가율 및 추세치 : '19년 2.9%(1.4%p)↑, '20년 8.4%(4.1%p)↑, '21년 10.7%(5.7%p)↑

50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 추진배경

○ 경찰관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치안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폭넓은 복지제도 기반 확충 추진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제2차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2019～2023)’

○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보수·수당 개선과 퇴직(예정) 경찰관 지원 확대, 각종 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해 현장 활력 제고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건강관리기반을 확충하고, 국가에 헌신한 순직·공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신체적 · 정신적 맞춤형 건강증진체계로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

○ 현장경찰관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 현장 경찰관들에게 충분한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마음동행센터 상담인력 증원 추진

※ (’22년) 총 26명, 개소당 1～2명 → (’22년 이후) 총 54명, 개소당 3명

○ 신체·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고도화

– ‘특수’ 검진에 걸맞도록 직무특성을 고려한 유해인자별 검진 항목 도입 등 특수건강검진 고도화 추진

※ 1인당 검진비: (’22년) 121,493원 → (’23년) 1인 최대 261,844원

–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분석*을 지속 진행하고, 주요 스트레스 요인·증상의 예방·치유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추진

*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이용자의 기능별·지역별·성별·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 / 사망전 스트레스·위험신호 등 자살원인 관련 자료

-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 과정(매년 225명) 운영, 생명지킴이 강사 역할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 발굴·조력자 역할 부여

○ 복지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관계망 확충

- 법 개정 및 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해 건강정책 추진기반 마련

※ ▲「경찰복지법」에 특수건강진단 등 건강정책 추진 관련 규정 강화
▲경찰공무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실시 등

- 복지정책심의위원회 자문회의 활성화를 통해 의견수렴 강화

※ 복지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정책에 반영

시설·여가 복지 확대하여 경찰 가족의 행복 증진

○ 직장어린이집·연수시설 등 가족친화 복지시설 확충사업 진행

- 3차 어린이집 개원('22.3월) 및 4·5차 어린이집 신축사업 동시 추진

< 어린이집 확충 계획 > ('21) 69개소(3차 20개소) ⇨ ('22) 85개소(4차 16개소) ⇨ ('23) 100개소(5차 17개소) ※ 5차 1개소 증축, 1개소 재건축

- 강릉·신안·남해수련원 증·신축 사업 진행 및 노후수련원 시설 개선

○ 비연고지 인사발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확충

- 도서·산간지역 등 특수지는 관사 신축을 추진하고, 도심지는 임차관사 확보, 노후관사 환경개선 지속추진

※ 신축 30년 이상 된 국유관사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신축 20년 내에 있는 국유관사는 리모델링 진행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국내 주요 온라인 교육업체와의 제휴 협약방안 검토, 순직자 및 장기공상 퇴직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부담 완화

– 경찰관 자녀에게 지원 자격 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대학 현황 파악, '2023학년도 경찰자녀 대학 특별전형 안내' 제작·배포

○ 정책 소통·환류체계 운영

– 개편된 'POL복지' 게시판을 활용, 주요 복지제도·혜택을 상시 안내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제언도 지속 수렴

게시판명	내 용
복지알림	복지분야별(건강·보훈·퇴직 등), 생애주기별(임신·육아·교육·퇴직 등) 복지제도 등 안내
복지혜택	제휴할인, 경찰공제회 공지 등 안내
복지제언	복지정책 관련 현장 의견 게재(신규아이템 건의, 제도 개선사항 등)

순직 · 공상경찰관 예우 및 지원체계 강화

○ 순직·공상자 예우 및 지원체계 강화

– 순직·공상(퇴직)자 위로금 및 공상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및 집중 치유 프로그램(힐링캠프·템플스테이 등) 운영

– 순직·공상 불승인 소송 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 지원 및 승인 준비과정에서 재해전문 노무법인 전문가의 자문 지원

– ▵순직·공상퇴직 자녀 입학·졸업 격려 ▵명절·연말 위문 ▵순직자 기일 위로 등 순직 유가족 대상 사후 지원 종합관리체계 운영

○ 공상경찰관들이 휴직기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추진(최대 5→8년, 「경찰공무원법」 개정 / 인사과 협업·인사처 협조)

○ 전사·순직 통합전산시스템상 전사·순직대장(30여만 건) 등 한글화 작업을 통해 개인식별 자료 목록화 추진('23년 완료 목표)

퇴직경찰관 전직 지원 및 인프라 확충

○ 퇴직(예정) 경찰관 전직지원 여건 개선

– ‘경찰관 전직지원시스템(가칭)’ 도입, 경찰전직지원센터 인력 확충, 전직지원교육 확대 등을 위한 예산 확보 지속 추진

※ 지원시스템 도입 및 발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병행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 원격·비대면 전직지원 운영 확대

※ 온라인 상담 전국 확대, 온라인 유관기관 기업 간담회 실시 등

○ 퇴직예정경찰관 지원 교육과정 개선

– 퇴직설계(퇴직 5년 전)·전직심화(퇴직 1년 전) 교육과정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통한 퇴직 시기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선

※ ’22년부터 현장학습형 전직심화 교육과정으로 개선, 반영 예정

경찰 업무특성을 반영한 보수 · 수당 현실화

○ 역할과 책임에 상응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안직 수준 기본급 조정’을 위한 공감대 조성 및 관계기관 협의 진행

○ 치안여건 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근무여건 악화, 유사 업무 대비 불합리, 장기간 수당 동결 등 인사혁신처 수당조정 기준을 고려하여 수당 신설·인상 등 필요사항 발굴·추진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순직·공상퇴직 자녀 입학·졸업 격려	'22.2월	
	'22년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계획 수립	'22.2월	
	'21년도 경찰병원 성과평가 계획 수립	'22.2월	
	'22년 전직지원 교육비 지급계획 수립·시행	'22.2월	
	'22년 순직·중한공상·국가유공자 불승인자 소송비 지원계획 수립	'22.3월	
	'22년 공상자 특수요양비 지원계획 수립	'22.3월	
	'22년 생명지킴이강사 양성 및 기존 강사교육 실시 계획 수립.하달	'22.3월	
	'22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 수립.하달	'22.3월	
	'22년 임차관사 예산 배정계획 수립	'22.3월	
	'22년 경찰청 중요직무급 운영 계획 수립	'22.3월	
	제2차 경찰복지기본계획 '22년 시행계획 수립	'22.3월	
	'22년 경찰전직지원교육 운영 용역업체 선정	'22.3월	
	'22년 경찰전직지원교육 운영 용역업체 선정	'22.3월	
	'22년 전직지원계획 수립.하달	'22.3월	
	'22년 복지카드기금 사용계획 수립·시행	'22.3월	
	'22년 야간근무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등 시행계획 수립	'22.3월	
	경찰병원 분원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 계획 수립·시행	'22.3월	
	3차 BTL 어린이집 20개소 개원	'22.3월	
2/4분기	'22년 장기재직자 지원사업 계획 수립	'22.5월	
	'22년 복지시설 보수예산 배정계획 수립	'22.5월	
	4차 어린이집 BTL사업 착공	'22.5월	
	'22년 경찰청 수당조정요구안 마련·제출	'22.5월	
	호국보훈의 달 전사 경찰관 추모행사 개최	'22.6월	
	'22년 순직경찰관 영결식 용역사업자 선정	'22.7월	
3/4분기	5차 어린이집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2.9월	
4/4분기	경찰 추모주간 순직경찰관 유가족 위로 행사 개최	'22.10월	
	5차 어린이집 BTL사업 신청서 평가 및 협상지원 용역업체 선정	'22.10월	
	퇴직예정경찰관 가이드북 제작	'22.11월	
	'22년 경찰전직지원사업 평가 보고회 개최	'22.12월	
	'23-24년 경찰전직지원 컨설팅 운영업체 선정	'22.12월	
	'23년 경찰관 전직지원 교육사업 용역계획 수립	'22.12월	
	'23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업체 선정	'22.12월	
연중	위험직무공상자 특별위로금, 공상자 특수요양비, 순직·공상 불승인 소송비 지원	연중	
	전직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소식지 제작·게재	연중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예방접종(DPT 등) 시행	연중	
	퇴직예정경찰관 전직지원 교육 실시	연중	
	全직원 대상 자살예방 교육 실시	연중	
	생명지킴이강사 양성 및 기존 강사교육 실시	연중	
	전국 경찰복지시설 점검 계획 수립·시행	연중	
	강릉수련원 증축 및 신안·남해수련원 신축 사업관리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받는 재직·퇴직경찰관을 포함한 경찰 조직원과 그 가족이 대상이며,

– 경찰복지로 인한 자긍심·사명감 제고가 경찰관의 적극적·헌신적인 업무수행으로 이어져 국민도 간접적인 수혜대상임

○ **(이해관계집단)**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 등 정책추진과 관련된 정부 부처, 경찰병원·경찰공제회·마음건강센터 등 관계 기관·단체

□ 기대효과

○ 현장 치안 활동을 위한 복지기반 마련을 통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찰관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함양

– 경찰관들의 직무만족도 및 자긍심 제고를 통해 대국민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 이를 통해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위한 기반 마련

○ 경찰관의 직무특성에 맞게 심리·신체적 건강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국가에 헌신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순직·공상자를 예우하여 사명감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1	'22
경찰복지증진(Ⅴ-4-일반재정④)			
① 경찰복지증진(7135)	일반회계	664.04	845.21
■ 경찰복지증진(311)		545.91	689.08
■ 퇴직경찰관 취업지원(312)		19.85	20.57
■ 경찰관서 직장보육시설 운영(민자)(751)		98.28	135.5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현장경찰관 마음건강관리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현장 경찰관 대상 마음건강관리 실적 (50%)	13,245	17,487	21,881	26,300	추세치 이상 △'19~'20 : 4,242↑ △'20~'21 : 4,394↑ - '22년 추세치 : (4,242+4,394)/2 = 4,318↑ - '22년 추세치 반영 : 21,881+4,318=26,119	마음동행센터 상담제공 인원수	상담 위탁업체 비용정산 근거자료

○ **(지표개요)** 마음건강관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나, 경찰의 불규칙적인 근무여건 및 경직된 조직문화로 자발적 참여가 쉽지 않은 만큼 정신적 공상 예방을 위해 조직적 차원의 적극적인 '긴급심리지원* · 지정상담**' 필요

* 긴급심리지원 : 충격사건 담당 경찰관 대상 사건 직후 한 달 간 최대 4회 상담

** 지정상담(정신건강검진) : 형사 등 스트레스 고위험부서 대상 1:1 검사·면담

- 다만, 외부 요인에 따른 상담은 1회성에 그쳐 실질적인 상담·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하게 '인원 수'로 산출했던 지표를 '상담 횟수'로 변경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건강한 마음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지표 설정

○ **('22년 목표치)** 당분간 '19년도 하반기 마음동행센터 9개소 신설(9→18개소)과 같은 추가적인 센터 개설 계획은 없어 기존과 같은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 특히,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할 때, 대면상담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등 녹록치않은 여건임에도 센터 개설에 따른 반사이익이 반영되었던 최근 3년간의 추세치를 반영한 26,119건보다도 높게 매우 도전적으로 목표치 설정

- △24시간 콜센터 운영 △찾아가는 상담 확대 △지역경찰, 수사부서 등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부서 대상 지정상담 활성화 △마음동행센터 홍보 포스터·리플릿 제작·배포 등 적극 홍보로 이용률 제고

<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퇴직(예정)경찰관 취업지원 성과 (50%)	68.3	70.3	71.3	73.0	추세치 이상 △'19~'20 : 2% ↑ △'20~'21 : 1% ↑ -'22년 추세치 : (2+1)/2 =1.5% ↑ -'22년 추세치 반영 : 71.3+1.5 =72.8%	해당연도 취업인원 / 전직지원센터 컨설팅 인원	전직지원센터 제출 자료

○ **(지표개요)** 전·현직 경찰관에 대한 취업지원정책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22년 목표치)** '22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추세치를 초과하는 73%로 설정

- '취업제한기관*이 '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17.7%(3,053개) 대폭 증가하는 등 퇴직경찰관의 재취업 여건이 열악하고,

*

대상 연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취업제한기관 수(개)	16,331	16,690	17,051	17,292	20,345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직지원센터의 본격 운영이 지연될 뿐 아니라, 기업 운영도 위축되는 등 취업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노인들의 단순 취업 인원 등 월평균 임금 80만원 미만*의 시·일급 등 단기 일자리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임

* 월 80만원 미만 근로자 비중 : ('18년) 1.9% → ('19년) 1.7% → ('20년) 2.1%
(통계청,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노인 일자리 확대의 그늘... 팬데믹 이후 월 80만원 미만 급증(국민일보, '22.2.17.)

- 그럼에도 질 높은 일자리로의 연계를 위해 모든 취업자를 1명으로 개수하지 않고 가중치*를 부여한 수치로 산정하면서도 '22년 목표치를 최근 3년 추세치를 반영한 72.8%보다도 상향하여 73%로 매우 도전적으로 설정

* △시·일급 일자리, 사회공헌형 일자리 : 0.5명 △감시·단속직 : 0.7명으로 개수

51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 추진배경

○ 수사권 개혁 및 자치경찰제 안착 등 주요 추진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과 현장 중심의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집행으로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을 개선하고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기여도 제고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현장에서의 원활한 정책수행을 뒷받침하고 치안인프라를 확충, 선진국 수준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 치안역량 강화 기반 조성

– 치안 여건변화를 반영한 계속·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전략적 예산확보 추진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수·고용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신속 집행 추진

– 예산집행점검 체계 구성·운영, 중점관리대상사업 관리 및 집행효율화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낭비요인 최소화

○ 신도시 등 치안수요 급증지역의 안정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관서 신축 및 노후시설 개선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 경찰개혁과제 완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 근무환경 개선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하여 대·내외 만족도 향상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2～'26년도 중기사업계획 작성・제출(기재부)	1월	
	'22년도 재정사업 신속집행 계획 수립	1월	
2/4분기	'22～'26년도 중기사업계획 심의(기금 포함, 기재부)	2~4월	
	예산(기금 포함) 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2~5월	
	'23년도 국유기금 공용재산 취득계획 수립·제출	3월	
	'22년도 1분기 집행결과 분석 및 평가 계획 수립	4월	
	'22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 수립 및 하달	4~5월	
	'23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편성 협의·조정	4~5월	
	'23년도 우리청 예산안 편성(설명회·심의회)	3~5월	
	'23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제출(기재부)	5~6월	
3/4분기	'23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안(정부안) 협의・심의	6~8월	
	'23년도 예산안(정부안) 협의・조정(기재부)	6~8월	
	'22년도 2분기 집행결과 분석	7월	
4/4분기	예산국회 심사 대응(기금포함, 행안위・예결위・기재위)	9~12월	
	'22년도 3분기 집행결과 분석	10월	
	'22년도 재정집행 평가	10월	
	예산 이월・불용 실태 점검	10~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및 경찰청 소속 全 직원

○ 이해관계집단 : 기획재정부·국회 등 외부 기관

□ 기대효과

○ 선진 치안인프라 구축 및 현장치안역량 강화로 치안강국으로 도약

○ 환경변화와 내·외부 고객 요구에 부응한 「예산편성-확보-집행-평가-환류」 시스템 구축, 재정성과 평가체계 확립 등 책임성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해당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3">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2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th></tr>
<tr><th>'19</th><th>'20</th><th>'21</th><th>'22</th></tr>
<tr><td>재정지원도(공통)</td><td>45.49</td><td>45.62</td><td>45.97</td><td>46.33</td><td>하단 참조</td><td>① 예산확보수준×40%
+
② 예산집행률×30%
+
③ 국유재산증가율×30%</td><td rowspan="4">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관련 공문 등</td></tr>
<tr><td>① 예산확보수준
(40%)</td><td>55.7</td><td>53.7</td><td>55.0</td><td>55.0</td><td>○ 최근 취약계층 경제회복, 디지털·녹색성장 등 미래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재정 운용 여건상 예산증액은 어려움
○ 다만,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대응, 책임수사 내실화 등 국민편익 증진 예산확보 노력으로, 최근 3년 평균(54.8%)보다 개선된 55%로 목표 설정
(억원)
<table>
<tr><th>총지출</th><th>'19</th><th>'20</th><th>'21</th><th>'22
(목표)</th></tr>
<tr><td>분야</td><td>208,371</td><td>223,050</td><td>223,182</td><td rowspan="3">55.0</td></tr>
<tr><td>경찰청</td><td>116,165</td><td>119,689</td><td>122,852</td></tr>
<tr><td>비중(%)</td><td>55.7</td><td>53.7</td><td>55.0</td></tr>
</table></td><td>(경찰청 총지출
/공공질서및
안전분야 총지출)
×100</td></tr>
<tr><td>② 예산집행률
(30%)</td><td>73.6</td><td>76.0</td><td>74.9</td><td>74.9</td><td>○집행률 지표는 정책(감액추경)과 외부적 요인(코로나19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표로, 동일 조건 내의 추세치 반영이 어렵고, 최근 3년 실적도 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20년 집행률(76.0%)은 2,562억원 감액추경으로 예산현액이 크게 줄어들어 집행률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감액추경을 미반영한 실질적 집행률은 74.4%로 하락
○22년도는 오미크론 등으로 집행 여건이 좋지 않지만, 최근 3년 평균(74.8%)보다 높고 사실상 임계치에 가까운 '21년도 집행실적(경찰청 역대 최고 실적 / 정부 부처 1위) 수준인 74.9%로 설정, 역대 최고 집행률 달성 도전</td><td>(3분기까지 집행액
/연간관리예산*)
×100
* 연간집행관리예산은 기재부에서 설정하며, 경찰청 총지출의 97%</td></tr>
<tr><td>③ 국유재산증가율
(30%)</td><td>3.78</td><td>4.45</td><td>5.01</td><td>6.19</td><td>○ 3년 평균 실적(4.42%) 및 연평균 증가율(4.7%)보다 높은 6.19%로 역대 최고 수준의 도전적인 목표 설정
※'21년 컨설팅 의견을 반영, 지표 변경하여 대표성 강화</td><td>(당해년도 국유재산
결산액 / 전년도
국유재산 결산액)
x100
※국회 결산 심사액 기준</td></tr>
</table>

52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치안정책·현안에 대한 신뢰·지지기반 마련

□ 추진배경

○ 경찰개혁과제 시행과 함께 '여성·아동·사회약자' 등 민감이슈가 부각되며 경찰 관련 뉴스 증가 등 치안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 집중

※ 전년 대비 <뉴스 언급량> 57만건 → 64만건(12%↑)
<SNS 언급량> 49만건 → 55만건(12%↑)

○ 특히, ▵층간소음 흉기난동 ▵스토킹 피해자 피습 등 논란으로 저하된 경찰 법집행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한 상황으로 주요 치안정책 및 부정 이슈에 대한 신속·정확한 홍보활동 전개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치안정책 전략 홍보

– **(수사권 개혁)**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권 조정의 긍정적 효과가 재해석될 수 있도록 종합적·객관적 수치를 토대로 기획기사, 기고 등 추진

‣ 수사 역량, 처리 지연 등 **언론에 보도된 주요 비판 쟁점**에 대하여 **국민 편익 관점에서 긍정적 변화 지표 및 통계적 수치 등 강조** (전체 수사기간 6일 단축, 형사절차 조기 해방 등)
‣ 아울러, ▵수사경찰 전문성 향상 ▵현장수사 역량 지원 및 강화 등 추진사항 적극 설명

특히, 검찰과 대립·갈등이 아닌 '협력' 관계 부각 및 보이스피싱 등 개별 수사성과 시리즈 홍보로 제도 안정화 공감대 확산

– **(자치 경찰)** 주민밀착형 생활치안 지표 변화 등 유의미한 통계 및 실질적인 주민 편익 증진 효과로 나타난 긍정사례 발굴·홍보

※ 국민 편익 관점에서 제도 도입 전후 차이점, 제도 유지 필요성 등 적극 강조

– **(서민침해사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등 서민생활범죄 단속 성과의 지속 노출을 통해 경각심 및 체감안전도 제고

※ 종합성과 보도자료 배포 등 단발성 홍보에 그치지 않고, 특이사례·범죄 시사점·성과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수사향방·제도개선 사항 등 개별 요소도 홍보아이템으로 활용

특히, 올해 구성 예정인 '다중피해 사기범죄 대응 T/F'와 협업, 성과·사례를 알기 쉽게 홍보하여 서민침해사범 척결 메시지 확산

- **(교통안전)** ▵안전속도 5030 ▵도교법 개정 ▵교통약자 안전정책 등 교통정책 안착을 위한 정책수용도 중심의 홍보활동 전개

  ※ 교통안전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연구자료·통계자료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제작하여 경찰청 페이스북·유튜브 등 SNS 채널 공유 확산

  보행자 통행 우선권 관련 ▵전문가 기고 ▵공익광고 ▵기획보도 등을 통해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환경 조성

- **(피해자 보호)** ▵인공지능형 CCTV 도입 ▵피해자 경제·심리 지원 연계 사례 ▵스마트워치 활용 피해자 안전조치 등 홍보

- **(학폭 예방)**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은 SNS·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 적합한 맞춤형 홍보콘텐츠 제작, 학교폭력 예방 붐 조성

- **(기타)**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젠더갈등 등 반복적 이슈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지속 홍보

○ **위기·이슈관리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 **(부정이슈 관리)** 발생 초기부터 해당 기능·시도청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팀 운영, 유기적인 협조로 비난 이슈 확산 최소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보도는 즉시 수정 요청하고, 명백한 오류에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적극 대응

- **(온라인이슈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슈 감지, '온라인 ↔ 기성 언론' 연동한 대응 체계 마련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형태의 해명 ▵방심위 등을 거쳐 삭제 등 시정 요청 ▵불법행위는 내·수사 의뢰 順 대응

○ **브랜딩*을 통한 경찰 이미지 제고**

* 소비자가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이나 감정을 이르는 말로, 이를 통해 △긍정 이미지 △신뢰와 투명성 구축 가능

– **(브랜딩 홍보 기반 구축)** △콘텐츠 제작 환경 고도화 △MZ세대 트렌드 반영 맞춤형 모델링 등 브랜딩 홍보를 위한 인프라 확장

- **(감성·소통 콘텐츠)** 국민 사연공모를 통해 기억 속에 남은 고마운 경찰관과 사연자를 만나게 해주는 '폴-영웅' 시리즈를 통해 감동과 참여 효과 창출
- **(체험·리얼리티 콘텐츠)** 시민 진행자가 경찰을 직접 소개하는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현장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자료 관리·보관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

특히, 경찰 긍정 이미지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우수·미담사례 언론↔SNS 선순환 홍보 △인플루언서 채널 콜라보 등 협업 확대

- **(선순환 홍보)** △국민 안전 확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난해 **총 130건 선순환 홍보**
- **(협업)** △유튜브 '김복준-김윤희' 채널(38만명) △네이버 'jobsN(56만명)' 등과 콘텐츠 공유

– **(투트랙 홍보)** 국민과 늘 함께 하는 경찰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치안정책 연계 캠페인 + 현장 우수사례' 등 투트랙 홍보

【캠페인】 주요 추진 정책 관련,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경찰-시민 안전공동체' 이미지 지속 형성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정책을 테마로 △광고기획사 △유명 유투버 △인플루언서 등과 콜라보 캠페인 추진, 콘텐츠 질 향상 및 화제성 도모

【현장 우수사례】 현장 경찰관 및 시민 활약상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주기적 우수사례 선정·홍보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부각

※ '21년 홍보활동 인식도 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경찰청 SNS 콘텐츠 유형으로 모든 연령층이 실제상황 영상(CCTV·블랙박스·바디캠 등)을 1위로 선정(54.3%)

< '22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국 홍보담당관 화상회의	'22.2월	
	'22년 경찰청 주요정책 전략홍보 로드맵 수립	'22.3월	
	정책 기자단 선발	'22.3월	
	경찰 인재풀 선발(화보·촬영·시나리오 등)	'22.3월	
2/4분기	방송·영화 제작진 경찰교육기관 교류 강연 등 지원	'22.5월	
	정책인지도 조사	'22.6월	
3/4분기	상반기 이슈 대응 분석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수립	'22.7월	
	미디어트레이닝	'22.8월	
4/4분기	경찰의 날 영상 제작·배포	'22.10월	
	경찰 홍보활동 인식도 조사	'22.11월	
	'22년 방송·영화 제작진 교류지원 성과 및 '23년 활성화 계획 수립	'22.12월	
연 중	경찰청 SNS 라이브 방송(Polive) 실시	월 1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 언론사, 정부부처 홍보부서, 경찰청 정책부서

□ 기대효과

○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쌍방향(interactive) 홍보를 통해 치안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정책 추진 기반 확보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맞춤형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 정립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대국민 치안정책 제공(Ⅳ-4-일반재정④)			
① 대국민치안정책제공(7134)		15	15
■ 대국민소통강화(311)		13	13
■ 경찰청홈페이지운영(511)		2	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9	'20	'21	'22			
경찰청 SNS 활동지수 (30%)	1,607,621	1,708,794	1,764,736	1,800,030	5채널 친구 수	하단참조	각 계정 통계 활용
	-	-	-	564,433	5채널 좋아요 수		
	1,274	1,367	1,806	1,482	5채널 콘텐츠 수		
	528,095	819,134	886,361	744,530	블로그 기사 조회 수		
	-	-	16건	18건	경찰 내부 직원 활용 유튜브 조회 10만 이상 콘텐츠 수		
주요 치안정책 언론홍보 노력도 (40%)	1,029건	1,100건	1,260건	1449건	전년 대비 약 15%를 상향한 목표치 설정(월 120건)	하단참조	언론보도 실적 취합
온라인이슈 및 오보대응 활동(30%)	224건	238건	235건	244건	최근 3년 실적 평균치(232건)에서 5% 상향 수치(244건)를 목표치로 설정	하단참조	오보대응 및 이슈대응 실적 취합

【성과지표】

① 경찰청 SNS 활동지수(30%)

○ 측정산식 : 1) 경찰청 SNS 5채널 친구 수(8%)
2) 경찰청 SNS 5채널 좋아요 수(8%)
3) 경찰청 SNS 5채널 콘텐츠 수(8%)
4) 블로그 기사 조회 수(3%)
5) 경찰내부 직원 활용 콘텐츠 건수(3%)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2. 1. 1. ~ '22. 12. 31.
- 측정수행기관 : 5채널 통계(페이스북, 유튜브<공식+정책>, 카카오스토리, 밴드)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각 계정 친구수, 좋아요수, 콘텐츠수, 기사조회수 확인

○ 목표치 설정근거

1) 목표치(1,800,030명) = 1,764,736('21년 실적) x 1.02
2) 목표치(564,433개) = 134,389(1분기 실적) x 4(1년 추정치) x 1.05
3) 목표치(1,482건) = {1,274('19년)+1,367('20년)+1,806('21년)} / 3
4) 목표치(744,530건) = {528,095('19년)+819,134('20년)+886,361('21년)} / 3
5) 목표치(18건) = 16건('21년 실적) x 1.1

○ 지표설정 필요성

- 경찰청 SNS 홍보 활성화 정도를 양적·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친구 수, 콘텐츠 수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좋아요 수를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주력 채널인 **유튜브(공식+정책), 페이스북**, 다수의 친구를 보유한 **카카오스토리와 밴드**를 목표채널로 선정

- 각 지표 증가폭이 이미 양적 임계치에 도달, 매년 제로베이스 지표인 **'콘텐츠수', '블로그기사 조회수'**는 **이전 3년간 실적의 평균치를 목표치**로 설정

- 다만, 누적 지표인 **'친구수'**는 **전년 실적 대비 2% 상향**, 신규지표인 **'좋아요 수'**는 1분기 실적 대비 1년 추정치(x4)에 5% 상향하여 도전적으로 설정

  ※ **평가위원 컨설팅을 반영, 실제 콘텐츠의 만족도와 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성 지표인 '좋아요 수'를 포함**, 기존 '도달수' 지표는 △콘텐츠 퀄리티와 상관관계 부족 △광고·자극적 콘텐츠 생산 등 부작용 우려로 대체

- 또한 경찰 내부 직원(영상 크리에이터, PD, 아나운서 출신 등)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제작건수 및 조회수* 지표는 **전년대비 10% 증가를 목표로 예산절감 효과 창출**

  * 유튜브 조회수 10만 이상 콘텐츠 연간 15건 이상(실제상황 영상 포함)

② 주요 치안정책 언론홍보 실적(40%)

○ 점수 산출

- **연간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관련 보도건수 평가**(본청 출입 35개 언론사)

  ※ <국정과제>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정책>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예방 등 정책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2. 1. 1. ~ '22. 12. 31.
- 매월 대변인실 홍보협력계 업무 담당자 취합・평가

○ 지표설정 필요성

- **언론은 국민들이 정책・뉴스를 접하는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경찰청 주요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알려,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

○ 목표치 설정근거

- 전년 실적 대비 15% 상향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1,449건)

③ 온라인 이슈 및 오보대응 활동(30%)

○ 점수 산출 : 연간 온라인 이슈 및 오보 대응 건수를 평가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2. 1. 1. ~ '22. 12. 31.
- 매월 대변인실 업무 담당자 취합・평가

○ 지표설정 필요성

- 온라인 이슈 및 오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 허위·왜곡된 정보의 확산 차단

○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 실적(224-238-235건) 평균치의 5% 상향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244건)

  ※ 단, 오보 및 온라인 이슈 발생 후 24시간 이내 대응・조치된 건에 한해 인정

Ⅳ. 환류 등 관련 계획

4.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1) 기본 방침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주기적 과제 점검 및 정책 반영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제4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는 반기 1회 과제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성과 미흡과제에 대한 보완 필요사항 발굴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으로 이행상황 점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

– ▵교수 ▵법조인 ▵언론인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경찰청 성과관리 이행상황에 대한 객관적 점검 실시

(2)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조직

○ 자체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 27명(▵교수 ▵연구원 ▵언론인 등)과 내부위원 3명(차장·기획조정관·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구성

※ 관련근거 :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1030호)

○ 자체평가위원회는 '전체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로 운영

– **전체위원회**는 성과관리 전략(5년 단위)·시행계획(1년 단위) 및 자체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치안정책 방향 공유 등 진행

– **분과위원회**는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주요과제의 사전 컨설팅, 이행상황 점검, 본평가, 이의제기 심사,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활동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자체평가위원의 평가업무 지원 및 성과평가 제도 안내·교육, 평가지침 수립·제공 등 담당

(3) 이행상황 점검 세부 계획

○ 국조실「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및「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을 바탕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주관 점검 실시

-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 자체평가위원 및 전문가의 과제별 컨설팅 및 내부 구성원 대상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계획 수립
- **중간 점검** : 분과위원회별 1개의 부진과제 선정하여 집중 관리
- **최종 점검** : 자체평가위원이 평가기준에 맞추어 대상과제 점검

【 이행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일정 】

구 분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전문가 대면컨설팅	**3월**	■ '22년 경찰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지표 수립의 적절성, 목표치의 적극성 등에 대한 전문 평가위원 컨설팅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4월**	■ '22년 정책방향 공유 ■ '22년 자체평가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및 해촉위원 해촉식 진행
상반기 추진실적 중간점검 실시	**7월**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여 평가에 반영
자체평가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8~9월**	■ 평가위원의 치안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방문 ※ 코로나19 확산 관련, 유동적으로 실시
본 평가	**11월**	■ 각 과제에 대해 추진과정, 목표달성도, 평가결과 활용 여부 등을 종합 평가
추가 평가	**'22. 1월**	■ '22년 실적 최종치 및 추진계획 이행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 ※ 행정관리역량평가 병행 실시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	**'22. 3월**	■ 성과평가 결과 반영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

(4) 부진과제 관리 방안

○ **<성과관리지원팀>** 혁신조정담당관·성과관리계장 및 외부전문가 등 구성, 컨설팅 및 중간점검 과정에서 선정된 부진과제에 대해 집중관리

구 분	역 할	담 당
총괄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총괄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등	성과관리계장
분과별 지원팀	자체평가 계획 및 실시, 분과위원회 평가업무 지원, 평가자료 취합·검토	자체평가 담당자 등 3명
	분과별 미흡과제 심층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등	외부전문가

○ **<부진과제 선정>** ▵추진계획 준수 정도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업무추진 과정 협업도 ▵정책소통 및 환류 등 4개 항목 점검

※ '22년 분과위원회별 과제(평균 8.6개) 중 부진과제(분과별 1개, 하위 11%) 선정

○ **<부진과제 관리>** 부진과제는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관리하고 본평가 時 이행여부를 평가에 반영('정책 환류 노력' 평가지표)

– 성과관리지원팀이 과제별 개선·보완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미흡사항을 지원하는 등 부진과제 성과향상 도모

– 본평가(11월)에서 부진·개선 필요과제의 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최종결과는 내년도 과제·지표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 구축

【 부진과제 관리체계도 】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 성과관리 제도 간 연계

【 관리과제(자체평가 정책과제) 평가 ⇨ 치안종합성과평가 ⇨ 성과급 】

○ 시행계획 관리과제 평가결과를 경찰청 내부 평가제도인 치안종합성과평가와 연계, 본청의 조직(부서) 및 개인 평가에 반영

부서평가

평가요소	국·관	과	계
관리과제(정책과제) 평가	50%	50%	50%
부서 기본업무	50%	50%	50%

개인평가

구분	국·관	과장	계장	일반직원
부서평가(100~50%)	100%	90%	60%	50%
기여도평가(50~0%)	-	10%	40%	50%

○ 평가결과를 개인 성과급(성과상여금·성과연봉) 결정에 반영

구분	평가항목				합계
	관리과제	기본업무	개인기여도	역량평가	
국·관	40	40	-	20	100
과장급	36	36	8	20	100

구분	평가항목				합계
	관리과제	기본업무	개인기여도	역량평가	
계장급	24	24	32	20	100
일반직원	20	20	40	20	100

(2) 평가결과의 활용

○ 조직 부문

– 중간점검을 활용하여 치안정책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성공·실패사례 공유 및 향후 정책 수립·추진에 반영

– 직제개정, 소요정원 요구 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업무 프로세스 향상 방안 마련 및 예산 수립에 주요 판단자료로 활용

○ 개인 부문

– 성과중심 조직운영 정착을 위해 환류 범위를 지속 확대하되, 성과관리제도 정착 및 수용도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

– 개인별 성과평가 이력관리제를 통해 개인·부서의 성과보고서 및 평가결과를 누적 관리, 승진·보직인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성과우수 관서·부서·개인에게 표창 및 포상금 수여, 특별승급, 성과급 지급, 교육 기회 부여 등 'Positive 환류 방식' 운용

【 평가결과 활용 범위 】

구 분	활 용 범 위	주 요 내 용
혁 신 기 획 조 정	**치안종합성과평가**	본청 부서평가에 반영(50%)
	성과연봉·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80%)
	우수관서 포상	우수관서 선발기준으로 활용
	우수부서 포상	우수부서 선발기준으로 활용
인 사	**심사승진**	개인평가 등급을 심사승진 참고자료로 활용
	특별승급	정책과제 상위 20% 부서
교 육	**국비 국내대학원 선발**	최근 3년간 평가결과를 객관평가에 반영 최근 3년간 2회 이상 C등급 시 선발 배제
	국비 유학생 선발	
외 사	**주재관 선발**	최근 3년간 평가결과를 객관평가에 반영

3 변화관리 계획

(1)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 운영

【 조직 전반의 개혁·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의 기반 마련 】

○ **<인력 효율화>** 책임수사·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과제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기능·지역간 업무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원 조정 추진

– 치안환경 변화·신규업무 발생 등 치안정책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경찰인력이 시급한 곳에 재배치, 조직 운영의 효율성 증진

○ **<적극행정 활성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성화 ▵인센티브 강화 ▵국민체감형 과제 발굴 등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성과 창출 독려

–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합리적 평가·보상체계 운영>** 관서·부서·개인의 평가결과를 성과급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협업을 유도하면서도 개인 성과달성에 동기부여

※ 자체 성과관리시스템 활용, 평가기간 동안의 개인별 보직이력을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과 그 보상을 합리적 연계

○ **<성과기반 인사정의 실현>** 개인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개인등급을 승진·보직인사·각종 선발 등 인사 전반 참고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평가결과 상위부서(상위 20%)에 특별승급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여 업무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 및 만족도 제고**

※ 국조실에서는 매년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환류성 강화를 권고

⇨ '22년은 **평가등급 '우수' 이상 11개 부서에 특별승급 부여**

【 종합적·입체적 시책 창안 및 정책 환류·점검으로 미래성과 견인 】

○ **<위드 코로나 시대 사회현안 대비>** 급변하는 치안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업무체계와 인재양성 시스템을 혁신하고 지능형 치안행정 구현

– 급변하는 미래 대비, 탄탄한 제도기반을 토대로, 한 세대 앞을 예측하는 기술·인력·장비 등 투자 및 실행계획을 수립, 미래 추동력 확보

○ **<경찰활동 모니터링>**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현장직원의 평가와 의견을 지속 수렴·분석

– 국민의 만족에 대한 대표적인 결과지표인 체감안전도·고객만족도를 비롯하여, 개별 정책 시행 전후 모니터링한 결과를 환류에 활용

※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비교분석 수행 (관서간 비교, 취약분야 확인, 시계열 추이관찰 등) 및 시각화자료 현출

○ **<통계 인프라 확충>** 매년 신규지표를 반영한 「경찰통계연보」를 발간, 주요지표의 성과측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 관리

– 사이버경찰청 웹사이트에 경찰통계연보·기능별 통계 등을 적극 공개함으로써 경찰의 주요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2) 성과지표 개발·관리 노력

○ **<전문가 성과지표 컨설팅>** 관리과제 지표 설계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의 대면컨설팅을 거쳐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매년 1/4분기)

※ 성과지표의 대표성·중요성·적정성 등을 체크리스트로 평가, 지표 보완·개선에 반영

○ **<성과지표 Pool 및 이력관리>** 자체 치안성과관리시스템을 이용, 2006년부터 각 부서별 성과지표 Pool 운영 및 이력관리 실시

○ **<성과지표 일몰제 운영>** 매년 全 지표를 원점에서 재검토, 최근 3년간 목표치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지표 개선방안 마련

【 외부전문가 평가단 구성 현황 】

분과	담당 분야	과제수	분과위원회 명단	
			분과위원장	위원
1	기획 / 홍보 / 정보화	8개	최여경(분과위원장)	조준억, 안상현, 조순열
2	경무 / 감사	8개	송건섭(위원장)	이승은, 임현, 이연주
3	경비 / 정보 외사 / 치안상황	10개	서찬동(분과위원장)	이은영, 박성하, 박형준, 정의석
4	수사 / 형사 / 사이버	10개	김수진(분과위원장)	장다혜, 신승근, 조은경, 이동근
5	수사기획 / 수사인권 과학수사 / 안보수사	8개	금현섭(·분과위원장)	박미랑, 전현정, 장윤정
6	생안 / 교통 / 자치경찰	8개	조진형(분과위원장)	김상옥, 김경희, 백승엽, 권태경

['22년 정책과제 컨설팅 결과]

- ▸ 일시 • 장소 : '22. 3. 15.(화) ~ 3. 18.(금),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서면진행
- ▸ 컨설팅대상 : 본청 부서 정책과제(52개)
- ▸ 결 과 : 정책과제에 대하여 대표성·적극성 있는 지표로 개선을 유도하고, 업무절차 개선 권고 등 총 52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 실시

4 현장의견 정책반영 계획

(1) 기본 방침

○ **<개요>** 주요과제 중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선정, 「기획→집행→환류」 全 단계에서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반영

○ **<대상과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치안정책을 선정

– 국정과제·연초 업무보고 등에 포함된 주요과제 중 현장의견 수렴 및 환류의 필요성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수렴 진행

※ 필요 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추가 가능하며, 안보사업 등 특수정책 분야와 법령상 비공개대상 사업 등 공개적 의견수렴이 어려운 과제는 제외

【 '22년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

연번	부서	정책과제
1	범죄예방정책	예방지향적 정책 고도화로 치안활동의 효과성 제고
2	자치경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
3	정보분석	범죄·재난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정보분석으로 국민안전 확보 기여
4	아동청소년	아동학대·학교폭력 선제적 예방 및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5	여성안전기획	여성보호 치안정책 내실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6	교통안전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7	사이버수사기획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8	외사기획정보	선제적·예방적 외사경찰 활동을 통한 사회안전 확보
9	반부패	반부패·공공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10	생활질서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치안 역량 강화 및 성매매 등 유흥시설 불법행위 합동단속
11	인권보호	인권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스템 구현
12	수사인권	수사상 인권과 피해자 중심의 경찰활동 전개
13	디지털포렌식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14	과학수사	증거 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15	감사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16	양성평등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2) 과제별 의견수렴 방법

○ **<주체>**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담당부서 및 과제담당자로,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조사전문기관 등 활용 가능

○ **<시기>** 해당 정책의 '수립 → 집행 → 평가 → 환류' 全 과정

○ **<대상자>** 정책 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유관기관·관련단체 등) 및 현장직원 등 적정 대상자 선정

○ **<방식>** 해당 정책의 효과발생 예상시기, 정책수요자,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적합한 의견수렴 방식 선정

※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설문조사 △전문가회의 등

(3) 의견수렴 관리 체계

○ **<결과 관리>**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성과관리계)에서 과제별 현장의견 수렴 결과 파악,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노력도를 자체평가에 반영

※ 본평가 시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배점 15점)' 평가

붙임1-1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3	3	0 (0%)	0 (0%)	0 (0%)	3 (100%)	2 (67%)
성과목표	12	12	0 (0%)	0 (0%)	0 (0%)	12 (100%)	3 (25%)
관리과제	52	152	0 (0%)	0 (0%)	94 (62%)	58 (38%)	140 (92%)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 개선안('19.6.) 반영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6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한다	5대 범죄 검거율	5대 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력	80.0	정량	결과	
Ⅱ.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	기관 신뢰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기관별 신뢰 정도 - 경찰'	2.6	정성	결과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경찰 수용 건수 ÷ 전체 권고 건수 × 100	95	정량	산출	
Ⅲ. 진취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	-	-	-	-	

〈 (참고) 성과지표의 유형 〉

분 류		내 용	예 시
정량적 측정 여부	정량지표(계량지표)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가능 (평가자 주관 개입 불가)	10만 명당 5대 범죄 발생율
	정성지표(비계량지표)	양적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 (평가자 주관 개입 가능)	체감안전도
정보의 성격	투입지표(Input)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	투입 예산액
	과정지표(Process)	사업 진행 과정의 산출물	사업 진도율
	산출지표(Output)	사업완료 후 1차적 산출물	교육 수료자 수
	결과지표(Outcome)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단속·검거율 / 대상자 만족도

※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과지표 활용이 바람직하나, 결과지표 측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산출지표 사용을 권장(국조실 「성과지표 개발·관리 매뉴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Ⅰ.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한다						
1. 민생치안 역량 강화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사회안전성 인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6.5	정성	결과	국가승인 통계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범죄안전도	경찰청 주관 대국민 전화조사 (외부 조사업체 이용, 일반 국민 총 51,400명 대상)	84.3	정성	결과	
3. 선진교통질서 확립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교통문화 지수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82.2	정성	결과	국가승인 통계
4.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제·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사이버범죄 검거율	'21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69.2	정량	결과	
전략목표Ⅱ.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						
1.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부패인식지수(CPI)	국제투명성기구(TI) 주관 부패인식수준 조사	63	정량	결과	국제평가 지수 (CPI)
2.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인권침해 권고율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권고건수÷ 전체 권고건수×100	8.8	정량	결과	
3.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수사·형사 분야 치안고객만족도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 알림톡(카톡) 이용 수사·형사 분야 접촉고객 실시간 전수조사	66.5	정성	결과	
4.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안전체감도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의식 조사	3.15	정성	결과	
전략목표Ⅲ. 진취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인사·성과·교육 부문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인사·성과·교육 분야 조사결과 평균	82.0	정성	결과	
2. 강력한 반부패 정책 등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행정을 구현한다	조직문화 부문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조직분위기·성인지 분야 조사결과 평균	88.0	정성	결과	
3.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장비·시스템 부문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장비·시스템 분야 조사결과 평균	86.0	정성	결과	
4.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복지 부문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복지 분야 조사결과 평균	77.8	정성	결과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Ⅰ.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한다							
성과목표 1. 민생치안 역량 강화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예방지향적 정책 고도화로 치안활동의 효과성 제고	탄력순찰 이행도	탄력순찰 희망장소와 순찰차 순찰궤적 間 일치율	80%	정량	결과	
		CPTED사업 노력도	(경찰 제안으로 추진된 셉테드 사업 건수) ÷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셉테드 사업 총 건수) × 100%	85%	정량	산출	
	자치경찰제 내실화	경찰청-시도자치경찰위원회 間 '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경찰청-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間 '정책협의체' 운영 실적에 따라 점수 산정	70점	정량	결과	
		자치경찰제 법령 지원 강화	자치경찰제 관련 법령 개정, 지침 개선·수립 및 질의 회신 등 실적에 따라 점수 산정	70점	정량	결과	
		자치경찰제 교육·홍보 등 대내외 공감대 확보	▵교육 ▵설명회 등 ▵대외 설명자료 제작 ▵대국민 홍보로 분류, 4개 분야 점수 합산 후 도출	80점	정량	결과	
	112중심 치안상황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수호	①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①신속성·성실성·전문성 등 요소 만족도 + ② 전반적 만족도 수치를 가중치(70 : 30)에 따라 환산 (경찰청고객만족모니터 센터)	90.3점	정성	결과	
		②112신고 현장업무 처리 만족도	① 신속성·지원성·성실성·청렴성·전문성·공정성 등 요소 만족도 + ② 전반적 만족도 수치를 가중치(70 : 30)에 따라 환산 (경찰청고객만족모니터센터)	88.9점	정성	결과	
		③ 위기관리역량지수	시도청·경찰서별 훈련 + 경찰서별 교육 횟수	1,500점	정량	결과	
	민생침해 범죄, 중요 사건사고 신속·엄정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살인·강도·절도 통합 검거율	범죄통계시스템, 즉결 및 통고처분 시스템	65.6%	정량	산출	
		생활 주변 폭력 사범 검거인원	검거 인원 수기 통계(월보) 취합	80,172명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인피뺑소니) 사건 처리 신속도	범죄통계시스템	73.7%	정량	산출	
	범죄·재난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정보분석으로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재난·안전사고 등 예방적 정보활동 우수사례 질적 향상	표창·장려장 수여 우수사례 (배점표 기준 산출)	30점	정량	결과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지수	(배당<열람> 건수 ÷ 제출 건수) × 100	39.1%	정량	결과	
		재난 안전정보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재난 안전정보 분석 내실화(50) + 전문성 제고 노력도(50)	70점	정량	결과	
성과목표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동학대·학교폭력 선제적 예방 및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선도프로그램 연계율(공통)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 전체 소년범) × 100	37.8	정량	결과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률	(재입건인원 ÷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 100	19.3	정량	결과	
		아동학대 보호조치율	(보호조치 ÷ 아동학대 112신고건수) × 100	14.7	정량	결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강화	성폭력범죄 검거현황	▸각 시도청별 최근 5년 미검건수 중 최대·최소 연차를 제외한 3년 미검건수 평균치를 산출, -평균치 대비 5% 향상 여부	3년 평균 미검건수 대비 5% 상향	정량	산출	
		아동학대 임시조치율	▸각 시도청별 최근5년('17년~'21년) 아동학대 처리건수 中 최대, 최소 연도는 제외 ▸해당 3년 全 시도청 평균 신청율 5% 이상 달성 여부	3년 평균 아동학대 신청율 대비 5% 상향	정량	산출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율	▸최근 3개월('21.11월~'22.1월) 시도청별 잠정조치 신청율로 1년 추세치 산출, - 추세치 5% 이상 달성 여부	'22년 잠정조치 추세치 대비 5% 상향	정량	산출	
	여성보호 치안정책 내실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율(공통)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연계 건수(20%) + 피해자 보호지원 건수(80%) / 성폭력 발생건수] × 100	54.5	정성	산출	

<table>
<tr><th rowspan="2">성과
목표</th><th rowspan="2">관리과제</th><th rowspan="2">성과지표</th><th rowspan="2">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th><th rowspan="2">'22년
목표치</th><th colspan="2">지표 종류</th><th rowspan="2">비고</th></tr>
<tr><th>정량화</th><th>성격</th></tr>
<tr><td></td><td></td><td>가정폭력
사건대응지수(공통)</td><td>[(가정폭력 검거건수 +
피해자 보호조치 건수)
/가정폭력 실신고 건수] ×100</td><td>62.3</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td><td></td><td>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율(공통)</td><td>(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건수) / 스토킹 실신고
건수 × 100</td><td>31.3</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 colspan="8">성과목표 3. 선진교통질서 확립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td></tr>
<tr><td rowspan="5"></td><td rowspan="2">'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td><td>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td><td>성과목표별로 제시한
측정방법 등을 인용하여
제시</td><td>-8.3%</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td><td>성과목표별로 제시한
측정방법 등을 인용하여
제시</td><td>-4.7%</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 rowspan="3">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는 교통체계 구축</td><td>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등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도</td><td>① 법령개선: 건당 배점
< 배점 >
<table><tr><th>법</th><th>대통령령</th><th>부령</th><th>훈령 및 지침</th></tr><tr><td>5</td><td>3</td><td>2</td><td>1</td></tr></table>
※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의 경우,
가중치(300%) 부여
② 기관협업도: 부처별
협업 사항을 건당 배점
<table><tr><th>외국 협업</th><th>정부 기관</th><th>민간 기관</th><td>타 국관</td></tr><tr><td>5</td><td>3</td><td>2</td><td>1</td></tr></table></td><td>132</td><td>정량</td><td>산출</td><td>국회의
안정보
시스템</td></tr>
<tr><td>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공통)</td><td>고령운전자 야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 65세 이상
면허소지자×1만</td><td>1.54</td><td>정량</td><td>결과</td><td>교통경
찰업무
관리시
스템</td></tr>
<tr><td>장애인운전지원센터
교육 실적(교육인원)</td><td>전국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교육 인원</td><td>2,900명</td><td>정량</td><td>결과</td><td>도로교
통공단</td></tr>
<tr><td rowspan="2">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td><td>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
<60%></td><td>(당해년도 월평균
교통사고 심각도
지수*12)
* 교통사고 심각도지수
=[(273×사망자수)+(32×
중상자수)+(2×경상)+(1×
부상)] / 차량등록대수</td><td>0.107</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율 (40%)</td><td>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중 사망자 수 ÷
(해당연도
인구÷100,000)</td><td>1.7</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 colspan="8">성과목표 4.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제・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td></tr>
<tr><td></td><td>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td><td>사이버 첩보
활용 지수</td><td>B등급 이상 첩보 건수/
전체 첩보 건수</td><td>26.8%</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able>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사이버 국제공조 효율성 지수 (50%)	(글로벌 IT기업 공조' 효율성 지수 + '해외 법집행기관 공조' 효율성 지수	340%	정량	결과	
	민생 사이버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사이버 민생범죄 검거지수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성폭력 검거지수의 합계 / 3	53	정량	결과	
		피해 보호조치 증가율	{('21년 피해보호조치(삭제·차단) 요청건수 ÷'21년 적정 요청건수)-1}×100	80	정량	결과	
	사이버테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 건수	단순 계정도용을 제외한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검거 건수	761건	정량	산출	
		피해 보호조치 건수	악성프로그램 유포·개인정보 불법수집 사이트 차단 건수	150건	정량	산출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국외도피사범 송환인원	국외도피사범 송환 D/B	349	정량	산출	
		인터폴 조직 및 D/B 활용도	인터폴 전용통신망 DB 관련 활동 내역	129	정량	산출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실적	재외국민보호 관련 활동 내역	92.96	정량	산출	
	선제적·예방적 외사경찰 활동을 통한 사회안전 확보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 월별실적* 합계 / 실적산출월수×100 *∑활동별(가중치×수혜자수)/체류외국인수	0.427	정량	산출	
		외사정보 활용도	- 양적평가(건당 1점) + 질적평가(평가주체별 1~10점)	2,775	정량	산출	
		대테러·방첩 활동 실적	- 외사 보안사업 개척점수(건당 10~40점) + 교육점수(건당 1~3점)	918	정량	산출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제교류지수	①국제교류{MOU협조·체결)×0.3 + 청·차장급 교류×0.2 + 국·과장급 이하 교류×0.1} + ②정부치안외교지원{정부부처·국제기구 협력×0.25 + 국내외 의제발굴·사업지원×0.15}	**21**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치안인프라 전수지수	∑(치안인프라 전수 사업별 파견.교육기간 × 교육인원)	**31.9**	정량	산출	
		홍보지수	① 국외 홍보건수 *0.4 + ② 국내 홍보 건수*0.3 + ③ 내부 홍보 건수*0.3	**12.15**	정량	산출	
전략목표Ⅱ.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							
성과목표 1.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반부패·공공범죄 검거 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 인원	'22. 1월~12월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인원	780	정량	산출	
		공직선거 5대 선거범죄 검거율	공직선거 5대 선거사범 송치 인원 / 공직선거 전체 송치 인원	41.0	정량	산출	
	마약류・조직폭력・외국인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마약류 사범 검거성과(40%)	범죄통계시스템	**8,592명**	정량	산출	
		조폭 검거성과	검거인원 수기 통계 (월보) 취합	**2,990명**	정량	산출	
		국제범죄사범 검거성과	검거인원 수기 통계 (월보) 취합	**1,830명**	정량	산출	
	경제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강화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22년 주요 기획수사 검거인원 / 전국 수사관 인원	12.0명	정량	산출	
		전년 대비 전화금융사기 발생 감소율	('22년 발생건수-'21년 발생건수) / '21년 발생건수 × 100	-2.8%	정량	산출	
		1인당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금액	'22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 / 범죄수익추적 전담 인력	30.4억	정량	산출	
	생활 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치안 역량 강화 및 성매매 등 유흥시설 불법행위 합동단속	생활 질서 위반 사범 단속지수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점수** ÷ 생활질서기능 인원수	**생활질서위반사범단속지수 + 근원적 차단활동지수**	**30**	정량	산출
		근원적 차단 활동 지수	**근원적 차단활동점수** ÷ 생활질서기능 인원수				
성과목표 2.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인권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스템 구현	인권영향평가 반영률 (40%)	인권영향평가 의뢰부서 반영 건수 / 권고·의견표명 및 제언 건수 × 100(%)	93%	정량	결과	

<table>
<tr><th rowspan="2">성과
목표</th><th rowspan="2">관리과제</th><th rowspan="2">성과지표</th><th rowspan="2">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th><th rowspan="2">'22년
목표치</th><th colspan="2">지표 종류</th><th rowspan="2">비고</th></tr>
<tr><th>정량화</th><th>성격</th></tr>
<tr><td rowspan="6"></td><td></td><td>한국형 동료개입 프로그램 전문강사 활용률
(40%)</td><td>현장 투입 강사 수 / 한국형 동료개입 프로그램 전문 양성 강사 수 x 100(%)</td><td>103%</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 rowspan="2">'인권 보호'와 '준법역량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td><td>준법 정보활동 노력도 준법관리 역량강화</td><td>(준법관리계 현장 점검 × 70%) + (시도청 자체 점검 × 30%)</td><td>53.5</td><td rowspan="2">정량</td><td rowspan="2">산출</td><td></td></tr>
<tr><td>행정지도 건수</td><td>행정지도 건수</td><td>30회</td><td></td></tr>
<tr><td>정보경찰 전문화 교육</td><td>(교육 실적 × 50%) + (발전 노력도 × 30%) + (교육만족도 × 20%)</td><td>99.28</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 rowspan="3">정보상황 기능 역량 강화로 집회의 자유・인권과 안전・공공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집회문화 조성</td><td>선제적 상황정보 활동 지수</td><td>①사전 정보활동 50%
[합동분석회의 실적 30% +법률지원 실적 20%] +
②대화경찰 운영 실적 50%
[배치율 25%+활동실적 25%]</td><td>61.01</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국민평가</td><td>여론조사 내용 중 집회시위 보장・안전 확보 노력・대화경찰 활동의 효과성 등 주요설문의 긍정 답변율 평균</td><td>55.44</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상황 대응역량 강화율
(25%)</td><td>①교육 이행률 50%,
(年 교육인원 / 목표인원)
+
②분석 역량 향상도 50%</td><td>63.19</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 rowspan="2">수사상 인권과 피해자 중심의 경찰활동 전개</td><td>인권보호 제도 개선(25%)</td><td>[유형별 등급×등급별 점수]
<table><tr><td>등급</td><td>A</td><td>B</td><td>C</td></tr><tr><td>유형</td><td>수사인권 관련 법령 제·개정</td><td>수사인권 관련 행정규칙 및 지침 정비</td><td>인권보장 제도 도입·개선</td></tr><tr><td>점수</td><td>10</td><td>5</td><td>3</td></tr></table></td><td>40</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인권·윤리의식 제고 위한 교육·홍보활동
(25%)</td><td>▸교육: 교육활동 건당 3점 / 교육자료 배포 1점
▸홍보: 언론홍보 건당 5점 / 홍보자료 배부 건당 1점
▸신고절차 개선 : 건당 1점</td><td>30</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able>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건수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건수 + 경제적·심리적·기타지원 건수	43,898	정량	결과	
		회복적 경찰활동 평균 실시 건수	• 회복적 경찰활동 실시 건수 ÷ 운영 관서 수	5.0	정량	산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집회현장 법 집행기준 확립 및 현장대응력 강화	<법집행기준 확립> ▸훈령·지침 제·개정 : 건당 15점 ▸매뉴얼 제작·배포 : 건당 10점 <현장대응력 강화> ▸전국단위 교육훈련 : 건당 10점 ▸전국단위 워크숍 : 건당 5점	65점	정량	산출	
		경찰부대 근무 만족도	▸외부 여론조사 업체 통해 전국 경찰부대원 대상 △근무 △인권침해 △시설환경 △교육훈련 등 만족도 조사(10점만점)	7.0점	정성	결과	
		경찰관기동대 창설 달성도	▸창설부대수 / 18개부대(목표치) × 20	18개 부대 창설	정량	결과	
성과목표 3.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구현	예산·인프라 확보 노력도	예산 확보 수준, 관련 예산 집행률, 관련 사업 진척도	90점	정량	산출	
		책임수사 과제 등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반영도	시스템 반영 건수 / 책임수사 과제 등 전체 기능개선 요청건수 × 100	88%	정량	산출	
		전문 수사 인력 확보	- 전임수사관 인원, - 수사분야 경채자	100점	정량	산출	
		전문 수사인력 양성	- 수사연수원	95점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문·심화과정 수료 인원, - 과·팀장 교육 수료 인원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권 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개정 형소법 현장 정착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법령 개정 검토보고서 및 주무부처 의견조회 등)+(국회·학회·언론 등 배포·대응)}×0.1	21	정량	결과	
		협력적 경·검관계 정착 및 현장수사관 실무지원	{(수사제도 개선 및 국회·정부대응 보고서)+(부당요구 현장진출 및 서류검토)+(실무협의회)}×0.1	8.9	정량	산출	
		수사권 조정의 우호적 여론 및 외연확장과 선진 수사구조를 위한 수사제도 연구	{(전문가 면담 및 유관기관 예방)+(외부강연 및 세미나 등)+(체포구속 등 수사제도 연구)}×0.1	8.9	정량	결과	
	국민중심 책임수사 체제 추진을 위한 인권·현장 중심 제도개선	책임수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3중 심사체계 안착 노력도	신규 지침 수립, 사건심사 건수, 심의위원회 개최횟수, 교육이수율 등 **<지표1 참고>**	70	정량	산출	
		경찰 사건기록 관리체계 등 업무기반 마련	협의 건수, 법령·지침 정비 및 수립, 관련 사업 진척도, 교육 이수율 **<지표2 참고>**	70	정량	산출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구축 노력도	현장점검 횟수, 법령·훈령 개정 횟수, 제도 개선 지침 시행 등 시행 건수, 사건 진행상황 통지율, 수사민원 상담 건수 **<지표3 참고>**	70	정량	산출	
		수사 전문성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수사 공정성 및 수사기법 관련 지침 등 시행 건수, 별정통신사와의 협조시스템 개선 여부 **<지표4 참고>**	70	정량	산출	
	증거중심의 책임수사 지원 및 과학수사 현장대응력 제고	범죄분석 지원지수	∑(출동건수)× (건별활동점수) +(가점)	175점	정량	산출	
		멀티미디어 분석 불가율	(영상·3D얼굴인식 분석 불가 건수) / (영상·3D 얼굴인식 접수 건수) × 100	18.3%	정량	산출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	SCAS, GeoPros, 접속건수 합산	2,850,000건	정량	산출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현장감식 채증물 등록건수/ 현장임장건수 × 100	200%	정량	산출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수사연수원 디지털포렌식 교육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실적(수료 인원 × 1) + 워크숍 등 본청 주관 교육 실적(수료 인원 × 0.5)	498	정량	결과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현장지원 활성화	전체 현장지원 건수 / 전국 분석관 현원	3.77	정량	결과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지원	모바일기기 잠금해제 성공 건수	276	정량	결과	
	증거 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과학수사 활동 지수	현장임장률 × 0.5 + 증거채취율 × 0.5	1.76	정량	결과	
		현장지원 지수	현장 과학수사관의 직무몰입도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전문역량함양·심신건강 등)을 정량 지수화하여 반영	35.2	정량	산출	
		대국민 교류 지수	국민 만족도 설문결과 × 0.5 + 진술청취이행률× 0.5	87.7	정량	결과	
성과목표 4.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대테러항공활성화를 통해 국민안전 확보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관리에 따른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① 대테러 인프라 구축 노력 및 홍보 ② 테러리즘에 대한 관심도	**78%**	정성	결과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활동에 따른 성과	테러취약시설 지도점검.대테러훈련 실시에 따른 평가 점수	100%	정량	결과	
		항공활동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	항공활동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 심의 결과(월1회)에 따른 평가점수	1,225점	정량	산출	
		항공 안전관리 역량강화	항공요원 전문기관 위탁교육훈련 인원 및 관련 자격증 취득 건수	120명 90건	정량	산출	
	안보수사 역량 강화··탈북민 보호 강화·완벽한 안보상황 관리	안보수사 역량 강화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노력도	28	정량	산출	
			현장 의견수렴·환류 및 정책 효과성 제도	10			
			안보수사국 인프라(분야별 외부 전문가) 확충	10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탈북민 보호 강화	탈북민 범죄예방교육 실시 건수	9	정량	산출	
			신변보호활동 성실이행도	10			
			탈북민 보호 우수사례	10			
			안전지원팀 협업 수행도	9			
		안보 취약요소 개선 활동	분석 판단 보고 및 공문을 통해 개선 추진한 사항	12	정량	산출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중요 안보사범 검거 지수	(정보사범 검거 X 2점) + (그 외 사범 검거 X 1점)	**756**	정량	산출	
		첨단안보 대응활동 지수	(첨단안보 입건 전 조사 개척 건수 x 2점 + (피해계정 등 보호조치 건수 x 0.1점	**454**	정량	산출	
		디지털 포렌식 활성화 지수	(현장지원횟수 / 디지털포렌식 지원횟수 × 100) × 0.5 + (선별압수 / 현장지원횟수 ×100) × 0.3 + (포렌식 전문 교육 이수 인원) × 0.2	**140.4**	정량	산출	
	국내·외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안보정보 수집으로 국민안전 확보 및 국가권익 보호	안보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입건전조사·수사 착수건수/사건첩보 제출건수) X 100	90.6	정량	산출	
		안보정세 첩보 고도화	북한·해외 안보정세 분석서 생산(40건) + 분석서당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실시(보고서 건 당 1회)	80	정량	산출	
		고가치 첩보 획득률 제고	(본청 일보이상 건수/첩보 제출 총건수) X 100	12	정량	산출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경호행사로 국가 안전 확보	경호 경찰 전문화 교육 및 설문조사	경호경찰 인력풀 교육 실시율 × 0.7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평균 × 0.3	**90.5점**	정량	산출	
		경호 경찰 인프라 구축	경호업무 담당 조직·부대 신설 건당 10점 전국단위 규칙·지침·매뉴얼 마련 건당 7점 신형 경호장비 도입 장비 1종당 3점	**33점**	정량	결과	
		경호업무 관계기관 협업	관계기관 회의(현장점검) 주관·참석 ÷ 대통령 행사 건수 × 100	**56.1%**	정량	산출	
전략목표Ⅲ. 진취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table>
<tr><th rowspan="2">성과
목표</th><th rowspan="2">관리과제</th><th rowspan="2">성과지표</th><th rowspan="2">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th><th rowspan="2">'22년
목표치</th><th colspan="2">지표 종류</th><th rowspan="2">비고</th></tr>
<tr><th>정량화</th><th>성격</th></tr>
<tr><td colspan="8">성과목표 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 · 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td></tr>
<tr><td rowspan="12"></td><td rowspan="3">정책추진 프로세스 강화로 가시적 성과창출 견인</td><td>국정과제 全 성과지표 달성도</td><td>목표 달성한 지표 개수 ÷ 국정과제 全성과지표 × 100(%)</td><td>100%</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정책모니터링 활성화</td><td>정책모니터링 운영 횟수</td><td>58건</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신규>
경찰 매뉴얼 관리체계 개선
※ 신규·개정·폐지 건수</td><td>국·관별 매뉴얼 등록, 개정, 폐지 건수</td><td>33건</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 rowspan="3">현장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td><td>인사직무만족도</td><td>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 중 인사 분야 6개 항목 평균값</td><td>81.0</td><td>정성</td><td>결과</td><td></td></tr>
<tr><td>현장우수사례 표창비율</td><td>경찰청장 표창 발부 대비 현장 우수사례 포상 비율</td><td>47.4%</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인적구성의 성별 균형</td><td>여성경찰관 비율</td><td>14.2%</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 rowspan="4">입법대응과 현장지원을 강화, 국민 안전 및 당당한 법집행 실현</td><td>입법대응 노력도</td><td>{(심사 회신건수/심사 수요조사 건수) × 100} - 100</td><td>72.09%</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규제혁신과제 달성도</td><td>(달성과제 / 규제혁신 선정과제) × 100</td><td>100%</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통합법률 및 소송 지원체계 만족도</td><td>'22년도 통합 법률 및 소송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도</td><td>81.8점</td><td>정성</td><td>결과</td><td></td></tr>
<tr><td>현장법률365 센터 대응 노력도</td><td>질의사안 중 답변건수 / 질의건수 × 100</td><td>100%</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 rowspan="2">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td><td>교육 현장 활용도</td><td>(교육센터과정 설문결과 +사이버교육 설문결과) / 2</td><td>93.8</td><td>정성</td><td>결과</td><td></td></tr>
<tr><td>인재채용률</td><td>(채용인원 / 채용계획인원) × 100</td><td>94.4</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 colspan="8">성과목표 2. 강력한 반부패 정책 등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행정을 구현한다</td></tr>
<tr><td rowspan="4"></td><td rowspan="4">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td><td>제도개선 실적</td><td>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실적
- 산식 : ∑ (유형별 배점 × 조치수위별 배점)
< 배 점 >
<table><tr><th colspan="3">개선 유형별</th><th colspan="2">조치 수위별</th></tr><tr><th>법령 제·개정</th><th>자체규정 제·개정</th><th>기타 행정</th><th>개선요구</th><th>권고·통보</th></tr><tr><td>5.0</td><td>3.0</td><td>1.0</td><td>3.0</td><td>1.5</td></tr></table></td><td>211</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적극행정 면책실적</td><td>적극행정 면책 심사위원회 개최 건수</td><td>178</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경찰 청렴도 측정 결과</td><td>경찰 청렴도 설문 조사 결과</td><td>76.2</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내부비리 신고 활성화</td><td>내부비리신고센터 신고 접수 건수</td><td>51</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able>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예방·진단·교정 중심 감찰활동으로 건강하고 효율적인 경찰 뒷받침	감찰첩보 수집건수	경찰청 첩보수집건수+시·도청 첩보수집건수+경찰서 첩보수집건수	3,120	정량	산출	
		제도개선 자료제출 노력도	전체 감찰첩보 대비 제도개선 자료(기타자료 포함) 현황	53.9%	정량	산출	
		유가치 첩보 활용도	전체 감찰첩보 대비 유가치 첩보(감찰조사/사실확인/ 관련 기능 통보) 현황	33.5%	정량	산출	
		감찰정보 분석문건 제공실적	(경찰청장 보고건수×10)+(경찰관서장 참고자료 건수×5)+(소관기능·청문기능 통보건수×3)+(대상자 통보 건수(사전경고 등)×2)	120점	정량	산출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결과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결과」 (全 직원 대상 메일 설문조사)	77.2%	정성	산출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장착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	하단 참조	94.3	정량	산출	
		성평등 교육 정착도	하단 참조	91.9	정량	산출	
성과목표 3.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치안R&D와 치안산업 진흥을 통한 현장지원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현장 문제해결 발굴 건수(건)	치안현장 문제 해결 신규과제 발굴 건수 (치안 분야 R&D 신규과제 발굴 건수 <예산확보>)	8건	정량	산출	
		R&D 연구성과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 점수 (각 조사 부분 만족도의 평균)	79.3점	정량	산출	
		치안박람회를 통한 치안 장비·기술의 수출상담액(억원)	계약서 명시 수출상담액 ('21년 수출상담건 - '20년 수출상담건)	435억원	정량	산출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데이터 기반 경찰행정 지원	사이버위협 사전예방 노력도	$\frac{\text{사이버위협 사전차단 건수}}{\text{사이버위협 총 건수}} \times 100$	69.5	정량	결과	
		사이버위협 대응 신속도	$\frac{\text{6시간내 조치 건수}}{\text{사이버위협 조치 필요 건수}} \times 100$	27.9	정량	결과	

<table>
<tr><th rowspan="2">성과
목표</th><th rowspan="2">관리과제</th><th rowspan="2">성과지표</th><th rowspan="2">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th><th rowspan="2">'22년
목표치</th><th colspan="2">지표 종류</th><th rowspan="2">비고</th></tr>
<tr><th>정량화</th><th>성격</th></tr>
<tr><td rowspan="8"></td><td></td><td>치안데이터품질
정확도</td><td>업무시스템별 오류율의 총 합
총 시스템 수</td><td>0.099%</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 rowspan="6">경찰 정보통신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td><td>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td><td>① 통합포털 폴넷(20%)
+ ② 스마트국민제보(30%)
+ ③
영상회의시스템(30%) +④
폴메신저(20%)</td><td>133.7</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td><td>만족도 조사 결과</td><td>87</td><td>정성</td><td>결과</td><td></td></tr>
<tr><td>경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도</td><td>회선장애로 인한 업무망
서비스 중단시간</td><td>410</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정보통신기술
지원도</td><td>지원 항목에 대한
건당 점수 합산
<table><tr><th>지원 항목</th><th>건당</th></tr><tr><td>중기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
발주 지원</td><td>1점</td></tr><tr><td>제안요청서
작성·검토
지원</td><td>2점</td></tr><tr><td>정보화사업
사업 관리</td><td>2점</td></tr><tr><td>폴리폰
기능 개선</td><td>1점</td></tr></table></td><td>65.6</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경찰 정보통신
기술 표준 확립</td><td>각 항목에 대한
건당 점수 합산
<table><tr><th colspan="2">항목</th><th>건당</th></tr><tr><td rowspan="2">행정
규칙
등 개정</td><td>전부</td><td>10점</td></tr><tr><td>일부</td><td>7점</td></tr><tr><td rowspan="2">매뉴얼
등 개정</td><td>제정</td><td>5점</td></tr><tr><td>일부</td><td>3점</td></tr><tr><td colspan="2">간담회,
설명회 등</td><td>2점</td></tr><tr><td colspan="2">표준 관련
공문 하달</td><td>1점</td></tr></table></td><td>45</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 rowspan="3">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td><td>장비 성능개선 및
신규도입</td><td>기존 장비의 성능개선(규격의
제·개정) 및 신규장비 도입
건수</td><td>16</td><td>정량</td><td>결과</td><td></td></tr>
<tr><td>친환경 차량
보급률</td><td>.(친환경 차량 수 /
노후로 인한 교체
업무용 차량 수) x 100</td><td>80.3</td><td>정량</td><td>산출</td><td></td></tr>
<tr><td>경찰장비
만족도</td><td>(피복 만족도 × 0.3) +
(장구류 만족도 × 0.2) +
(차량 만족도 × 0.5)</td><td>85</td><td>정성</td><td>결과</td><td></td></tr>
</table>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2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성과목표 4.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적극지원 및 현장활력 제고로 대국민 치안역량 강화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	10월 중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	85.5	정성	결과	
		연가사용 실적	1인당 평균 연가사용 비율 (1~10월)	경정·5급 이상 : 52% 경감·6급 이하 : 63%	정량	산출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현장 경찰관 대상 마음건강관리 실적	마음동행센터 상담제공 건수	26,300	정량	산출	
		퇴직(예정)경찰관 취업지원 성과	해당연도 취업인원 / 전직지원센터 컨설팅인원	73%	정량	산출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예산확보수준	(경찰청 총지출 /공공질서및 안전분야 총지출) ×100	55.0	정량	산출	
		예산집행률	(3분기까지 집행액 /연간관리예산*) ×100 * 연간집행관리예산은 기재부에서 설정하며, 경찰청 총지출의 97%	74.9	정량	산출	
		국유재산증가율	(당해년도 국유재산 결산액/ 전년도 국유재산 결산액) x100 ※국회 결산 심사액 기준	6.10	정량	산출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주요 치안정책.현안에 대한 신뢰·지지 기반마련	경찰청 SNS 활동지수	각 계정 통계 활용	1) 1,800,030 2) 564,433 3) 1,482 4) 744,530 5) 18건	정량	결과	
		주요정책 언론홍보 실적	언론보도 실적 취합	1449건	정량	결과	
		온라인 이슈 및 오보대응 활동	온라인 이슈 및 오보 대응 실적 취합	244건	정량	결과	

붙임1-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Ⅰ.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안전을 확보한다			
성과목표 1. 민생치안 역량 강화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1 예방지향적 정책 고도화로 치안활동의 효과성 제고	범죄예방정책	국정 63-2, 업무 Ⅰ-③
	2 자치경찰제 내실화	자치경찰	업무 Ⅰ-③
	3 112중심 치안상황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수호	위기관리	업무 Ⅰ-③, Ⅲ-②④
	4 민생침해 범죄, 중요 사건사고 신속·엄정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강력범죄수사	업무 Ⅱ-③④, Ⅲ-①②
	5 범죄·재난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정보분석으로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정보분석	업무 Ⅰ-③
성과목표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6 아동학대·학교폭력 선제적 예방 및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국정 69-2, 63-1, 63-3 업무 Ⅰ-③, Ⅱ-③
	7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및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강화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업무 Ⅰ-①
	8 여성보호 치안정책 내실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여성안전 기획	국정 69-2, 업무 Ⅰ-①
성과목표 3. 선진교통질서 확립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9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안전	국정 69-1, 업무 Ⅰ-①
	10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통관리	교통기획	업무 Ⅰ-①②
	11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교통운영	업무 Ⅱ-①②
성과목표 4.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제·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⑫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사이버 수사기획	국정 101-5 업무 Ⅰ-①, Ⅱ-⑤ Ⅲ-①
	⑬ 민생 사이버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사이버 범죄수사	국정 64-3 업무 Ⅰ-①, Ⅱ-① Ⅱ-③
	⑭ 사이버테러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 사이버환경 조성	사이버 테러대응	국정 101-1, 101-3 업무 Ⅱ-⑤
	⑮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인터폴 국제공조	업무 Ⅱ-③⑤
	⑯ 선제적·예방적 외사경찰 활동을 통한 사회안전 확보	외사기획정보	업무 Ⅰ-①③, Ⅱ-⑥
	⑰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제협력	업무 Ⅲ-⑥
전략목표Ⅱ.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			
성과목표 1.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⑱ 반부패·공공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반부패 공공범죄수사	국정 63-4, 69-4 업무 Ⅱ-①,④
	⑲ 마약류·조직폭력·외국인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마약조직 범죄수사	업무 Ⅱ-①, Ⅱ-④
	⑳ 경제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경제범죄수사	국정 63-4, 63-5 업무 Ⅱ-③,④
	㉑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치안 역량 강화 및 성매매 등 유흥시설 불법행위 합동단속	생활질서	업무 Ⅰ-③, Ⅱ-②
성과목표 2.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㉒ 인권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스템 구현	인권보호	업무 Ⅰ-①, Ⅱ-③, Ⅲ-③
	㉓ 인권 보호와 준법역량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정보관리	업무 Ⅲ-①, ②
	㉔ 정보상황 기능 역량 강화로 집회의 자유·인권과 안전·공공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집회문화 조성	정보상황	국정 69-4 업무 Ⅱ-①, Ⅲ-⑥
	㉕ 수사상 인권과 피해자 중심의 경찰활동 전개	수사인권	국정 64-1, 64-2, 64-5 업무 Ⅰ-①, Ⅲ-③
	㉖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경비	국정 69-4 업무 Ⅱ-①, Ⅲ-①④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성과목표 3.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27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구현	수사운영지원	업무 Ⅱ-②
	28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수사구조개혁	국정 4-3, 업무 Ⅱ-②
	29 국민중심 책임수사체제 추진을 위한 인권·현장 중심 제도개선	수사심사정책	국정 4-3, 업무 Ⅲ-②
	30 증거중심의 책임수사 지원 및 과학수사 현장대응력 제고	범죄분석	업무 Ⅱ-②, Ⅲ-⑤
	31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디지털포렌식	업무 Ⅱ-⑤
	32 증거 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과학수사	업무 Ⅱ-②, Ⅲ-⑥
성과목표 4.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33 대테러·항공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대테러항공	업무 Ⅲ-①, ②
	34 안보수사 역량 및 탈북민 보호 강화·완벽한 안보상황 관리	안보기획관리	업무 Ⅱ-⑥
	35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안보수사지휘	업무 Ⅱ-⑥
	36 국내외 다양한 위협에 대한 안보정보 수집으로 국민안전 확보 및 국가권익 보호	안보범죄분석	업무 Ⅱ-⑥
	37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경호행사로 국가 안전 확보	경호	업무 Ⅱ-①, Ⅲ-①
전략목표Ⅲ. 진취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성과목표 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38 정책추진 프로세스 강화로 가시적 성과창출 견인	혁신기획조정	업무 Ⅲ-①
	39 현장 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	업무 Ⅲ-⑤
	40 입법대응과 현장지원을 강화, 국민 안전 및 당당한 법집행 실현	규제개혁법무	업무 Ⅱ-①
	41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교육정책	업무 Ⅲ-①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성과목표 2. 강력한 반부패 정책 등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행정을 구현한다			
	42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감사	업무 Ⅲ-③
	43 예방・진단・교정 중심 감찰활동으로 건강하고 효율적인 경찰 뒷받침	감찰	업무 Ⅲ-③
	44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양성평등정책	업무 Ⅲ-⑤
성과목표 3.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45 치안R&와 치안산업 진흥을 통한 현장 지원	과학치안정책	국정 69-3, 업무 Ⅲ-⑥
	46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데이터 기반 경찰행정 지원	정보화장비 기획	업무 Ⅱ-⑤, Ⅲ-②⑤
	47 경찰 정보통신 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	정보통신기술	업무 Ⅰ-③, Ⅲ-②⑤
	48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	장비	업무 Ⅲ-②
성과목표 4.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49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적극지원 및 현장활력 제고로 대국민 치안역량 강화	경무	업무 Ⅲ-④⑤
	50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복지정책	국정 14-3, 업무 Ⅲ-④
	51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재정	업무 Ⅳ-④
	52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신뢰·지지기반 마련	홍보	업무 Ⅲ-④